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백서

(부 록)



농림부



농협



- 농업인을 위한,
- 농업인에 의한,
- 농업인의 통합농협, 새출발

통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 창립기



통합농협은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중심 축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진정한 봉사조직이
될 것입니다.

3개중앙회를 하나로 합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7월 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이제 오늘부터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조직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통합농협은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진정한 봉사 조직이 되어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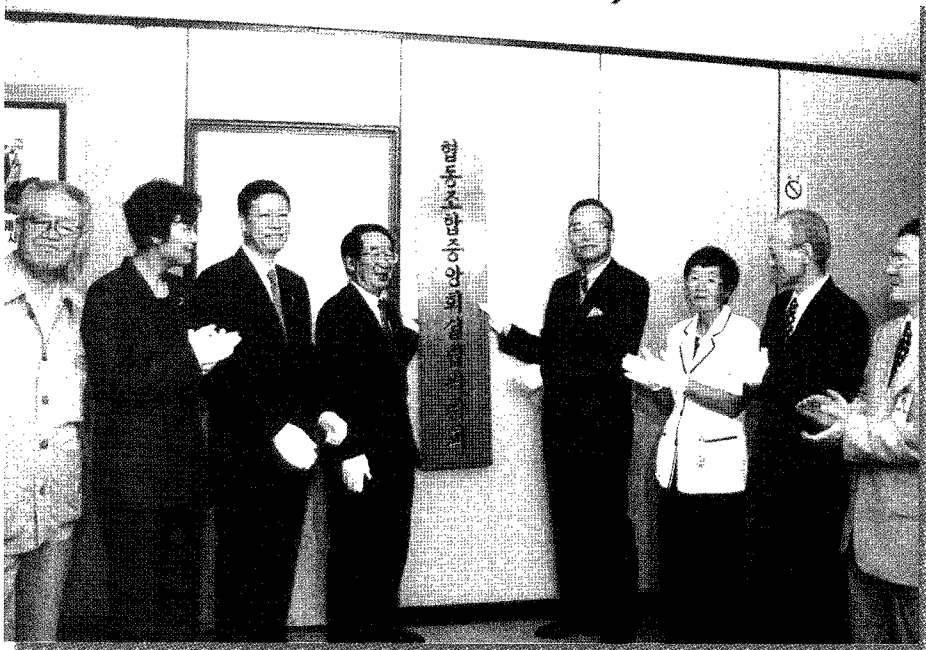
김대통령은 특히 통합 중앙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각종지원을 아끼지않을 것이라면서 "통합중앙회의 출범은 협동조합 개혁의 완성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므로 개혁의 발전과 외형적인 큰 틀이 갖춰진 만큼 질적인 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협동조합이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농축산물과 인삼류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협동조합이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앙회의 경영진은 물론 회원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도 과거처럼 권한만 있고 책임은 적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김대통령은 특히 농업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중요한 만큼 농협이 북한동포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 협동조합개혁 방안발표 기자회견 (1999. 3. 8)



() 농협중앙회 설립위원회 현판식 (1999. 9.10)



() 농협중앙회 설립위원회 1차 회의 (1999. 9.10)



() 농협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2000. 4.17)



() 농협중앙회 인수위원회 현판식 (2000. 5.17)



() 7·1,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으로 금융점포 입간판 교체 (2000. 6.30)



() 통합법 조기 제정 촉구 전국 농민대회 (1999. 7. 9)





㉠ 농·축·인삼협 통합중앙회 창립저지를 위한 범대위 시위 (2000. 4.17)



㉡ 농협중앙회 창립총회 행사장(서울교육문화회관) 진입시위 (2000. 4.17)

통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경과보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내외분을 모시고 전국의 농업인과 협동조합 조합장, 협동조합 임직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새 협동조합의 출범을 알리는 통합 농협중앙회 창립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더 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하고자 합니다.

고비용·저효율의 3개의 중앙회 체제를 축소 개편하고, 협동조합을 원주인인 농업인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전국의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오랜 숙원과제이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이 유통업무와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되어 농업인이 애써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농업인 조합원이 조합의 경영성과를 감시하고 또한 직접 조합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들과 역대정부의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개혁작업에 착수한 지 2년 4개월만에 통합중앙회 출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98년 4월, 농민단체 대표와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는 3개월에 걸친 의논과 노력 끝에, 중앙회 통합 등 50여 항목의 협동조합 구조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는 '98년 7월,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 등 4개 중앙회장에게 위 건의안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자율에 의한 단일의 공동개혁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흐른 '99년 2월 말까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는 '99년 3월 8일 협동조합 개혁위원회와 각 협동조합이 제출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협동조합개혁정부시안」을 마련,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부의 개혁안은 200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전국의 농업인과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로부터 수차례 건의를 받아 단일안을 만들어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9년 6월 14일 동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수차례의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특히 축협중앙회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99년 8월 12일, 상임위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13일, 여·야 합의로 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정부는 9월 7일 법률 제6018호로 이를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법령 공포직후인 지난해 9월10일 동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어, 그동안 새 농협법 시행령과 통합중앙회의 정관 등을 민주적 절차와 합의정신에 따라 일정대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경제사업장 이관, 조직·인사·보수제도 등의 통합작업, 그리고 농협중앙회장과 대의원 선출, 3개 대표이사 임명동의 등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여 오늘 뜻깊은 창립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역대정권의 숙제이었던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의 통합 등 농정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미 지난 1월 1일에는 농지개량조합 등 농업수리 및 생산기반 관련 세 기관을 하나의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여 '83년만에 수세를 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국민의 정부는 새천년 농업의 기본방향과 패러다임을 문서화한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6년동안 45조원 규모의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확정·시행하는 등 농정 전반에 쌓여있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농촌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농정의 기본틀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통합중앙회 출범은 그중 가장 중요하고, 또 그만큼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농정개혁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로써 협동조합개혁이 완수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시작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기본인식입니다.

지금까지의 협동조합 개혁이 제도적, 양적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질적 도약을 위한 제2단계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농협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 개혁의 효과를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하고 유통개혁을 촉진시킴은 물론, 일선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 나아가서 품목별 협동조합 연합조직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때 개혁이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의 보호육성과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내외분을 모시고, 오늘 새로 출범하는 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앞으로 개혁을 거듭하여 문자그대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 태어나는 피땀어린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경과와 제2단계 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 7. 1

농림부장관 김 성 훈

목 차

<1999년>협동조합개혁관련 발표 자료

- 농림부 협동조합개혁 발표문(3.8) 3
- 축협중앙회 노조 기자회견문(3. 8) 32
 - 협동조합 통합에 대한 비판
- 민주노총 특별결의문(3. 9) 34
 -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한다
- 언론보도 35
 - 농·축·임·인삼협 통합
-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3.10) 62
 - 과감한 개혁을 통해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3.11) 63
 - 농민 외면한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안’을 철회하고
김성훈 장관은 사과하라!
- 임협중앙회 및 전국임협 임직원 결의문(3.12) 66
 - 임협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3.13) 67
 -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건의문(3.13) 71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견

○ 농협중앙회 노조 일간지 광고(3.15)	73
-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농협 정치독립 선언문)	
○ 축협중앙회 노조 대의원 결의문(3.15~16)	74
- 협동조합 통합안 반대	
○ 한농연·농단협 공동성명서(3.16)	75
-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조합원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인삼협중앙회 및 전국 인삼협 임직원 결의문(3.18)	76
-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결의	
○ 인삼협중앙회 호소문(3.18)	77
- 인삼조합의 대표성 보장 요구	
○ 전국농민회총연맹 특별결의문(3.18)	80
-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 촉구	
○ 한농연·농단협 공동성명서(3.18)	81
- 농민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3.18)	82
-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을 요구한다	
○ 농협개혁 및 농협노동자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일간지 광고(3.18)	83
- 농협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 축협 노조·축협직원 일간지 광고(3.18~19)	84
-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졸속 협동조합개혁안을 밀어 부치기 위해 여론조작과 검찰수사를 통해 협동조합을 무차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 축협 노조 성명서(3.19)	85
- 농·축협 등 통합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국가톨릭농민회 성명서(3.19)	88
- 농협 개혁과 최근 전농 사태에 대한 가톨릭농민회의 입장	
○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축산인 규탄대회 유인물(3.21)	90
○ 한국유기농업협회 성명서(3.24)	92
- 협동조합 통합반대세력들의 반국가적 준동을 크게 우려함	
○ 낙농육우협회·양돈협회·양계협회 공동성명서(3.24)	94
-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협동조합 통합 반대 교수 일간지 광고(3.25~26)	95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진실과 여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호소문(3.25)	96
-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날 것임	
○ 전국 축협조합장 일동 결의문(3.26)	99
- 협동조합 통합 결정 반대	
○ 전국축협 조합장 일동 일간지 광고(3.26)	100
- 축산포기, 축산말살을 초래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협동조합 통합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화훼협회·화훼종자협회 공동성명서(3.26)	101
- 농·축협 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고 본연의 사명감을 되찾아야 한다!	
○ 농협중앙회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3.27)	102
- 협동조합 졸속 통합 선언! 책임자 색출, 즉각 처단하자!	

○ 농림부 일간지광고(3.29)	104
-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선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과수협회·과수묘목협회 공동성명서(3.29)	105
- 협동조합은 그 주인인 농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종자협회 성명서(3.29)	106
- 농·축협 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고 본연의 사명감을 되찾아야 한다	
○ 온실협회 성명서(3.29)	107
- 농·축협 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라!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3.30)	109
-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추진위'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한 전농의 입장	
○ 생약협회 성명서(3.30)	111
- 농·축협 중앙회에 개혁 적극 동참 촉구	
○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3.31)	113
- 농·축협 통합 등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서(3.31)	114
- 농협 등 4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의 입장	
○ 정농회 성명서(3.31)	117
- 농·축협 개혁에 대한 정농회의 입장	
○ 전국축협단일노조준비위원회 성명서(4. 1)	119
- 축협중앙회 박순용 회장은 즉시 입장을 밝혀라	

○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4. 1)	120
-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을 촉구한다	
○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비상투쟁위원회 일간지 광고(4. 1)	122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공개적으로 답변바랍니다	
○ 축산관련 26개 단체 일간지 광고(4. 1)	123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생활개선회 공동성명서(4. 1)	124
- 농 · 축협 등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경북대 최고경영자과정 성명서(4. 1)	125
- 정부는 협동조합의 개혁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라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성명서(4. 1)	127
- 협동조합개혁 촉구	
○ 흥사단 농업개혁위원회 성명서(4. 1)	129
- 협동조합의 개혁방향과 원칙 제시	
○ 한국유기농업협회 전문지 광고(4. 1)	130
- 협동조합 통합 반대세력들의 반농업적 책동을 크게 우려함	
○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범축산인 쫓겨대회 유인물(4. 2)	131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성명서(4. 2)	133
- 조합원 중심의 조합! 조합중심의 중앙회로!	
○ 농산물냉장협회 성명서(4. 2)	134
- 농 · 축협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전국축협조합장 투쟁위원회 호소문(4. 3)	135
- 조합장 제위께	

○ 자연농업협회 성명서(4. 3)	137
-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한다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성명서(4. 3)	139
- 김대중 대통령의 협동조합 개혁의지를 환영하며	
○ 쌀가공식품협회 성명서(4. 6)	140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순천대 최고경영자과정 성명서(4. 6)	141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대한곡물협회 성명서(4. 6)	142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농기계협동조합 성명서(4. 6)	144
- 농·축협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경북농민 일동 성명서(4. 8)	145
- 협동조합 개혁을 바라보는 경북농민들의 입장	
○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범축산인 쫓기대회 유인물(4.11)	148
○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대구경북지역 범축산인 쫓기대회 유인물(4.11)	150
○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광주전남 축산인 쫓기대회 유인물(4.11)	152
○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범축산인 쫓기대회 유인물(4.11)	154
○ 축협노조·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4.12)	156
- 농림부는 농정의 최고기관답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4.14)	158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가칭)와 농업인 협동 조합법(가칭)안의 급조는 협동조합을 두 번 죽이고 있다	
○ 협개연 상임대표 기자회견문(4.14)	159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 발족에 즈음하여	
○ 축협중앙회 노조 비상투쟁위원회 성명서(4.15)	167
- 진정한 여론수렴을 외면하고 여론조작을 통해 개악안의 모양 갖추기에 급급한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안중운 기획관리 실장은 즉각 사퇴하라!	
○ 전국농민회총연맹·국민연대(준) 성명서(4.16)	169
-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을 왜곡하고 농민·농민단체를 분열시키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전국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협의회 학생회 성명서(4.16)	173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전국최고농업경영인들의 견해	
○ 협개연 성명서(4.16)	179
- 농민 개혁열망 무시하는 축협 임직원의 중상모략과 명예훼손에 분노한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4.17)	181
- 축협중앙회 노조의 반개혁 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한다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성명서(4.17)	182
- 4월 15일자 축협노조의 성명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서(4.17)	183
- 축협의 발악적 비난행위에 경고한다	

○ 협개연 성명서(4.19)	184
- 축협노조의 '총파업'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협개연 성명서(4.22)	186
- 형식에 치우친 협동조합 자체 구조조정을 비판한다	
○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일동 일간지 광고(4.23)	188
-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성명서	
○ 협개연 성명서(4.23)	190
- 협동조합 반개혁 세력은 중상모략과 개혁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 협개연 성명서(4.23)	192
- 이상론에 치우친 학계 일부의 협동조합 개혁론을 경계한다!	
○ 협개연 성명서(4.28)	194
- 축협은 「협동조합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 협개연 농업전문지 광고(4.29)	196
- 협동조합개혁 입법안에 농민단체 의견을 관철시켰으며 참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연대 결성선언문(4.30)	197
○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서(5. 3)	199
-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 축협중앙회장 기자회견문(5. 3)	203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축협의 공식입장	
○ 협개연 성명서(5. 4)	205
- 축협은 반개혁 음모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 언론보도(5. 4)	207
- 농·축협 비리 검찰수사결과 기사	
○ 축협중앙회 노조 비상투쟁위원회(5.10)	223
-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즉각 일괄 사퇴하라!	
○ 협동조합개혁 관련 반상회보 홍보자료(5.11)	224
-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 사실은 이렇습니다	
○ 축협 노조·통합 저지 비상투쟁위원회 일간지 광고(5.13)	225
-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정치적 사정의 칼날앞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농협 통합협동조합대책위원회 일간지 광고(5.19)	226
- 통합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 협개연 성명서(5.20)	227
- 극단적인 반개혁투쟁을 선동하는 축협노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 협개연 성명서(5.21)	229
-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왜곡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	
○ 전농5.23자 성명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문(5.26)	231
- “전농이 5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국민연대 성명서(5.26)	233
-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입법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즈음하여	
○ 전국축협노조 중앙집행위원 성명서(5.26)	237
- 자주적 노조활동 방해하고 축협조직 말아먹는 박순용 회장 퇴진하라	

○ 축협중앙회 신문광고(5.27)	238
- 대통령 할아버지께 드리는 글	
○ 협개연 성명서(5.27)	239
- 「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의 입법청원 서명에 우려를 표명한다	
○ 협개연 성명서(5.27)	241
- 순진무구한 동심까지 반개혁에 악용하는 축협노조는 각성하라!	
○ 국민연대5.26자 성명서에 대한 회신문(5.31)	243
-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5월26일)성명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 축협 노동자 쫓기대회 유인물(6. 1)	246
○ 전국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결의문(6. 4)	248
- 자율적인 협동조합 개혁 천명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6. 5)	249
- 농민과의 약속파기, 슬그머니 금리인상 철회하고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라!	
○ 농협중앙회 노조 신문광고(6. 5)	250
-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2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 협개연 성명서(6. 7)	251
- 걸음으로만 개혁동참, 반개혁 지원활동을 지속하는 축협중앙회와 박순용회장의 이중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축협조합원 일동 일간지 광고(6. 8)	253
- 축산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강제통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대 성명서(6. 9)	254
-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협동조합을 개혁하여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개악안이다	

○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6.10)	256
- 정부의 통합협동조합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쫓기대회 유인물(6.10)	257
- 국민회의 · 한나라당 중앙당사	
○ 국민연대 6.9자 성명에 대한 농림부의 반박문(6.11)	258
- “국민연대 6월 9일 성명서”에 대하여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6.11)	262
- 검찰은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발표(6.11)	263
- 조폐공사 파업공작과 유사한 사건이 협동조합 통합과정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 축협비상대책위 성명서(6.11)	264
-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에 대한 전국축협조합장 입장	
○ 협개연 성명서(6.11)	266
- 협동조합 개혁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는 박순용 축협 회장을 규탄한다	
○ 협개연 성명서(6.12)	268
- 근거없는 중상모략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개혁반대세력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쫓기대회 유인물(6.13)	270

○ 축협중앙회 노조 ·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일간지 광고(6.15~16)	271
- 제2의 조폐창 통합공작음모가 농 · 축협 강제통합 과정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 축협 조합장의 해임요구서	272
- 박순용 회장에 대한 해임 요구	
○ 협개연 성명서(6.15)	274
- 축협노조와 조합원대표자협의회의 반개혁 광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6.15)	276
- 이성을 상실한 축협노조와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는 반개혁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성명서(6.15)	277
- 농축협 통합관련 반개혁에 앞장서서 이성을 잃고 안하무인적 행위를 서슴치 않는 축협노조와 축협조합원 대표자회의는 즉각 사과하라!	
○ 농어촌복지연구회 성명서(6.15)	278
- 축협노조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개혁에 동참해야	
○ 협개연 성명서(6.16)	279
- ‘제2 조폐창 음모’ 운운한 축협광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 농림부 장관 서신문(6.18)	281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6.19)	284
- 전국 축협조합장 총회의 축협중앙회장 해임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 협개연 성명서(6.26)	285
- 축협노조와 비대위는 7월 1일 대회를 즉각 취소하라!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6.28)	287
- 새로 선출될 축협중앙회장은 정부의 강제적 협동조합 통합을 기필코 저지코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소유한 인물 이어야 한다	
○ 축협조합장 일동 성명서(6.29)	288
- 「농업인 협동조합법(안)」 대로의 단순 강제통합을 단호히 반대한다	
○ 축협조합장 일동 호소문(6.29)	289
-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우리의 호소문	
○ 축협조합장·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일간지 광고(6.29)	290
- 우리30만 축협조합원들이 7월 1일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하는 이유!	
○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쫓겨대회 유인물(7. 1)	291
- 한강 시민공원	
○ 격주간 우리축협 호외보	292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축협조합원 총궐기 대회」 관련 사진	
○ 전국 축협 조합장 일간지 광고(7. 1)	294
- 우리 축협조합장 일동은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로의 단순 강제통합을 단호히 반대한다	
○ 협개연 신문광고(7. 1)	295
- 협동조합 통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 협개연 성명서(7. 1)	296
- 축협의7월 1일 집회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가장하여 축협 임직원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반개혁책동에 불과하다!	

○ 축협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7. 3)	298
- “협개연”, “한농연”의 일부 간부들은 더 이상 농심을 분열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7. 5)	299
- 농림부장관과 협개연의 비이성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7. 6)	300
- 정부는 위헌 위법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협개연 기자회견문(7. 7)	301
-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협개연 성명서(7. 7)	305
- 축협노조의 단식농성,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 축협중앙회 노조·전국축협노조 기자회견문(7. 9)	307
- 총파업을 선언하며 . . .	
○ 협개연 주최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조기제정 및 통합비용 정부 지원 촉구를 위한 전국농민결의대회” 개최(7. 9)	308
○ 경실련 성명서(7.12)	318
- 국회는 당리와 당략,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초월 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 경남지역 농민단체 기자회견문(7.12)	320
- 한나라당에 협동조합 개혁 촉구	
○ 축협조합장·대표자협의회·축협노조·축협중앙회 노조 일간지 광고(7.13)	323
- 축산업 포기정책의 산물,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7.13)	324
- 파업에 돌입하는 우리의 입장	
○ 축협중앙회 노조 파업참가자 파업결의문(7.13)	325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 협개연 성명서(7.13)	326
- 축협노조의 파업은 농민과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 협개연 성명서(7.13)	328
- 공청회 진출인에 온갖 폭언과 협박을 자행한 축협지도부는 사과하라!	
○ 전국농민단체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7.14)	330
- 축협의 비상식적 언어폭력, 인격모독 등 폭력행사를 개탄한다	
○ 협개연 성명서(7.14)	332
- 축협노조의 불법파업, 축산농민피해 부른다	
○ 축협중앙회가 국회의원에게 보낸 진정서(7.22)	334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7.22)	349
- 여야 각당은 조속히 국회를 소집하여 농업현안을 처리하라!	
○ 협개연 성명서(7.29)	350
- 축협노조가 전농과 함께 연대하여 8월3일 반개혁집회를 개최하겠다는데 대해 전농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농림부 서신(7.27)	353
- 축협조합장에게 개혁협조 당부	
○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7.30)	362
- 저희 입장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 협개연 성명서(7.30)	363
- 축협중앙회의 비이성적, 발악적인 반개혁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기를 뒤흔드는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8. 2)	366
- 농림부장관의 나팔수 협개연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성 짙은 극소수 농민귀족 인사들의 단발마적 발악과 전횡을 경고한다	
○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8. 2)	368
-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8. 2)	369
- 축협중앙회의 한농연 분열 음모를 규탄한다	
○ 협개연 성명서(8. 2)	371
- 최근 축협의 거짓선전과 농민단체 분열행위에 대해 공개질의한다	
○ 한국축산경영인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 성명서(8. 3)	374
- 한국축산경영인연합회 설립 천명	
○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8. 4)	375
- 축산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 전국축협노조·축협중앙회노조 일간지 광고(8. 5)	376
- 축협 직원들은 양측가 조합원에게 무한봉사하는 참다운 협동조합 종사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 축협중앙회 전문지 광고(8. 5)	377
- 당사자 참여속에 진정한 개혁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8. 5)	378
- 국회는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반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개혁법안을 마련하라	

○ 협개연의 대통령에게 드리는 긴급건의문(8. 5)	379
- 8월 임시국회내 협동조합 개혁법안 처리 요청	
○ 협동조합 통합 반대 교수 성명서(8. 5)	384
-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원하는 교수들의 성명서	
○ 민주노총 일간지 광고(8. 6)	385
-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한다	
○ 협개연 성명서(8. 6)	386
- 신구범 축협회장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억지주장과 비열한 농민단체 분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협개연 성명서(8.10)	388
- 합리적 절충안마저 거부한 축협은 더이상 개혁할 의사가 없으므로 여야는 개혁법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처리하라!	
○ 협동조합 통합 반대 교수 일간지 광고(8.11)	390
-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원하는 교수들의 성명서	
○ 전국 축협노조·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8.11)	391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강행통과시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 전국축협조합장 성명서(8.11)	392
-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철회 요구	
○ 전국농민회총연맹·국민연대 성명서(8.12)	393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 언론보도(8.31)	394
- 신구범회장 자해 및 농협법 처리	

○ 축협중앙회 기자회견문(8.13)	405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축협중앙회장 담화문(8.14)	407
- 법안 철회를 위한 대응 등 천명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8.16)	408
- 정부는 정치적 흥정의 산물인 농업협동조합법안을 폐기하고 구속된 동지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 국민연대 성명서(8.16)	409
-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변칙·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8.16)	412
-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농림부 일간지 광고(8.16)	413
- 농정사 50년사에 협동조합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민주노총4개 산하연맹 결의문(8.17)	414
- 반개혁적 협동조합 통합 반대 천명	
○ 축협중앙회 노조 본부 분회장 일동 성명서(8.18)	415
- 노조위원장 사퇴 촉구	
○ 전국 축산농민·축협조합장·임직원 일동 일간지 광고(8.20)	417
- 축협을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8.24)	418
- 정부는 축협중앙회장과 축협임직원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8.25)	419
- 일부 간부직원의 경거망동을 엄중 경고한다	

○ 농림부 보도자료(9.6)	421
- 9월7일 새 협동조합법 공포, 개혁작업 본격화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호(9.16)	423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2호(9.20)	424
○ 농림부 보도자료(9.22)	426
- 농림부, 축협중앙회의 설립위원회 참여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명령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3호(10. 1)	427
○ 축협중앙회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에 협조 요청서(10. 1)	429
- 축협중앙회의 ICA에 대한 공식입장요청서면	
○ ICA의 공식적인	446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10. 6)	448
- 농림부의 농축협 인사, 재산처분 등 금지조치에 대한 축협 노조의 입장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4호(10. 7)	451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5호(10. 8)	453
○ 전농 충북도연맹 성명서(10.11)	455
-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임금 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농림부 보도자료(10.11)	456
- 농림부, 축협중앙회에서 설립위원회 참여거부 결정취소 명령(9.22) 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10.12)	458
- 농림부는 더 이상 축협분열을 획책하지 마라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6호(10.12)	460
○ 축협중앙회 신문광고(10.20)	461
- 농림부장관은 강력한 자체구조조정에 매진하고 있는 축협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시급한 농정 현안 해결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7호(10.20)	462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8호(10.23)	465
○ 한농연 경남도연합회 성명서(11. 2)	466
- 축협중앙회는 통합작업에 즉시 동참하라. 그리고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을 완성시켜라	
○ 농림부 서신(10.26)	467
- 축협조합장에게 설립위원회 참여 촉구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9호(11. 5)	468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0호(11. 5)	469
○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서(11.10)	471
- 정부는 통합중앙회 설립과정에서 민간단체인 농협중앙회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2호(11.12)	473

-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성명서(11.13) 475
 - 축협중앙회노조에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3호(11.15) 476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11.16) 482
 - 농림부는 정부공공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 전농의 11.16자 성명에 대한 농림부의 반박서신문(11.17) 483
 - 전농 성명서 내용에 대한 반박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4호(11.18) 486
-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공동성명서(11.18) 488
 - 조직적 범죄행위까지 동원한 농림부의 축협생매장 행위를 고발하며 김성훈 농림장관의 즉각 사퇴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11.18) 492
 - 협동조합 졸속 통합 비판, 명의도용 인터넷사기극 처벌, 김성훈 농림부장관 사퇴 촉구
- 사무금융노련 성명서(11.18) 493
 - 농림부는 파렴치한 축협죽이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노총, 금융노련, 농협중앙회 노조 공동성명서(11.21) 494
 - 농협은 정부의 실험대상도 농정실패의 방패막이도 아니다
- 한국노총, 금융노련, 농협중앙회 노조 공동성명서(11.21) 495
 -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신문광고 (11.23) 497
- 인터넷 명의도용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자 누구인가!
- 한국노총, 금융노련, 농협중앙회 노조 공동성명서(11.24) 498
-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 을 철회하라!
- 축협중앙회 신문광고(11.25) 500
-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지금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 농림부의 개혁 협조 서신문(11.29) 501
- 농협 및 축협조합장에게 개혁 협조 촉구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5호(11.30) 504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6호(12. 1) 506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공동성명서(12. 2) 508
- 농림부의 비도덕적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 축협중앙회 일간지 광고(12. 2) 511
- 이 할머니의 눈물, 그 의미를 아십니까?
-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농협노조 신문광고(12. 3) 512
-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 강제 통합인가?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신문광고(12.10) 513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농협중앙회 일간지 광고(12.9) 514
-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협개연 성명서(12.10) 515
 - 축협중앙회는 공개사과하고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일간지 광고(12.10) 517
 - 협동조합개혁! 그 소모적 논쟁은 끝났다
- 협개연 일간지 광고(12.13) 518
 - 축협중앙회는 공개사과하고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신문광고(12.23) 519
 - ‘축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 축협중앙회 노조, 전국축협노조 신문광고(12.24) 520
 - 참으로 부끄러운 거짓말! 국민의 정부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7호 발행(12.27) 521
- 협개연, 일간지 광고(12.31) 523
 - 축협중앙회, 새해에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론분열 활동을 중단하고 진정 축산인과 축산농업인을
 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2000년>협동조합개혁관련 발표 자료

- 축협중앙회 노조 신문광고(1.11) 527
 - 수입 쇠고기를 판촉하고 농민인68세 할머니를 고발하는
 김성훈 농림부장관
-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소식지 제18호 발행(1.12) 528
- 농림부의 보도자료·호소문(1.13) 530
 - 협동조합개혁, 일선조합과 농업인을 위한 것입니다.
 축협의 주장, 사실과 다릅니다

○ 축협 정치세력화 관련 축협중앙회장 발언모음	532
○ 축사모 보도자료(1.20)	536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130만명 회원가입 기념행사	
○ 축사모 보도자료(1.24)	538
- 축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균형된 정책추구	
○ 농림부 서신(1.25)	540
- 축사모 상임대표들에게 개혁협조 당부	
○ 농림부 서신(2. 2)	542
- 축협조합장에게 통합일정 설명	
○ 전국농협노조·전국축협노조·축협중앙회노조 일간지 광고(2. 3)	544
- KBS·MBC·SBS가 같은 방송국이라 해서 1개로 통합해도 되는 겁니까?	
○ 농림부 일간지 광고(2. 7)	545
-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작업, 법대로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 축협중앙회 노조 성명서(2. 8)	546
- 설립위원회 현지실사에 대한 입장	
○ 임원해임	547
- 이기동, 안명수 이사 임원 해임	
○ 해임된 축협중앙회 이사 조합장 2명의 성명발표(2.17)	548
- 축협을 위기로 몰고가는 특정세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 전국 축협조합장 결의문(2.17)	552
- 통합일정 불참 결의	

○ 민주노총 신문광고(2.24)	553
- 농민을 올리는 협동조합 강제통합 중단하라	
○ 농림부의 일선축협 임원에 보내는 서신문(3. 6)	554
○ 전농 성명서(3.30)	556
- 농림부가 진정 농업·농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겸허히 수용하라	
○ 범대위 일간지 광고(3.31)	557
- 김대중 정권에 의해 파행적으로 진행된 반민주적 개악법, 통합농협법을 철폐시키고 올바른 협동조합개혁 투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한국노총등 성명서(4. 6)	558
- 의사구제역 발생! 축협임원진은 전원 사퇴하라	
○ 범대위 일간지 광고(4. 7)	559
- 정부도 구제역 재앙이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인정하고, 구제역 사태수습과 확산방지에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 설립위원회 위원장 서신(4.12)	560
- 축협조합장에게 창립총회 참석을 당부	
○ 범대위 일간지 광고(4.15)	563
- 정부는 4월 17로 예정된 통합농협중앙회 창립총회는 즉각 중단하라	
○ 한농연 성명서(4.25)	564
- 통합중앙회 초대회장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 범대위성명서(5.3)	565
- 공권력이 선출한 통합중앙회장도 원천무효이다	

○ 전국축협조합장 성명서(5.12)	566
- 탈법과 파행으로 점철된 협동조합 통합절차의 무효화를 선언하며	
○ 범대위 성명서(5.24)	567
-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정부의 협동조합 강제통합 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범대위 일간지 광고(5.24)	568
- 협동조합 강제 단순통합은 “미국 등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에 굴복한 정부의 농축산업 포기정책입니다	
○ 범대위 일간지 광고(5.29)	569
- 정부여당은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요구하는 협동조합 노동자의 총파업에 책임있는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전축노 성명서(5.30)	570
- 불가피하게 선택한 5월 31일 총파업 투쟁	
○ 협개연 성명서(6. 1)	571
- 축협중앙회와 일선축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여 협동조합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하라	
○ 새천년민주당 보도자료(6. 1)	573
- 통합협동조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 농림부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 발표(6. 1)	574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6. 1)	576
-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이제 협동조합간 화합과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협동조합상 정립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 농·축·인삼협 통합 합헌판결에 대한 보도(6. 2)	577
○ 축협노조성명서	593

1999년

**협동조합개혁관련
발표 자료**

여 백

발 표 문

- 전국의 5백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 오늘은 그동안 우리 농업인은 물론 협동조합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의 대상이 되어온 농업·축산업·임업·인삼협동조합 등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개혁 추진배경과 개혁방안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지난 1년동안 준비해온 정부의 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협동조합개혁 문제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98.4월 각계전문가가 참여한 「협동조합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동조합을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우선, 정부는 1단계로 지난 한해동안 각 협동조합별로 자율적인 구조개혁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토록 함으로써 농협의 경우 당초 2000년까지 인력을 20% 감축키로 한 것을 금년초에 이미 앞당겨 달성했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97년말에 7,317억원수준이던 부실채권도 '98년말 현재 4,877억원으로 줄였으며, '98년 농산물 직거래 실적도 4조5천억원으로 직거래 유통 비중이 '97년의 5%에서 12%로 높아지는 등 유통·경제·신용사업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IMF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축협은 은행중에서도 가장 건전한 은행의 하나로 평가받아 예수금이 농협의 경우 100조원을 돌파, 전국 최고치를 기록 했습니다.

- 그러나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종합적인 개혁과제는 정부가 협동조합중앙회 대표들에게 지난해 7월말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마침내 정부는 올해초 농조·농조연·농진공 3개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힘겨운 작업을 매듭짓자 마자 '99년을 「협동조합개혁의 해」로 선포하고 오늘 4개 협동조합 통합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때마침, 지난해말 농림부가 합동으로 참여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어, 비록 감사지적사항이 IMF이전인 '96~'97년에 발생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부실경영의 누적된 병폐의 일환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준데 대해 감독기관의 한 부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부가 이번에 확정된 협동조합개혁안은 명실공히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조합원에게 성실하게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서,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선 비록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이지만 개혁만이 우리 농업농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농업인의 여망을 모아 알차고 강도높게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일선조합은 이제까지 금융위주의 업무수행을 농축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체제를 전환, 이를 적극 육성 지원하고, 농민조합원 자조 목적의 상호금융과 지도·교육사업을 농민조합원 본위로 개선 보강하여 명실공히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민의 종합농협으로 개혁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첫째, 정부의 유통개혁예산 및 농안기금·축발기금등 정부자금과 중앙회 보유자금을 일선조합에 우선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구 통폐합 및 점포정리에 따른 고정자산등 매각 대금을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대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축협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 중심으로 최단 기간내에 통폐합하겠습니다. 농협의 일선조합은 1군 1조합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1,203개소에서 300개소로 통폐합하고, 축협 일선조직도 현재 202개소에서 100개소 이내로 통폐합하여 축산발전을 위한 전문업종 조합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책임있는 조합경영을 위해, 조합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그 권한행사에 상응하는 경영상의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거나, 조합장을 대표권만 갖는 명예직으로 하고 사업경영 업무일체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제도중에서 그 하나를 조합별 조합원 총회의 다수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선조합장 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도로 개편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선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조합의 이사회에서 2~3인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선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중앙회와 농림부의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조합의 취약한 자체 감사제도를 보완하며 외부전문가와 농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 그리고, 농·축·임·삼협 4개 중앙회는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 하여 일선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시켜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유통·지도사업을 육성 보강하면서 신용사업도 양질의 농업 자금이 일선조합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효율화·전문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첫째, 농·축·임·삼협등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을 통합하여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금년중에 임협중앙회는 임업생산자 조합인 산림조합 연합회로,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통합하겠습니다.

농·축협 중앙회도 2001년까지 통합하겠습니다. 먼저 농·축협중앙회 기능을 일선조합으로 대폭 이양하여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한 다음 2001년까지는 통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히 독립시켜 운영하되,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자금을 경제 및 지도사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2명의 부회장이 독립적으로 각각 대표이사가 되는 전문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고, 경영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대표이사는 외부전문가의 영입(Outsourcing)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회장(Chairman and President)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명예직으로서 총괄대표권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장은 농민의 권익을 대내외에 대표하는 지도·교육·관리업무와 농정활동 업무만 담당토록 바꾸고 중앙회장 선거도 지금의 전국조합장 직선제에서 앞으로는 전국의 대의원과 조합장중에서 선거 2~3일전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모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서로 경합되는 사업은 회원조합에 과감히 이관하거나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공동경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중앙회에 대한 정부기관간의 지도감독 기능은 그 역할을 명백히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용업무는 금감원의 검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일반은행과 같이 직접 감독·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는 포괄적인 지도·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농림부내에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고 관리부문과 경제사업·지도사업에 대해 농림부 관련국이 총동원되어 실시하는 감사제도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 전국의 5백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협동조합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조치하고, 농협법 등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계획안을 마련,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관계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중지를 담아내어, 그 결과를 최단기간내에 입법조치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농·축협 의 예금보호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이 이미 협동조합 신용상태의 건전성과 충실성을 대외적으로 공인한 바 있지만, 법적·제도적으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썸지돈을 농·축협등 협동조합금고에 안심하고 계속 맡기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WTO와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림축산업과 농촌·농민을 살리는 길이기도 함을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 농·축협중앙회는 법적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기관이고, 농·축협 일선조합의 상호금융도 중앙회가 보증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예금지급 보유잔금도 총 예수금의 3분의1이 넘는 19조원이나 확보되어 있는등 농·축협중앙회등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 이번 협동조합개혁에 따른 조직 및 기능개편은, 협동조합 사업을 효율화·규모화하고 일선 단위조합의 경제·신용사업 기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농민조합원의 참여폭과 실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이제까지는 보다 훨씬 더 투명성과 공개성이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라는 비난을 없애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건전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 협동조합 금융의 고객이신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번의 협동조합 개혁 조치가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돕는 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욱 알차고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선조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계속 애정을 갖고 보다 더 많이 농·축·임·삼협의 금융창구를 애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협동조합개혁과 아울러 현재 전국의 농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인의 연대보증 문제는 농수산업신용보증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확대 조치와 함께 일반은행의 전반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조치에 맞추어, 아니 그에 앞서서 이용자 편익위주로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시적인 추가조치를 올 상반기중에 입안, 발표하겠습니다.

- 상호금융 금리도 시중금리 인하추세에 따라 추가로 2%p 인하하여 12%대로 내리도록 이미 협동조합들이 발표한 바 있으나 그것이 곧 모든조합에 실현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번달부터 이미 특별경영자금 7,000억원을 확보, 농업생산목적의 상호금융자금등을 대체하여 선의의 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이미 지난해말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의 2년후 상황에 따른 부담도 미리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금리를 IMF이전 수준인 5%로 연내에 0.5%를 추가인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당정간에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농민이 살아야 협동조합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건재할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개혁은 농업·농촌·농민을 살려 나라와 민족 경제를 튼튼히 하자는 뜻입니다.
- 그러나 모든 개혁이 다 그러하겠지만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 조합원과 협동조합 임직원 및 노조,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고통의 분담만큼 성과도 커지고 그 혜택도 고를 것임을 확신합니다.

○ 총론에만 찬성하고 각론으로는 결사반대하는 협동조합 개혁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개혁성공의 “기본”으로 요구됩니다.

○ 단 한번의 개혁으로 “모든 것”을 얻어내려는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투쟁일변도의 일방적인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착실한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참고 참여하고 기다리는 국민적 슬기가 지금이야말로 우리농업의 제도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 과거 5천년 우리민족사에 있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농촌·농민들이 앞장서 구국의 기틀을 바로 잡았던 우리 선조 농민들의 애국 애농심을 되새겨 우리 모두 협동조합개혁에 함께 나섭시다.

□ 감사합니다.

1999년 3월 8일

농림부장관 金成勳

< 해설자료 >

농·축협 등 협동조합개혁방안

국민의 정부의 2대 농정개혁안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농협 등 협동조합개혁의 요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협동조합을 그 주인인 농업인들에게 되찾아 주겠다」는 것이다.
 - 첫째, 현재 공용화되어있는 중앙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그 기능을 농촌현장에서 농업인과 직접 맞닥뜨리는 농·축협의 일선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더욱 다가서게 한다는 점이다(농민의 협동조합).
 - 둘째, 일선 협동조합을 그 본연의 임무인 유통 등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효율화·규모화시켜 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 조합을 현재의 읍·면 조직에서 군단위 조직으로 광역화하는 협동조합 조직체계를 전면 재편하게 된다(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 셋째, 조합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농민조합원의 참여폭을 확대하며, 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체제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않는 현행 일선 조합장들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또한 방만한 중앙회도 전문사업별로 분리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이룸으로써 전문화시대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것이다(농민에 의한 협동조합).
- 이런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과히 제2의 협동조합 탄생이라 부를 만큼 혁명적이다. 농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1960년 현재의 종합농협 탄생이후 4개의 협동조합중앙회로 갈라져 온 것을 하나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협동조합 재탄생” 이라고 부른다. 농정 50년사에 있어 농지개혁(1950), 주곡자급을 달성한 녹색혁명(70년대), 농지소유 상한선 철폐 등 농지법제정(1994) 이후, 『국민의 정부』에 의한 농조·농조연·농진공 등 3개 농업기반 조직의 통합(1998)과 이번의 4개 협동조합 개혁으로 5대 농정혁명이 완수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협동조합 개혁안의 탄생 배경

- 이번 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러다보니 정부가 고심한 흔적도 많다.
 - 정권이 바뀔때마다 도마위에 올랐던 것이 협동조합개혁이었다. 그러나 매년 정권초기에 변죽만 울리고 말았던 것이 과거의 통례다.
 - 국민의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이러한 전례를 거울삼아 협동조합 개혁을 농정개혁 제1호 과제로 삼아 지난 '98년 4월 학계·협동조합·생산자·정부대표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왔다.
 - 당시 IMF사태로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은행, 기업 등 사회 모든분야가 생존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계 개혁의 요체인 협동조합은 손놓고 앉아있다는 따가운 시각이 있었다.
 - 농림부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곧바로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립,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여 농업인의 이익이 되고 농축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4개 협동조합을 문자 그대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이 되도록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왔었다.
- 농정당국의 이러한 주문에 따라 「협개위」는 3가지의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으며,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이를 지난해 7월 28일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 4개의 협동조합중앙회장을 초치, “정부가 바뀔때마다 계속 제기되어온 협동조합개혁 문제가 과거와 같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를 행동으로 옮겨 진정한 농민의 조합으로 태어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모여 공동의 단일 개혁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토록 촉구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4개 협동조합이 각기 강도 높은 자체적인 구조개혁과 기구축소, 경영혁신을 즉시 시작할 것도 요청하였었다.

- 이 같은 김장관의 요청에 따라 협동조합들은 지난해 스스로 자구적 차원의 강력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공동개혁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만 되풀이해 오다가 정부에 제출토록한 기한을 훨씬 넘기고서도 지난 3월초 농림부주재의 마지막 농·축협 회장간의 최종 담판마저 결렬되었다. 김장관은 당초 4개 중앙회장들에게 공동개혁방안을 원점에서 성역없이 검토토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공동합의한 협동조합의 공동개혁방안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거나 합의를 보지 못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밖에 없겠다고 밝히기도 했다('98. 7. 28). 이번 정부 주도의 개혁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이상과 같다.
- 그러나 4개 협동조합은 지난 1년여동안 각 기관별로 자체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금년 1월까지 5,084명의 임직원을 감축하였고, 농협의 경우 부실채권을 '97년말 7,317억원(2.4%)에서 '98년말 4,877억원(1.6%)으로 대폭 줄였다. 특히 농협의 부실채권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훨씬 적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없이 자구적으로 줄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 또한 농축산물의 유통사업에도 주력해서 직거래를 '97년 농축산물 총거래액의 5%에서 '98년에는 12%인 4조 5,000억원까지 크게 늘리는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노력도 해온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강도높은 자체 구조조정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미친 것이 사실이다.
- 정부가 이번에 초강수의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 것도 이와같은 사정에 연유한다.
 - 또한 정부가 이러한 이해기관간의 극심하게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해관계가 상이한 여러기관의 의견을 통합·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고심 끝에 내놓은 정부의 개혁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일선조합중심으로 활성화, 농업인에 밀착되게

-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협동조합을 농촌현장의 일선 농·축·인삼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업인에게 밀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것이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팔아주는 유통에 주력케하고 나아가 값싼 농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보다 낮은 금리의 농사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금년부터 대폭 증가된 정부의 유통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도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축산물 유통전담기구로 육성하여 농업인들이 제값받고 생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지역조합의 조직체계를 근본부터 개편해서 읍면단위조직을 경제권·생활권 중심의 시·군단위 조직으로 전면 재편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경우 현재 1,200여개에 달하는 조합을 300개 이내로 재편하고, 축협의 경우는 축종별 분포를 보아 2~3개군씩 묶어서 광역화할 수 있도록 현재 200여개를 100개 이내로 재편하게 된다.
-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규모의 경제에 맞게 출하할 수 있고 농자재 구입단위를 늘려 보다 구매력을 키움으로써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유통·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경영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대폭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저리의 농사자금도 공급할 수 있도록 1석 2조의 효과를 겨냥한 과감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유통·경제사업의 적자를 고리의 신용부문에서 메꾸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이를 반전시켜 유통·경제부문도 흑자경영을 하고 신용부문의 흑자는 금리를 낮추는데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또한 조합장 선거제를 현재의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뽑는 간선제로 바꾸어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때마다 나도는 각종 비리를 최소화하여 맑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 이와함께 ①조합장이 조합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그 권한행사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과, ②조합의 업무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조합장에게 대표권만 부여하는 순수명예직 방식중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선택권을 주게된다.
- 이밖에도 일선조합의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일선조합의 경영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농업인 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민주화·자율화 과정에서 공익성을 망각한 채 내버려지다시피한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부실경영은 곧바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4개 협동조합 통합을 지향 :

중앙회기능 대폭 축소, 2001년까지 농·축협중앙회 통합 추진

- 올해안에 인삼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통합, 임협중앙회는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을 년내추진

- 과감한 개편안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농업인구는 줄고 상대적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농업분야에 관련단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해 왔다. 4개의 협동조합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면서도 이들 4개기관이 계속 그 몸집을 불려왔으니 국민들의 지탄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4개를 한꺼번에 모두 통합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은 이러한데서 비롯됐다.

- 이번 개편안은 그러한 여론을 반영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이곳 저곳에 발견할 수 있는 말하자면 깜짝 놀랄만한 하나의 사건이다. 거대한 기구인 4개 협동조합중앙회를 일시에 통합한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제3자의 입장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책임질 수 없는 「말」에 불과하다.
- 농림부가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은 현실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대안이 아니었나 싶다. 14개의 일선 조합가지고 인삼 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삼협중앙회를 1차적으로 농협중앙회에 통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같은 경종농업이라는 점에서 한 울타리 속에서 다른 품목과 함께 발전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임업 협동조합은 대부분 부재산주들이 조합원이고 사업도 정부대행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산림조합으로 환원하여 육림과 산림 소득원개발 등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고유의 성격상 보다 합리적인 것이다. 적절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모든 시선은 축협중앙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다. 비교적 덩치도 크고 하는일도 농협중앙회 다음이다. 이러한 축협중앙회를 일시에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 IMF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던 축산농가들이 이제 막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들을 도와주고 어루만져야 할 축협중앙회를 통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맞는 판단이다. 2001년부터 쇠고기가 수입개방되게 되어있다. 지금은 힘을 모아 한우의 경쟁력을 높여 개방화에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 때다.
- 이러한 조정시기를 거쳐 2001년까지 준비기간을 두고 축협을 통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축산인들은 이기간 동안에 2001년에 개방되는 한우를 비롯 축산업의 경쟁력을 튼튼히 다져 조직 자체도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살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4개 협동조합중앙회를 개편하면서 중앙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새로 탄생될 중앙회의 공통화를 막겠다는 의지도 함께하고 있다.
 - 농협의 경우 하나로마트, 공영도매시장내의 공판장시설 등 전체 경제사업규모의 24%를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 축협은 돈육·사료사업 등 총 경제사업의 29%를 단계적으로 조합과의 공동출자, 공동경영방식으로 털어내게 된다. 군살을 많이 빼서 몸집을 가볍게 하여 통합에 대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일선조합의 기능 강화도 함께하게 된다.

- 또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 전문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대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들을 outsourcing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되면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 가지고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인 지도·교육·관리 및 농정활동 업무만 맡게된다.
 - 협동조합의 운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현대적 경영기법이 필요한 부문은 전문가 책임에 맡긴다는 뜻이다. 이렇게하면 중앙회장이 농업인의 의견을 정부나 정치권에 보다 홀가분하게 그리고 더욱 강하게 개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되면 굳이 지금과 같이 전문가 출신이 회장이 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경영은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전문인에게 맡기되 협동조합의 주인은 농업인의 대표가 맡게 한다는 것이다. 조합장들에 의한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비용을 줄이고 직선에 따른 잡음과 부작용을 생각할 때 당연히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매우 적절한 조치다.

- 일반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또 하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였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신용과 경제의 분리·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금융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완전분리를 주장하는 측도 있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은행측면의 기능만 고려하면 협동조합으로부터 금융부문을 완전히 분리시켜 철저한 독립기구를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협동조합의 유통사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고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을 육성하자면 많은 유통사업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금융부문에서 자금을 제때에 도와주지 않으면 경제사업은 주저앉게 되고 이로인한 협동조합 기능저하와 농업인들의 피해는 막중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쌀수매자금, 영농자금등 각종 정책자금을 협동조합 신용부문에서 연간 약 8조원 수준을 조달해 쓰고 있다. 이 자금 또한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정부의 재정 부담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 이러한 저간의 현실적 사정 때문에 이를 농협기구내의 완전독립이라는 분리 운영 방식을 채택한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한 것이다.
- 이밖에도 신용업무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일반은행과 같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하였고, 농림부의 포괄적인 감독권도 강화하여 민주화 과정에서 비뚤어진 부분을 개선, 공익성을 강조한 점이 이번 개편안의 또하나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인 농가부채보완대책의 지속적인 실시

- 정부는 협동조합개혁과 아울러 농업인의 어려운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 최근 농업인단체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연대보증 문제는 농신보 이용확대와 일반은행의 전반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맞추어 그에 앞서서 개선해 나가고
- 상호금융 금리도 시중금리이하 추세에 따라 추가로 2%P 인하하여 12%대로 내리도록 협동조합등이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곧 실현 되도록 독려하며
- 이미 지난해말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의 2년후 일시상환부담을 완화 하는 방안과 정책자금 금리를 연내에 IMF이전 수준인 5%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인, 국민 모두가 협동조합개혁에 동참해야

- 정부의 이번 협동조합개혁안은 충분히 평가해 줄만 하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개혁의 실천이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흐지부지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개혁과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농업인단체 그리고 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들을 성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제 개혁성공 여부는 우리 국민모두의 몫이다. 개혁을 위해 과거의 허울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 : 1999. 3
- 제공자 : 농림부 협동조합과
- 과 장 : 정 병 학
- 서기관 : 박 형 규
- 전 화 : 503-7218~9

이 자료는 1999년 3월 9일(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농·축협등 협동조합 개혁방안 확정

<보 도 요 지>

< 회원조합(일선조합) 개혁 >

- ◇ 정부자금(유통개혁예산,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과 중앙회 자금을 집중지원하여 경제사업 중심으로 적극 육성하고, 상호금융, 지도·교육사업을 보강하여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종합농협으로 육성
 - 기구 통폐합 및 점포정리, 고정자산 등의 매각 대금을 농·축협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에 집중지원
 - 경제사업을 제대로 안하는 조합은 평가를 거친후 신용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
- ◇ 농·축협의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 중심으로 최단기간 내에 통폐합하여 적정경제단위화
 - 농협 : 1,203개소 → 300개소이내
 - 축협 : 202개소 → 100개소이내
- ◇ 조합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되 이에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 업무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조합장에게는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제도중에서 당해 조합이 정관으로 양자택일하도록 개선

- ◇ 조합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
- ◇ 일선조합에 대한 중앙회와 농림부의 지도·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취약한 자체감사제도 보완 및 경영평가제도 도입
- ◇ 조합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임금구조를 단순화하여 수당중심의 불합리한 급여체제를 개편

< 협동조합중앙회 개혁 >

- ◇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등 4개 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하여 대폭개편
 -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임업생산자조합)연합회로 재편하며,
 -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통폐합
 -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은 중앙회의 조직을 슬림화 하여 2001년까지 추진
- ◇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 갖도록 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 독립·전문책임경영체제를 확립
 - 중앙회장은 지도·교육·관리업무와 농정활동업무 담당
 - 경제와 신용사업 부문을 완전독립시켜 운영하되,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자금을 경제사업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보장
 -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2명의 부회장은 각각 대표이사가 되는 전문 책임경영체제로 전환
 - 대표이사는 외부전문가로 Outsourcing이 가능

- ◇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조합장 직선제에서 선거인단 선출방식(간선제)으로 개편
- ◇ 정부기관간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은 그 역할을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
 - 신용업무는 금감원이 검사기능을 대폭 보장하여 직접 감독·제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
 - 농림부는 포괄적인 지도·감독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고, 관리부문과 경제사업·지도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실시
- ◇ 협동조합개혁과 아울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부채대책 추가 보완 대책 추진
 - 협동조합이 결의한 상호금융 금리인하(2%P)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독려
 - 부채대책 추가보완대책으로 확보한 7,000억원을 3월부터 농업생산목적의 고리의 상호금융자금 등으로 대체 지원
 - 지난해 말 상환연기된 정책자금의 2년 후 상환부담완화 조치와 정책자금의 IMF이전 수준인 5%로 추가 인하를 추진

< 추진 일정 >

- ◇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은 즉시시행, 관련법률은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하여 실시

○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3월 8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농·축협 일선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확정 발표하였다.

-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조합별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높게 추진한데 이어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농민의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농·축·임·삼협등 4개 협동조합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 협동조합 통폐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작업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협동조합개혁안은 일선조합은 농축산물유통등 경제사업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고 상호금융과 지도·교육 사업을 보장하여 명실공히 농민을 위한 종합농협으로 개혁하는 한편, 협동조합중앙회는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선조합개혁

농·축협의 일선조합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집중지원육성, 기존의 상호금융도 보장하여 종합 농협으로 육성

- 정부자금(유통개혁 관련예산 5,477억원, 농안기금 7,922억원, 축발기금 1,309억원)과 중앙회 자금을 집중지원하여 경제사업 중심으로 적극 육성하고, 기존의 상호금융, 지도·교육사업을 보장하여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종합농협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기구통폐합 및 점포정리에 따른 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을 농·축협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에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 각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을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농협은 300개로, 축협은 100개로 최단기간내 통폐합, 조합장 선거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편

- 읍면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일선조합은 1군1조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현재 1,203개소에서 최단기간내에 300개소로 통폐합키로 하였다.
 - 123개 시군지역은 1조합 원칙으로 통합하고 40개 도·농복합시는 경제권에 따라 2~3개로 통합
- 축협의 일선조합도 지역별로 축산업의 분포상황에 따라 광역화하여 전문업종조합으로 적극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202개소에서 최단기간내에 100개소 이내로 통합해 나가기로 하였다.
-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도 ①조합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되 그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와 ②업무일체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제도중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조합장 선거제도는 현재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각 조합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6~14명)가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2~3명을 추천하고 대의원총회(50~200명)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하고

- 조합장 출마자격을 현재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외부 전문가도 영입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중앙회와 농림부의 일선조합에 지도·감독권 대폭 강화, 조합의 취약한 자체감사제도도 보완

○ 중앙회는 일선조합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감사를 정례화하고, 농림부도 일선조합에 표본감사를 정례화하여 감사결과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은 책임을 묻고, 합병명령제를 도입하여 통폐합 명령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현재 비상임감사만 두고 있는 일선조합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와 농민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예: 예수금 1,000억원 또는 경제사업 취급규모 2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는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등 자체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당중심의 불리한 현행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급휴가, 지도수당, 복리후생비등 20여종의 수당을 단순화하고 조합임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통합촉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을 “협동조합합병촉진법”으로 개정

- 현행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을 “협동조합합병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의 통합 촉진을 위한 합병촉진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부실조합, 조합원 과소조합등에 대한 합병권고 불이행시 강제 정리할 수 있는 합병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중앙회 개혁

농·축협중앙회를 2001년까지 통합, 임협중앙회는 산림조합연합회로, 인삼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통폐합

- 농·축협 중앙회의 통합은 농·축협 중앙회의 기능을 일선 조합으로 대폭 이양하고 슬림화하여 2001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추진한다.
-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금년 상반기중에 임협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하고 일선 임협도 산림조합(임업생산자조합)으로 재편하고, 상호금융업무는 금융감독기구와 공동실사를 거쳐 부실조합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다른 임협 또는 농협에 흡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조합은 존치 보장할 방침이며,
-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금년 상반기중에 인삼협법을 폐지하여 농협중앙회와 통폐합 하고, 일선 인삼협은 그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전문조합으로 육성키로 하였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 전문 책임경영체제로 확립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간선제로 전환

- 현재 중앙회의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명예직으로서 총괄대표권을 갖고 지도·교육·관리 업무와 농정활동 업무만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중앙회장 선거 제도는 전국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여 선출하는 현행방식에서 전국 대의원과 조합장 중에서 투표 2~3일 전에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하였다.
- 각 사업별로 대표이사제를 도입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고, 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경제 및 신용사업부문을 완전독립시켜 업무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지불이 가능토록 집행간부 및 일반 간부직원 대상으로 연봉제, 계약제, 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각 부문별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용사업부문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 지도사업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 특히, 신용사업의 경우 농·축협이 특수성이 반영된 BIS비율 산출기준을 금감원과 협의제정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취급을 중단하는등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키로 하였다.

농·축협중앙회의 기능을 회원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슬림화

-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경합되는 사업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공동출자, 공동경영방식으로 개편키로 하였다.
- 중앙회와 회원조합 공동출자회사의 경영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중앙회는 동사업체의 경영지도만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과 점포 정리등 경영합리화 강력 추진, 불요불급한 부동산은 매각처분

- 농협중앙회의 경우 서울, 대전, 대구, 광주지역 신용사업본부 4개소(105명)를 연내에 폐쇄하고, 농협중앙회 직영의 가공제품 서울물류센타와 농특산가공품 전시판매장을 (주)농협유통에 통합키로 하였다.
- 아울러 대도시 신규점포 설치를 억제하고 개점후 3년 경과된 점포로서 2년 연속 적자점포 등 적자 부실점포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 그리고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일선조합의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는 총 1,028억원(총 고정자산의 6%)의 자산을 매각하고 축협은 총 710억원(총고정자산의 26%)의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 또한 회원조합수가 적어 중간조직의 필요성이 낮은 축협중앙회의 10개 도지회(149명)는 연내에 폐쇄하여 건물매각대금을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 자금으로 투입키로 하였다.

중앙회에 대한 정부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기능을 보강·체계화

- 신용업무의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의 검사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일반은행과 같이 직접 감독·제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신용업무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 농림부는 포괄적인 지도·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농림부 내에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고 관리부문과 경제사업·지도사업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 앞으로 협동조합 감독기관인 농림부, 금감원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공동감독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 일정

관련법 개정은 연내에 입법추진, 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즉시 시행

-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협동조합개혁방안중 관련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하여 실시하고,
- 관련법개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 지 회 견 문

우리 축협중앙회 노동조합과 전 계통조직의 임직원들은 정부의 반개혁적이고 일방적인 통합안 발표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애를 담아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발표가 개혁에 대한 압박감과 정부에 대한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 생색내기식의 협동조합 개악안 발표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농림부장관의 이번 발표가 농가부채문제 및 농어촌 파탄 등 과거부터 이어진 농정실패의 책임을 협동조합에 떠넘기고 정부에 대해 악화된 여론의 총알받이로 협동조합을 내모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이번 통합안이 부처간익 이기주의적 주도권 다툼과 일부 정치성질은 이익집단의 정치적 음모에 의한 산물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만이 마치 농정개혁의 전부인 양 선전하고 협동조합 통합을 발표한 것은 개혁으로 포장된 정부의 상황 면피성 발표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농림부가 협동조합 통합으로 인해 향후 얻어지는 효과와 그 결과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시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이를 입증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바람직한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들에 대한 생산지원과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잘 팔수 있게 해주는 지도경제사업을 충실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협동조합통합으로 는 결코 이를 담보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나름대로 경제사업에 충실해온 축협을 신용사업위주로 가뜩이나 비대해져 거대공룡이 되어 버린 농협과 통합한다면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축협을 비롯한 축산인과 축산업은 극도로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축산업과 축산농민을 말살하는 정부의 반개혁적 통합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협동조합을 방패막이로 살아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그간의 농정실패를 날날히 파헤쳐 온 국민에 알릴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 이다.

1. 정부는 강도높은 자체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축협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반개혁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협동조합 통합추진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농정실패의 책임을 협동조합에 전가하는 여론몰이와 강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명분쌓기용 사정 및 협동조합 흠집내기를 중단하라.
3. 사정당국은 영농조합법인 부실 등을 초래하여 이땅의 농축산업을 파탄지경으로 이끌고도 정부 내 잔존하는 농정실패 책임자 및 비리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중처벌하라.
4. 헌법상 보장된 농축산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포기한 체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강제적이고도 관치적 통합추진 음모를 주도한 농림부장관과 안종운

기획관리실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이러한 의지표명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백만 축산인과 축협구성원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대규모 춘계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각급 노동계 상급단체와 산하 노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생사를 건 강력한 투쟁 및 극한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9. 3. 8.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김 정 수

특별 결의문

지난 2월 25일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협동조합에 대한 비리와 부조리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시피 했다. 우리는 사정 당국에서 협동조합 개혁 차원에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조사하고 그 주범을 처벌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을 우선, 김대중 정권이 협동조합의 회장 및 몇몇 임직원의 비리를 전체 직원의 비리인양 호도하고 이에 편승한 농·축협 중앙회는 자신들의 비리와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회원조합 노동자들에게 그 화살과 칼날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은 하위직 중심의 명예퇴직과 서우 및 기능직 지원의 계약직 전환 방법으로 3월말까지 7000명을 줄이고, 축협은 4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날 협동조합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회원 농민들과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다름 아닌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자신의 임신양명만을 추구해 온 소수 전·현직 임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문제의 모든 책임을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현 정권이 밝히는 구조조정의 실체이다.

협동조합 개혁은 비리, 부조리 척결은 물론 농민이 협동조합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하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규제를 철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협동조합이 정부와 중앙회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소득증대 및 봉사조직이라는 진정한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만을 농사로 생각하며, 2000년 총선 준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습이기; 김대중 정권 사람심기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주무르려고 있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대표자 일등은 농·축협 회원 협동조합 노조 및 당사자간 협의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인원 감축 등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인원 감축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대표자들은 협동조합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전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 하나, 우리는 반농민적인 농·축협 비리 임직원을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우리는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인 여론몰이식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 하나, 김대중 정부는 인원 감축을 구조조정의 전부인양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배, 개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농·축협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 농민회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 하나, 만약 우리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5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1999년 3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일동

농·축협 2001년 통합

농림부 개혁안 인삼협을 상반기중 농협에 흡수

단위조합 연내 농협 3백곳·축협 1백곳 이내로 축소 임협중앙회는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하기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2001년까지 완전 통합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인삼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에 흡수통합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된다.

또 협동조합중앙회장은 권한이 대폭 축소돼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을 갖게 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사업별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로 독립 운영된다. <관련기사 3·10면>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8일 이런 내용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위해 농협법 축협법 인삼협법 등 관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필요하면 협동조합법병 추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들 협동조

합의 통합·재편 등 일련의 개혁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농·축협중앙회는 기능을 일선 조합으로 대폭 이양해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한 뒤 2001년까지 완전 통합하고, 올 상반기 중 임협법을 고쳐 임협중앙회는 정부대행사업만 하는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된다. 다만 임협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금융감독기구가 공동실사를 벌여 부실조합의 상호금융을 다른 조합 또는 농협에 흡수시키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조합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중앙회장 선거는 현행 전국 조합장 전체가 투표로 뽑는 직선제에서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시켜 독립회계 제도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용사업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신용업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직접 감독권을 주는 한편 농림부에 협동조합과를 신설,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앙회 통합에 앞서 농협 단위조합은 최대한 일 안에 현행 1천2백3곳에서 3백곳 이내로, 축협 단위조합은 2백2곳에서 1백곳 이내로 통합된다. 단위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조합별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가 2~3명을 뽑고 대의원총회(50~2백명)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최희종 hbchoi@kukminilbo.co.kr

군살빼기 인간힘... 부실체질 바꿀까

협동조합 개혁안과 문제점

농림부가 8일 밝힌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중앙 및 일선조합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 및 조합장 간선제 등 일단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호(金成浩) 농림장관은 "협동조합이 농업과 농민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조직 통폐합과정에서의 반발과 대(對)농민 서비스기능 약화, 간선제 전환에 따른 자율성 위축 및 정부의 영향력 강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개 협동조합 중앙회 어떻게 바꾸나
농·축협중앙회도 2001년까지 통합한다. 또 임협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중 임업법을 개정,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하고 일선 임협도 산림조합(임업생산자조합)으로 환원한다.

○인삼협중앙회도 올해 상반기중 인삼협법을 폐지해 농협중앙회와 통폐합하고 일선 인삼협은 그 기능을 더욱 보강해 전문조합으로 육성키로 했다.

○도 각자의 대표이사들 두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서로 독립된 경영체제로 독립회계법인과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결산제도 등 도입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취급을 중단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이 강화된다.

○도 각자의 업무 특성화 맞는 인사제도도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임금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제도적 중치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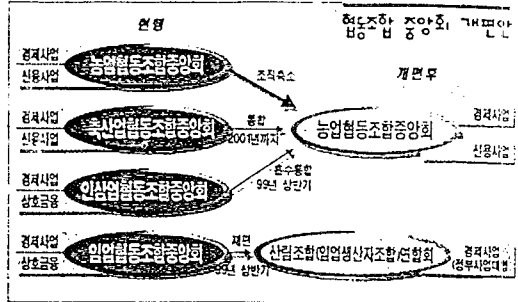
○'04년의 경우 전국 조합장 전체가 합여하는 1년 임기직에서 투표 2~3일전 전국 대의원과 조합장중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회의를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

다 중앙회 어떻게
경제·신용사업
독립경영 체제로
여신심사 강화
회장은 간선제 선출

다 단위조합 운영은
권한직·명예직 중
조합장 지위 선택
농림부·금융당국도
언제든 감사 실시

다 문제점은 뭔가
직선제 폐지로
정부입김 세질수도
신용사업 부문도
통제·간섭 예상

다.
○단위조합은 어떻게 되나
1은 1조합을 기본단위로 농업은 현재 1천43곳인 단위조합을 3백곳으로, 축협은 242곳에서 1백곳으로 가능한한 탈리 통폐합 계획이다.
조합장은 조합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되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 일치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 제도 중에서 조합의 품격이 다라 선택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 농림부 장관이 8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우성 기자)

선거제도는 선거비용 축소와 비리 근절 차원에서 헌법 조항권 직선제를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로 바꾸기로 했다.
감독강화 차원에서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연간 2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농림부와 금융당국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은제점
단위조합수가 더욱 줄어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구조조정 대상 조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일부 폐단만 제거 단위조합의 산물인 직선제

를 간선제로 바꾸 농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한창시 의사결정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농민에 의한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경제사업에 지원하도록 해 두 사업간의 완전연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신용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로 인한 향후 법적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수 shin@kukminbo.co.kr

농·축협 2001년까지 통합

인삼협 농협에 흡수... 금융부문 독립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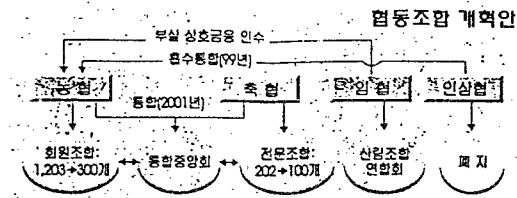
김형구 기자

2001년까지 농협과 축협이 완전
통합된다.

또 이르면 상반기에 임협과 인삼협이 농협에 흡수 통합된다. 농·축협이 하던 신용·경제사업은 별도 법인체로 분리하지 않고 각각 대표이사를 두고 책임운영하는 독립경영체제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3·38면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에 농협법 축협법 등 4개 관계법을 협동조합 합법축진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법 개정과 동시에 인삼협은 농협에 흡수되고 임협은 부실 상호금융부문을 농협에 넘겨준 뒤 정부 사업을 대충하는 산림조합연합회 형태로 전환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1군 1조합' 원칙을 적용해 농협 단위조합이 1203곳

에서 300곳 이내로, 축협은 202곳에서 100곳 이내로 줄어들게 돼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병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시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

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

신용사업에 따른 자금과 이익금은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신용업등은 금융감독원 감사기능을 더욱 보강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부 내에 협동조합과를 신설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에서 대의원과 조합장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신용사업 왜 분리 못했나 신용사업 왜 분리 못했나 8조규모 경제사업 자금 확보할 묘책 못찾아

김형구 기자

협동조합 연재

앞으로 통합 협동조합은 하나의 중앙회 아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반 시장 두 가족'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신용사업을 경제사업에서 떼내 별도 법인제 성격의 은행으로 분리해 출범시키는 '신·경(信經) 분리'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 신용사업을 통한 경제사업 자금 확보, 정부재정 지원업무 보조 등이 걸림돌이 됐다.

한 지붕 아래 살림을 꾸리든 인 사·급여 등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책임독립경영제를 도입하는 선으로 후퇴해 개혁의지가 퇴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 은행주권의 기능만 고려한다면 협동조합에서 금융부문을 완전히 분리해 철저한 독립기구로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의 유동사업이 아직도 곁을 아 단계를 있고 경제사업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자면 많은 유동사업자금을 의부에서 조달해야 할 형편이다. 금융부문을 자금용 제때 도와 주지 않으면 경제사업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협동조합 기능 저하와 농업인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 살수액 자금, 영농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신용부문에서 연간 8조원 정도 조달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사업을 분리하면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을 그 만큼 늘려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농협

- 57. 2.14 (주)농협법 제정
- 57. 2.14 농업은행법 제정
- 61. 7.29 농업법 제정
- (주)농협과 농업은행 통합 현재의 농업 بانک (61.8.15)
- 80.12.31 농업법 개정
- 축협분리
- 2단계 조직(단위조합, 중앙회)개편

●축협

- 80.12.31 축산업협동조합법 제정
- 농업에서 분리 (81. 1. 1 발족)

●일협

- 80. 1. 4 산림조합법 제정
- 93. 6.11 농업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인삼협

- 72.12.30 인삼경제조합 발족 (구 인삼사업법)
- 88.12.31 인삼협동조합법 제정
- 인삼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특히 별도 법인이 되었을 때는 10% 이상을 유지하는 농·축협의 BIS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각종 농축산물 공장과 유동업장이 농·축협의 자산으로 잡혀 있으나 이것을 포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별도 분리가 아닌 농협기구 내 완전 독립이라는 분리운영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고대신용사업을 건설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금감원에 이양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금인출 농수축협 정부 자금 지원키로

김상민 기자

정부는 경영부실로 예금인출 현상이 나타나는 농·수·축협에 대해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통화안정증권 매입이나 환국 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부족한 돈을 예의견하는 것이다.

이규성(李圭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현재(李顯宰) 금융감독위원장,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 전현환(全顯煥) 한국은행 총재 등은 8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수·축협 자금지원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록 통해 농·수·축협의 유동성 문제는 현재까지 크게 열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예금자들의 불안이 아직 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수·축협의 중앙회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해 주며 단위조합 예금은 자체 안전기금이 마련돼 있는 만큼 크게 열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예금자들을 진정시키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농·수·축협에서는 지금까지 1조원 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갔으나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예금자들의 불안을 감안해 예금인출 사태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퇴각오 협동조합 개혁 추진·완수 하겠다"

인터뷰/金成勳 농림부 장관

"이번 개혁의 성과에 2000년대 한국 농업의 평년이 달려있을 것이다."

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한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개혁안을 기필코 완안대로 완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였다.

"장관인 나를 포함해 김동태(金東泰) 차관, 박정정(朴正正) 차관보, 안종은(安鍾云) 기획실장 등 1급 이상 간부 4명이 사표를 써 총무과장에게 보냈사"라며 이번 개혁안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이번 협동조합 개혁이 한국 농업의 흥망 그리고 농민부 사활이 걸려 있어 이를 삼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은 협동조합 개혁의 건곤일직(乾坤一髮)의



김 장관은 농·수·축협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농림부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시종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결의로 추진하겠다는 농림부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시종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서 목이 맨듯 답을 던지기도 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 임오론과 관련해서는 "술 만큼 시간을 줘다. 이제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로 정부 개혁의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신용사업을 분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협의반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다시 분리 이상 가는 장차로 경영권과 대외권, 감사권을 엄격히 구분한 만큼 사실상 분리됐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농·수·축협 등 통합·기

법 당사자가 반발·저항에 밀려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해 가대 협동조합을 주인인 농업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그 동안 협동조합이 지나치게 지면 위주로 운영돼 농업인의 입중적인 반발과 민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김 장관의 평소 생각인 듯하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40년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자 한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사업인 만큼 일부 조처와 개인에 이익에 합치하지 않더라도 사심을 버리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축협 통합 주요내용·전망

1405개 회원조합 400개로 축소

강형구 기자

공통조직으로 군림해 온 농·축협이 결국 통합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이번 개혁안은 '합동조합 제1안'이라고 부를 만큼 대국적인 개편이다.

중앙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그 기능을 일선 조합조합에 넘겨 '농민의 협동조합'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선 회원조합 역시 본연의 업무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에 전념하는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가 돼 온 조합경영 방식 또한 일선 농민조합원의 경영 참여폭을 확대해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그러나 농·축협 중앙회 통·폐합과 회원조합이 1405개에서 400개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직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예상돼 순조롭게 통합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중앙회 통·폐합

농·축협간 통·폐합은 2001년까지 완료한다. 임업중앙회는 상반기에 임업법을 개정해 산림조합으로 환원하고 부실 상호금융은 농업 또는 임업에 흡수통합시킬 방침이다. 임산협중앙회는 상반기에 임산협법을 폐지해 농업중앙회와 통·폐합하고 일선 인산협은 그 기능을 대폭 보강해 전문조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은 권한을 대폭 축소해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을 갖고 지도·교육·관리 업무와 농정활동 업무만을 담당한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크게 바뀌어 전국 조합장 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에서 투표 2~3일 전 농민대의원과 조합장 중 무작위로 뽑아 구성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농·축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완전 책임전문경영체제로 개편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이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각각의 대표이사들 뒤 이들 대표이사급 인사급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부문별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제도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용사업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지도사업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용사업은 농·축협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금감원과 협의해



주요 협동조합 개혁방안

- 합동조합간 통·폐합
 - 농업과 축협 2001년까지 통합
 - 인산협 연내 농업에 흡수통합
 - 임업 신용사업 연내 농업에 통합
 - 임업은 산림조합연합회로 전환
- 중앙회 기구 축소
 -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 총괄 대표권 행사(중앙회장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
 - 신용·경제사업 독립·책임경영 채택(별도 대표이사, 인사·급여 체계 분리)
 - 금감원에 신용사업 감독권 부여
- 회원조합 합병
 - 농업: 1203곳 → 300곳
 - 축협: 202곳 → 100곳
 - 조합장 민·형사 책임경영제 도입(조합장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
 - 농림부와 중앙회의 지도·감독권 강화

중앙회 권한 대폭 줄여 회원조합 이양

조합장 실질권한 주되 민형사 책임 부과

도로 저정하며 대기업에 대한 빈보중취급 업무를 중단하는 등 이산신사가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에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 기능을 포함한 감독권을 온전히 넘겨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경제사업과 지도사업 등 일반 협동조합 업무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협동조합과를 신설해 관리·감독 기능을 행사하도록 바꾼다.

■ 일선 회원조합 개혁
일선 조합을 최단기간 안에 합병한다. 농업은 1203곳을 300곳으로

줄이고 축협은 202개 조합을 한우 양돈 양계 등 전문조합 형태로 기능을 바꾸고 그 수를 100개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123개 시·군지역은 '1군 1조합' 원칙으로 합병하고 40개 도농복합시는 경제권에 따라 2~3개로 대폭 줄인다.

조합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도 조합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되 권한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또 권한과 책임을 다 갖는 조합장과 업무 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행사하는 명예직

제도 중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장 선거제도는 현재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조합별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가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2~3명을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한다.

특히 조합장 출마자격에 대해 현재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외부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세부 추진 일정

세부업무는 이날 발족한 김동태 농림차관과 농업중앙회장, 축협중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협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가 꾸러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협동조합 개혁방안 중 농업법 축협법 인산협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하는 부분은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우익조직이 본격 출범한다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

국민우익연합회(이하 국민우익연)는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국민우익연은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국민우익연은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순서대로) 김성환 부총장, 김성환 부총장이 협회조직 개회발언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순서대로)

경제사업중심운영... 조합원 참여 폭 넓혀야

국민우익연은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국민우익연은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국민우익연은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국민우익연은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국민우익연은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국민우익연은 9일 서울에서 4개 협회조직한 연맹계 파란기를 맞는다.

(순서대로)

농·축·인삼協 합친다

2001년까지 부실 단위조합도 대폭 줄여

개혁案 확정·신용사업 감독권 금감원으로 일원화

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2001년까지 완전 통합되고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 선출방식은 직선제에서 대의제 등에 의한 간선제로 바뀐다.

또 통합 중·회장은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만 갖게 되고 유통 등 경제사업과 금융 등 신용사업은 중앙회 내 독립사업부로 완전독립과 부회장 대표이사 체제로 전문책임 경영이 이뤄진다.

농·축협 일선 단위조합도 앞으로 경제사업 중심의 독립사업체로 육성되며 부실조합에 대한 합병명령제가 도입돼 이르면 연내 1군(郡) 1조합 원칙 아래 농협은 현재 1천 2백 3개에서 3백개 이내,

축협은 2백 2개에서 1백개 이내로 통합된다. 단위조합장은 ▶실질적 권한을 주되 이에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 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부여하는 명예직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위해 농협법·축협법 등 관련법을 올 상반기 중 전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개혁안에 따르면 농·축협중앙회는 기능을 단위조합에 대폭 넘기고 2001년까지 완전 통합하며 인삼협중앙회는 올 상반기 중 농협에 통

합된다. 또 임협중앙회는 산림조합 연합회로 분리·재편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농·축협 신용사업의 감독·검사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예상밖 高강도 구조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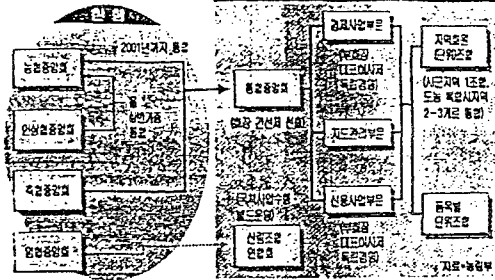
농·축·인삼합 통합 의미

농·축업이 80년 분리 이후 20년만에 다시 단일 합동조합으로 통합될 상환이 차했다. 정부가 농·축업의 '통합'이란 강도높은 안을 낸 데는 최근 분위기가 반영됐다. 농·축업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잇따른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착수 이후 개혁 요구가 크게 일었기 때문이다. 청외대의 개혁의지 또한 강력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합동조합이 이래 갖고서야 어떻게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강력하고 빠른 개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외미-중앙회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일선회원(단위)조합에 기능을 더욱 이양해 일선조합의 독립 사업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로 분산돼 있는 개별 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해 농업경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방안의 기본취지다. 조합장 직선제가 과월선거 및 조합원을 의식한 정책결정 등으로 권한남용·대출비리 등의 일인으로서 지적받은 만큼 선출제도 자체를 간선제로 바꾸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전문화시대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신용·경제사업의 분리가 막히지까지 이루어졌다. 신용사업을 분리할 경우 유동 등 경제사업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미흡치 않아 일단 중앙회내 조직으로 신용사업을 두되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결정안으로 낙착됐다.

농협의 신용사업 재원으로 연간 8조 원 이상의 쌀수매·영농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현실' 속에서 '이상'만을 고수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신용사업을 분리해 사실상 자회사 형태로 일반 은행과 같이 할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 데 1조원 정도의 자본

달리지는 합동조합 조직



‘복마전’ 개혁여론에
두곳이상 통폐합
해양부 관할
수협은 일단 제외
노조반발 등
넘어야 할 산 ‘척척’

금융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고려됐다.

△과제=농·축합 통합시점인 2001년 4월 1일 전의 협의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축협 등 통합대상조합 노조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개혁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수협의 경우 관할(해안수산부)이 달라 통합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지만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다. 후속조직 마련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우선 중앙회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을 선거 2~3일전에 '무작위'로 뽑히는 방법도 현안인 부형된 절차가 아니어서는 자칫 '착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현행 1천2백여명의 조합장에서 2백여명으로 줄어 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막판 과월선거에 대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조합장의 간선제 선출은 조합운영이 여전히 못된 조합 주도 인물이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있어 보다 분명한 감사제도 확립과 외부 경영평가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신용·경제사업 분야의 대표이사로서 책임경영을 주도할 중앙회 부회장으로 일단 회장이 지명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기제·인사권 부여 등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경제사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형편이 나은 신용사업의 수익금이 경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의 의무기탁제 등 제도보완과 경제사업의 수익사업 활성화 대책 등도 필요하다.

양재환 기자

<jayad@joongang.co.kr>

통합 주요내용

합동조합 구조개혁이 본격화하면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조직은 물론 운영형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용·경제사업 부문이 독립사업부로서 나뉘어 각자의 인사·경영·급여 체계에 따라 운영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일선 회원(단위)조합의 경우 '1군(縣) 1조합' 원칙 아래 통폐합의 광역조직으로 바꾸며 경영평가제가 도입된다.

△한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간다=농·축산물 유통 중심의 경제사업과 금융업무 중심으로 한 신용사업이 중앙회 조직 내에서 단 상립을 처리해 된다. 중앙회장은 명목적으로 총괄대표권만 가지며,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각각 맡는 2명의 부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을 진다. 이들 대표이사는 회장의 지령으로 대외연총회에서 임명되며 필요할 경우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유통·금융 '한지붕 두가족' 외부전문가 위탁경영 가능

두 분야는 독립된 회계제도와 기준을 도입하며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을 상대로 인사교류 없이 별도로 연봉제·직과제·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한다.

△조합장을 간선제로 뽑는다=중앙회장의 경우 지난 88년 도입된 전국 일선 조합장(현재 1천2백여명)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전국 대외원과 조합장 가운데 투표 2~3일 전 전산처리 등을 통해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일선조합 통폐합으로 조합장 수가 3백~4백명선으로 줄어드는 만큼 선거인단 규모는 2백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사임한 원원회(元源會) 전 회장 후임은 중년 규정대

로 직선제로 뽑는다. 단위조합장도 현재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에서 조합별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6~14명)가 2~3명의 후보를 뽑고 대외연총회(50~2백명)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일선 조합의 책임경영이 강조된다=조합장이 민·협사상 책임을 지고 외부 전문가와 만·협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조합장의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된다.

조합 사정에 따라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조합장은 대표권만 부여받는 명예직 제도도 택할 수 있다. 여수 1천여원 또는 경제사업 취급규모 2백억원 이상 일선조합에 대해서는 상임 감사제도가 도입된다. 후반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농·축·임·인삼협 2001년까지 통합

농림부 개혁안 발표
신용사업 분리 않고
독립경영 체제로.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 농업 관련 4개단체 중앙회가 2001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 신용사업 부문은 별도의 은행이나 자회사로 만들지 않고 중앙회 아래 두되, 직원들의 급여나 인사, 경영에 대해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전권을 행사하는 철저한 독립사업 부제로 운영된다. ▶관련기사 3·4면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8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비대해진 협동조합 중앙회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4개 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에서, 통합중앙회 회장은 권한이 대폭 축소돼 농촌지도·관리사업만을 맡고, 신용·경제사업 부문은 2명의 부회장이 각각 경영과 인사를 책임지는 철저한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문은 독립회계법인 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임업협동조합은 '올해 안에 산림조합(임업생산자조합)연합회로 재편되

고, 인삼업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로 통합된다.

현재 전국조합장 전체가 참여해 직선으로 뽑게 돼 있는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전국대의원과 조합장 중에서 투표 2~3일 전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뽑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고, 조합장 직선으로 뽑게 돼 있는 단위조합장 선거제도도 대의원들의 간선제로 바뀔 방침이다.

농림부는 차관과 협동조합 회장들로 이뤄진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세부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개혁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재성 기자

협동조합 통폐합 의미와 문제점

회장등 권한 축소 '비리 전횡' 썩기

법안소절·반발 고비...간선제 부작용 우려

이런 협동조합개혁안은 시한을 두긴 했지만 4개 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완전 통폐합하겠다는 법과 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을 더욱 축소했다는 점에서 크게 신천민 반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협동조합 통폐합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합개혁의 '제1 명제'로 거론되다가도 각 조합들의 반발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변안이 손을 돌리던 사이이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정부가 전면 통폐합을 계획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올해 임선중앙회의 인선법 중앙회를 폐지하고 2001년에 4개 협동조합을 완전통합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는 단일 법률안이 마련돼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지역 조합장들의 이해를 대변해 법률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축협을 비롯한 축산 관련 농민단체들은 벌써 협동조합 통폐합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중앙회장은 일우총괄권과 일선 임원권을 독식하며 조합의 운영을 좌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을 더욱 축소해 실질적인 명예직으로 한 것은 이번 개혁안에서 힘이 실린 부분이다.

지역조합장에 대해서는 실제권한을 준 뒤 민·협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전문경영인 영입제 가운데 고를 수 있게 해 책임경영을 강조했지만 간선제로 규정된 선출방식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조합장 선거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하

는 간선제는 오히려 농민 조합원이 유야무야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접근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많다.

단일조합 수를 '1군 1조합' 원칙에 따라 대폭 줄여 공격화하겠다는 방침도 눈살을 찌푸리는 정점은 있지만, 지역사정에 따라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경제·지도사업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용과 경제사업은 완전분리보다는 부회장 대표이사제 도입 등 현행 독립사업부제를 보완하는 정도로 한정시켜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가다. 정부로서는 농정예산과 경제·지도사업의 상당부분을 신용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장 신용사업을 대대면 엄청난 정부예산울 따로 책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본연의 임무보다는 '돈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협동조합들의 '판 생각'을 이번 정부안이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농림부에 협동조합과를 신설하고 감사 회사를 늘리는 등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가능 강화는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단위조합은 유명 무실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역조합의 감사를 상임제로 하고 조합조직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 기자



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농림부 회의실에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협동조합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 김성훈장관 일문일답

'1급이상 사표써 자리 걸고 개혁' 농민 살아야 조합이 산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8일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1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사표를 써놓은 상태"라며 "자리를 걸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저렴이 땅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혁은 농민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민이 살아야 협동조합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다. 농림해양수산부 소속 국회의원들도 가능한 범위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잘 될 것으로 낙관한다.

-협동조합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완전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면에서 본리가 중요하다. 신용사업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온전 분리는 반대한다.

-통폐합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에 대한 대책은?
-저체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해 봤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특별히 볼거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인력난측의 경우 농업은 이미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

-신용사업 독립경영은 지용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맞도 맞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잘 수 있는 조직체거나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번엔 제도도 시정법을 바꾸었다.

-이번 조처로 예금원을 사채가 지원될 경우 은행조치는 있는지?
-예금원을 사채는 지난 주말부터 친밀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협동조합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경호 기자

□ 57년 첫방부터 통합까지 '5·16' 이후 '관제' 변질 역대정권 '개혁' 단골 관련단체 끈질긴 로비

5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는 위로부터의 협동조합운동이 지난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5·16'부터는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농업과 농업인이 통합되면서 농업은 새마을운동의 '기수'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주인인 농민은 배제되고, 중앙회·신용사업 위주로 협동조합운동이 변질되면서 협동조합은 농민들의 단체가 아니라 '관제농협'이라는 비난 대상이 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역대 정권들의 단골 개혁 과제였다.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제출한 개혁안은 협동조합 관

제자들의 끈질긴 로비로 인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질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개혁은 농정개혁 제1의 과제로 두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협동조합 개혁을 꼽고 98년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8년 4월 학계, 협동조합, 생산자, 정부 대표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만들어 3개 개혁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농림부가 개혁방안을 직접 짜지 않고 4개 협동조합 회장이게 맡아 토론을 맡겼다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를 협동조합이 결국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 때도 특별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농림부와 감사관의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된 데 이어 청와대 의지가 실리면서 협동조합 개혁이 급류를 탔다.

이경호 기자

농·축·임·인삼協 통폐합

농림부 개혁안 2001년까지 추진

회장·조합장 간선... 경제-신용사업 독립
농협 단위조합 900곳·축협은 100곳 감축

농·축·임·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2001년까지 완전 통폐합된다. 또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 선출제도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8일 일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25면

김장관은 인삼협을 연내에 농협으로 통합하는 한편 임협은 상반기에 부실 단위조합을 농협으로 이관시키고 중앙기 삼림박층사업등 정부 위탁사업을 주로 맡을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기로 했다.

농·축협은 2001년 이전에 합치되 통합에 앞서 농협 단위조합은 현행 1,200개에서 300개 이내로, 축협은 200개에서 100개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전국 조합장 직선으로 선출되던 협동조합 중앙회장은 무직위 추출된 전국 선거인단이 선출하게 되고, 단위조합장 선거제도도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통합중앙회장은 총괄대표권(명예직)만을 갖고 대표이사 자격이 주어지는 부회장 2명을 통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야를 각각 독립경영토록 할 계획이다.

단위조합별로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조합장 총괄책임제」와 조합장은 대표권만 갖고 경영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조합장 명예직제도」중 택일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날 차관과 농·축협중앙회장등 3인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협동조합개혁추진단」을 구성, 개혁실무작업을 떠나기기로 했다.

/박정규기자
jpark@hankookilbo.co.kr

■ 농림부 발표 협동조합 개혁안 내용

경제·유통사업 대폭 강화 부실 조합장 민·형사책임

농림부가 8일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농·축·임·인삼협동조합중앙회등 4개 협동조합을 2001년까지 농협으로 일원화하고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단위조합을 경제·유통사업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되는 축협등이 반발하고 있고 농협·축협

법등 관련법 개정과정에서의 변수도 도사리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중앙회장·조합장 선거제도 개혁안은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실시 2~3일 전에 컴퓨터를 통해 전국 단위조합장, 대의원을 중 일정인원을 무작위 추출,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

장을 간접선출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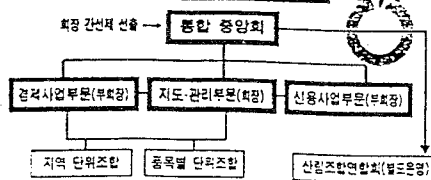
단위조합장은 각 조합별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6~14명)가 조합장 후보 2~3명을 뽑고 대의원총회(50~200명)에서 선출한다.

■ 전문경영체제 도입 통합협동조합회장은 부회장 2명(신용사업, 경제사업)을 지명해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되 외부 인사도 영입할 수 있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시켜 독립회계제도의 기업화 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단위농촌 조합장들이 부실경영을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농협 단위조합은 「(제1) 조합」 원칙과 경제권에 따라 1,200개 가운데 300개로 통폐합된다.

■ 문제점 통폐합되는 단체들은 정부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별로 조합을 구성해 놓고 이체와서 통합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회장·조합장 간선제 전환에 대해서도 야권 일각에서 「지역표 돌이를 위한 전략」으로 규정, 반대태 움직일어서 정치권의 입장이 주목된다. /박정규기자
jpark@hankookilbo.co.kr

협동조합 개편방안





사 설

농민 위한 農·畜協 개혁을

정부는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을 2001년 까지 단일 협동조합으로 통폐합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협동조합이 그동안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비효율성과 각종 비리를 낳아 크게 부실화한 만큼 이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농·축협의 부실·비리 경영 실태로 더욱 고조돼 협동조합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순대에 오르게 됐다. 우리는 이번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보고 몇가지 소견을 제시한다.

먼저 어떤 부문이든지 문제가 터질 때에는 각종 대처 방안이 난무하고 중국에는 제도와 규정의 손질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와 규정이 좋은 조직 운영의 필수조건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규정을 갖고 있더라도 조직 운영자의 자세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성공 여부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의 개혁방안이 발표되자 벌써부터

관련 협동조합으로부터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축협과 임협측은 이번 개혁안이 농협 중심의 통합안으로 농정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반개혁적 음모라는 주장마저 제기한다. 우리는 농협 부실 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농민의 이익단체로서 축협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와 관련 협동조합, 나아가 농민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농민의 진정한 이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협동조합 통폐합 문제가 개혁안의 최대 이슈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지만 농민의 편에 서서 접근한다면 결코 풀지 못할 난제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농협의 신용 및 경제사업을 부회장 중심의 분리 운영체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선 차이에 완전분리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더 검토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관료체제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혁안에 농민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추호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설

진정 농민을 위한 개혁을

주객이 전도된 협동조합이 이번에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농림부가 대통령 보고를 통해 확정된 협동조합개혁안은 '협동조합을 주인인 농어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물론 이번 개혁안이 문제인식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는 기대는 크다.

개혁안은 공통처럼 커진 중앙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일선 단위조합도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조합원들의 참여폭을 확대, 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제를 이루겠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또 통합된 협동조합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독립시켜 운영하되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자금을 경제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경제와 신용 분리불가'를 외친 농민들의 의견이 수용된 셈이다. 이번 개혁안은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여신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 건전경영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분리하지 않아 당초 개혁의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부문을 완전히 떼내면 자금을 외부조달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럴 경우 경제사업 자체가 위협받아 조합의 주인자리찾기를 열망하는 농어민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진정 농어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재탄생을 원한다면 이 같은 비판은 잠시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농어민을 위한 생산자조합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대기업에의 대출 등 일반은행화한 것은 유감이다. 역대 정권이 이를 알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 공통조직에 메스를 가하지 못했었다. 모처럼 이번에 손을 댄다면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합 본연의 자세를 찾을 수 있게끔 확실한 개혁을 해야 한다.

사 설

관료화 안될 농·축협으로

정부가 농·축·임·인삼협 등을 2001년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개혁안을 내놓음으로써 생산자 단체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그동안 공기업개혁 못지 않게 농·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국민의 불만대상이 돼 왔다.

역대정부가 협동조합의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다. 문제와 해결의 큰 방향은 알면서도 주춤거려 온 것이 결국 최근 감사원의 농·축협비리 감사결과로 다시 불거졌고 이번 개혁안도 이미 정부가 지난해 4월 협동조합 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듬어 온 안을 재손질해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개혁방안의 방향이 옳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굴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서 유의할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통폐합을 통해 단위조합들은 농민들의 수요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난립한 일선 조합의 전문성과 취약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왔으며 때문에 조합원이 요구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왔다. 그 결과 부실조합은 양산되고 한편으로는 귀족농가만 살찌우는 조직이 돼 왔던 것이다.

중앙조직도 투명경영을 통해 도시 속의 농업 화이트칼라라는 불명예를 씻고 이번 에야말로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길 필요가 있다.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 선출을

간선제로 전환키로 했지만 현 직선제가 농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를 잘 파악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수협도 단위조합을 통폐합하고 중앙회는 다른 협동조합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어민들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획축소로 터전이 줄어들어가는 데 조합만이 난립할 근거는 적으며 주관부처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 갈려 논의가 어렵다지만 그것은 정부내에서나 할 얘기다.

주의할 것은 이번 개혁이 농민과 협동조합의 자율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번 개혁안은 정부의 일방통행적 성격이 강한데다 그렇지 않아도 협동조합은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사업 대행으로 농림부예의 의존도가 엄청나다. 결국 이것은 농림부의 입김 강화로 연결돼 협동조합의 관료화가 다시 정부의 관료화로 대체될 우려를 갖게 한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이번 개혁이 다시 실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 우려도 크다. 지역구 정치인은 선거 때만 되면 서로 농협조직 장악을 위해 뛰어 온 게 사실이며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개혁안을 협동조합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한다.

결국 정부가 정도(正道)를 지켜 투명한 개혁을 추진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개혁추진의 다짐을 위해 농림부 고급관리 4명과 함께 사표를 써 맡겼다 한다.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주시코자 한다.

대한 매일

3月9日 7面

진정한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농림부가 2001년 완전통합을 목표로 한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업무의 유사성에 비해 볼 때 당연한 조치이며 이 조합들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 4개 농업관련 협동조합 중앙회가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통합, 새로 태어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 협동조합들은 사실상 업무의 중복성과 조직의 비능률성으로 인해 부실화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기득계층인 일부 조합원의 반발과 정치권 비호세력의 반대로 손을 대지 못했었다.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을 오는 2001년까지 통합하면서 공통화돼 있던 중앙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과 현재 읍·면 단위로 조직돼 있는 일선 단위조합을 시·군 단위로 통폐합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인 생산과 출하 등 경제사업 위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농민을 위한 진정한 조합으로 바꾸려는 정부의지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이 조합들은 이른바 상의하달(上意下達)식 중앙회 중심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데다 조합원이 원하는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금융업무)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조합원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농림부가 이번에 중앙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일선 단위조합의 기능을 강화한 것은 하의상달(下意上達)식 선진국 형태로 국내 조

합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또 농협이 단위조합을 현재의 4분의1, 축협은 2분의1 수준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본잠식과 적자로 더이상 사업이 불가능한 단위조합을 정리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협의 경우 단위조합의 절반 정도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실은 현재 조합의 경영위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마디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업무가 비슷한 농협과 축협의 분리 운영이 부실화를 가속화했던 것이다. 이 조합들의 통합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이번 협동조합개혁안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어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 등 모든 조직이 군살빼기와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의 특수기능에 속하는 금융업무를 따로 떼어 전문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신용사업을 담당 분리하면 경제사업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다른 금융기관은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 또는 선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의 금융업무만이 구태의연한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정회를 통해 공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



사설

농·축협개혁 과감하게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각종 비리로 점철됐던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안이 마련됐다. 개혁안은 협동조합이 농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농민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조합자체의 이익에 치중해왔던 그간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사업의 중점이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경제성을 함께 갖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다. 아무리 농민의 이익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시종 수익사업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협동조합의 문제는 이러한 기본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개혁은 간단치 않다.

개혁안은 먼저 각 협동조합중앙회의 개혁에 중점을 둔다.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 등 4개 중앙회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하려는 방향은 타당하다. 농·축·임업의 경우는 업종자체는 다르지만 같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조직관리비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1년까지의 농·축협 통폐합 원칙을 가능한 한 앞당겨 실시. 비용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은 일선단위조합의 통폐합 문제다. 농협의 경우, 현재 1천2백3곳의 단

위조합을 3백곳 이내로 통폐합한다고 한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비용을 절감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단위조합 수의 축소로 대농민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 면단위조합이 군단위조합으로 바뀐다고 할 때 조합과 일반농민간의 거리상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

중앙회조직도 중앙회직의 권한이 축소되고 전문경영인체제가 도입된다. 문제가 됐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독립시켜 책임경영토록 했다. 특히 신용사업분야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에 대한 자체감독기능이다. 여권대지금의 개혁은 지난 94년 협동조합법 개정 때 따라 자율적 체제로 탈바꿈한 농협이 자율성의 감점을 살리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부감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또 다시 감독기구와의 유착을 낳을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농협 자체의 자율적 개선장치가 확보되는 것에 중점을 뒀야 함에도 이번 개혁안은 주로 문제가 됐던 분야에 대한 하드웨어적 수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율권리는 개혁을 추진해가는 데 있어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농민 위한 農-畜協 돼야

정부가 추진중인 4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일응 긍정적이다. 농협과 축협, 임협(林協)과 인삼협 등 4개 조합의 방만한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한다는 요청에서 볼때 협동조합 조직을 '구조조정'하려는 취지 자체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 통합부터 서두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조합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조합들의 반발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 정도로만 생각하고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해당 조합의 반발이 '이유있는 항변'인지 아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가며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조직'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모았으면 한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통합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명제는 역시 이들 조합들의 기능 합리화일 것이다.

기능 합리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뒤바뀐 개혁이 될 수도 있다. 개혁의 목표가 농협다운 농협, 축협다운 축협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런 만큼 농협의 경우 한편으론 군살을 빼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영농자금 지원 등 농민을 위한 본업(本業)은 뒷전으로 한채 돈놀이에만 치중했다든가, 농민 지원 조직이 아니라 농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관료화(官僚化)됐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농협이 농민과 따로 움직이는 조직이 된 이면에는 정부가 농협을 각종 특혜성 자금의 창구로 활용하는 등으로 정부 통제하에 운영해온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통제의 사슬을 끊음으로써 농협이 농민 자율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돕는 한편, 농협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축협, 임협, 인삼협 등도 농협과 비슷한 고민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므로 그 해법(解法)도 마찬가지로 본다.

사설

농·축·삼
협중앙
회 통합

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8일 발표됐다.

이번 개혁방안의 주요 골자는 △2001년 중앙회 통합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독립경영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간선제로 선거제도 개편 △일선 단위조합의 융·경 사업 기능 강화 등이다.

우리는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주인의 지위를 찾아주고, 원래의 목적인 경제적 실익을 조합원에게 가져다 주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

놓은 것으로 일단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리 고자 한다. 그러나 진정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개혁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일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출을 간선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선거

조합장 출마자격을 외부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검 토돼야 한다.

다음 문제는 통합되는 축협중앙회의 10개 도지회를 올 연말까지 폐쇄한다고 했을 뿐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을 보고

폐단을 시정하고, 조합의 공역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모르는바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어렵게 싸워 정취했고 현재 대다수 농민들이 선호하는 직선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농민의 참여폭을 오히려 줄인다는 측면에서 당초 개혁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 도단위와 시군조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회의 근심을 때서 몸집을 가볍게 하기 위해, 그리고 농민조합원에게 주인의 지위를 찾아준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용·경제사업의 전문화 방법이다. 부회장 대표이사제 도입 등 협동조

합 개혁안은 현행 독립사업부제보다 크게 진전된게 사실이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융·경사업이 결속단계에 있고,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쌀 수매자금 등 정책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 분리보다는 협동조합내의 완전독립이라는 현실적인 운영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씻을지가 관심사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벌써부터 개혁추진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을 실행에 옮겨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농협이 거듭나려면

협동조합이 다시 수순대에 올랐다. 분야별 조합간의 기능 중복, 비대한 중앙조직과 회장의 권한집중,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우친 경영, 영세한 일선조합 및 회원조합간의 과다경쟁 등의 문제는 지난 정부때부터 거론돼 지난해 협동조합 개혁위원회에서는 방향까지 제시된 사안이었다. 이들 스스로 풀지 못하고 서로가 개혁대상이라는 풍조까지 만연되었으니 정부가 나서서 게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이제 온 국민이 지켜보는 마당에 더 이상 개인적 여기주의나 조직적 이해관계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협동조합 정신을 살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에 입각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농업인의 진정한 봉사조직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회원조합은 경제사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조합을 적정한 경제 단위로 통합하고, 또한 규모만 커운다고 효율성이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내부적인 경영혁신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유통·경제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늘리고 상호금융업무를 보강하여 명실공히 종합농협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조합원과의 유대관계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원에 중심한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 분리하여 책임경영 체제들 확립하고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농·축·인삼협의 통합은 다

시 거대 조직화에 따른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되 불가피한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자회사 또는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간의 자금연계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이 누릴 수 있는 자금의 내부거래로 인한 편익이 줄어들 경우

경제사업은 많은 제약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농업은행 설치의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신용사업의 범위 제약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라 시중은행은 업무영역을 넓히는 추세인데 협동조합의 내부적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협동조합이 대단위로 통합되면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은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선거 부조리는 차치하더라도 분야별·지역별 이기주의로 인한 선심성 사업과 이에 따른 경영 부실화가 더욱 우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간선제가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선 조합장의 권한은 강화하되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고, 중앙회장은 명예직으로 농정활동에 전념하면서 사업관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장년기에 들어선 농·축협은 보다 성숙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늦게나마 정부의 손을 빌려 개혁작업에 착수하는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조직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내야 할 때다.



金正錫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축협 '통합반대' 신문광고 일부교수 이름도용 '말썽'

축협이 협동조합 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면서 농업관련 교수들

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25일치 조간신문에 실린 이 광고는 농수산 관련 26개 대학교수 366명이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진실과 여론을 의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가 실기자 일부 교수들이 허락없이 이름을 사용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남대의 한 교수는 김성훈 장관에게 팩스를 보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교수들의 이름을 도용해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라며 명예손상을 입은 데 대해 심한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조사한 결과 이름이 공개된 교수의 88% 이상이 신문광고가 나가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축협이 장관에게 보낼 건의문을 작성해 교수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나 정작 건의문은 접수시키지 않고 이번 신문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수 축협 본조위원장은 "농림부가 광고를 신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봐 광고안을 신문사에 먼저 보낸 뒤 교수님들께 최대한 알렸다"며 "본판에서 이름을 삭제한 것은 연락을 미처 못한 교수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성 기자

기자화



오현환 기자 (사회부)

명분없는 협동조합통합 반대

농·축·인삼협의 통합에 반대깃발을 올린 곳은 축협중앙회 직원들과 단위조합장들이다. 노조의 단위 조합장들은 각각 강제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통합저지 전국 조합장 협의회」를 만들었다. 노조는 한달간 월급을 모아 37억원의 투쟁기금까지 조성했다.

이들은 수차례의 신문광고, 두차례의 대규모 시위를 통해 통합이 전문화에 역행하고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격렬한 반대운동을 폈다. 그러나 시민·농민단체들의 이들에 대한 시선은 굽지 않다. 시민·농민단체들이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나 농림부에 보내온 팩스내용을 토대로 핵심사안인 「협동조합 통합」에 대한 의견은 축협의 반대운동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1개 단체가 통합에 찬성했고 반대하는 단체는 축협과 전국농민총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고작 3개에 불과하다.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중에는 대한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축산관련 단체도 자그마치 25개나 된다. 특히 카톨릭농민회 등 13개 농민단체들은 오는 13일 오후 용산구 이촌동 농업기술자회관에서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를 결성, 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감량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축산관련 단체들이 축협의 독립간판을 내리는데 환영하고 나서는 현상은 극히 이례적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같은 분야나 한술밥을 먹는 사람들은 설혹 내부적으로 갈등과 알력이 있더라도 위기에 처하면 서로 힘을 합하고 지지해주는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들단체들이 협동조합 통합에 찬성하고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협동조합들이 몸집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농축산민들의 의견이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협직원들과 단위조합장들이 아무리 통합반대의 명분과 이유를 강조해도 축산관련 단체들이 조합통합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는 「밥그릇을 지키기위한 공허한 구호」로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협은 반대운동을 벌이기에 앞서 왜 「같은 식구」들조차 통합에 찬성하고 나서는지 그이유를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hhoh@sed.co.kr

기자 메모

농·축협 통합 '밥그릇 싸움'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협동조합의 개혁 안 공청회 날짜가 15일로 잡혔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가 과연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공청회 자체가 아예 파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농협과 축협이 최근 벌여온 밥그릇싸움의 양상을 보면 그같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통합의 주도권을 놓고 치루한 힘겨루기를 계속해오면서 두 기관 사이엔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진 것이 현실이다.

축협이 요구하는 통합안은 농업·축산을 현재처럼 별도의 법인으로 두자는 것이다.

· 다만 두 기관의 신용사업부문은 떼어내 하나의 통합법인을 만들고 그 위에 이 3개의 법인을 총괄하는 통합 중앙회를 만들자는 안이다. 그러나 농협은 「축협 주장대로 협동조합을 개편하면 결국 「옥상옥(屋上屋)」의 꼴만 되고 말 것」이라며 한 법인 아래 별도의 사업부 체제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조직을 별도법인 체제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부로 축소해 세분화할 것이냐가 논쟁의 초점인 셈이다.

농협의 고위 관계자는 「18년전 분가한 차남이 만형이 사는 본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며 축협을 겨냥한다. 조합 숫자나 수신액에서 축협보다 덩치가 10배나 큰 농협이 통합 중앙회의 살림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축협은 그러나 축산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농협으로 흡수통합될 수 없다고 맞선다. 통합될 중앙회의 이름도 축협은 「농·축협 중앙회」, 농협은 「농협중앙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

진흙탕 싸움은 이제 국회로까지 번질 태세다. 국회 입법을 앞두고 벌써부터 농·축협은 저마다 지역구 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쳐왔다. 문제는 통·폐합때 도마 위에 오를 중앙회 직원이나 조합장들이 두 기관의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평을 듣게 된 1차적 연유다.

요즘 농촌마을은 휴일마다 축산인과 농민후계자들이 편을 갈라 따로 집회를 열고 있다. 검찰 수사가 겹쳐 특하면 농·축협 직원이 잡혀가고 곧 비리내용이 짜히니 마을에 돈다. 자연히 인정이 삭막해지는데 예전처럼 영농자금이나 자재를 공급받기도 힘들어졌다. 농·축협이 「모 아니면 도」식의 제로섬 게임을 벌일 때인가. 바쁜 모내기철도 코앞에 다가오는 데.



경제부
이 기 수

문 화 일 보
4月15日 2面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을 놓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직전'의 농림부와 농·축협 사이에 모처럼 대화의 분위기가 움트고 있다. 그동안 내부사정등으로 '통일안'을 내놓지 못했던 축협은 최근 자체안을 확정, 농림부와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농림부는 13일에도 농협부회장을 포함, 담당 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역시 3시간여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다.

농·축·인삼협 대의원들도 같은날 농어촌진흥공사 대회의실에서 농림부 농정국장을 앞에 두고 각자의 주장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위기가 조성된데에는 3일 국정보고 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에게 "협동조합 개혁을 소신있게 추진하되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라"는 '훈수'가 계기가 됐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쨌든 우여곡절끝에 마련된 대화 분위기가 15일



대화물꼬 튼 '협동조합 개혁'

축협은 특히 7일 농림부장관앞으로 공문을 보내 개혁안과 관련, 대화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단체가 감독부처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대화요청'을 한 점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12일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중앙회 부회장 2명등과 정부안을 놓고 3시간여 동안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농정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자제해왔던 농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들고 대화의 장(場)에 '가세'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등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연대'는 14일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통합을 뼈대로 한 자체안을 확정, 공론화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처럼 대화 분

부터 이틀간 서울등지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농민을 위한 진정한 '작품'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나마 최근 일련의 각종 개혁정책 혼선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순수한' 농민들은 역시 다르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주의와 개혁'을 동시에 실현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화용기자>

대한 매일
4月16日 9 日

사설

농업인 위한 조합 개혁을

농림부가 농협과 축협 등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이번주 안에 끝내고 다음주에 입법예고키로 한 것은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부가 축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개혁을 조속히 끝내기로 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3일 "농협이나 축협은 개혁에서 무풍지대"라고 전제, "농림부는 협동조합 개혁에 있어 확고한 소신을 갖고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 통합은 농림부가 지난 2월 김대통령에게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농협·축협·인삼협 등 협동조합중앙회 개혁은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폐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보고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농협은 9,100억원, 축협은 3,860억원을 부실 대출한 사실과 대출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개혁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축협이 중앙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공세와 대중집회를 갖는 등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일 움직임까지 보이자 협동조합 개혁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한 움직임이 있자 김대통령은 대중집회라든가 신문광고와 같

은 것이 필요없도록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지시, 농림부가 통합협동조합법안을 만들어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축협중앙회·인삼협중앙회는 당초 방침대로 통합하고 각 사업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제전담·축산경제전담·신용사업전담 부회장(대표이사)제를 도입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선단위조합의 통합은 당초 방침을 수정, 경제권과 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자율 추진토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3대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통합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농협과 축협을 통합할 경우 연간 1,549억원, 3년간 6,285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단위조합 숫자에 있어 1군(郡) 1조합의 당초 방침에 신축성을 두기로 한 것은 단위조합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혁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중앙회 간부나 조합장이 주인이던 조합을 농업인(조합원)이 운용주체가 되는 조합으로 바꾸기 위한 부단한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

통합협동조합명칭 합리적 원칙으로

협동조합 개혁방안 중 통합중앙회 명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부 입법예고안은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가칭)'를, 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는 제1안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2안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3안 농축산물생산자협동조합중앙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의 명칭결정은 원칙과 합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좋은 이름을 두고 명칭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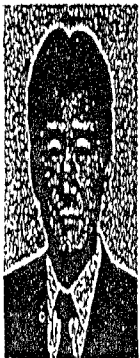
21세기는 문화와 이미지를 판매하는 시대이다. 신경영전략상 명칭에 따른 기업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는 엄청나며 기업의 사활을 좌우한다. 상품명 하나에도 신중을 거듭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농협'은 이미 40여년동안 친숙해진 이름으로 상징성이 크며, 최근 농협 김치수출 등으로 국내외적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97년 환란시 사료수출국들이 국내 어떤 은행의 신용장도 받아 주지 않았으나 시티은행·아멕스는 행 등이 농협의 신인도와 이미지를 평가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줌으로써 급박한 사료과동을 면했던 것은

좋은 예이다. 이같은 농협의 대내외적인 유형·무형의 자산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당장 명칭변경시 약 5천개의 외국은행과 번잡한 외환계약 갱신이 필요하며 국제 신용등급하락도 우려된다.

정부기관과 농업단체의 명칭을 한국의 농림부·국회농림해양수산 위원회를 비롯해, 일본의 농림수산성·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미국의 농무부·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표기하는 것도 농업의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이다. 우리의 농협법은 물론 농업농촌기본법·산업표준분류 등 모든 관계법령에도 축산업을 '농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대나 국민은행, 미국의 유니온뱅크 등의 빅딜에서 보듯 명칭은 경영규모와 인지도를 최우선하는 것이 대세이다. 명칭변경으로 당장 간판·장표·등기 및 CI개발에만도 약 3천 억원이 소요되며, 약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농협' 브랜드의 자산가치를 잃는 것도 문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므로 농업인을 위한다는 개혁취지에 어긋난다. 명칭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농촌 살찌우는 협동조합으로



홍일환 농협중앙회장

복마전(伏魔殿)으로 지탄받아 마땅했던 것이다. 축협도 농협보다 결코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정업체에 편중대출해준 수백억원이 고스란히 부실채권화하고 축협의 양돈 계열회사에 참여한 축산농가의 소득이 보통농가소득의 60%에도 못 미치는 등 경영지도들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게다가 임직원들의 명예퇴직금이 1인당 5억원 가까이 에 이르고 특별위로금 보전단련비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비리 적발로 구속된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무려 200여명에 이르렀다.

축산분야 소외 제도적 방지

한마디로 힘들여 농사를 짓고 소·돼지를 키우며 우리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을 도와 주려고 출발한 농·축협이 이들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주로 임직원 배분리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농·축협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와 검찰 수사물 계기로 추진된 협동조합개혁 방향이 그동안 적잖은 진통을

겪으면서 최근들어 큰 거둬들여 잡아 다행인 듯싶다. 농림부가 얼마전 입법예고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농협과 축협 및 인삼협 중앙회 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는 각 계층과의 대화 및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개혁방식의 최대공약수를 모색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축협의 통합과 관련, 축협측은 축산분야가 소홀히 다루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할 갖는 등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새 법안에서 축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통합 중앙회 산하에 축산경제 전담의 부회장제를 신설할 계획이므로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의 축협보다 훨씬 규모가 큰 농업의 금융지원 신용사업이 뒷받침되어 자금운용이 원활해지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일관된 종합지원체제가 갖춰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중복됐던 경비 절감은 물론 시장 가격도 생산농민과 소비자 모두에 유리한 될 것이다. 이밖에 이번 농림부의 협동조합법안은 중앙회 기능을 축소하고 기존 수임사업 대거 일선조합에 이관시켜 농·축산 현장의 농업인 소득증대에 협설 것임을 다짐하

고 있다. 일선조합이 아닌 중앙회 위주의 방만한 조직과 사업운영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뒤늦지만 다행이라는 느낌이 든다. 일선조합을 통합해야 하는 것은 각 중앙회별로 소규모의 조합이 난립한 데 따른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공동저장·가공 시설 마련, 공동출하 확대 등 규모의 경제운용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축협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으며 차제에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선조합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마켓 기능을 폭넓게 활용, 국내 시장은 물론 외국에 대한 농·축산물 직수출이 가능케 하는 첨단정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개혁에는 항상 이해관계자들의 반목이 따르게 마련이며 특히 손해볼 보게 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진정한 농민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농촌을 살찌우려면 그러한 저항과 변화의 고통을 감수하는 강도높은 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hjk@kdaey.com

“과감한 개혁을 통해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99. 3. 6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개혁 관련 추진 촉구 결의 및 농림부 장관의
농협 건전성과 영농자금 공급 등
농협의 중요 역할에 대한 답변은
농협이 자성과 개혁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에 신뢰받는 농협으로 변신하라는
체찍과 격려로 알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농협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협은 자금력과 재무구조가 안전하고 든든하여 '98연말 부실여신비율도 금융기관 중 가장 안전한 수준입니다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산물 유통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자금 적기 지원과 자체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농산물 유통 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실익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를 대폭 감축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원을 농업인을 위해 사용하고 상호금융대출 금리는 12%대로 인하하겠습니다

농업인과 국민여러분들께 신뢰받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 주변 환경이 조기에 안정됨에 따라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 협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농민 외면한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안'을 철회하고

김성훈장관은 사과하라!

- 각 협동조합 통폐합과 합병, 신용사업 제일주의 중양회 존치, 독립사업부제 강화, 조합장 간선제는 개혁이 아니라 형식적인 구조조정일 뿐이며 개혁내용은 농민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전면적인 수입개방시대와 IMF관리체제를 맞아 소비위축에 따른 농축산물가격불안, 농자재값 상승, 농업금융 경색,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공황 등 농가수지악화와 연쇄파산의 위기에 몰려 2중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생산력 증대, 공동구매, 농산물 유통, 농업금융, 농촌복지와 직결되는 협동조합의 개혁은 이 시대 농업·농민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렇듯 농업농민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협동조합개혁이 되려면 농민조합원이 모든 사업의 기획, 집행, 결과담보의 주체로서는 것을 전제로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판매사업을 극대화시키고,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을 지원, 보조하는 역할과 체계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3월 8일 농림부가 발표한 협동조합개혁방안은 개혁의지에 비해 농업발전과 농민소득증대를 지향하는 개혁적 내용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 농민들이 지적해온 일부 문제들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다. 각 협동조합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과 인력체계를 개선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IMF관리체제의 사회적 통념인 '구조조정 연쇄현상'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협동조합의 구조적 모순과 본질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림부방안은 미봉적이며 졸속한 것이다.

농림부 개혁안은 비판적인 일반인이 보면 역대정권의 '협동조합 길들이기'를 떠올릴 것이고,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론을 익힌 사람의 관점에서는 일용 개선된 방안임을 인정하면서도 추진방식과 개혁의 핵심내용에는 회의적일 것이고, 전문가들의 눈에는 이번 조치가 한국사회의 경제적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이게 하는 한편 학자로서의 책임과 더불어 한계와 비애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방안일 것이다. 이번 농·축협사태의 보이지 않는 배경과 시기와 과정, 여론화 방법 등 처리과정을 보면 농림부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은 현 중양회 체제를 존치하면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특별성자금을 구실로 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권의 경리, 정략적 저의가 숨어 있음이 분명하다.

1. 농·축·임·삼업 협동조합 통폐합과 관련한 근거내용이 빈약하다.

일선조합과 각 중앙회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된 현행법과 관행으로 인해 운영부실과 구조적 비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많은데,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가 주인이고 고객인 조합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새삼 강조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또 그 실효성과 감사의 독립성이 의문스럽다.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대폭강화 하겠다는 개입의지의 천명은 이를 더욱 비판적으로 반증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상징적 대표권자인 회장 밑에 두 명의 전권 사장을 두는 동일자본의 사업체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가?

각 조합들이 농축산물의 가격 및 수급조절능력과 판매사업이 지극히 미흡한데, 통합·합병만이 협동조합의 발전을 담보한다는 인식과 논리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각 조합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과 각 조합이 형식적 통합으로 해소될 수 없는 이질적 내용들에 대한 고찰이 전무하다.

2. 독립사업부제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면서 현재의 신용사업제익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동서고금과 지구촌을 통틀어 협동조합의 국가적 규모의 경우에 일반화된 유형은 경제사업중심체제이며, 신용사업중심체제는 실패한 사례이며, 특수한 경우는 소규모 또는 공동체적 성격인데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신용사업부분이 경제사업지원을 위한 지도, 교육, 기획 등과 관련하여 금융지도를 맡는 유형이다. 어디에도 독립사업부제로 경제사업을 운영한 예는 없으며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체제도 독립사업부제이다. 현재와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의 내용이 무엇이며,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가능하다면 완전 전문책임경영체제를 거쳐 경제사업중심의 연합회 성격의 별도 법인체로 전환해서는 안 되는가? 명백히 독립사업부제방안은 임의적 변칙이며 불순한 술책이다.

3. '조합장 간선제' 운위는 참여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월권이며 조합 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농민들의 농협민주화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직선제를 간선제, 또는 조건부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70-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당혹감을 준다.

또한 조합장 출마자격을 의무전문가 영입으로 개방하는 것은 협동조합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4.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명과는 상반되게 농림부의 개혁방안 추진은 일방적이고 설득력이 약하다.

이번 농협사태를 보고 온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근본적인 협동조합 개혁을 열망하고 있으며, 특히 능가수지악화와 능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농민조합원 당사자들은 협동조합의 환골탈태는 물론 농민적 조합, 농업발전의 교두보로서의 협동조합의 본질적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는 민의 수렴과 '농업100년 대계'라는 관점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절차와 국가경제차원의 개혁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5. 전체적인 문제점을 개괄해보면, 농림부 방안은

- ① 조합장 직선제의 간선제로의 전환을 통해 결국 임명제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으며
- ② 농·축협 통합으로 중앙회의 기능과 권한에서 오허려 비대화를 초래하고 중앙회 기능을 조합으로 어떻게 이관할 지가 불분명하며 신용사업 중심체제를 지속하려 하며
- ③ 조합중심의 경제사업 연합기능 확립여부 부재와 산지유통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회 경제사업의 메카니즘 전권이 없으며
- ④ 지도감시, 교육, 농정기능과 관련한 개혁내용이 빈약하며 중앙회의 고질적인 비사업기능 왜곡현상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으며
- ⑤ 비대한 중앙회의 방만한 사업에 대한 조합원 감시기능 제도의 내용이 취약하고 협동조합간의 유니온삼 증진보다는 갈등중독 요인이 상복해 있으며
- ⑥ 조합원 권리, 자격문제에 대한 관점의 부재와 조합장 외부영입은 자율적 협동조합의 대표권과 자주권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으며, 동합중앙회의 중앙회장이 총괄적 대표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또 조합장 간선제와 임명제 의도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자격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농민대표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에 촉구한다.

- ㉠ 김대중대통령은 과거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계속 시키면서 협동조합개혁이 농민 현실과 국민여망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농민 중심의 개혁 추진주체를 인정하라.
- ㉢ 일방적이고 파행적인 농림부방안을 강행한 김성훈 농림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검토에 노력하라!

2. 국회는 명실상부하게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라.

3. 농협에 촉구한다.

- ㉠ 농협중앙회는 이번 농협사태와 농업위기상황에 걸맞은 석고대죄와 환골탈태를 보이고 경영진, 특히 신용사업 임원들은 총 사퇴하고, 협동조합 관련 지도, 감독 기관의 담당자들 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 농협은 한국 협동조합의 혁신이라는 엄숙한 상황에 직면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보강하고 선거를 연기한 후 자기 혁신과 협동조합 개혁에 선차적으로 임하라.

-우리의 방침-

- ㉠ 전국농민피중연맹은 경제사업중심의 핵심사안인 협동조합이 가격과 수급조절기구로 자리잡고 산지유통을 사실상 관장하는 것을 골자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 전국농민피중연맹은 신용사업의 획기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농업금융의 안정과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 ㉢ 전국농민피중연맹은 협동조합의 구조개혁을 경제사업과 조합원중심의 연합회 체계로 하여 조합원 출자에 의한 신용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부토의를 충분히 거쳐,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에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전국조합원 대회'를 개최하여 전체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에 청원할 것이다.
- ㉣ 전국농민피중연맹은 농협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주체의 구성, 개혁방안의 논의, 절차 설정 등 중대한 이시기에 역량이 다하는 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1999년 3월 11일

전국농민피중연맹 의장 정 광 훈 (지인생략)

임협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임협은 임업생산자 조합으로서 산림시책사업을 선담실행하여 임업인의 권익시정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의의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一. 우리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위한 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한다.
- 一. 우리는 산림사업실행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산지자원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 一. 우리는 임산물직거래사업을 통한 유통개혁 혁신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一. 우리임협의 상호금융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역토착형 소매금융으로 더욱 육성 발전시켜 조합원의 산림경영 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임협중앙회 및 전국 임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임 협

■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 한농연 제시 개혁방안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 간선제 등 일부 조합원 참여 제한 수정돼야 한다
- 상향식 민주화를 위한 과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대표성가진 인사여야 한다
- 협동조합 개혁 추진을 위한 기구에 농민단체 참여 보장해야 한다

한농연은 협동조합 문제에 대한 일선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설문조사 결과 참조), 한농연 시군회장 전원이 참석한 대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한농연의 공식입장으로 정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안 발표 이후 전국 시군에 농림부 발표안을 송부하고 조직원의 의사를 수렴하였다.

이 의견을 토대로 도회장회의(3월 11일)를 개최하여 농림부 발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업경영인출신 농협조합장과 인식회의(3월 11일)를 잇달아 가져 한농연의 입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한농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한농연 제시 개혁방안 대폭 수용

농림부 협동조합개혁방안은 현실과 협동조합 이상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르 평가된다. 한농연은 일부 구분별한 이상론의 급격한 현실도입을 경계해왔으며 나름의 대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바 있으며,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한농연의 입장을 큰 방향성에서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대비표 참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동폐합,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 통합, 회원 조합 합병 등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은 방만한 농관련조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농민조합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였다. 또한 책임경영체계 확립이라는 의미에서 책임소재의 명확화, 경영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한농연이 시군회장이상(3월 4일 한농연 시군회장 교육시, 152명중 102명이 설문에 응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앙회간 통합에 대해 즉시 통합이 57%, 단위조합 합병후 단계적으로 통합 31%, 통합반대는 9%로 조사되었다.

<한농연과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안 비교표>

구분	한농연안	농림부안
중앙회 통합	농축임삼협 중앙회 통합(2년간 준비)	농축임삼협 중앙회 통합(농축협 통합 2년간 준비)
신경분리	독립사업부제 강화, 전문책임경영	완전독립·전문책임경영
중앙회장 권한	명예직 전환	명예직 전환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유지	선거인단에 위하 간선제 적용
지역조합 합병	부실, 조합원과소 조합 강력 합병 (지역현실감안, 조합원의견수렴)	농협 300개소, 축협 100개소로 합병
조합장 선거	직선제 유지	간선제(대의위총회에서 선출)
조합장 자격	조합원중에서 선출(조합원 자격 강화 및 민형사상의 경영책임 부여)	조합원 이외에도 개방
상향식 조직체계	연합회체제로 전환(도대표 조합원중 선출, 시군지부 폐지 및 권한이양)	언급없음
종목별 전문조합	설립강화 및 정비	언급없음
이사회 구성	품목별, 지능별 이사제 도입	언급없음

또 신경분리문제에 대해 완전독립, 전문책임경영을 도입하되 협동조합의 틀안에 묶어두는 방안을 채택한 것은 신경분리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경분리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독립사업부제 강화가 57%, 독립사업부제 강화후 신경분리 29%, 신경분리 즉각 실시 12%로 나타났다.

2. 조합원 직접 참여 제한 우려돼

그러나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안에서 몇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가장 먼저 제기되어야 할 부분은 조합원 위주의 운영이라는 측면이 오히려 약화된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은 그동안 농협민주화를 위해 직접참여 확대를 주장해온 조합원의 의사와는 배치된다. 더구나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이외의 인사가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조합원을 배제한 조합운영의 우려가 크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길 수 있지만, 대표권과 의사결정권은 조합원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한농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선제가 67%, 간선제가 19%, 조합자율 선택이 13%로 나타난 바 있다.

3. 상향식 조직체계 전환 수용안돼

또한 한농연이 주장한 상향식 조직체계(연합회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조합원의 직접참여 요구를 제한하고 있다. 광역합병이 이루어지는 시군의 시군지부 폐지 및 권한이양, 도조직 대표를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의 조합 참여확대, 대표권의 직접 행사, 의사결정권한의 확대 등은 투명한 경영과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품목별·직능별 이사제를 도입하여 중앙회 통합, 합병에 따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중앙회 간 통합으로 품목별 전문성과 사업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통합중앙회의 경우 품목별협의 회를 강화함과 동시에 품목별연합회의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농민단체 등의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간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통합중앙회의 사업기능도 품목별로 재편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4. 밀어붙이기식 합병에 우려도 있어

30개라는 숫자를 제시하여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합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은 불가피하지만 합병이 단순한 경영효율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권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의 합병이 합병명령제의 도입으로 강제적으로 진행된다면 조합에서 조합원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숫자를 명시하기 보다는 조합원 과소조합(조합원 일제 정리 전제), 자본잠식조합 등 조합원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합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병추진 시에도 행정에 의존하는 합병이 아니라 조합원의 합의를 독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합병이후 경제사업 및 조합원 경제향상 목표와 수단 제시 등 합병이후의 가시적 목표를 설정한 후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회의 지역조합에 대한 정확한 경영 진단,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5. 농협중앙회장 선거, 진정한 조합원의 대표를 뽑는 선거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의견도 논의되었다. 그결과 한농연이 제시한 ▲농민조합원의 의지와 요구를 수용하여 농민조합원으로부터 지지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며 ▲전체조합원의 대표자로서 농민조합원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이번 농협사태에 개별적 이행관계에 의해 개입되어 몸모론적 시각에 연루된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에 농업경영인출신 조합장들이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단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다.

가을러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치권과의 연루설 등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정치권과 외압 등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하였다.

6.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추진기구에 농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농연 도회장회의와 조합장 연석회의에서는 농림부 개혁안을 일부 수정하여 협동조합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농민조합원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개혁 추진기구에 농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러한 의견 수렴에 따라 한농연은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추진기구에 한농연 등 농민단체와 일선조합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농림부에 정식 요구하며, 농림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1999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첨부.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관한 한농연 설문조사 결과

※ 3월 4일 한농연 시군호장 교육에 참여한 152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 102명이 응답

1. 각 협동조합 중앙회 단위의 신통사업을 떼어내어 별도의 은행을 만들자는 주장(신경분리)과 경제사업과 신통사업을 병행하되 인사와 회계를 엄격히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자는 주장(독립사업부제 강화)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 | | |
|-------------------------|-------------------|
| 1) 신경분리 즉각 실시(57%) | 2) 독립사업부제 강화(29%) |
| 3) 독립사업부제 강화후 신경분리(12%) | 4) 잘모르겠음 |

2.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 | | | |
|-------------------|----------------------------|-------------------|------------------|
| 1) 즉각 통합
(57%) | 2) 단위조합 합병후 단계적으로
(31%) | 3) 통합에 반대
(9%) | 4) 잘모르겠음
(3%) |
|-------------------|----------------------------|-------------------|------------------|

3. 도단위 조직의 대표를 조합장중에서 선출하고, 시군지부는 광역합병조합에 흡수시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 | | |
|------------|------------|----------|
| 1) 찬성(87%) | 2) 반대(13%) | 3) 잘모르겠음 |
|------------|------------|----------|

4. 단위조합 부실경영 문제로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순수명예직으로 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기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 | | | |
|----------------|----------------|---------------------------|----------|
| 1) 찬성
(48%) | 2) 반대
(23%) | 3) 해당 조합의 선택에 맡김
(29%) | 4) 잘모르겠음 |
|----------------|----------------|---------------------------|----------|

5. 조합장 선출제도를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 | | | |
|--------------------|--------------------|---------------------------|------------------|
| 1) 간선제 주창
(19%) | 2) 직선제 유지
(67%) | 3) 해당 조합의 선택에 맡김
(13%) | 4) 잘모르겠음
(1%) |
|--------------------|--------------------|---------------------------|------------------|

6. 오는 19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뤄집니다. 현재 시기, 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농민조합원의 지지와 농민조합원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91%)
- 2) 후관의 시기므로 농협중앙회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어야 한다.(0%)
- 3) 고도의 전문경영능력이 요구되므로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9%)
- 4)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인사중에서 나와야 한다.(0%)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견

1. 의견조회 : '99. 3. 10 ~ 12

2. 조회방법 : 문서로 접수받음

3. 참여단체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포도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업농중앙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4. 각 단체의 입장 : 대체로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안('99.3.8발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함

6. 의견내용

가. 통합으로 인해 중앙회의 비대화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농림부 안에는 중앙회의 사업 등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는 구체적 대안 없음
- 따라서 획기적인 세부안을 마련, 구체화시킬 것
- 중앙회 업무의 대폭 이관을 감시할 한시적 기구를 존치시킬 것

나. 중앙회 부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것

- 경제, 신용 등 부회장 2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하게 명시
- 인사, 보수 등 운영체계를 별도로 하여 마련
- 신용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경제사업에 투자하는 장치 마련
- 경제사업기능 위주의 운영체계를 분명히 하여 기존의 신용사업위주 체계를 방지할 것

다. 선거제도는 직간선제로 조합이 선택적으로 수용토록 할 것

- 농림부안의 간선제는 또 다른 폐해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음
- 직선제의 장점을 살려 운영하되 필요에 의해 조합이 간선제도 선택 가능토록 할 것

라. 조합간 협동재제가 되도록 할 것

- 협동조합 간 지역에서 동폐합에 따른 갈등 요소가 내재할 가능성이 우려됨
- 협동정신이 조합간에도 생겨날 수 있는 체제를 고안해야 함

- 마. 회원조합 개혁 방안 중 조합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철회할 것
- 조합장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살릴 수 있고 농민의 대표권과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음
 - 명예직 조합장의 자격은 철저히 점검하고 조합장 당선 후에도 자격 상실되면 조합장직을 상실케해야 함

- 바. 통합 중앙회의 명칭에 상징성 부여해야 함
- 현재농업생산액 중 상당부분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임
 - 따라서 통합 중앙회의 명칭에 반드시 '축'자를 삽입하여 축산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하고, 농축협중앙회(예)로 할 것
 - 그래야만 양축가들이 염려하는 흡수통합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고
 - 농협 역시 흡수 통합이 아니라 동시에 해산과 합병이 추진되도록 해야 함

- 사. 조직내 축산의 위상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구설치
- 축산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위상에 맞는 축협을 대표하는 조직기구가 중앙회내에 설치되고
 - 축산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축산인이 축협중앙회 기능상실을 우려하지 않도록 기존의 전문적 역할을 확대하여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

- 아. 축산업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통합 이전에 비해 양축가가 손해보는 통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통합 후 기존 축협중앙회 존치시보다 지원예산액이 증액 편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자. 업종조합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업종조합 활성화는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임
 - 업종조합 육성 특히 축종별 전문조합 육성의 제도화가 명시되어야 함
 - 업종별 지역 대표가 단위조합 당연직 이사로, 업종조합연합회 대표는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전문화를 촉진시켜야 함
 - 업종조합연합회를 통한 업종별 요구와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차. 기구통합과 축소가 농축산업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협동조합 축소가 농축산업 힘의 상실로 평가되어 위축될 우려
 - 농업의 정치, 사회적인 소외 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이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농협 정치독립 선언문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지난 2월 2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부, 감사원, 검찰, 언론기관의 농협 흔들기 공조 작전에 대해 더이상 품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늘 1999년 3월 15일 오전 9시를 기하여 농민과 국민 앞에 결연한 각오로 농협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이를 장위하기 위한 기열찬 투쟁전선에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1961년 창립 이래, 정부는 농협을 단순한 경제대행 기구로 삼아,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간섭하고 오늘날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농협을 만들어 온 주범이었으며, 다가 되면 정권의 안보를 위해 농협을 임직원 파시 사냥터로 재공하고 농민 울분을 식이주는 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김영삼 정부 하에서 농협의 한호선 회장은 비자금 조성했다는 이유로 회장직에서 물러나 구속되었고, 5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한일회 회장이 농협의 비리혐의로 회장직에서 증도화하여서 대검 중수부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실책! 농정의 실패! 농민의 실책! 그로 인한 농민의 울분이 어찌 농협 임직원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동안 농정을 담당해 왔던 농민부는 무엇을 했으며, 농협을 감독해 왔던 감사원과 국회, 농림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은 모두 무엇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농협원은 더이상 평분도, 지킬 자존심도, 명예도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검찰 수사와 언론의 왜곡보도로 기정사실이 비롯되었으며, 아내와 자식은 비리의 온상에서 자란 병든 식물처럼 남편의 직장, 아버지·어머니의 직장을 뒤흔들게 밝히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정부와 정치권의 모든 건설로부터 벗어나, 백의종군하는 각오로 농업협동조합의 정치독립을 아뢰와 같이 선언합니다.

-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생산자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어느 누구로부터 독립된 자율 조직임을 선언합니다.

-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순수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뜻에 따라서만 행동하겠습니다.

-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총합발전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농민조합원의 자주적 결사체 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농민 조합원의 농협을 사하겠습니다.

-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현재 농민이 아닌 정부, 정치권, 학계 등에서 투사적으로 견학하고 있는 정부·정치권을 위한 농협 개혁 논의를 거부,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민 조합원이 주체 되어 농협 개혁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이제 저항하는 모든 세력과 풀리지 투쟁 나갈 것이며, 항쟁과 같은 강력한 현재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대한민국 농민 협동조합이 다시는 정치권이 정부를 위한 농협으로 전락되지 않고 농민 조합원의 민주적, 자주적 결사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민조합원 함께 농민의 농협을 시수하는데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것임을 농민과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해 다짐합니다.

1999년 3월 15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 이 광고는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성금으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결 의 문

우리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대의원 일동은 「축산업 및 축산농민을 말살」 하는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안」에 대하여 분노와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농가부채 및 농어촌 파탄등 농정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협동조합에 전가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을 정부 시너화·관제화 하려는 계획적인 고도의 정치적 음모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축산업의 발전적인 미래와 축산인의 권익보호, 그리고 축산업의 전문생산자 조직인 축협의 연속성을 지켜내고 반개혁적 협동조합 통합음모를 저지키 위해 우리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협동조합을 정부의 시너로 전락시킬 "협동조합 길들이기"같은 협동조합 관제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강제적 구조조정 명분쌓기용 표적사정 및 비업한 협동조합 출점내기와 반 개혁적 협동조합 개혁안의 정당화를 위한 여론몰이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개혁에 역행하고 시대착오적인 협동조합 통합안을 즉각 철회하고 농축산인들의 뜻을 결혀히 수용하여 개혁같은 개혁하라
-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농·축산인 자조조직의 육성"과 정치적 중립보장의 의무를 다하고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
- 대공립선거 공약이자 축산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사회관할권도 환원시키지 못한 무능한 농림부장관은 농가부채 문제 등 정부의 농정실패 책임을 은폐하고 정부에 대해 악화된 여론의 충압받이로 협동조합을 내모는 치졸함을 보이느니 농정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농림부는 축산업 몰락음 초래할 축산경시의 협동조합 통합안을 철회하고 농축산인과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협동조합개혁"을 즉각 추진하라.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조직원들의 역량을 총 결집, 100만 축산인, 농민단체, 노동계등 각 계층과 연대하여 다시는 정치권으로부터 사유로워야 할 협동조합이 「정부의 협동조합 길들이기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굳건히 단결하여 총파업을 비롯한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어떠한 희생도 치쿠더라도 승리의 그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 3. 16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대의원 일동

□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조합원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 주인아닌 협동조합 종사자들의 무분별한 논의를 경계한다. -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안이 제시되었다. 농림부 개혁안이 일부 미흡하기는 하지만 농민조합원은 커다란 방향성에 동의하고, 차분하고도 강력한 추진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협동조합 개혁방향에 대해 농민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무분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개혁의 방향성이 훼손되고, 농민주도의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추진단을 지난 10일 공무원과 농축입삼협 관계자로만 구성하여 농민조합원을 배제하고 있어 협동조합개혁작업에서 농민의사 반영통로가 극히 제약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일부 학계, 언론계, 농축협 임직원 등 다양한 외부의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어 농민조합원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협의회 소속 농민단체와 한농연은 개혁의 원칙을 흐트리는 무분별한 주장이 결국 개혁작업에서 농민조합원 소외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적인 행동이 난무한다면 조합원이 바라는 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이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든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의사와 요구에 의한 철저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협동조합을 둘러싼 여러 집단이 모두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성찰해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농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에 협동조합 직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움직임이 커지는 것은 협동조합 개혁을 바라는 전체 국민들에게 우려를 더해줄 뿐이다. 일정 정도를 넘어서는 의사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농민단체는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표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또한 농림부는 농민조합원의 개혁추진기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농민단체 등 일선 조합원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언로를 보장하고 개혁추진기구를 통해 농민조합원이 주도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국회에서 특정후보 내정설, 청와대 낙점설 등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민조합원의 뜻을 반영한 강력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과 오도된 여론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변질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1999년 3월 16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결의

우리 삼협은 자주적이며 자생적으로 삼농인의 필요에 의해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삼농인의 권익보호 및 인삼발전에 대한 본연의 협동조합의 의무를 다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한국인삼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정부의 개혁방안에 동참하여 농·삼협통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며 이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통합될 협동조합에 인삼산업의 대표성보장을 위해 연합회 또는 대표이사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한국인삼산업을 이끌어 갈 공익적 주체로서 인삼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통합될·협동조합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우리 삼협의 상호금융은 더욱 더 본질적 기능에 충실히하며 발전시켜 조합원에게 경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되어야 한다.
 -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려인삼과 인삼조합의 대표성과 정체성(正體性)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정부의 특단대책을 촉구한다.
 - 기존의 인삼전문가인 삼협인은 이미 자체 개혁이 완료되었으므로 삼협 전체 직원들에 대한 통합시 불합리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이같은 조건하에 우리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인삼유통개혁,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보호 및 한국인삼산업의 세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삼협중앙회 및 전국 인삼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호 소 문

존경하는 ○○○님 !

최근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조국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님의 국정운영에 더 없는 존경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누적되어 온 협동조합의 비능률, 비효율을 생산자단체 본래의 모습으로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조합, 자율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개혁코자 하는 의지에 더 더욱 찬사를 드립니다.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협과 삼협을 금년내 통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것이 국민적, 시대적 요구이기에 우리 삼협은 때를 짚는 아픔으로 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삼조합은 인삼산업의 역사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농업단체와 비교해 보면 사업적 성격등에서 전문적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삼협은 17세기말 「삼도중」이라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을 모체로 1910년 개성인삼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14개 조합이 설립되었고, 일제시대에는 독립을 위한 군자금을 제공하면서 각종 탄압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유지·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이들의 필요와 조합비에 의해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생산자단체인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미 슬림화된 초경량단체(중앙회 77명, 단위조합 241명)로서 최소의 필수인력이 인삼의 생산지도에서부터 검사,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삼산업 전반을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표본적인 생산자단체가 인삼의 전문성, 특수성, 정체성(고려인삼=인삼조합)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농협과 통합되는 것에 대해 한국인삼산업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경량단체인 인삼조합이 자체개혁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혁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면 그리고 이것이 국민적, 시대적 요구이기에 통합이라는 마지막 선택도 협동조합개혁의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면서 다음의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전국 삼업인의 의사가 반영되고, 삼업인의 권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통합협동조합에서 인삼조합의 대표성 보장을 위해 연합회 또는 대표이사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인삼전문가인 삼협직원은 이미 자체 슬림화가 완료 되었으므로 통합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인삼산업을 이끌어 갈 공익적 주체로서 인삼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통합될 협동조합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삼협의 상호금융은 더욱 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발전시켜 조합원에게 경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인삼의 대표성”이 지속되고 인삼조합의 정체성에 의해 세계 속에 고려인삼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특별관리하는 프랑스의 꼬냑산업,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산업의 명성은 그 나라 정부에서 특별관리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시킨 사례와 같이

고려인삼도 세계적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인삼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인삼중주국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삼 경작인들의 자발적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의 필요와 요구로 탄생하였고, 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뉘은 인삼협동조합이 200년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한국인삼산업’발전의 주체로서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자 하는 인삼경작인의 의지를 모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999. 3.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특별결의문

농민조합원이 일어섰다. 주인이 주인행세를 못하고 머슴이 주인을 부리는 오욕의 협동조합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전국의 200만 농민조합원들이 떨쳐 나섰다. 농민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바쁜 농사일을 뒤로하고 '민주적 협동조합, 자주적 협동조합' 정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는 왔다.

민족 수난의 시절 제국주의와 가진자들의 수탈과 압제에 저항하면서 조국강산과 민족농업을 면면히 지켜온 선배 열사들의 피뎠던 절규와 한을 가슴에 담고 올라온 우리 농민 조합원들은 기필코 협동조합을 되찾아 조상님들의 제 사상에 올리려고 한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식민협동조합! 군사독재정권이 길들여 놓은 '관제협동조합!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농민조합원 대표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정치권력과 행정당국의 반농민적이고 위헌적인 협동조합 간섭을 단호히 척결할 것이며, 1999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협동조합이 되는 원년임을 선포한다.

이 땅의 500만 농민들이 바라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잘 팔아 생산비를 건지고,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편리하게 공급해주는 협동조합이다. 또한 우리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자재를 값싸게 구입하고 농사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협동조합, 서로 돕고 나누며 더불어 사는 농촌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 모든 국민들이 부모님 같고 고향 같고 추억이 어린 협동조합을 갈망한다.

이렇듯 온 국민의 생존과 생활에 직결된 협동조합의 민주화와 자주화는 20세기 한국 사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농민 투쟁의 승리이며 4000만 국민의 가슴벅찬 감격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위기에 빠진 민족 농업을 사수하고 도탄에 빠진 농민생존권과 민중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협동조합 개혁'의 대장정에 총집결하여 승리의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협동조합 개악안(강제적 합병, 간선제로의 퇴귀, 조합장에 외부 인사 영입, 개혁없는 협동조합 빅딜, 농림부와 재경원의 감독 강화 등)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능직에 대한 농협 중앙회의 비열한 구조조정을 분쇄한다.
- 우리는 협동조합의 부실과 운영비리의 책임을 물어 신용사업 경영진들을 총사퇴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장악의도를 분쇄하고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농축협의 상호금융 금리를 11%로, 연체 이자를 14%대로 인하하며, 연대보증의 신용보증으로의 전환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도록 현장에서부터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김대중 대통령은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켜 농민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 정치인은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이루는 관련법 (은행법개정,협동조합 기본법제정)을 제정하라!

1999년 3월 18일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조합원대회 참가자 일동

□ 농민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 농민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

최근 농림부에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종 농민단체들도 정부가 제시한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는 등 바야흐로 협동조합 개혁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제 농민조합원은 물론 협동조합에 몸담고 있거나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뼈를 깎는 자성과 끈을 타낼태하겠다는 자세로 그동안 지적받아온 개혁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요구도 받아들여겠다는 겸허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개혁의 중요한 원칙마저 거부하겠다는 무분별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물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집단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착하고 집단행동을 앞세우는 것은 농민조합원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는 협동조합 개혁의 책임있는 일주체로서 진정으로 개혁에 동참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없다.

특히 최근 협동조합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직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선의 농민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짐은 물론, 이대로 가다가는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이번 협동조합 개혁이 지난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온 농민조합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합원 편익을 위한 체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또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의 완전한 개혁'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의 논의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수렴에 더욱 노력해 줄 것과 함께, 정해진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개혁추진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우리는 시대적 과제인 협동조합의 완전한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협동조합 개혁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9년 3월 18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을 요구한다.

한국농업 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농민의 영농생활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협동조합은 매우 소중한 농민 단체이다. 그러나 그간의 협동조합은 농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왔다.

특히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경제의 반성과 새로운 진로 모색에 있어서 협동조합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협동조합 개혁은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직원노조의 집단 성명 시위는 다분히 책임회피적인 행위로서 반개혁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않다.

이에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아래의 협동조합 개혁원칙에 입각하여 조합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개혁기본원칙 ----

1.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회복.
2.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조합.
3.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문화 형성.

1. 농·축협중앙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기위해 통합하고, 조합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주력하도록 경제·지도사업 중심의 기구로 개편해야한다.
2. 농·축협등의 회원조합은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통폐합하고, 다만 지역 농정의 공동화문제는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협동조합은행이나 금고의 설립등 신·경분리문제는 농업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농민과 협동조합사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단일 협동조합내에서의 독립과 지원기능이 상호강화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4.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5.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원칙 유지와 함께 조합 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을, 조합원에게는 경영 위임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1999. 3. 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윤환 유현석 이설조

농협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지역농협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지난 2월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과 농민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치 못하고 농협중앙회를 감시, 견제하지 못한 점 국민과 농민 조합원들께 사죄 드리며 앞으로는 농협 개혁에 앞장서고, 농협중앙회를 국민과 농민 조합원을 대신하여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농협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과 농민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치 못하고 농협중앙회를 감시, 견제하지 못한 점 국민과 농민 조합원들께 사죄 드리며 앞으로는 농협 개혁에 앞장서고, 농협중앙회를 국민과 농민 조합원을 대신하여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연일 모든 농협이 비리와 부조리의 부패한 집권단체처럼, 모든 농협의 임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범죄자인 것처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농협 개혁의 주범은 약해 상권의 농민 소외 강세가 누적된 역사적 결과이며, 군사 정권부터 농협을 농업 정책 수행 기관으로 삼아 정치권력의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농협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 권력의 책무에서 도망한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없으면 농민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의 개혁 없이는 농협을 농민의 위한 농협으로 거듭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농민이 주인 되는 농협,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 농민에 의해 운영되는 농협을 만들어 내는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농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 4개 협동조합을 완전히 분리하여 전국 협동조합 연합회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중앙회의 모든 사업을 지역 농협에 이관하고, 연합회는 지역 농협에 대한 지도, 지원, 정책추진, 농협협동조합을 해야 합니다.
- 정부: 농협이 비주권, 자주적인 농민 생산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농협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간섭을 철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농협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과 농민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치 못하고 농협중앙회를 감시, 견제하지 못한 점 국민과 농민 조합원들께 사죄 드리며 앞으로는 농협 개혁에 앞장서고, 농협중앙회를 국민과 농민 조합원을 대신하여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개혁과 농협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구조조정 대상인 농협중앙회는 그대 모든 재 부조리, 비리의 탈출 수단으로 농협의 비리, 부조리의 부권한 선인한 7,000여명의 지역농협 노동자의 생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농협 노동조합의 힘이 없어 농협중앙회에 의해 진행되는 이윤상에서 전방위 구조 조정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농협개혁을 위한 농민들의 생존권사수들을 위하여 총력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농협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 내어줄 수 있도록 농협에 압력 선 것이며 다시 협동조합이 장기간 농협중앙회의 전유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농협개혁에 지식하는 모든 재의 농협중앙회에 의해 앞방식으로 진행되, 지역농협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하는 구조조정에 맞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사수, 감하지 못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개혁 및 지역농협 노동자 생존권 사수 길의 대회

• 일시: 1999. 3. 21 11시 • 장소: 농협중앙회 앞

결의 대회에 전국 지역농협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광고는 지역농협 노동조합의 행동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각 권고를 위해 투쟁기간은 2000년 3월 21일부터 2000년 3월 25일까지입니다.

농협개혁 및 농협노동자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농협중앙회, 도시지역농협, 농민연대농협,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농협노동자 출신 전국 재주지회 추진위원회)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졸속 협동조합개혁안을 밀어 부치기 위해 표적 사정과 여론조작을 통해 협동조합을 무차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상 유례없는 검찰수사와 사정 협박하에 날치기, 졸속으로 발표한 협동조합 통합안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

정부는 제헌헌법 제24조 제2항의 협동조합법과 비리 수사등 무기보통 법률이, 그리고 불순한 정치목적에 의해 과거 독재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사정의 합성을 묵인하고 위협하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 검토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민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이라면 해를 끼치는 이름이 있더라도 이 땅의 농촌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 그리고 농촌산업의 미래를 위해 결연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안 발표는 이 땅의 농촌산업을 공격의 길로 내몰고 협동조합운동의 뿌리를 근본부터 뽑아내는 폭거이기에 그 부당성을 전국민과 농촌산업의 여러단체 피플 투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이상 협동조합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협동조합 검사위원회와 비리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용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정부가 농가부채완제를 비롯한 농정상의 책임을 협동조합에 전가하여 협동조합을 희생된 여론의 희생양으로 내모는 고도의 음모이며, 최근 언론사정에 여당원들의 협동조합 조합장들에 대한 입당부흥 사상이 보도되는 등 마침내 정치적 음모의 표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직원들은 결코 비리의 온상속에 기생하는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피검사당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모를 참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의 인선과 여론조작을 통해 개혁으로 포장된 정부의 강제통합 정책은 농민에게는 자멸적 부담을 준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의 과거의 죽산의 유산을 초대할 것이 분명하게 느껴져 부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민·농촌인들 다 죽이는 독약도 개척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어느새 반평생직이 이 되어 버립니다.

정부는 농촌산업 발전과 농민·농촌인들 다 죽일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고 개혁이라 포장하여 선전해내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개혁 위원회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선정한 것이 금융·제조·화학·에너지 부문 '동행은 곧 개혁'이다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논리로 선택할 만한 이유수수 권이 아니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정치권과 재벌, 그리고 독선적인 권료집단의 정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는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시절부터 소외되어온 농민·농촌인 그리고 노동자가 협소한 심을 영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산업 조합원의 여론 수렴과 의견청취 없이 이루어진 협동조합 개혁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개혁인 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의 수인인 일선인 농민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기어코 졸속 정책의 표본입니다. 농촌산업 조합원들의 의사부 부고 그들의 뜻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다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표본적인 정치구리치럼 무지한 권료들에 의해서 달달 당당 결심대상 이 결코 아닙니다.

무능력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일어나 많은 농촌산업인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더욱이 보여 줍니다. 이런 피눈물을 보아서 되풀이 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협동조합 개혁은 직거래 사업을 협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인 지도·정제사업을 할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사업에 관한 농민을 위한 비록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 협동조합을 통합시키려는 구타의연한 발상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며 향후 협동조합 육성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1981년 농촌산업의 선진화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기 위해 농림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읍면 읍도까지 통합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가는 시대착오의 발상이며 농촌을 완전수입시장으로 몰고 농촌인들을 포기하려는 정책입니다.

농림부 개혁안은 문제점 부성이며, 협동조합의 실질부채와 정면 배치되는 개혁은 헌법 위헌에 불과하므로 단상행정의 혁신 전라해야 합니다.

순수해서 농민이었던 전국농민들의 국영농업에도 정부 개혁의 후속적인 개혁안을 발표가 개 개척되고 선민적인 사색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방의 조합장의 재선제 폐지가 있으나 전선제로 하는 것이 개혁이다 라는 말과 '조합원의 대표권을 외부인들에게서 말린다' 라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을 도는 지식의 소외를 일으키는 개혁입니다.

협동조합이 진정한 농민을 위한 본연의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의 농촌사업과 각종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데 필요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그 간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진정한 개혁의 원칙과 방향도 잊지 않는 개혁인입니다.

같은 개혁인인 될 수 없는 협동조합 운동만을 정부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하면 은은 분분한 최대의 농민심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농촌인 여러분! 정말 21(20)이 오우 사제는 잠시 앞을 놓고 시를 필요공정으로 맞닥뜨린 농민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그만큼 농촌산업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 전국 축협직업 일동

농·축협 등 통합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농·축·임·삼협의 일방적 통합은 존속과 의견 청취과정이 결여된 개혁안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4개 협동조합 통합방안은 농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며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자유 시장경제원리에 정면 배치된다
- 축협은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생산자 단체로서, 양축농가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목적을 두고 국민경제에 이바하고 있는 자조조직을 정부가 강권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신민주주의의 표상이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독재주의적 발상으로 의견상의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함
- '국가의 힘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정부는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함
- 따라서 양국가에게 크나 큰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점은 향후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임
- 헌법 제123조 5항 :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팽창과 발전을 보장한다
- 국민 개혁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부치기식 존속 통합안으로 법에 의한 정적결정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안과 4개 협동조합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외 농업희망수산물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누차 공표하고 나서도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감사원 감사의뢰후 협동조합의 부정적 측면을 보도한 언론의 힘을 빌어 전격적으로 단행한 개혁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구조조정 방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축협은 강도높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 시점에서 있고 농림부 개혁방안중 통합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개혁방안을 수용하여 실행할 작정이 되어 있음
- 한농연 전남연합회가 '98.9월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81.4%가 정부주도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밝히 시거야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개혁은 '교각상수의 추'를 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함

2 협동조합 개혁이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체의 사슬이 아닌 자율과 전문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자율적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방향을 정하고 제도과 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토록 시장 관리자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 21세기는 자율과 창의 의 시대로 농업인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제주체로서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및 환경성태를 보존하는 중요한 기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도·지원하고 도와주는 떠러다림의 전권없이 타율적 개혁의 테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개혁은 파자봉제의 전철을 다시한번 더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면치못할 것임
- 경인이 바뀔 때마다 단골농부처럼 협동조합을 개혁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주요성과는 뒤로 한치 모순과 비농민만을 강조하여 협동조합을 비리의 온상으로 오는 구태의연한 정부의 감독은 개혁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망각한지 자율성을 뒤로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모습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여야 함
- 이슬의 우파처럼 지나가는 민심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으로 자율에 의한 개혁이 전제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임
- 전문성은 시범작으로 오랜 경험·피나는 노력의 산물이고 이지 전문성이 없는 생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 축협은 81년 설립이래 생산·도축·가공·판매부문에서 전문파를 이룩 조합원과 고객으로부터 경제사업에 대해 높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경정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중앙파와 조합 모두가 적자를 시현하였다고 돌아부치는 마녀사냥식 여론 불이론은 단 말이 전도되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함
- 전문파를 위해 분리된 축협을 개혁이라는 명목하여 가족이나 비대한 농민이 갖다 붙이는 것은 전문파와 개혁은 별개라는 이윤 비반의 모습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먼저 자각할 때만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음

3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정면배치되는 개혁은 한낱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축협의 설립목적인 '축산업의 진흥과 양축농가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지체하는 관리감독은 지양되어야 한다
- 퇴성적으로 정부 주도에 의해 탄생된 조직이기는 하나 헌법과 협동조합법에 의해 조합원이 출자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이 출자한 중앙파는 그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앙 감독권을 빌미로 합되는 자율을 실체로운 강압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자주적인 단체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함
- '98년 국정감사시 농림부는 농업인 중심원칙, 고교율·저비용 원칙 등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조합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방안을 강구하되 농업수산물위원회 설치된 "협동조합 소위"와 협동조합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해 나가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정비등 추진하겠다고는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고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한 개혁은 전형적인 파워칼라의 탁상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양축농가를 위한 경제사업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피원조합과 경정사업을 한다는 부정적 시각은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 축협은 양축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양축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기능과 국내축산업이 수입개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지원의 기능을 철저하게 할 때만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간 저질한 사외의 공급과 가공사업으로 조합원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의 농도를 내세워 사업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
- 협동조합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합원 중심,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나무에 잡나무등 되쳐서 소문 침착이는 우등 빌어 전문파를 피보시키고 비대한 조직을 더욱 비대화시키는 개혁은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함

4 협동조합의 개혁은 기능합리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 되고 판토틀화와 비대화만 가중시킨다

-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 근본적인 원인은, 협동조합이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만 치중할 뿐 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직권수 기준으로는, 농업의 72%, 축업의 33%가 신용사업 부문에 중사하며, 조수익 기준으로는 농업의 91%, 축업의 33%가 신용사 수익에서 중립하고 있음을 볼 때
 - 농업은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축업은 협동조합 근본정신에 입각 경제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함
- 당면 발표된 농업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농·축·임업의 신용업무들 농업중심으로 통합토록 되어 있어, 면적도 비대형화된 비대형적 있는 농업 신용사업을 더욱 비대화시키는 결과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한 것이다
 - 국정원 개혁방안은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제3안으로, 1개 법인체로 통합 후 특별사업부제를 운영하는 형태로, 전문화를 위한 는 광종조직으로 전환될 것임
 - 특히 농업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원지보다 더욱 비대형화와 아울러, 농업단위의 독립적 위치를 차지, 더욱 존중받을 지중시킬 수 있 어 의견을 제정할 것이나 마진가지이며
 - 비대형 조직은 더욱 판토틀화와 농업금융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결국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의면한 지, 농업중앙회 신용사업을 더욱 비대화시킨 개혁안은, 신용사업 밖 에 협동조합 개혁이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들 완전히 의면함으로써 개혁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

5 일방적인 통합은 현재도 규모화되어 있는 중앙회들 오히려 더 비 대화하여 전문성 상실로 회원의 지도·지원에 비효율을 초래한다

- '81 이전(축업이 농업의 특수조합으로 있던 시절), 현재의 축업 피연조합은 경중농업 우위의 지도사업을 수행한 농업중앙회의 은 원시와 모델로 발전 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축산농가 및 임업 축업의 동성성 권선 측구에 따라 '81년 설립된 축업중앙회는 국내축산업의 경제적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 전문화를 촉진하여 축산업의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 당면 협동조합 개혁안은 현재의 축업피연조합이 '81년 이전 형태의 농업특수조합으로의 피구를 예고하고 있다
 - 경중농업의 다수 논리에 의거 라임중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 1개 법인체화에서는 일종별 사업·인력·자금 등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축산업의 전문화 필요성에 따라 '81년 농업으로부터 분리, 축업이 탈락된 이후 축업과 축산업의 협력을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축업업종 이후 축업 사업 규모는 55억, 축산물 생산액은 4백조 증가하고
 - 축업은 비철사로 공장(2개), 육·유가공공장, 축산물가공공장, 축산물 판매장 등 생산·유통·가공분야에 전문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 에 주력하고 있음
- 수입개방으로 축산업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는 판정에서, 전문화된 축업을 농업 특수조합 형태로 피구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 인 탈산업을 본래의 길이라 한다
 - 축산업과 경중농업이 본리되어 전문화되어가는 마당에, 농업에 통합하려는 것은 축산업 자체를 퇴보시키는 근시안적 사고임을 알아야 함
- 통합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는 모순이며, 회원의 지도지원은 약화되고 축산업은 위축 내지는 퇴보시킨다
 - 경제사업부문에서 「축산」 이외의 다품목이 존재할 경우 동결성 지라도 참여도 높고, 서로 다른 품목간 인사이동, 자금비분 등지 등지 의해 전문성 퇴보와 사업위축을 초래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6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500만 농업인의 생사 및 국가식량안보와 직 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 조건임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조직' 이 되도록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수립 시킬하여야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은 알아야 한다
- 그러나 농업부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수렴도 하지않고 1년여 동안 뚜렷한 방향지시없이 논지만 보다 우왕좌 왕 파다가 결국 개혁여론이 밀려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4개 협동조합을 농업으로 통합'이라는 농정 피 대의 실행작을 발표하여 조합원의 역할을 의면하였다
- 협동조합 개혁은 일단 시중은법률의 합법적합 단순 논리로 접근한 사상이 결코 아니며 점증되지도 않는 통합의 실익을 우선시하 여 무리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어떤 방법이 피선인가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저수립함으로써 수입개방 시대에 협동조합이 국내 여러 리산업을 균형히 지키고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정부에 의한 개혁은 단지협동조합의 양상을 초래하여 협동조 합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7 협동조합의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의 의견 수렴 및 조합원애 미치는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혁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인격단체이며, 조합원간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총자로 설립된 조합을 주식회사와 동일한 것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임
 - 기업은 이익(Profit)을, 협동조합은 혜택(Benefit)을 우선한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됨
- 협동조합의 근본 정신이 전부 배제된 채 현실에서 마련되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성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양측농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구자조 3적인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
 - 양측농가가 아닌 외부전문가에게 협동조합의 대표권을 맡길 경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부족 및 동질성 저하로 양측농가의 권익대변이 올바르게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특히 축산업의 비중 증가에 따른 전문화 필요성, 양측농가의 자발의식과 동질성 결핍요구에 따라 81년 발족한 축업을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WTO, IMF 등으로 가장 크기 피해를 당한 양측농가 조합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 금융기관 1인당 대출한도 조파한 상환 및 상회권대보충에 의한 부실저권 대리 연계 불가피로 양측농가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 축산에 필요한 자금의 비공여 있어 피임기간이 길고 소규모역이 파다한 축산자금의 특성이 무시되어 적기 적량의 축산자금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한 사업위축의 조래가 불을 보듯 뻔하다
 - 농촌사회 금융기관 특점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소규모 대출기피 감소, 신저리 소지에 따른 이용불편 등으로 조합장여도가 저하됨으로서 협동조합이 인격단체라는 의미가 희석될 것임

8 통합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협조합과 조합직원들은 단위농협의 통합보다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 전문성을 도외시한 통합협은 축산업의 피보들 가져오게 된다
 - 통합된 조직은 경쟁농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며 수적 열세에 있는 양측농가는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것이 분명하며
 - 축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기본적인 마인드 부족으로 축산업은 피보하게 될 것임
 - 축협이라는 간판이 내리던 그간에 쌓아온 이미지와 브랜드가 상실됨으로써 전문성이 없는 은제로 남게 될 것임
- 집단 시일내에 피원축업을 통합할 경우, 현행 조합장과 직원 불만을 야기시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 직선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몰아내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 농협중심의 상호금융 육성은 축협상호금융 정보들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함에 따라 축협조합 직원 대량감축 문제가 사회파될 수 있음
-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며 직접적인 배스들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개혁과 개방의 시대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구력과 인력 감축, 효율성 중시 경영을 떠나가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모두는 알고 있으며 강력한 자체 구조조정방안을 실현해 나가고 있고 자율적인 추진일대만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 개혁을 하던 실업이 발생하고 안하던 죽는다는 개혁의 모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은 조합의 자율성에 맞기는 것이 개혁의 대인임을 간파해서는 안됨 것임
- 정부의 조합에 대한 감독권 강화 이것은 바로 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 할 것이다
 - 감사기관이 금융감독원, 농림부, 중앙피 등으로 확대되어 조합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양측농가에 대한 지지지원은 정적될 것임이 분명함.

1999. 3. 19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농협 개혁과 최근 전농 사태에 대한 기동농민회의 입장

개별 생산적 수능이 지배적인 한국 농업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은 과거 군사정권시대로 권위적 성격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서 정책 대항기관화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농업운동의 역사는 협동조합 민주화운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시대 이래 특히 1978년 농협의 주정원리수에서 지금 유망해 보이는 협동 고구마시건과 1984년 농협 조합장 직선제 실시 법안이 사망운동 등을 통하여 농민이 주인되는 협농조합운동을 전개해온 본 회의 이번 정부의 협농조합개혁에 관련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너무 늦었으니 아쉬움과 함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운동의 기본 원칙은 '철저히 조합원의 참여와 책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농협개혁 방향은 조합원 중심의 조합, 조합중심의 중앙회 개혁이라는 관점보다는 경영 혁신과 정부정책 대항기관으로서의 협동조합이라는 시각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협 동맹중앙회로 중앙회의 비대항화가 가능될 수 있다.
2. 조합 중심의 상형식 연혁조직전국연합회 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방침이 미흡하다.
3. 중앙회의 사업기능과 비사업기능이 온전히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 중앙회의 산업사업 중심 운영이 지속되고
 - 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연혁기능이 확립되지 못하며
 - 중앙회의 비사업기능 외국연상(시도감사, 교육, 농정기능 발휘 미흡); 지속될 수 있다.
4. 비대한 중앙회의 방대한 시역에 대한 조합 입장에서의 감시기능(감독위설치 등)이 취약하여 협동조합간 협동보다는 갈등 증폭 가능성이 높다.
5. 조합헌법은 경영효율과 조합원 편의 증진, 합병후 전임에 대한 조합원들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6. 조합장 외부 영입(진모경영인, 전·상무로 외부영입기능은 협동조합 원시과 대표권 정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중앙회장 피선거권은 조합장으로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7. 직선: 간선은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현재대로 두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농업 개혁안은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실행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심으로 자율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회, 정당, 농업 관련 각종기관 및 단체들의 광범위한 의사를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또한 이 시점에서 각 정당과 단체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넷째, 농업개혁을 위해 '전국 농민조합총대회'를 주도하였던 전농 장광호 의장의 수배와 유상득 사무총장의 구속을 정부가 대승적 관점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이번 기회가 새천년을 바라보며 21세기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축은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단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1999. 3. 22

한국기독교농민회 회장 이진선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 축산인 규탄대회

- ◆ 일 시 : 1999년 3월 21일(일) 오후 1시
- ◆ 장 소 : 종묘공원
- ◆ 주 최 : 전국축협중앙회, 전국축협단일노조준비위원회

[사전행사] (13:00 ~ 13:40)

- 구호, 노래, 율동 배우기
- 공연 (각설이 타령)
- 율동공연 (노동자 연합 율동패)
- 시민들과 함께 (우유 10,000개 요구르트 10,000병을 시민들께 나눠드립니다.)

[본 대회] (13:40-15:30) <사회: 김창섭 사무금융노련 정의지도국장>

- 개회선언
- 깃발입장
- 노동의례
 - 순국선열 및 순직 노동자에 대한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 참가조직 및 내빈소개
- 규탄사 (축협중앙회노조 위원장 / 전국축협노조 준비위원장)
- 노래공연 (꽃다지)
- 격려사 (사무노련 채운석위원장 / 민주노총 허영구부위원장 / 국민승리21 권영길대표)
- 연대사 축산농가 대표 1명
- 총력투쟁 결단을 위한 식발식
- 결의문 낭독

[행진] (15:30-16:30)

결 의 문

우리 전국의 축산농민 및 축협 노동자들은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축산농민을 다 죽이려하는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 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결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매도하고 대대적인 검찰의 사정위협속에 반 농민적 졸속개혁안을 급조하여 날치기로 발표한 것은 농가부채 및 농어촌 파탄 등 농정실패의 책임을 협동조합에 전가하는 동시에 협동조합 조직을 정부의 시녀화, 관제화하려는 계획적인 고도의 정치적 음모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축산업의 전문 생산자 조직인 축협의 영속성을 지켜내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농축산인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정한 개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정부는 협동조합 길들이기를 통한 협동조합 관제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강제적 구조조정의 명분쌓기용 협동조합 흡집내기와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농민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 농림부는 축산업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만 하지 말고 농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정대책을 제시하라
-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축산인들의 숙원인 마사회환원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농림부는 자책하라
- 농축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개혁적 통합결정을 주도하고 농축산업을 파탄지경으로 이끈 주범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안중운 기획관리실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 축협 노동조합과 축산인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축산인과 축협 노동자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 3. 21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축산인 쫓기대회 참가자 일동

협동조합 통합반대세력들의 반국가적 준동을 크게 우려함

WTO체제하에서 한국의 농업이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민조직인 협동조합의 완벽한 개혁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비롯한 삼척동자에 이르기까지 국민모두가 통감하는 바이며, 목하 가장 투명한 논의아래 합리적인 개혁과 통합의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그럼에도 일부 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임직원들의 기득권 사수들을 위하여 거액의 로비자금을 모아 도하 일간지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내며 김성훈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치졸한 반대와 퇴진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볼 때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이 어찌 농림부만의 통합의지이며, 또한 개인 김성훈씨의 뜻 뿐이란 말인가?


전국의 우수한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인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서도 이미 몇가지 보완사항만을 제시한 채 「농축협중앙회」로 작명까지 해주어가면서 원칙적인 통합을 건의한 바 있거늘, 농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백년대계 수립은 전혀 도외시한 채 목전의 기득권만을 움켜쥐려고 부도덕하며 비애국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본회의 2만 4천여 회원은 물론 5백만 농민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지탄하는 바이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김성훈 농림부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주요하지 않을 경우,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도전도 불사

할 듯한 기세인데, 이러한 위험천만한 발상이야말로 반농업적이며 반민족적임은 물론 반국가적인 행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조그마한 나라에 협동조합중앙회가 4개씩이나 있어 마치 머리 4개 달린 거대공룡과 같은 괴물형태를 하고있는 우리의 협동조합이 바로 잡혀야 농축산업의 전문성도 제대로 살아나고, 21세기 전 인류의 공동과제인 환경농축산업도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에, 일부 지각없는 언행을 일삼는 인사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전국민의 눈에는 오직 불안감만이 가득할 뿐이니 만큼 관계 인사들의 깊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 3. 24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 류 달 영 일동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님, 청와대 민정수석, 기획예산위원장,
농림부장관, 행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농단협회원단체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해 축산농민들은 한편으로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18년전 농협중앙회로부터 전문화를 내세워 오늘의 축협을 분리운영해오다 다시금 통합되는 것이 전문화추세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축산전문기구의 상실에 따른 축산업 위축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의 개혁을 요구하며 농·축산인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협동조합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 축산인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함을 밝힌다.

1. 통합되는 중앙회명칭을 농축협중앙회로 할 것.
 - 성장발전 일로에 있는 축산업에 대한 비중을 살리면서 농협중앙회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분으로 통합하는 의미가 내포되도록 하여 상징성을 부여해야 함.
 - 통합 중앙회장은 경제6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축산업 문제를 대변하도록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
 - 통합 중앙회는 강력하고도 충실한 농정활동과 자금지원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고 회원 조합과 결합되는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할 것.
2. 축산의 위상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 축협연합회(가칭)를 두되 연합회장은 중앙회 부회장으로 하여 농협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하고 축산의 전문적 기능이 살려지도록 함으로써 통합이전보다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 할 것.
 - 축협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통합에 따른 위축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것.
 - 농축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토록 할 것.
3. 업종조합 활성화를 촉진시켜 전문화시대에 대응도록 할 것.
 - 주요 축종별 지역대표는 단위조합 당연직 이사로, 업종조합연합회 대표는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전문화를 제도화시킬 것.
 - 축산농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참여를 제고시키는 장치를 강구할 것.
4.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직 간선제로 선임토록 할 것.
 - 조합장은 회원 조합원중에서 선임되어야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을 살려 대표권과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음.
 - 조합장 자격은 철저히 검증하여 조합장 당선 후에도 자격요건이 상실되면 즉각 조합장직을 상실토록 해야 함.
 - 간선제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직선제의 장점을 살리도록 하되 필요에 의해 조합이 간선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5. 중앙회 통합과 지역축협 축소가 축산업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 대다수 축산인이 우려하는 축산업 위축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통합이전에 비해 축산예산 등 정부지원이 증액 편성되도록 조치할 것.
6. 개혁은 반드시 추진하되 축산인의 의사를 반영시킬 것.
 - 개혁은 강한 의지로 추진하되 축산인의 건의와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

1999. 3. 24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東亞日報
1980年11月26日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진실과 여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수산 관련 교수님들이 협동조합 통합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토론의 공평과 자유의 등에 대한 단념으로 동정하는 온갖 크고 장차서 젊은 우리 농수의 단행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 대수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체 발행 협동조합을 이따는 많은 교수님들이 서명한 내용을 개표하여 그대로 게재합니다.

건의문

임의적인 강제통합을 타파하기 위한 국민의 강력한 개혁외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있어 성의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여야 이고, 마치 통합이 곧 개혁인양 개혁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방연자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하여 진실로 농민을 위한 단계로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3. 사회적 소용에 맞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 고도의 전문화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과잉생산이 중립인 농업과 1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축업을 한데 묶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겨 각 협동조합의 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농림부는 이같은 주시가 바랍니다.

1. 고연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 개혁 방향이 무엇입니까?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이용 효율성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방향을 진지하게 탐구할 것입니다.

4. 조합원이 주인되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 되어야 합니다.
각 협동조합은 조합원주위, 기체주의적 발상을 갖고 통합을 주장하거나 이대로 가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차이를 함께 하고의 노력으로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각 협동조합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2. 농민 조합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협동조합은 농·축·임업 등을 비롯한 모두 조합원 스스로 만든 자정체 조직입니다. 잘못된 개혁 논의에 힘입어 정치 조합원의 뜻은 위로 한 채 서민의 뜻이 의해 협동조합 개혁방향이 결정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 통합을 반대하는 교수 일동

위 내용은 전국의 26개 농축산관련 대학 교수님중 총 384분의 교수님들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 전국 축협직원 일동
이 글은 1980년 11월 26일 1면 10행에 게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일생을 고난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다 대통령직에 취임하신 후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살림 곳곳에서 개혁을 통한 제2의 건국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저희 전국의 농협 조합장 일동과 농협 임직원들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 농협의 문제로 대통령님과 국민의 정부에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협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 확대,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을 위한 절약형농업 보증금과 자재 구조조정으로 절약된 예산을 상호금융 금리인하에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변화된 경영환경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각계에 물어다친 거센 개혁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농협구조조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원과 예산의 대폭적 감축, 중앙본부 및 지사무소 조직의 과감한 축소, 회원농협 합병 등 자재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농협의 노력이 농협에 바라는 농업인과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대통령님과 정부의 개혁의지에 크게 미흡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협 임직원은 이번 농협사태 발생 이후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이어진 매거운 질타속에서 깊은 회한으로 변민하며 뼈저리게 반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로 인해 농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면서 빚어진 예금인출 사태로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고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자금조성에 차질을 빚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 부처가 농협 예금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해 주셔서 최근엔 예금인출 사태가 상당폭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저희 전 농협인이 힘을 합쳐 영농자금 지원, 영농자재 공급 등 풍년농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전농협인이 필요로 하는 새농협으로 다시 태어 나겠습니다.

아뢰울 말씀은 원철회 전농협 회장은 '94년 농협회장 취임이후 農民本位·恒在農場·實事求是를 기본정신으로 항상 농민의 편에서 농협인에게 도움을 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재임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순회수집과 영농자재 농가배달 등 농가의 영농편익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전회장은 세계최대의 비정부 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와 국제농업협동조합기구(ICAO) 회장직을 맡는 등 한국 농협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조직의 책임자로서 그 조직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원철회 전회장도 그동안의 모든 단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농협회장직을 이미 사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의 높은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원철회 전회장 한사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든 농협 임직원들의 잘못입니다. 이번 사태로 저희 농협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일동은 그동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농협으로 새롭게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일생을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한 원철회 전회장의 공로를 감안하시어 부디 선처하여 주시고 명능기를 앞두고 저희 농협 임직원들이 평년농사 지원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수사도 조기에 종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협은 벼를 짊어 구조조정과 자기반성으로 국민의 정부 개혁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진정 농업인의 농협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대통령님의 선처를 거듭 간청합니다.

1999년 3월 7일 16:00

전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拜上

붙임 : 서명부 1부. (210명중 1194명)

결 의 문

우리 축협 조합장 일동은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축산농민을 다 죽이는 농림부의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 결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축산업의 전문 생산자 조직인 축협의 영속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되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우리 축협 조합장 일동은 농축산인의 의견수렴이 배제된 농림부의 일방적인 협동조합 통합 결정을 명백히 반대하며,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 길들이기를 통한 협동조합 관제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헌법상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위적 협동조합 흡집내기와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축산업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실현가능한 농정대책을 제시하라.
- 농축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개혁적 통합결정을 주도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그 책임을 동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 우리 축협 조합장 일동은 축산발전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3월 26일자로 해체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통합 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축산인·축협인의 역량을 총결집, 우리나라 축산업 사수들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입숙히 결의한다.

1999. 3. 26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朝鮮日報
3月29日 金

東亞日報
3月29日 金

新報
3月29日 金

韓國日報
3月29日 金

축산포기, 축산말살을 초래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협동조합 통합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협동조합 통합저지를 위한 결의문

우리 축협 조합정 일동은 축산업의 몰락의 길로 내몰고 축산농민을 다 죽이는 농림부의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 결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축산업의 전문 생산자 조직인 축협의 영속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전명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우리 축협 조합정 일동은 농축산인의 의견수렴이 배제된 농림부의 일방적인 협동조합 통합 결정을 명백히 반대한다. 농림부는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 건틀이기를 통한 협동조합 관제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편법성 명시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위적 협동조합 흡입세외 이윤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 농축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재민개혁적 통합결정은 주도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 농림부는 축산업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실현가능한 농정대책을 제시하라.
- 우리 축협 조합정 일동은 축산발전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3월 26일자로 해체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통합 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축산인, 축협인의 역량을 총결집, 우리나라 축산업 시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 3. 26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성 명 서

농.축협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고 본연의 사명감을 되찾아야 한다 !

농.축협을, 그동안의 많은 업적과 실적에 비추어 농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밝혀지면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방만하고 오만한 경영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조합임직원을 위한 조직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자단체가 농민위에 균형을 이루고 오히려 농민이나 다른 농민단체와 경쟁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농.축협의 필요성과 역할을 크게 인정하고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의 개혁을 스스로에게만 맡겨둘 경우, 보신주의에 빠져 형식적인 개혁의 시늉만 낼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의 개혁방침에 농착하여 진정한 농민의 농.축협으로 새로이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 우리의 의견

- 농.축협은 회원조직 및 전문조합의 원활한 역할수행이 될 수 있도록 생산 지원기능을 대폭 이양하여 회원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농.축협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을 약속하며, 농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라는 것을 농민앞에 다짐해야 한다.
- 농.축협은 경제논리를 앞세운 경영에서 탈피하고 농민의 정서가 경영에 포함되도록 대 농민 지원사업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 회원조합의 다른 농민이나 농민조직과 경쟁이 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보상되어야 한다.
- 농.축협은 농민조합원 본위로 개편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 회원일동. 사단법인 한국화훼종자협회 회원일동

성 명 서

협동조합 줄속 통합 선언! 책임자 색출, 즉각 처단하자! 성공한 친위 구테타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

어느날 농가부채 문제로 농심이 술렁거리자 농협이라는 무대에 뛰어 올라 감사원, 언론, 사정당국이 덩달아 막음을 추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한일간의 어로협상에 실패하여 수많은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지난 2월 연안 포구의 불쌍한 이 나라 어민들의 모습을 기억한다.

우리는 또 정부가 IMF 관리체제를 빙자, 시중금리의 인상을 방치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급기야는 아무 권한도 없는 지역의 농협 건물을 하나 둘씩 점거, 농성을 벌이던 지난 2월의 살벌했던 농촌 읍내의 진풍경을 기억한다.

우리는 또 국민연금제도를 줄속으로 기적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저항하자 절절대며 정국의 탈출구를 찾던 정부, 정계 인사들의 2월 24일자 신문지면에 찍힌 모습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또 2월 23일 대통령의 압호와 같은 '농협의 비리, 부조리, 비효율 지적'을 신호탄으로 25일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기득권 세력이 '농협개혁' 구호아래 총집결, 성스러운 병정놀이를 즐기고, 친위 구테타를 벌이며 각자의 비리는 감추고 농협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고자 급급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구조조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산전수전을 다 겪어 잡은 권력의 완장을 마음껏 뽐내며 칼을 휘둘러 회열을 만끽해 보겠다는 것이면 담장 그만 두라.

오늘의 작태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한다. 성공한 친위 구테타도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

나라의 녹을 먹고 빌붙어 사는 정부 관료, 학자들은 들으라!

때가 되면 정권은 바뀌지만, 농민과 협동조합은 의연히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켜 나간다는 사실을 각시하라!

농업·축산업·어업 1차 산업이 모조리 붕괴직전에 몰린 지금 협동조합만 때려 잡으면 하루 아침에 1차 산업이 회생된다 말인가?

우리는 분노한다. 그들이 진정 농업과 축산업, 어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을 개혁하는가? 자신있는자 말하라! 분명, 당신들은 오늘의 정권 위기만 모면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오늘 당신들이 휘두른 쥘대로 인해 앞으로 수백만 농축산어민이 고생할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날 잘못된 구조와 농협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자주적 결사단체의 개혁주체는 누가 되어야 옳은가? 개혁시대에 누가 개혁을 거부했는가! 1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구성원의 20%인 4000여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는데도 목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 나라에서 구조조정은 정부개혁이 시급한지 농협개혁이 시급한지 묻고 싶다.

동지여 나가자!

분명 입은 있으나 할말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끼리 무슨 말장난이 더 필요하겠는가? 농협인들이여! 이제 입을 굳게 다물고 반쯤 내려잡은 눈으로 무식의 용기를 낳자! IMF 구조조정에 떠밀려 수천명의 동료가 떠나가도 말 한마디 옹기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정부의 일방적 협동조합 통합논의를 박살내자!

정부당국과 정권에 요구한다!

우리 협동조합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일동은 농협개혁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농협중앙회 1만 2천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과 정권에 요구한다.

- 대통령에게 보이기 위한 선통합선언을 즉각 중단하고, 농림부장관은 사퇴하라!

대통령의 각 부처 개혁보고 일정에 맞추어 현재 줄속으로 짜 맞춘 협동조합 개혁·통합 방안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를 추진해 온 농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여 진정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방안을 도출하라!

우리 협동조합의 원적인 태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원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과 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 농협 직원 노조가 개혁의 주체임을 공동선언하고 자율적으로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농민과 협동조합 임직원에게 농정실패의 책임을 농협에 돌린데 대해 정중히 사죄하라!

농림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농협을 배제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감사결과는 마치 농협이 잘못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실패하도록 한 것처럼 정부를 비호하였다. 정부와 정권은 농정실패를 호도하여 농민을 기만하고 협동조합 직원들에게 그 원죄를 뒤집어 씌운 것에 대해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이 나라 농업협동조합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오늘날과 같은 모략으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짓밟히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며,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 비겁하게 앉아서 죽느니 앞서 나가 최후 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워 장렬하게 산화할 것을 조합원동지와 농협인 가족 여러분 앞에 붉은 피로써 굳게 맹세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믿는 자. 당당히 일어나 함께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3월 27일

농협중앙회노동조합 협동조합통합비상대책위원회

중앙일보
3月29日 4面

世界日報
3月29日 2面

每日經濟新聞
3月29日 2面

韓國經濟新聞
3月29日 2面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선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더 이상 임직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국의 5백만 농업인과 대다수의 국민은 임직원들만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벌리는 작금의 반개혁적 행태를 고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협동조합의 임직원들과 조합장들이 협동조합 개혁의 시대적 요구와 도시현대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농민들과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대된 바가 4개나 달린 세계의 유례없는 협동조합 중앙회의 허약한 일선조합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봉사나 농·축산업 지원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협동조합 직원들이 막대한 자금을 배경으로 마치 축산농가들의 의견인양 자신을 속이고 심지어 선의의 교수님들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개혁을 미행·저해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사행이 있다고 5백만 농업인과 선전민의 숙원사업인 협동조합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농업인 생산단체 대표들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이제 협동조합을 그 주인인 농업인과 국민고관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기능이 중복되고 품목별로 나누어진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고 경제사업을 일선조합에 대폭 이양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저해할 모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반드시 새로운 농업인 대표가 사내·교육·정보·농경진흥과 농업인 지원기능을 충실히 지휘할 것입니다.

(2) 일선조합이 경영학·금융학이며 유농·경세 사업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농협으로 생길 공백이 없도록 출장소와 지소기능을 활성화 시켜 봉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조합장은 민주적으로 선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일선조합은 유동·기공·저채조달과 상호금융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성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3) 축산농가는 전문성이 더 보강된 전문 한 농협중앙회와 더 전문화된 일선조합을 갖게 됩니다.

일선축협과 축산농가는 더욱 건설한 통합중앙회로부터 자금조달이 보장됩니다. 현재의 일선축협은 규모화되고 전문화되어 축산농가가 오래도록 바라던 축산물유통·가공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협동조합이 진정한 농업인의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제 전국의 주요시·농업인·국민단체들이 개혁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성명서 건의를 줄기 보내고 있습니다. 농민조합원을 위대한 반개혁적 선진·전통 행위에 설교 현혹되지 말고 계속 협동조합 개혁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
민
부

성명서

「협동조합은 그 주인인 농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농·축협중앙회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협동조합개혁에 동참하라!

□ 농민의 권익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힘써야 할 농·축협 등 협동조합이 농민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방만한 조직과 인력의 운용 등 기관과 임직원의 이익에만 쫓겨하고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업무에 치중하여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 검사결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우리 한국과수협회와 한국과수묘목협회는 농·축협이 그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개혁방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전 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개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첫째, 현재 공룡처럼 비대화되어 있는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여 농촌의 생산 현장에서 농민과 직접 부딪치는 일선조합으로 대폭 이양하여 명실공히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촌일선의 협동조합도 광역화하여 그 본연의 임무인 생산·유통 등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효율화·규모화시키고 상부상조 성격의 상호금융과 지도·교육·농정지원활동을 강화하여 농민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셋째,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농민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방만한 부실경영을 바로 잡으므로써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 그리하여 농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이 되고 농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므로써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1999. 3. 29

(사)한국과수협회, (사)한국과수묘목협회 회원 일동

성 명 서

농. 축협 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고 본연의 사명감을 되찾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자 단체이다. 그러나 농. 축협은 그동안 농업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동안의 업적과 실적에 비해 농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밝혀지면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병만하고 오만한 경영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조합임직원을 위한 조직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자단체가 농민위에 군림하고 오히려 농민이나 다른 농민단체와 경합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농. 축협의 필요성과 역할을 크게 인정하고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의 개혁을 스스로에게만 맡겨 둘 경우 보신주의에 빠져 형식적인 개혁의 시늉만 낼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의 개혁방침에 동참하여 진정한 농민의 농. 축협으로 새로이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 우리의 의견

- ◇ 농. 축협은 회원조직 및 전문조합의 원활한 역할수행이 될 수 있도록 생산 지원 기능을 대폭 이양하여 회원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 ◇ 농. 축협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을 약속하며 농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라는 것을 농민앞에 다짐해야 한다.
- ◇ 농. 축협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경영에서 탈피하고 농민의 정서가 경영에 포함되도록 대 농민 지원사업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 ◇ 회원조합외의 다른 농민이나 농민조직과 경쟁이 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 농. 축협은 농민조합원 본위로 개편되어 농업인으로 부터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이 되고 농업인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생산활동에 전념함으로써 활력있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 한국농자협회 회원 일동

성 명 서

농·축협 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라!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자 단체이다. 그러나 농·축협은 농업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 특히 대기업으로 부터는 방만한 경영기법을 배우고, 공기업으로부터는 조직확장과 조직의 보신책을 배우는 등 그 폐해가 많았음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대한은실산업협회는 농·축협 중앙회가 그동안의 구태를 훌훌 던져버리고 진정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놓은 개혁방침에 앞장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농림부가 급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농정의 핵심과제이다. 이느날 갑자기 비합법적인 구태타 식으로 마련한 것이 설코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우리가 원하는 협동조합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농·축협 중앙회는 생산지원 기능을 회원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협동조합 중앙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중앙회가 실시하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취약한 유통·경제사업은 더욱 보강하고, 상부상조 성격의 상호금융과 지도·교육·농정지원 활동을 농민조합원 본위로 개편해야 한다.

일선 조합을 경쟁력 있게 규모화하여 정부의 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요청이자 시대적 대세이다. 수많은 농업인·농업인단체·학계전문가들도 이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동조합은 영원히 개혁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농업과 농촌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되고 그것을 방조한 우리모두가 역사앞에 죄인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이들 외면한다든지 소극이기주의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앞에 겸허하게 또 엄숙한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

1999. 3. 29

사단법인 대한온실산업협

회장 안용



원 일동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추진위'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한 전농의 입장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의 협동조합 개혁안은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득권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현상유지안이며 200만 농민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협동조합 개혁 추진단의 논의는 지난해 구성되어 진행하였으나 정권의 농업 관용에 대한 영향력 유지 의도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그나마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3월 8일 농림부의 시안이 전격 발표된 이후 다시 재개 되었지만 각계각층의 진실한 개혁 요구를 성의 있게 수렴하지 않아 큰 반발을 받아왔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 짜여진 가판에 따라 진행되는 연극처럼 시기와 방법을 징해 놓고 농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김대중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나마 개선한다는 내용도 구체적인 실현방도와 법, 제도적 근거마련이 없어 '허울좋은 개혁'만이 자칭하며 정권이 바뀌거나 반박되는 요식행위 일 뿐이다.

1. 협동조합 중앙회는 통합하여 모든 사업을 회원조합에 이관하고 농생활동과 지도·조정과 대외적 교섭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중앙회]로 개편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개혁 추진단의 개혁안은 그간 미리의 온상이었던 중앙회를 형식적으로 통합하고 여전히 막대한 사업권을 주어 현행의 중앙회보다 오히려 더 큰 공동조직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회원조합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다.

중앙회의 사업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오히려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존 각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독립된 [전국연합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제로 인해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인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제일주의로 변질되어 협동조합이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는 계단이 극히 낮다. 현행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 축협, 진분조합등의 전국경제사업연합회로 바꾸어 이제야 바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의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농축산물 취급조선회권과 수입권을 확보하여 농업생산 및 유통의 발전과 농민조합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신용사업은 경제 사업과 분리되어야 하며, 협동조합내에 존재하여 대자본과 정치권력과 행정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들에게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경제사업에 깊지히 복부해야 한다.

이번 정부시안을 발표한 당국자들과 동의한 참가자들은 반농민적 관세 협동조합의 왜곡된 농업금융구조로 인해 빚더미에 눌러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기도 힘든 사상 최악의 농업위기와 신용공황상태에서 농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책임을 꼭바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협동조합 개혁을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위해 진농의 '잠정합의안'(29일 중앙위)을 확정하고 4월 9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농익적 효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1999년 3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성 명 서

농·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업인의 뜻에 따라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농·축협중앙회는 주인인 농업인의 뜻을 직시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세적 위치에 있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생산자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개발보다는 조직확장과 조직의 보신에 주력하는등 그 폐해가 많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 생약생산농민은 농·축협중앙회가 그동안의 구태를 벗고 농업인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농·축협중앙회는 생산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협동조합개혁방침에 앞장서 다음과 같이 개혁하여야 한다.

첫째, 농산물유통등 경제사업을 대폭 확대보강하고, 신용사업은 농업인에게 저리자금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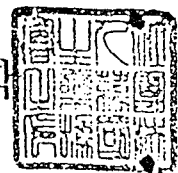
둘째, 지나치게 많은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을 중심으로한
적정 경제단위로 경쟁력있게 규모화하여 정부의 내농민 지원사업
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 전문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로써 농업인 스스로가 협동조합은 우리의 조합이라는 주인의식
을 갖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축협중앙회는 진정한
생산자단체로 거듭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9년 3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장 임 연 학



농·축협 통합 등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저희 농협은 최근 농협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경히 수용하고 반성하면서,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앙부처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한 협동조합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간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개혁방안을 도출코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됨에 따라 정부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협은 과감한 개혁만이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고, 이만한 것이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농업인을 위한 개혁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1. 정부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개혁에 동참하겠습니다.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협동조합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개혁적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2.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농협을 주인인 농업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운영혁신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농협 본연의 임무에 중실함으로써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라는 배를 불식하고 진정한 농업인의 농협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 3.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사업 위주의 업무를 농산물의 생산·유통지원 등 경제사업 위주의 농협으로 전환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직거래사업의 활성을 통한 농산물 유통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으로서 농협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농협 등 4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의 입장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지난 2월 2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 달여 동안 계속되어 온 일련의 농협사태가 일 단락되기도 전에 또 다시 농림부에서 추진하게 된 4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목전에 두고 고민 아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직장인으로서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왔던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이라는 불명예가 지워졌던 것이 바로 옛 그제 같은데, 이제는 새롭게 추진하게 된 개혁방안조차 여론을 통해 복수와 공중분해의 대상으로 잘못 그려져, 진정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의심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와 농민, 그리고 각 협동조합의 주체들까지 궁지에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1만 2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협동조합 개혁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농민조합원과 우리 노동조합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대전제를 고수하면서 금번 농민을 위한 4개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농림부가 발표한 농협 등 4개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토대로 더욱 좋은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협동조합 개혁의 책임있는 각 주체들이 오늘날 진지한 개혁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축협 사태의 여파를 하루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기관에서도 농·축협 사태에 대한 흠집내기·고발위주의 보도자세에서 탈피, 각 협동조합이 추진해 나가야 할 개혁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보도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이처럼 불리한 국민 여론을 불식시키고 개혁논의를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 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러한 노력이 헛된 수고가 아님을 믿으며, 금번 4개 협동조합 개혁이 진정 농민을 위한 개혁으로 비약·발전하는데 비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농림부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을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농업관련 단체는 물론 시민관련 단체의 견해도 수렴하기 위해 결코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우리 앞에 놓인 엄숙한 미래의 농업·농촌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오늘날 농협개혁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입장도 겸허하게 수용, 합리적인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 1만 2천 조합원 일동은 낙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각자가 개혁 마인드를 배양하고, 노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 개혁에 책임있는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하여 각자의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열어 나갈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이사 임명시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민주적 인사들 사외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농협법의 개정시에는 현행 감사제도를 개선하여 농민조합원에서 선출된 감사와 함께 고객을 대표하는 '시민관련 단체 파견 감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할 것이며, 농협 직원이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농민조합원과 공동운명체 의식도 높이고 조합의 자본조성에도 참여하는 '농협직원 무의결권 우선주 자본참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여 농협 개혁에 실질적 민주화도 기하고 농협직원의 책임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오늘날 협동조합 개혁에 임하고, 미래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농민·도시민 사회연대의 큰 틀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애써 벗어나고자 하는 불명예와 치욕, 그 대부분은 그 동안 쌓인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어쩌면 이러한 모욕감이 순간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우리 나라에서 도둑 아닌 직업이 어디 있겠냐는 위로 한마디로 삭혀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처지와 현실을 사고한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농협중앙회 건물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들로부터 점거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농협 측의 피해사실도 중요하지만 농업부문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취재기자들을 설득하던 우리 직원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농업과 농촌의 장래를 생각하는 농협 직원임을 자부한다.

이제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그 동안 깊이 파인 불신과 오해의 곪을 메워 나가야 한다! 농민과 도시민이 연대하여 황급들판에서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하자! 수마가 활취고 간 들녘에는 노동조합의 깃발이 휘날리도록 하자! WTO 차기 협상에 농민이 힘겨워 할 때 노동조합의 깃발이 휘날리도록 하자! 도시민이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로 고민할 때 농협 노동조합의 깃발이 휘날리도록 하자!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오늘의 협동조합 개혁논의가 미래의 우리 농업·농촌에도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보다 넓은 시야에서 진일보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더욱 개선된 개혁방안을 도출해 나가는데 협동조합 개혁의 책임있는 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개선, 우리의 입장을 밝혀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1999년 3월 31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농·축협 개혁에 대한 정농회의 입장

농업은 우리 삶의 근본 토대 중의 토대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 농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핵심적인 위기이다. 농업의 위기를 종래의 경제논리에 따라 접근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러한 문세의식 없이 시도된다면 그 개혁은 지극히 불완전한 것이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는 정부의 농·축협 개혁 작업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라며 현단계 우리농업의 목표들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농업을 천시하고 공업을 중시하는 상투적인 공업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선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현재의 농업 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대규모 산업축산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4. 소규모의 가족농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농·축협은 이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축협중앙회는 개혁에 동참하라!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일련의 협동조합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일인양 방관하고 비난한 경우도 없지 않았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국민과 언론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제라도 협동조합 개혁에 주인으로 직접 나서고자 한다.

본디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주적 생산자 단체이다. 그러나 농·축협은 태생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고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는 방만한 경영기법을 배우고 공기업으로부터는 조직확장과 조직의 보신책을 배우는 등 그 폐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농·축협중앙회가 그 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 농·축협 중앙회는 생산지원 기능을 회원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협동조합 중앙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중앙회가 실시하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상치를 상구해야 한다.
- 취약한 유통, 경제사업은 더욱 보강하고, 상호부조 성격의 상호금융과 지도, 교육, 농정지원 활동을 농민조합원 본위로 개편해야 한다.
- 일선 조합을 경쟁력 있게 규모화하여 정부의 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농업인으로부터는 신뢰받는 협동조합이 되고 농업인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생산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쇠퇴일로에 있는 농촌을 재건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농·축협중앙회 통합과 부실조합 정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여 건강한 농·축산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일부 협동조합 조합장들과 임직원들이 농·축협의 통합이 마치 반농업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현장 농·축산인의 여론과는 전혀 다른 반개혁적 행태로써, 즉각 중단해야 하며 범농업인의 힘을 모아 협동조합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해야 할 것이다.
- 언론은 농업에 대한 천박한 이해와 선정적 보도 태도로 일관해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농업을 더욱 앞잡아보고 경멸하는 풍조를 조장하여 농업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점에 대해 언론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 더 이상 위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에서 벗어나 농·축산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 협동조합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하루 빨리 모든 농·축산인들이 힘과 지체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축협은 축산농가를 위한 활동은 등한히 하고 축산물 수입에만 열중하여 축산농가의 이익에 오히려 반해온 점을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 농정당국은 농·축산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눈이 멀어 있는 일부 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조직적 저항에 흔들리시 말고 농민의 조직으로 협동조합이 개혁될 수 있도록 농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강력히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개혁작업에 저항하고 있는 일부 농·축협중앙회 임직권들은 농민을 볼모로 삼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거둔된 이기심을 버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작업에 사심없이 동참하여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999. 3. 31

사단법인 정농회 회장 정상묵

성 명 서

축협중앙회 박 순용 회장은 즉시 입장을 밝혀라!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의 양축가와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전국의 축협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나라 축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우리 1백만 축산인을 무시한 채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는 농림부의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강제통합결정에 모두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누구보다도 반 개혁적인 협동조합 강제통합 결정 반대투쟁의 선봉에서 투쟁해야 할 박 순용회장의 최근의 행보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며 전국의 축협직원들을 대신해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내일 있을 여의도 축산농민 집회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1. 축협중앙회 비상투쟁기금 모금당시 전 직원이 임금의 100%를 비투위에 납부할 것을 결의 하였는바 이의 동참여부
2. 3월 21일 협동조합 통합저지 쟁기대회에 불참한 이유
3. 4월 2일 여의도 집회 참석여부
4. 농림부의 협동조합 강제통합에 대한 개인적 의견
5. 강제통합 반대투쟁의 선봉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여부

만약,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거나, 직접 선언하지 않을 때에는 진정한 협동조합의 대표인 여러 조합장들과 함께 전국의 축협 직원들과 함께 중앙회장 퇴진운동을 즉각 개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중앙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투쟁의 선봉에서 일하는 모습을 전국의 양축가와 축협직원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1999.4.1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와 전국축협단일노조를 준비하는
전/국/축/협/단/일/노/조/준/비/위/원/회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을 촉구한다

한국농업 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농민의 영농생활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협동조합은 매우 소중한 농민단체이다. 그러나 그간의 협동조합은 농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왔다.

이는 농업관련 협동조합이 중앙회만 비대하고 일선조합은 취약한 기형적인 형태로 조합원보다는 임직원을 위한 조합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이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한국경제의 반성과 새로운 진로 모색에 있어서 협동조합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협동조합의 개혁은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협동조합 개혁안은 200만 농민 조합원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채 발표되었으며, 또한 직원노조의 집단 성명시위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책임회피적인 행위로서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의 협동조합 개혁원칙에 입각하여 협동조합의 개혁을 촉구한다.

기본원칙

-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기능의 회복
-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인 조합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 문화 형성

1. 농·축·임·삼협 중앙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통합하되 사업은 모두 회원조합에 이관하여 (사업은 하지 않고) 조합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도·교육·감독 및 농정활동 등 비사업적 기능만을 전담한다.

2. 농·축협 등의 회원조합의 통폐합 문제는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되 조합원의 의사에 맡겨하며, 아울러 전문조합·업종조합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신용사업은 경제사업과 분리하여 농업금융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체가 담당한다. 다만, 신용사업담당 법인체는 통합협동조합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대자본과 정치권력, 행정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들에게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며, 경제사업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

4. 조합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5.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원칙 유지와 함께 조합 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조합원에게는 경영 위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6. 각 단위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하되, 각 조합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뜻에 따라 선출하도록 해야한다.

7. 이번 협동조합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된 농민은 화합과 개혁 동참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즉각 석방하라.

1999. 4. 1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한국여성민우회,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문의 :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02-723-5051 / 019-204-5051)

환경연합 김종렬 정책팀장(02-735-7000 / 017-347-2577)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공개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1. 국면이 정부 출범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중 합동조합개혁의 기본방향은 품목별 연합화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는 교육·농정·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발표한 합동조합개혁안은 오히려 품목별 연합화 기능을 약화하고 통합 중앙회는 운영업무 중심으로 거래 중립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부터 인수위기 방침을 잘못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인수위기 정한 방침을 바꾸지 않으려 인위적 조도의 일 못할 사람이 생긴 것인지 공개 답변 바랍니다.

2. 대통령에서는 합동조합이 농산물 유통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셨습니까. 지체도 아예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합동조합이 둔감사적인 활동한다는 기사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전문화 필요성을 무시한 채 전체 합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히 농산물 유통개혁을 이룩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광범히 밝혀주시 바랍니다.

3. 지난 12월 15일 합동조합개혁위원회는 중앙회 존폐 형태에 대하여 '현행제도 유지'와 '신·검분리된 분할 연합체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되었고, 현 농림부안(82)인 '합동조합통합방안'은 마지막회의(제7차)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하나의 안(案)으로 추가되어 농민부에 건의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합계권에서 실질적인 논의과정도 없었던 통합안을 합동조합개혁안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4. 앞축기 조합원은 물론 농축산관련 교수 및 전문농업인단체에서도 농림부안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전국 축산업합동조합 조합장들은 지난 8월 28일 통합결정서안 권의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언론을 통해 오직 축합지원인들이 합제권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반대한다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지하고 축산농가들 대표하는 축합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우리 축산업과 축산농민 지키기에 함께 하실 뜻있는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농민 조합원에 의해 자주·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 합동조합에 대해 강제통합이라는 제막의 출속안을 개척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부시는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초범적이고, 비민주, 반합동조합적인 처사에 맞서 축산농민의 권리와 축합의 자유권을 사수하는데 동참하실 뜻있는 법률전문가를 모십니다.

▲접수처: 합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 비상투쟁위원회 (Tel. 2224-8880~9)

[함께 검토 고민하여 주실 사항]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일어부각의 합동조합 강제적 통합이 법안 강요를 가할 수 있는가 여부

○농림부가 축합의 자유의지를 강제한 지 단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축산농업 조합원, 조합장의 의사에 반해 합동조합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 및 국가의 농어업인 구조조각 지원부 지원)

○농림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는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위헌판정을 출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법

○'93년 헌법재판소는 합동조합설립과 관련된 헌법상 일면에서 헌법재판권 전인일체로 '조합설립의 자유'를 정부가 입법권의 역할을 통해 구역별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당하여 헌법에 보정된 '결사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판결이리 판결(재판도 92헌2 124)

합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범축산인 쟁기대회

우리나라 축산을 사랑하는 축산농민 조합원 여러분! 모두 힘 지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축산농민 다죽이는 합동조합 통합반대'

▲일시: 1993. 12. 27(금), 14:00~18:00
▲장소: 여의도 둔치(구수계) 금성부대
▲주최: 합동조합 통합 저지 투쟁위원회

합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 비상투쟁위원회

농·축협 등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농림부의 농·축협 등 협동조합개혁 방안에 대해 우리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생활개선중앙회 회원은 공감하면서도 착실한 개혁과 농업인을 위한 진실된 협동조합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1. 협동조합은 농업인 전체를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외부의 지나친 간섭보다는 각 협동조합별로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인력·조직·사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협동조합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업인이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협동조합은 중앙집권적 경영관리가 아닌 협동조합 본연의 지역조합 → 지역연합조합 → 전국연합조직의 순으로 개편되어 지역조합이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4. 협동조합은 정책적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농업인 공통의 이해를 가진 농업인들의 자발적 경제단체로 개별 조합원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
5. 협동조합은 경영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을 대폭 완화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6. 협동조합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농축산물 가격지지의 유통체계 개선과 영농자금의 적기지원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1999. 4. 1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회원 일동

정부는 협동조합의 개혁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라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경북농민들의 입장 -

지금 협동조합 개혁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농민의 가슴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평소 조합의 주인인 우리들을 푸대접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만 적극 나선 일부의 직원들, 그리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모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일부의 악덕 조합장들이 모처럼 맞은 개혁의 호기를 적극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봉사해온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이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명백하다. 이제 더 이상 개혁을 미룬다면 우리 농업의 발전은 퇴보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번엔야말로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개혁이 되기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협동조합 개혁은 철저히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IMF 등 국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회원조합의 광역화·규모화, 전문경영인의 도입 등의 과감한 조치를 통해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되, 다음의 소박한 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들은 지금까지 조합은 본연의 업무인 구매, 판매 등 경제사업보다는 쉽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신용사업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빚어지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 때문에 개혁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각 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2. 협동조합의 개혁문제는 그 주인인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각 조합들이 나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방만한 협동조합의 개혁이 없이는 결코 산재한 농업문제의 해결과 농업·농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의 개혁을 지지하는 바이다.

3. 이제까지 조합을 부실로 이끈 데에 관한 책임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이 배포하는 각종 유인물 투서나 협동조합의 예금 인출 사건과 같이 흠집내기식의 언론보도는 협동조합의 주인인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농축협외 회원조합 통폐합은 단기간 내에 회원조합 간의 합의를 거쳐 완료해야 하며, 아울러 중앙회의 통폐합은 보다 강도있게 신속히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부실조합은 통폐합을 유도하며, 또한 우량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을 행하여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온갖 사업들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야만 한다.

5. 그리고, 21세기 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업종별 전문조합의 육성과 협동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조합장의 선출방식은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6. 끝으로, 협동조합의 임직원들도 오늘의 사태에 대한 내부에서부터의 진정한 반성의 자세에서 한발 나아가 개혁을 위한 일단의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의 위기를 개혁을 통해 하루 빨리 타개하여, 농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우리 농민들은 기대하는 바이다.

1999. 4. 1.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생 일동
(대표 조정호 외 89명)

성 명 서

협동조합개혁 문제는 정권적 차원에서 시도되어 왔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청명한 의견 대립으로 지지부진 되어 왔다.

최근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에서 이번
만큼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협동조합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추진에 집단이기주의가 준동하고 개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계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 통합을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의 집단이기주의는 시대의 소명을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다.

협동조합개혁은 시대의 소명이요, 21C 한국농업의 흥망성쇠를 기를하는 가장
절실한 요청이요, 농업인의 땀과 눈물을 보상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APC연합회는 농산물산지유통을 주도하면서 오늘의 사태에 다음과 같이
정부와 협동조합에 촉구하고자 한다.

1. 진정한 농업인(축산업인)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것.

- 그러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대승적 견지에서 견뎌히
수용할 것.

2. 정부의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기독교층은 소아적인 이점을
버리고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따를 것.

- 주체적 개혁에 동참해야 함.

3. 농·축산물 유통의 주체가 협동조합이 되어야 함.

-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이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신경 독립적인 운영과 규모의 경제가 시급히 요청됨.

4. 협동조합은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기지를 뛰어넘어 농·축산물 상품 공급기지로써 거듭태어나 농산물 유통의 선봉에 설 것.

이상과 같이 만사지탄이지만 이번의 정부에서 주도되어 지펴진 개혁의 역사적 소명을 받아들여 협동조합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500만 농민인과 21C 후손에 더 이상의 짐이 되지 않고 남겨줄수 있는 확실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9. 4. 1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연합회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정책 세미나

- 성명서 -

- 발표 : 장원석(단국대 교수, 전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
- 제목 :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
- 때 : 1999. 4. 6(화) 10:00~12:00
- 곳 : 충남 천안시 단국대 농학관 2층 국제회의장
- 토론 : 참석자 누구나
- 주 회 : 단국대 부설 협동문화경제연구센터(약칭, 협동연구소)
- 후 원 : 단국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수축산물 유통경영 전문가 과정, 호서대 민족통일운동본부 농업개혁위원회,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 연구회' 창립준비모임 : 12:00~12:30

농축산인 협회협회를 위한 협동조합개혁연구회의
 창립준비 모임을 열기로 합의해 주십시오.

「연구회 창립취지」

협동조합개혁은 지난 3월 10일 발표된 바 있는 우측 성명서의 내용과 같은 원칙과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동의하시는 분은 연구회 창립준비 모임에 동참(참가인) 하셔서 그 구체적인 방안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해 주시길 양망합니다.

- 참가인 자격 : 농축산인(단체), 협동조합 임직원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 참가인 신청방법 : 아래 쿠폰으로 5천원이상, 단체 10만원 이상을 입금시킨 후, 전화 혹은 FAX로 연락주시면 됨
- 농 회 : 467-02-537026(김필봉) ■ 축 회 : 406-13-12468-416(김필봉)

전화: (0417)550-3610 FAX: (0417)550-1819

창립준비모임 간사 : 장원석, 김필봉

농업개혁에 관한 정부안은 작년도 협동조합개혁위원회·농업개혁위원회에서 농민·시민단체의 대표들과 협동조합 임직원들이 합의한 개혁안중 상당부분이 반영되었으나 잘못된 것도 적지 않다. 또한, 정부·협동조합·농업인들의 주장중 일부는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역행한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고자 본 농업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혁원칙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혁방향과 원칙〉

1. 철저하게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어야 함.
2. IMF 등 국내외 환경위험한 생존 및 경쟁력 전략이어야 함.

〈개혁방안〉

1. 농·축협중앙회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슬림화하여 대외, 함께 비송편익을 강인한 지체인 및 투쟁을 하고 회원조직과 조합원을 위한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함
2. 농·축협 회원조합의 합병은 시·군별 회원조합간의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경제권과 생활권이 있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단기간 내에 완료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회는 부실조합 폐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협동조합 운영 또는 공고를 만들어 신·경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농축산 회계를 더욱 악화시킬 결과를 초래할 것임. 운영으로 독립법인화는 IMF극복 전후의 재정사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 동안 농협의 독립법인화는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았으므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철저한 독립법인화를 실시하여, 실질적 내용의 면에서 신·경관의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함. 그러나 농민, 요구는 경제사업·저도사업을 강화하고, 시골 및 운영자금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더욱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독립법인으로 농·축협중앙회의 신속사업이 분리되어 운영을 만든다면, 은행의 운영원리의 경쟁 및 실질적 금융환경으로 바꾸어 경제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등에 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도사업자금, 셋째, 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책자금을 무순수 협동조합 은행에서 시의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는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본질이 어긋난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사회 여건에 미치지 못해도 비현실적임
4. 정부가 마련한 협동조합 개혁안중 조합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임. 농민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며, 권한에 상응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따라서 중앙회장 선거제도 역시 개혁이 아니라 폐지된 것임. 조합장 선거제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 의사에 따라 직선제나 간선제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중앙회장 선거는 회원조합장이 직선하거나 아니면 조합장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의제를 만들어야 함.
5. 조합원의 경영참여와 외부관리의 역할 등을 활성화하여 조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1999년 3월 18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농업개혁위원회

협동조합 통합 반대세력들의 반농업적 책동을 크게 우려함

WTO체제하에서 한국의 농업이 재지리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민조직인 협동조합의 완벽한 개혁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물론 대다수 뜻있는 농업인들의 전례의 숙원으로서, 목하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가장 투명한 논의이래 합리적인 개혁과 통합의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그럼에도 일부 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임직원들의 기득권 방어만을 꾀하듯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연일 도하 일간지에 대문짝 만한 광고를 내며, 관계 장관 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치졸한 반대와 퇴진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볼 때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것이 어찌 농림부만의 통합의지이며, 또한 장관 개인의 뜻뿐이란 말인가?

전국의 우수한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인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서도 이미 몇 가지 보완사항만을 제시한 채 「농축협중앙회」로 작명까지 해주기만 서 원칙적인 통합을 전의한바 있거늘, 농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백년대계 수립은 전혀 도외시한 채 목전의 기득권만을 움켜 쥐려는 듯, 부도덕하며 비애국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본회의 2만 4천여 회원은 물론 전체 농민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지탄하는 바이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김성훈 농림부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주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도전도 불사할 듯한 기세인데, 이러한 위험천만한 발상이야말로 반농업적이며 반농민적인 형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조그마한 나라에 협동조합중앙회가 4개씩이나 있어 마치 머리 4개 달린 거대공룡과 같은 괴물형태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협동조합이 바로 잡혀야 농축산업의 전문성도 제대로 살아나고, 21세기 전 인류의 공동과제인 환경농축산업도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에, 일부 자각없는 언행을 일삼는 인사들의 형태를 바라보는 전국민의 눈에는 오직 불안감만이 가득할 뿐이니 만큼, 관계인사들의 깊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는 물론,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대승적인 협의를 통한 개혁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 3. 29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임원·회원 일동

결 의 문

우리 1백만 축산인 모두는 축산업을 골목의 길로 내몰고 축산농민을 다 죽이는 농림부의 비인주적이고 반계혁적협업 강제 통합 결적이 대대적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임박하다.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의 본질과 절차를 무시한채 농림부가 강행하고 있는 농속협 강제통합은

농가부채 등 농정실책으로 인한 농민불행 여론을 협동조합에 돌리기 위한 용모임에 반발하여 농속산인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축산인과 농림부의 협동조합 강제 통합이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우리는 축산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축산분야의 전문 생산자 조직인 축협의 영속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농림부는 농속산인의 의견 수렴이 배제된 일방적인 단순승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 갈등이기를 통한 협동조합 전체적 용모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협정상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방적 협동조합 흡입내기와 억권문제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축산업의 건문화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성원가능한 승정대화를 즉시 실현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 개혁이 정부 주도라 아닌 농속산인의 뜻과 의지대로 추진 되도록 농속산인의 개혁 자율권을 보장하라.

- 농속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계혁적 통합결정을 주도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그 책임을 분명하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 축산인 모두는 우리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반발될 때까지 전국의 1백만 축산인의 단결을 총결집, 우리나라 축산업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8. 4. 2.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쟁기대회 참가자 일동

행진코스

리외도 분지 → SBS → 국민회의 당사 → 국회의원시장 → 한나라 당사 → KBS → 동아일보 → 여의도 문화의 미당(구 여의도 공원)

집회참가자 행동지침

- 필요를 판단이탈하여 시민과 자와의 풍경을 방해하지 않는다.
- 화염병, 쇠파이프, 몽둥 시민의 불안을 야기할 물건을 휴대하지 않는다.
-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을 하지 않는다.
- 음이쓰러져 풍을 중화장소에 합부로 버리지 않는다.
- 건강등 공권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
- 폭력적 행위는 절대 적절하다.
- 진퇴 및 정세요인의 공지에 즉각 집조하여 행사를 정복적으로 진행한다.
- 기록동원은 금지한다(집의 불허요인)

대외구호

- ◇ 농가부채 못살았다 농경실적 책임져라
- ◇ 축산농민 다죽이는 강제통합 반대한다.
- ◇ 합리없는 강제통합 축산농민 다죽는다
- ◇ 축산농민 총연결로 강제통합 저지하자
- ◇ 축산농민 총연결로 축산업을 사수하자
- ◇ 강제통합 철회하라 김성훈은 자폭하라
- ◇ 농경실적 호도위한 협동조합 통합반대
- ◇ 38 농경 주저다 - 축산인 다죽인다
- ◇ 협동조합을 정부로 부의 책임시키자
- ◇ 축산업 회복하는 농림부는 자성하라
- ◇ 우리의 생명산업 축산업을 지키자
- ◇ 관계조할 권리는 농림부는 각성하라
- ◇ 김성훈은 강제통합 축산농민 다죽인다
- ◇ 진정한 반상형성 협동조합 다죽인다

조합원 중심의 조합 ! 조합중심의 중앙회로

-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

한국 전쟁 이후 농민운동의 역사는 협동조합 민주화 운동의 역사라 할만큼 우리의 협동조합은 그 출발과 성장과정이 기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협동조합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민의 자주·자조적인 결사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정책 대행기관으로 농민 통제수단이 되었다든지, 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지 않았는데 조합건물과 중앙회만 커졌다든지 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해체위기에 직면한 농촌·농업·농민을 구하고 IMF관리체제를 극복해야할 한 시점에서 협동조합 개혁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뒤늦었지만 환영할만 합니다.

물론 개혁주체가 농민조합원이라야 하는데, 충분한 의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 이해 관계를 앞세워 집단적 의사표명도 나타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혁의 목표는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 중심의 조합으로, 회원 조합 중심의 중앙회로 개혁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 이해를 앞세운 의사표명이 자칫 협동조합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할 것을 우려합니다. 정부를 포함한 농·축업관련 협동조합주체들의 뼈저린 반성과 인내를 촉구하면서 대승적 관점에서 건강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모아줄 것을 바랍니다. 화합과 개혁동참이라는 원칙아래 이번 개혁논의 과정에서 구속·수배된 농민들의 석방과 해제가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협동조합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농민의 자주적 협동조합으로 거듭나 식량안보·국민건강·환경보전의 역군으로서 21세기 새천년의 농축산업을 일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러한 과업에 동참할 것을 밝힙니다.

1999. 4. 2.

(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김 승 오

농·축협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신 : 협동조합 개혁단

발신 : 사단법인 한국농산물냉장협회

1.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순수한 협동조합으로만 인식되어 온 단체가 오히려 방만한 조직을 앞세워 농민위에 군림하고 일부 임직원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여 왔던 농·축협의 최근 밝혀진 실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길 없으며 특히 생산농민과는 떼어 놓을 수 없고 동반자 관계에 있는 당협회 회원들로서는 그 실망감이 이루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2. 그러나 더이상 비난하고 실망감에만 빠져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의 시급한 현실 생각으로 하루 빨리 본질적인 개혁을 통한 농민본연의 조합으로 개편되어 경제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새로이 태어나서 국가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농업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축협중앙회는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여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1999년 4월 2일

사단
법인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회원 일동



□ 조합장 제위께

어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농·축협 강제통합 결정에 항의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천리길을 마다않고 참석하여 주신 조합장님이하 축산농민 조합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영농철의 바쁜 일손도 잠시 놓고 우리의 생업이자 민족의 생명산업인 축산업을 사수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3만 5천여 축산농민 여러분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으로 어제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정부당국 누군가의 반농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협동조합 강제통합 결정에 맞서 축산농민들의 소박한 뜻과 의지를 전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어제의 행사가 어떤 이유에선지, 아니면 누군가의 통제때문인지 언론 보도가 축소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어제 쫓겨간 목적인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목살되고 단절되었기에 대통령이하 정책당국자에게 이를 항의하고 우리의 뜻과 진실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속 개혁안을 정당화시키기에 여념이 없고,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에 의해 우리의 주장과 시위 내용이 묵살되고 있는 것입니다.

1백만 축산농민의 정당한 주장과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기회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조합장 및 조합원 여러분 !

3만 5천여 축산농민들이 목소리 높여 외친 소박한 뜻과 메시지가 이렇듯 막히고 전달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1백만 축산농민들의 소박한 뜻과 의지가 집단이기주의라면 과연 이나라 이땅에서는 무엇이 민의입니까 ?

조합장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전모를 조합원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모든 언론이 침묵한다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심한 언론통제를 가한다고 해서 우리 축산인의 입과 귀를 다 틀어 박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매스컴에서 외면한 어제 권기대회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긴급 제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 여러분께 어제 행사의 참뜻과 열기를 전해주시고 동참을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투위와 중앙회에서도 지금까지의 진상과 전모는 물론 우리의 주장을 국회, 언론등에 전달하고 정식 항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합장 및 조합원 여러분 !

우리는 이 나라 축산업의 파수꾼이자 축협의 주인입니다.

농림부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측근들의 무지와 오만에 맞서 정정당당히 우리의 생업인 이 나라 축산업을 지켜 나갑시다. !

감사합니다.

1999. 4. 3.

협동조합 통합저지를 위한 전국축협조합장 투쟁위원회

※ 붙임 : 언론의 왜곡 보도내용 1 부. 끝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한다

농축협은 개혁에 동참하라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자연농업협회의 입장

한국농업발전에는 있어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농민의 영농생활과 사회지위 향상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하지만 그간 협동조합은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협동조합의 가사원발표와 인련의 개혁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끄러움과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국민과 언론의 직책을 견히히 받아들여 협동조합 개혁에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농·축협중앙회가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이후 한국경제의 반성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지난, 협동조합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면한 농업위기를 타개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할 협동조합이 본분을 망각한채 사리사욕에 치우쳐 개혁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에 불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농축협 개혁작업이 농업인의 입장에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농·축협 중앙회는 주인인 농업인의 뜻을 지시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열세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생산자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 취약한 유통·판매사업을 더욱 보강하고 상호부조 성격의 상호금융과 지도, 교육, 농성지원활동을 농업인 본위로 개편해야 한다.
3.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을 지시해 현재의 농업체제를 지속생산이 가능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4. 고령인 소외계층 소규모가족농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5. 인진조합은 정부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하여 농업인이 믿고 의지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일부 협동조합 조합장들과 임직원들이 협동조합의 통합이 마치 반농업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현장 농업인의 여론과는 전혀다른 반개혁적 형태로서 즉시 중단해야 하며 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게 해야 한다.
7. 이제, 위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하루 빨리 모든 농업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8. '농민단체' 등 축산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반그릇 지키기에 눈이 먼이 있는 일부 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조직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농민의 조직으로 협동조합이 개혁될 수 있도록 농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강력히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999. 4. 3

(사단법인) 한국자연농업협회 회장 조한규

성명서

- 김대중 대통령의 협동조합 개혁의지를 환영하며 -

김대중 대통령이 4월3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협동조합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협동조합 개혁 없이는 농업의 안정이나 국제경쟁력 향상은 어렵다는 시대적 상황을 맞아 협동조합의 개혁은 필연적 과제이며 이를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농정개혁의 의지로 보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농업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협동조합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물론 협동조합 개혁이 말로 농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도 나아가 나라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해 중앙회 통폐합 등 큰 틀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단체와 일치하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될 내용이 많으므로 앞으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농민의사를 수렴하여 개혁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과 농민단체의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여 역사적인 협동조합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단체는 협동조합 개혁을 적극 주도하면서 농민의 조합으로 거듭나는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강한 개혁의지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바람직한 개혁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정부는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1999. 4. 3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화 521-7181, 팩스 584-5144)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업농중앙연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포도회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농협과 축협이 정부의 개혁방침에 동참하여 진정한 농업인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들을 촉구하는 바이다.

- 농·축협은 조합원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 농·축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 농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생산·유통·가공분야에 대한 대농민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 농·축협은 방만한 경영과 실익없는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경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고 대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 농·축협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서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1999년 4월 6일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일동

- 우리의 견해 -

1. 정부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진정한 생산자조직이 되게끔 하루속히 통합을 실시해야 한다.
2. 농·축협 등 임직원들과 조합장들은 국민과 농업인의 진정한 여망이 무엇이 알아 차려서 자성하는 자세로 기능권 보호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3. 협동조합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 독립체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전문화시대에 걸맞게 **별종별 전문조합**의 육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9. 4. 6

순천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생 및 총동분회 일동
(총 동분회장 서훤일, 제7기 대표 나상준 외)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과거 50년동안 협동조합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농·축업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생산자단체였다.

그러나 농민을 대변하고 있는 조직으로 믿고 있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근 삼척진 비리들이 마스크를 통해 속속 밝혀지면서 그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방만한 조직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과대공용경영에서 선진화된 슬림경영의 필요성이 강력 대두되는 시기에 분명하다.

협동조합 관계인은 대오각성하여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시디적인 사명임을 직시하고 농민위에 군림하던 자세에서 진정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정부의 개혁작업에 적극 갈채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설정하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 농·축협은 회원 조합외의 다른 농업인이나 민간단체와 성생이 되는 사업에 차별없이 확대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압차고 내실있는 책임경영과 농업인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닌 진정 농민을 위해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야말로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하며, 아울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하나) 농·축협은 진정으로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다 슬림화된
정예의 조직으로 기구 개편이 따라야 한다.

□ 도시국민의 대다수는 농촌을 근분이자 때가되면 회귀할 수 있는
포근한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평소에는 그지 향수를 달래면서
나름대로 바쁜 삶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쪼록 협동조합 관계자는 물론, 정책을 수반하는 관계인 모두
가 협심하여 여의치 못한 여건 타령은 접어두고 이제는 진정 농·
축업민들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삶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기좋은 농촌 가꾸기에 우리 모두 새롭게 청진
토록 합시다.

1999. 4.

사단법인 대한곡물협회 회원 일동

농·축협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인 농민에 의한 자발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먼저 중앙회가 생기고 중앙회의 권장에 의하여 단위조합이 조직된 태생적인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일선조합에 비해 중앙회가 너무 비대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제 농·축·인삼·임협을 통폐합함으로써 중앙회조직을 슬림화하고 일선단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자 농민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여야겠다는 정부의 협동조합개혁방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비대한 중앙회 조직을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되 원예·축산·인삼·산림사업 기능은 통합조직 안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 단순 신용사업 중심 조합에서 벗어나 유통·이용·가공·무역·생활문화를 망라하는 종합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 뒷받침을 위한 신용사업은 강화되어야 한다.

3. 단위조합을 광역·전문화하여 명실공히 조합원 농민을 위하는 경제단체로 육성되어야 한다.

4. 협동조합은 정부나 임직원의 조합이 아니다. 농민의 협동조합,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5. 협동조합 임직원은 기득권 수호차원을 벗어나 진정한 협동조합발전을 위해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1999. 4. 6.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합원일동

협동조합 개혁을 바라보는

경북농민들의 입장

우리 경북농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억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평소 조합의 주인인 우리들을 푸대접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에만 적극 나선 일부 직원들, 그리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모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일부의 악덕 조합장들이 모처럼 맞는 개혁의 호기를 적극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봉사할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이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명백하다. 이제 더 이상 개혁을 미룬다면 우리 농업의 발전은 퇴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번에는야말로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개혁이 되기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협동조합 개혁은 철저하게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IMF 등 국내외 환경을 감안하여 생존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회원조합의 광역화·규모화, 전문경영인의 도입 등의 과감한 조치를 통해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되, 다음의 소박한 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음 -

1. 협동조합의 개혁문제는 그 주인인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각 조합들이 나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방만한 협동조합의 개혁이 없이는 결코 산재한 농업문제의 해결과 농업·농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의 개혁을 지지하는 바이다.

2. 이제까지 조합을 부실로 만든 데에 관한 책임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이 배포하는 각종 유인물 투서나 협동조합의 예금 인출 사건과 같이 흠집내기식의 언론보도는 협동조합의 주인인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농축협, 회원조합 통폐합은 단기간 내에 회원조합 간의 합의를 거쳐 완료해야 하며, 아울러 중앙회의 통폐합은 보다 강도있게 신속히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부실조합은 통폐합을 유도하며, 또한 우량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을 행하여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온갖 사업들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야만 한다.

4. 그리고, 21세기 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업종별 전문조합의 육성과 협동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조합장의 선출방식은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 끝으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오늘 사태에 대한 내부에서부터
의 진정한 반성의 자세에서 한발 나아가 개혁을 위한 일단의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의 위기를 개혁을 통해 하
루 빨리 타개하여, 농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우
리 농민들은 기대하는 바이다

1999. 4. 8.

협동조합 문제를 걱정하는 경북농민 일동
(대표 이태철 외 1,162명)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를 위한 범 죽산인 쫓기 대회

- ◆ 일시 : 1999년 4월 11일 오후 2시
- ◆ 장소 : 대전역광장
- ◆ 주최 : 협동조합 강제적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충.남북 지역본부

[사정행사] (14:00 ~ 15:00)

- 구호 노래, 울릉배우기
- 8박자 구호배우기, 과도타기 등

[본 대회] (15:00 ~ 16:00)

- 개회선언
- 등반의례
- 순극선열 및 순직 등반운동가에 대한 묵념
- 대회사 : 대전충남축협은영협의회 의장 남용근
- 구탄사 : 협동조합 강제적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충남지역본부장 명찬등
음성축협 조합장 이건용
아산축협 조합원 유인명
- 격려사 : 민주노총 지역본부 본부장 김세준
- 결의문 낭독 : 홍성남협 신운선

[행 장] (16:00 ~ 17:00)

[회상잔회] (17:00 ~)

결 의 문

우리 충청지역의 축산농민 및 축협임직원은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축산농민 다 죽이는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결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낄 수 없다.

협동조합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의 본질과 절차를 무시한 채 농림부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축협 강제통합은 능가부채문제 등 농정실패로 인한 농민불만 여론을 협동조합에 떠기는 고도의 정치적 음모임이 분명하며 농축산인을 위한 진정한 개혁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확신하고 농림부의 협동조합 강제통합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축산업의 전문 생산자 조직인 축협의 영속성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농림부는 농축산인의 의견수렴이 배제된 일방적인 단순 통합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협동조합 길들이기론 통한 협동조합 관재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헌법상 명시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위적 협동조합 흠집내기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축산업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만 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농정대책을 제시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 개혁이 정부 주도가 아닌 농축산인의 뜻과 의지대로 추진되도록 농축산인의 개혁자율권을 보장하라.
- 농축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개혁적 통합결정을 주도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축산인, 축협인의 역량을 총집결, 나라 축산업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 4. 11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를 위한
충청지역 축산인 쉼기대회 참가자 일동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범 축산인 쟁기대회

- ◆ 일시 : 1999년 4월 11일 오후 1시
- ◆ 장소 : 동대구역 앞
- ◆ 주최 : 협동조합 통합저지 경북투쟁위원회
 전국축협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 ◆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사전행사] (13:00 ~ 14:00)

- 구호, 노래, 울동배우기

[본 대회] (14:00 ~ 15:30)

- 개회선언
- 대구·경북축협조합장 입장
- 농민의례
 - ☞ 순국선열 및 순직 농민운동가에 대한 묵념
 - ☞ 농민가
- 내빈소개
- 대회사
- 규탄사
- 연대사
- 격려사
- 결의문

[행진] (15:30 ~ 16:30)

[해산집회] (16:30 ~ 17:00)

결 의 문

우리 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일동은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축산농민을 다
중이던 농림부의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 옹모와 대하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축산업의 전문 생산자 조직
인 축협의 영속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우리 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일동은 농축산인의 의견수렴이 배제된 농림부
의 일방적인 협동조합 통합 결정을 명백히 반대하며,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
안을 원점에서 재 논의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 갈등이기를 통한 협동조합 관계화 옹모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합법상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위적 협동조합 통
합 내기와 역분할이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축산업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
고 실현가능한 농정대책을 제시하라.
- 농축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개혁적 통합결정을 주도한 김성훈 농림부장
관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 우리 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일동은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와 축산업을 위해
협동조합 통합 결정이 철회 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축산인, 축협인의 역량을
총집결, 우리나라 축산업 사수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 4. 11.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범 축산인 쉼기대회 참가자 일동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 축산인 권기대회

- 일시 : 1999년 4월 11일 오후 2시
- 장소 : 광주역 광장
- 주관 :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광주전남본부
- 주최 :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 사전행사

- 길놀이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풍물패)
- 노래공연 및 노래배우기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노래패)

□ 본대회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대의사
- 대빈 및 참가조직소개
- 결의사
- 유절사
- 결의문 낭독

□ 행진

광주역 → 인대쇼핑 → 중앙로 → 중파 → 광주영일

□ 마무리집회

마무리인사

결 의 문

우리 1백만 축산인 모두는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축산농민을 다 죽이는 농림부의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강제 통합 결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의 본질과 절차를 무시한 채 농림부가 강행하고 있는 농축협 강제통합은 농가 부채 등 농정실패로 인한 농민불만 여론을 협동조합에 돌리기 위한 음모임에 분명하며 농축산인을 위한 진정한 개혁안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농림부의 협동조합 강제 통합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축산분야의 전문 생산자 조직인 축협의 영속성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농림부는 농·축산인의 의견 수렴이 배제된 일방적인 단순통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 길들이기를 통한 협동조합 관재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헌법상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위적 협동조합 흡집내기와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축산업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실현가능한 농정대책을 제시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 개혁이 정부 주도가 아닌 농축산인의 뜻과 의지대로 추진되도록 농축산인의 개혁 자율권을 보장하라.
- 농축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개혁적 통합결정을 주도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 축산인 모두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1백만 축산인의 역량을 총결집, 우리나라 축산업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 4. 11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를 위한
광주전남 축산인 쫓기대회 참가자 일동**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를 위한

범 축산인 쉼기대회

- 일시 : 1999년 4월 11일 오후1시
- 장소 : 마산역 광장
- 주최 : 협동조합 강제적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경남지역본부

사전 행사 (13:00~14:00)

- 구호, 노래, 울동배우기
- 길놀이, 풍물패공연

본 대회 (14:00~14:50)

- 개회선언
- 경남관내축협조합장 입장
- 농민의례
 - ☐순국선열 및 순직 농민운동가에 대한 묵념
 - ☐농민가
- 내빈소개
- 대 회 사
- 노래패공연
- 규 탈 사 : 하정호 조합원
- 격 려 사
- 각설이타령
- 결의문낭독

행 진 (14:50~16:50)

- 길 놀 이

해산집회 (16:50~17:30)

- 해 산 사

● 행진코스 ●

마산역 ⇒ 육호광장 ⇒ 로터리 ⇒ 상업은행

● 집회참가자 행동지침 ●

- ⊙ 대오를 무단이탈하여 시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 화염병, 쇠파이프, 돌등 시민의 불안을 야기할 물건을 휴대하지 않는다.
- ⊙ 음주, 육설, 고성방가 등을 하지 않는다.
- ⊙ 음식쓰레기 등을 집회장소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 전경등 공권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
- ⊙ 폭력적 행위는 절대 배척한다.
- ⊙ 진행 및 질서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행사를 평화적으로 진행한다.
- ⊙ 가축동원은 금지한다. (집회 불허요인)

● 대회구호 ●

- ⊙ 농가부채 못살겠다 농정실패 책임져라.
- ⊙ 축산농민 다죽이는 강제통합 반대한다
- ⊙ 합의없는 강제통합 축산농민 다죽는다
- ⊙ 축산농민 총단결로 강제통합 저지하자
- ⊙ 축산농민 총단결로 축산업을 사수하자
- ⊙ 강제통합 웬말이나 김성훈은 자폭하라
- ⊙ 농정실패 호도위한 협동조합 통합반대
- ⊙ 3.8 농정 쿠데타-축산업 다죽인다
- ⊙ 협동조합을 정부로 부터 해방시키자
- ⊙ 축산업 외면하는 농림부는 각성하라
- ⊙ 우리의 생명산업 축산업을 지키자
- ⊙ 관계조합 획책하는 농림부는 각성하라
- ⊙ 검증없는 강제통합 축산농민 다죽인다
- ⊙ 전형적인 탁상행정 협동조합 다죽인다

농림부는 농정의 최고기관답게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 여론 조작을 위한 "숨은 1인치 찾기식"의

농민단체 내세우기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농림부는 크고 작은 많은 농민단체가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지지성명과 의견을 발표했다고 밝히며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와 섀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러한 주장과 여론몰이는 시대적 흐름인 진정한 개혁을 도출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농민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술수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농림부안에 지지성명과 의견을 내었다고 거명되는 단체들중 핵심적인 상당수 단체들은 지난해 8월 통합반대를 농림부에 정식 건의한 단체들이다.

또, 거명된 단체들의 관계사들조차 「하고 싶어서 했나」 「위에서 결정된것」 등으로 농림부가 직간접으로 이를 중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농림부의 준속적 개혁안을 홍보하는 유인물의 발송을 농림부가 아닌 농민단체들에 맡긴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일반시민은 물론 농축산인들도 농축산분야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농림부의 "숨은 1인치 찾기식"으로 내세워진 단체의 목소리가 전체 농축산인의 진정한 여론을 대변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또 이러한 외압에 의한 농축산단체 끌어들이기와 줄세우기만으로는

- 작년 8-9월 전국적으로 있었던 20여차례의 통합반대 결의운동
- 두차례의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 (80% 통합반대)
- 대학교수 설문조사(65% 통합반대, 찬성 23%)과 지난해 10월의 통합반대 교수 서명
- 농림부 자문기구인 축산발전심의위원 선위의 통합반대('99. 3. 16)
- 4월2일의 '강제통합반대 쟁기대회'에 참석한 3만여 축산농민의 열기가 피석될 수 없음을 농림부에 경고한다.

그리고 정동성있고 양심있는 많은 농민단체들이 농림부의 출세우기에 뒤달리
시 않고 소신껏 농림부의 속속개혁안 진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동조
합이 농림부의 의도대로 전대로 강제 개조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이 기회
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시대적 어망에 따라 농민의 권익과 봉사단체로 거듭 나도록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선도해야할 농림부가 개혁의 본질과 실차를 무시한채, 여론조
사와 세몰이, 회박과 중용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인방 편향식
불아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이나라 농정을 이끌어 가야할 농림부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사정
을 촉구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농림부는 존속 협동조합 개혁안에 농민단체 끌어들이기와 내세우기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축산인과 축산단체들간의 알력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농정의 최고기관으로서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한 개혁 자세로 임하라
- 농림부는 인방적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한 세몰이와 선전전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상황에 봉착한 이나라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라
- 농림부는 국성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당부한 대화와 농민의견 반영"을
조속히 이행하여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안을 도출하라

끝으로 농림부는 이나라 농정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
하고 존속 개혁안의 빌어붙이기외 선전전으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
시 말고, 이나라 농촌과 농,축산업을 지키고 지원발전시켜야 ^{사명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_{하는}

1999. 4. 12

축협중앙회 노·농조합
협동조합 강제지 통합지지 비상투쟁위원회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가칭)와

농업인 협동조합법(가칭)안의 급조는 협동조합을 두 번 죽이고 있다

1.4월 13일 결성된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는 50년 만에 찾아온 협동조합개혁의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음모로써 즉각 해체되고 주동자는 역사앞에 속죄해야한다.

-한국농업의 희망과 전국민의 염원이 담긴 협동조합 개혁이 정부의 졸속한 개혁 추진과 농업계의 일부 명망가들의 음모로 인해 거꾸로 가고 있다.

-'범농업인 연대'는 4월 6일 농민단체협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으며, 논의주체와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4월 6일 회의의 결정 사항은 ① 한농연은 "독립사업부제와 신경분리 반대" ② 농단협은 "전농의 개혁 성신과 연합회 지향은 존중하지만, 현실적 방안으로써 농림부안 지지" ③ 전농은 "사업을 하지 않는 통합 중앙회, 연합회로의 개편, 신경분리, 농림부안 지지, 국민적인 개혁안 마련"등 각 단체의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결성전에 전농은 사전에 단 한차례의 준비모임도, 단 한줄의 제안 내용에 대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공청회와 입법안 제출시기와 일치된 것으로 보아 '사주'또는 '공모'가 개입되었음이 분명하다.

-주도자의 주장중 "신경분리가 통합반대 논리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함"이라는 대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연합회로의 개편과 신경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앙회가 사업을 함으로써 피할수 없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수익사업에 치우치는 신용사업제일주의를 회원조합 중심의 경제사업체제로 개혁하자는 것이며,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아무도 없다.

-또한 "전체 농민조합원의 뜻을 결집해 이러한 움직임에도 강력히 대응 할 것이다." 운운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작년 개혁논의가 진행된 이후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으며 올해 3월 8일 농림부안이 전격 발표된 이후 전농만이 유일하게 현장토론과 조직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범농업인 연대'의 급조는 정부안을 관철시키려는 반농민적 인사들의 반개혁적 행태이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협동조합 개혁"의 물결을 막고 진정한 개혁 주체들의 진지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 정신과 김대통령의 개혁의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2.[농업인 협동조합법(가칭)안]은 현상의 존치이며 위헌이다.

-협동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운다는 뜻이다. 정부가 굳이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의 '농업'과 '협동' 사이에 '인'자를 끼운 것은 농협으로의 흡수통합과 신용사업 비대화라는 개혁세력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발상이 저급하고 오늘의 협도조합개혁의 시대적 당위성과 국민적 요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촌극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

기 자 회 견

1999년 4월 14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02-521-7181 / 전승 02-584-5144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은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응, 한국농업
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 발족에 즈음하여

우리 70여 범농업인단체는 4월 13일 농업기술자회관에서 1백여명의 참여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대적 과제인 협동조합 개혁을 농민의 요구에 따라 개혁하기 위해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를 발족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5백만 농민의 의지를 모아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병자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관철하기 위해 나서는 일부의 반개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농·축·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하여 강력히 구조조정하고 현장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 회원조합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협동조합 개혁의 최우선적인 과제이자 5백만 농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정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 등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결집하여 농축협이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조합원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쟁점현안에 대한 참여단체의 공동입장을 수립하여 개혁안으로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종 공청회 개최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지역단위 조직활동을 통해 협동조합 개혁의 강력한 교두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21세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우리는 협동조합이 농민의 진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동조합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협

동조합 개혁에 대한 5백만 농민의 뜻과 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헤아려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농민조합원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개혁을 위하여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는 앞으로 농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적인 협동조합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 - 우리의 주장 - -

1. 기능이 중복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는 통합하여 회원조합 지원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2. 새로 태어날 통합중앙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앙회가 운영하던 경제사업을 현장의 일선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일선 조합의 자립을 보장해야 한다.
3. 협동조합 개혁은 품목별, 업종별로 전문화되도록 적극 육성, 지원되어야 한다.
4. 일선조합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은 퇴출되어야 하며, 농민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 위주로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
5. 이를 위해 일선조합은 적정 경영규모로 재편하되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장이 부실경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6.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30년간 육성한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자금은 21세기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999년 4월 14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연대」 상임대표 일동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 사업계획안

1. 설립 목적

- 시대적 과제인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
- 농민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으로 개혁 추진
-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동조합 개혁여론 형성

2. 활동 사업

-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촉구
- 가맹단체의 정리된 공동방안을 개혁안으로 제시
- 공청회 개최 등으로 농민의사 수렴
-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 지역조직과의 긴밀한 연대활동

3. 지역조직 활동

- 군단위로 개혁추진 연대기구 결성
- 군내의 주도적인 농민단체 제안으로 활동
- 지역에서의 국회반대로비를 차단하여 개혁 실현
- 중앙연대기구와의 긴밀한 연대활동

4. 회 의

가. 대표자 회의

- 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대표자 회의와 상임대표자 회의로 구분
- 공동대표자회의는 전체회의로, 상임대표자 회의는 일반적 사안처리

나. 실무자 회의

- 대표자 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둠
- 공동실무자 회의는 전체회의로, 상임실무자 회의는 일반적 사안처리시 개최

5. 기구 및 조직

- 고문(농업계원로를 추대)
- 공동대표(개혁에 동의 또는 입장을 표명한 단체 대표)
- 상임대표(연대활동을 추진할 주요 농민단체 대표)
- 자문위원(전문적 의견을 게시받을 전문가로 위촉)
- 간사단체(연대활동 업무를 주관할 단체)
- 간사(간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무담당)
※ 첨부한 기구 및 조직 구성표 참조

6. 활동방향

- 가맹단체 및 회원의 개혁의사를 적극 수렴
- 지역조직의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전국적 대응책 강구
-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 단체 참여의 문호개방

7. 활동기간

- 국회입법 등 제도적인 개혁이 완성되고
- 구체적인 개혁방안 완료로 필요성이 소멸될 때까지

8. 자료집 발간

- 개혁실현후 추진과정을 적나라하게 정리
- 연대기구 및 가맹단체의 활동을 백서로 발간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 결성선언문

한국 농업은 외부의 개방압력과 내부의 개방론에 밀려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IMF사태와 농가부채로 인해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날 농업과 농민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이면에는 생산자단체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하수인으로 관료화된 협동조합에 큰 책임이 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협동조합 개혁을 선언한다. 그동안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5백만 농민의 의지를 모아 진정 농민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방자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관철하기 위해 나서는 일부의 반개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그동안 협동조합을 좌지우지해온 임직원이 개혁의 포장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하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방만하게 유지되어온 4개의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여 강력히 구조조정하고, 현장 농민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 회원조합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조합 역시 경제사업위주로 사업을 재편함은 물론 적정 경영규모를 이룩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되어 가는 농업생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협동조합도 철저히 업종별,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나가야 한다. 이제 협동조합은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민조합원 스스로도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을 우리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기존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재정비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입장은 그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대다수 농민단체가 찬성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개혁안은 이러한 농민단체의 주장을 일정 정

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에 의해 무분별한 이상론이 제기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진 신경분리론이 제기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전체 농민조합원의 뜻을 결집해 이러한 움직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제 협동조합은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민조합원 스스로도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을 우리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농축협이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관찰시켜 나감은 물론 농민조합원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5백만 농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5백만 농민이 주인될 수 있는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의 출범을 힘차게 선언한다.

1999년 4월 13일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 출범식 참가자 일동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우리의 주장

- c1.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2. 협동조합은 임직원이 아닌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3. 기능이 중복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는 통합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새로 태어날 통합중앙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앙회가 운영하던 경제 사업을 현장의 일선조합에 대폭 이양하여 일선 조합의 자립을 보장해야 한다.
5. 일선조합은 농민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유통·가공 등 경제사업 위주로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
6.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과 귀족조합장은 퇴출되어야 한다.
7. 이를 위해 일선조합은 적정 경영규모로 재편하되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장이 부실경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8. 우리의 농축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30년간 육성한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자금은 21세기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9. 정부는 협동조합이 농민의 진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동조합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0. 국회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5백만 농민의 뜻과 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헤아려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11. 우리 농민대표 모두는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방자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서는 반개혁적 세력과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며, 상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1999년 4월 13일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

성명서

- 진정한 여론수렴을 외면하고 여론조작을 통해 개악안의 모양 갖추기에 급급한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안중운 기획관리실장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농림부는 축·농협의 강제통합이라는 최악의 졸속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협과 축산농민은 물론 전농·카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와 학계 및 노동계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여론을 왜곡시켜가며 막가파식 밀어부치기를 계속하고 있다.

토론자도 미리 공개를 안하며 비밀리에 형식적 공청회를 추진하고 친농림부 성향의 농민단체와 실체도 불분명한 단체명의를 끌어들이 앞세우는 등 참된 개혁을 외면하며 반개혁적 개악안에 대해 억지 합리화와 외양 갖추기에 급급한 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농업인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10일 농림부 안중운 기획관리실장은 광주광역시 축협에서 전남관내 조합장과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여 다시 한번 축산농민과 축협구성원들을 분노케 하였다.

● “축협이 제출한 개혁방안(연합회 체제 및 신·경분리안)에 대해서는 농협이 극력반대하기 때문(뒤로 나자빠진다)에 수용할 수 없다.”

농협의 반대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니 농림부가 농협의 대변자이며 농협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농림부가 수많은 반대여론을 일축하고 졸속개혁안인 통합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고 통합추진의 부당성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농축산농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에 대한 본질적 접근보다는 정치적인 의도와 이해관계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다.

● “대통령이 협동조합 개혁은 대화로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는 강력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추진하라는 것으로 중앙회 통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협동조합 개혁을 하라는 것인데 새천년을 준비하는 농업정책을 입안하면서 대통령의 말씀조차도 오만 방자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유아독존식 사고방식으로 모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대통령 지시를 항명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TV로 전 국민앞에 생중계된 국정개혁보고회장에서 대화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홍보전략 이었는지 아니면 안중운실장이 대통령말씀을 우습게 알고 항명한 것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중앙회 통합에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농협보다 질이 떨어져 통합후 도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개혁을 접근하는 방식과 수준이 얼마나 유치하고 저질인지를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기획관리실장 스스로가 수준이하라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논의에 대한 본질적 접근보다는 농림부 통합안의 부당성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을 반개혁세력 운운하며 기득권 유지와 조직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등 본질외적인 부분을 마치 본질인양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통합은 전 양축농민이 반대하는 사안으로 4월2일 여의도 범축산인 쉼기대회에 참가한 3만여 축산농민들의 외침을 애써 외면하고 단지 직원들의 밥그릇싸움으로 격하시키는 것으로도 부족해 협동조직간 직원들의 질을 논하며 단순 무식하게 비교하려는 안 좋은 기획관리실장은 그 직위가 분에 넘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축협직원들을 매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할 것임을 밝히며 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더불어 4월13일 급조되어 결성된 70여개의 실체도 불분명한 농민단체 명의의 가칭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는 일부 불분명한 정치세력에 의해 사주 또는 공모의 음모가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70여개가 넘는 농민단체가 있었을 것으로 상상이나 하겠는가?

실제로 농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단체들 먼저 농림부의 전공을 살려 무조건적 밀어부치기식 통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체도 없는 농민단체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내세우고 여론을 끊임없이 조작해 나가는 농림부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구성원들의 의사 결집없이 지도부 극소수의 전횡에 의해 바다 여론을 왜곡하며 간판만 이용해 먹고 권력에 빌붙어 사는 정치기생충들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4월9일 협동조합 개혁토론회에서 제안되어 전농을 비롯한 많은 순수 농민운동단체·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범 농민·노동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칭 「한국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의 4월23일 출범으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반 개혁세력들이 벼랑 끝에 몰린 조급함에 급조한 것임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으며 진정한 농민들의 바다여론은 정부의 반개혁적 통합안에 결코 동조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농림부의 모양깎추기 여론조작과 막가파식 밀어부치기에 결코 굴하지 않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지향하는 모든 개혁세력들과 연대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하며 이를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

1999. 4. 15

축 협 중 앙 회 노 동 조 합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성명서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을 왜곡하고 농민·농민단체를 분열시키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 개혁안은 농민적 관점을 철저히 외면하고 정부지배형 협동조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발상이다.

농림부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으로의 개혁을 바라는 농민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단순 조직통폐합과 공룡과 같은 거대통합중앙회 설립방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내 농·축·임·삼협 협동조합 개혁의 최대과제는 정부와 중앙회에 의한 협동조합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농민에게 이를 돌려주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조직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안은 이같은 개혁과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을 농림부의 사금고로 유지하려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안은 협동조합 경제사업을 정책사업이나 뒷받침하게 하는 등 또다시 농정 실패를 협동조합에 떠넘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졸속개혁이다.

그동안 농림부 고위관료와 중앙회 몇몇 임원진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지배해온 협동조합 중앙회 구조는 철저히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협동조합이 자주·자율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때이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일부 임원진은 협동조합의 개혁의 주체는 농민을 비롯한 전체국민이며, 스스로는 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농업·농민단체를 분열시키고 농림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농림부는 이번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농민들의 저항과 양심적 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각 국이 관리하는 산하 업체를 내세워 지지성명을 발표케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대표와 담당교수를 부추켜 지지성명까지 내도록 하는 등의 상식이하의 일들이 농림부를 통해 벌어져 왔다.

협동조합의 사업과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업체연합조직이 농림부 개혁방안을 지지케 하는 것은 과연 장관의 발상인가? 아니면 농림부 관료의 과잉충성에서 나온 것인가? 각종 농업관련 업체의 이익단체들이 어떻게 농민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복잡다단한 협동조합을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려는 성실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농림부는 몇몇 관변단체와 업체연합 조직 그리고 일방적인 단체명의 도용으로 급조한 연대모임을 통한 농민 및 농민단체 분열의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형식적 차원의 지역 순회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열린 공간에서 농민과 국민 대통합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김성훈장관은 4년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주장하던 신경분리 입장에서 철저한 반대입장으로 바뀐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김성훈 장관은 문민정부 당시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어업경쟁력강화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협동조합중앙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야 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으로 장관 취임이후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중앙회 신용사업의 반농민적 운영을 개혁하고 경제사업의 자립과 농민을 위한 연합체로의 전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농민들과 농민단체, 학자들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있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과거 문민정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입장은 달라도 농림부가 공공연히 나서서 이렇게 농민단체와 학계의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는 형태는 일찍이 없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 농림부는 농협과 축협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고,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개혁에 동참하라

농림부는 그동안 협동조합 인사의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고 농협중앙회의 집행간부, 축협중앙회의 부회장, 임협중앙회 부회장직을 마치 농림부 퇴직관료의 사후보장자리로 주물러왔다. 심지어는 개혁장관을 자처하며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해온 김성훈 장관 조차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직원 70명도 안되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상임감사직을 신설하면서까지 농림부 퇴직관료를 앉혔다.

협동조합의 위상을 농림부 퇴직관료의 사후보장처 정도로 격하시키며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온 농림부의 이같은 행위는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의 주체가 아닌 부실과 비리의 진원지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협동조합을 부실과 비리로 이끈 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농림부가 오히려 개혁의 칼자루를잡고 개혁주체인 농민위에서 군림하는 오늘의 적반하장의 형국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농림부가 하루빨리 행정권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반농민적이고 비민주적 협동조합 법개정과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참여를 통해 헌법에 기초하여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자주적 논의를 기반으로 협동조합개혁을 추동하며, 민주적인 협동조합 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청원입법 등 자주적인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는 등 범 국민적 협동조합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해 두는 바이다.

1999. 4. 16

전국농민회총연맹

(가칭)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전국최고농업경영인들의 견해

농·축협 등 우리 나라의 협동조합은 지난 5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한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실익 증대에 큰 기여를 했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농촌은 국제화·개방화로 인하여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WTO의 출범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농업은 냉엄한 국제 경쟁 하에서 설자리가 없는 것이 오늘의 농촌 실정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산업이 빠르게 개방되고 유통부문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농업·농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21세기 한국농업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협동조합을 포함한 우리 농업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의 거대한 중앙회와 영세한 일선조합으로는 더 이상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세계에 유례없는 머리가 네 개(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인 거대 공룡조직은 통합하되, 통합 중앙회는 군살을 빼고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농업인의 대표 기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 명 서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을 왜곡하고 농민·농민단체를 분열시키는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 개혁안은 농민적 관점을 철저히 외면하고 정부지배형 협동조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발상이다.

농림부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으로의 개혁을 바라는 농민을 비롯한 전체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단순 조직통합과 공룡과 같은 거대통합중앙회 설립방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내 농·축·임·삼협 협동조합 개혁의 최대과제는 정부와 중앙회에 의한 협동조합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농민에게 이를 돌려주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조직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 협동조합개혁안은 이같은 개혁과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을 농림부의 사금고로 유지하려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안은 협동조합 경제사업을 정책사업이나 뒷받침하게 하는 등 또다시 농정 실패를 협동조합에 떠넘기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졸속개혁이다.

그동안 농림부 고위관료와 중앙회 몇몇 임원진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지배해온 협동조합 중앙회 구조는 철저히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협동조합이 자주·자율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때이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일부 임원진은 협동조합의 개혁의 주체는 농민을 비롯한 전체국민이며, 스스로는 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농업·농민단체를 분열시키고 농림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농림부는 이번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농민들의 저항과 양심적 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각 국이 관리하는 산하 업체를 내세워 지지성명을 발표케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대표와 담당교수를 부추켜 지지성명까지 내도록 하는 등의 상식이하의 일들이 농림부를 통해 벌어져 왔다.

협동조합의 사업과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업체연합조직이 농림부 개혁방안을 지지케 하는 것은 과연 장관의 발상인가? 아니면 농림부 관료의 과잉충성에서 나온 것인가? 각종 농업관련 업체의 이익단체들이 어떻게 농민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복잡다단한 협동조합을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려는 성실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농림부는 몇몇 관변단체와 업체연합 조직 그리고 일방적인 단체명의 도용으로 급조한 연대모임을 통한 농민 및 농민단체 분열의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형식적 차원의 지역 순회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열린 공간에서 농민과 국민 대통합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김성훈장관은 4년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주장하던 신경분리 입장에서 철저한 반대입장으로 바뀐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김성훈 장관은 문민정부 당시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어업경쟁력강화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협동조합중앙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야 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으로 장관 취임 이후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중앙회 신용사업의 반농민적 운영을 개혁하고 경제사업의 자립과 농민을 위한 연합체로의 전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농민들과 농민단체, 학자들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있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과거 문민정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입장은 달라도 농림부가 공공연히 나서서 이렇게 농민단체와 학계의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우는 형태는 일찍이 없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 농림부는 농협과 축협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고,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개혁에 동참하라

농림부는 그동안 협동조합 인사의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고 농협중앙회의 집행간부, 축협중앙회의 부회장, 임협중앙회 부회장직을 마치 농림부 퇴직관료의 사후보장자리로 주물러왔다. 심지어는 개혁장관을 자처하며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해온 김성훈 장관 조차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직원 70명도 안되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상임감사직을 신설하면서까지 농림부 퇴직관료를 앉혔다.

협동조합의 위상을 농림부 퇴직관료의 사후보장처 정도로 격하시키며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온 농림부의 이같은 행위는 농림부가 협동조합 개혁의 주체가 아닌 부실과 비리의 진원지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협동조합을 부실과 비리로 이끈 것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농어촌 지역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일일 생활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선조합도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선조합은 금융사업보다는 농업인을 위한 농산물판매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한편, 일선조합의 통합을 통하여 연간 조합당 평균 2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제 협동조합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요 과제로서 전국 20개 농과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교육과정의 선도 농업인들은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방향을 지지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 우리의 입장 —

1. 정부는 농·축협 등 협동조합이 진정한 농업인의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정부가 발표한 개혁내용을 실천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농·축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들과 조합장은 농업인들과 국민의 진정한 여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성하는 자세로 조직 이기주의와 기득권 보호논리에서 떠나야 한다.
3. 21세기 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업종별 전문조합은 육성되어야 한다.
4. 협동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조합장의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선택해야 한다.

5. 전국의 500만 농업인은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이 진정한 농업인의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여 개혁과정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1999년 4월 16일

전국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협의회 학생회

1. 강원대 농촌사회교육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학생회 김세기 외 48명
2. 강릉대 농어업인교육원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학생회 최승희 외 8명
3.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조정호 외 89명
4. 경상대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하미자 외 30명
5. 진주산업대 최고영농자교육원 최고영농자과정 학생회 강권수 외 24명
6. 순천대 영농교육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김종태 외 86명
7. 공주대 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신웅식 외 58명
8. 충북대 농대 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 학생회 김성용 외 26명
9. 전북대 농업개발대학원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표우철 외 21명
10. 안동대 농업개발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손덕수 외 34명
11. 제주대 농대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학생회 양원영 외 130명

(이상 제2차 발표 전국 총 565명, 가나다순)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정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죽산회관 4층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농민 개혁열망 무시하는 축협 임직원의 중상모략과 명예회손에 분노한다.

- UR투쟁, 농정개혁운동을 선도해온 한농연, 농단협 소속단체 등이 정치기생충인가? -
- 근거없는 억지주장으로 농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축협노조는 즉각 사과하라! -
- 통합저지를 위한 신경분리 주장 철회하고, 반개혁 각태를 즉각 중단하라! -

축협중앙회 노조와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는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70여개의 농민단체를 중상모략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중앙회의 통합은 그동안 농민조합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었으며, 중앙회 통합에 대해 농민조합원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 연대(이하 협개연)는 이러한 조합원의 의견들 수렴하여, 이번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모여 결성한 것이다.

협개연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지난 UR협상 당시부터 농민조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농정 개혁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순수농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단체의 농업관련 단체가 하나된 목소리로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고, 하나된 뜻을 모으기 위해 결성한 협개연에 대해 "반개혁세력들이 벼랑 끝에 몰린 조합원이 급조한 것",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에 의해 사주 또는 공모의 음모가 있었음" 등의 허무맹랑한 중상모략을 일삼는 행위는 농민조합원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다.

협개연이 농림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농민단체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온 개혁과제를 농림부가 수용하였기에 선택적인 동의를 보내는 것이며, 우리의 의사와 다른 사안을 수정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축협 임직원이 농민조합원에게 반개혁세력, 정치기생충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조합원의 뜻을 사창하는 것을 넘어 이제 조합원에게 대한 도전까지 감행하는가?

그동안 각종 부조리를 저질러 사회적 돌의를 일으키고, 부실한 경영으로 그 존폐의 위기까지 몰려온 축협 임직원이 개혁의 주체일 수 있는가?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빙자하는 오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축산능가의 생존권이 달린 IIR협상반대 투쟁에서 조차 한 발짝 물러나 있던 축협이 이제와서 축산능가를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어줄 농민조합원은 없다. 더욱이 중앙회통합을 전제로 자체개혁안을 제시하면서도 뒤에서는 갖가지 악의적인 선전에 열음된다면 농민에게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축협임직원의 이러한 반개혁적 행태는 농민조합원의 분명한 의사에 놀란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며, 한편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 축협임직원은 농민조합원의 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축협노조가 고용안정을 통합과정에서 고용안정 등을 요구한다면 농민조합원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조합원을 위해 비효율적인 기구를 통합하는데 반발한다면 이는 조직이기주의이며, 기득권 고수를 위한 반개혁 활동이 아닐 수 없다. 농민조합원은 축협직원들이 이러한 행동에 나선다면 통합이후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축협노조가 일부 한자들의 주장을 수용해 신경분리 등을 주장하고, 일관된 입장도 없이 무조건적인 정부반대에 나서고 있는 일부 단체와 연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농민조합원의 강력한 개혁요구를 거부하고 축협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조합원 의사를 대변하고자 하는 협개연은 신경분리 주장으로 중앙회 통합을 막기 위한 축협측의 비열한 의도를 백일하에 밝히면서, 개혁에 기스르기 위해 순수농민단체에 대한 음해와 중상모략도 서슴치 않는 축협노조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9년 4월 16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

공동대표 :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업을생각하는변호사모

■ 성명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黃昌柱) / 문의 (02)3401-6543

□ 축협중앙회 노조의 반개혁 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한다 ! □

- 근거없는 중상모략에 대해 축협중앙회 노조는 5백만 농민앞에 사죄하라 -

우리는 4월 16일 축협중앙회 노조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특히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앞장서고자 협개연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대표들을 매도하는 등 황당무계한 인신공로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날 성명을 통해 축협중앙회 노조는 대부분의 농민단체와 법농업계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협개연의 순수성을 깃잡고, 개혁을 이끌고 있는 농민단체장들을 '정치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 등 천인공로할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이것이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요구하는 5백만 농민들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자 당황한 축협직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반개혁자태가 지속될수록 오히려 개혁을 원하는 농민조합원들로부터 더욱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지난 UR때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의 생존이 벼랑에 몰렸을 때 데모한번 안하고, IMF로 축산농가들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도 호의호식하던 축협의 직원들이 순식간에 37억 원의 투쟁기금을 모아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촌로들을 동원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연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값비싼 신문광고를 지속한 것에 대해 일선의 축산농가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축협노조의 반개혁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광범위한 홍보 및 대응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감은 물론, 자신들의 반개혁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순수농민단체에 대한 상식이하의 중상모략을 자행한 축협노조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규탄하고 앞으로 이러한 반개혁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아울러 축협노조가 성명에서 밝힌 바 있는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가칭)의 경우 현장 농업인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농민단체와 협동조합 개혁에 반대하는 축협중앙회 노조가 가입해 있는 노동단체 등이 결합하여 결성되는 만큼 이 역시 절대로 일선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 해 두는 바이다.

1999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우 리 의 입 장

수 신: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 위원회

3.15일자로 발표한 축협중앙회노조의 성명서를 보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축협에 경고한다.

1. 축협노조의 모략증상의 파행적 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동시에 공개사과 하라.
2. 축협노조는 집단 이기주의적 병폐를 버리고 미래1,000년을 보는 안목으로 小를 버리고 大를 실리로 하는 현명한 축협이기를 바라면서 시대적 과제인 개혁에 동참하라.
3. 축협은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민연대 (협개연)안에 적극 협조하여 농업인으로서의 뜻을 같이하여 나서기 바란다.

1999. 4 . 17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정 장 섭
(전화 02-794-7270 팩스 02-792-6972)

성명서

- 축협의 발악적 비난행위에 경고한다. -

축협중앙회 노조가 협동조합개혁에 반발하면서 악의적 표현으로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협동조합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반대와 거부만을 내세우면서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대해 어안이 병병해진다. 오늘의 협동조합문제가 개혁의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기까지는 역시 축협 임직원의 기온적 자세와 태도가 원인이 되었음을 스스로 입증시키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부터 줄곧 중앙회 통합반대만을 부르짖다가 지난 3월말에 축협 스스로 중앙회 통합안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도 뒤에서는 반대를 위한 음모와 집회로 통합을 반대하다가 이제는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개혁을 위해 결성된 협개연을 비방중상하고 권력에 빌붙어 사는 정치기생충 운운 등 모욕한다면 스스로 농민의 조직원임을 거부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만약 축협 임직원이 농민조합의 조직원이라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농민의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그 개혁의 방안은 비대한 중앙회를 통합하여 회원조합 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전문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통합반대의 주된 명분이 축산업의 전문화를 내세우면서도 기본축종인 한우는 조합결성조차 할 수 없도록 운영해 왔고, 업종연합회를 결성하는 법안이 제시되자마자 연합회 결성을 저지하는 짓을 저질러왔던 축협이 이제 와서 전문화를 내세워 반대할 수 있는가? 차라리 축협 임직원이 발벗고 나서서 사활을 건 활동으로 마사회 농림부원운동 등 양축농가 숙원과제 해결에 열을 올렸더라면 37억원의 모금없이도 축산농민의 박수갈채 속에 지지성의 명분이라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가급적 축산단체로서 표현을 삼가하려 했지만 마치 축협 임직원의 목소리가 전부인양 설치다가 이제는 협동조합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안하무인적 행위에 대해 오히려 측은함을 느낀다. 차라리 축산인의 동정을 구하고자 한다면 개혁에는 순응하되 어떻게 하면 통합시 축산업의 전문성과 위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제안이라도 하였다면 통합 이후 축협 임직원의 고용보장문제에 힘이라도 실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축협 임직원의 명예훼손 표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국 소 사육 농민에게 일일이 통지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1999. 4. 17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전화 588-7055 팩스 584-1544)

축협노조의 '총파업'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축협노조는 축산조합원을 볼모로 한 만개력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4월 18일 전국축협단일노조 주최로 개최된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를 위한 축산농민·축협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김의열 전국축협단일노조 위원장이 '농축협중앙회가 통합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는 축협직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중앙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반대는 물론, 이제 자신들의 주인인 축산농가를 상대로 한 협박마저 서슴치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축협의 직원인 자신들의 목소리가 일선 축산농가들의 주장인 것처럼 행세하더니 이제는 아예 주인인 축산농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만부득,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축협노조는 지금 이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파업선언'을 포함한 협동조합 직원의 신분을 망각한 언행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축산농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시대적 과제인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과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협동조합 직원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축산조합원의 생명을 볼모삼아 협박이나 가하는 것이 국민여론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력한 투쟁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며 자기착각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한다.

만일 축협노조가 이처럼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실천에 옮길 경우 5백만 농축산인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임은 물론, 지속적인 축산물수입개방과 IMF사태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들의 현실 속에서 이를 정당한 생존권 행사로 보고 동조할 국민 역시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축협직원들의 파업은 축산농민은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초래될 모든 불이익과 결과에 대해서는 파업을 주도한 축협노조와 축협직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며 협개연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축협노조의 시대착오적인 '파업' 발언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를 위해 전국 축산농가의 생존을 불모삼는 반개혁적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4월 19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

강릉대농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성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업을걱정하는변호사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안동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지연농업배연구회 지연농업복숭이회 지연농업사과연구회 지연농업양제연구회 지연농업양돈연구회 지연농업연구회 지연농업연구회 지연농업연구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입농중양연합회 정농회 제주대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학생회 진주산업대최고농어업자과정학생회 중국대진군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업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곡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류수출협회 한국중자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농사단민족동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가나다순임. 1차 동의회한 단체이고, 추가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협개연으로 연락바라며, 2단계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국민연대(가칭)」로 확대 개편 예정임)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지협회 회장 정상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584-5144)

형식에 치우친 협동조합 자체 구조조정을 비판한다

- 하위직·기능직 위주의 구조조정, 대농민서비스 부문 감원이 개혁인가? -

우리는 최근 농축협 등 협동조합이 전개하고 있는 자체 구조개혁과 관련 일선 농민들의 각종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해야 할 지도적 위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신용사업 위주의 조합운영에서 벗어나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과거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온 농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인력운영의 방침에 있어 비대해진 신용사업 담당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정리하고 대농민 서비스 담당직은 오히려 대폭 보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 농축협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하위직과 기능직 위주의 구조조정에 집중되고 있으며 진정으로 농민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대농민서비스 분야를 보강하겠다는 청사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정직 고비용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인 조합의 고위직 대한 구조조정은 제대로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일선 농민조합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개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그야말로 실적채우기식의 전시효과만을 노린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농민들이 바라는 개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농축협중앙회가 제시한 자체 구조조정의 목표에서도 '농업인 지원기능을 확충하겠다'는 실천목표이자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농축협중앙회는 지금 당장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체 구조조정이 과연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농림부 역시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장에서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협개연은 앞으로 전체 참여단체의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농축협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며 만일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반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홍보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4월 22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시험회 한국경주마생산지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증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가나다순임. 1차 동의한 단체이고, 추가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협개연으로 연락바라며, 2단계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국민연대(가칭)」로 확대 개편 예정임)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성명서]

노동자들 다 죽이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 19일 '구조조정 반대,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 개혁'을 내걸고 위력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러한 파업열기는 과기노조, 한국통신 노조 등 공공연맹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현업에 복귀하지 않는 8천여 명의 지하철 노동자들을 모조리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언론과 관변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시민의 발을 불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가?

국민의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과연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야기한 우리 사회의 모순이 얼마나 척결되었는지를 보자. 개혁 대상 1호였던 재벌은 더욱 비대해졌으며 상위 20%의 소득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늘어났다. 비리 정치인들은 다시 활개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전시효과 위주의 실업대책에 내맞겨진 채 최악의 생활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가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의 결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정리해고'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실제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국의 총체적 모순을 야기시킨 재벌과 보수 정치권이다. 지난 수년간 오로지 고통을 전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소박한 생존권 요구는 정당하다. 우리는 구태의연한 공권력 투입이나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언론 조장을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지지 서명 교수 명단>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이수(상지대) 강정구(동국대) 고철환(서울대) 고흥석(전북대) 공제욱(상지대) 광노현(방송대) 권인호(대전대) 김동춘(성공회대) 김상곤(한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석준(부산대) 김성구(한신대) 김세균(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영규(인하대) 김용익(서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걸(서울대) 김인재(상지대) 김재훈(대구대) 김정현(공주대) 김진균(서울대) 남구현(한신대) 남기곤(대전산업대) 노중기(한신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관석(목포대) 박광서(전남대) 박노영(충남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영근(중앙대) 박정원(상지대) 박진도(충남대) 백도명(서울대) 서관모(충북대) 서창호(목포대) 손호철(서강대) 신광철(한신대) 신병현(홍익대) 신인령(이화여대) 안병욱(카톨릭대) 양우진(한신대) 오세철(연세대) 오창호(한신대) 유초하(충북대) 윤수중(전남대) 이상영(충북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수(광주대) 이창호(경상대) 이철기(동국대) 이해영(한신대) 임영일(경남대) 장상환(경상대) 성건화(한신대) 정근식(전남대) 정대화(상지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영태(인하대) 정원오(성공회대) 정진상(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석곤(상지대) 조영건(경남대) 조영탁(대전산업대) 조태영(한신대) 조형제(울산대) 조홍식(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주동황(광운대) 지수걸(공주대) 채웅석(카톨릭대) 최갑수(서울대) 하중문(한신대) 허석렬(충북대) 홍덕률(대구대) 황상익(서울대) 황한식(부산대) (가나다 순. 36개 대학 총 83명)

1999. 4. 23.

노동자 종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교수 일동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범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협동조합 반개혁 세력은 중상모략과 개혁 호도쯤 죽각 중단하라 !

- 협동조합 부패의 공범자인 축협중앙회 노조는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된 협동조합 개혁안은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중앙회 통합 등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이 관철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이 입법예고된 후 최근 농축협중앙회 통합 등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중상모략과 개혁의 본질에 대한 호도가 극에 달하고 있어 조속한 협동조합 개혁을 열망하는 5백만 농축산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회 개혁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만을 통합하고 중앙회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는 것인데도 일선의 농협과 축협도 하루아침에 모두 통합하는 것이라는 거짓선전이 양 축농가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또한 202개의 지역축협을 100개로 통합한다는 것도 당초 축협중앙회가 제출한 자체개혁안이었으며,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춰 개혁할 것을 요청하여 농림부가 제출한 최종안에는 회원조합 통합은 축산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선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합병안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축산농가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더구나 농축협중앙회 통합 등 이번 개혁이 마치 축산을 말살하는 것인양 왜곡선전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도록 축협중앙회 노조와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축협조합장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중상모략하는데 축협중앙회 노조가 앞장서고 있는데 주목하며, 축협중앙회 노조가 이러한 반개혁 작태를 죽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축산농가들의 진정한 개혁여론을 수렴하는데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론 노동조합이 그동안 사회개혁과 일하는 사람의 권익신장을 위해 피땀흘려 싸아온린 성과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최근 협동조합관련 노조가 개혁에 대해 완가완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말이 많다.

수입개방과 IMF로 농민들이 파산할 때도 모른채하고, 부패한 집행부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며 잘못된 사업에 대해 반론 한마디 제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농민조합원' 운운하며 개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축협중앙회 노조를 비롯한 협동조합중앙회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이 순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협동조합 부패에 공범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데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이 최우선적으로 진제되어야 하며, 농민조합원의 오랜 불신을 씻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스스로의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협동조합 노조가 개혁의 본질에 대한 호도와 농민조합원의 열망을 받들어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농민단체들에 대한 중상모략을 즉각 중단할 것을 5백만 농축산인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하며, 이러한 반개혁적 작태를 5백만 농민앞에 폭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4월 23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닛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시험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요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생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영민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원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곡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홍사민민족당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가나다순임, 1차 동의한 단체이고, 추가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협개연으로 연락바라며, 2단계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국민연대(가칭)」로 확대 개편 예정임)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협계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증암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이상론에 치우친 학계 일부의 협동조합 개혁론을 경계한다 !

- 검증되지 않은 외국제도 이식보다 농민이 원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최근 「바른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모임」(회장 : 김동희 전 단국대학교수, 회원 : 강희구 전 서울경기양계축협장, 김영철 건국대학교수, 김정주 건국대학교수, 박종수 충남대학교수, 서기원 순천향대학교수, 서중일 상지대학교수, 우영균 상지대학교수, 이상호 신흥중앙회 명예회장) 등 학계 일부에서 협동조합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특히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중 일부는 98년도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세가지 개혁안 중 하나를 제시하였으며, 3월 8일 농림부안이 발표된 후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충분히 자기의견을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부입법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또다시 의견을 제시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양식과 책임있는 학자로서 취할 자세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난일 작년도 협계위에서 이 학자들이 좀더 노력하여 단일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개혁을 하자는 때는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농민단체와 농민조합원들이 이미 합의한 개혁의 내용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논란을 확대시키려는 것은 시대적 과제인 협동조합 개혁에 임하는 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며,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법인설립에 따른 비용부담은 물론 각 연합회와 회원조합이 출자해야 하는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독립조직으로 할 경우 중앙회와 연합회에 농정·교육·홍보·조사·총무부 등 각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따로 둘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조직확대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단지 농정판동의 전담체로서의 기능만을 위해 또다른 상위기구로서 중앙회를 두는 것은 옥상옥기구로서 이 개혁의 방향과 역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품목별 전국연합회 설립주장에 따를 경우 유사·중복기능 수행부서의 통폐합은 고사하고 신용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순리화는커녕 오히려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독립된 은행이 과연 각 품목별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보장 역시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다. 또한 각 품목별연합회가 독자적으로 인건비 조달이 어려워 중앙회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조합과 경쟁이 심화되는 악순환은 재현될 경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셋째, 농업협동조합은행을 별도로 설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농축산인들이 피암홀려 키워온 협동조합 신용사업을 일반은행화하자는 주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며 일선의 농민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민조합원의 돈주머니인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농민보다 일반금융거래자를 위해 개혁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연합회가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서로간에 별도법인화되어 있어 추가적인 대출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은행독립시에 과연 적시에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냐는 데에 대해서도 일선 농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용·경제사업의 완전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성되어야 할 협동조합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제시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연합회의 법인화 및 상위기구로서 중앙회를 두자는 주장 역시 '육상육으로서 불필요한 기능을 대폭 축소하자는 이번 개혁의 방향에 완전히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상론에 치우친 나머지 한국적 협동조합을 모색하기 보다는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제도의 이식에 치중한 비현실적 대안'이라고 단정한다.

우리는 일부 학계인사들이 농민조합원과 농민단체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미 개혁의 큰 방향이 확정된 협동조합 개혁연안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농민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다.

1999년 4월 23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염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묵송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모육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발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가나다순임, 1차 동의한 단체이고, 추가가임을 희망하는 단체는 협개연으로 연락바라며, 2단계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국민연대(가칭)」로 확대 개편 예정임)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은 「협동조합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최근 축협이 전개하고 있는 「강제적 협동조합통합 반대 100만인 서명」을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한 비열한 반개혁 작태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축협중앙회가 자체개혁안으로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제시해 놓고도 통합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는 비열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협개연이 입수한 축협의 서명용지에는 “농축산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 졸속으로 발표한 협동조합 통합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라는 일방적인 문구 하나만 적혀 있으며 그 밑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각종 공청회 개최 등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 축협 자신도 분명히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졸속’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되물고자 한다.

또한 협동조합중앙회를 왜 통합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한 농민들의 진정한 의견이 무엇인지 한마디 부연설명도 없이 「통합반대」로 단순 왜곡시켜 졸속으로 서명을 벌이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는 오히려 '농축협중앙회를 통합하고 농민들을 위한 회원조합을 육성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당황한 축협이 '졸속'으로 반개혁 주장을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중거리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우리는 축협이 5백만 농민과 축산농가의 간절한 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집단이 기주의단을 관철시키려는 '강제적 협동조합 통합 반대 100만인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중단요구를 무시한채 서명작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협개연 가입 단체를 총동원하여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의 이름으로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축협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주무 감독부처인 농림부는 이처럼 중대한 반개혁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미흡한 측면이 있을 시 농림부의 책임을 묻는 등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4월 28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은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굴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농업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영인중양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육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유류수출입협회 한국중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홍사단만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가나다순임. 추가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협개연으로 연락바라며, 2단계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국민연대(가칭)」로 확대 개편 예정임)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결성선언문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생산, 구매, 판매과정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경제사업 조직이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며 생활과 복리후생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민조합원들의 정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편익과 도농간 협력을 증진하는 등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조, 자율적인 민간 운동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의 협동조합은 일제의 식민지 농민지배 도구로 만들어진 이후 미군정, 군사정권, 문민정부를 거치는 동안 돈장사 중심의 수익사업과 정부통제형 하향식 운영체계에서 한치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어쩌다가 적부대행사업과 수수료벌기나 하며 주인인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반협동조합적 관제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급기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각 중앙회의 부정비리, 뇌물, 배임, 인사비리 등 협동조합의 총체적 부패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충격과 농업내의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실제 현재까지 각 중앙회 임직원 190여명이 구속되었고 수백명이 아직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배중인 미증유의 부패스캔들로 치달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림부는 감사화 수사를 면제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면서 거꾸로 개혁의 기수를 자처하며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협동조합의 경영부실과 부정비리는 근본적으로 척결되어야 한다. 농업농민생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철저한 개혁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며 농민의 조합, 국민들 위해 봉사하는 협동조합으로 하루빨리 거듭나야 한다. 50년만에 찾아온 개혁의 기회가 또다시 무산되면 농업금융의 대혼란과 농정마비사태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개혁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정부와 중앙회 임직원들이 나서서 개혁의 의를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농민, 소비자, 양심적인 직원과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인 개혁운동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개혁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농업관련 법제도의 혁신을 도모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실천과 입법청원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꺼져가고 있는 농업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연대에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우리의 주장과 결의

우리의 주장

1. 지금 우리는 YS 정권 하에 실패로 끝난 협동조합 개혁이 또다시 왜곡되고 후퇴할 것이나, 아니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합원의 협동조합의 건설로 나아갈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에 모든 농민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언론, 일선 농민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호소한다.
1.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 각 협동조합 중앙회, 정치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대로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이 단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한다.
1. 현행 각종 협동조합 중앙회는 하나로 통합하되 사업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운동체로 새로 태어나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하여 경제사업은 전국연합회체제로 그리고 신용사업은 별도의 법인으로 각각 독립하라.
1. 농림부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벗어난 "농업인협동조합법(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대'와 함께 개혁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1. 농림부와 각 중앙회는 개혁의 대상이므로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농민, 소비자 주체의 국민적 개혁운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라.
1. 정치권은 '국민연대'의 개혁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적인 개혁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라.

우리의 결의

1. '국민연대'는 오욕의 협동조합 역사를 청산하며 농업회생, 농민소득실현, 소비자 편익증진은 물론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자주·자립·민주협동조합 건설의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 이를 위해 '국민연대'는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염원하는 농민, 소비자, 시민단체, 사회운동단체, 학자, 법률가, 관련 전문가 등 모든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국민연대'는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입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 국민청원 등의 방법으로 개혁입법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국민연대'는 한국협동조합의 왜곡된 문제점을 홍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1000인과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공청회, 농촌순회교육, 강연을 개최하고, 국제세미나개최 등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국민연대'는 21세기 한국농업의 발전과 통일을 대비하는 "협동조합개혁장전"을 수립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와 연구를 개방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성명서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1993.3 농림부에 의해 전격 발표된 협동조합개혁방안이 우여곡절 끝에 1993.1.19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은 채 줄속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일만이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무소신과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농림부장관이하 관료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아태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현사태를 야기한 농림부장관이하 농림부 관료들에게 있다는 것을 농민과 국민에게 천명한다.

1. 협동조합 통합방식은 농협을 주축으로 신법제정이 아닌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5공정권 출범 초기 축산중흥이라는 미명아래 소규모 복합영농 형태의 농촌현실을 무시한 채 쿠데타 조역들과 일부 관료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해 농협중앙회의 일개 부서를 분리 발족한 축협중앙회는 그 첫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었다.

○ 강산이 두번 변해 이제 개혁이라는 명분과 그 과정에 협동조합중앙회간 통합이 시대의 명제인양 변한 현실에도 우리 일만이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그것을 결혀히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 농림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제정 농협법은 얼핏 보기만해도 법제정이 아닌 농협법을 중심으로 한 개정임이 명백한데도 일부 조직의 이해와 대중동원의 압력에 밀려 법제정 형식을 고집하며 농업협동조합을 농업인협동조합이라 우기는 농림부 관료들의 무소신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맥이 풀린다.

농림부는 이제라도 소신을 갖고 국회에 법안제출시 제정법안이 아닌 농협법개정법안으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명칭문제등 농협중앙회 30여년의 역사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농협법 폐지후 신법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 농림부는 법개정시 임시 미봉으로 축협을 농협에 억지로 끌어붙이지 말고 축산 경제부문은 경제사업에 축협신용부문은 금융부문에 통합할 수 있는 근본 개혁방안을 강구하라.

○ 농민을위해 개혁을 한다는 농림부가 일부 조직의 집단반발이 두려워 무소신의 원칙으로 농협을 기피한 조직으로 개악 법제화하여 농민에게 실익을 줄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

○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방식은 그 출발이 농협 흡입내기로 시작하여 아예 반쯤 죽여놓고 정부의 의도(무소신) 대로 끌고 가고 있다.

○ 우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농림부가 임시 미봉책으로 일부 조직의 군중동원에 의한 반발을 무마키 위해 농협을 비효율적인 기피한 조직으로 만들어 다시금 농협이 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씌운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농림부가 영원히 농민앞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우리 일만이천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일동은 농림부가 대오각성하여 진정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통합을 통해 올바른 개혁을 이루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농림부가 계속 무소신으로 일관하여 졸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지금까지 호도된 농정실패의 실상을 농민과 전국민앞에 날날이 공개 총력 투쟁할 것이다.

3. 농림부는 농협법 개정시 향후 정부의 농업정책과 비전을 농민과 국민에게 소상히 제시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전가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농협은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농정실패로 농민의 원성이 높아질 때는 어김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농협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다.

- 막대한 자금(57조원)이 투입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실패로 결론나자 자신들의 잘못은 슬쩍 덮어버린 채 마치 농협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주체인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농림부는 금번 농협법 개정시 농업정책에 관한 주체가 정부임을 몇몇이 밝히고 농협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법률 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3. 농림부는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 자율적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대한 포괄적 감독 행사를 즉각 포기하고 그 범위를 정부정책대행사업에 국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우리는 '88년 참으로 이상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그 감사권한을 벗어난 농민의 자조단체인 농협을 하급기관이랄 수 있는 농림부의 위임을 받아 처음부터 아예 때려잡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언론을 통해 친소봉대 작금의 인위적 개혁을 유도하였다. 현행 농협법 어느 조항에도 농림부장관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위임하는 조항은 없다.

○ 농림부는 현행 농협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독권도 제대로 행사치 못하고 정략적으로 이용 증안국면을 조성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굴욕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농민의 자조단체인 농협은 그 생명이 자율권에 있고 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할 것인 데도 농림부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농협을 움켜쥐려 하고 있다.

우리 일만이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금번 농협법 개정시 농협에 대한 농림부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전면 거부하고, 농림부장관의 감독권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4. 농림부는 중앙회 슬립화가 개혁의 요체인 것처럼 호도하며 중앙회의 사업체적 성격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즉각 포기하라.

○ 농협의 역할중에 사업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농산물가공·유통등의 사업이 날로 광역화, 대규모화 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회원과 관련되거나, 회원조합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업에 있어 그 성격상 중앙회가 연합체로서 사업을 영위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농림부는 현실을 무시한채 중앙회의 경제사업장을 무조건 회원조합에 위양하거나 자회사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경제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전체 회원 및 그 조합원에게 경제적 실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본말을 전도한 농림부의 슬립화라는 명분으로 중앙회의 사업체적 성격을 말살하려는 반협동조합적 사고방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금번 개정법안에 그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협동조합간 통합은 반드시 농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조직은 농협 수준의 슬림화와 농협의 직급·호봉체계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 우리는 통합조직의 효율화와 그 구성원의 인화단결을 이루기 위하여는 중심축이 있어야 하며, 규모와 역사를 볼때 농협이 그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 농림부는 계정법불안 조안 부칙 제13조2항의 내용을 슬그머니 없애버린 이 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일부 조직의 반발을 우려하여 철회한 것이라면 통합조직의 장래를 위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없다.

○ 단순 물리적인 조직 통합만으로는 그 통합조직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통합조직이 완전 화학적 통합으로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해 최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을 정해 직급과 호봉을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이의 관철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총동원 생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농림부는 협동조합간 통합을 임시 미봉으로 조급하게 서두루지 말고 각계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 진정으로 농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조직의 이익을 위한 대중동원 시위에 굴복하여 협동조합간 통합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농림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농민앞에 역사의 죄인이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 일만이권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위의 사항을 반드시 관철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1999년 5월 3일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과 농협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축협의 공식입장

축협 홍보부
475 - 8033
99. 5. 3

1. 배경

- 축협이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무조건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통합을 기본 전제로 수용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대안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함.

2. 축협의 공식입장 변화(4.30일 임시총회)

- o 3월 8일 농림부의 협동조합 통합 발표이후 축협 조합장등은 통합에 대해 전적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음.
- o 그러나 4월 30일 전국조합장임시총회에서 조합장들은 중앙회의 중복기능 통합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새로운 명칭과 C I (Corporate Identification, 조직이미지 통합)로의 통합과
 -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축협연합회」의 설치,
 - 그리고 신용사업을 분리, 「별도 은행화」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3. 의미 및 향후 일정

- 이는 통합저지를 위한 투쟁일변도 방향을 대화와 협상의 방향으로 전환함을 천명한 것이며
- 그리고 축협대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1) 종전 「협동조합 통합저지투쟁위원회」를 해체하여, 「축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 중준 조합장(경북중앙낙농축협)을 선출하는 한편, 각 도 축협조합장 협의회장이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음.
 - 2) 총회는 이의 뒷받침을 위해 동 「비대위」에 농림부와의 향후 대화와 협상권을 위임하였고,
 - 3) 중앙회장은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이 위원회에 동참키로 하였으며 실무추진을 위해 「개혁기획본부」를 설치키로 하였음.
 - 4) 「개혁기획본부」는 두 공동위원장 아래 상무 1인을 본부장으로 하고, 그 하부에 개혁기획부장과 대외협력부장을 두기로 하였음.
 - 5) 필요에 따라 축협대안에 대한 조합원의 공식 검증을 얻기 위한 총조합원 찬반투표를 비롯 입법청원등도 비대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청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상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은 반개혁 음모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

- 양식있는 선량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 -

우리는 최근 축협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후원회 명목으로 초청하여 농축협중앙회 통합 등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반대해 달라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대부분의 농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농축협중앙회 통합에 반대해 달라는 요구를 내건 후원회에 국회의원들을 부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기책임을 다하려는 선량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불순한 의도를 가진 협동조합 반개혁세력들에게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이 물론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농촌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협동조합 개혁에 반대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쟁길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농업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이 시대 양식있는 선량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만일 우리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축협이 이러한 반농민적, 반개혁적 후원회를 개최하거나 여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 내용을 5백만 농민 앞에 낱알이 공개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지역축협의 3분의 1 이상이 자기자본 잠식상태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거창한 후원행사를 치를 수 있는 축협이 있다면 결국 여기서 나오게 될 돈은 '검은 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협동조합 개혁을 저지해 달라는 조건으로 이러한 '검은 돈'을 받은 국회의원이 만약 있다면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우리는 축협의 송찬원 전 회장과 박철우 전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장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금품을 살포한 회장과 부회장은 구속됐지만 정작 든받은 조합장 누구하나 양심선언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축협이 축산농가들의 고통과 개혁요구를 외면한채 이러한 반개혁적인 후원회 행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사정당국에 당시 금품을 받아먹은 조합장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축협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개혁의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회의원 후원회를 개최하려는 반개혁 음모를 폭로하며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5백만 농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농민조합원들의 진정한 바람이 협동조합 개혁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에 앞장섬으로써 이 시대의 존경받는 선량으로 영원히 남기를 진정으로 촉구드리는 바이다.

1999년 5월 4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모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곡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발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인족 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가나다순임. 추가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협개연으로 연락바라며, 2단계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국민연대(가칭)」로 확대 개편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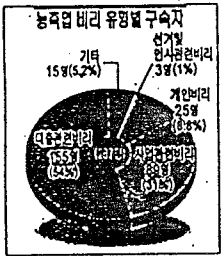
농·축협非理 287명 구속

검찰 수사결과...861명 입건 '단일사건 최대규모'

대검 중수부(李明範검사)는 3일 전국 농·축협 등의 비리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 각종 혐의로 861명을 입건 해 이중 2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수사로는 사상 최대규모의 입건·구속자 수다. 검찰은 두달간 전국적으로 전개된 각종 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농협 605명(구속 200명) ▲축협 229명(72명) ▲임협 14명(6명) ▲수협 11명(7명) ▲인삼협 2명(2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졸관련 비리가 479명(57%)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법주 등 사업관련 비리 200명(24%)

▲면세유(異稅油) 횡령 등 기인비리 142명(17%) ▲선가·인사 관련비리 13명(1%) 순이었다. 특히 조지희박의회 권역에 71여여명을 부당대우해주거나 진상조사를 통해 지상 또는 횡령범죄 등 다른 사법영역으로 대졸자금을 배분해 사자·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중앙의회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소홀과 부실감사 및 조지 내부의 권력적 상남이 협동조합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며 '단위조합장들에 의해 권위주의가 선출되는 권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석천기자

京 報 日 報
5月4日 星期三



조합非理 총 287명 구속

검찰, 농·축협 수사 결과발표

대검 중수부(부장 이명재·李明範·검사장)는 3일 전국 농·축·수·임 등의 비리수사를 통해 861명을 입건하고 이중 2백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원철희(元哲熙)전농협중앙회장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두달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 각종 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1면에 관련기사>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농림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적발자 가운데 농업 임직원이 6백5명 인건에 2백명 구속으로 가장 많고 ▲축협 2백29명 입건(72명 구속) ▲임협 14명 입건(6명·) ▲수협 11명 입건(7명·) ▲인삼협 2명 입건(2명·)으로 나타났다.

각종 협동조합의 구조적 비리외 법외 초점을 둔 이번 수사에서 원전희장을 비롯해 송진원(宋鎭源)전축협중앙회장, 조기환(趙基煥)전인삼협중앙회장, 심문섭(沈文燮)전농협 부회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 입건자들의 신분별로는 농·축협 단위조합 임직원이 4백8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의회 임직원도 1백20명이 비리에 연루돼 입건됐다. <경우원기자> vionz@donga.com

농·축협 비리 287명 구속

861명 입건 '사상최대'

회근수 기자
농·축협 비리 연루자 861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287명이 구속됐다. 이 같은 입건·구속자 수는 단일사건이 아닌 일반 범죄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명재)는 3일 지난 3월 2일부터 두달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통사다발적으로 진행된 농·축·임·수·인삼협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89면
구속자 비리유형별로는 대졸관련 금품수수 및 부실대우 행위가 57%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매매 등 경제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32.7%, 횡령 등 기인비리가 9.2%에 달했다. 주요 구속자는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 심문섭 전 농협 부회장, 송진원 전 축협중앙회장, 조지희 전 축협 부회장, 조지희 전 축협 부회장, 조지희

전인삼협 중앙회장 등이다. 조합별로는 ▲농협 605명(구속 200명) ▲축협 229명(72명) ▲임협 14명(6명) ▲수협 11명(7명) ▲인삼협 2명(2명)이다. 이 가운데 단위조합 비리 관련자가 634명(구속 180명), 중앙의회 비리 관련자가 200명(92명)으로 나타났다.

한 국 일 보
5月4日 星期三

농·축협 비리 287명구속

■ 검찰 수사결과 발표
임직원등 861명 입건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範·검사장)는 3일 농·축·수·임·인삼협 등 비리 수사를 통해 농·축·수·임·인삼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임직원 등 861명을 입건, 2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처리자수 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86년 전국대사건 이후 최대 규모이다. *관련기사 39면
조합별 사법처리자수는 농협이 605

명(구속 200명)으로 가장 많고 축협 229명(72명), 임협 14명(6명), 수협 11명(7명), 인삼협 2명(2명) 등이다. 검찰수사결과, 비리혐의로 구속된 농·축·수·임·인삼협 중앙회 회장부터 일선 조합 직원들은 부당대우, 가계파탄, 담합인조, 부정경매, 판매·유통 등 사업 전 분야에서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비리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중빈(金鍾彬)대검수사기척단은 이날 '농·축협 등은 농민보다 임직원

이익, 평가에 급급했던 조직이었다'고 밝혔다. 김기척관은 '농·축협 임직원들은 아무런 죄의식없이 권력처럼 비리를 저질러왔으며 이는 83년 중앙회장 단위조합장 직선제 실시후 부실해진 감독·감사기능, 조직 내부의 오리엔트 상남 관행, 전문성결여 등이 빛이남 구조적 문제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농·축협 비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 농림부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황성진기자> sp3@bk.co.kr

■ 농축협 수사 마무리

간부·도덕적 해이·권한 집중 비리 불러

제도적 개혁·인적청산으로 '구조적 문제' 치유해야

"고적과 함께 새 천년을 열어 갑니다." "축협이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이 각각 내세운 광고 문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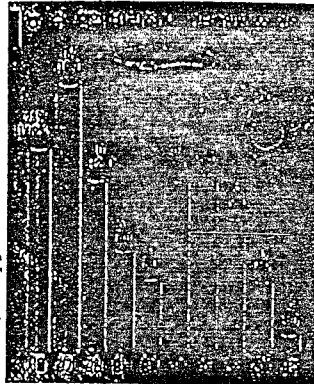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농·축협을 비롯해 수·임·인심협 등의 비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한 데 모아놓은 듯하다. 검찰 관계자는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믿은 하지만, 실제로는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나 다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의 비리는 중앙회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돼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부실한 감사, 조직내부의 관행적인 상납 고리 등으로 이어졌다.

농협은 중앙회부터가 비리의 온상이었다. 원형회 회장(구속중)이 재직할 때 비서실에서 각종 빌미로 동원해 조성한 비자금은 7억원이 넘었다. 매달 1천만원씩 조성된 90%에 육박하는 6억여원이 '개인 금고' 처분 쓰였다. 중앙회장이 자체 예산규정을 어기고 친분이 있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가 하면, 대출 승인이나 인사와 관련해서도 금품이 오가고, 상납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축협도 마찬가지다. 금융과 외환·보험 업무 모두를 비전문가들이 도맡았다. 선거인이 193명에 불과한 선거도 금권 타락선거의 축소판이나 다름 없었다. 선거권자인 지역조합의 업무에 대해 중앙회가 지도·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장에 권력이 집중된 반면, 감독이 소홀해 각종 비리의 소지를 제공했다. 비리가 발견돼도 시정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협협 감사제도도 비리를 부채질할 요인이 하나다. 조합장이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탓에 조합장의 청탁을 뿌리할 수 없고, 신용조사 하나 없이 대출이 이뤄지거나 청탁을 받고 담보물을 패대평가하는 여처구니 없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



어졌다. 농업유통 등 경제사업 분야에서도 경쟁이 남용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결국 손해를 본 쪽은 돈을 믿고 맡긴 284만여명의 농민 조합원과 각종 상품을 믿고 사준 소비자들이다.

비록 일부에 그쳤지만, 수월과 임협·인심협 등에서도 비리가 적발된 점은 협동조합의 구조적인 문제가 '외과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구조적인 문제점의 적발과 인적청산까지는 검찰의 몫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조합원인 농민들 스스로의 자정작업과 구조개혁이라는 지적이다. 김희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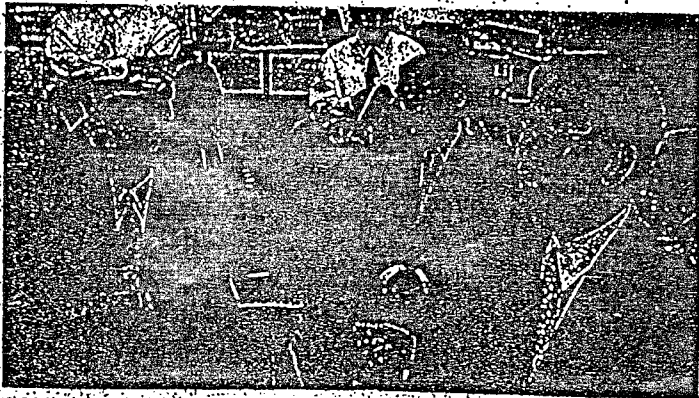
농·축협 비리 구속자 287명

수사발표 861명 입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영진)는 3일 농·축협 등 협동조합 비리, 중앙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861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원형회 전 농협중앙회장과 송헌현 전 축협중앙회장 등 모두 2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 비리사범이 전체의 67%(단속대상 475명, 구속자 16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종 사외관련 비리도 모두 89명(32.7%)이 단속대상에 올라, 이 가운데 200명(24%)이 구속됐다. 조합별로는 협협과 축협 모두 단위조합 임직원들의 비리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순으로 구속자가 많았다. 김희철 기자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지실에서 입건된 대검 수사기차근이 농·축협 등 비리수사결과 발표를 받고 있다. 윤은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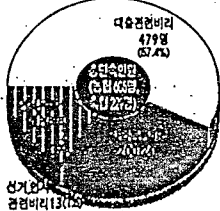
利權마다 '검은손'... 農民올린 '농민단체'

농축협非理 최중수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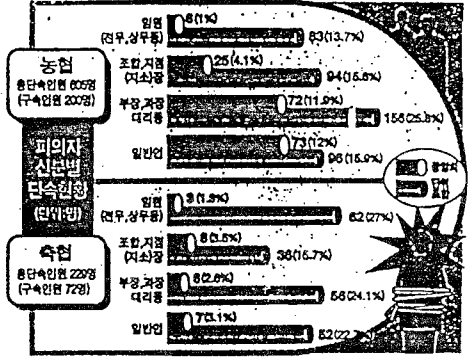
사기 경매로 차액 정겨
불법대출 해주고 돈받아
조합은 빌려 부등산부기

일부 농·축협 임직원들이 농민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유생복직'의 처부를 위해서 일해, 농·축협의 경제적 부실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부정, 남용, 부등산 때에, 관사판형 비리 등 '이권'이 있는 곳에는 비리가 있었다.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인원은 831명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농산물 경매비리는 농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챈 대표적 사례. 농협 영등포 형과불경매공판정에서는 농민들이 손해를 입도록 하는 '수지식' 경매를 모퉁이를 이용, 경매사와 중도매입인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처럼 속여 차액을 빼돌렸다. 광안정 직원들은 이런 담합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고 당면에는 떠났을 '강제 정

비리유형별 단속건장 (농·축·수)



수'하기도 했다. 97년 한우값 폭락 이후 정부와 고가(高價) 매입정책도 차부에 이용됐다. 경복지역 축협 조합장 이모씨 등은 목장인의 소를 집중적으로 사주고 사례비를 받거나, 시장에서 산 소를 축산 농가에서 매입한 것으로 위장해 차익을 나눠 가졌다. 농협지점이 조직폭력배들의 '사금고'화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농협 지점은 조직폭력배들이 실적을 올린다는 구실로 허위 보증인을 내세워 불법



대출을 받거나 직원과 결탁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앞선하고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 지점은 62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지정개설 22개월만에 폐쇄됐다. 전체 비리중 대출관련 '비리가 57%(479건)로 가장 많아 '농·축

협 부실화를 부채질했다. 조합 전무와 상무가 부당 대출을 해준 대가로 고금·승용차를 받았고, 한 대출 직원은 전속업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고 자신이 있는 모델, 건축대금과 모델에 비치할 TV 등을 받기도 했다. 농·축협 일부 조합장은 마음대로 대출자금을 받아 부등산부기나 사채를 빌리기도 했다.

농축협 임직원이 '주인' 행세

검찰수사로 드러난 문제점
중앙회장·단위조합장
대출 인사등 업무전횡
임직원들도 관행적
청탁·사례금등 민연

두 달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농·축협은 중앙회 및 단위조합 모두 '문명 체계'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은 우선 단위조합장들이 선출하는 중앙회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어 중앙회장의 업무전횡을 막거나 전문성 결여를 보완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속된 송정원(宋正源)전축협 중앙회장과 원형희(元亨熙)전농협중앙회장은 부회장 등 간부진의 의견과 예산규정을 무시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결정했다.

중앙회장의 독단적 운영은 인사권마다 금품을 상납하고 회계단의 비자금 조성하는 고질적 관행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중앙회장 선거권 또는 경치권보다 더 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백83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축협의 경우 조합

장들이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쥐도 이를 방지할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선출직 중앙회장이 단위조합의 업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경기 이천농협 아이지점이 지어 조직폭력배에게 1백여만원 대출해주고 62여만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감사를 벌여 지점장 폐쇄하고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

지방 단위조합의 병폐는 중앙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장이 업무결정권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직원들은 조합장을 통해 들어온 대출 및 이권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들은 전국 농·축협임원과 인사원 소속 2백84만 조합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조합 임직원들이 전근대적인 관행이 짙어 별폐를 스스로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조합 임직원들은 대출업무나 수직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사례금을 받거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차액을 챙기는 등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용기자)

vionz@dong.com

경제사업과 관련, 일부 조합장은 불필요한 건물들 사거나 정상기보다 바빠져 산 뒤 사례비를 받기도 했다. 유공사업에서도 남용업자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비리가 많았고, 부실업체에 의상판대를 한 사례까지 있었다. 조합장 선거 때 회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인사권과 관련해 상사와 부하간의 금품거래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같은 농·축협 비리의 원인으로 90년부터 실시된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지역 조합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고 중앙회도 회장 선거를 의식해 감독이나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비리를 감시할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단위 조합장 129명(농협 94명, 축협 35명)이 적발(구속 47명)된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했다.

기자: 조희진 기자 maker@choon.com

돈받고 대출... 친인척에 공사낙찰... 회계는 뺑뺑기... 선거때 금품제

농·축협은 '非理백화점'

검찰이 3일 발표한 전국 농·축협 회계수사결과에 농·축협 중앙회에서부터 지역 지소 공판정 등 하부조직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비리가 만연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고위직과 말단직원을 불문하고 비리에 개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축협이 '비리 백화점'임을 강조했다. 대출 및 각종 공사 납품 등의 과정에서 입자들과 결탁, 금품을 받거나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내부상당고리를 형성하는 구조적 적폐는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는 표어를 무색케 했다. 비리 유형에서도 부실기업 대출 및 대출사채금 수수, 형편불법경매 및 입찰책매, 선거·인사에서 금품·양품제공, 분식회계, 민선유 폐물리기 등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했다. 시민 돈을 아껴 '눈만 돈' 취급, '흙만 보이는 양심'을 팔고 돈을 벌려는 것이다.

■ 검찰발표 비리百態

서류조작 組暴에 2억대출

3억차리 땅 12억각경우 8억7,000만원 대출받아

친동생에게 공사 주고 덤으로 8억 대출까지

타지역 쌀 사들여 지역특산품으로 되팔아

대출비리

여신규정을 위반, 신용과 담보가 부실한데도 대출해주고 사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조합원들이 조합자금을 부동산 투기나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처럼 이용했다. 전 이천농협 이사회장은 대출비리가 극에 달한 경우, 전지정장, 이모(50)씨 등 3명은 96년6월~98년4월 지역 조직폭력배의 권력, 사채금 3,000여 만원을 받고 서류조작을 통해 이들에게 2억여원을 대출해줘 농협이 조직폭력배의 사금고파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사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여신 106억원중 67%인 71억원이 부실과, 62억원을 회수하지 못한채 지점이 폐쇄됐다. 농협은 내부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도 지역폐쇄조직만 있을 뿐 비리 평원자들에게 오히려 가격의 형외적이익을 안겨 내보내는 등 비리 은폐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협 중앙에도 예외는 아니다. 축협중앙회는 부실업체인 ㈜삼산에 자기자본의 11%에 달하는 700여억원을 부당대출했다. 농협중앙회 산하인 (주)30전부회장은 간부 4명은 한 보살강에 부도직전인 98년9~11월 1.000만~5,000만원을 받고 용봉어용 680여억원을 불법입찰 또는 지급보증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협중앙회 감사처 검토(99)씨는 98년12월 유형외 사물 설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부당자 영외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구 경산농협 시장지소장 김모

(46)씨는 95년 김정병기 직원에게 돈을 주고 2억8,000만원짜리 부동산을 12억원으로 감정케 한 뒤 8억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구속기소됐다. 군산 축협 나운동지소장 임모(55)씨는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을 끌어 들여 10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사채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충주농협 대부제과장 이모(45)씨는 대출서류를 위조, 1억3,500만원을 배둘러 주식투자에 이용했다.

경계시업원 겸 비리
충주 축협 감사 최모(46)씨 등 2명은 96년12월 조합사육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1억7,000만원의 사채금을 받았다. 연무단위농협 조합장 이모(50)씨는 지난해 미국철리장 공사 수의계약 사채금으로 2,500만~5,000만원을 받았으며 남평주농협 조합장 이모씨는 공사경정인찰에서 담합입찰로 친동생에게 공사를 수주케 한 뒤 8억4,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줬다. 서울우유조합은 신용우(申東雨·55)전부 동 일원과 직원 8명(1,350만~7,27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담합유증을 총액 30%이상 고가로 수의 계약, 결과적으로 조합손실과 우유가 인상을 초월했다.

선거·인사관련 비리
충청남(中東南)전축협중앙회장은 97년5월 중앙회장 선거 당시 지역조합장들에게 9,700만원을 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선자였던 박철우(朴哲宇)전부회장은 6,600만원을 무린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기소됐다. 원림의(元禮西)전농협중앙회장은 회사 자금 6억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유출하고 이종 1,000만원을 함오신(咸湖新)전회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축협 전남도지회장 임모(51)씨는 부하직원의 경정 및 복합승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1,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기타 개입비리
거창축협 조합장 이모(53)씨는 수대대상이 아닌데도 집권이 있는 사람들의 한우를 한도초과에 수매, 사채차익을 평형하고 축산농가에게 지원되는 정가거래의 축산 일반 거래가격 23억 3,000만원을 무자커져서 부정대출해 주거나 했다. 한우 수매가 1두당 25만~50만원정도 비싼 점을 이용, 조합장이 특정인의 한우를 집중 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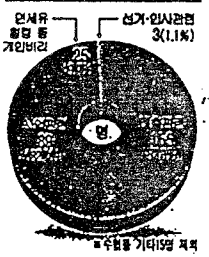


김철민 대장 '우시'가비리가 3일 '사상 최대규모의 농·축협 비리 수사' 결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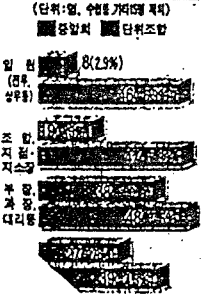
하고 소가비리를 받거나 시장에서 싸게 구입한 한우를 축산농가에서 수매한 것처럼 위장해 차익을 취하던 사례는 비밀내지됐다.
또 안계농협 조합장 이모(50)씨는 안계살이 타지역산보다 고가로 거래되는 점을 이용, 타지역의 살 527.000kg(마:안계산으로 둔갑시켜 8억6,900만원)의 차익을 거둬놓고 정부에 신고함을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살 7,000여kg(마)를 빼돌렸다. 울산축협

지권관리계 직원 한모(6)금 연계지의 담보대출금에비용을 환급받고서 금급치의 회계계정이(용, 자신의 주인)이다.
검찰은 농·축협의 부들의 이익을 외면한지? 판 눈이 아무것도 농·축협·부과 때문은 본바 /02집권기자

비리유형별 구속자



구속자 신분별 현황



'구조적 적폐' 개혁 필요성 재확인

단일사건 사상 최대 861명 입건 성과 '기동'만 읊아매 '물갈이용 수사' 지적도

■ 농·축협수사 의미·한계

경찰이 '민생형 기적사상'을 표방하며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전국적으로 진행된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비리 수사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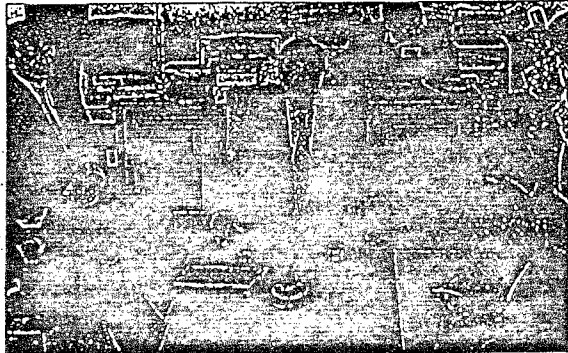
입건 861명이라는 수사결과가 말해주듯 이번 수사는 "농·어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던 의지표명이 걸맞게 농·축협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감사원의 특강 결과 뿐 아니라 333건에 이르는 농·어민의 제보와 격려가 원동력이 됐다.

경찰은 업무 진권을 장악한 단위 조합장들이 직선 회계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 대용·연사 관련 금품수수, 가격담합, 면세유 횡령, 한우 수매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 잇속을 채웠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회는 선거권자인 단위조합장들의 합심을 시키 위해 비지금을 조성, 금품을 물리고, 심적을 부풀리기 위해 본식회계를 일삼는 등 도리어 팔려나가기에 비쳤다.

경찰은 이에 따라 농·축협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합이나 농협부로서는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 역시 지난 93년의 수사처럼 정권 출범기에 피할 이되는 '물갈이용 수사'였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경민 대검 수사가비서관이 3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농축협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최병진기자 chb91055@kday.com

중앙회 부실監査가 비리 양산

■ 농·축협 운영 문제점

농·축협 비리 수사를 지휘한 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어리고도 나리가 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고 개탄했다. 문제점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부실한 감사체계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소홀과 부실한 감사가 농·축협 비리와 은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농·축협이 농민과 이익을 도외시한 채 조합 수익사업 등의

영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조직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반면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직선제로 외부 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시, 농협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은 지역 단위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감독에 한계를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축협은 중앙회장 선거권을 가진 단위 조합장에 133명 뿐이어서 금품공서로 표를 얻으려 큰 보자의 비자금 조성 비리를 부추겼다.

중앙회가 단위조합의 위법사실을 파악하려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기껏 감사결과를 감독판정에 보고하

거나 직원의 비위에 대해 조합장에게 징계처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단위조합에 불응하면 속수무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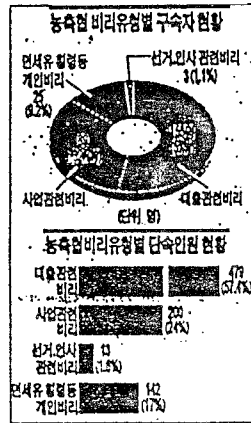
●전문성 결여 중앙회 운영이나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없는 조합장 출신 중앙회장은 금융·의한·경제사업 등의 업무에 중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수익사업 치중... 조합 부실 가속화 중앙회장 금융등 업무 전문성 결여

다양한 사업분야를 판정할 수 있는 간부들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보다는 선거때의 논공장상 차원에서 중앙회의 간부들이 임명돼 전문성이 결여됐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경계가 모호해 담당 부회장의 '권세'에 따라 사업영역이 오락가락했고 비효율적인 사업조치가 드러나도 폐쇄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조합 부실화 도시여유 자금을 영농지원 자금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신용사업은 본래 취지가 퇴색된 채 영농과 무관한 부실기업에 대출해줬다가 조합 자체가 부실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출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판명회피되다시피 했고 대출금 회수 담당직원이 청탁을 받고 단편 서류를 위조,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나 가압류결자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대출금상에 반드시 따라야 할 신용조사를 생략한 경우도 허다했다.

적자사실이 알려지면 차기 선거에 불리하거나 구조조정대 합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앙회장이 본식회계를 지시함으로써 부실을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 최병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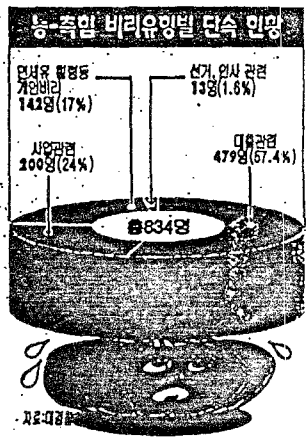
겉만 농민조직... 부패덩어리

■ 미대리 농축협 비리수사

지난 3월2일부터 두달간 계속된 농축협비리 수사 결과 8백61명이 입건되고 2백87명이 구속됐다. 단속규모만 해도 최근 일반 범죄사건으로 최대규모다. 이는 검찰이 단순히 농축협과 관련해 제기된 비리와후원인 아니라 농축협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고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기파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에 그만큼 농축협이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듯 폭을 대로 폭은 부패덩어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축협은 농민의 조직이 아니다.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온갖 뒷거래를 일삼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수비준 1억6천만 원을 쥐고 컬러 TV 36대 등 2억2천만 원어치를 모범 플랫폼으로 받아 청겼다. 전 이전농협 아이지형장 추모식 등은 조직폭력배들에게 44억 원을 불법대출해 주고 거역의 사례금을 청겼다. 부실대출이 누적되면서 이 지점은 총액 1백60억 원의 67%인 71억 원이 부실화됐고 이중 61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자정계실



특정인의 소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소가비를 받거나, 시정에서 소를 싸게 구입해 축산농가에서 수역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청산·사해도·상당수 확보했다.

이밖에 △조면부동산 매매나 조합건설공사와 관련해 사리금을 받거나 △선거,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면세유 유통 등 단안 되면 다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겉가시리'들이 활개치고 있었다.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농·축·협으로부터 고충받은 전국 농민들도 전국 협조모두 3433건을 고소 또는 제보와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검찰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농축협비리가 △정당의, 단위조합의 부실운영 △고질적인 비리구조 등 중대한 부패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윤영필기자)

조직폭력배에게도 대출-사채들이는 예사 임직원들 온갖 뒷거래로 자신들 배만채워 조합형포 시달린 농민들 수사철조로 성과

적발된 비리관련자 가운데 조합 임직원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들 유형별로 보면 대출관련 비리가 57%로 절반이상이고, 각종 사업관련 비리가 24%, 개인비리가 17%이다. 특히 수법을 보면 그 우지리지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부평농협 제일지소장 모으씨는 건축업자에게 27억원을 대출해 주고 사리금 2천5백만 원을 받는다. 하연 자선 소유의 모델건

22개 일만에 폐쇄됐다. 이밖에 조합이 자신의 개인금고인 양 조합자금을 몰래로 부동산투기나 사채들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합관련 각종 사업에서도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농협산하 영종포 청과물공판장에서는 공판장 폭언하여 정매시와 중도매인들이 짜고 경매가를 속여 차액 2천9백만 원을 나눠갔다. 소값인정을 위해, 한우를 시장가 격보다 2만~50만원 비싸게 사들이는 것을 이용, 축협조합장이

부패행동권 2부영등기수사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부패수사특별부총수사관 임정관 일 반사건 사상 최대

협동조합非理 287명 구속

검찰, 일제수사 결과 발표

농협 200명·축협 72명

대검 중앙수사부(中央搜查部)는 3일 전국 농·축협 및 수·인상협 비리에 대한 두달간의 일제 수사를 통해 비리 관련자 287명을 일감, 이중 2백8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 25면>

검찰이 이날 연합회(元聯合)전 농협중앙회장을 원경·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8백61명은 조합별로 ▶농협 6백5명(구속 2백2명)▶축협 2백29명(72명)▶임업 14명(6명)▶수협 11명(7명)▶인상협 2명(2명) 등이었다.

구속자 중에는 원경회장 외에 송찬원(宋燾源)전 축협회장·조기환

(趙基煥)전·인상협회장·심문선(沈文善)전 농협부회장·정정현(鄭正顯)전 축협부회장 등 중앙회 전·인적 고위간부들이 대거 포함됐다. 핵심 수사대상이었던 농·축협 비리의 경우 일감자 8백34명중 단위조합 비리 관련자가 6백34명(구속 1백80명)으로 중앙회 비리 관련자 2백2명(92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직급별로는 대만 전속참구인 단위조합 부장·과장·대리 등 실무직원들이 전체의 25%인 2백11명으로 부정이 가장 심했고 전무·상무 등 단위조합 임원(1백45명)·단위조합장 및 지점장(1백30명)도 있었다.

그러나 구속자(2백72명)중엔 단위조합 및 지점장이 17%인 47명으로 단위조합 실무자급 구속자(48명)수와 맞바뀌어 조합장·지점장의 전횡이 심각했음을 드러냈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회장부터 '非理 백화점' 말단까지

드러난 농·축협 비리 실태

농·축협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각종 생산자조합 운영에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검사팀 검사에서 지역별 각종 의혹사항을 토대로 3월초 시작된 '민생명·기복사정'은 농민기를 피해 두달로 단정돼 진행되는데도 전국 곳곳에서 무려 8백여명의 범죄영향을 적발해냈다. 과거 공인사건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라는 숫자도 숫자지만 비리유형을 들여다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연합회(元聯合)전 농협중앙장은 비자금용 조성, 의사록금 6억여원을 횡령한 뒤 일부를 강연도지사 선거자금으로 활용했다. 송찬원(宋燾源)전 축협중앙장도 부실업체에 무려 자기자본의 41%에 달하는 7백여여원을 무단대출해 주고 원상회상 선거자금도 부하업체에서 출격, 전국 각지에 부당 농·수공명상까지 퍼트릴 뻔했다.

중앙회 임원들과 단위조합장 및 지점장들이 부실업체에 대출해주고 관용을 받는 일은 '부실대출·원경·뇌물인사등' 다양한 전국적인 공통현상. 대표적 부실기업인 한 상남관현으로 자체감사 하나하나 보여 부당대출여부도 1억여원을 경간 인연도 있었다.

일선 직원은 농산물 중간유통자가 횡령·면세유 횡령·면유 수매대금 편취·한금 경매·어납금 횡령·무연회 주류판매 등 조합의 거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비리를 저질렀다.

특히 이농농협도 지점별 서부흥 조차, 조직목책에게 이익권을 돌려주고 금품을 받았다. 농민들을 위한 영농자금에 조직목책·별의 송금문과 외채 스포츠카 구입·조직 관리비로 사용된 것이다.

불발 만발 일도 또 있다. 농협중앙회는 내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지점·부서차이내 내리고 관련자에게 모두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주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죄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손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다. 또 조합 내부적으로도 인사물 관리·금품수수와 편법적인 상납고리가 대거 적발됐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에 근본적인 유발 원



자료:중앙일보

인으로 중앙회의 단위 조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부실한 감사를 들었다.

중앙회장과 조합장 이 모두 직선제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외부 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선거를 둘러싼 '연기르기'로 엄격한 내부 감사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직 내부의 관행적인 상납구조가 연결되면서 중앙회장이나 조합장과 업무관계를 건재할 만한 장치가 전혀 없 어졌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수사 관계자는 "조합이 외형적 성장만을 통해 조합 임직원들의 이익추구만 위한 본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또 조직과 비리와의 따른 전연성 결여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미 농·축협은 전국에 1천여개 지점을 갖추고 금융·보험·보험업까지 취급하고 있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력으로는 조합의 중앙회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농·축협 수사 이모저모

농·축협 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 수사 최소 이후 전국의 농민들로부터 고발·제보·격려 전화 및 편지가 쇄도, 조합 개혁을 원하는 농민들의 열정이 피부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수사를 총괄 지휘한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전국의 농민들로부터 3백33건의 의견이 접수돼 농·축협 운영의 비리 실태 파악과 수사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한 수사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너무 늦었다며 나무람 뒤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번 농·축협 수사는 지난 2월 검사팀 검사에서 대규모 부실예산·방만한 운영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차돼 3월초부터 중앙회는 대검: 중수부에서, 단위조합은 전국 각 지점·지청 특수부에서 전담해 동시 수사를 벌였다.

수사가 길어질 경우 조합 운영 차질에 따른 피해가 결국 농민들에게 옮겨질 것을 우려, 처음부터 농민기가 시작되는 5월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비자를 기했다.

농민들 제보 쏟아져 전국 동시 수사 수월

○-수사팀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벌어진 단위조합 비리의 숫자는 많았지만 비교적 수법이 단순해 적발이 용이했던 반면 중앙회 수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농민 중앙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카드도 써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카드를 지출해서 넘기는 대신 현금을 받아 비자금용 조성하는 선형 수법을 썼다고 한 수사 관계자가 전했다.

한우 수매와 관련해서는 차익을 챙기기 위해 지역 배분제도를 아예 무시한 것 경남 거창에서 광주시까지 넘겨가 소를 사오는 등 지못할 흔적이 있었다.

○-9월부터 도입된 중앙회장 직선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한 수사 관계자는 "중앙에서 감사를 내리기도 부표권이 있는 조합 장들에게 권력 있어 먹어 놓지 않았다. 직선제를 안할 수도 없지만 시정여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수사 관계자는 "정부의 농촌 지원 형식은 수렴되어 좋은 말지만 중간·후수가 심한 상황"이라고 비유한 뒤 "재지 조합에서 정부 지원자금을 거의 끌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욱 기자

口 검찰수사서 드러난 농·축협/부패구조 뇌물챙겨 상납하고 人事청탁

최은수·탁승기 기자

'전통성 결여, 감시기능 부재, 관형회합 상납구조, 막강한 조합 장 권한...'

이들은 검찰의 농·축협 수사과 정에서 드러난 농·축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문제점이다. 그 결과 농·축협은 농민에 후생복지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영기기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은 한이더로 막강했다. 기밀의 부실 여부 불투명까지도 현존하는 기밀에 무조건 대출을 해줬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들은 인사와 관형의 상시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연말의 전 농협중앙회 회장은 막강한 회장 직권을 이용해 비서실에 비자금 조성관리권을 두고 매일 1000만원 일체 7억12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조합장에서 막강 직권까지 남용계약과 관형의 불법수수수가 비일비재했고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뇌물은 보직관리와 승진을 위해 똑같이 상사에게 상납하는 고질적인 범죄가 자립되고 있었다. 조합장은 중앙회가 취급하고

조합장서

발단직원까지

남종판련 금품수수

있는 금품 보임 외한 등의 업무 불 관할관리할 경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뿌려 193명의 단위조합장만 특수하면 되기 때문에 후보의 전횡성은 항상 뒷걸음질로 밀렸던 것이다. 지역조합장이 선거권자로 되어 있어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감시기능도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다.

이 같은 농·축협의 구조적 문제점은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부당대출, 담보대출, 선거·인사기밀, 분식회계, 금품 상납과 같은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했다.

부정대출은 96년 11월 7억원 을 차명으로 대출해주고 사례금 2500만원을, 20여만을 대출해주고 2억2100만원을 각각 챙겼다.

제주감귤조합의 경우 2000상자가 1억1300만원에 경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400만원에 걸락된 것처럼 속여 농민에게 지급할 금액대 당 중 29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비리백화점' 오명 일룩 농축수입협 287명 구속

대검, 수사결과 발표

대검 중앙수사부는 3일 지난 3월2일부터 두달간이 걸친 농·수·임·인·입협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 모두 8백81명을 일건하고 2백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각 조합의 총수인 임원회 전 농협중앙회장, 송원원 전 축협중앙회장, 조기환 전 입협중앙회장 등도 구속 기소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6백5명(구속 244명)으로 가장 많고 △축협 2백29명(72명) △입협 14명(6명) △수협 11명(7명) △인협 2명(2명)이다. 일반범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다. 대검 판례 비리가 57.4%인 4백70명도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사립판례·비리(24%) 민생유 형법 등 개인비리(17%) 선거 및 인사판례 비리(1.6%)의 순이었다.

△조합 문제점-비리의 근원인 인은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 소홀, 부실한 감사, 조직 내부의 관형적 상납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전형적인 대출비리형 조합의 가격담합 부정경매 분식결산 등 조직적 총체적 비리도 속하게 적발됐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이 여신 규정을 어기고 전보 있는 기밀에 대출했다. 중앙회장과 지자체 단체장 선거출마 때 자금을 지원하고 임직원을 등원하는 등 정치개입 행위까지 드러났다. 단위조합의 경우 권한이 조합장에 집중돼 견제장치가 없는 것

이 배경으로 밝혀졌다. 중앙회가 직원 비위를 밝혀내도 조합장에 게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비리유형 △대출비리-지난 96년 8월 문운 언 어천농협 어미. 지점은 직원들의 부실대출로 개월 22개월만인 지난해 4월 문운을 당했다. 이상하 지점장 등 임직원 3명은 사표를 조약에 지역 특목지역에 모두 1백6여원을 대출해주고 평균 1억1천7백4천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를에게 전과는 커녕 오히려 영예까지 지급했다.

△비자금 조성-원 전회장은 비자금 조성관리권을 통해 매일 1천여만원씩 7억1천2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원 전회장은 이장 6억1천1백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인사-연세유-부동산비리-축협-전남도지회장인 임원직원은 부하직원회 결정 및 특별승진대상자 선정과 관형에 1천7백여만원 받았다.

의용단위협 김상수 대리는 98년 5월부터 6개월간 농민등인 민생유를 일방에 끌어내기고 농민에게 만 첫첫할 무어 1억3백만원 형법했다.

충주축협 최순만 감사 등 2명은 96년 12월 조합사육을 사면시킨을 주연에게 사례금 1억7천만원 을 받아 구속됐다. 또 축협 윤석성 전안지점장은 97년 지점용 건물때마 사례금으로 건물 주인에게 6천만원을 받았다.

김민권 기자 mkkim@

농·수·축협비리 총287명 구속

일반 범죄사건 사상최대규모... 중앙회 92명·단위조합 180명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宰검사장)는 3일 전국 농·수·임·수·인·입협 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통해 각종 비리에 연루된 861명을 일건, 이중 28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앙사건이 아닌 일반범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의 일건·구속 자 수이다. 검찰은 이날 원협회(元協會)전농협중앙회장을 형법 및 업무상 비밀증 형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이뤄진 각종 생산자 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최중수사결과 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건자 861명을 조합 별로 보면 ▲농협 605명(구속 200명) ▲축협229명(72명) ▲인입 14명(6명) ▲수협 11명(7명) ▲인협 2명(2명)이다.

주요인사로는 원전회장을 비롯해 송원원(宋源源)전축협중앙회장, 조기환(趙基煥)전인협중앙회장, 심문섭(沈文涉)전농협부회장, 장정환(張正煥)전축협부회장 등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농축비리 일건자 834명 의 경우 단위조합 비리 관련 634명(구속 180명), 중앙회 비리 관련 200명(92명)으로 나타나 단위조합의 비리보다 고질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의 신분별로는 농·축협 단위조합 임직원이 465명으로 전체(834명)의 58%를 차지했고 ▲단위조합 관원 일반인 143명(18%) ▲중앙회 임직원 120명(14%) ▲중앙회관원 일반인 80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단위조합 부장·과장·대리 등 실무직임원이 전체의 25%인 211명으로 부정이 가장 심했고 단위조합 임원(145명), 단위조합·지점장(130명)이 뒤를 따랐다.

그러나 구속자(272명)중에는 단위 조합 및 지점장이 17%인 47명으로 단위조합 실무자급(48명)과 유사속에 조합 및 지점장의 권한이 심각했음을 드러냈다.

농·축협 비리유형은 대검판례 비리가 전체의 57.4%인 479명으로 가장 많고, 경계사립판례 비리(20.2%), 형법 등 개인비리(12.2%), 선거·인사판례 비리(3.3%) 등 순이었다.

전체 일건자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명(19.7%)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서울 128명(14.9%) ▲경남 112명(13%) ▲경북 107명(12.4%) ▲강원 107명(12.4%) ▲전남 87명(10.6%) ▲충남 61명(7.0%) ▲충북 43명(5.0%) ▲전북 42명(4.9%) ▲제주 5명(0.6%)로 집계됐다.

윤종원 기자 ybrun@sed.co.kr

감독소홀-부실감사-상납관행 '3박자'

농협 비자금조성 전담팀 구성
축협 돈선거 처벌규정도 없어

☐ 농·축협 非理 분석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소홀과 부실한 감사, 조직내부의 관행적 상납이란 3박자가 빛어낸 총체적 비리.'

대검 중수부가 3일 두달간에 걸친 전국 농수산관련 협동조합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내민 결론이다.

농·축협 등은 대출·경제·유통사업의 전분야에서 부당대출과 금품수수, 가격담합 및 담합입찰, 부정경매, 면세유 횡령, 한우(韓牛) 부정수매, 분식회계 선거·인사비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비리협동조합'을 차렸다.

각 협동조합 중앙회는 특히 단위조합의 사업을 대행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 오히려 회장 선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휘둘리는 양상을 보였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회장이 비서실 안에 비자금조성 전담팀까지 두고 비자금을 만드는 한편 여신규정을 어기고 친분있는 기업에 대출하거나 중앙회 조직을 동원, 전회장의 지방단체장 선거에 개입하는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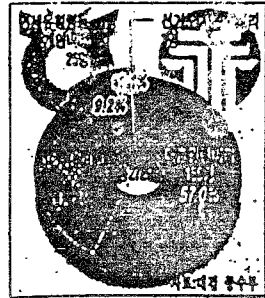
축협중앙회도 1백33명의 조합장들이 회장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돈선거가 뿌리박혀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조차 없어 중앙회의 단위조합 감사에 근본적 한계를 노출했다.

이같은 감시소홀은 자선히 지방 단위 조합장들의 전횡으로 이어져 이번 수사에서만 1백29명의 단위조합장이 입건돼 47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조합장에 이어 단위 농·축협 임원과 말단 직원들까지 경쟁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이들이 전체 입건자 8백34명 중 58%인 4백86명에 달할 정도로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제 배 불리기에만 급급했다.

이들 단위조합중 일부는 대출과 관련하여 부실업체 대출은 물론 지방 조직폭력배에게 1개 지점의 절반을 넘는 여신을 제공했다가 아예 지점이 폐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대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유통회사를 만들어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대출관련 자료를 조작, 조합돈을 개인 금고처럼 쓰는 사례도 허다했다.

이밖에 농어민에게 제공되는 면세유를 일반인에게 팔아 차익을 챙기고

농·축협 구속자 비리유형별 현황



정부의 한우 수매를 특정인에게 집중하거나 타지역 쌀을 자기 조합에서 생산한 것처럼 생산자를 허위기재하는 지능형 범죄가 속출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협동조합의 고질적 비리가 일소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8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이 바뀐 때마다 검찰이 4사건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벌여왔지만 유사한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이익보다 조합의 영·성장에 치우친 경영과 감독기관인 농림부의 감시소홀을 꼽은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업무정형이란 범죄를 함께 노출한 협동조합의 개혁은 지속적인 외부 감사와 구성원들의 진정한 자성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4성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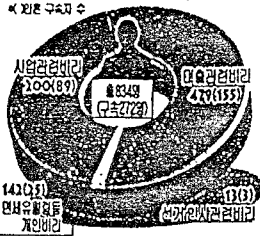
농·축협 비리 287명 구속 “사상최대”

검찰 횡령등 혐의 861명 입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명재·李明載)는 3일 전국 농·축·임·수·인삼협 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통해 모두 861명을 입건. 이중 2백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합별 입건 및 구속자는 △농협 6백5명(구속 2백명) △축협 2백29명(72명) △인삼협 14명(6명) △수협 11명(7명) △인삼협 2명(2명) 등이며, 주요 구속자는 원철희(元철熙) 전농협회장 송창원(宋昌源) 전축협중앙회장 조기환(趙基煥) 전인삼협회장 심문섭(沈文聿) 전농협부회장 장정현(張正顯) 전축협부회장 등 당일사건으로는 사상최대다. 비밀상선 chang@kukminbo.co.kr

농·축협 비리·유형별 적발인원



지역별 단속인원



부패 정치인·공무원·기업주 쪽 빼앗아

비리·횡령·부패·부정거래

도시 여유자금을 끌어 모아 농민과 축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축협은 이례가 안될 정도의 감독 부실이 총체적인 비리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의 원인이 됐던 중앙회장 선거부정은 정치권의 부패 악순환고리의 중심하고 대졸비리는 부실금융기관을 달았으며 공사발주 비리는 부패 공무원의 수법과 같았다. 남동 비리는 약 10여 기업주를 달았고 비자금 조성은 제일 앞머리 비수였다.

결국 농·축협은 비리의 복미점으로 인식되면서 조직해체와 유형화시켜가야 할 분할당 하는 '비리의 종합시장'이 되고 말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은 지역 중 회장 비서실 내에 비자금 조성관리팀을 가동해 허위서류계산서를 만들고 장부를 조작, 모두 7억1천2백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6억여원을 도지사 임후보자 선거자금 지원 등에 사용했다.

그는 또 여신규정을 어기고 부실기업인 대륙산업개발에 6억원을 부당하게 지급 보증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역경회장은

원철희씨 비자금팀 운영

송찬원씨 금품선거 '원죄'

낙하산 인사 부실대출 이어져

단위조합장 인사권등 독점

중앙회장도 제재 못해

이권 있는곳마다 검은거래

사래비를 받았고 부실 대기업인 한보에 서울지역 부실채권의 60%인 6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민은 안전에도 없었다.

○축협중앙회=송찬원 전회장의 회장선거 부정이 인사비리-전문성 결여-감사부실로 이어지는 총체적 비리의 '원죄'가 됐다. 그는 최근 들을 통해 선거자금 1억2천만원을 모은 뒤 유권자인 단위조합장에 모두 9천8백만원을 부렸다. 당선 후 그는 선거자금을 모자란 축관을 요격해 때지쳤고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인사 때문에 부실기업에 2백10여억원 대출하고도 '빠진 돈이 풀 붓기 식'의 대환대출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한우 고가수매 권지도 풀거름이 됐다. 경남 거창축협을 비롯한 일부 단위조합에서는 축산농가 한우를 비싸게 사주는 점을 악용해 인근 시장에서 한우를 구입해 차익을 남기거나 친분이 있는 사립 명의로 소를 집중 매입하고 사래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단위조합=단위조합장에 업무결정권과 인사권이 독점돼 있는 점과, 중앙회장이 선거불의식에 단위조합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중앙회가 위법을 확인해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없는 점이 근본적인 결함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부분의 비리가 조합장에 의해 저질러졌다. 경기도 이천농협 이마지점장의 경우 신용거래불량자로 나이브물건을 운영하는 조희철씨를 4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22억9천만원을 대출해줬다. 대우부자적자라도 조합장 확인제도에 따라 특별대출이 가능토록 한 규정대로였다. 결국 이 지점은 설립 2개월만에 총자산 1백6억원의 67%인 71억이 부실화되고 62억원이 회수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기타 문제점=유형과 공사계약, 조합 부동산매매 등 이권이 있는 곳 이디든 비리는 따라다녔다. 농협서울연동포공판정에서는 경계가 손가락으로 나눠줄 지점하는 '수시식 경계 제도'의 허점을 어용 특정 중간 도매상에 계산을 맡겼어 끌어 차익을 나눠 갔다.

황영호 yhham@kukminbo.co.kr

비리 뿌리뽑는 조합개혁을

사설

검찰수사 결과 농협과 축협은 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나 농민은 물론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검찰은 농·축·수·임·인삼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제수사를 통해 861명을 입건, 이 가운데 287명을 구속했다. 이 협동조합들의 경우 중앙회 임원부터 일선 조합장 및 직원들까지 부실대출과 금품수수, 가격담합 및 담합입찰, 부정경매·부정선거, 인사부정, 면세유 횡령, 분식결산 등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협동조합의 구성체가 돼야 할 일선 단위 조합의 많은 조합장이 인사 때만 되면 부하 직원으로부터 의례적으로 승진인사 사례비를 챙겨 조직 내부의 관행적 상납고리를 형성하고 인사권을 악용해 대출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선거철만 되면 불법위탁 금품살포로 표를 매수하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 주인인 조합원은 뒷전에 물러나 있고 조합장 등 일부인이 이권노름을 하는 곳으로 협동조합이 변질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조합이 비리의 온상으로 변함으로써 전국 1,332개 단위조합 가운데 647개 조합이 자본금을 잠식당하는 위험한 실정에 이른 것이다.

단위조합을 감독해야 할 중앙회마저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 금품을 돌리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결손이 났는데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분식결산을 눈감아 주는 등 단위조합 비리를 오히려 부추긴 것은 더욱 가증스럽다.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오랫동안 품어온 원부가 터진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94년 농협중앙회 비리사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이 협동조합들에 대해 수사를 폈으나 비리가 더 기승을 부린 것은 감독기능이 전혀 가동되지 못한 데 있다.

지난 90년부터 단위 조합장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면서 비리가 늘어났다. 그러나 중앙회장 선거방식도 조합장이 중심이 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면서 중앙회 회장이 단위조합장들에게 환심을 사아하는 입장이 됐다. 그렇게 됨으로써 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과 감사가 자연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협 관련 조합의 비리는 검찰수사만으로 근절되기 어렵다. 협동조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다. 그러므로 농림부는 현재 추진중인 협동조합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바란다. 단위조합장 선출 과정의 부정개입 소지를 없애고 일선 조합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리근절을 위해 이번 개혁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사업(금융업무)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문제도 중기과제로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농축수협은 비리전시장?

8백61명 입건, 2백87명 구속. 일반범죄 사건으로서 사상 최대 규모. 3일 발표된 농·축·수협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기록이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가'를 울린 것으로 수사결과를 칭찬하기도 어렵다. 기존의 협동조합 조직이 주인인 조합원보다 조합직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였다는 실상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결과는 중앙회 임원으로부터 단위조합장, 말단직원까지 총체적인 협동조합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 농협회장과 부회장, 전 축협회장과 부회장, 전 인삼업협회장 등이 구속됐다. 단위조합장은 1백29명 입건에 47명 구속, 단위조합 실무직원은 2백11명 입건에 48명이 구속됐다. 비리유형도 부실대출과 금품수수는 물론 가격담합 및 담합입찰, 부정경매, 선거·인사부정, 면세유 횡령, 분식회계 등 신용·경제 전 사업분야에 걸쳐 있다. 가히 한국형 비리의 종합전시장이다. 분노와 함께 이토록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비리가 자행되는 동안 감독관청과 수사기관은 그 소임을 다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단위조합장에 대한 감독장치가 없는 제도

적 허점이다. 90년 이후 직선제 실시로 단위조합장이 조합의 업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조합장의 업무권, 인사권을 악용한 상납, 대출압력에 따른 사재비 수수, 비지금 조성을 통한 타락선거가 자행됐지만 단위조합은 물론 중앙회도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회 역시 부패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했다.

현재 진행중인 협동조합 개혁노력도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나 조합장 간선제만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십상이다. 또 지난 80년대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3차례의 대규모 수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각종 선거 때마다 협동조합의 조직적인 비지금 조성과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됐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앞으로도 비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노력은 물론 협동조합을 진정한 농어민의 단체로 만들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農心은 분노한다

농축협에 대한 검찰의 전면수사로 비리혐의자 8백61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2백87명이 구속된 사건은 진레가 혼치 않은 일이다. 발표 내용대로라면 거대 공룡조직인 농축협이 그야말로 비리덩어리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법망을 피해왔는지 실로 의아스러울 지경이다. 농축산인들의 영농 및 축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오히려 상전으로 군림하면서 엉뚱하게도 부실기업에 특혜대출을 일삼아 총체적인 부실경영을 자초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보나 진로와 같이 부도가 난 대기업에 대출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돈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심지어 회사채에 대한 거액의 지급보증을 선 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부채를 떠안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조합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최악의 국면에 빠졌다. 이같은 탈법-부실경영속에서 협동조합 임직원들은 대출과 사업 지원을 미끼로 커미션 등 이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런 현상은 중앙조직뿐 아니라 전국의 단위조합에서도 나타나 총체적 부패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진단이다.

농축협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게 된 것은 당국의 감독 소홀과 더 나아가서는 감독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된 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축협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의면한 이단에는 역대 집권층이 협동조합을 각종 특혜성 자금의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비리를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협동조합을 직접 통제해 온 종래의 관행을 완전히 없애고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감독기능은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정부는 검찰의 비리수사가 끝난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작업에 착수해야한다. 농협과 축협, 임협과 인삼협 등 농업관련 4개 협동조합의 방만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통폐합하고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폐합과정에서는 해당조합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당국이 농협의 새 집행부를 길들이고 새로운 관치운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합개혁에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은 협동조합 구조조정안을 단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야한다. 실행을 미루다가는 때를 놓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뒤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농축수협은 비리전시장?

8백61명 일건, 2백87명 구속. 일반법외 사건으로서 사상 최대 규모. 3일 발표된 농·축·수협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기록이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를 잡힌 것으로 수사결과를 칭찬하기도 어렵다. 기존의 협동조합 조직이 주인인 조합원보다 조합직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였다는 실상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결과는 중앙회 일임으로부터 단위조합장, 말단직원까지 총체적인 협동조합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 농업회장과 부회장, 전 축협회장과 부회장, 전 인상업협회장 등이 구속되었다. 단위조합장은 1백29명 일건에 47명 구속, 단위조합 실무직원은 2백11명 일건에 48명이 구속되었다. 비리유형도 부실대출과 금품수수는 물론 가격단합 및 담합입찰, 부정경매, 선거·인사부정, 면세유 횡령, 분식회계 등 신용·경제 전 사업분야에 걸쳐 있다. 가히 한국형 비리의 종합전시장이다. 분노와 함께 이토록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비리가 자행되는 동안 감독관청과 수사기관은 그 소임을 다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단위조합장에 대한 감독장치가 없는 제도

적 원점이다. 90년 이후 적선제 실시로 단위조합장이 조합의 업무를 임의적 장악하게 된다. 조합장의 업무집행, 인사권을 익명한 상납, 대출입력에 따른 사례비 수수, 비자금 조성을 통한 타락선거가 자행되지만 단위조합은 물론 중앙회도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앙회 역시 부패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무했다.

현재 전경중인 협동조합 개혁노력도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나 조합장 간선제만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십상이다. 또 지난 80년대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3차례의 대규모 수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각종 선거 때마다 협동조합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앞으로도 비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노력은 물론 협동조합을 진정한 농어민의 단체로 만들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農心은 분노한다

농·축·수협에 대한 검찰의 전면수사로 비리혐의자 8백61명이 일건되고 이 가운데 2백87명이 구속된 사건은 전례가 흔치 않은 일이다. 발표 내용대로라면 거대 공룡조직인 농·축·수협이 고아날도 비리혐의자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법망을 피해왔는지 실로 의아스러운 지경이다. 농·축·수협인들의 영농 및 축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오히려 상진으로 균일하면서 엉뚱하게도 부실기업에 흑연대출을 일삼아 총체적인 부실경영을 자초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보나 진로와 같이 부도가 난 대기업에 대출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돈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심지어 회사채에 대한 거액의 지급보증을 선 기업에 부도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부채를 떠안은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조합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최악의 국면이 님졌다. 이같은 탈법·부실경영에서 협동조합 임직원들은 대출과 사업지원을 미끼로 커미션 등 이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런 현상은 중앙조직뿐 아니라 전국의 단위조합에서도 나타나 총체적 부패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진단이다.

농·축·수협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게 된 것은 당국의 감독 소홀과 더 나아가서는 감독공무원들이 안동속이 된 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축·수협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외면한 이면에는 역대 집권당이 협동조합을 각종 특혜성 자금의 창고로 활용함으로써 비리를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협동조합을 직접 통제해 온 종래의 경영을 완전히 없애고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감독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정부는 검찰의 비리수사가 끝난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농업과 축업, 임업과 인상업 등 농업관련 4개 협동조합의 반만인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통합하고,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종래합과정에서는 해당조합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당국이 농업의 새 집행부를 길들이고 새로운 관치운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합개혁에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이미 준비된 농업 협동조합 구조조정안을 단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실행을 미루다가는 때를 놓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뒤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후의 협동조합 개혁작업

지난 두달간 전국을 휩쓸던 검찰의 협동조합 비리수사가 일단락되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 3일 농축임수인삼 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백61명을 입건, 이중 2백8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비리연루자를 협동조합별로 나눠보면 농협 6백5명(구속 2백명), 축협 2백29명(구속 72명), 임협 14명(구속 7명), 인삼협 2명(구속 2명)이 된다.

이번 사건은 입건, 구·자로 볼때 공안사건이 아닌 일반범죄 사건으로는 사상최대 규모라 한다. 다만 이 숫자에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물론 비리와 연관된 외부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농협만의 입건자 통계(총8백34명)를 비리 유형별 비율로 보면, 대출관련 비리가 전체의 57.4%이고, 경제사업관련 비리 24%, 횡령등 개인비리가 17%이며, 선거인사관련 비리가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비리는 협동조합내 조직계열상의 중앙회와 일선 조합, 업무분담상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직급계열상의 임원과 직원을 가릴것 없이 총체적 부정이 만연했음이 드러났다. 오죽하면 농어민을 잘 이해한다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합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비리수사가 마무리된 마당에 협동조합은 이제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기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 자기개혁을 통해 조합원인 농어민을 위한 조합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미 각 협동조합이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개혁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농협은 「농협 운영혁신작업단」을 구성했으며, 수협도 「수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번 검찰수사 종결을 계기로 본연의 임무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행하는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검찰수사가 실시되면서 협동조합은 본연의 임무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협동조합 중사자들은 본연의 임무에 가장 충실할때 조합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국민들로 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검찰수사의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까지는 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이 직선제 투표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점을 내세워 권한부여만 정당화 했지, 이에 상응한 책임부과는 기피했던 것이다.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 감독기능과 내부 감사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원천적으로는 중앙회든 조합이든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경영전문성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협동조합들은 개혁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된다. 모든 협동조합들이 농어민 조합원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서면서 자생적 효율성을 갖춘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협동조합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기회로 새로운 천년까지 대비하는 개혁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발언대

장원석

단국대학교수 전 한국협동조합회회장

협동조합 개혁 '말잔치'만 할 것인가

지난 30년간 정부와 농협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던 필자는 작년부터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에 직면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농축협중앙회 통합과 독립채산제 실시는 개혁대상인 축협중앙회를 제외한 농민단체 전체의 합의사항이었는데 금년에 와서 느닷없이 1개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학계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인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이다.

작년 농림부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민단체의 참여하에 논의한 지 1년여만에 내놓은 개혁

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몇년 동안이나 더 말잔치만 벌여야 한단 말인가.

축협중앙회는 89년 국보위에서 창설이 결정됐다. 87년 6·29선언 이후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낙농육우협회, 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에서는 축협의 조직과 운영에 문제가 있고 전문축협이 아닌 종합축협은 예시당초 태어나서는 안될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94년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는 독립채산제 실시 후 준비단체를 거쳐 협동조합은행 등 기능별 품목별 전문화를 기하도록 결정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 35개 농민·시민단체·학계인사들로 구성된 「21세기 농업개혁위원회」에서는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주장,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말리는 70년대 기틀리농민회의 농협민주화 주장에서 시작, 협동조합 개혁 논의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은 정부 독단의 갑작스런 안이 아니라 농민·민중·학은 동단체, 우루과이라운드 반대투쟁의 현장에서 우리 농업지킴이 운동을 실천해온 범농업인·시민연대간 논의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무슨 논의를 더 심도있게 해야 한단 말인가. 농가부채로 아반도주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IMF위기 상황을 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단 말인가.

중앙회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는 정서를 이해할 수 있지만 대의를 의해서는 소의를 희생시켜야 하고 농축산업과 조합원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성 명 서

-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즉각 일괄 사퇴하라!
- 정부는 축산인들의 저항을 사정으로 진압하는 폭압을 중단하라!

최근 개최된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조합장 총회에서 결의한 우리회의 자체대안인 연합회체제와 신경분리안을 근본부터 뒤엎고 농림부가 제시한 완전통합된 단일법인하에서 연합회적 성격의 법적장치를 갖추어 준다는 이름만 연합회인 반개혁적 통합안을 수용할 것을 비대위 위원들에게 종용하였다.

결국 표결까지 가서 비대위 위원들이 당초 총회에서 결의한 안으로 결론을 보았으나 회장은 결과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비대위 결론은 비대위 명의로 입법예고시한인 5월8일 농림부에 공식 제출하고 경영진 역시 5월9일(일요일) 오후8시51분에 FAX로 경영진이 마련한 안을 또다시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축산농민 조합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조합장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늘어나 반 축협적인 행위를 하며 구성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이러한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총회에서 결의한 자체대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다.

또한 농림부가 농림부 입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반대 의견과 저항세력이 형성되고 반개혁적 법안의 국회제출과 통과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불안과 조급함으로 당사자인 축협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광분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검찰의 제재추적 및 압수수색의 협박에 굴복하여 통합을 수용하는 백기 항복선언을 한 것은 더 이상 축산업과 조직지키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경영진에게 일말의 여지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즉시 일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밀어 부치기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비리수사가 종결된 마당에 또다시 표적사정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9. 5. 10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위원장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김정수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 사실은 이렇습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1 일선농협과 일선축협이 통합되어 1인당 대출
한도가 줄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함.

⇒ 농협·축협·인삼협의 중앙회는 1개로 통합하여 중복된 조직을 정비
하고 사업을 일선조합에 대폭 이양함. 그러나 일선농협과 일선
축협은 서로 통합하지 않고 각각 전문화하므로 1인당 대출한도가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필요도 없음.

잘못 알려진 내용 2 농업인은 농협 또는 축협중 한개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고 현재의 중복조합원은 정리됨.

⇒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또는 품목별·업종별 조합간에는 중복가입
할 수 있음. 다만 두 개이상의 지역농협에는 동시에 가입
할 수 없음.

잘못 알려진 내용 3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선조합을 강제로
합병하여 농업인 불편 초래

⇒ 일선조합 합병은 경제권·생활권을 고려하고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함. 조합이 합병되는 지역에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여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함.

협동조합이 농업인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생산자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여론을 더하는 곳)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정치적 사정의 칼날앞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대지 지적인 축합 일부근부에 대한 배려수치를 조속히 검토하고 더 이상 사정을 협동조합 통합안을 받아부처기 위한 인법수단으로 악용하지말라!
축합중합중앙회장은 개인배려에 대한 처벌이가 두의위에 대한 축합의 운영을 놓고 정부의 불경하는 국민공노할 민행을 중단하고 즉각 회회리**

- 28년에 축산농민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전국적 축합조합장들이 총회의 결의로써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축합의 기본 입장을 마련하여 정부가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을 중대한 연구하여온 박지 못 권민에게 능간의 대치생는 농민간연한 관능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등 각지에서 비롯되고있고 수정하여 개혁적인 발민으로 평가되고 있는 연합화제될 규리로 하는 가능한 분과, 통합한 연 합니다.
- 그러나 정부는 보려주지않 개혁이 걸친한 나머지 협동조합 간송 지지공명을 받아부처기 워지 협동조합에 대한 수사 갈라 나간영고 직후 또다시 배려의 악습을 갖사 "모어 걸린 고간이 워지 걸린 권경이"식의 고적사기에 나있습다.
- 불과 얼마 전 구성된 송진원 전총협회장 배려수치는 '98년 7월 이미 실시하였으나 반지 조지후 막막해 핏말 끊다기 워면이면 협동조합 통합방도이 맞은 미요한 시기에 배려수치의 여운중이외 다의적 수차들 물론 송진원회장을 배려한 수차만 협동조합 직원들을 감옥에 보사는 전제기할 용습습다.
- 그러나 또다시 축합의 정형의 축합 협동조합 개혁안을 따르지 않습다 하여 축합회장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개혁관련 실무 역 학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대우 조직수치신 개혁수치들 협동조합 개혁을배달 권국시제 축산농민들은 도어는 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계속된 축합중앙회장이 배려수치를 갖어 반 개혁적 협동조합 추진하여 배려공의와 사법지리를 놓고 늘순변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사정의 칼날앞에 굴복된 축합 축합중앙회장은 이 나라 축산농민과 축산농민들의 업원을 지킨다 지 굴복적 조 남기는 반역사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 우리는 협합을 회장이 본명으로 늘림부에 제출한 인은 건전 필요인을 정제하여 법적 대응을 통하여 반드시 청회 것입니다.
- 이는 일연한 불법행위로 축합은 사:내조 제4호에 규정된 "총회의 위경시행은 의결을 받지 않고 지:는 것으로 2년 이상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지:는 것"을 기는 법 제3조제2에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우리는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는 정부가 정형적이고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동조합 개혁하지 않고 권력의 위용 일제에 감응드르 쫓아 라 계속할 대어는 28년에 축산농민조합원, 28년에 축합노동자들의 총체적 지려를 규합 수 있을 것임은 결코아니 올미는 법: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개혁세력지 연대하여 극적 행동도 분사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단언히 천명하는 다.

국민여론!
이제는 진정한 협동조합이 정치권연의 그늘로 부터 벗어나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협동조합에 비합법적인 방법으
되고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타지유지된 다른 전권으로 농수산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운동은 가타지키 침들어
나다. 국민여론들의 강력한 이해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1999년 5월 13일

축합중앙회 노동조합,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지지 비상투쟁위원회

통합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농협은 농림부가 지난 3월 8일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하여 권력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과 아울러,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한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에 대해서도 진정 농업인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법으로서의 공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협조태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확정된 법률안에는 검증받은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나 일부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의해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내용들이 채로이 삽입되었습니다.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살피한 협동조합 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토의와 총과제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 마련한 당초 입법예고안과 다른 내용들은 결구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이같이 하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혁이란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협은 농업인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협동조합 개혁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1981년 축협이 농협에서 분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에 의한 목적규정화 실현과 축협생기부문의 내포이체제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일부 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기형적인 조직이 만들어 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또한, 개혁의 목적과 원칙에 맞는 법률안이 견질될 수 있도록 200만 농업인조합원과 함께 전 농업인의 힘을 결집시켜 나갈 것을 약속해 왔으며, 다음 사항을 협동조합 개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협동조합 개혁의 목적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통합중앙회의 기구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농·축·인삼협 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되면 반가움이 되어야 합니다. 단일 법인체로 통합한다고 하면서 사업부문별 전문성 제고와 책임강화를 위하여 이별 이래 조합장대표회의, 경영위원회 등 협의·의결기구들 따로 두고 대표이사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몇몇 사람이 몇몇 것이 아니라 조직운영비용을 줄여주고 조직체계의 갈등을 유발시켜 차이 남초의 농협 목적은 공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통합협동조합법의 명칭은 반드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여야 하고 통합중앙회의 명칭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야 합니다.

농협의 명칭에 경주협회 축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협동조합의 명칭에 사업분야를 표시하고 있으며, 1981년 축협 분리 이전에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발물의 입법사태, 국제기구의 명칭서체 및 표징법정서의 막대한

비용으로 동등 고려할 때 다른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명칭은 기관의 정체성(표현상)을 상징하는 핵심요소로서 결코 격양된 타협이나 정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협동조합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64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한방시 병행되는 조세도 전액 감면해 주심을 고려할 때, 도시와 농산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합쳐 반드시 정부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통합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협동조합이 부담하면 그 비용은 그대로 농업인에게 전가되므로 가족이나 이리은 농업인들로부터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협법은 농업이 지닌 일차적 생산의 특성을 수거업과 가공업의 일체로서는 부실해진 만큼, 추후위계한 인수, 무원조합 장려를 위한 한방 지원, 통합에 따른 조세 감면 및 통합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전경으로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아예라도 모든 관계자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보다 어떻게 하면 통합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머리를 맞대고 뜻을 한데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89. 5. 19

 **농협 통합협동조합법 입법 비상대책위원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상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극단적인 반개혁투쟁을 선동하는 축협노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

- 축협은 반개혁적인 5월 29일 집회를 즉각 취소하고 개혁에 동참하라 -
- 축협노조와 비대위는 반개혁적인 청원입법 서명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 축협노조는 강제적이고 기만적인 투쟁기금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 -
- 폭력집단식 투쟁방식으로 축협직원을 내모는 축협노조를 규탄한다 -

우리는 최근 '축협중앙회'와 일선 축협조합장들로 구성된 '강제적 통합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개혁방향에 공감하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5월 29일 또다시 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는 등 끝까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개혁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축협이 최근 '농축협중앙회의 농협·축협연합회 체계로의 전환'과 '새로운 중앙회 설립' 및 '신용사업분리를 통한 별도은행 설립' 등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농축산업협동조합법」을 청원입법하기 위한 반개혁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협동조합 개혁을 갈망하는 일선의 농민조합원들은 농민의 돈주머니를 내주려는 신용사업의 분리에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농축협중앙회를 법인화된 연합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중앙회를 설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중앙회 개혁을 회피해 보려는 기만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협개연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협동조합 개혁촉구를 위한 각도별 순회 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의 의견개진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축협노조가 자기들만 살아남기 위한 반개혁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투쟁기금 35억원 모금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축협노조는 이처럼 강제적으로 징수한 투쟁기금을 가지고 파업지도부를 구성하여 6월 중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개혁열망을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의 개혁입법 의지를 압박하기 위한 수많은 반개혁 활동을 기도하고 있다.

더구나 축협노조는 최근 소속 노조원들을 극단적인 반개혁 투쟁으로 내몰기 위해 구속자에 대해 1인당 1억6천만원씩 지급하고 사망자에까지 지원할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등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집단식 투쟁방법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축협노조는 지금이라도 당장 5백만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반개혁적인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작업과 선량한 축협직원들을 극한적인 투쟁으로 내몰기 위한 강제적인 모금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5월 29일 반개혁 집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협개연은 5백만 농민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반개혁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축협노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의 반개혁 기도를 분쇄하고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완수될 때까지 모든 참여단체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5월 20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증자협회 한국증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왜곡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 !

- 협개연 각도 순회농민대회를 왜곡선전한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 -

우리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5월 18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 협개연이 개최한 '협동조합 개혁촉구를 위한 각도별 순회 농민대회'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모여 정부안을 지지하고 오히려 협동조합을 정부에 떠넘기려고 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왜곡선전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현재 협개연이 주장하고 있는 농축협중앙회의 통합과 경합사업 이관을 통한 일선조합 육성, 철저한 독립사업부제 실시 등은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인 논의와 일선의 의견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렴하고 협개연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농은 마치 '농민단체들은 아무런 의견도 없다가 농림부가 안을 제시하나가 반농민적인 안인 줄도 모르고 지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며 일선 농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개혁에 애쓰고 있는 60여 농업단체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였다.

94년 농발위에서 신경분리와 연합회 체제에 의한 통합중앙회 구성, 시도 및 시군지부 폐지를 결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곡된 진실을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먼저 당시 농발위에서는 신경분리문제에 대해 1단계로 완전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특수은행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건의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 기존 중앙회의 시도 및 시군지부 해제도 건의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농발위가 당시 건의한 품목별, 업종별 연합회는 개별 농산물 중심의 전문 업종조합의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 전농이 주장하는 축종의 구분없이 축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축협조합을 기반으로 한 종합축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전농이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농림부안과 전농안으로 대별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위협천만한 자기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미 대부분의 농

민들은 신용사업을 협동조합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농축협중앙회를 이념만 농협·축협연합회로 바꾸고 그 위에 설립요한 옥상옥기구인 통합중앙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개혁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농은 지금이라도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가에 귀기울여야 한다. 일선에서는 전농이 왜 뺏고못지키기에 현안이 되어 있는 축협중앙회와 똑같은 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농의 개혁안이 일관성없이 뒤바뀌어 왔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전농이 주장하는 협동조합 개혁안의 경우 작년과 올해의 주장이 다르고, 새김행부가 들어선 올해에 들어와서도 중앙회 통합 하나만 들어도 찬성과 반대가 뒤바뀌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협개연은 그동안 농민단체중에서 유독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전농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하며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협개연이 전각을 순회하며 개최한 '협동조합 개혁촉구 각도별 농민대회'는 일선 농민조합원들의 진정한 개혁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안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아니라 오히려 농민조합원들에게 실의를 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없이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과연 일선 농민들이 지지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하며,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은 매도하는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5월 21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찰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목숨아희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시험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모욕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우유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동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돈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류수중임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통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전농이 5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3.18 전농집회 폭력시위와 관련 전농 유상옥 사무총장이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협동조합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로 이를 상호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5월 21일 서울지법 법정 공판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유상옥 사무총장은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업무 방해죄등이 적용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같은 사법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 행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전농이 3.18집회 폭력시위에 관해 피해자인 농협중앙회에 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폭력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농림부는 피해자인 농협중앙회에 선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기능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중앙회를 통합하여 슬림화하고 일선조합을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인 경제사업 중심으로 육성, 협동조합을 농업인 조합원에게 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신경분리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협동조합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재는 시기상조입니다. 따라서 금번 협동조합개혁에서는 원활한 농업자금지원 등 농업인을 위해 별도은행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다만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인사·급여체제가 완전 분리된 독립사업부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농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협동조합을 사금고·사조직화 하려한다는 것은 금번 협동조합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개혁과정에서 농업인·농민(농업)단체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농민단체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과정의 이견도 협동조합개혁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통합중앙회가 내년에 정식 출범하면 자연스럽게 조율되어 진정한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협동조합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개혁작업을 수행하면서 “여론조작”이나 “분열조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부정비리에 대한 재수사 여부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농업인·협동조합·농민(농업)단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광범위한 수사에서 나타난 각종 비리는 협동조합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협동조합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협동조합이 검찰수사로 입은 정신적 상처와 이미지 손상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도 농업인·농민단체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전농은 절대 다수 농업인의 참뜻을 받들어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이 무엇인지, 농업인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협동조합개혁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합니다.

1999년 5월 26일

농림부 농정국장 김 응 체



성 명 서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입법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즈음하여

- 농림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안"을 비판한다 -

1. 농림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안"(이하 "법안")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 농림부의 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농림부의 법안은 중앙회의 개혁과 관련하여 미사익적 기능의 통합중앙회, 경제사업의 연합회체제, 통합협동조합은행 등 근원적인 개혁을 외면하고, 기존체제를 고집하면서 3개 중앙회의 대 통합으로 오히려 비대화를 초래하여 개혁이 아닌 개악의 소지를 안고 있다.

- 이에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지난 4월 30일 결성 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창낸 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5월 13일 농림부 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농림부에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 그러나 농림부는 「국민연대」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비추고 「국민연대」 주장의 핵심은 피해비판 체 법제처에 이관함으로써 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2. 농림부는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안"의 근본적인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압박에 밀리고 있다.

- 농림부가 중앙회의 구조개혁과 조합원 중심의 조합구축, 전문조합과 그 연합회 설립의 자유, 실효성있는 지도감독체제의 확립 등을 반영하지 않은 농림부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정하지 않은 채 통합중앙회의 명칭, 대표이사 선출방법 등 지엽적인 사안에 치중하여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들 가리고 불필요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음은 기득권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 협동조합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조합 중심의 연합회를 폐제하고 모든 협동조합의 사업과 자금을 방한한 거대한 중앙회의 산하에 두고 사업과 자금의 하향적 통로만을 선장하여 모든 협동조합의 계장조직을 정채대행 기관화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상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반 개혁적인 기득권세력과 협동조합개혁의 공약을 지버린 정부의 야합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농림부는 농가부채해결과 신용사업 개혁은 의연하고 협동조합사업의 자율을 해치는 금감위와 재정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있다.

- 농림부는 신경분리를 반대하는 이유로 "협동조합은행"이 설립되면 금감위와 재정부의 감독강화로 조합업무의 자율은 해진다고 하였지만, 실은 신경분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금감위와 재정부의 감독강화를 전면 수용하고 협동조합 신용사업의 자율성을 크게 해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 「국민연대」는 경제사업의 강화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금융의 재 모습을 찾는 신용사업체제 구축을 위해 당면한 부실채권 정리책 위한 정부지원을 조건으로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협동조합은행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 그러나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를 회피하는 데 남급한 나머지 금감위와 재정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정작 조합과 중앙회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였다.

- 법제처에 제출한 농림부의 안은 은행법의 확대적용 뿐만 아니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기준과 재무기준, 중앙회의 자기자본비율 등을 금감위와 반드시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금감위 등이 요구한 내용을 전면 수용한 반면에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당초 의무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인의규정으로 후퇴하는 등 반농민적이고 반개혁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 농협의 경우 조합원의 인체비율이 12%를 넘어서고 있고, 중앙회는 8%를 넘고 있는 상황이며, 축협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도 담당부처로서 이에 대한 해결의 노력보다는 통합과 인력감축, 시설치분 등으로 미루고 있다. 조합의 인체비율은 조합원의 부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가부채 해결과 동시에 해결을 도모해야 할 사항이다.

- 농가부채 해결과 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조치와 특단의 농가부채 해결대책, 협동조합 은행체제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법안은 양자할 모두 회피함으로써 농민부채문제와 협동조합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특단의 농가부채 대책으로서 모든 농가부채를 향후 5년간 이자율 농건하고 상환을 유예하고 직관계를 통한 소액정책, 생산비 보장정책, 기술혁신, 협동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정책, 농민의 시장가치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혁,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연대주의의 실천, 생산력(생산물을 포함한 생산능력) 담보의 농업금융과 협동조합의 종합경영사업전개 원칙의 도입으로 농가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4.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는 올바른 협동조합개혁 입법정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협동조합개혁입법 범안기초위원회의 공식출범을 선언한다.

..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는 그 동안 농림부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지켜 보았으나 더 이상

사태가 진전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농림부의 잘못된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안의 문제점을 현장의 농민들에게 전면적으로 알려나가고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입법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5월 26일부터 전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 시군단위마다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이 공동으로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입법 민간기초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기일에 맞추어 입법안 작업의 경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 농가부채해결과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바라는 500만 농민과 양심적인 협동조합 인식원,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김대중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5월 26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공동대표 김병태 김중배 유초하 이갑용 정광훈

붙임 : 협동조합개혁입법 청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용지

정부의 반개혁적 협동조합 장악음모를 막아내고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올바른 협동조합개혁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해방이후 13년만에 늦깎이로 출판한 관제농협이 지금껏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화되기는 커녕 26년동안 군사정권에 묶여 신음하였고 농민이 바라는, 농축산부 제값받고 팔아주는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을 병자한 돈장사에 몰두하여 협동조합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21세기의 문턱에 선 오늘날, 아직도 정치적 중립조항에 위배하여 정치·사회적 기능을 상실당하고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협동조합을 농민의 조합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원칙에 입각한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농·축·임·인삼협 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고 통합중앙회는 경제, 신용사업을 하지 말고 회원조합의 지도, 감독, 교육, 훈련, 조사, 통계, 홍보, 농정활동 등을 수행하라!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확실하게 분리하여(독립법인)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은행이, 경제사업은 전국연합회가 맡도록 하라!
- 업종별, 품목별 전국연합회(독립법인) 결성을 보장하라!
- [합병촉진법] 폐지! 일선 지역농협의 강제적 합병 반대! 자율권을 보장하라!
-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폐지하라!
- 협동조합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민에게는 농축산물 가격보장, 소비자에게는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라!

번호	성명	주소	서명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주단감농업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회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YMCA연맹,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성명서

자주적 노조활동 방해하고 축협조직 말아먹는 박순용 회장 퇴진하라!

우리는 축협중앙회가 5월 25일 '회원조합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도 협조'라는 제하의 공문(문서번호 총무(급후)13401-733)을 회장 명의로 전국 축협에 시달리는데 대해 가혹이나 비상사태에 처한 축협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공문에서 박순용 축협 중앙회장은 농림부로부터 내려온 5월 21일자 지시사항(농림부 축정 51500-393호)과 관련된 것임을 전제한 뒤 *협동조합 통합논의와 관련 노사가 일치단결하여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며 *중앙회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내용의 노동조합 홍보인화물을 배포 중지시키고 *노조의 대규모 집회 및 파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할 것과 *노조활동이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 등 법제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전지도할 것 등을 전국 축협 조합장들에게 지시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협동조합 사태에 대해 자신의 무능력을 한껏 과시한(?) 박순용 회장이 아직까지 스스로를 축협조직의 대표로 생각하는 등 과도한 상상중에 빠져 있다는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농림부의 강제통합안 발표 이후 박회장은 축협조직의 진정한 요구를 대변하기는커녕 농림부안에 백기올 드는 등 일선 조합장은 물론 전체 직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전국 축협 곳곳에서는 중앙회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노조는 축협 조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를 자제시키느라 애를 먹은 바 있다. 그럼에도 박회장은 겉잡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축협조직을 지켜내기 위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 축협 구성원 중 그 누가 박순용 회장을 축협조직의 진정한 대표라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우리는 박회장에게 문서의 내용이 자주적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명백히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법 등 관련법에서 자유로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법은 사측이 노조의 홍보물을 검열하고 배포중지를 내릴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노조의 집회 및 파업을 막도록 지도하러니? 직원들 근로복지, 고용안정이나 힘쓰라니? 노동법 어느 곳에서도 사용자 노조의 파업권을 저지하고 노조의 활동방향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목은 없다.

전국축협노조는 금번 중앙회장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중앙회 건물 앞에서의 대대적인 집회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뿐만 아니라 박순용 중앙회장이 100만 양축농민들과 30만 축협주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축협조직을 말아먹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강도 높은 중앙회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과 아울러 농림부의 반개편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예 대한 가열찬 투쟁을 계속할 것을 천명한다.

1999년 5월 26일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일동

대한 매일	朝鮮日報	중앙일보	한국일보	합계희신문
5月21日/西	5月21日/西	5月21日/西	5月21日/西	5月21日/西

(이중령 할아버지가 드리는 글)
축협과 농협은 분야가 다릅니다. 축협과 농협을 합치는 것은 국어와 체육을 합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시간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름은 지닌 채 국가의 힘으로 축협과 농협을 합치면 안 됩니다. 협동조합 운동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축협과 농협입니다. 축협과 농협이 대동강을 넘어가려는 것은 본인이 상상해서 상상한 것입니다.

자본 민주국을 위해서 활동을 하던 분리가 우리 부모님이 주신바다 주이라는 단 말 할아버지께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 현성면 두성리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용인시 현성면 두성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현성면 용인시 현성면 두성리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용인시 현성면 두성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런데 요즘은 현성면에서, 현성면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용인시 현성면 두성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축협과 농협을 합치는데 있어, 이베에서 제 나가는지 어떻게 보지 이베에서는 '제 글자의 무관심이' 필요로 계속 기록을 도와주고 있어 주는 축협을 나리에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베의 정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학교에서 교육개혁의 첫번째가 세 학교 중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시대를 하나의 학교로 만든 모든 국민은 학생들과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자기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계단처럼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하시는 일 중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축협을 합치는 것은 오히려 이의 학생들의 소망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세이브 가장 큰 임무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같은 축협인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축협과 농협을 합치면 축협인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닙니다.

축협과 농협은 분야가 다릅니다. 축협과 농협을 합치는 것은 국어와 체육을 합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시간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존엄스러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도와 가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인들 그 공동체에서 희생하는 일은 나쁜 일입니다. 축협과 농협을 합치는데 축협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축협인들을 사회에서 황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협과 농협을 합치면, 그 기관은 우선 농민들을 위해서만 있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본래의 축협인들을 황폐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축협과 농협을 합치는데 있어, 이베에서 제 나가는지 어떻게 보지 이베에서는 '제 글자의 무관심이' 필요로 계속 기록을 도와주고 있어 주는 축협을 나리에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베의 정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학교에서 교육개혁의 첫번째가 세 학교 중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축협이 보았을 가치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셨고 그 자부심적인 아버지가 주신바다 주이라는 단 말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농협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데...

2001년에 되면 축협인들이 원한 자부심이라는 우리 안에서 기르는 것은 더 이상 기록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수업이 자유로워지면 제 우리 집에서 필요로 기록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축협이 없다면 그나마 도전을 하고 자부심 있는 것이 되어 더욱 발전한다고 합니다. 오호도 농협, 축협은 TV뉴스에 또 나오고 우리 아버지의 근심을 읽어낼 겁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축협과 농협을 합치는데 있어, 이베에서 제 나가는지 어떻게 보지 이베에서는 '제 글자의 무관심이' 필요로 계속 기록을 도와주고 있어 주는 축협을 나리에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베의 정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학교에서 교육개혁의 첫번째가 세 학교 중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축협과 농협을 합치는데 있어, 이베에서 제 나가는지 어떻게 보지 이베에서는 '제 글자의 무관심이' 필요로 계속 기록을 도와주고 있어 주는 축협을 나리에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베의 정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학교에서 교육개혁의 첫번째가 세 학교 중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축협과 농협을 합치는데 있어, 이베에서 제 나가는지 어떻게 보지 이베에서는 '제 글자의 무관심이' 필요로 계속 기록을 도와주고 있어 주는 축협을 나리에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베의 정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학교에서 교육개혁의 첫번째가 세 학교 중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베의 학교의 정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광고는 축협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상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의 입법청원 서명에 우려를 표명한다 - 대다수 농민들의 요구와 다른 입법청원이 개혁추구활동인가? -

협개연은 최근 ‘한국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가 이미 대다수 농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혁의 큰 방향이 결정된 협동조합 개혁안과 다른 ‘입법청원’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비대한 협동조합중앙회를 슬림화하여 통합하고 사업기능을 일선 회원조합으로 대폭 이양하여 회원조합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5백만 농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하나로 통합될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중앙회 내에서 지속적인 경제사업 지원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도 협개연의 각도별 순회 범농업인대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농민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법인화된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연합체를 만들고 그 위에 ‘옥상옥’에 불과한 통합중앙회를 설립하며 신용사업을 협동조합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대다수 농민들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노동단체들과 공동명의로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개혁을 위한 활동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큰 방향을 조속히 마무리해야만 일선 협동조합의 세부적인 개혁에 돌입할 수 있는데도 농민조합원들에 의해 이미 명확히 결정된 개혁과제와 다른 주장을 입법청원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동의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가 농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여 협동조합 개혁을 앞당기고 보다 많은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들 통해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개혁이 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5월 27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 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굴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목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모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순진무구한 동심까지 반개혁에 악용하는 축협노조는 각성하라 !

- 축협노조의 5월 27일자 중앙일간지 광고 내용을 비판한다 -

우리는 5월 27일자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축산농가의 자녀인 경기도 용인군 원삼초등학교 6학년 송지연양의 글을 통해 축협노조가 또다시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마치 국어와 체육을 합치는 것으로 비유하여 지역 농협과 지역축협을 통합시키는 양 거짓선전으로 어린 동심까지 동원하는 반교육적 행위에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조합원이 주인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대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고 중앙회 통합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중앙회의 통합으로 협동조합간 중복사업을 피하고 중앙회가 관장하던 사업을 지역의 회원조합으로 이관시키고 전문화시키자는 것임에도 비유가 되지도 않는 국어와 체육을 합치는 예를 들면서 초등학생까지 동원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가령 축산 중에서 한우문제가 개방시 가장 심각한 사태가 예상되므로 한우농가들만의 전문조합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개혁안임에도 오히려 한우조합 설립 자체를 거부해온 축협이 어린 아동까지 동원하여 거짓 선전자료로 활용하는 수법은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조잡하고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지속한다면 전국의 모든 초중고 및 대학의 학생들에게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이 필요없다고 보기에 침묵하지만 만약 또다시 이런 거짓행위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교육당국을 통해 홍보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치 일선의 농협과 축협이 통합되어 하루아침에 축협이 없어지는 것처럼 순진무구한 동심까지 악용하는 치졸한 작태에 대해 동조할 축산농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수록 국민들은 축협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축협노조가 진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직원들의 소중한 월급을 팔쓰듯이 소모하는 반개혁 선동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축산농민을 위하고 우리 축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우선적인 노력을 쏟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1999년 5월 27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더한양돈협회 대한은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목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문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5월26일)성명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우선 농업분야 개혁의 핵심과제인 「협동조합개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도 금번 협동조합개혁을 과거와는 달리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개혁하여 진정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그동안 밤잠을 설치가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고, 개혁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21세기 정보·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느냐가 협동조합 개혁의 처음과 끝입니다.

어떠한 의도나 예단도 없이 WTO완전개방체제하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 유통개혁을 성공시키고 신지식농업을 구현하여 우리 농업의 살길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대의 5월 26일 성명서」 내용을 접하면서 그동안 협동조합개혁안이 대다수 농업인과 관련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대의 주장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제기하는 것은 민주원칙을 어기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국민연대에서 제기한 내용중 신경분리문제는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과정 속에서 밝힌 것처럼 협동조합이 경제사업 중심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협동조합개혁에서는 원활한 농업자금지원 등 농업인을 위해 별도은행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며, 다만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인사·금융체제가 법적으로 완전 분리된 독립사업부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를두고 정부가 통합중앙회를 산하에 두고 사업과 자금의 하향적 통로만을 설정하여 정책대행 기관화하기 위해 별도의 협동조합 은행 설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협동조합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감위와 재정부의 감독강화는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는 중앙회 신용사업의 위축보다는 체질강화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건전성을 상실하고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대에서 지적한 회원조합 중심의 연합회체제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체제이나, 업종별 조합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은 우리의 현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입니다.

연합회는 같은 품목·같은 업종의 조합끼리 모여서 만들어야 그 효과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품목별 또는 업종별 특성이 없는 지역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합회의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협동조합개혁은 일선조합 전문화를 기초로 유럽이나 미국식 연합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처에 제출한 농림부안에 대한 지적내용에 대해선 일부 다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은행법은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확대적용하였습니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중앙회장이 정하되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은 금감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단서로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일선조합도 제1금융권 수준의 건전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회는 종전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 기준의 경우 중앙회 신용사업은 일반 시중은행과 같기때문에 금감위의 건전성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림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는 등 국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금감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정부지원 규정이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은 중앙회가 우선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한후 통합에 따른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한 무조건적인 지원만이 국민연대가 생각하는 '농민적'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금번 협동조합개혁은 경쟁력 있고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합리적인 협동조합을 탄생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자는데 있습니다. 개혁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토대를 마련하여 실천에 옮길 때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이면서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금번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개혁의 본질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실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9년 5월 31일

농림부 농정국장 김 응 채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 축협 노동자 쟁기대회

- ◆ 일 시 : 1999년 6월 1일 오후 2시
- ◆ 장 소 : 과천 종합청사 앞(잔디구장)
- ◆ 주 최 :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 전국 축협 단일 노동조합

[사전 행사] (14:00~14:40) ----- 사회자 나동훈 (전남도지회 분회)

- 구호 외치기
- 다함께 하는 울동배우기
- 노래패 공연 :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 울동패 공연 :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본 대회] (14:40~17:00) ----- 사회자 나동훈 (전남도지회 분회)

- 개회사
- 민중의례
 - ☞ 묵념
 -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대회사 : 김정수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
- 격려사 : 채운석 사무금융노련 위원장
- “철의노동자” 제창
- 문화공연 : 건국대 코믹 2 (판토마임)
- 연대사 : 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사 : 김의열 전국축협노조 위원장
- “또 다시 앞으로” 제창
- 초청가수 : 김미정(꽃다지)
- 투쟁결의문 :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문선곤, 서울축협 노동조합 김정원
- 폐회

결 의 문

우리 축산농민 및 축협노동자는 축산말살이 불을 보듯 뻔한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이 자리에 섰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자율과 자주적 결사책임에도 정부에서는 조합원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협동조합 통합을 강제로 밀어부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조합원의 의사에 의한 자율적인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며 농림부의 협동조합 강제통합 밀어부치기를 기필코 저지키 위해 결사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대내외에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농림부는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배제된 정부주도의 강제적 단순 통합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농림부는 농·축협 통합에 대한 현장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 정부는 헌법상 명시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동조합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는 조합원이 협동조합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혁자율권을 보장하라.
- 농림부는 농축산인 현혹하는 개혁논속임을 중단하고 농가부채 해결 및 마사회 환원 대통령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통합 결정을 주도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축산인·축협인의 역량을 총결집, 우리나라 축산업사수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 6. 1

협동조합 강제 통합저지 축협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결 의 문

전국의 30만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표한 우리는 비민주적인 농·축협 등 협동조합 통합을 지지하기 위하여 끌어오르는 율 분과 분노를 사이며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자율과 자주의 결사체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정부가 보호·육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우리의 조직인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뜻을 무시한 채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축협조합원 대표 일동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조합 개혁을 대·내외에 천명코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축산농민조합원은 축산업의 전문성 상실과 축협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농림부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농림부는 정부주도의 강제적이고 비민주적인 협동조합 개혁안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농림부는 조합원이 협동조합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통합논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하나, 농림부는 하루빨리 협동조합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수입 개방과 농가부채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하나,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한 농림부는 철저히 반성하라.

하나, 우리 축협 조합원들은 우리의 뜻이 관철 될 때까지 결사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1999. 6. 4

전국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일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농민과의 약속파기, 슬그머니 금리인상 철회하고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라!

지난 2월부터 농민들은 바쁜 농사일도 미문채 각 지역의 농민대회, 협동조합에 대한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시중은행보다 많은 예대마진폭을 축소, 고금리를 인하하여 농민의 농가부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그동안 농민위에 군림하며 임직원을 위한 조합으로 변질되어 버린 협동조합을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문제제기의 시작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농협들은 금리를 소폭으로나마 인하하며 3월 중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인하할 것과 금리질정에 농민회 등 농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경제·지도사업에 보다 노력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협이 이러한 약속을 파기하고 농번기라는 상황을 악용하여 슬그머니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나 인상을 기도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수요자를 찾아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고 농협 또한 대출할 곳을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는 판에 대출금리를 더욱 인하하지는 못할 당장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농민들을 더욱 목격하는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3-4월중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금리를 12%또는 11%대로 내리겠다"는 농민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마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급직은 그대로인데 일선 창구와 기능직 직원들의 정리해고로 마무리되어 오히려 농민에게 불편을 가중화시키는 반개혁적인 자세를 우리는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이제 개혁이라는 폭풍우가 시간끌기로 지나갔다고 판단하고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또다시 농민의 고통을 빨아 임직원을 위한 조합을 유지하려 하는가?

우리는 농협이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다시 돈장사에만 치중하여 농민의 고통을 계속 가중시킨다면 농협의 주인인 500만 농민과 함께 농협의 의도를 방관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농민의 조합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9년 6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鄭光勳)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2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 우리 농업이 정말로 **파괴사상식**이론몰이와 표적사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
- 농정실패 책임을 왜 농업이 뒤집어써야만 합니까? -

우리 농업인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협동조합개혁과 통합이 진정한 농촌과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놓고 농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농민을 위한 통합협동조합법을 기대하며 청담한 심정을 억누르고 개척에 따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왔다. 각오로 건전 입법을 정부에 호소하며 그 진행상황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과거에 관행에 반목했던 진정한 개혁을 추구하는 농민과 농업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광 이해집단'에 의해 강요되고 있음은 견제할 수 없어 우리 전 농업인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차임에 담아 반개척사 책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언론과 서정기관을 중동원하여 피검지점으로 해도한 것을 먼저 사과하여야 합니다.

1. 정부는 협동조합만 개혁하고 통합하면 오늘의 농촌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 농정당국자들은 협동조합개혁에 앞서 농정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용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합니다.
 - ▶ 정부는 농민을 '수소개척사'로 규정하여 대한 서방개혁을 백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 우리 농민에게 투기성격을 조성하고 농촌을 타인과 송삼 리브호영로 제의 우리 정선의 뿌리인 농촌을 황폐화 시켰습니까?
 - ▶ 농가당체가 허시 농민의 책임인 농민을 호도하며 농정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대하여 농민과 농협에 공식 사죄하고 농가당체 개혁대책을 채수할 시위활동에 해야 합니다.

2. 농업부의 명칭부터 농업인부로 개명해야 할 것입니다.
 - ▶ 정부각 부처에서 '농민'이란 단어를 '농업인'으로 바꾸고 '농민'이란 단어를 '농업인'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 ▶ '농업인'이란 단어를 '농민'으로 바꾸고 '농민'이란 단어를 '농업인'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 ▶ '농업인'이란 단어를 '농민'으로 바꾸고 '농민'이란 단어를 '농업인'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3.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서 64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한센물 끌어 갖고 있습니다.

- ▶ 농협은 국민의 믿거리를 책임지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입니다.
- ▶ 협동조합을 통합하지 않는다면 지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 ▶ 통합비용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 ▶ 농협은 타의에 의한 인민체제의 매도로 인정한 조성을 원합니다.

4.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 정부는 통합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하여 농협을 다시 정부의 손아래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 ▶ 정부의 차관권 집행은 농민본위의 농업정책과 협동조합경영의 신장책이라는 명목입니다. 이것은 타의에 의한 인민체제의 매도로 인정한 조성을 원합니다.

5. 통합조직 설립위원회 구성은 효율적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 3개협동조합의 자산규모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조직인 책임인원이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의 단점

1. 우리는 개혁에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간파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농민과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한다.
2. 우리는 타의상 농민과 농업인을 기만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농민과 농업인의 차관을 굳게 지키다.
3. 우리는 개혁에 역행하고 조직과 농민으로부터 지원받는 행위를 하는 자는 내부에서부터 반분역원하고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 만유기에 앞장선다.

● 농민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농업인은 진실 농민을 위한 농업인으로 거듭나고 국민에게서도 더욱 정진하여 국가 수급기초에 국가 정책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급기초의 면목은 농민으로서 차관을 영예를 굳건히 지키 농민과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저희의 함께 자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6. 5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과 농업노동자 생존권 시수를 위한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본문 소위문서작성위원회가 작성했습니다.

200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입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겉으로만 개혁동참, 반개혁 지원활동을 지속하는
축협중앙회와 박순용회장의 이중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 박순용 축협회장은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를 즉각 해체하라 -
- 사이비 축산농민 유인명은 축산농가 앞에 사죄하고 물러가라 -
- 이중준 비대위원장은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 배후조종을 중단하라 -
- 정남시 부장 등 축협의 반개혁 행위를 배후조종하는 실무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최근 '협동조합개혁법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축협이 모든 조직과 인원을 총동원하여 중앙회 통합 저지 등을 내세우며 반개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최근 축협중앙회가 겉으로는 중앙회 통합 등 농민들이 요구하는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해놓고서 한편으로는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 결성을 지원하는 등 은근 반개혁활동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박순용 축협회장이 1주일 안에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를 책임지고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박순용 회장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할 경우 축협의 반개혁 행위를 비호하고 사주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지난 6월 4일에는 아무런 실체나 대표성도 없는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를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결성하였으며, 대표를 맡은 유인명씨의 경우 축산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이비 축산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낙진법 개정 등에서 축산농가의 요구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선동에 앞장서는 유인명씨가 소위 축협조합원 대표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천하의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축협비대위(위원장 이중준)가 이번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설립을 지원, 배후 조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만에 하나 일간지광고를 게재하는데 있어 축협노조의 돈을 받는

파렴치한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짓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축협비대위가 배후에서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를 만들어 노조의 돈을 끌어다 개혁반대에 나선다면 전체 농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협개연의 입장이다. 축협비대위가 진정으로 축산농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협동조합 개혁에 동참하여 축산농민의 실익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충고하는 바이다.

평소 축산조합원 대표는 축협조합장임을 자처해온 축협이 별도로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를 전면에 내세워 반개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합당 2명씩 차출하도록 통보하여 결성한 것을 봤을 때, 과연 박순용 회장과 축협중앙회가 개혁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우리는 현재 걸로만 개혁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결성에 협조하는 등 개혁반대세력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축협중앙회 간부들의 반개혁 음모를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축협의 모든 반개혁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하며 지원하고 있는 경남시 회원 지원부장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즉각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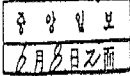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농림부가 개혁반대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추구하고 현재와 같은 미온적 태도를 지속할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걸로만 개혁에 참여하는 척 하면서 온갖 반개혁 행위를 교묘히 선동하고 지원하는 반개혁 세력을 즉각 차단하지 못한다면 5백만 농민들이 염원하는 협동조합 개혁은 더욱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를 결성토록 방관하여 반개혁세력을 묵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축협중앙회와 박순용 회장의 이중적 행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축협중앙회와 박순용 회장이 진정으로 개혁에 동참코자 한다면 반개혁세력의 집합체인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를 즉각 해체하고 이에 동조하는 임직원을 처벌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대책을 즉각 제시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5백만 농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999년 6월 7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 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에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영농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시험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이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표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동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대통령님께 드리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탄원서〉

축산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강제통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NFK라는 바탕이후 최대의 국민국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렇게 성리본 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우리 축협조합원의 탄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며 글을 올립니다.

우리 축산농민은 협동조합 개혁은 원하되 단 농·축협중화회의 단순통합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축협조합원은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앙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더욱 전문화·세분화되는 세계적 추세를 보아도, 저벌을 해소해 가는 국내경제의 개혁과정을 보아도 지금 농림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개혁법안이라기보다는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공포조치, 다시 말씀드리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돈놀이여한 최종하는 개혁적인 협동조합개혁을 탄생시키는 개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농민과 역사 앞에 뒤틀린 개혁, 진정으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원합니다.

우리 나라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품을 떠나 농민 위에 군림했던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스스로 시비 피기를 자성했던 신념 없는 협동조합 임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 협동조합 개혁도 농림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 국정보고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화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지시는 시늉만 했지 사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농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협동조합이 개혁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협동조합 개혁이 논의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농민의 몫입니다.

협동조합 개혁이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며 농림부의 강압에 의해 피행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비리수사가 마무리된 마당에 다시 시작된 축협안사등에 대한 저차수적 및 합수수적 등 수사진행은 협동조합 개혁을 저류시키며 정부의 개혁추진방법과 그 순수성에 의심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농림부의 무리한 개혁추진과 강압에 축협중앙회장은 축산인 조합원 대부분과 명백한 반대여의와 28만여 축협 조합원들의 대표인 전국의 조합장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조합원 총의를 무시하고 협동조합 단순통합안에 억지순행으로 동의함으로써 축산인 전체의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협동조합 개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축산인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협동조합은 동종업에 종사하는 경제적 학자들의 자주적인 이익단체이지 전체 농민을 대변하는 국가기관이나 공사가 아니며, 은 농협조합원이, 축협은 축협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은 그야말로 강제통합인 것입니다.

22만여 축협조합원을 대표하여 저희 「전국 축협조합원 대표자 협의회」 구성원 일동은 농림부가 일벌고하여 국무회의에 상거 정중인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에 의한 농·축·인상협중앙의 단순통합안을 진정한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이미 철의 대동농민에 탄원드리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민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1999. 6. 4.
전국 축협조합원 일동

전국 축협조합원 대표자 협의회 (회장) 이인숙조합원 부인영, (부회장) 서광 - 서우도회장 - 서울축협조합원 이세원, 경기도회장 - 영남축협조합원 권영우, 강원도 - 광주축협조합원 최정일, 충북도회장 - 경남축협조합원 김희찬, 충남도회장 - 전국농축협조합원 김경석, 전북도회장 - 전북축협조합원 장영익, 전남도회장 - 순천축협조합원 장영익, 경북도회장 - 경상북축협조합원 최재철, 경남도회장 - 경상남축협조합원 장영도, (의심조합원대표) 경북경남축협조합원 장영익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성명서〉

농림부 '농업인협동조합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즈음하여 -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협동조합을 개혁하여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개악안이다〉

1. 6월 8일 국무회의에서는 농림부가 제출하여 법제처 심의를 거쳐 상정된 반개혁적인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이하 정부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하여 개혁을 열망하는 농민조합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5월 8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병훈의장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공동대표들을 단란 자리에서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대폭 수정하여 개혁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법제처로 넘어가 법안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오히려 금감위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법안과 함께 자조·자율적인 조합을 강제로 합병할 수 있는 '합병 촉진법'(축합 포함)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반개혁적 내용과 특소조합,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등으로 보아 국회처리 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되고 있으나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약을 지키고 협동조합의 개혁을 바란다면 재가해서는 안될 악법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2. 정부법안은 지금의 협동조합 비리와 부실을 근본적으로 처방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정부와 중앙회의 예측을 강화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중앙회장이 구속되었고 이번에도 부정비리 혐의로 280여명의 임직원들이 사법처리될 정도로 파행적이고 왜곡된 오늘의 협동조합 문제점은 ①중앙회의 조직이 비대하고 ②중앙회가 정부의 통제하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③중앙회가 신용사업(=농장사)이 중심이 되어 돈을 매개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하며 경제사업은 중단시 하고 ④협동조합이 정부정책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⑤협동조합이 기독교세력의 참관, 편중대출, 횡령, 배임, 인사청탁 등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않고 지도, 교육, 조사, 감독, 농정활동 등 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기능만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법안에서는 여전히 통합중앙회가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체이면서 오히려 정치사회적 기능은 봉쇄당하고 있고 (제7조: 정치에의 관여금지) 신용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은 추가로 확대하는 등 조직의 비대, 회원조합에 대한 군림, 신용사업중심의 사업, 정부에 의한 예측 등의 문제들이 극복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정부법안이 173조와 부칙 18조라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협동조합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할 부분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여 조직구조부터 사업까지 모두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보다 오히려 정부에 의한 협동조합의 통제가 강화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법안 마련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으로 입관하였다.

- '국민의 정부' 핵심 농정공약에 따라 작년 7월 '협동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논의가 시작되어

농협안과 91년 합의안을 중심으로 3가지 안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8개월 동안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2월 24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3월 8일, 농림부가 합의되지 않은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진격 발표해 버린 것이다.

-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정부법안은 6월 8일 국무회의까지 많은 의견과 과정을 거치는 듯 하였으나 실상은 정부의 안을 그대로 관철시키 나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진농과 '협동조합 국민연대'에 대해 천서, 이론조사, 피문서, 전화 회유 등의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의견을 막고 분열을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와 독재적 반상으로 인편하였다.

- 게다가 6월 9일 고위당정회의를 앞두고 정부안에 동조하는 농민단체장들은 초빙하여 국무총리와의 오찬을 중재하는 등 일부 농민단체를 이용하여 마치 전체농민의 의견인 양 호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4. 김성훈 장관의 정부법안 추진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이 퇴색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농림부 국정개혁보고)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관련하여 "협동조합 개혁은 오랜 숙원이므로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또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을 수용해 가면서, 그러나 원칙은 확고히 지켜가면서 이번 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 내어야 한다."고 하였다.

-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 평소 자신의 농업관과 농정개혁의 방향이 담겨있는 '대중 경제론'에서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상향식 운영이 되어야 하며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여 경제사업 중심의 연합회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떠부어 볼 때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김성훈 장관은 이러한 대통령의 기대와 지시할 제대로 받아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차, 내용, 논의주제 설정 등 모든 점에서 반개혁적, 반협동조합적 모습을 드러내어 '국민의 정부' 개혁의 지를 무색케 한 것이다.

5.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역사적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적 개혁입법청원을 통해서 반드시 협동조합을 개혁할 것이다.

-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정부가 계속 장악하려 한다면 여전히 협동조합은 반개혁의 표상으로 남게 된 것이며 그리하여 차기 정권하에서도 94년, 99년과 마찬가지로 비리와 부실로 중앙회장과 임직원이 구속되고 협동조합은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행이 재연되게 될 것이다.

- 이를 막기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는 정부의 사이비 개혁에 맞서 전국민적인 입법청원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6. 협동조합! 정부가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면 농민과 국민의 개혁운동에 맡겨야 할 것이다.

1999년 6월 9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공동대표 김병태 김중배 유초하 이갑용 정광훈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주단감농업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YMCA연맹,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정부의 통합협동조합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농협은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의 신의·의결을 가진 정부의 통합협동조합 법률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협은 지난 3월 8일 발표된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과 함께 명실공히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 농협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농·속·인심협동조합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뿐만 아니라,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여 규모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많은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은 국민적 공감대와 농업인의 여망을 담아 마련한 정부의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됨으로써 하루빨리 진정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새 출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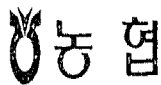
다만,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의 세부내용 중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과정에서 개혁의 기본목적과 농업인 조합원의 뜻에 맞게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통합 협동조합 중앙회가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협동조합이 조속히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통합협동조합법과 중앙회의 명칭을 「농업인협동조합법」과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하는 것은 사업중심의 협동조합이 사람중심의 운동단체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든 농업관련 협동조합들이 「농업인」이 아닌 「농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협동조합법과 중앙회의 명칭은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로 우리 농협은 한글말씀이 자세로 협동조합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1999. 6.



결 의 문

우리 축산농민 및 축협노동자는 축산말살이 불을 보듯 뻔한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동조합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이 자리에 섰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자율과 자주적 결사책임에도 정부에서는 조합원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협동조합 통합을 강제로 밀어부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조합원의 의사에 의한 자율적인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며 농림부의 협동조합 강제통합 밀어부치기를 기필코 저지키 위해 결사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대내외에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농림부는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배제된 정부주도의 강제적 단순 통합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농림부는 농·축협 통합에 대한 찬반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3. 정부는 헌법상 명시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동조합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4. 농림부는 조합원이 협동조합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혁자율권을 보장하라.
5. 농림부는 농축산인 현혹하는 개혁논속임을 중단하고 농가부채 해결 및 마사회 현원 대통령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6.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통합 결정을 주도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축산인·축협인의 역량을 총결집, 우리나라 축산업사수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9. 6. 10

협동조합 강제 통합저지 축협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국민연대 6월 9일 성명서”에 대하여

협동조합개혁추진작업단

- 농업과 협동조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농업인 단체중심의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가 현실과 동떨어진 피상적인 주장만으로 협동조합개혁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며 유감스러운 행태임.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담긴 개혁의 본질은 협동조합을 조합장이나 임직원 중심에서 농업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자율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 핵심임.
- 이를 위해 중앙회장은 지도·농정·감사기능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정활동에 전념하면서 사업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게 하였음. 한편 일선조합과 경합되는 중앙회의 사업금지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아 비대해진 중앙회의 사업을 축소해 나가면서 일선조합을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중심체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개혁안은 절대다수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국민연대가 ‘농업인의 개혁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악안’이라며 개혁의 진실된 내용과 동떨어진 일방통행식의 무책임한 발언만을 일삼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임.
- 국민연대가 제7조 (정치에의 관여금지) 조항을 예를 들어 정치·사회적 기능이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금번 협동조합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씁음.

□ 국민연대의 ‘통합중앙회의 종합적 기능 수행’ ‘신용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 강화에 대한 비판’ ‘정부에 의한 협동조합 통제 강화 문제’에 관한 주장은 협동조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반발세력의 주장에 편승하여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음.

○ 통합중앙회의 조직이 예전과 동일하게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임.

○ 통합중앙회는 외형상으론 하나의 독립법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앙회장과 사업 전담대표이사가 각각 다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예전의 중앙회 조직과 전혀 다른 것임.

○ 특히 3개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중복된 기능의 조정과 일선조합으로의 사업이관 등에 따라 중앙회 조직은 슬림화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 신용사업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강화는 금융시장에서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중앙회 신용사업의 위축보다는 체질강화로 건전한 발전에도모하기 위한 것임. 만일 건전성을 상실하고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임.

○ 신경분리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농축산업 분야에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별도 법인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체 농업인이 원하지 않는 신경분리를 주장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함.

□ 법안 마련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민주절차에 의거한 의견수렴과정과 절대다수 농업인의 진실된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임.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그동안 많은 농업인과 관련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대는 자기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비민주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원칙에 어긋난 것임.

○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내용을 국민과 농업인에게 널리 알려 이해를 돕는 것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를 줄이기 위한 것임. 이와같은 홍보를 관료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여론의 수렴과 정책의 공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정부법안 추진과정에서 개혁이 퇴색되었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수차례 밝혔듯이 금번 협동조합 개혁은 농업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자율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한다는 분명한 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것임.

○ 오히려 국민연대는 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인해 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잘못 호도되어 일부 농업인과 협동조합 임직원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대한 강한 책임감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지난 5월 8일 김성훈장관이 전농 정광훈의장, 국민연대 공동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대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키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임.
- 이날(5월 8일) 정부는 국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하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시기상조이며, 향후 점차적인 개혁을 통해 바람직한 협동조합개혁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민연대의 주장처럼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평가는 역사속에서 이루어질 것임. 정부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협동조합개혁을 소신껏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검찰은 원철회 전 농협중앙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

1. 원철회 전 농협중앙회장이 정관계 인사 150여명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과 억값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일과 특히 여당원과 장관에게 정치자금으로 수천만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집하면서 현재 농협으로부터 고금리의 연체이자와 대금규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분노와 증격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이어야 할 협동조합이 농민들의 목소리는 의면한 채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은갖 부정과 비리를 숨겨올 수 있었던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2. 농협중앙회장이 비지금을 조성한 것도 불법이러거니와 현재 협동조합개혁이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개악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농협중앙회장의 로비자금이 무엇을 위해 쓰여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94년의 경우에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개혁적인 내용을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개혁이 골거품이 되어 버린것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기독교총회의 불법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지 않았던가.

3.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농협의 비리로 인한 농민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 진정한 개혁을 촉구했던 전농의 유상욱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악의에 찬 수사로 감옥에 가두어놓은 반면에 원철회 전 중앙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로비사실에 대해서는 자금이 소액이라고 추정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결과에서도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지금 사용내역을 밝혀낼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기독교 세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원철회 전 농협중앙회장의 비지금 로비사건은 작년 협동조합 개혁논의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제3안이 나온 후 논의를 중단하였다가 그 안에 기초한 정부안이 일방적으로 상정되어 추진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의혹들과 관련되어 있음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검찰은 K의원과 K장관 등 정치인 로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없이 명백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마무리한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비리 수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재수사로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과 국민의 정부는 농민과 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협동조합은 또다시 비리와 불법의 도가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5. 또한 이미 밝혀졌듯이 기존의 농협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고 협동조합을 정부의 통제아래 두려고 하는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을 즉각 철폐하고 협동조합을 농민의 조합으로 되돌리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작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6. 전농과 500만 농민, 4천만 국민은 정치권에 대한 뇌물없는 사회, 행정당국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주적인 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란다.

1999년 6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성명서

- 조폐공사 파업공작과 유사한 사건이 협동조합 통합과정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

은 국민과 노동계를 경악케 한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같은 정치공작이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정부는 협동조합 개혁을 빌미로 농촌지역에 영향력이 큰 협동조합을 권력의 시너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로 협동조합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3월8일 급작스럽게 협동조합 통합을 기사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전격 발표했다. 농림부는 '98년 8월경 감사원에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농민들의 자주조직이자 순수 민간단체인 협동조합에 대해 감사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과거와는 달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구석구석 파헤치기 시작했다. 더불어 협동조합의 단속통합으로 야기될 협동조합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안 발표('99.3.8)적전인 2월25일에는 농협, 3월2일에는 축협과 입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전격 발표되었고 곧이어 대대적인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전국의 검찰력을 총동원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비리수사 착수에 나섰다.

협동조합 통합작업과 계획된 비리수사와 사정,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교묘히 병행했던 것이다. 이에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던 협동조합경영진들은 사정의 칼날앞에 귀족은 듯 짙소리 한번 못내며 협동조합의 주인인 현장 조합원들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정부에 질질 끌려 다니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협동조합을 권력에 팔아 넘기며 정부와 합작하기 시작했다.

협동조합 비리수사로 송찬원 전축협중앙회장과 원철희 전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사상유례가 없는 수많은 협동조합 임직원들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 수사가 종결된 마당에 축협내에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철저히 짓밟기 위해 또다시 일부 축협중앙회 임직원을 비롯한 그 가족친척 등 90여명에 대한 계략추적 및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40여명의 일선조합장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등 지금도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농촌현장의 축산농민조합원들은 통합을 적극 반대함에도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고 정부의 통합작업에 원천적으로 동의한다는 합의를 유도하였고 이를 마치 전체 축산농민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양 언론플레이를 해였고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며 협동조합 직원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밥그릇싸움으로 매도해 나간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하에서 일부 집단들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표적사정을 행하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정치공작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앞에 고발하며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주모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협동조합의 개혁은 철저히 민주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협동조합이 농민들의 자율적 자주조직이며 민간단체인 만큼 그 주인인 농축산농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농축산농민들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발전과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염원하며 상기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

1999. 6. 11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비상투쟁위원회 위원장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김정수

< 성명서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전국축협조합장 입장

- 농림부가 입안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협동조합 개혁의 주체와 본질이 크게 오도된 채 개악적 소지를 안고 있는 이 입법안이 국회 상정까지 앞두게 된 지금에 이르러 우리는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며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축협조합장들은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왔다. 또 앞으로도 올바른 개혁이면 어떠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동참하고 따를 컷임을 밝힌다.
- 그러나 지금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축산업의 전문성과 협동조합의 근본이념을 말살하고, 관계 공통 협동조합을 획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이 무엇이고 또한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 조합장들 뿐만아니라 축산인,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 그 모든 의견의 결론은 농축산인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고 개혁의 주체는 농축산인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

(안)은 개혁 주체인 축산농민 조합원과 그 대표인 조합장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 당초 우리 축협 조합장들은 축산업의 전문성과 협동조합의 자주성을 들어 협동조합의 단순·강제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그러나 개혁래의에 동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조합장들은 수 차례 입장을 조정, 「독립법인연합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능축산인,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합리적 대안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제시해 왔다.
- 그러나 농림부는 이같은 전국 축협조합장들의 충정과 노력을 무시한 채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산업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개악적 입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 우리는 농림부의 개혁 독선주의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개악적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다 더 올바른 개혁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전체 축산인과 축협의 역량을 집중코자 한다.
- 또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추진 과정에서 중앙회 회장과 일부 경영진이 보여준 무소신과 반축산, 반축협적 작태는 목과할 수 없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해명을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장의 이름으로 이를 논의할 것이다.

1999. 6. 11.

축협비상대책위원장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정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상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입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협동조합 개혁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는
박순용 축협 회장을 규탄한다

- 소신없는 우유부단과 말바꾸기가 개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법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이 소신없이 우유부단한 태도로 말바꾸기를 일관하며 개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협동조합개혁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지난 6월 8일 박회장은 이범섭 부회장과 함께 협개연 상임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통합중앙회 명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국회에 상정될 협동조합개혁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입장을 일간지에 광고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바 있다.

또한 6월말에 열리게 될 시총회에서 비대위를 해체하도록 하고,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도 조합장들의 협조를 얻어 두력화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축협노조가 조합장대표자협의회에 광고 비용을 지원했다는 지적에 대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회장은 6월 10일 공식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또다시 입장을 바꾸어 '통합중앙회 명칭'과 '농축산부문 자체 의결심의회구 설치' 등 기존의 축협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 국회 활동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회장은 6월 7일 국무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축협비대위(위원장 이종준)」는 축협중앙회의 내부기구로서 축협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별첨자료 참조).

이로써 그동안 박회장이 축협중앙회를 대표하여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에 우리는 박회장을 '소신없는 이중 플레이어의 명수', '표리부동의 전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회장은 축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일선 축산농가의 진정한 개혁요구를 수렴하여 한목소리를 만들기는커녕 소신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며 축협중앙회 집행부, 축협노조, 축협조합장 등 모두가 단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으며, 심지어 6월 4일에는 조합원 대표성도 없는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대표 유인명)까지 만들어지도록 방치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이로써 박회장은 6월 4일 급조된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결성을 축협중앙회가 지원하고 축협노조의 지원금으로 협의회를 광고하는 등 역시 무단방치하는 등 반개혁세력에 대한 배후조종과 지원을 계속한 반개혁행위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자임을 스스로 인정할 셈이다.

우리는 5백만 농민이 염원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또다시 박순용 축협회장이 보이고 있는 이중적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축협중앙회를 사본으로 열시킴 것도 모자라 협동조합 개혁에 극심한 혼란과 장애만을 초래한데 대해 전국의 축산농가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9년 6월 11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 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찰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목숨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합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영농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이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육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인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장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근거없는 중상모략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개혁반대세력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

- 정부는 반개혁세력의 음해와 모략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최근 협동조합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확인되지도 않은 특정개인의 비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있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단적인 사례로 반개혁세력들은 협동조합 개혁을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 보겠다는 의도하에 농림부장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장관의 집무실은 물론 언론사에 사실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괴문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5일 농업계는 물론 전국의 언론사에 괴문서가 일제히 나돌아 3월 30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었으나 당시 괴문서를 돌린 축협측의 일부 직원들이 거듭 사과하고 언론사에까지 사과문서를 배포하여 용서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축협노조측에서는 단 한마디 사과의 말이 없었다.

더구나 최근 개혁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원철회 전 농협회장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검찰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발표되자 개혁반대세력들은 이를 증폭시켜 온갖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서를 또다시 언론사와 관계기관에 돌리고 있다고 한다.

6월 11일 KBS 뉴스라인에서는 '원철회 전 회장의 로비결과 관련하여 언론사와 검찰에 특정개인을 비방하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며 원철회 전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여 '정치인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정치인이나 현직장관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국 이는 개혁반대세력이 근거없는 거짓선전과 중상비방을 동원해서라도 협동조합 개혁을 저지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하에 전개하고 있는, 개혁주체세력에 대한 음해와 모략행위로서 우리는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6월 11일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회의의 각도 대표자모임에서 유인명씨는 「정일영 의원의 소개로 국무총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총리가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재고해 보자는 얘기를 했으며, 정일영 의원이 6월 30일 축협의 집회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이 대기 참석하여 축협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발언하여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협개연이 긴급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유인명씨가 정일영 의원을 만난 적은 있으나 김총리를 만났다는 것은 완전히 날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개혁법안 통과를 저지시켜 보려는 개혁반대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으며, 개혁주체세력을 중상모략하는 등 도덕성의 상실은 물론 이제 범죄적 행위마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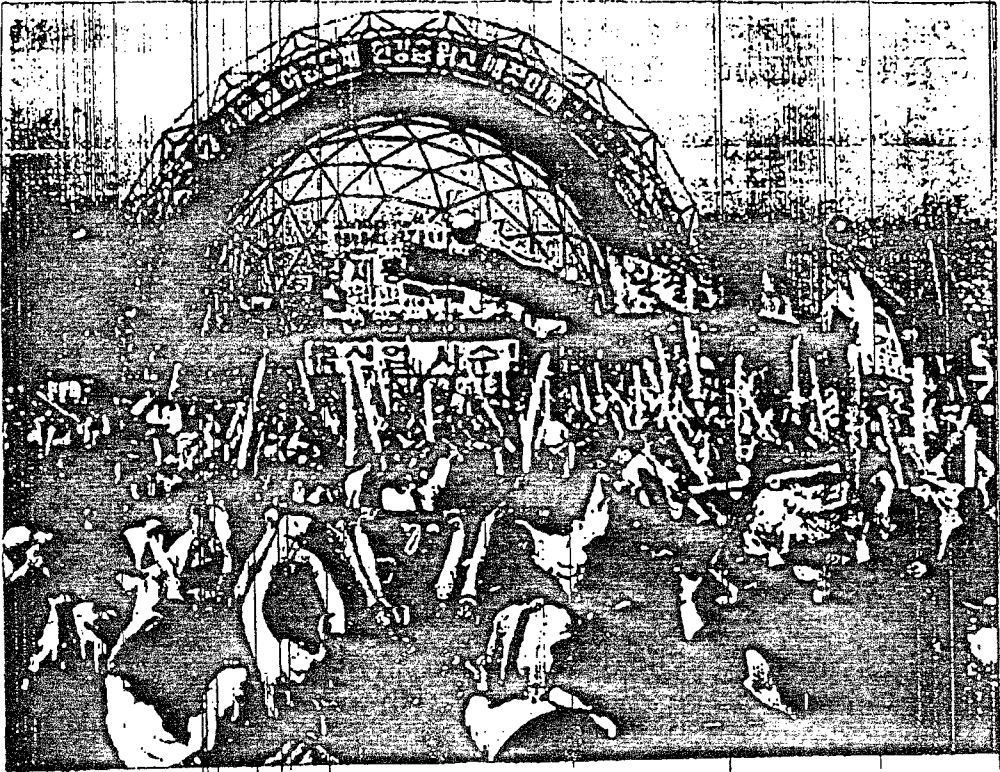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언중히 경고하며, 관계당국에서도 농민조합원들의 협동조합 개혁 열망을 호도하고 개혁을 저지하려는 개혁반대세력들의 음해와 모략행위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1999년 6월 12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
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
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
한양돈협회 대한은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
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
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
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농
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
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
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우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
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
인증양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
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죽
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우호회

협동조합 강제 통합 저지를 위한 범족산인 쫓기 대회



- ◆ 일 시 : 1999년 6월 13일 오후 2시
- ◆ 장 소 : 경기도 수원 장안공원
- ◆ 주 최 :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 전국 축협 노동조합

축산업은 210를 바라보는 우리의 땀과 기술 과학입니다.
전문집단 축협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6月15日 2面

대한매일
6月15日 2面

朝鮮日報
6月15日 2面

한겨레신문
6月15日 8面

제2의 조폐창 통합공작음모가 농·축협 강제통합 과정에도 지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협 통합의 관련 원칙이 전 농·축협의장·감정·농협부장관 사이의 제자급수수의혹 사건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 정부는 농촌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권력의 시서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차나리으로 농·축협 통합작업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90년 6월경)농협부 장관이 협동조합에 대한 국영안서를 요청(9월 25일) 200농협 축협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곧 회고 대대적인 여론사상을 여론조사로 농·축협을 추동해 버리겠다는 의사가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농·축협 통합공작-이행 유예가 없는 권력의 강행력을 증대시킨 비리수사 특수-수사관 전 농협중앙회장, 원협회 전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석은 협동조합 인사들에 대한 구속사태-50명 정도를 비리수사가 증명한 이상에 축협중앙회 임원만을 비롯한 그 비리-전사수 50여명과 원협 회장조성경 80여명에 대한 재추적 및 합수수사등 유사 사태를 통한 지속적인 압박.

□ 이에 농·축협통합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던 협동조합 경영진들은 사정의 끝날 앞에 뒤 죽은 듯 정부에 끌려 다니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정부와 합작공모하여 협동 조합을 권력에 편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농촌현장의 속신성조합원들은 통합을 적극 반대해도 상성은 농협부장관은 박승을 축협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농 협적합에 현실적으로 동태한다는 핑계를 유드하여 마치 실제 속신성인들이 농협에 찬성하는양 언론광채이길 제고고 농협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치 쇠원하여 협동조합 승인의 리관들의 정당인 합의를 요구를 전언이거우치며 법그로 사용으로 베포 데 내간 것입니다.

□ 정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야 할 농협부는 조동락고 6학년의 동심조차 울리는 방법을 자질했습니다.

축협의 한 명목이 조합원 자녀가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이해의 상징하는 모습을 보고 대동합일하여서 드리는 글문 받 고하였습다. 비연한 농협부는 아이에게 갖기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를 확인하며 취행하는 등 시범은 동심을 심하게 영 글에 익는 일무되지 않는 직음신 커너를 보였습다.

□ 계속되는 비리의혹에도 순제하기에 급급하는 김성훈 농협부장관은 즉각 퇴진하여야 하며 그 사 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처리 하여야 합니다.

이들의 이중국책으로 빈 법원내제외로, 농협중앙회장의 자제자출수수 고발장사건, 고관관 도동 김장수의 김장문권권적 자제 대응을 노신이전으로 나타난 대승류부가 의혹, 그리고 또 다시 발생한 원협회 농협중앙회장의 금융세금 탈탈 등 합법적이 가리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협회 전 농협중앙회장의 검은 은저에는 농·축협 통합과 관련한 것이었다는 보도가 있듯이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영웅한 방법으로 추진까지 제했을 것입니다. 재취우드서러인 농협부와 개해리서인 농협중앙회가 그런 어떠한 일한지 은반이 주목 있으며 되어있습니다.

원협회 전 농협중앙회장이 장관에게 돈을 전년도는 연은보기도 있는 연은 이한에는 한 권 죄목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뒤 하하여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정당적으로 이루어 진 농·축협 통합결정의 원신부효를 주장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협동 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인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1990년 6월 15일

전국축협조합원 대표자협의회·축협중앙회 노동조합·전국 축협 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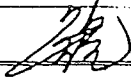
해 임 요 구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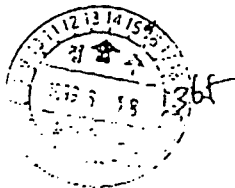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순용 회장에 대하여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사항 및 조합장들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와 중앙회 직원 통솔에 문제가 있어 회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 판단되어 축협법 제50조 및 정관 제61조에 의거 해임을 요구한다.

전체 조합장 192명 중 123명 일동

축협중앙회장 해임요구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순용 회장에 대하여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사항 및 조합장들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와 중앙회직원 통솔에 문제가 있어 회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 판단되어 축협법 제50조 및 정관 제61조에 의거 해임을 요구한다.

조합명	성명	서명
경북중앙축협총연합회	이종문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팽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노조와 조합원대표자협의회의 반개혁 광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

- 5백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축협중앙회 통합은 반드시 권철되어야 한다 -
- 비이성적인 '막가파'식 투쟁은 파멸과 국민과의 괴리를 자초할 뿐이다 -
- 개혁반대를 위한 근거없는 증상모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처벌하라 -

우리는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와 축협노조가 6월 15일자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광고를 게재하여 농축협중앙회 통합이 공작이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또다시 특정개인에 대해 인신모략을 일삼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백만 농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음모적인 공작'으로 규정하고 '제2의 조폐창통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부리며 치졸한 반개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68개 협개연 참여단체는 5백만 농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비대한 농축협중앙회를 통합해서 슬림화하고 일선조합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5백만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며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폐창의 통합사례를 교묘히 악용하여 협동조합 개혁이 농민들의 아무런 동의도 얻지 못한채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선전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은 98년 4월부터 추진해온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위문 반천하의 농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강력한 협동조합 개혁 요구를 수용했던 박수용 축협회장의 용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정암력에 굴복한 것처럼 날조하며,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협동조합을 권력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식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국민들에게 진실을 흐도한 것은 축협중앙회의 업무마비는 물론 축산업계를 분열시키는 반역사적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또한 지난번 경기도 용인시 초등학교의 글썽 광고로 게재하여 순진무구한 동심까지 반개혁에 악용한 반교육적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해맑은 동심을 명

하게 했다'며 그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웃지 못할 손극을 연출하고 있다.

아울러 협개연은 축협노조와 급조된 유명단체인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가 협개연의 지속적인
성고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해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특정개인에 대한
중상모략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상모략을 자행하고 있는 노조책
임자와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및 관련실무자를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협개연에서 이미 6월 12일자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원천희 전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여 '정
치인에게 소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현직장관에게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장관택 도복사건이나 차남 병역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거짓선전과 중상비방을 지속하는 것은 개혁반대를 위한 음해와 모략을 넘어 명백
한 범죄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축협의 진정한 주인인 축산농가들은 제쳐두고 각 조합에서 2명씩 차출하여 급조된 축협조합원
대표자회의는 대표상은 물론 축산농가를 대변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축협노조 역시 최근 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광고계
재가 단순히 조직이기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도를 떠나 '막가파식'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어 축
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더 이상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비이성적인 '막가파식' 투쟁은 파멸과 국민으로부터의 괴리를 스스로 자초한 뿐이다. 우리는 축
협노조와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에 대해 한계수위를 넘어버린 언어폭력과 반개혁 행위를 즉
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제 협개연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이들의 반개혁 음모와
반농민적 행위를 낱알이 폭로하고 대규모 집회 개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
혀두는 바이다.

1999년 6월 15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
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동진흥회 농가
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
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은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
생회 자연농업감굴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목숨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협회협회 자연
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
업대최고농업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업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
산지유동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이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원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
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
육류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
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黃昌株)

■이성을 상실한 축협노조와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는 반개혁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

-500만 농민을 무시한채 중상모략과 범죄행위를 일삼는 반개혁 세력을 즉각 처벌하라-

이미 97년 이전부터 한농연을 비롯한 대다수 농민단체가 참여하여 정부를 상대로 농정대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히 촉구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이 바로 이번 협동조합개혁법안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정부안으로 채택되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상정되었다.

한농연은 11만 농업경영인과 500만 농언인을 대표하여 이번 협동조합개혁법안이 다소 미비한 점은 있지만, 비대한 농축협중앙회를 통합하고 일선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뜻을 담고 있음을 확신하며, 협동조합개혁을 앞당기게 될 이번 입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축협노조와 급조된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는 전체 500만 농민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요구사항인 이번 협동조합개혁법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으며, 6월 15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는 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성을 상실하여 위협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며, 현재 대다수 농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음모적인 공작", "제2의 조폐창통합" 등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으로 협동조합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주안인 농민조합원 조차 인중에 없이 갖은 중상모략과 비방을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개혁의 대상인 축협노조와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는 더이상 농민조합원을 우롱하는 행태와 주제넘은 망언을 삼가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 또한 더이상 이들이 농민조합원을 무시한 채 안하무인식으로 날뛰는 것을 두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더 늦기 전에 이들이 자행한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농연은 조합원인 축산농가들은 제쳐두고 각 조합에서 2명씩 동원, 급조하여 만든 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중상모략과 비방을 일삼고 있는 이 조직의 즉각적인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농연은 축협중앙회와 축협노조가 농민조합원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시하기를 촉구하며, 더 늦기 전에 협동조합개혁에 적극 동참하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더이상 비이성적인 행태에 대해 농민조합원은 직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농연 역시 이미 한계수위를 넘어버린 언어도단과 반개혁 행위에 대해 철저히 응징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999. 6. 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성 명 서

농축협 동협관련 반개혁에 앞장서서 이성을 잃고 안하무인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축협노조와 축협조합원 대표자회의는 추가 사과하라!

1. 5백만 농업인들의 소망인 농축협중앙회 통합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2. 우리는 축협조합원대표자 협의회와 축협노조가 6월 15일자 주요인상식에 일제히 광고를 게재하여 농축협중앙회 통합이 공작이라며 워전 무효를 선언하고, 또다시 특정 개인에 대해 중상 모략을 저하는데 대해 지극히 유리를 감할 수 없다.

3. 개혁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직 이기주의 차원의 민발은 이해할 수 있다고 예상되나 현재 축협노조들이 벌이는 광고전은 축협인으로서 도저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파멸을 자초한 뿐이다.

4. 원만 국민들에게까지 농업인의 추태를 부리는 행동을 하여 워협노협 개혁은 제대로 모르는 국민에게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농업인들을 분열시키고 반역사적인 행위로 오점을 남긴 뿐이다.

5. 개혁의 대상인 축협노조와 축협조합원 대표자회의는 더 이상 농업인을 분열하는 행태와 방언을 삼가 주기를 바라며 정국 또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사실들을 철저히 규명하여 주기를 바란다.

6.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조속히 축협중앙회와 축협노조가 더 늦기 전에 협동조합개혁에 건설한 의지를 모이고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스스로 부덕을 파는 행위로 이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1989년 6월 15일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김 성섭

성 명 서

“ 추경 노조는 그 세기론대이 개혁에 동참해야 ”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는 최근 추경 노조이
인정공직 및 응리성 모략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회불안은 책동하는 행태에 대해 극심적인 반성과
결론에 정부와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해 나갈것을
촉구한다.

특히 고안집 도둑사건과 농림부장관 착남이래한
변칙문제등 심각한사태를 다하는 타무니없는 대공사건임을
위협사태 개인적 사생활까지 학위 유포하는 사안이래해
국회의 재사에 무관대리 않는 자사에게에 금성모략을 극속
추진해야 한다.

이후의 협동조합이 경쟁력있는 봉사조직으로 인식
해나기 권기위해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타래의
자선으로 적극 협조하여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개혁은 이루어야 할것이다.

1999 6. 15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복지 연구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제2 조폐창 음모’ 은운한 축협광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

- 엄청난 허위사실을 날조한 관련책임자를 조사하여 즉각 처벌하라 -
- 축협비대위는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의 배후조종을 즉각 중단하라
- 아무런 대표성도 없는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는 즉각 해산하라 -

우리는 ‘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와 ‘축협노조’에서 이번 협동조합 개혁을 ‘제2 조폐창 음모’라고 매도하는 광고를 연일 주요 일간지에 광고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당국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와 축협노조는 농촌현장의 축산농민들은 농축협중앙회 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날조한 것도 모자라, 5백만 농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협동조합 개혁이 마치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추진된 것처럼 또다시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5백만 농민들의 동의는 물론 시대적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 자칫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이번 광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연일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또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도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축협노조와 함께 광고를 게재한 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는 진정으로 축산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이 될 수가 없음에도 버젓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축협비대위(위원장 이종준)가 지역축협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조합당 2~3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여 6월 4일 급조된 조직에 불과하다. 축협비대위는 이처럼 아무런 대표성이나 실체도 없는 조합원대표자협의회를 배후조종하여 만들어 놓고 뒤에 숨어서 연일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담은 신문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는 축협법이나 정관상에도 전혀 설치근거가 없으며 박순용 축협회장도 겸개원 상임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 대표기구가 아니므로 해체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다. 일선의 축산농가들도 축산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있고 전국의 조합장을 대표하는 중앙회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논의도 없이 몇몇이 모여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조합원대표자협의회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축산농가들을 대변할 수 있는 아무런 대표성도 없는 임의기구가 자신들의 반개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자칫 국기를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허위사실을 밥먹듯이 날조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실체도 없는 유명단체인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는 반개혁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해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9년 6월 16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농산물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연구회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농업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학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육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일협회 한국중자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존경하는

군수님께

안녕하십니까? 농림부 장관 김성훈입니다.

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살림을 도맡아 막중한 책무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제가 보낸 협동조합개혁에 관한 편지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전분야에서 참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나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 또한 다가오는 새 천년을 향한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그 일환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농정의 최대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슬한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절대다수 농업인의 여망을 담은 농업인협동조합법을 확정하여 6. 14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협동조합개혁을 마무리하여 그 동안 일부 농업계 내부에서 야기된 갈등과 반목을 불식시키고 농업계의 모든 힘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군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 관내 농업인, 농·축협임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이번 정부가 확정된 협동조합 개혁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들이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미 알고 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정부가 확정한 개혁의 기본방향은 중앙회는 통합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대폭 줄이고 일선조합은 더 튼튼하게 하여 경제사업 위주로 적극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선조합은 지역농협, 지역축협과 업종조합으로 각각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선조합당 30억~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업인들이 이번 개혁의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주장하는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통합되고 농업인 대출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기 대출금이 회수될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둘째, 일선조합의 합병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됩니다. 치열해지는 농산물 유통경쟁과 금융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조합의 광역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합병을 강제할 경우 그 동안 경영을 잘해온 우량조합도 함께 부실화 될 염려가 있어 일선조합 합병은 경제권·생활권을 감안하여 조합원 자율의사에 따라 신중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조합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등 조합원이 조합운영을 감시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장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조합장 선출방식은 직·간선제외에 이사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경영에 대한 조합장의 책임한제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앙회의 각종 사업은 회원조합에 대폭 이관하여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한 후, 2000년 7월 1일에 새로운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가 출범합니다. 이는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해진 중앙회를 정상화하고 일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협동조합개혁이 시도되었으나 불행히도 그때마다 득권층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비효율적인 협동조합 체제로는 21세기 한국농업의 재도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협동조합개혁을 완수하여 다가올 새 천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 동안 농민대표, 농민단체대표, 협동조합임직원들과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혁안도 보완해 왔습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민주적이고 열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개혁을 단지 자신들의 조직적 이해와 상충한다고 하여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혁이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여도 농업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제밥그릇 챙기기식 주장이나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내용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농업인과 농축산인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일선에 계신 관수님께서 협동조합개혁의 시급성과 내용을 농업인, 조합장 등 관내 주민 여러분께 적극 알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한 여름의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9. 6. 18

농 립 부 장 관

성명서

- 전국 축협조합장 총회의 축협중앙회장 해임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

오늘 6월19일 전국의 축협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된 축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의 해임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그간 농림부의 반개혁적이고 축산농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추진한 농·축협 통합에 대해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이 농림부의 압력과 사주를 받아 축산농민조합원들과 그들의 대표자인 조합장들의 의사에 반하여 농림부의 뜻대로 꼭두각시놀음을 하며 반 축산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응징한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적절한 결정이라 평가된다.

우리는 그간 농림부가 협동조합 통합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협동조합에 대한 사정과 검찰의 수사를 병행하며 협동조합의 지도층에 대한 협박과 공포분위기 하에서 과행적으로 추진하면서 통합법안에 대해 박순용 축협중앙회장의 동의만 이끌어 내고 이를 마치 전체 축산인들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였던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진실은폐하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6월4일 전국의 축협조합원들의 통합반대 의지가 모여 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가 결성되어 농·축협 통합결정의 원천적 무효와 통합반대로 의견을 모으고 조합장들로 구성된 축협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통합반대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유독 개인비리와 검찰의 수사에 코가 꿰인 박순용 축협중앙회장만이 정부의 통합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제 정부는 축산농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허히 수용하여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농축산농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농축산농민들을 위한 올바른 개혁이 되도록 처음부터 민주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협동조합 개혁은 결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농축산농민들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6월19일 농림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하여 축협중앙회장의 사퇴요구가 마치 노동조합의 강요와 불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악선전을 하고 또한 지난 4월30일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전체 축협조합장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결성된 조합장들의 대표기구인 축협비상대책위를 급조되고 정당성 없는 조직으로 매도하고 업무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집단으로 날조하고 있는 바 이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농림부의 편법과 여론조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명심하고 농·축협 강제통합의 밀어부치기식 추진을 중단할 것이며 이를 계속할 시에는 30만 축협의 축산농민조합원과 노동자들의 총체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999. 6. 19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김정수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황청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노조와 비대위는 7월 1일 대회를 즉각 취소하라 !

- 협동조합 개혁완수를 위해 통합협동조합법은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 -

5백만 농민의 염원이자 우리농업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지난 6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어 6월 28일 개최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이제 협동조합의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5백만 농민들은 협동조합 개혁이 하루빨리 완료되어 우리농업의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정상적인 대농민 봉사기능을 수행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축협노조와 축협비대위,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등 개혁반대세력들은 통합협동조합법을 저지하기 위해 7월 1일 서울에서 또다시 대규모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협동조합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며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반대를 목표로 강행하고 있는 전국 도보행군으로 인한 축협노조원들의 지속적인 근무지 무단이탈로 가뜩이나 축협의 각종 사업이 위축되고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 부재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전국의 5백만 농업인들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가 축협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 축협직원이 개혁반대를 위한 집회에 빠져나간다면, 국민들에게 극도의 우려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축협의 각종 사업이 공백상태에 빠져 우리 축산업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축협축이 7월 1일로 계획하고 있는 집회를 즉각 취소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통합개혁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축협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에서 동원된 인원으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을 경우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 중앙회는 물론 지역축협의 대대적인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협동조합 개혁으로 회원조합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전문조합을 육성한다는 취지조차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중앙회 통합이 마치 지역축협의 통합인양 거짓선전하거나 축산말살이라는 일부 악의에 찬 선동 때문에 축산인들이 개혁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고 있음을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축협이 7월 1일 집회를 취소한다면 협개연 역시 국민들이 우려하게 될 군중집회계획은 취소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축협이 끝내 우리의 간곡한 요구를 외면한채 7월 1일 집회를 강행한다면 협개연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반드시 강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아울러 축협집회로 인해 축협사업에 위기를 자초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면 그 책임 역시 축협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1999년 6월 26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회 과경영자과정학생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업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요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목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성 명 서

- 새로 선출될 축협중앙회장은 정부의 강제적 협동조합 통합을 기필코 지지코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소유한 인물이어야 한다 -

지난 6월19일 박순용 전임축협중앙회장이 사상 유레가 없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전격 해임되었다.

그간 농림부가 축산농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강제적이고 반 개혁적인 축·농협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순용 전 축협중앙회장이 조합원들과 조합장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검찰수사의 칼날을 앞세운 농림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축협을 팔아먹는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한 현명한 조합장들의 필연적 응징인 것이다.

이는 사상 유레없이 어려운 위기에 처한 우리축협을 이끌어 갈 차기 회장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조직을 이끌어 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큰 사건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一. 향후 선출될 축협중앙회장은 검찰수사의 칼날과 농림부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축·농협 강제통합을 기필코 지지할 수 있는 불굴의 의지와 책임감 그리고 강력한 실천력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 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지금, 후보의 난립으로 조직의 분열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절대로 안될 것이며 일차단결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결단코 후보단일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 一. 우리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마당에 기회주의적 야욕을 가지고 축협조직을 개인적 영달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一. 임직원 중 과거와 같이 조직의 발전은 뒷전에 두고 개인의 안위만을 꿈꾸며 줄서기를 일삼는 작태를 보이는 자가 발생할 시, 축협조직의 공적으로 간주하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색출하여 응징할 것이다.

축협을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조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 토하고 싶은 열망을 저버리지 않는 새 지도자가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선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1999. 6. 28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김정수

「농업인 협동조합법(안)」 대로의 단순 강제통합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축협조합장 일당은 지난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단상지애의 심정으로 축산농민 조합원들의 억압과 총의를 대변하지 못했던 회장을 해임한 바 있다. 물론, 그 동안 온갖 회유와 외압, 조직과 개인 사이에서 갈등해 온 당사자를 생각할 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관치에 신음하는 협동조합을 바로 세우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를 외면한 농림부의 일방 변상적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결연한 신태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축협 조합장과 축산인 모두는 축산업의 전문성과 협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협동조합 단순·강제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물론 협동조합 개혁이 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며, 원동조합 내부에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구시대적 관습을 타파하고 권치화로부터 벗어나 조합원 위주의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나, 농림부가 제시한 '통합' 외에 일체의 의견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개혁 독선주의 속에서 임태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 축협 조합장 모두는 일말의 재의를 통감하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축협중앙회는 1981년 축신위에 대한 전문화의 필요성에 의해 농협으로부터 분리 발족하여 비약적인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의 권익신장을 이루는데 앞장서 왔다. 그런데 오히려 더욱더 전문화가 필요한 지금에 와서 협동조합을 강제통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이자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정신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축협 조합장 모두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의 주체도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바탕으로, 주인인 조합원이 배제되고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1. 하나, 우리는 개혁의 주체와 본질이 오도되고,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인 조합원의 참여 배제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로의 협동조합 단순·강제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제21조),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제123조), 사유재산권(제23조) 침해 등 부수한 위험지 사실을 내포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우리의 기본권을 무시한 것으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개혁대안은 포함해 협동조합이 질타를 받아왔던 비대하, 분장사, 관료화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떠한 개혁논의도 환영하며,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농민 양측가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해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분말이 신도된 개혁논의에 휘말려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지난해 마련한 자체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진정 축산인에 봉사하는 축협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2. 끝으로 우리 축협조합장 모두는 일백만 축산인과 축협 구성원들의 총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임한 지인 협동조합 강제통합안이 철회될 때까지 입법청원, 단체행동,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1999. 6. 29

전국 축산인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우리의 호소문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감사와 입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지난 6월 14일 정부에서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축협 조합장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우리 축협 조합장 일동은 축산업의 전문성과 협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협동조합의 강제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물론, 협동조합 개혁이 지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협동조합 내부에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은 그간 협동조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비대화, 관치화가 더욱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반드시 폐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협동조합의 개혁은 그간 협동조합이 질타를 받아 온 '경제사업 소홀 논 장사 지중', '중앙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 '하향식 조직으로 인한 자율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마련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자율성과 동결성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이질적인 조직을 강제 통합함으로써 그간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안)입니다.

둘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제21조),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제123조), 사유재산권(제23조) 침해 등 무수한 위헌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법(안)입니다.

셋째, 협동조합 개혁의 주체인 조합원의 의사 및 개혁 당사자인 농·축협간의 합의가 배제된 강제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농업계 내부가 사분오열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IMF, WTO 등의 외부 환경 극복에 치중해야 할 증차대환 시점에 농·축협이 본연의 사명보다 조직 방어에 혈안이 되어 농민의 피해만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회에서는 이러한 농심을 헤아려 정부(안)을 폐기하고, 진정 농민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6. 29

전국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8月29日 2面	8月29日 4面	8月29日 12面

우리 30만 축협조합원들이 7월 1일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하는 이유

우리 축협조합원들은 협동조합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농협중앙회의 통일이 결코 개혁이 아니기에 이를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30만 축협조합원들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든 협동조합·단순통합법을 반드시 폐기하여 협동조합 개혁문제가 주인인 우리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축협에 한문도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축협은 우리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만든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자조조직인 축협을 우리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농협과 강제로 통합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 축·농협중앙회의 통합은 축산업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1년 축산물 안전 수입개방을 앞두고 우리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우리의 조직 축협중앙회를 없애는 것은 바로 축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축·농협중앙회가 통합되면 더욱 공동화·관료화될 것이며, 중앙회는 선용사업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과는 더욱 멀어 질 것입니다.
- 축·농협중앙회의 단순통합은 그간 협동조합이 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 축산업이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장한 지금, 양 중앙회를 통합하면 축·농협 회원조합간 이질감으로 협동은 커녕 분산과 반목속에서 농심이 분열되고 언젠가는 또다시 분리될 것입니다.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축협조합원 총 쫓기대회

● 일시 : 1999년 7월 1일 (목) 오후 1시
 ● 장소 :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63B/D앞)

축산농민들이여! 여의도로 모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정부는 이 나라 축산업의 발전과 협동조합의 자율적 발전을 가로막는 강제적인 축·농협 통합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축산물 안전수입개방에 직면한 지금, 축산업 포기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가소득 해결을 위한 축산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전 축산인의 염원인 마사회 현원직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 각종 비리 의혹에 단골로 등장하고 협동조합의 개혁을 계약으로 몰고 가는 강성훈 농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머리하나에 땀방울 두 개 달아 놓은 거대한 기쁨의 공룡 - 통합중앙회! 농림부의 잘못된 협동조합개혁의 모습입니다.

전국축협조합장일동·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 저지 축산농민 총 쫓기대회

- ◆ 일 시 : 1999년 7월 1일 오후 1시
- ◆ 장 소 :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지구 63빌딩앞 저수부지
- ◆ 주 최 : 축협 비상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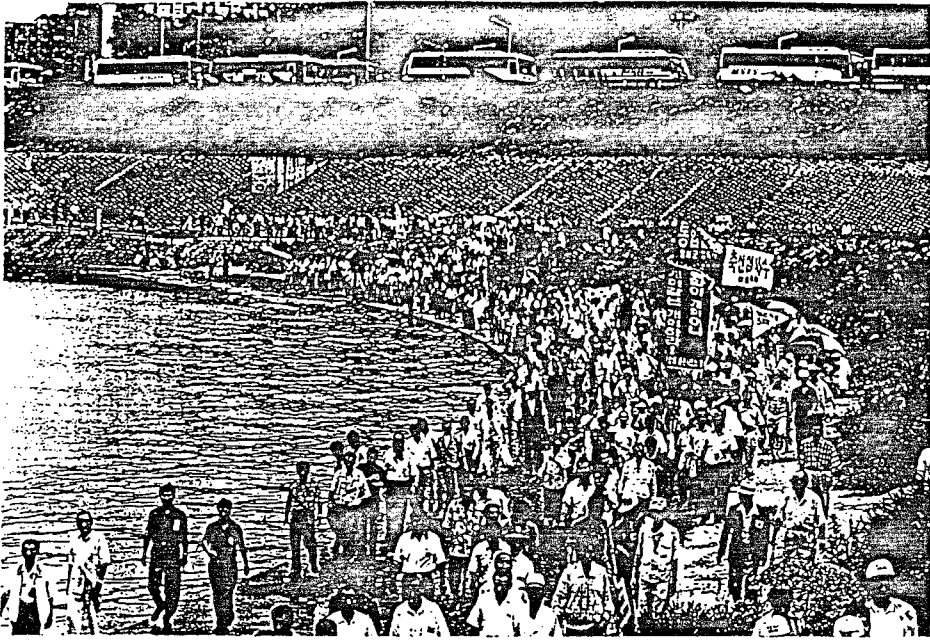
[사전행사] (13:00~14:40) ---- 사회자 조찬원

- 노래부르기
- 구호외치기
- 노래패 공연 및 울동패 공연(축협중앙회,서울축협)
- 민요공연
- 삭발식
- 참가자노래
- 각설이 공연

[본 대회 및 폐회] (14:40~19:30) -- 사회자 조찬원

- 개회사
- 깃발입장
- 민중의례
- ☞묵념
- ☞“농민가” 제창
- 내빈소개
- 대회사 (이종준 축협 비상대책위원장)
- 격려사
-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조합원 자녀)
 - 화형식(김성훈 농림부장관)
- 투쟁사 (유인명 축협조합원 협의회장)
- 투쟁결의문 (축협조합원)
- 가두행진
- 폐회





↑ 축산사수를 위해서라면 여의도가 아니라 지옥엔들 마다하라



↑ 흠어지면 죽는다. 흔들러도 우린 죽는다. 강제통합 저지 깃발아래 굳게 뭉친 12만여 축협조합원

우리축협조합장 일동은 「농업인 협동조합법(안)」 대로의 단순 강제통합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축협조합장 일동은 지난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단장직에의 심정으로 축산농민 조합원들의 역량과 충의를 대변하지 못했던 회장을 해임한 바 있다. 물론, 그동안 온갖 회의유와 의안, 조리와 개인 사이에서 갈등해 온 당사자들 생각할 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 만 관치에 신음하는 협동조합을 바로 세우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로 농림부의 일방 편향적 의안과 독선에 대한 경중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결연한 선택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축협 조합장과 축산인 모두는 축산업의 전문성과 협동조합의 자주성을 말 살하는 협동조합 단순 강제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물론 협동조합 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협동조합 내부에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구시대적 관습을 타파하고 관치화로부터 벗어나 조합 원 위주의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준비와 각오 가 되어 있다.

그러나, 농림부가 제시한 '통합' 외에 일체의 의견을 반격력으로 물이붙이는 개혁 독선주 의 속에서 일어난 '농업인협동조합(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 축협 조합장 모두는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축협중앙회는 1981년 축산업에 대한 전문화의 필요성에 의해 농협으로부터 분리 발족하 여 비약적인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의 권익신장을 이루는데 앞장서 왔다. 그런데 오히려 더욱더 전문화가 필요한 지금에 와서 협동조합을 강제통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이자 사 에 명백하는 것이며 헌법정신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 이념에 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축협 조합장 모두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의 주 체도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바탕으로, 주인인 조합원이 배제되고 정부 주도 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개혁의 주체와 본질이 오도되고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인 조합원의 참여가 배제된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대로의 협동조합 단순 강제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제21조),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제123조), 사유재산권(제 23조) 침해 등 무수한 위헌적 사실을 내포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우리의 기본권을 무시한 것으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한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개혁대안을 포함해 협동조합이 질타를 받아왔던 비대화, 문장사, 관료화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떠한 개혁논의도 환영하며,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농민 영속기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 의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본말이 전도된 개혁논의에 휘둘러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지난해 미려한 지체개혁을 강 도 높게 추진하여 진정한 축산인에 봉사하는 축협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끝으로 우리 축협조합장 모두는 일백만 축산인과 축협 구성원들의 충의와 광어를 바탕으로 위헌적인 협동조합 강제통합안이 철회될 때까지 입법청원, 단체행동,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1999. 7. 1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청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의 7월 1일 집회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가장하여
축협임직원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반개혁책동에 불과하다 !**

**- 법적 대표기구도 아니면서 온갖 반개혁책동을 배후조종하는
축협비대위에 대해 정부당국은 강력히 대응하라 -**

우리는 금일 개최되는 축협의 여의도 집회가 축산농가들의 진정한 개혁요구를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득권에 사로잡힌 일부 축협임직원들에 의해 개최되는 반개혁집회라고 분명히 규정하는 바이다.

특히 오늘 축협의 집회가 아무런 법적 대표성도 없는 「축협비대위」(위원장 이종준) 명의로 개최되고 있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축협중앙회가 정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축협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회장이 업무를 총괄하는게 아니라 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장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중앙회를 좌지우지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다. 축협중앙회 조직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비대위」가 오늘의 축협 집회를 과격 폭력시위로 몰아가고 있는데 만일 사고라도 발행한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협개연이 어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반대투쟁을 하다가 구속된 자는 1억6천만원, 사망자는 3억원'을 보상에 주겠다는 축협의 내부분서가 이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더구나 오늘 집회에서 언론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자해행위를 하거나 개혁주도세력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하겠다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것은 진정 일선 축산농가들의 요구인가, 아니면 축협비대위 등 일부 개혁반대세력의 조직적인 획책인가?

아울러 우리는 현재 축협비대위와 축협노조가 공권력마저 무시한채 40만 축산조합원들의 조직인 축협을 무법천지로 만들도록 방치한데 대해 농림부와 정부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강력한 입장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축협의 집회는 시군단위별로 동원인원을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치뤄지는 것으로서 말없이 개혁을 촉구하는 대부분 축산농가들의 진정한 개혁요구를 짓밟는 처사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또한 국회는 일부 개혁반대세력의 과격한 선동행위에 현혹되지 말고 농민조합원의 진정한 개혁요구를 수렴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합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1999년 7월 1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 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기주부 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골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목승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전주산업대최고농업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지협회 한국과수요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규동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이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중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성 명 서

- “협개연”, “한농연”의 일부 간부들은 더 이상 농심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

우리 30만 양축가 조합원과 축협외 임직원 일동은 그간 “협개연”, “한농연”등의 단체에 대해 온갖 모독적 발언과 성명에도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정부의 대변자로 전락하여 반 농민적 농심분열 행위 및 축협 흔들기를 일삼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30만 축산인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특히 “한농연”은 7월 2일자 보도자료에서 전일 개최된 “협동조합 통합반대를 위한 범 축산인 쫓겨대회”를 축협 임직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집회라고 폄하하여 축산농민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 그리고 농심을 왜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도 비우기 힘든 축산 현장을 뒤로하고 천리길을 달려온 15만여명의 우리 축산양축가 들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날 소신과 양심에 의해서 참석한 여야 의원들께 “부화뇌동”, “지역구 소환”, “총선 심판운동”등의 모독적이고 안하무인식 용어를 사용하여 비난한 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 분들은 물론 국민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단체의 생리상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정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민단체로서 지켜 온 양심과 기대에 비춰볼 때 다수 조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간부들의 사욕과 전횡에 의해 이끌어져 가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농민단체 본연의 모습이 아님을 자각해 주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양심과 정의의 잣대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이 진정 농민·양축가를 위한 법안인지 다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농림부는 협동조합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농민단체 일부 간부의 사욕을 담보로 전체의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의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분열된 농심을 치유하고 농민·양축가가 진정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협동조합 개혁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부(안)으로 확정된 농업인협동조합법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농협도 이러한 농림부의 비양심적인 여론몰이와 협동조합의 관치화 음모에 조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이 나라 협동조합의 자율성 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1999. 7. 3

축협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 농림부장관과 협개연의 비이성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7월1일 여의도 둔치에서 15만여 축산농민조합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저지 축산농민 총궐기대회는 협동조합통합에 대해 축산농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끝끝내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못하고 7월2일 간부회의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전원 사퇴시키겠다”고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하며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서기관급 이상 간부직원을 총동원하여 단위농협조합장들을 인솔하고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해당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감시, 견제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7월1일 축산농민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원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무차별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농정실패로 농심이 정부를 저버리고 있는 이 시국에 농림부 고위간부들이 농정업무를 팽개치고 법안의 국회통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법안이라면 왜 농림부가 간부와 농협조합장들을 총동원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감시,견제를 해야하는 것인가?

더불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7월1일 축산농민 집회를 반개혁적으로 매도하고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총선심판, 국민소환운동 등 운운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민심읽기 활동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하였다.

한농연을 비롯한 극히 일부의 농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 범농업인 시민연대」는 농림부가 반개혁적 통합안을 밀어붙이고 그들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급조한 관변단체이며 정치적 질은 일부 농업거족들이 500만 농민들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농림부의 의대로 움직이고 있음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이제는 농민들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대며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도 부족해 전체농민들의 대표성과 뿌리적 바탕조차 없어 그들이 개혁대상이라고 했던 농협중앙회까지 협개연에 끌어 들여 합작하며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등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협개연이 정부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농림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우리를 음해 및 악선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할 가치조차 없어 끊임없이 인내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협개연의 행위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그 실체와 추스른 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농림부가 최근 보듯이 비민주적이고 독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비장한 각오로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1999. 7. 5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김점수

정부는 위헌 위법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축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위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이 법안의 졸속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축협법 제33조, 제69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헌법 제23조에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 제123조 농민의 조직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육성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외면한 위헌·위법의 법안이다. 또한 우리 30만 축협조합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축협조합원의 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며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시대적·반역사적·반개혁적 개악법률안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는 이와같은 위헌·위법의 비민주적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에 충실하여 축산인의 주권과 재산권을 지켜주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충실하는 정부가 되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협동조합 강제통합은 헌법 제21조, 제23조, 제123조 위반이다.
헌법 제21조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토록 명문화 하였거늘 중앙회를 강제로 통합하고 농업인협동조합법 안 제4조와, 제6조로 축산인의 동의없이 강제통합하려는 만행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축협중앙회와 축협회원조합의 재산은 분명 조합원것임에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국가권력으로 강제통합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공권력으로 박탈하려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인내 용납할 수 없으며, 헌법 제123조에 보장된 양축농민의 자조조직의 육성과 자율적 활동 및 발전을 막는 명백한 위헌이다.
- 협동조합 강제통합은 축협법 제33조, 제69조 위반이다.
축협법 제33조, 제69조에 해산과 합병할 경우 총회의 의견을 거치게 하였거늘 중앙회 총회의 지역후원의 결의없는 통합은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천명한다.
- 협동조합 강제통합은 민주주의 위반이다.
민주주의는 약자에 보호에 있거늘 소수인 축산조합원은 다수의 농민조합원의 조직인 농협중앙회에 흡수 통합시켜 축산업과 축산농민을 말살시키려는 음모에 관계한다. 정부는 왜 축협조합원의 통합반대의사를 묵살하고 강제로 통합하여 농협을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만들어 하는가.
- 협동조합 강제통합은 전문화의 역행이다.
전문화가 요청되는 축산조직을 농협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대학교를 초등학교와 통합하려는 법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 강제통합은 축산인의 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위헌 위법행위다.
지난 20년간 축산농민조합원들이 피땀을 흘려 육성발전시킨 축산인의 공동재산인 축협중앙회들과 축협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강제통합하려는가.

우리 전국축산농민조합원들은 상기와 같이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률안은 헌법 제21조, 제23조, 제123조를 정면로 위배하고 축협법 제33조, 제69조를 무시하는 위헌·위법의 법안으로 축협조합원의 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반 시대적·반개혁적 악법이라는 것을 다시 천명한다. 또한, 우리축협조합원들은 이법의 무효화 될 때까지 이루어 지도록 대규모 시위와 집회등 극한 투쟁도 불사할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같은 강제통합법안을 역지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국정지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을 천명하며 이 법안의 철회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기자간담회 자료(7월 7일)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우 리 의 입 장

1999년 7월 7일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공동대표단체 :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업을걱정하는변호사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안동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굴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파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제주대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학생회 진주산업대최고농업자과정학생회 충북대전문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태평농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육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가나다순임)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협동조합 개혁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UR협상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IMF사태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사태속에서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우리농업은 사상유래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98년도 농가경제조사결과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12.7%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30.7%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정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 개혁은 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장 방대한 자금·인력·조직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을 개혁하여 그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98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 협동조합, 농민단체, 학계 등에서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해 수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하였고, 농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 왔습니다.

이제 협동조합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5백만 농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논의만 무성하게 이루어지다 미봉책으로 끝나버린 협동조합 개혁을 이번만큼은 농민조합원의 뜻에 따라 진정한 개혁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입니다.

2. 임시국회는 개혁입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개혁법안은 ▲난립된 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표이사의 전문책임경영에 의한 철저한 독립사업부제로 전환하며 ▲경제사업위주의 회원조합을 육성하는 것 등으로 그동안 5백만 농민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협동조합 개혁을 열망하는 5백만 농민의 뜻을 수용하여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합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혁입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개혁은 무산될 것이라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명칭이 갖고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는 약 10조원이며, 명칭을 바꿀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한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명칭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은 방지해야 합니다. 차라리 명칭변경에 소요될 비용으로 어려운 국내 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맹국가 93개국 가운데 축협중앙회를 따로 존치시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므로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농협중앙회”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통합비용이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 은행의 구조조정에는 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500만 농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협동조합 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농민조합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중앙회 통합에 따른 실익을 농민조합원에 환원한다는 통합의 기본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3. 5백만 농민의 협동조합 개혁 열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일부 기득권세력의 조직적인 저항과 일부 정당 및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인해 개혁입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총선시기를 고려할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협동조합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좌초는 협동조합의 개혁을 열망하는 500만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농민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 나라 협동조합의 역사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협동조합이 외부의 간섭과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500만 농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500만 농민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는 이와 같은 500만 농민들의 뜻을 받들어 오는 7월 9일(금) 여의도 저수부지(63빌딩앞)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 관철 및 정부 지원 촉구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협개연은 지난 4월 13일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68개 농민·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하였으며, 그동안 500만 농민이 열망하는 협동조합 개혁입법 요구를 대변하여 자체의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협개연은 7.9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통해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열망하는 500만 농민의 한결같은 뜻을 확인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노조의 단식농성,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

- 국회는 농심의 편에 서서 협동조합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우리는 최근 국회의 협동조합개혁법안 심의를 앞두고 축협노조 측에서 여야 각당의 중앙당사는 물론 각당 도지부 및 농림해양수산위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실시하겠다는 데 대해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현재 일선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국가가 하루빨리 협동조합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농축협이 농민들을 위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번에도 협동조합 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게 5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협노조가 각당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축협노조에게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며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한심스런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어제는 박복태 한농연 부회장이 국회앞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협동조합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나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소속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협개연에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히 자진철회하는 용단을 내린 바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협개연이 통합협동조합법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중

인 7월 9일 전국농민결의대회에 대해서도 '대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전화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협개연에 참여하고 있는 68개 농민·시민단체는 이제 국회가 일선의 진정한 농심을 무엇 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우리농업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협동조합 개혁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만에 하나라도 일선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된 협동조합개혁법이 축산농민의 의견을 사칭하는 축협의 일부 임직원들의 반대에 흔들리는 사태가 생겨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일부 반발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과대포장하여 비이성적이고 안하무인격의 반대활동을 일삼고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 사회라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비이성적 행위가 난무하고 '다수'를 사칭하는 '소수'의 횡포를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저항도 극복하고 역사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협동조합 개혁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며, 여야를 초월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동조합 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7월 7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업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모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육협회 한국양농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기자회견문

총파업을 선언하며 . . .

우리 축협중앙회 및 전국축협 노동조합 조합원일동은 정부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고 당사자인 협동조합들과의 협의절차 없이 지난 3월8일 축협과 농협 중앙회의 강제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협동조합 개혁이 민주적으로 다시 논의되도록 요구하여 왔다.

더불어 이 나라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협동조합의 자주성확보를 위하여 협동조합이 관계화의 길을 걷는 단순·강제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축협조합장들을 비롯한 축산농민조합원들의 거센 반대의견을 뒤로한 채 통합의 의 일체의 의견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축산농민들의 반대의견조차 임직원들만을 위한 밥그릇싸움으로 매도하며 일방편향적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농림부가 축산농민들의 반대의사를 묵살한 채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처리 강행을 위해 농정을 팽개치고 일부 어용·관변농민단체를 앞세워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과 로비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여당인 국민회의도 이번 최기내 법안처리를 위해 상임위 상정을 계획해 놓고 있는 바, 우리는 이의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생사를 건 극한투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결사투쟁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농림부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축협과 농협의 강제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하여 1999년7월13일과 14일 양일간 신용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는 농림부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강행하여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7월20일부터 전사업장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사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정부는 100만 축산인들의 총체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입법되어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인 축협과 농협의 통합이 진행될 경우 결사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극한투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의를 저버린 정부여당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999. 7. 9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정수
전국축협 노동조합위원장 김의열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관철 및
정부지원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건 의 문

전국 5백만 농민 일동

우리 500만 농민은 IMF사태로 소득은 12.7%가 줄고 농가부채는 30.8%가 증가하여 연쇄도산과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으로 마을 전체가 도산의 불안속에서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상유례없는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정 개혁 과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 개혁은 핵심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5백만 농민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현재 개혁입법이 국회의 입법절차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입법 과정에서 일부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방해와 정치권 일부의 눈치보기로 협동조합 개혁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5백만 농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협동조합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5백만 농민의 한결같은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자 오늘의 대회를 개최하고, 이제 우리의 굳은 뜻과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여야 정당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백만 농민의 염원을 담은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이상 협동조합 개혁이 시간을 끌며 표류해서는 안됩니다. 5백만 농민의 뜻이 협동조합 중앙회의 통합, 그리고 통합성과의 농민 환원이라는 방향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일부 기득권 집단의 반개혁 주장에 밀려 협동조합 개혁이 지연된다면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농가부채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협동조합 개혁 문제를 마무리짓고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입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협동조합 통합에 따른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지 않고, 그 성과를 농민에게 환원되도록 하기 위해 통합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입법조치와 예산확보를 촉구합니다.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는 본 뜻은 중복된 기구와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화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통합효과를 조기에 농민에게 환원하기 위해서는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통합초기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면 오히려 협동조합의 농민지원사업은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6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듯이 농촌경제 회생을 위해 협동조합 통합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농촌과 농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명칭변경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차라리 어려운 농민과 양축 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합중앙회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혁의 근본목적과 기본정신이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고, 통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농민에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 중앙회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2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이 가진 무형고정자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명칭변경으로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개혁의 참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에 소요될 비용이 있다면 어려운 농민과 양축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5백만 농민의 요구사항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여야정당이 즉각 받아들여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 농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역사적 책무를 다해 줄 것을 5백만 농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1999년 7월 9일

전국 5백만 농민 일동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관철 및 정부지원 촉구

전국농민 결의대회



- ◆ 일시: 1999년 7월 9일 (금) 오전 11시 30분
- ◆ 장소: 여의도 저수부지 (63빌딩 앞)
- ◆ 주최: 협동조합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 ◆ 주관: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회,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비상투쟁위원회, 농협중앙회 통합협동조합 입법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흥사단농업개발위원회

◆ 식순

식전행사 11:30 ~ 13:00

- ▷ 길놀이 (풍물패)
- ▷ 결의다짐 공연 (노래패 및 율동패)
- ▷ 구호제창 예행연습

본행사 13:00 ~ 14:30

- ▷ 기수단 및 공동대표 입장
- ▷ 개회선언
- ▷ 국민의례
- ▷ 참석자 소개
- ▷ 경과보고
- ▷ 대회사
- ▷ 격려사
- ▷ 대통령께 드리는 글 낭독
- ▷ 대국회 건의문 낭독
- ▷ 현장 농민의 소리
- ▷ 화형식
- ▷ 결의문 낭독
- ▷ 구호제창
- ▷ 만세삼창

가두행진 14:30 ~ 16:00

- ▷ 코스 : 여의도 저수부지 ~ 여의도 문화의 마당 (여의도공원내)

마무리집회 16:00 ~ 16:30

-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 ▷ 임시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행동지침



협동조합 통합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협동조합 통합의 목적은 경쟁력을 갖추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농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있습니다.

◆ 현재의 중앙회는 업종만 다를 뿐 하는 일이 비슷하여 시설, 인원, 예산이 중복되므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 통합되면 농축산물 및 인삼의 판매가 확대되고, 서로 및 생필품의 가격이 낮아지며, 영농자금 대출 등이 훨씬 편리해 집니다.
- 특히 축산 및 인삼농가는 농협의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과 풍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중앙회가 통합 되더라도 농협·축협·인삼협의 지역조합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 통합협동조합법과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반드시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여야만 합니다

- 「농업」의 의미속에는 축산업과 인삼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법령이나 관계기관의 명칭도 농·축산업이 아닌 「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1981년 축협이 분리되기 전에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습니다.
- 현재의 농협중앙회라는 명칭을 바꿀 경우 재판·통장·등기번경 등에만 2천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전부가 농민 여러분의 재산인 농협에서 지출 되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 통합은 농민 지원강화를 위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64조원을 지원 했습니다. 따라서 도·농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협동조합 통합에도 반드시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통합 협동조합이 합병에 따른 부담을 덜고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알아둬시다.

1. 협동조합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수입농산물의 홍수와 IMF시태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 및 가격폭락으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등 지금 우리 농업은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98년 4월부터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농축협 등 협동조합은 물론 농민단체들이 참여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통해 개혁방안이 완성된 후,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새로운 협동조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거 협동조합은 조합과 중앙회가 각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고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일부 사업에서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서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회가 4개나 존재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해서 중앙회의 몸집을 줄이고 그 기능과 사업을 이양하여 일선조합을 적극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새로 탄생할 협동조합의 경우 현재 중앙회의 많은 사업을 일선농협에 이양하거나 공동출자 형태로 운영하게 되어 일선농협의 역할이 훨씬 강화되며, 중앙회는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교육·농정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조합의 기능이 강화되어 농민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은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통합협동조합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협동조합 개혁은 농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에서 농민요구 보다는 기관이기주의에 따라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집요하게 개혁방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에 열리게 될 국회는 예산심의와 국정감사, 내년도 총선일정 등으로 협동조합 통합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만약 이번에 통합입법이 무산되면 앞으로 협동조합 개혁은 더욱 어렵게 되고, 언제 또다시 최근과 같은 협동조합 사태가 되풀이 될 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은 또다시 혼란속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가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합협동조합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 **결의문**

우리 5백만 농민은 협동조합개혁이 이 시대의 소명이고 역사적 과제라 확신하며 이 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4개로 분리된 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회원조합을 더욱 강화하여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통합협동조합법의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5백만 농민의 협동조합개혁 열망은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절차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험난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와 이기주의에 가득찬 일부 반개혁세력의 저항과 소신도 없이 흔들리는 일부 정당 및 국회의원의 눈치보기로 인해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좌초는 우리 5백만 농민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는 기만행위이며 이 나라 협동조합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간개혁적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에 우리 5백만 농민은 역사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협동조합의 개혁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앙회를 통합하는 협동조합 개혁법률을 즉각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우리는 통합비용이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우리는 통합중앙회의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축산업과 인삼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합회 별도 법인화와 신경 분리론은 '독상목'의 계약으로서 단호히 배격하며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 하나,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정당 및 의원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1999. 7. 9

◆ 우리의 구호

- ◆ 우리농민 총단결로 통합협동조합 이룩하자 !!!
- ◆ 오백만 농민염원 협동조합 통합하자 !!!
- ◆ 중앙회를 통합하여 농촌발전 앞당기자 !!!
- ◆ 우리농민 똘똘뭉쳐 개혁입법 관철하자 !!!
- ◆ 개혁반대 앞장서는 국회의원 각성하라 !!!
- ◆ 협동조합 통합비용 정부지원 보장하라 !!!
- ◆ 10조원 날아간다 농협명칭 사수하자 !!!
- ◆ 우리농민 다죽는다 농가부채 해결하라 !!!
- ◆ 농축산물 가격안정 농가소득 보장하라 !!!
- ◆ 오백만이 지켜본다 농정공약 이행하라 !!!

행사장 배치도

한 강

서 울	경	충	대	전	노	대	광	강	부	제
인	기	북	전	북	동	구	주	원	산	주
천			충		조	경	전		경	울
			남		합	북	남		남	산

무 대

63빌딩 방향

성명서

국회는 黨利와 黨略,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立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협동조합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신있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조합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관계 법안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오랫동안 쟁점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기에 누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리와 당략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법안의 통과에 있어서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바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혁협동조합(안)은 50여년간 농민위에 군림해온 협동조합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무한경쟁에 적응할 한국농촌을 일구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개혁법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때 일부 법안의 미흡한 점이 있다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도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보다 더 진전된 개혁법안의 성안을 위해 관련된 전문가 및 단체 그리고 농어민 각자는 국회에서의 법통과는 물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조항과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 법안의 올바른 입법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7/13일 공청회부터 소위 심사, 상임위 의결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의정을 감시할 의정감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 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책임과 소신을 다하여 개혁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999. 7.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윤환 이설조 조창현

□ 보도자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

○ 경남지역 농민단체 일동, 한나라당에 협동조합 개혁 촉구를 바라는 기자회견 및 상경 항의 농성 실시 ○

- 7월 12일(월) 경남지역 농민단체 경남 농협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 실시
- 이회창 총재 면담 요구·결의문 전달 및 상경 항의 농성 실시
- 7월 12일 14:00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대강당에서 협개연 참가단체 기자회견 실시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산하 경남도연합회(회장 박홍수)를 비롯한 협개연 참가 농민단체 일동은 내일 7월 12일(월) 오전 10시 농협 경남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의 의견 공개표명 및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바로 서울로 올라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한 후 경남지역 농민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 전달 및 항의농성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협동조합개혁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눈치보기와 소극적 태도에 대한 경남지역 농민단체 일동의 준엄한 비판과 함께 통합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지연시키는 일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촉구활동을 통해 협동조합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대다수 농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아울러 참가자 일동은 개혁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한 후 내년 총선에서 농민의 선택기준으로 제시할 것임을 발표할 것이다.

■ 참가자

경남 한나라당 농림해양위원 지역구 농협조합장 전원
경남 한나라당 농림해양위원 지역구 농민단체 대표
강촌성 농업기술자협회 경남지부장 박홍수 한농연 경남도연합회장
박장환 한국유기농협회 경남도지부장 김태선 경남도 생활개선회장
박점복 한국여성농업인경상남도연합회장 등 50여명

■ 일정

- 10:00 ~ 10:30: 기자회견
- 10:30 ~ 10:40: 한나라당 경남도지부로 이동
- 10:40 ~ 11:30: 한나라당 경남도지부 앞 항의시위 및 결의문 전달
- 11:30 ~ 14:00: 서울 한나라당 당사로 이동
- 14:00 ~ :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면담 요구 및 항의농성
개혁입법 지연의원 항의방문
협개연참가단체 통합협동조합법 통과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기자회견문>

● 한나라당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경남 농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 ●

- 한나라당은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혀라
- 협동조합 개혁입법 지연하는 일부 한나라당 소속 경남의원과 당료는 각성하라
- 경남 농민의 뜻 수렴하여 한나라당은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임시국회에서 완료 하라

60만 경남 농민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큰 방향에서 농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농축협 중앙회를 통합하고 구조조정 성과를 농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개혁법안은 일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민에게 환영받고 있다.

백만 농민의 염원인 협동조합 개혁의 대미를 장식하는 개혁입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와 정치권의 교묘한 지연에 가로막혀 이번에도 협동조합 개혁이 좌초된다면 농가부채로 신음하는 5백만 농민은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는 여당 소속의원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우선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남출신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당료가 최근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교묘히 지연시키는 행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협동조합 개혁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반사이익을 노려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거나 개인적 출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농민들은 이런 점을 예상하고 충분한 여유의 시간이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에 개혁입법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차례 전달하고, 공동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농민의 요구에 한나라당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개혁입법이 국회에 상정되니 심의시간이 부족하다, 농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로 특검제 논란 등으로 기목이나 시간이 부족한 금번 임시 국회에서의 개혁입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축협중앙회장 선거 이후로 법안 심의 일정을 미루는 등의 교묘한 논리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단계적인 지연전술을 펴고 있으며 시간제약을 빌미삼아 찬반 표명도 없이 개혁입법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경남농민들은 이러한 개혁입법 지연에 경남농민의 지지를 받은 일부 국회의원과 경남출신 모당료가 앞장서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60만 경남농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개혁입법에 앞장서야 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개혁에 대한 정확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면서 반개혁세력의 개혁저지를 교묘히 돕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심을 대변하라고 선출해준 한나라당 경남지역 의원이 진정한 다수 농민의 의사가 분명하다해도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경남지역에 한나라당 공천만 확보하면 당선은 따는 당상이라는 경남 농민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60만 우리 경남농민의 입장을 이회창 총재에게 직접 전달하고 당차원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회창 총재는 원내 제1당이자 경남 18개 선거구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책임자로서 경남 농민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교묘한 지연전술을 펴고 있는 일부 의원과 당료를 꾸짖고 적극 제지해야 진정한 경남 지역 농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정당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되는 조합측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찬반의지를 분명히 하기는 곤란하다"는 식의 철저한 눈치보기와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다수 농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경남 농민들은 이번 협동조합 개혁법안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입장과 경남의 국회의원이 보이는 모습을 다음 총선까지 기억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경남 농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외면받을 것이며 개혁입법에 반대하거나 지연하는데 앞장서는 국회의원은 명단 즉 공개하고 의원소환운동,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대규모로 벌일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경남도지부를 방문하고, 서울 한나라당 당사로 직접 가서 이회창 총재를 만나 60만 경남 농민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한 농성을 감행할 것이며, 개혁입법 지연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규탄과 경고의 뜻을 전할 것이며 조만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은 60만 경남 농민과 5백만 농민의 뜻을 받아들여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반개혁 세력을 지원하는 지연전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중앙회의 명칭 문제, 통합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합원 출자 재평가 등에 대해 농민의 의사를 분명히 수렴해 명실상부하게 농민의 입장을 반영한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룰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경남지역 한나라당 의원은 다수의 진정한 농민유권자를 의식한 분명한 처신을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오늘 이러한 60만 경남 농민의 건의를 외면하는 우리 지역의원이 있다면 우리 60만 경남농민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의 주장 ■

- ..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 .. 한나라당 소속의원은 협동조합 개혁입법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라.
- .. 협동조합개혁입법 교묘히 지연하는 한나라당일부국회의원과 당료는 각성하라.

1999년 7월 12일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경남농민 대표 일동

한국일보
7月3日/面

朝鮮日報
7月3日/面

毎日經濟新聞
7月3日/面

중앙일보
7月3日/面

한겨레신문
7月3日/面

韓國經濟新聞
7月3日/面

축산업 포기정책의 신물,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축산업을 포기코자 축협과 농협을 통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명백히 규명하고 100만 축산농민앞에 사죄하라

축협은 IMF경제위기로 인해 축산물 소비위축으로 환우가격이 폭락할 조짐을 보이자 양축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사료가격 인하를 시도하였으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며 수입식고기 방출을 억제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환우고기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환우가격을 유지하였습니다.

축협중앙회의 통합은 2001년 축산물 환원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지대적 요구를 무시한 것이며 국내 축산업 보호와 질병 예방을 없애려는 것은 국내 축산업의 포기정책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축협과 농협의 통합에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작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1년 수입개방을 앞두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저가산 축산물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축산물수출의 걸림돌인 축협을 없애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축산업을 포기하기 위해 축협을 농협과 통합하려한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축산농민들은 다 죽일지도 모를 엄청난 사건인데, 정치권은 이제 대해 명백히 입장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축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축협이 IMF위기의, 국내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고기 방출을 억제한 것을 지적하여 문제삼는 등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초 감사원 감사결과 "축협중앙회가 수입식고기를 창고에 방치(3,518톤)하고 아직 수입하지 않 부수입물량 46,300톤을 다음해로 이행하게 되어 수출규제의 무력마찰이 우려된다"는 등, 국내 축산농민 의지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농림부는 협동조합을 농업인에게 돌려준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어 농협중앙회만을 위한 협동조합-통 강제로 추진하여 축산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100만 축산농민에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행치고 손쉬운 돈가사에만 치중한다는 것 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주요 개혁대상으로 저당을 받아온 농협중앙회가 정부안을 격으로 지지하며 권지갑위를 하는 등 해피한 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축산농민들의 의사 상하고 농축산농민이 아닌 농업중앙회만을 위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0만 축산농민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1999. 7. 13

전국축협조합장 일동, 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523

성명서

- 파업에 돌입하는 우리의 입장 -

우리는 정부가 축산인들의 열망을 저버린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축협과 농협의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파업으로 인하여 축산농민과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뼈를 깎는 아픈 심정을 안고 가급적 양측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파업에 돌입하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지 모를 축산가족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축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 것이 확실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파업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축산농민조합원들의 일꾼으로 남아 미래에 축산농민들을 위해 무한봉사하려는 우리의 의지하에 사소취대의 심정으로 파업에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7월1일 여의도에서 축협의 주인인 축산농민조합원 15만명이 모여 대규모 쟁의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협동조합 강제통합법안이 축산농민조합원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으로 통합이 잘못된 것임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등 축협조합장들을 비롯한 축산농민조합원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센 반대의견을 뒤로한 채 통합외의 일체의 의견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축산사수를 위한 의지와 올바른 개혁을 외치는 정당한 목소리, 그리고 축산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마저 임직원들만을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매도하며 일방편향적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정부의 축산포기정책을 근본부터 뒤집고 축산업 사수의 보루인 축협조직을 굳건히 지켜내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더욱더 양측가 조합원에 가까이 가는 조직, 봉사하는 조직,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국민과 축산농민앞에 다짐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폐기하고 농축산농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개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 시 총파업 돌입 등 결사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축산인의 뜻을 외면한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9. 7. 13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전스

파업결의문

우리 파업참가자 일동은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법안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불타는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축협조합장들을 비롯한 축산농민조합원들의 거센 반대의견을 뒤로한 채 통합외의 일체의 의견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축산사수를 위한 의지와 올바른 개혁을 외치는 정당한 목소리, 그리고 축산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마저 임직원들만을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매도하며 일방편향적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들의 최후의 무기인 파업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정부여당은 일방통행식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진정으로 농축산농민조합원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되도록 특 농축산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재논의 하라.
1. 축산농민조합원과 개혁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 강제통합을 주도하여 농민단체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농정을 파탄지경으로 이끈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 시 총파업 돌입 등 결사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1999. 7. 13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파업참가자 일동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법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농업협동조합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한국농업교육연합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 협업노조의 파업은 농민과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 축산농가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다면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개혁에 동참하라 -

신한국당 당사에서 지난 9일 협업노조가 발표한 13일과 14일의 부분파업 감행 예고와 통합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 28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반농민적이고 반개혁적인 협박과 으름장이 실제로 자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협업노조의 이러한 파업은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 협동조합에 반대한다는 명분이 사실은 허구였으며 축산농가의 이해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질렀던 협업노조를 비롯한 몇몇 축협의 반개혁적인 행동 때문에 일선의 축산농가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 오늘 경제사업장 중심으로 파업까지 한다는 것은 진정한 축협의 주인인 축산농가의 고통과 우리 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집단 이기주의의 따름이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우리는 협업노조의 이러한 태도가 온 국민이 바라마지 않으며 이제는 대세로 굳어진 협동조합의 통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며 그 피해와 후과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이기에 협업노조는 이성을 회복해 파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당부한다.

만약 협업노조의 예고대로 금융사업장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파업을 감행한다면 이는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또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져 축산금융붕괴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불행한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협업노조에서 져야하며 이는 농민뿐 아니라 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행위가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을 눈앞에 둔 우리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어떠한 저항과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500만 농민의 뜻을 업고 협동조합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며 파업으로 협동조합 개혁이 후퇴하거나 중단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7월 9일 여의도에서 열린 통합협동조합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에서 진정한 농민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일선 축산농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협업노조는 이제라도 진정한 축산농가와 농민의 여망을 받아들여 시대와 개혁의 요구인 협동조합개혁에 동참하고 파업을 철회

해 본래의 자리에서 소임은 다해 역사의 적인으로 낙인찍히는 날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7월 13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
 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
 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나눔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고
 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순천대최고
 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자연농업감찰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
 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
 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
 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텃밭농회 전주산
 영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지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가
 육우협회 한국농산물상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
 안양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살가공식품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
 유기농업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종자
 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공청회 진술인에 온갖 폭언과 협박을 자행한 축협지도부는 사과하라 !

- 이성을 상실한채 공감협박을 일삼는 반개혁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는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개최한 협동조합개혁법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협개연 상임대표인 강춘성 농단협 회장과 장원석 단국대 교수에게 온갖 폭언과 협박을 자행한 축협의 일부 지도부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오늘 공청회 결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양회 통합에는 찬성하며 일부에서 제기한 신경분리와 연합회 별도법인화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으나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졌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후 2시 30분경 공청회가 끝난후 밖에 나온 강춘성 회장에게 축협중앙회 임직원과 조합장비대위,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 축협노조에서 온 일행들이 일제히 가세하여 '당신이 한우협회 설립하느냐'는 등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장원석 교수에게 '당신이 뭔데 남의집 일에 간섭이냐', '당신이 축협에 대해 뭘 아느냐'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행사 일보직전까지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실도 아닌 내용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에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객관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 밖에 없는 두 상임대표에게 인격모독과 온갖 협박을 자행함으로써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정부, 농·축·인삼협 및 협개연의 대표 등 농업계의 지도층이 모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의 기획 및 대외협력 담당간부와 비대위원장이 이성을 상실한채 폭언을 퍼부은 사실에 대해 개혁을 열망하는 5백만 농민은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축협은 최근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인 대세로 나타나자 오늘과 같은 공감협박은 물론, 이제는 협동조합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사명

의식마저 망각한채 불법과업까지 단행하는 등 개혁법안 국회통과 저지에만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다.

현재 축협이 전개하고 있는 불법과업은 경제적 약자인 축산농민들을 불모로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로서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행세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축산농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불법과업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68개 농민·시민단체는 축협이 오늘 협개연에서 진술인으로 참여한 두 분의 대표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축협이 오늘의 사태에 대해 만족한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옹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7월 13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상임대표 : 농업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중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장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용,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종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공동대표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낙농진흥회 농업윤곽정하는변호사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업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자연농업김길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시험회 한국경주야생산자협회 한국과수모욕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생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이사료협회 한국대용우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협회 한국자연농업연구협회 한국중자협회 한국중축개양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합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종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안동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제주대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학생회 진주산업대최고영농자과정학생회 충북대전운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가나다순임)

■ 성명서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의 비상식적 언어폭력, 인격모독 등 폭력행사를 개탄한다

- 폭력행사자 출입금지 등 제재조치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이제 우리는 말로 형언하기 힘들고 감히 이런 일을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는 비참함을 뒤로 한 채 더 이상 우리 농업계가 목소리 큰사람, 집단적 폭력성이 잔재해서는 농업을 평생의 업으로 과감히 뛰어들 젊은 세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용기있는 결단으로 농업계에 투신한들 어떻게 이러한 몰상식과 흑색선전 속에 성장하여 인재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국민들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국정을 위한 입법활동과정에 필요한 공청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밝혔는데 자신들의 집단이해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청회가 끝난후 상임위원회 복도에서 발생한 언어폭력과 인격모독 등 일평생 경험하기 어려운 모욕을 받아야 했다.

이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수와 평생 농민운동에 헌신해온 60대 원로 단체장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과 극단적 추태는 당시 상임위에 출석했던 타부처의 공직자와 출입인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추하게 만든 축협관계자들은 조속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상임위원회의 초청으로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어폭행을 통한 인격모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국회의장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이들에게 국회출입금지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축협비상대책위원장 이종준, 축협조합원대표자협의회장 유인명, 황엽 기획실

장, 엄기대 과장 등 당시 불상사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국회 관계자가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임 축협회장은 공청회 내내 주변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었고 불상사가 발생할 때도 적극적인 제지는커녕 오히려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는 농민단체의 대표자를 비난하는 등 도저히 그동안의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견을 발표할 때마다 축협은 전화부대를 동원하여 해당 언론기관은 물론 기고자에게 갖은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황으로 보아 우리는 과연 이러한 행동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가를 짐작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어둠속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과 대세를 외면하고 있는가? 축협은 이제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고 소신있는 실명으로 합리적인 토론에 나서라. 더 이상 당신들로 인해 축산농민과 500만 농민을 목되게하여 국민들이 우리 농업에 등돌리지 않도록 자성하라.

1999년 7월 14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노조의 불법파업, 축산농민피해 부른다

- 철밥통 지키기 위한 불법파업, 반개혁 집단이기주의의 절정이다 -

보라! 이것이 축협의 참얼굴이다. 제자리로 돌아와 축산과 축산농민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라는 축산인들의 저 가련한 눈빛도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철밥통만을 지키기 위해 이성마저 상실해 버린 축협중앙회의 일부 임직원들은 이제 법마저 무시하는 불법행동을 보이고 있다.

입만 열면 축산 농민을 위해서 농축협 통합을 반대한다던 축협이 마침내 파업 절차가 불법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농민들의 생명이 달린 사료생산, 소·돼지 도축, 집유 및 가공, 축산물공관장 가동을 중단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불법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진정 축산농민을 위한 축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축산농민을 외면하는 직무이탈행위야 말로 축협이 임직원을 위한 조직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축협중앙회는 축산농민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고, 축산농민은 축협중앙회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항간의 비웃음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다.

축산농민을 포함한 500만 농민과 농민단체, 언론 및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축협이 진실을 왜곡하며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축협의 막

가파식 행동은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면 결국 축협은 망할 것이다.

통합도 하기 전에 파산되어서 길거리에 나왔으면 축산농민들이 축협중앙회 임직원의 편을 들어줄 수 있다고 보는가?

이나라 축산은 망했다는 비난과 축산농민을 외면한 사람들이라는 지탄을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 경고하면서 이제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축산 농민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고 21세기 미래 농업 건설에 하루빨리 동참하길 촉구한다.

1999년 7월 14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공동대표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낙농진흥회 농업을걱정하는변호사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림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
개선중앙회 자연농업강골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
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
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대평농법회 한
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요육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
국농산물생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
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
품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
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협회 한국자연농업연구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
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인
적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
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
생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안동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제주대최고농어업경영자과
정학생회 진주산업대최고영농자과정학생회 충북대전운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가나다순.김)

100만 양축농민과 축협이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진정서

1999. 7

전국 축산농민조합원 일동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 일동

100만 양축농민과 축협이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진정서

1. 강도높은 자체구조조정으로 개혁에 앞장서고 있음

- 무한봉사와 책임봉사 구현 : 농민위주의 건설형사업, 유통개선
- 부서축소와 한계사업장 정리: 7개 부서, 7개 사업장정리
- 인력 4,470명 감축 운용 : 2000년까지 총인원의 20%
- 인건비 절감 연간 1,650억원

2. 농업인협동조합법인의 문제점

- 위헌이며 계약적 법률위
 - 헌법재판소는 축협을 사법인으로 판시('92헌바 47결정)
 - 위헌요소: 결사의 자유(헌법21조), 재산권침해(헌법 23조)
자조조직에 대한 발전의 보장의무(헌법제123조 5항)
 - 계약요소 : 전문성 확보미흡, 중앙회 조직 비대화
- 법제정 목적이 불분명함
-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강제통합
- 입법추진과정에서 검찰수사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 3~4년만에 망한다는 허위 비방으로 통합 유도
- 통합없다는 장관의 거짓말로 농란(農亂) 등 분열·혼란조장

3.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대안

- 제류중인 법안심의 유보
- 정부, 국회, 관련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한 법안제정

1999. 7

전국 축산농민조합원 일동
전국 축산인협동조합장 일동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민생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에 애쓰고 계시는 국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정국의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시고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계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IMF 극복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작금의 국회가 더욱 생산적이고 민생의 결으로 바짝 다가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신다면 저희 축산농민들은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농민들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가축과 함께 일생을 바치는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최근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진심으로 저희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방화 시대에 위기의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축협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자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축협의 경우 소·돼지·닭 등을 길러 생업을 영위하는 인적단체이며 경제단체로서 양축농민조합원에게 무한 봉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축산전문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1981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생산자 단체인 축협은 자육·자조·자생의 협동조합 원칙에 의거 100만 양축농민과 더불어 개방화시대에 국내 양축농민조합원의 보호와 축산업 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축산농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
고자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희 축협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적극 동참하면서
“양축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자체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서 축소는 물론 인력의
20%인 4,470명을 감축시키고 정년을 58세에서 56세로 낮추면서
인건비를 연간 1,6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도 이 나
라 축산업과 축협조직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축협가족
모두는 감내해 왔습니다.

타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비난받는 것과는 대조적
으로 축협은 양축농민조합원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생산과 가
공·판매 등의 경제사업에 주력한 결과 중앙회의 경우 경제사업
비중이 86%를 차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IMF 위기 속에서 양축현장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민간사료
공장에 앞서 10차례나 사료 값을 인하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
비절감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감소로 소값이 하락하였을 때 20~40%씩 염가로
판매하여 3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소값 안정을 유도하고
농민의 아픔을 대신하는 등 위기의 환경하에서 축산회생의 건인
차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축산이 처한 여건은 매우 어렵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과 축산인의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축협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당면 현안인 2001년 쇠고기 전면수입자유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조직의 정비와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묵은 틀을 과감하게 깨어나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호주·미국 등의 선진축산국들은 우리 나라 국민의 입맛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품질·저가격의 축산물을 파격적으로 세일하여 축산시장을 잠식하는 등 축산농민의 소득감소는 물론 국내축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285만두였던 한우사육두수가 올 연말에는 180만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우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고 있어 축산업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면한 축산여건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동질성에 입각한 결집으로 타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의 절박한 상황보다 100만 양축농민을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농림부가 협동조합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축산농민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축협을 '99. 3. 8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축산농민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완전수입개방하에서 축산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품질향상·안전축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과 순수민간 협동조합이 선전하게 발전할 때만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축농민조합원·협동조합 그리고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할 때만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제국들은 개방화 이전에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하여 식량산업만은 확고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전문협동조합인 축협이 주축이 되어 축산전문화를 이룩하여 당당하게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때만이 축산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번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협동조합 개혁원인인 농민과 국민들의 비난 요소를 치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희 축협은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혁과 강제적 통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논리로 설명해도 강제적 통합이 곧 개혁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현재 통합만이 개혁이라는 공식을 대입하여 농·축·임삼협을 강제로 통합하여 더욱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만들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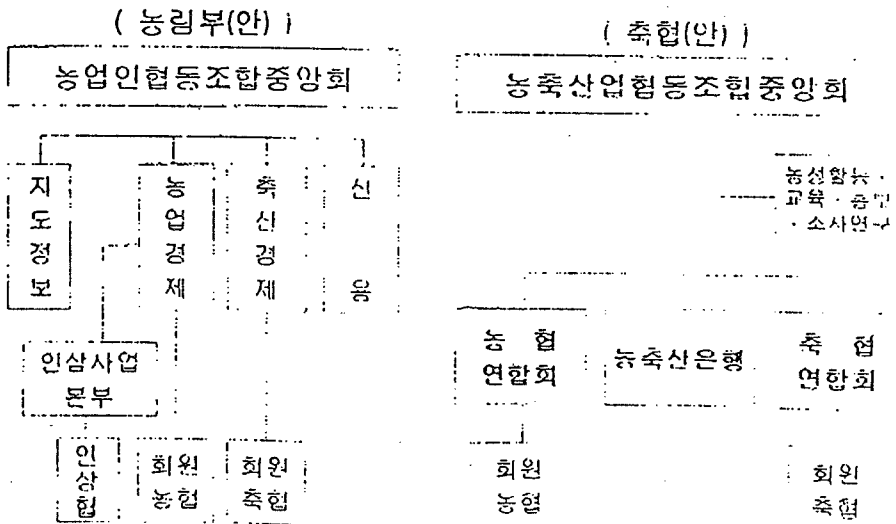
협동조합을 개혁하는 근본 목적이 '손쉬운 돈 장사에만 지중하고 유통·판매 등의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을 혁파하고 비대한 중앙회는 교육, 농정, 감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농업인의 자조적인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협은 협동조합 비남요인을 개선하고 정통성 있는 이윤과 정당성에 기초한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협은 현행체제하에서 '독립사업부제 강화방안'을 주장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 개혁방안이 제시한 방향대로 협동조합 원칙이 준수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농민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용·경제 분리의 연합회 안"을 반영하여 줄 것을 '99. 5. 8 농림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안은 농·축협의 중복되는 농정활동 등은 통합하고 농업과 축산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 연합회체제"안이며 주요내용은 신용과 경제는 분리하여 경제사업 자생력 확보와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으로써 학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전농(전국농민연합회총연맹)도 처음부터 진정한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줄 곧 주장하여 협동조합의 발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안과 축협 안]



농림부가 개혁에 동참하라는 요구와 함께 축협입장을 제출하라는 독촉에 따라 현행 독립사업부제 강화방안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별도 연합회 안”으로 제출하였지만 정부는 「농협이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데 줄곧 반대」해 온 입장 때문에 축협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농·축협통합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급변 농림부가 내놓은 통합법안은 협동조합의 원칙이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통합이라는 크나큰 문제를 극히 일부 사람이 양측농민조합원들의 의견수렴없이 강제로 추진하여 절차상 많은 하자물 안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비민주적인 법안입니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위헌의 요소와 개악의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축협을 설립의 목적이나 관리면에서 자주적 단체이므로 사법인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92헌마47결정). 위헌요소로는 사법인에 대한 결사의 자유 침해(헌법 제21조), 재산권의 침해(헌법 제23조), 농어민 자조조직에 대한 자율적 활동과 발전의 보장 의무 위배(헌법 제123조 제5항) 등이 있고, 개악적 요소로는 축산부문의 전문성 확보 미흡,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 정부의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통제기능 확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통제기능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의 제정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통합법안에서 정한 목적은 현행 각 협동조합의 관련 법으로도 해결 가능하며 중앙회간 업무 협약에 의거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농·축협 통합이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적 과제가 아니라 “신용사업 치중, 경제사업 소홀”과 비대한 중앙회의 슬림화 측면에서도 이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규모 농민집회(7월 1일: 축협, 7월 9일: 농협)로 농촌의 갈등 요인만 증폭시켰습니다.

세 번째, 통합 대상자간의 합의가 없는 정부에 의한 강제통합입니다.

농림부가 '99. 3. 8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이후에도 3. 18부터 4. 10까지 협동조합 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도 축협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무시하고 공청회를 3회 실시하면서도 의견청취로 끝내는 등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공기업, 재벌구조조정시에도 당사자간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농·축협은 자율적 단체로서 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이고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네 번째, 입법추진과정에서 감사원 특별감사, 검찰의 집중적 외압 속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축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99. 3. 3. 발표하고 곧바로 3. 8에 통합법안을 발표할 시점은 검찰수사중이었으며 3. 5부터 5. 13까지 검찰에서 축협 임직원 400여명의 인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5. 3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곧바로 박순용 전회장 등 9명의 친인척 80명에 대한 예금제척 추적을 실시하여 강압적인 상태에서 축협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림부에서 축협은 3~4년 안에 망한다는 허위, 비방자료를 배포하면서 통합을 유도하였습니다.

축협은 '81년 설립이래 조합원수 28천명에서 10배에 다다른 283천명으로 성장하고, 축산물 생산액도 설립당시 1조9,775억원에서 6조9,031억원으로 3.5배이상 발전하여 농촌에서는 축산업이 소농작목으로 각광받는 등 식량산업이며 근간·지주산업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라는 생산자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90년대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축협의 경영상황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98에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총당금 적립으로 927억원 적자를 나타냈으나 '99년 6월말 현재 1,045억원의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99년 수지전망은 지난해 적자수준을 총당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국의 장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정책적 오류 등 농란(農亂)을 자초하게 하였습니다.

농림부 자문기구인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98. 4. 13~7. 1까지 활동하면서 “독립사업부제” 강화방안과 신용·경제를 분리하는 “기능별 분리통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다가 마지막 회의시 동협 등에서 주장하여 단 한차례 논의된 바 있는 “현행 중앙회를 통합하는 안”을 들고나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3개안을 농림부에 건의하고 임무를 종료하였습니다.

'98. 11 역시 농림부 자문기구인 "농정평가자문위원회"의 제도개혁평가소위에서 협동조합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였을 때 농림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안을 기초로 국회에 설치되는 '협동조합소위'와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국정감사 시에도 이같은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요청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99. 3. 3. 발표되고나서 전 언론이 협동조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자 검찰이 3. 5~5. 3까지 수사를 계속하면서 강압적으로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농림부장관은 축협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각종 모임이나 보고서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대통령님께까지 사실을 왜곡 보고한 사실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을 숨겨 통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례로 '99. 2. 11 축협의 축산종합개발원에서 축협업무보고서 「IMF 극복 노력을 축협이 선도했다」고 칭찬하면서 9차례 사료값 인하중 8번을 축협이 앞장섰으며 「이렇게 하면은 누가 통합하라고 하겠는가」라고 발언하였으나 '99. 4. 4 KBS 1TV 정책진단 프로그램에서 "IMF시기에 협동조합이 아무것도 한 것 없다"라고

통합발표일('99. 3. 8) 이후에는 말을 바꾸어 버렸고 '99. 4. 2 대통령님께 국정보고서 「축협임직원들과 조합장들만 조직이기주의 차원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표적인 농민단체인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은 '99. 3. 30 공식반대 성명에서

농림부 협동조합 개혁안은 200만 농민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즉각 폐기하고 신용과 경계를 분리하여 '연합회 체제'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농협출신인 서기원 순천향대 교수 등이 통합반대의 글(대한매일 '99. 3. 11)을 기고한 것과 '99. 3. 16 장관의 자문기구인 축산발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전원이 전문성 후퇴와 통합 부당성을 제기했음에도 밀어붙이는 사례는 장관의 신뢰성을 의심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철희 전농협중앙회 회장의 리스트('99. 6. 11 문화일보)에서 현직 장관에게도 농·축협 통합문제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통합하게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의문이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축산업계 분열과 혼란을 조속 수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협동조합이 각기 전문조합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통합방안 발표로 농·축산업계는 서로 분열과 혼란이 초래되고 반목과 갈등 속에서 당면현안인 정부가 약속한 농가부채 해결문제와 협동조합이 주도하여야 할 유통개혁 등 산적한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농·축협의 공방으로 크나큰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심이난 현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농림부는 강제통합이 개혁인 것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농림부 산하기관 및 전국의 시·도읍면의 전 행정력을 동원 정부안 지지 및 축협 비리나 경영취약성 등을 왜곡 선전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축산농민의 마음을 울리는 서슴없는 짓을 자행하고 있어 국민의 정부에는 국민이 없다는 자조와 함께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축산농민은 농정당국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협개연'이라는 단체를 급조하여 축협을 음해, 왜곡, 헐박하도록 정부가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용인축협 조합원자녀 6학년 송지연 학생이 대통령할아버지께 드리는 글을 실제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농림부 직원과 용인시청 직원이 현지 출장 및 전화 조사하는 등 순수한 동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먹칠을 하고 농림부장관이 독선과 편견으로 농정을 왜곡하고 농란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농·축산계에서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이번 기회에 또다시 고철 필요가 없는 진실된 개혁법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양축농민 조합원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의 힘에서 나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민심이 떠나면 통치력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고관집 전도사건, 옷 로비사건, 조폐창 파업유도사건 등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조소와 함께 불신, 냉소로 가득차 있습니다.

축협양축농민 조합원 28만명은 사정을 앞세워 농·축협 통합에 손을 들게 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강압적이고 밀어부치기식 졸속 개혁에 강한 반발과 성토를 하면서 정부에 등을 돌린지가 오래입니다.

장관은 이번 상정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농림부 1급이상 관료 4명의 목이 날아가니 꼭 통과 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혁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축산농민조합원 28만명 및 축협종사자들은 정부관료 4명만도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정책을 펴는 정부인지 국민에게 군림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관료의 독선인지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의 사태는 전적으로 김성훈 농림부장관과 개혁을 호도하는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선·권위주의·편견 등의 국정운영에 우리 축산농민들도 농을 놀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정부를 불만과 불신의 대명사로 여겨왔습니다.

저희 축협은 전운 협동조합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서 양축농민에게 무한 봉사과 책임 봉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개혁은 협동조합이 생존영역을 확보하여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하며 축협의 경우 설립된 지 20년이 가까운 지금 마녀사냥식 여론조성과 사정당국의 강압적인 수사권을 이용해 급조된 졸속통합 법안은 결코 개혁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니 반드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류중인 농업인협동조합법은 시행일이 2000. 7. 1로 농림부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규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양축농민들의 간절한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축농민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사리 판단은 분명하며 더 이상 민심을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라며 협동조합 문제는 협동조합을 스스로가 풀어나가도록 개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은 속일 수 있지만 민심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법다운 진정한 양축농민법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관련단체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농민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진언 드립니다.

국회의원님의 강건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일 백만 양축농민은 협동조합과 더불어 다가오는 21세기를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 7

전국 축산농민조합원 일동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 일동

□ 성명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 黃昌柱)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T. 3401-6543 F. 3401-6549)

□ 여야 각당은 조속히 국회를 소집하여 농업현안을 처리하라 ! □

한농연은 여야 각당이 하루빨리 국회를 소집하여 협동조합 개혁법안과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 각종 농업현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농업문제를 포함하여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각종 민생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 치중하여 정쟁만 거듭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최근 여야 각당이 국회의 각종 민생현안 처리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생산성 있는 국회로 만들자고 스스로 다짐했던 선량들인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IMF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락과 농가부채 누증으로 어느 분야보다도 타격이 큰 농업분야는 민생현안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농가부채로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의 농가부채 부담을 경감해줄 1조1천억원의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국회심의를 거치지 못해 아직까지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여 한시가 시급한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또한 5백만 농민의 염원과 우리농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됨에 따라 아직 농립해양위에서 새대로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농연은 당리당략에만 치중하여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조속히 국회를 소집하여 농업관련 각종 민생현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7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협동조합 개혁없이 우리농업 미래없다”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노조가 전농과 함께 연대하여 8월 3일 반개혁집회를
개최하겠다는데 대해 전농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반개혁세력 축협노조와의 연대는 전농의 역사와 명예에 먹칠하는 행위이다 -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축협노조가 또다시 8월 3일 「협동조합 강제통합 반대 노·농·학 연대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협동조합 개혁입법은 5백만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농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함께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개혁과제로서, 만일 여기서 또다시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좌절한다면 농정개혁의 전면적인 후퇴는 물론 우리농업과 농촌사회에는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협개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68개 농민·시민단체는 축협에게 무조건적인 반대투쟁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살리고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그동안 수없이 호소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매달리는 축협중앙회와 축협노조는 이를 전면 무시한채 개혁법안 저지에만 사활을 걸고 매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개혁법안의 국회심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협동조합 직원으로서의 기본사명마저 망각한채 총파업 선언과 근무지 무단이탈을 당연시 하는 것은 물론, 개혁을 주도하는 농민단체와 농업계 인사에 대한 음해와 공갈협박은 이미 이들만의 고유한 전매특허가 된 지 오래이다.

더구나 축협중앙회는 부실경영이 누적되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심각한 경고에 대해서도, 축산농가 지원을 외면한채 증권투자에만 열을 올려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익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대며 축협중앙회 경영이 아주 건실한 것처럼 거짓선전을 해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축협노조가 전농과 함께 연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준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농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은 커녕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축협의 전문화를 가로막고 회원조합과의 출혈경쟁을 통해 중앙회 이익추구에만 치중하여 축산농가들로부터 극도의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는 축협중앙회와 연대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은 전농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회 통합을 찬성하는 전농이 이를 반대하는 축협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협개연은 이미 7월 22일자로 발표한 공개질의를 통해 최근 항간에 일고 있는 전농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전농의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전농은 '개혁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연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다는 것인지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전농의 최근 행보에 대해 걱정하는 일선 농민들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고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축협노조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전농이 축협과 함께 8월 3일 반개혁집회를 강행한다면 개혁을 갈망하는 5백만 농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농업의 역사에 영원히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개연 소속 68개 참여단체들은 전농을 농민운동에 헌신해온 농민권익 대변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반개혁세력파도 손을 맞잡는 무원칙한 단체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농이 축협노조와 손잡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5백만 농민의 개혁열망을 짓밟는 8월 3일 집회를 끝내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이들 두 단체의 연대의도를 폭로할 것임을 물론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다.

1999년 7월 29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 시민연대

■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김춘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카수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자,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 공동대표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적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상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응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증자협회, 한국축적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진주산업대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력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조합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도 많습시다만, 사정이 그렇지 못해 이렇게 서면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합장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기분으로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언제라도 전화나 서신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조합장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축협중앙회를 그대로 둔 채 구조조정을 하면 되지 왜 구태여 농·축협중앙회를 합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축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축협중앙회를 지탱하는 3대 수익원은 사료사업, 수입최고기 판매사업, 신용사업 세가지입니다.

이중 사료사업은 회원조합의 육성을 위해 조합으로 이관해야 할 사업입니다.

수입최고기 판매사업은 그 동안 중앙회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지만, 작년에는 3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01년 최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되면 사실상 중단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신용사업도 나름대로 그동안 기여를 해 왔지만, 예수금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신용사업으로는 앞으로 치열한 금융기관간 경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올해 축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만, '99상반기 유가증권 수익금의 대부분은 정부의 IMF 경제정책에 힘입어 올해 불타듯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품현상으로서 결코 축협중앙회 신용사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앙회 신용사업의 생산성은 직원 1인당 예수금이나 이익금 규모가 농협중앙회의 50~70%에 불과하고, 더구나 중앙회의 예수금 규모가 금년들어 년초에 비해 2,000억원 이상 줄어들었으며, 그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중앙회의 사정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일선 축협의 경영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조합의 실정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려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난해 감사원감사 결과 일선축협이 대손충당금과 퇴직충당금을 제대로 쌓을 경우 158개조합이 자본을 완전 잠식당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경우 일선축협의 도산이나 파산이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촌사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는 장관부터 앞장서서 우체국의 한미은행자금 농촌대출 업무 개시를 기를 쓰고 막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뿐 일선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이렇듯 일선축협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앞서 말씀드린 사정때문에 일선축협을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바로 농·축·삼협중앙회를 통합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일선축협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자금을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지마는 혼자서는 다 마련할 수 없고, 중앙회를 통합하여 절감되는 재원을 함께 투입해야 합니다.

일선조합으로서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없이는 충분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지난해 금융권 구조조정때 64조원을 투입했으니 협동조합 구조조정에도 정부가 그만큼의 돈을 대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4조원의 공적자금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중 32.5조원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국가 명의의 출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만, 이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은 경영진이 모두 퇴진당했고, 은행간 합병을 하였으며, 주식(협동조합으로 말하면 출자금)은 대부분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실채권의 매입에 있어서도 담보가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대출금의 3%만 보상을 해주는 등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축협이 통합될 경우 농림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2차 부실채권 정리기회가 오면 농·축협도 그 혜택을 누리도록 주선할 작정입니다.

중앙회를 통합하면 일선조합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선축협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회원의 숫자가 적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전혀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중앙회를 통합하면 절감되는 재원과 통합중앙회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일선조합을 파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이유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선의 농·축협을 통합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화를 촉진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불필요해진 중앙회 자산의 매각대금이 5,000~6,000억원 수준 예상됩니다만, 이 자금을 우선적으로 일선 조합의 경영정상화에 쓰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합당 30~50억원의 특별 유통자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선조합의 상호금융 신뢰도가 더욱 높아져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법정기금으로 만들고, 통합중앙회가 고객들에게 예금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므로써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이 그 어느 금융기관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온 국민앞에 보여주도록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선축협의 신용사업을 축협중앙회라는 소규모 조직에 의지하는 것보다 통합중앙회라는 대규모 조직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셋째, 농·축협간에 협동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농협과 축협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돕고 보완하는 관계이지요. 최소한 중앙회 단위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하고 있는 235개 협동조합중앙회중에 축산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아무튼 축협에서 축분퇴비를 생산하면 농협에서는 그 퇴비를 판매하고, 축산물과 농산물을 도시소비지에서 함께 판매하는 등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농업인들도 농협과 축협에 이중가입 되어 있는 사람들이 80%이상이지 않습니까?

농협과 축협을 대립관계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선축협이야 죽든 말든 오로지 축협중앙회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중앙회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일선축협은 명칭과 경영이 지금 이대로 독립적입니다. 일선축협으로서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 총회나 이사회에서 축협을 대표하는 숫자가 적어 문제가 될 것 같이들 이야기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선조합을 지원하는 자금의 대부분은 재정자금에서 나오는데, 재정자금을 농업부문과 축산부문으로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그 원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결정될 성질이기 때문에 축산업의 비중에 걸맞게 배분될 것이고 축협 조합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중에서도 전문조합은 46개에 불과해 소수이지만, 자금지원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역조합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합 상호지원자금의 경우 전문조합은 총 81억원을 내고,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은 282억원에 달해(3.5배) 지역조합(1.7배)보다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업부문과 축산부문은 각각 대표이사에 의한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되므로 총회나 이사회에서 서로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지도사업이나 경제사업에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축산부문은 통합중앙회로부터 여러모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축협중앙회 임직원 중에는 일선의 축협과 농협도 결국 합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합병 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농업인협동조합법을 잘 살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국회에 제출된 통합법안의 구조는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농협, 제3장 지역축협, 제4장 업종조합 등의 순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일 지역축협과 지역농협을 통합하고자 한다면 둘을 합쳐 지역조합으로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법안 제75조는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당초 이종조합간 합병근거를 명문화했던 초안과는 180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물론 현행조항에 의해서도 축협조합원과 농협조합원들이 모두 합병을하기를 원한다면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러한 합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농협조합과 축협조합은 영원히 합칠 수 없다고 못박고 싶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합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명예를 걸고 단언합니다만, 일선축협과 농협은 조합원이 모두 합병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기 전에는 결코 합쳐지 않습니다.

지난 7.9일 새회장으로 선출된 신구범회장은 신·경분리와 연합회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해서 축협의 입장은 여러번 바뀌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농·축협중앙회의 통합반대를 외치다가 금년 초기에는 신·경분리와 독립법인 연합회를 주장했고, 지난 5.20일에는 비상대책위의 승인을 받아 통합을 전제로 한 수정정보안, 그리고 지금은 다시 통합반대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신·경분리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에게 자금지원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추가적으로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립자본을 마련해야 하며, 세금부담이 훨씬 더 커져 조합원에 대한 지도사업비 등을 조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경분리안은 장차 여건이 갖추어지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만, 절대다수 농업인이 반대하고 현재로서는 우리 농업인의 이익과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경분리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독립법인 연합회안도 기본적으로 신·경분리가 전제된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와 같이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합회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익재원이 없어져 결국 그 운영정비를 회원조합이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조합의 현실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셋째, 신규범회장이 농림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과거 협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으로 축협이 '정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창구'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정책자금 집행창구 업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없는 선진국 농업인들과 협동조합에서 조차 알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정책자금의 창구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댄 은행에 맡겨달라는 뜻입니까?

물론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취급비용도 덜 들고 경쟁을 촉진해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차를 보전해 주며 일부 필요한 정책자금을 농·축협으로부터 조달하는 행위는 댄 은행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농·축협의 신용사업을 확실히 돕는 행위입니다. 확실히 믿고 돈을 빌려줄 기관이 정부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한마디로 우리 농업계가 국민앞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동참하고, 농업인을 위해 다시 태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시한 것입니다.

이번 협동조합의 개혁내용에는 중앙회의 통합문제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선조합의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중앙회의 경합사업을 배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중앙회나 조합이 유통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말만 꺼냈지 결단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망라되었습니다.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이때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21C 새천년 농축산업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놓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는 유통개혁도 협동조합의 개혁없이는 반쪽개혁에 불과합니다. 협동조합개혁과 유통구조개혁이 함께 맞물려 추진될 경우 우리 농촌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1만 축산농민의 목소리

저희 입장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28만 축산농민 조합원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축협은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개혁하는 근본 목적은 손쉬운 돈 장사에만 치중하고, 유통·판매 등의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는 점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동시에 비대한 중앙회의 역할을 변화시켜 교육·농정 감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농축산인의 자조적인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개편하는 것이 협동조합 개혁의 취지입니다. 축협이 주장하는 개혁안은 농·축협의 중복되는 농정활동 등은 통합하고 농업과 축산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별도 연합회 체제입니다.

신용과 경제는 분리하여 경제사업의 자생력 확보와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학계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기독교농민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협동조합 개혁 국민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정통성 있는 안 일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축협은 입법과정상 말 많고 현행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부입법안 보다는 농·축산업의 비전을 밝히고 농·축산인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그래서 또다시 고칠 필요 없는 진정한 협동조합법을 만들기 위해 이번 안을 유보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합니다.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축협중앙회의 비이성적, 발악적인 반개혁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기를 뒤흔드는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

- '대통령 광양 발언 날조설'을 주장하는 신회장을 소환하여 즉각 조사하라 -
-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강제통합으로 몰기 위해 '농림부 요구로 감사원의 축협감사가 이루어졌으며 통합법안이 위헌'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책임자를 처벌하라 -
- 축협은 조합설립인가서 반납 등 축산농가를 불모로한 험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 축협은 경영부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
 - 내년 6월까지 법안심의 유포 주장은 협동조합 개혁을 포기하라는 험박이다-
- 개혁입법 저지를 위한 중앙회의 파행적 운영과 불법시위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

우리는 8월 2일 개최될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근 축협중앙회가 협동조합 개혁법안 저지를 위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채 자칫 국기를 뒤흔들 수도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7월 22일 광양에서 개최된 '전남도민과의 대화'에서 김 대통령이 독농가인 김석중씨의 질의에 「협동조합 통합은 축협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실현시킬 것」 이라고 답변한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친구법 축협회장에 대해 그 진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5백만 농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공식석상에서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사실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축협중앙회는 이제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국가원수 모독행위마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최근 축협이 지난 98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가 농림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축협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검찰의 수사를 강행하고 협동조합 강제통합 법안을 추진했으며 위헌이라는 억지주장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농림부의 요구를 받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미 정부에서 감사원 자체 계획으로 실시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일선 농민조합원들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중앙회 통합 협동조합 개혁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강제통합으로 돌아부쳐 법안심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책임자를 조사하여 즉각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합헌판정을 받은 개혁법안에 대해 자신들이 마치 헌법재판소라도 되는 양 위헌이라고 단정짓는 진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협개연은 축협중앙회가 7월 27일자로 전국의 회원조합에 공문을 하달하여 8월 3일 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농업인협동조합법 철회 ▲법안통과를 강행시 조합설립인가서 반납 ▲법안통과시 중앙회 회원 탈퇴 동용 결의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일 오전 신구법 축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서를 반납하고 지역축협이 중앙회 회신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도 모르고 회원조합장들을 무시한 처사로서, '회원조합 없는 중앙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중앙회가 회원조합에게 설립인가서를 반납하고 중앙회 회원을 탈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설립인가서를 반납하라고 지시해놓고도 '설립인가서 반납만으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다'고 병기한 것은 축산농가들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반개혁 의도를 관철하겠다는 공갈협박용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는 최근 축협중앙회가 자신들의 경영부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채 이를 축협을 옹호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선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경영위기를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축협중앙회는 작년 한해에만 자기자본금의 55%에 달하는 927억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수입쇠고기 판매사업의 수입 감소와 신용사업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이제 회원조합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는 유가공, 육가공, 사료사업 등 회원조합과의 출혈경쟁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으며, 올 상반기 증권투자에 열을 올려 일시적으로 늘어난 흑자를 가지고 마치 경영부실이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다섯째, 우리는 축협중앙회가 내년 6월까지 협동조합 개혁법안 심의를 유보하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혁법안은 그동안 무수한 토론과 농민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이제 마지막 심의과정

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보하자는 것은 협동조합 개혁을 포기하라는 협박에 다름아닌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최근 축협이 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축협의 중견간부들을 7월 28일부터 열흘간 농림해양위원 지역구에 파견하여 지구당사 시위 등을 지휘토록 하는 등 중앙회의 파행적인 운영은 물론, 여의도 소재 여야 정당의 중앙당사 주변의 호텔을 대규모로 예약하여 중앙당사 점거농성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극단적인 불법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1999년 7월 30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상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음,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 공동대표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은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목송야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기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축자협회, 한국축육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전주산업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 농림부장관의 나팔수 협·개·연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성 짙은
극소수 농민귀족 인사들의 단말마적 발악과 전횡을 경고한다 -

최근 농림부장관의 나팔수노릇을 자처하며 연일 원색적인 축협비난 성명서를 무차별적으로 내고있는 협동조합개혁추진범농업인·시민연대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자숙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들도보도 못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단체들의 이름을 동원하여 5백만 농민들의 숭고한 이념을 팔아먹으면서까지 극소수의 정치성 짙은 순수치 못한 농민단체 인사들이 전횡을 일삼는 것에 대해 일부에 의해 급조되어 농림부의 나팔수 역할이나 하는 정통성 없는 집단이라 여기고 상대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어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뒤 안가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수만 없기에 진실을 바로 잡는 심정으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대통령께서 전남광양에서 답변한 내용은 녹취록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듯이 「농협의 통합은 축협에서 적극 반대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실현시킬 것」이라고 청와대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농림부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왜곡, 언론 보도자료 및 국회등에 배포하여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법안통과를 강행하는데 이용하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조차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며 매도하고 있는데 과연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의 대명사 농림부장관이 일국의 대통령 발언조차 왜곡하여 이용하려는 것 중 어떤 것이 국기를 뒤흔드는 행위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농림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대해 축협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는데 1999년2월25일 당시 청와대 박지원 공보수석이 축협강당에서 정부의 개혁성과와 방향설명 및 국정홍보를 겸한 강의를 발언한 것으로 당시의 VTR테잎과 관련 일간지기사 2건도 이미 언론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 농림부가 축협중앙회의 경영상태에 대해 마치 3~4년 안에 망할 것처럼 허위선전과 비방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은 국민이 알고 있듯이 '98년도에는 IMF경제위기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충당금 적립으로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우리 축협중앙회도 경영의 건실화를 이루기 위해 각종 충당금의 100% 적립과 동시에 가급적 지난해에 적자를 많이 시현토록 하여 적자요인을 완전 제거, 차기 이후의 경영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98년도만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결산을 하였다.

덕분에 올해에는 6월말 현재 1,045억원의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어 '99년 수지전망은 지난해 적자수준을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채권 비율도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타 금융기관보다 현저히 낮아 아주 건실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문제투성이 법안의 국회 강행통과를 위한 정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지자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지난해의 적자가 축협의 구조적 경영부실 원인인 양 악선전, 곧 망할 조직으로 매도하며 법안통과를 강행키 위한 마지막 발악적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경제사업에 충실하려 노력해온 축협의 사업에 대해 이제와서 일선조합과의 출혈 경쟁운운하며 매도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거대자본과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축산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규모의 조합들이 하기 힘든 축산농민들의 생산지원과 유통판매사업을 중앙회가 맡아서 하는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면 협동조합중앙회는 모두 돈장사에만 열을 올리라는 것인가? 돈장사에만 열중해온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개혁논의 과정에서 왜 일언반구가 없는지 그 순수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협·개·연이라는 간판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수 없는 단체들의 이름을 동원하여 극소수 농민단체 인사들이 전횡을 일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짚고 그 적지적 불순함을 폭로해 나갈 것이며 협·개·연이 진정 농민들의 대표성있는 조직인지 검증해 나가는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협·개·연의 결성배경과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참여하는 개별단체의 대표자와 소속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져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것인지, 협·개·연의 활동과 방향 그리고 비 순수성에 동의하는 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항의의사 전달과 함께 그 실제적 진실을 분명히 규명할 것이다.

더불어 그간 협·개·연의 증상과 모략, 허위의 사실유포, 명예 및 신용의 훼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협·개·연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별단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1999. 8. 2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정수

양 일 보	世界日報	每日經濟新聞
月 二 日 / 丙	八 月 二 日 / 丙	八 月 二 日 三 日 丙

조선농민의 목소리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강제통합, 득보다 실이 큼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이 지적받아왔던 문제는 중앙적인 관리와 운영의 미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담이 농협부담 강제통합이라는 잘못된 처방을 내렸습니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단순 통합은 더 큰 공공중양회, 더 큰 '돈장사들' 만드는 잘못된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축산물 수입 개방이 눈앞에 와 있는 지금, 축산업은 현충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통합은 전문화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같은 농업이지 일반 논·밭농사의 살아 움직이는 가슴을 키르는 축산업은 같은 정도 다른 점이 많아 통합에 따른 이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강제통합은 원천의 소지가 있습니다. 축협은 축산농민의 출자로 만들어진 자율조직입니다. 따라서 주인인 축산 농민이 반대

하는 협동조합 강제통합은 결사의 자유, 재산권보장, 농민의 자조조직 육성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저촉됩니다. 지금 농촌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동학, 6.25와 같이 그 어려운 때에도 농심의 본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분도, 실적도 없는 협동조합 강제통합 논란으로 지금 농촌이 시끄럽고 농심이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법안의 재검토 일단 유보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실한 계획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 우선 원칙에 따라 새 계획대안을 논의 할 기회가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개혁의 지체가 아닙니다. 현 통합법안의 시행일도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 만큼 그 시간이면 얼마든지 새로운 계획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 축협중앙회의 한농연 분열 음모를 규탄한다 ■

- 축협은 한농연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 축협은 한농연 분열 음모에 대한 즉각 공개 사과하라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11만 농업경영인의 자주적인 조직인 한농연은 분열시키고자 하는 축협중앙회의 비열한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한농연의 입장에 반발하여 지난 7월 6일(화) 일부 농업경영인 출신 축협조합장들이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축산부군 후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축산경영인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으며, 일부 축산전문지의 보도에 의하면 오대철(전북 남원축협) 조합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이동성(강원 양봉축협)조합장 이성중(충북 진천축협)조합장 박영목(경북 군위축협)조합장 나준화(전남 나주축협)조합장을 추진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즉각적으로 사실확인 여부에 들어갔으며,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축협 조합장들 대다수가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한농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행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일각에서는 그 배후에 축협중앙회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한농연은 조직분열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일단 인내를 갖고서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모임을 주도하였던 농업경영인 축협 조합장 대표사들과 지난 7월 27일 간담회를 갖고, 별도의 축산경영인단체 설립이라는 분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축협 조합장 대표들은 당초 8월 3일로 예정되었던 발기인대회를 취소하는 대신 한농연과 대화의 자리를 갖기 위해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 8월 3일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들과 한농연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토론회의 기본공격어 대해 합의를 한 후에, 양측의 1인을 창구로 선정하여 실무추진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실무추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일부 이견도 발생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이견에 대해 한농연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하여 이견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7월 29일 갑자기 오대철 조합장으로부터 예정되었던 한농연과의 토론회를 취소하고 별도로 자체적인 행사로 치르겠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축협중앙회가 한농연과의 토론회를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조합장들이 그에 순응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8월 3일 토론회는 축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토론회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축협중앙회가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이 없는 지역축협에까지 독려를 하면서 지역축협 차원에서 한농연 회원을 상대로 토론회에 참가하도록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저다가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의 일부가 즉석에서 발언을 하여, 축산경영인단체 발기인대회를 기술적으로 저리할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고정을 볼 때 별도의 축산경영인단체 설립 움직임의 배후에 축협중앙회가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축협중앙회의 입장을 대변할 들러리 외곽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별도의 축산경영인단체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에 대한 2억원 혹은 전국단위 조지에 10억원의 자금지원설까지 유포되고 있으며, 축협이 나서서 축산부문 후계자를 대상으로 한농연을 탈퇴하도록 회유·압력을 행사하면서 한농연 회원 명부를 입수하려 한다는 등의 축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개혁에 반발하는 반개혁 기독교세력의 대표적인 축협중앙회가 농축협중앙회 통합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1만 농업경영인의 사주적인 조직인 한농연 분열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조장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농연은 종편을 다해 모든 방법을 다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축협중앙회의 외곽 들러리 조직으로 전락하는 별도의 축산경영인단체를 설립하는데 적극 가담하거나 앞장서는 일부 극소수의 회원과 여기에 가입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한농연 조직분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명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근 축협중앙회는 대통령령의 광양발원에 대해 거짓선전을 히거나 농림부 장관과의 면담결과를 허위로 왜곡하여 유포시키는 등 농축협중앙회 통합반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불연치한 평태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것도 도자라 한농연 조직을 분열시켜 자신의 들러리 외곽조직을 만들기 위해 갖은 압력과 회유를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설까지 유포되고 있는 등 철저히 반개혁 기독교집단임을 관철하에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협중앙회 통합문제는 협동조합 개혁의 수많은 과제 가운데 일부분이며, 협동조합 개혁은 산적한 농정개혁 현안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한농연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마사회와 농림부 환원, 2000년도 농업투자예산의 확보, 쌀 및 말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등 수많은 농정현안에 대해 농민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농연 조직은 더욱 더 단결해야 할 때이다.

전체 500만 농민의 생존권이 종전동화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축협중앙회는 오직 자신의 기독교권을 지키는 일에만 열안이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밖의 주요한 농정현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반개혁 기독교 집단으로서 철저히 개혁의 대상임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과 11만 농업경영은 축협중앙회가 비열한 한농연 분열 운모를 즉가 중단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철저한 개혁과 수많은 농정개혁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9년 8월 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상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최근 축협이 거짓선전과 농민단체 분열행위에 대해 공개질의한다

- '대통령 광양발언 조작' 주장이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 -
- 중앙회장 결재없이 설립인가증 반납 지시 공문이 나갈 수 있는가 -
- 잇따른 사실왜곡과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축협회장은 '이중인격자'인가 -
- 임시국회 동안 개혁법안 반대 불법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이 사실인가 -
- 축협중앙회가 축산경영인연합회 설립 등 협개연 참여단체 와해공작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최근 축협중앙회가 개혁법안의 마지막 국회심의를 앞두고 온갖 거짓선전과 농민단체 분열행위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신구범 축협회장은 「7월 22일 김 대통령이 광양에서 가진 전남도민과의 대화에서 '협동조합의 통합은 축협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실현시킬 것이다'고 언급한 사실이 허위로 조작되어 전문지에 보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구범 축협회장은 7월 30일 농림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광양발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대라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친구와 술한잔 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답변하며 슬그머니 빠져 나갔다. 결국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조작이라고 물고가려는 신회장은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한다.

둘째, 7월 30일 농림부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 한명이 축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보낸 공문의 사본을 제시하며 「설립인가증 반납을 총회에서 결의토록 지시한 것이 사실이나」는 질의에 대해서도 축협회장과 기조실장 모두가 모르는 사실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과연 이토록 중요한 문서가 최고책임자의 결재도 없이 나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축협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인가증을 반납하면 예금자 고객은 어떻게 하나는 질의에 대해 '인가증 반납한다

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형식적인 항의행위'라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더구나 축협중앙회는 공문을 하달한후 일선 조합의 전·상부들을 중앙회에 소집하여 이와 관련한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협개연이 확인했는데도 아직까지 뻔뻔스런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무릇 지도자는 진실과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1급 공무원과 제주도지사까지 지낸 신회장이 회원조합의 존엄과 직결된 문서를 물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인격자'나 '과협치법'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아울러 신회장은 이로 인한 전국 축산농가들의 정신적 충격과 동요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셋째, 축협회장은 최근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마치 있었던 일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신회장은 농협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도 '농협회장이 여러번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5일 농협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협과 축협 양당사자가 향후 1년 동안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자율 협의토록 하는 것에 농림부장관이 합의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국회통과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네째, 축협은 협동조합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 연일 5천~1만명 규모의 반대시위를 계속하고 심지어는 여야 각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절거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시위 계획까지 잡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축산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축협중앙회장 등 집행부가 어떻게 피고용자인 노조 직원들과 함께 시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커녕 오히려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데 이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가?

다섯째, 최근 축협중앙회는 한농연을 비롯한 협동조합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의 분열과 와해를 획책하는 각종 공작행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이것이 사실인지 분명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축산경영인연합회 설립 움직임에서 확인되었듯이 협개연 참여단체 와해공작에 앞장서는 농민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축협이 작게는 2억원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로서 우리는 이 사태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1999년 8월 2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 상임대표 :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박병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상섭,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 공동대표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목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이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가면농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합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진주산업대최고농업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력고경영자과정학생회

우리 4만여 축산경영인 일당은 그간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각 지역의 "한농연 지역연합회"를 통하여 개진해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의견은 한농연 중앙연합회에서 결집하여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한농연 간부들은 협동조합 통합을 반대하는 각 지역 여론과 축산경영인의 의사를 대변하기는 커녕, 농림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정부의 대변인 역할에만 주력함으로써 우리 축산경영인의 의사를 철저히 외면하여 왔으며, 지난 7월 27일 우리의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토론회 요구를 참석자 통제, 기자출입 금지 및 비보도를 선제로 개최하자고 하는 등 아직 파행적 운영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 축산경영인 일당은 한농연 간부의 조직 운영형태가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농민단체 본연의 기능인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세력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나, 우리 축산경영인은 지금까지 한농연이 일반 경종농업 위주로 운영하여 우리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영인만의 조직을 설립하여 권익을 되찾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축산경영인연합회」를 설립한다.

1. 나, 우리는 정부가 축산업이 무궁한 성장산업임에도 이를 인식치 못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국내 축산업을 사지로 내모는 협동조합 통합과 시·군 행정기관의 축산과(계) 없애기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나, 정부는 농가부채 해결, 마사회 이관 등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가시적인 축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라.

1. 나, 우리는 농축산인의 자조 자주조직인 협동조합을 정부 주도로 강제 통합하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질차상의 하자과 무수한 위험적 사실을 내포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농림부는 지금까지의 농민단체 일부 간부의 사욕을 담보로 전체 여론을 도하는 비도덕적 정책추진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이 나라 농업계에 사유제가 없는 농민단체와 농심 분열현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한 협동조합 개혁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농민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다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1999. 8. 3

한국축산경영인연합회 설립준비위원 일동

축산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축협이 있습니다. 수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떠나려 보내고 물에 잠긴 논·밭을 걱정하며 바깥짐을 지고 개실 농·축산인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그러나 물난리는 하늘이 있다고 하지만 복구와 재건은 우리들의 몫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복구와 지원에 저희 축협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선 축협 재해대책본부는 200억원의 긴급지금을 1차 지원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까지 사료를 무상공급하는 한편, 식수 등 생필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이 강고는 분계점 많은 협동조합 강제통합 법안 제정의 유보로 촉구하고 운반은 거역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부의 잘못된 협동조합 통합을 바로 잡는 일이 아무리 '크고 급하다고 해도' 뜻밖의 풀날리로 실의와 고통에 잠긴 농·축산인의 심경 보다 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다 시의

협동조합 강제통합은 명분도 실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등 결자해죄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올바른 개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선 농·축협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농·축산인 여러분은 물론 농업부와 국회도 저희 축협의 이런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협동조합 강제통합 법안제정은 일단 유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농·축산인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인 농·축협에 협의의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축협 직원들은 양축가 조합원에게 무한봉사하는 참다운 협동조합 종사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 축협직원들은 우리축산지키기 위한 협동조합 통합까지 무쟁과 더불어 수혜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수혜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2001년 축산물 완전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업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축농협 통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키 위한 부쟁과 함께 축사시설복구, 가축방역지원 등 축산농가 수혜복구 지원에 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축산 재해대책본부는 신속히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에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까지 사료표 무상공급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도 수혜지역에 각종 생필품등을 공급하고 성금모금에 조직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축산농가 수혜복구 긴급지원반」을 설치 운영하여 연인원 7천여명의 직원을 투입, 정상적인 양축활동이 가능하도록 축산농가의 최순원 축사시설 복구 등 양축가 조합원 수혜복구작업 지원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축산농가 수혜복구 긴급지원 요청전화 : 02-2224-8881~7]

■ 농림부도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 강행통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농축산인들을 위한 재해대책에 령할 것이며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을 유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림부는 수혜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해대책을 발표하기에도 앞서 협동조합에 따른 막대한 사들일 국민의 협제로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농림부 공무원들을 대거 동여 문제가 많은 법안의 국회강행통과를 위한 활동에 열안이 되어 있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해 왔듯이 농림부는 농민들의 관심을 돌려 농정신태를 협동조합에 전가하기 위 할작업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농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농가부처 대책, 농축산물 유통개치, 마시 원 등 농촌현안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농림부는 농정을 책임지는 최고기관답게 농축산인들을 위해 시급한 민생행인의 해결근 수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혜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재해대책에 전념할 것을 주문합니다.

1999. 8. 5

전국축협노동조합 · 축협중앙회노동조합

동조합 개혁을 위한 축산농민의 목소리

실익도 명분도 없는 협동조합 강제통합

당시지 참여속에 진정한 개혁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축협이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부 법안대로의 협동조합 강제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적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중앙회 비대화, 돈장사 치중이라는 비난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큰 공룡중앙회, 더 큰 돈장사를 만드는 것이 강제통합 법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 강제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개혁을 위한 우리의 입장과 대안을 밝힙니다.

1. 협동조합법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 축협 단선 이전(1981년)의 농협으로 되돌아가 축산업을 퇴보시키는 법안입니다.
- 축협은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축산농민이 주체인 조직입니다.
- 국민의 식생활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축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이 눈앞에 와 있는 지금 우리의 생업인 축산업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축산업의 전문성은 한층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미국 최고기술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에는 통합이라는 수단 말고 전문화, 세분화라는 현대의 수단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류목별, 속종별로 전국단위의 전문화된 협동조합 연합조직이 있습니다.
- 강제통합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 주권인 축산농민이 반대하는 협동조합 강제통합은 감사의 자유, 재산권보장, 농민의 자조조직 육성을 규정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 축협은 축산농민의 총자본 만들어진 자율 조직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빈말에도 당시지 기업인 협의가 우선됩니다. 허물여 농민이 주체인 협동조합 개혁에도 농·축·상협 등 당사자 협동조합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농촌사회가 혼란되고 있습니다.
- 명분도 실익도 없는 협동조합 강제통합 논란으로 지금 농촌이 시끄럽고 농심이 사분오열 되고 있습니다.
- 동학, 6.25에도 농심의 분열은 없었습니다. 농림부의 정압과 최유에 분할을 반대하던 일부 농민단체 등이 전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농심의 혼란과 분열은 농남이라 합니다.

2. 다음과 같이 권의 합니다.

- 우선 통합법인 제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시간이 좀 길더라도 충실한 개혁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개혁 당사자인 농·축·상협이 자율적으로 합의적인 협동조합 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허락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혁의 지혜가 아닙니다. 현 공법법인의 시행일도 2000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사이 얼마든지 협동조합 역대대계를 위한 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축산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축산이든습니다. 우리 축농의
지혜와 의견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국회는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반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개혁법안을 마련하라

1.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김대중정부의 대선공약이다.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협동조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중앙회 중심의 하향식구조를 바꾸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오히려 중앙회를 비대하게 할뿐만 아니라 역대정권의 시너역할을 했던 협동조합을 정부가 계속 장악, 유지하려는 반 개혁안으로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동조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고스란히 온존시켜 이후에 또다시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 법안이 현재 협동조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농을 비롯한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정부안에 지지하는 단체, 학자, 국회의원들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법안의 반개혁적 내용과 일방적 추진과정을 인정하고 협동조합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개혁법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2.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입법청원을 방해한 정부-여당, 기득권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농을 포함한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는 그 동안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을 위하여 중앙회 통합, 연합회체계,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요구를 담아 [농업협동조합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기득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개혁세력들은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소개한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소개를 철회하게끔 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반 개혁성을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작태이며,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입법소개를 철회한 국회의원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한 것임을 확실히 밝혀둔다.

3. 국회는 원칙에 입각한 개혁법안을 마련하라

협동조합을 개혁하여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94년도에 이미 농민단체, 학계가 합의하여 개혁법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당시 입법과정에서 농협, 축협의 로비로 무산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당시의 합리장안에 입각하여 마련된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기득권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이는 농민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후의 모든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반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개혁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8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鄭光勳)

대통령님께 드리는 긴급건의문

- 8월 임시국회내 협동조합 개혁법안 처리 요청 -

1999년 8월 5일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총 68개 농민·시민단체)

우 137-070 /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02)521-7181 / 전송(02)584-5144

상임대표 :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명국,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짐장섭,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1. 5백만 농민 모두의 바람인 협동조합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 68개 농민·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 「농·축협중앙회를 통합하고 일선조합을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저희 68개 농민·시민단체는 지난 4월 13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를 결성하여 조속한 협동조합 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 협개연은 전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해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일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민단체 공동입장을 수립, 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 곧 협동조합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 일선 농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한우조합 설립 방해 등 축산업의 전문화를 저지한 축협중앙회이며, 각종 사업에서 회원조합과의 경쟁으로 오히려 회원조합을 억눌러온 방만한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여 모든 협동조합은 물론 일선축협 전문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는 축협의 임직원 등 기득권 수호를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반개혁의도를 과감히 지적하며 즉각적으로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혁대상인 축협중앙회는 직원들로부터 투쟁기금을 37억원이나 각출하여 연일 왜곡된 내용의 신문광고 및 반대 집회를 개최하며, 시군단위 지역축협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발목잡기에 사력을 다해 매달려 왔습니다.

2. 최근 국회 농림해양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5백만 농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있으며, 실망과 우려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5백만 농민들과 협개연에 참여하고 있는 68개 농민·시민단체 일동은 협동조합 개혁입법이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지시하신 사항이자 정부법안인 만큼, 여당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상임위 활동을 주도하는 등 개혁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상임위에서 여당의원들은 이래저래 시간끌기 작전을 구사하는 야당의원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선의 농민들은 '도대체 여당의원들이 정부입법안인데도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야당의원들의 지연전술과 여당의원들의 방관자적인 자세로 5백만 농민들이 갈망했던 협동조합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8월 4일 농림해양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야당의원들의 경우 국회공청회까지 마친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해 '농·축협중앙회장을 참석시켜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 한다'는 등 노골적인 '시간끌기 작전'을 구사하며 의사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 맞서 의사일정 진행을 밀고 나가야 할 여당의원들은 소신있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눈치보기'

로 일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위원장 한명만이 야당을 상대하게 만드는 등 오히려 야당측을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8월 4일 열린 농림해양위에서는 위원장이 3당 간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한 의사일정에 대해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회의 뿐만 아니라 자민련 소속 의원들마저 개혁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야당측의 의도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등 한심스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5백만 농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협동조합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 협동조합 개혁을 그토록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의지가 아직도 여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거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여당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연초에 협동조합의 철저한 개혁을 지시하신 이래 최근 7월 13일 한농연 시군회장 초청 오찬과 7월 22일 광양에서 열린 '전남도민과의 대화'에서 '축협 등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꼭 실현시키겠다'고 거듭 의지를 피력하며 5백만 농민앞에 약속해 주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여당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연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저희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이들 여당의원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5.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어 이번 국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 현재 축협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만 협동조합 개혁법안을 저지시키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는 결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협동조합 개혁에 앞장서는 농민단체 분열과 음해에 열안이 되어 있습니다.
- 만일 이번 협동조합 개혁이 무산된다면,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에 앞장서온 5백만 농민들의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이제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개혁도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워 저항하면 된다'는 개혁저항심리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개혁을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의지를 오히려 여당원들이 앞장서서 저지한 꼴이 되어 향후 정부여당에 대한 대통령님의 리더십에도 크나큰 누를 끼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조속한 협동조합 개혁을 갈망하는 저희 68개 농민·시민단체 일동은 대통령님께서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직접 챙기시어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동조합 개혁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東亞日報
8月6日 西

대한매일
月 日 / 西

한겨레신문
月 日 / 西

朝鮮日報
月 日 / 西

한국일보
月 日 / 西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면서 '통합=개혁'이라는 도식적인 편견과 이집으로 농·축협의 강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표적사정을 병행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던 협동조합 통합추진에 대하여 중대하게 지적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협동조합 개혁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협동조합이 농민들의 자율적 자조조직이며 민간단체인 만큼 농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는 동시에 개혁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하고 농축산인들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정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여 협동조합이 관치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생산자단체로서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개혁의 과정에서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밥그릇 쟁기기로만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수많은 농축산인들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협동조합의 강제적 구조조정 법안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 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999. 8.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신구범 축협회장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억지주장과
비열한 농민단체 분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신구범 축협회장이 국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해 여전히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농민단체 분열을 사주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우리는 평생 소, 돼지 한 마리 키워본 적이 없으며 중앙회장 후보등록 수일전 축협조합원 자격을 급조하여 축협 회장에 당선된 신회장은 진정으로 축산인을 대표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장기간 동안 농민단체와 일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된 개혁법안이 지난 6월 14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회장은 7월 10일 축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그 동안 대화와 토론이 없었으니 협동조합 개혁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수많은 토론과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달라'는 식의 주장은 결국 걸음으로만 개혁에 찬성하는 척 하면서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최근 협동조합 개혁저지를 위해 온갖 사실왜곡과 거짓말을 늘어놓는 신회장의 태도를 보면 5백만 농민과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협동조합 개혁 문제를 회장 개인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아울러 우리는 신회장이 취임한 이후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협동조합 개혁에 앞장서는 농민단체 분열에만 몰두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백만 농민들의 개혁열망을 담은 협동조합 개혁안이 '강제통합안'이며 '위헌'이라는 억지주장을 계속하다가 먹혀들어가지가 않으니 '협동조합 개혁논의를 유보하자'고 주장하며, 한편에서는 개혁에 앞장서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을 분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3일 발족한 '축산경영인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는 축협중앙회가 각 조합에 공문을 내리고 차관을 대절하여 조직동원을 했는가 하면 중앙회 주요 간부들이 일제히 토론장에 나타나 행사를 지원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최근 신회장의 개인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신회장은 공식석상에서 '자신은 정치를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도 최근 제주도에서 있는 「플러스 복지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축협의 정상적인 기능수행과 우리 축산업 발전에 진력해야 할 축협회장의 역할보다 퇴임후 자신의 정치출마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은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근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축협중앙회가 수재의원급은 기껏 수천만원 밖에 안하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신문광고에는 수억원씩 물쓰듯 하고 있는데 대해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

우리는 협동조합 개혁 성취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개혁논의를 유보하자고 억지주장만 일삼고 있는 신회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아울러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비열한 의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시 사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1999년 8월 6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 상임대표 :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준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흥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 공동대표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은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묘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기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육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축산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 학생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생회 전주산업대최고농업자과정 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 학생회

■ 성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1-7181, 전송 : 584-5144)

**합리적 절충안마저 거부한 축협은 더이상 개혁할 의사가 없으므로
여야는 개혁법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처리하라 !**

- 일부 의원들이 협동조합 개혁입법을 지연시키려 기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

우리는 국회 농림해양위의 협동조합 개혁입법 심의과정에서 최근 일부 의원들이 5백만 농민의 협동조합 개혁요구를 도외시킨 채 차기국회로 법안심의를 연기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렬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점은 솔직히 인정하는 바이다.

특히 어제 바쁜 가운데에도 농림해양위 소속 여야를 대표하는 두분의 의원이 축협회장을 직접 만나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했는데도 축협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자기주장만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합리적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혁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5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협동조합 개혁요구를 수렴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축협측의 입장을 대폭 고려하여 여야의원 대표가 제시한 절충안까지 거부한채 이미 개혁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축협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국회에 상정되기 이전에도 이디수없이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며 상임위 의원 대부분이 핵심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더 협의하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인 절충안이 제안되었음에도 신규범 축협회장은 취임부터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아무런 의지나 계획도 없이 조직만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무산시켜 왔다는 것으로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논의물 통해 양측 모두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런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입법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최근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만 넘기는 것으로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대한 역할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단에 하나라도 끊임 농림해양위에서 이러한 의도를 보이는 의원이 나타날 경우, 우리는 이를 직무유기 혐의로 규정, 5백만 농민 앞에 추각 이 사실을 알리고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오늘 협개연에 참여하는 68개 농민·시민단체 일동은 비장한 각오로 다시한번 협동조합 개혁입법 심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오늘 상임위에 임하는 의원 개개인의 발언과 태도를 철저히 지켜보고 분석하여 추각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협동조합 개혁입법에 소신없이 소극적으로 임한 의원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두며 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1999년 8월 10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

■ 상임대표 :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명국,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농유우협회 회장 김남웅,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농사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장원석

■ 공동대표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농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관개선포럼회 자연농업감귤연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 자연농업포도연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태평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업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다수모유협회 한국과수협회 한국낙농우유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우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방가공식품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관리기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농사단민중농민농민농부농업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살회 김천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살회 경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살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살회 영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살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살회 진주산업대최고농업자과정학살회 영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영자과정학살회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국회강행통과시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

지금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독선과 아집으로 이성을 상실한 채 전체 농축산인들의 권익과 의사와는 동떨어지게 축협과 농협의 통합법안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무조건적 국회 강행통과 밀어붙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협동조합개혁과는 동떨어진 안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몇몇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정부의 법안통과 강행에 동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그간의 협동조합개혁의 핵심이었던 중앙회 비대화와 돈장사치중이라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을 다시 지적하며 협동조합의 개혁은 물리적인 단순통합보다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근본부터 치유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통합에 소요되는 3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실에 대해 이 기회에 통합을 빌미로 정부에서 지원받아 해결하려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장단을 맞추어 농림부장관은 농가가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기자간담회를 개최, 협동조합 통합비용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는 등 협동조합통합법안의 국회통과에만 열을 올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만 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구체적 실익을 주지 못하는 협동조합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농민들의 숙원사항인 농가부채 문제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축산농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개혁법안이 수립될 때에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지라도 충분히 감수할 것이나 일부 독선적 관료의 전횡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성 짙은 극소수 농민단체 인사들의 압력에 의해 축산업을 사지로 내몰지도 모를 법안의 국회 강행통과가 이루어 질 경우, 전국의 965개의 금융점포, 12개의 도축시설, 22개의 사료공장, 526개의 축산물판매장 등 전 사업장의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파업으로 인하여 축산농민과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뼈를 깎는 아픈 심정을 삼키며 양측가 조합원들의 일꾼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축산농민들을 위해 무한 봉사하려는 사소취대의 심정으로 파업에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의 극한투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독선과 아집으로 농업계에 사상유례가 없는 농민단체 분열과 농관을 초래하여 농정을 파탄으로 이끈 김성훈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1999. 8. 11

전국축협노동조합 ·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우리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은 28만여 축협조합원의 간절한 염원이며 바람인 을 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기필코 성사시켜 2001년 쇠고기 완전수입개방과 새 천년의 시대에도 우리나라 축산업의 영속성과 무궁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놓는데 매진할 것을 다짐하 며 반농민적인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철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축산업은 이미 농업의 범주를 벗어나 독자적인 별도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더욱 전문화 세분화해도 살아 남기 어려운 개방화시대의 국제환경에서 농림부가 협동조합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켜 축산업과 축산인 의 불락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농·축협간에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림부가 "통합=개혁" 이라는 일방적이고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입법화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강제통합이며, 이해당사자가 원치않는 통합을 강행한 농림부는 협동조합을 농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개혁의 대원칙을 처음부터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역사이래 그 유 레가 없는 심각한 농심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동 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헌법 제23조), 결사의 자유 침해(헌법 제21조), 농업인의 자 조조직에 대한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의무 위배(헌법 제123조 제5항)라는 위헌요소를 담고 있 어 경권이 바뀔 때마다 재 논의해야 하는 원초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졸속 법안이다.

따라서 농림부와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동조합개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진정으로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 논 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혁은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하여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이 기에 어느 한쪽이라도 거세게 반발하는 개혁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도 없으며 그것을 개혁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미 543명의 대학교수가 입장을 표 명한 바 있고 4만여명에 달하는 축산경영인이 "한농연"을 탈퇴하여 독립을 선언한 사실 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많은 진보적 교수와 순수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리고 참여연대 등이 제시한 "신·경분리 및 별도법인 연합회(안)"만이 진정으로 500만 농민에게 협동조합을 돌려주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반농민적인 농업인협 동조합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나, 농민분열을 획책하고 축산업 불락을 초래하는 반농민적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조합설립인가서를 반납하고, 중앙회 회원을 탈퇴하여 협동조합 원칙에 맞는 조합원의 자율 임의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축산업의 영속성과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최선을 다해 전념할 것을 다짐한다!

1999. 8. 11

전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500만 농민들의 오랜 숙원인 협동조합의 개혁이 기득권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는 1994년에 있었던 농어촌발전위원회,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등 당시 모든 농민단체와 함께, 시민단체가 합의한 개혁방안에 기초하여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출하여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의 문제점이 반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농림부도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과 농민의 장래가 걸린 협동조합의 개혁이 개혁의 대상인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또 다시 좌절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원칙에 입각한 근본적인 개혁법을 입안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법안의 원만한 성립과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 통합중앙회의 신용사업과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은 2002년 7월 1일까지 각각 독립법인으로 분리한다. 이를 법안에 반드시 명기하고, 독립법인으로의 분리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한다.
2. 통합중앙회 신용사업의 개선방안과 중앙회 경제사업의 회위조합 이관 방안을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가 마련한다.
3. 출자법인격의 품부법 전국연합회의 설립자유를 법안에 넣는다.
4. 조합원과 임·직원의 교육을 위해 협동조합총합연수원을 통합하여 설립한다.

협동조합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단이 있기를 충정으로 호소합니다.

1999년 8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한국협동조합개혁국민연대 대표 이갑용 김병태 손호철 김중배

축협회장 국회서 할복

慎久範씨...농·축협 통합법안 常委 통과 반발

생명엔 지장없어...축협직원 40여명 반색 농성



신구범회장

신구범(慎久範) 축협 중앙회장이 농·축협 통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농업해양수산위 통과에 반발, 13일 오후 9시16분 중 국회 본관 4층 농업해양수산위 회의실에서 할복을 기도 충격을

주고 있다. 민선 제주도지사를 지낸 신회장은 이날 한나라당 김기춘(金琪春)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제안 설명을 마친 뒤 김영진(金泳鎭) 위원장이 법안을 의결하려는 순간 갑자기 회의실 가운데로 걸어나와 "그동안 감사했다"며 정중하게 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강색 양복 밑의 흰색 와이셔츠를 들어 올린 뒤 문구용 커피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몇차례에 걸쳐 배를 그었다.

이에 국회 경위들과 축협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제지한 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은 있었던 황형기(黃炯基) 농협위원장 3~4명은 할복 전 신회장에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22-23면 > 농업해양수산위는 신회장의 할복 소동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 강동철(姜東哲) 기자 yunbin@daily.com 2면으로 >

축협 통폐합 저지 '극한시위'

慎회장 자해로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 불투명

■ 할복소동 안뒤

신구범(慎久範) 축협회장이 12일 밤 국회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것은 축협이 농협에 통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배경이 깔려있다. 축협과 농협, 인삼협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협동조합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축협은 그동안 배수의 진을 치고 반대해 왔다.

새로운 협동조합법은 현 정부가 구 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개혁입법의 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동안 농협과 축협, 인삼협통합이 농민을 위한 기보다는 방만한 경영으로 되려 농민을 돕겠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종 농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농협과 축협의 자율 협의아래 발전적인 통합을 촉구했다. 그러나 양측은 통합에 따른 주도권 다툼과 밭그릇 싸움으로 시간만 보낸 채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영지가 큰 농협은 통합에 찬성한 반면 축협은 반대해 왔다. 특히 통합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급기야 대표적 인물인 두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장이

몰들어 비란로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 되고 새 회장을 뽑기까지 했다.

이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 양측의 입장차 농민단체, 여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을 지난 3월 11일 6월 국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요지는 농·축·인삼협을 단일조합으로 통합하고, 신용사업과 축산사업, 경제사업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그러나 축협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뒤 이날 열린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다. 수정안은 명칭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신회장은 이날 수정법안 통과직전 조합원 및 직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할복이라는 극한 부정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신회장의 뜻하지 않은 할복사태로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다소 불투명해졌다. 이 개혁법안은 역대 정권의 숙원사업이었다. 문민정부도 94년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 박성희기자 psh@daily.com

축협회장 국회서 할복

1면에서

여의도성모병원의 박규남(朴圭南) 응급실장은 "배꼽을 중심으로 30cm 정도 그어 장이 밖으로 나와 있어 오후 10시5분쯤 수술에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장이 손상되지는 않아 1시간30분만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말했다.

신회장이 할복하자 방청객 인 자적으로 의의인 축협중앙회 관계자 40여명이 흥분해 회의장 내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표결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책상 등 집기로 출입문을 막아 제지했으며, 이들은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신회장이 할복한 회의장 주변과 국회 본관 복도에는 신회장이 흘린 피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신회장은 이에 앞서 11일 밤 축협 안대식 서울조합장에게 "살임위가 축협 면에서 장부면으로 돌아왔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감사” 의원에 인사 갑자기 칼 꺼내 복부 그어

12일 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신구법(申久法案) 축협중앙회장의 할복자해 사건은 전혀 예기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보기 힘든 일에서 여야 정치권과 농 축협 등 관계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건이 벌어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사무실 주변은 흥분한 축협직원들과 이를 밀리는 국회 경위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밤늦게까지 이수리장을 이뤘다.

시간협장 이날 신회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의실 뒤편에 마련된 정부관계자석에 자리를 잡았다. 신회장은 법안심의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자리를 앉아 진행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했다.

신회장은 그러다 한나라당 김기춘(金琪春)의원이 농 축협 통합법안에 대한 법안심사 보고를 마치자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신회장은 이어 “그동안 감사했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갑자기 양복 상의 단추를 풀고 오른 손으로 공인용 칼을 꺼내 배를 그은 후 그 지리에 쓰러졌다.

신회장이 쓰러지자 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 경위들과 관계자들이 신회장을 급히 안고 밖으로 나와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겼다.

김영진(金泳鎭)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신회장이 회의장 밖으로 실려나가자 “남은 안건에 대해 이의 없느냐”고 묻은 뒤 의사봉을 두드려 법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14명의 여야 의원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측에선 김기춘의원과 윤한도(尹漢道)의원 등 2명만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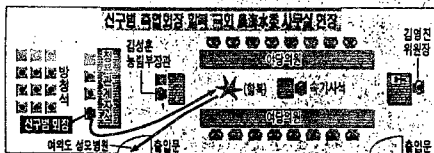
축협관계자들 반발 회의장 밖에서 구내방송을 통해 회의진행상황을 지켜보던 축협직원들은 일제히 “회장님이 다치셨다”며 극도로 흥분한 가운데 회의장으로 돌진,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이 회의장 출입문을 막자 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며 “정부 여당이 사람잡는 농 축협 통합을 강행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축협관계자들은 또 “신회장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등의 말을 퍼뜨리면서 흥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축협직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아, 나쁜 놈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법안 통과에 적절히 항의했다.

국회측 조치 국회 사무처측은 신회장이 병원으로 실려간 뒤 경위들을 통해, 농림해

축협회장 할복 자해 명목 표정

“회장님 다치셨다” 축협관계자 흥분 고함
 常委위원장 慎 회장 이송후 법안처리
 40cm 가랑 찢어져... 2시간 동안 수술



축협관계자 농성 이불구기자
 축협관계자들이 신구법축협회장의 할복 직후부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출입문을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수산위 회의를 봉쇄해 축협관계자들의 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다. 사무처측은 또 회의장 앞 복도에 남아 있는 깃자국을 황급히 지우고 국회 경비대 1개중대를 국회 본청 앞뒤에 각각 배치, 출입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여야 3당 원내총무들도 이날 밤 늦게 국회에서 긴급 회동, 신회장 할복기도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병원 표정 신회장은 할복 직후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오후 10시 5분부터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병원측은 “신회장의 배꼽부근 왼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까지 가로로 약 40cm 가량 8~10cm 깊이로 찢어져 있었다”며 “상처부위의 형태를 보아 날이 예리한 칼로 찔러진 것 같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신회장은 혈안과 맥박이 위험할 정도로 파를 흘린 상황은 아니었고 의사의 질문에 간단한 대답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회장과 소장의 손상 및 파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병원에는 신회장의 가족과 축협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 신회장의 수술결과를 지켜보았다.

축협 관계자들은 “신회장은 평소 농 축협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하자는 강경파들의 주장을 할 목적으로 대책까지 세웠다”며 신회장의 할복이 다소 의아해 했다. 한 축협 관계자는 “11일 오후까지만 해도 신회장이 국민회의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상대로 농 축협 통합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도 약속을 받았으나 12일 오전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자 충격을 받아 일일 저지른 것 같다”고 한평위도(한평위기자) <송민수·공종사이·이영우기자>

issong@donga.com

축협직원들, 金농림-의원 「억류」 욕설-고성 난무... 힘악한 분위기

노조원들 병원앞 몰려와 통합반대 구호외쳐

협의회장 합복 국회-병원 스케치

橫久(신구법)축협중앙회장이 국회에서 합복자살을 기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12일 밤 국회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1천여 경찰관이 국회 정문 등 출입문을 봉쇄한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의 회의장에서선 자정 두렵까지 金成勳(김성훈)농림부장관 및 차관 등 농림부 간부들과 여당원들이 축협 직원들에게 「억류, 쫓으며 욕설과 고성」이 난무, 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갈라진 배 사이로 내장이 빠져 나온 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橫회장은 즉시 봉합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4층 수술실과 응급실앞엔 축협중앙회 노조원 2백여명이 농성을 벌이며 橫회장의 수술결과를 기다렸다.

○...橫회장은 이날 아침과 낮에 부인에게 한차례씩 전화를 걸어 「큰일을 벌일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날 부인에게 「오늘 국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

○...이날 橫회장 합복 직후 축협직원 30여명이 金成勳(김영진)위원장 등 여당의원 7명과 金成勳(김성훈) 농림부장관 및 차관 등을 감금하자 국회는 오후 11시50분쯤 경비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 50여명을 투입해 축협직원들을 의사당 앞으로 끌어냈다. 5분만에 상황이 종료된

뒤에도 장관과 여당원은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을 의식, 의사당을 빠져 나오지 않고 있다가 30분쯤 뒤 401호에 있던 여당의원 7명과



金장관이 2개조로 나뉘어 빠져 나갔다.

○병원주변상황=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 밖에는 축협직원 2백여명이 몰려와 한때 축협-농협 통합반대 구호를 외쳤다.

橫회장 부인 김시자(54세)와 들

째 며느리, 조카 등은 친척인 신순법의원원과 10시30분쯤 병원에 도착, 곧바로 병원 4층 수술실로 올라갔다. 이들은 수술실 밖에서 橫회장의 수술결과를 초조히 기다렸다.

○합복전 상황=橫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농축협 통합법의 부당성을 홍보했다.

오후 6시쯤 삼일위 개최직전 국회의원 식당인 양지실합법집에서 축협 조합장 20여명과 식사를 함께 했다. 橫회장은 삼일위 회의도중에 복도에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뛰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으나 합복할 것을 주변에서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고 축협중앙회 채형석 대리(43)가 진술했다.

채씨는 국회에서 합복 직후 橫회장을 업고 그린저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팔간 조끼를 입고 병원에 몰려온 축협중앙회 노조원들은 橫회장의 건강을 우려하는가 하면, 이날 통과된 통합법안이 잘못됐다며 분개했다. 병원 응급실밖에는 취재진과 축협직원 3백여명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뤘다.

(柳永鉉-朴丙辰기자)

초조한 가족들

12일 합복자살을 기도한 橫久(신구법)축협회장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橫회장의 가족들이 초조하게 수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申敏植기자)

건강상태 양호... 2주후 퇴원가능

복부지방등 손상 다른세균 감염우려

의료진 일문일답

橫久(신구법)회장의 수술이 끝난 뒤 여의도 성모병원 최창락원장과 집도의 김중국외과과장은 「환자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2주가량 입원치료를 받으면 퇴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의료진과의 일문일답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상태는

△오후 9시20분 응급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혈압 1백20/70 맥박 90 등 신체상태는 양호했으며 의식도 뚜렷했다. 배팍에서 10cm정도 윗부분의 복부가 수액으로 39.5cm가 찢어졌다. 이 상처로 소장 반절도가 밖으로 노출돼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다. 응급처치를 마쳤으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점차 악화되자, 수액을 공급한 뒤 수술실로 옮겨졌다.

당시 자상이 깊고 심한 상태로 봐 환자의 지해의지가 강렬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술과정은

△오후 10시15분에 시작해 12시에 수술을 완료했다. 수술중 상태는 양호했으며 차후 환자상태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복부 지방 등이 손상돼 다른 세균의 감염이 우려돼 이에 대한 치료를 병행할 것이다.

-수술 당시 상태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1백10회까지 가는 등 점차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복부가 완전히 갈라지고 소장도 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밖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손상돼 어렵지 않게 수술을 마쳤다.

-회복과정은

△수술을 마친 뒤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들의 면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실에서 2~3일 지낸 뒤 결과를 봐서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이다.

환자의 상태로 봐 10일~2주일 후면 퇴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柳永鉉기자)

할복 愼희장 "자살의지 있었던듯"

빠른 회복세... 10일후 퇴원
12일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복막 및 복벽 봉합수술을 받은 친구
범(慎久範) 축협중앙회장은 열여과
막막, 체온 등이 정상을 되찾고 주변
인파 대외도 나누는 등 빠른 회복세
를 보이고 있다.
수술집도의 김중국(金忠國) 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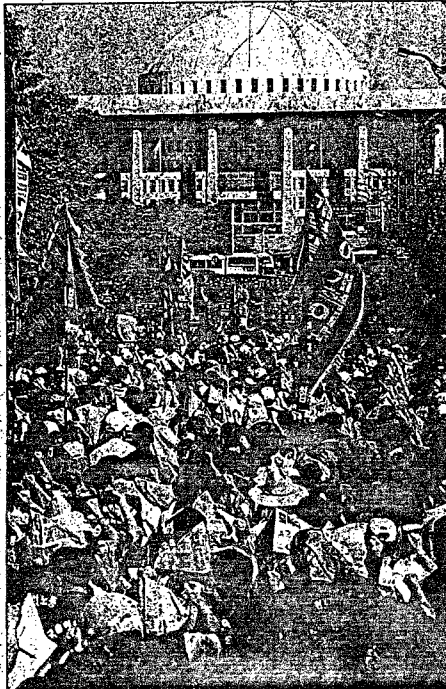
과장은 『체외로 나온 내장이 감염되
지 않았다면 10일후에 퇴원도 가능하
다』며 『신희장이 복부통증을 호소하
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
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옆개부위
의 길이와 길이로 보아 자살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부인 김시자(金時子 55)씨는
1남이 정상적인 의사대신 링거주

사를 맞고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퍼놓았다고 전
했다. 이날 새벽 축협간부들과 면담
을 한 신희장은 『권력앞에서 정의는
없었다.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 진심
을 반드시 밝혀줬다』며 통합반대 의
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에는 축협관계자와 가족
천지 외에도 이날 오전 시위과정에
서 부상을 당한 조합원 20여명이 돌
려 복새동을 이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축협노조 총파업 돌입 3,000명 국회앞 격렬시위

"농축협통합 결사반대" 경찰과 투석전 50명 부상 조합장 집단할복 소문도 의원들에 신변보호조치

농축협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신구범(慎久範) 축협중앙회장의 국
회 할복사건으로 인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축협조합원 3,000여
명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농업인협동조합법 결사반대』를 외
치며 '하루종일' 항의시위를 벌였고
축협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축협조합원 1,500여명은 이날 오전
6시30분 국회의 국민회의, 한나라당
당사에 진입을 시도, 계지하는 경찰
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
지며 30여분간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이귀대(37)씨 등 축협조합원 40여
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
송됐고 조전희(38) 축협노조부위원
장 등 2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시위대 4,000여명은 오전 11시30분
개 다사 국회의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
과 투석전을 벌여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후 들어서도 시위대는 수
차례에 걸쳐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
을 벌였으며 조합장들이 집단 할복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경찰
이 전장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축협중앙회 직원과 수도권 단위조
합원 수천명은 12일밤 방송과 비상
연락망을 통해 신희장의 할복소식을
전해듣고 이날 새벽부터 속속 모여
들었으며 지방조합원들도 버스를 타
고 수천명의 상경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위원장 김의일
·金義烈)과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
장 김정수·金正珠), 전국사무공용노
동조합연맹(위원장 채은삼·蔡雲燾)
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서를 통해 13
일 오후2시를 기해 축협중앙회를 비
롯한 전국 축협 단위사업장에서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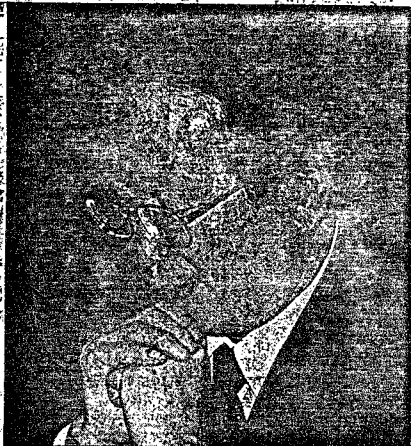


3,000여명의 축협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농·축협 통합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기자

축협노조 집행부는 또 『전국 축협
노동조합원 2만명이 전원 상경해 투
쟁에 동참하도록 지시했으며 축산농
민들도 속속 상경하고 있다』며 『차
적으로 경제사업부(유가공 및 유
품판매 사업)이 파업에 돌입하고 산
용사업부(은행업무)도 최소한의 인
원만 남기고 투쟁대열에 합류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축협조합장들이 농협법

폐기를 적극 추진했던 여의의원 15
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경찰은 항
의방문이나 테러에 대비, 이날 새벽
농림부장관과 차관, 국회 농림해양수
산위원회 소속의원 등 31명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이영규기자 fab1@hk.co.kr

최통한 김능림



신구범 축협 회장의 합복사진 이후 13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성훈·농림부장관이 최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인섭 기자

축협 총파업선언

정부선 통합작업 강행키로

농림부는 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의 합복 사진과 관계없이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질서에 따라 곧바로 '협동조합 통합 설립위원회'를 구성, 통합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관계기사 23면>

농림부 안종훈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설립위는 농림부, 농·축협, 농업단체 관계자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농업과 축협은 동수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중앙회의 전국의 1백92개 회원조합에서 이날부터 경제사업부분의 파업에 돌입한다. 이어 곧 신공사업도 포함, 전 부문에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에 들어가기엔 축협의 금융 입지가 마비돼 고지등이 큰 불만을 겪게 된다.

이날 축협의 기자회견에는 당초 협회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협회장의 부상으로 이범섭(李範涉) 부회장이 대리로 참석. "통합 법안은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과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의법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위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래 기자
<srkim@joongang.co.kr>

"농·축협 통합은 당연" 모처럼 장단맞춘 與野

정치권 대응

총선票 날아갈까

일부 나서기 꺼려

축협의 사활을 건 로비와 합복 소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13일 농·축협을 통합시키는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농·축협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명분과 정국회회로 넘길 경우 사실상 법안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상황판단 때문이다.

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의 합복사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 총재단은 "개혁은 어떤 로비에도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이번에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이익단체들이 자해만 하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의 임시 국무회의는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이 "부덕의 소치이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분위기가 침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 법안이 누더기가 될 만큼 축협측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김

장관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관은 없었다.

자민련에선 박태준(朴泰俊)총재가 나섰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농·축협 비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신법을 갖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의 '표'를 걱정했다. 자민련의 한 의원은 "자해 때문에 개혁이 표류돼선 안 되지만, 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협회장 합복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선 "법안 처리를 정국회로 넘기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러나 농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농총재와의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자"고 건의했다. 이부영 총무는 이를 받아 국민회의 최총무에게 "기권할테니 여당이 알아서 통과시키라"는 뜻을 전달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 결단을 내린 데에는 "중앙회에는 불이익이 가겠지만 지역 유권자와 전체 농민들에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상행·서승욱 기자
<leesr@joongang.co.kr>

통합법안 무효 憲訴등 투쟁

임원 계좌추적 진상규명 요구

반발하는 축협

농업협동조합법을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구범 축협회장이 합복자살을 기도한 데 이어 축협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축협은 1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협동조합 통합 법안에 대한 무효화 투쟁에 총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협회장을 대신해 이범섭(李範涉)부회장과 전국축협연합회총회장·전국축협조합원대표자회의회 대표 등이 참가해 단결을 과시했다.

축협측은 "지난 92년 헌법재판소에서 협동조합은 사법인으로서 인정받았다"며 "따라서 통합 법안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재산권 보장 등에 대한 위헌(違憲)요소가 많은 만큼 헌법 소원을 통해 법률적인 투쟁

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부회장은 "축협이 통합에 반대하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4월 30일 이후 축협 임원과 가족 80여명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했다"며 "이같은 부당한 압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협 조합원 3천여명은 여의도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으며 판에 매장 등 경제사업 부문도 파업에 들어갔다.

도 법이 통과되면 신용사업과 전산부문에 파업에 동조할 것이라고 밝혀 자칫하면 축협에서 돈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축협의 반발을 의식, 말로는 축협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법안을 철회하는 등의 양보는 생각지도 않고 있어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김시래 기자
<srkim@joongang.co.kr>

■ 농축협통합법 처리 표정

贊147 反10 기권115

미루다 밤늦게서야 통과

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의 합복소동을 불러온 농업협동조합법은 회기 마지막날인 13일 여야의 '전력투표' 기였다. 법안 처리의 정치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는 여야의 전략 탓에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져 이날 심야에야 본회의 통과와 벽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나마 한나라당 대부분 기권하고 소수 '자민련' 의원들도 사실상 반대, 끝내 농·축협 통합은 축복 받지 못한 탄생을 되고 말았다.

당초 이 법안은 본회의 안전중 여덟 번째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자민련표의 이탈에 따른 통과에 불확실성 때문에, 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미루는 것에 '의기투합', 의사일정의 늦은서로 밀려났다. 저녁 11시 20분께 법안이 가까스로 상정된 뒤에도 한나라당은 권오을(權五乙)의원의 반대 토론을 통해 법처리 저지 '기록'을 남겼다. 법통과에는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그는 자민련측의 호응여부가 불투

명하자 한때 총무협상에서 야당측에 '특검제법안을 양보할 테니 협동조합법 통과를 담보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축산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수는 없다'면서도 표결 불참이 아닌 기권을 당론으로 결정,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자체가 이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던 야당측을 '배려'했다.

이에 비해 자민련은 이금규(李眞圭)총무를 통해 의원들을 단속했지만 막판까지도 '반대표가 10명은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반응이 시원찮아 국민회의측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자민련에서 정일영(鄭一永) 이상만(李相晩)의원이 기권했을 뿐 반대표는 없었다. 최종 표결결과는 재석 272명에 찬성 147명 반대 10명 기권 115명이었다. 반대표는 한나라당의 오세웅(吳世雄) 김중위(金重緯) 김경일(金榮駟) 나오연(羅午淵) 박명환(朴明煥) 권오을(權五乙) 임진출(林鎭出) 박시균(朴是均) 정문화(鄭文和)의원 등 10명이 던졌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축협신용점포 파업 공권력 투입키로

정부, 파업대책 긴급회의

정부는 농업협동조합 통합에 강력 반발해온 축협중앙회 노조의 전국축협노조가 14일부터 전면 파업을 선언한 것에 대응,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농림부, 금융감독위원회, 법무부등 관계부처는 13일 긴급회의를 열어 '축협신용점포(중앙회 소속 95개, 지역축협점포 193개)의 금융거래를 보편, 운용하는 전산정보센터가 파업하면 고객들의 예금인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부분적인 금융파동이 예상된다'며 공권력 투입 등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중앙회장 아래 農·畜경영대표 독립인사·전문성등 적절히 보장

■ 농업협동조합법 내용·의미

자기자본 잠식... 경쟁력 제고 차원 통합

신구법(愼久篇) 축협회장의 합복, 자체 기도로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정부안 농업인협동조합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이 관심 끌고 있다.

법제정의 원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돼 있는 중앙조직을 하나로 통합, 일원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WTO체제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중앙회 조직으로는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농협의 자기자본 잠식비율이 40%축협의 자기자본 잠식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중앙회가 조합의 수입을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13일 이와 관련, "재정상태가 심각한 협동 조합을 하나로 묶어 조직을 슬림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회 중심의 조합운영을 단위조합

위주의 조합운영으로 바꾸는 것이 법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밝혔다.

따라서 여당은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조합통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삼조합은 일찌감치 농협과의 통합에 찬성했다. 그러나 축협은 달랐다. 지난 7월초 신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정부측의 설명이다. 국민회의 당사 앞에 축협 직원의 법안 반대시위, 농협직원의 법안 찬성시위가 잇따른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축협이 요구하는 많은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회장 아래 농업경영대표, 축협 경영대표, 신용대표를 두고 축협대표를 축협 단위조합에서 임명토록 하는 등 축협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회의 명칭과 조합내의 별도 법인 요구는 묵살됐다. 농축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재 농협간만을 모두 바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청난 비등이 들고, 법안인간이 특수법인을 두자는 요구는 무리하다는 논지다.

아담도 조합 통합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담의원들은 신회장 자해소통 이후 일원 이남 법사위에서 통합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때때로 바꾸기도 했다.

●김동원기자
yurbin@kcdaily.com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중앙회명칭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을 통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개칭
법인명칭	농업협동조합법인(정부안=농업인 협동조합)
입법준칙의합치	50%이상 품목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
신용사업, 경제사업분리	정부 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학계 전문가로 협의기구 설치 운영 각별내 시행
축산부분, 독립성 전문성	중앙회에 축산경제대표이사, 조합경제대표지회외에서, 특수조직 보장 회장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
시행일	2000년 7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 제정은 모두를 위한 것"

■ 金泳鎮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일문일답

인원감축 농·축협 1대1로... 慎회장 자해 안타까워

김영진(金泳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구법(愼久篇) 축협회장의 합복 자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면서 패유를 밝혔다. 다음은 김위원장과와의 일문일답.

●이법 사퇴를 어떻게 보는가.

신회장의 돌발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법안인 것은 물론 농민본주의 개혁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꼭 통과되어야 했다. 신회장의 생명이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빠른 패유를 진심으로 바란다.

●법안에 대해 축협과 임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축협을 위축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인원감축의 경우 농·축협에 대해 일대일의 원칙을 반영했다. 또 축협이 주장하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2년 동안 국제금융기관에 그 효율성의 실험을 의뢰해 재검토한 뒤 실시할 예정이다.

●아담의 입장은 어땠는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만장일치였다. 지난 6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한나

리당 윤관도(尹漢道)·국민회의 최선영(崔善榮)의원 등으로 구성된 여야 간사의 합 의과정과 한나라당 김기춘(金基勳)의원이 심사위원장으로 있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아래 12일 오후 통과가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는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신회장의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아담 총무가 13일 오전 총무회담에서 법안의 처리시점을 연기하고자 제안했으나 여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가.

협동조합들을 통합하면 5,000억원의 고정자산 매각과 3,000억원의 관리비용절감으로 이윤이 생긴다. 이는 새로 구성될 농·축산 품목별조합에 대한 지원확성비 등으로 사용될 것이다. 결국 축산업자들 포함, 농민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추천기자
j@kcdaily.com

협동조합개혁 밑그림 완성 비대해진 중앙회조직 메스

협동조합법 통과 의미

신용·경제사업 분리 축협분야 예산권 인정

농업협동조합법이 진통 끝에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9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백대 과제로 선정된 뒤 1년반 이상 끌어온 협동조합 개혁의 큰 밑그림이 완성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협동조합 통합법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아온 농림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곧바로 '협동조합 통합 설립위원회'를 구성, 통합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협동조합 개혁 문제는 경력이 비결 때마다 거론돼 왔었다. 협동조합 개혁논의의 핵심은 중앙회 비대화와 협동조합의 존장사, 즉 신용사업에 조합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이번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축협의 중앙회를 통합하고 신용사업부문을 경제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대해진 중앙회 조직에 메스를 가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를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회복을 꾀한다는 계산에서다.

농림부는 이에 따른 축협측의 반발을 의식, 통합중앙회 산하의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축산부문 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추천한 인물로 제한하고 독자적인 예산권을 인정하는 등

축협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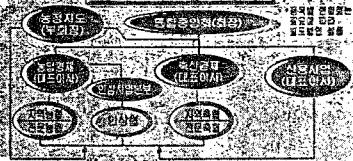
농림부는 또 축협이 주장한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 이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법안에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축협은 이번 농업협동조합법안은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설립준비위원회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축협은 농업협동조합이 축협의 청산 및 농협과의 통합을 법률에 의해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결사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한 위헌 요소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률적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신설 중앙회 설립준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축협은 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축협조합장과 임직원 그리고 이들의 친인척에 가해진 검찰수사와 내사, 여공계좌주채 등 위암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협은 아울러 14일부터 협동조합 통합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금융권포 및 전산정보센터 등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투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13일 선언했다. 최희봉

농업협동조합법 조직도



설립위 농·축협 동수 참여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

통합절차 어떻게

신구법(擴久策)축협회장의 국회내 할바 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던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은 2000년 7월1일이다.

따라서 13일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후 법에 정한 부칙에 따라 곧바로 '협동조합 통합설립위원회(설립위)'가 구성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와 대립과 이화당사자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통합작업의 순탄한 진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설립위는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농·축협, 농업단체, 시민단체, 학계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농협과 축협은 동수가 참여토록 규정돼 있다.

설립위가 해야 할 일은 통합중앙회 정관 마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골격 마련, 이에 따른 하위규정 제정 등이다. 농림부는 설립위가 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틀을 근거로 구체적인 조

문화 작업을 맡리게 된다. 설립위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통합중앙회의 정관 마련이다. 정관에는 통합중앙회 산하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 등의 업무영역을 구체화하고 사업부문별로 경영위원회 구성, 상무이사 선출, 사업운영 규칙 제정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통합중앙회 산하에 사업단 대표이사제를 도입,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 등 세 분야의 대표이사가 각 사업을 총괄토록 규정해 대표이사가 거의 독립에 가까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는 각 대표이사 임명절차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통합에 따른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자산실사 작업. 농림부는 법안 통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부처 및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각 협동조합중앙회 자산실사팀을 구성,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는 협동조합 통합비용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최희봉 hbcba@kukminilbo.co.kr

의사당에서 할복이라니

割腹이 투쟁수단일 수 없다

국회에서 할복이라는 국회초유의 극단적 사건이 벌어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12일 밤 일어난 신구범(愼久範)총협중앙회장의 할복 자해소통은 충격적이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해결점은 농민단체 통합이 축협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리로 강행된 데 항의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나 이유가 어떻든 그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전혀 차이를 존재하게 마련이며 적법한 절차와 토론을 거쳐 수렴해가는 게 기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공민(公人)이 극단적 의사표시 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건이 바로 그런 민의(民意) 수렴의 장(場)인 국회에서 벌어졌다는 데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축협측은 일방적리로 주장하나 농업협동조합법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축협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했다 해서 통과를 어가 합의의 사항으로 알고 있다. 설사 어가 합의한 법안에 불만이 있었다라도 그런 극단적 행동으로 그럴 저지하구나 내용을 바꿔보려고 했다면 그런 잘못이다. 할복과 같은 극단행동이 부쟁수단이 될 수도 없고 때서도 안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일련의 개혁과정의 격동을 치르면서 그럴지않아

도 우리 사회는 각 이익집단의 정제되지 않은 집단이기주의로 사회혼란과 사태해결을 어렵게 해왔다. 이런 가운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장(長)까지 자해에 나선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적절치 못함은 물론이다. 민과 법안심의회가 이익단체와 이런 극단적 행동으로 접근되고 너도나도 이런 식으로 나선다면 그 혼란을 누가 막겠는가.

또 한 가지 이번 사건으로 우려되는 것은 향후 농·축협의 순조로운 통합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축협측은 이미 법안의 주요화를 주장하고 통합중앙회의 설립준비작업에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통합사업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도 만만치 않은 데 격정이다. 정부로서도 이런 사건이 나올 정도로 축협측의 반대가 완강했다면 더 조정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어야 옳았다. 한쪽의 완강한 반대를 그대로 두고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밀어붙인 면이 없지 않으니 되돌아 봐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토론과 조정문화가 미숙함을 절실히 느낀다. 한 있는 쪽이 일방적으로 끌고가서도 안되고 이번과 같은 극단행동으로 의사관할을 강행하려 해서도 안된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신구범 총협중앙회장이 12일 저녁 농협과 축협·인삼협의 통합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여 할복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의정사상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할복까지 결심하게 된 당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심정이 아무리 절박했다 하더라도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당사자처럼 아슬아슬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신협장의 문제해결방식이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우선 신협장의 행동은 의회민주주의를 전연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고 순수하다 하더라도 그것의 관철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목적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사회 계약이다. 그런데도 신협장이 어가 합의에 의해 통과시키려던 법안에 반대하여 의사당내 할복이라는 극한 방식을 동원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다음 신협장의 행동은 자책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로 오해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물론 신협장을 비롯한 축협의 당사자들 입장에서서는 소수라는 이유로 생존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아래 있는 우리는 공사(公私)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뤄놓고 있는 셈이다. 축협의 통합합안도 그러한 합의의 구체적 결과이며, 더구나 여당과 야당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안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신협장과 구성원들이 결사 저지로 맞선다면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명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투쟁을 한다 해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축협 구성원들에게는 어쩌면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고 그만큼 절박한 현안이라는 걸 안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투쟁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또 자신들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이 이뤄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자신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통합 후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그렇지 않고 폭력이나 집단행동 또는 큰 목소리만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려 할 경우 사회로부터 외면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割腹」으로 해결될 일인가

愼久範(신구범)총협중앙회장의 할복사건은 국회 의정사상 전례없는 일어서서 그 정치사회적 파장과 작지 않을 듯하다. 廣시의 돌출행동은 축협인들에게는 의외로운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었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1년동안 진통을 거듭해 온 협동조합 통합 법안이 도저히 정상결착을 통한 국회 처리를 앞두고 한 때나 「장」에 부딪힌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이익집단 대표가 나와 일종의 테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해소통을 벌인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어느 분야든 개혁입법을 추진하는데는 이익집단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할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민주집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돌발사태는 국회의 안전 심의와 그 처리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입법의 근본취지는 방만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농민과 축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농·축협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그동안 여론의 상당한 지지를 받아 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농·축협에 대한 검찰

의 전면수사 결과 농·축협의 총체적인 부실경향이 드러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는 경영의 정상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진 터이다.

물론 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면 축협의 본래 기능이 어느 정도는 상실된다는 측면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러나 축협측의 요구대로 별도 법인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합수단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더욱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의를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축산분야의 자율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됐는데도 전무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 드는 행위는 어느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들어 우리사회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협동조합을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풍조는 이제 근절시켜야 할 때가 됐다. 토론과 의견수렴이라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할복사건으로 개혁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겠다.

할복소동과 통합조합 장애

농·축·인삼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이면 초대형 통합조합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술법을 앞두고 이를 축하하기 보다는 걱정하고 앞날이 걱정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통합법안이 성립되기까지 농업과 축협간의 갈등과 반목은 정도를 지나쳐 심화되고, 마침내 신규법 축협화장의 의사당 내 할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법안은 통과했지만 앞으로 통합조합이 등장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협동조합 개혁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발매뉴로 거론됐지만,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지난 3월 농림부가 농업인협동조합법을 발표한 이후 지지와 반대 세력간의 갈등·투쟁이 계속되어 왔다. 협동조합 개혁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농업과 축협이 다른 의견을 보여 왔다. 농업은 현 농업조직을 기반으로 통합법안을 만들자는 것이고, 축협은 그럴 경우 복수성이 희석되는 데다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 와중에서 각종 농·축단체들은 물론 갈라져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모욕, 인신공격적 행동이 일어났다.

주도권을 잡은 농림부와 농업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했고, 흡수되는 축협

은 결사반대 투쟁만을 내세웠다. 정적이 나 논리적인 대결은 뒤로 밀려났다. 그 결과 양측간 갈등의 골만 깊어갔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이번 국회내 할복 사태다. 농축산인을 위해 개혁을 한다면서도 이들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 낡은 꼴이다.

농림부는 신의장 할복사태와는 관계없이 협동조합 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협은 통합법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축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을 눈앞에 두고 언제까지 대립할 것인가. 농축산인을 별도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양측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조합의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면 이상 112도시 이루어져야 한다.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아직 하위법 정비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축협이 주장하고 있는 전문성과 자율성의 최대한 보장이나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농림부는 객관성을 유지, 간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사항이 때고 쉽게 전락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농림부는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

축협회장의 자백

신구법(農久法) 축협회장이 농·축협과 인삼조합 통합을 끝지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통과에 반발, 자해 행위를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신의장의 축협 조직을 살리기 위한 열성과 심정은 이해가 가나 농업협동조합법이 고비용·저효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안에서 그런 행위로 법 통과를 저지하려고 한 것은 이성적 처사가 아니다.

농·축협과 인삼조합을 통합하려는 것은 현재의 중앙회 중심 협동조합체제를 조합원 중심체제로 개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농업과 축협은 중앙회 조직이 비대해진 데다 조합의 본래 목적인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금융업무)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바람에 조합원으로부터 불평을 샀다. 농업중앙회 직원이 89년 1만1,600명에서 90년에는 1만6,974명으로 46%가 늘었고, 축협중앙회 직원은 89년 1,169명에서 90년에는 4,000명으로 345%가 증가했다. 중앙회가 예마다 비대해지면서 조합원보다는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회가 비대해지다 보니 자연히 조합원 영이 상의하달(上壓下達)식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운영방식은 농민들로부터 금 중량률 불투명성으로 보게하는 요인이 된 것 같다. 한국연합이 지난 4월 농민들을 상대

로 조사한 결과 농민의 78.8%, 축산인 중사자의 67% 축협 조합원의 88.6%가 협동조합 개혁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과 축협을 통합할 경우 연간 1,549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축협중앙회는 지난해 92억원(자본금의 55%)의 적자를 냈고 이대로 두면 2~3년 내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동조합 개혁은 단위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감사인 감사결과 농업 단위조합의 절반 정도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축협 단위조합 경영실적도 농업 단위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회뿐 아니라 원산 단위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단위조합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업과 축협이 부실화된 결국 그 파장은 조합원인 농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협동조합을 개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물 수목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은 대대적 공적자금(국인 세금)을 투입해서 정상화시켜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업과 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 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귀중한 시간만 낭비해 갔을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통합협동조합의 출범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당부한다.

축협회장의 자백과 개혁

국회에서 열어진 신구법(農久法) 축협 회장의 할복사건은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출신으로 현직 단체장인 사회지도층 인사다. 그것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자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한층 놀랍고 당혹스럽다. 신의장의 할복사태를 부른 것은 농·축·인삼협 통합법안이다. 그동안 축협이 격렬하게 반대해 온 통합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신의장이 이에 반발, 할복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한 극렬한 의사표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불행한 일이다.

농·축협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개혁차원에서 통합의지를 밝힌 이후 계속되어 왔다. 이번 통합법안의 경우와 같이 상호이해가 절여하게 대립하는 시안일수록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냈느냐가 성과를 가늠하는 관건이다. 여기에 결론에 반증하는 여러 당사자들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통합법안 추진과정은 과언이없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협동조합마다 이기주의가 관조되며 개혁의 당위성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는 당초 농·축·인삼협 등 4개 조합이 합

의안을 마련하면 수용기로 했으나 7개월간의 물다리기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좁혀지 못한 재협상은 결렬됐다. 최선의 방식인 「당사자간 합의」가 좌절된 것이다.

축협은 한달전 통합 반대에 미지근한 당시 회장을 찾아내고 새 회장을 뽑기까지 했는데 신의장이 바로 주인공이다. 농림부도 흡수 전편에다가 낙담 관권을 포함한 1급 이상이 사표를 쓰고 「개혁법안」 통과 결의를 다졌다. 임명을 추진하는 정부나 통합대상인 축협 모두 감동받았으면 셈이다. 특목문제의 실종과 결혼을 거부하는 신의장사건은 상대방을 인정치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작업은 국민적 공감 아래 추진됐다. 방만한 중앙회, 일선조합의 부실화, 농민 위에 군림하는 협동조합으로 자만하는 자오래다. 신화공사건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이 흔들리려는 안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통합법안이 통합 중앙회 내 농업·축산 부분을 사실상 분리·경명도 하는 등 통합 효과를 감취시키는 내용으로 변질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신의장사건의 파장이 미어짐 확산돼서도 안된다.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통합법안은 그동안의 반목을 씻어내고 명실상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새 출발해야 할 것이다.

축협은 이성적으로 주장해야

신구법 축협중앙회장이 축협·농협·인삼협 등 3개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에 반대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갈로 자해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강제 통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축협의 의지를 단호하게 호소하려는 그의 충견과 열의는 심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신 회장의 행동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점과, 토론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의 법안 심의와 통과에 반대해 자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충격과도 크다. 축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사건에 자극받아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등 무장 수위를 한층 높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정부와 국민회의는 돌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회집단의 힘이 놀려 개혁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축협은 그동안 농협에 흡수되는 모양의 중앙회 통합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전방위적으로 펴왔다.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등을 만든 위여 이를 통합하는 별도의 중앙회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와 농협은 현행 중앙회를 이렇듯 바꿔 그대로 두면서

별도의 중앙회를 신설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육상육이관과 반대해왔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축협중앙회의 별도 법인화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재산·인사·조합운영 등에서 조합에 존하는 독립성을 축협 부문에 보장하는 쪽으로 정부 원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축협으로서의 품은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해를 한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라도 남겨서는 안될 신이 있는 법이다. 지금 개혁과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린 사회 각 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원칙과 총론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자신은 예외여야 한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어느 하나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서 중앙회의 강제 통합이 없거나 어려운 과제안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 법안이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다는 축협의 방침도 통합의 험난한 과정을 예고한다. 또한 축협 간부에 대한 의의의 실효를 밝히는 것도 속제다. 축협은 앞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주장을 펴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당부한다.

농축협 개혁은 차질없어야

지난 12일 밤 국회의사당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발생한 신구법(陳久法) 축협중앙회장의 합복 소동은 의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다. 국회의사당내에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가 우리 의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니와 축협관계자들의 의원들에 대한 항의 표시도 상식선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 관련단체들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불평 불만을 표출해 반대서야 의정활동인물 제대로 할 수 없다.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합복 소동을 벌인 것은 등기아·어떻든 어떤 이유로도 정평과 될 수 없으며 축협관계자들의 항의 표시방법도 문제가 많다. 실로 유감스런 일이나, 협회장의 상태가 양호하디나 다행이다.

이번 협회장의 합복 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지만 우리사회처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도 아마 드물 것이다. 특히 지자체 실시 이후 두드러진 이같은 이기주의는 집단·지역·학교 가릴 것없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불평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도로점거는 예사요, 불법 파업도 서슴치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집단적 이기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자칫 협회장의 합복 소동이 이같은 풍조를 부추기거나 앞을 가 우려본다.

농림해양수산위는 협회장의 합복 소동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축협·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6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겨우 상인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2000년 7월1일 3개 조합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돼 서로이 출범한다. 지난 80년 농·축협이 분리된후 20년만에 다시 합쳐지는 것이다. 통합된 중앙회는 늦어도 2004년까지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가공) 부문을 분리토록 했다. 협동조합의 통합은 앞으로 가이합 방향이라는 점에서 합복 소동이 통합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지금 정부의 개혁 노력이 곳곳에서 좌초하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일부 공기업부문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조짐마저 있다. 한국이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개혁만이 살길이다. 농·축협 통합도 마찬가지다. 협회장의 합복 소동으로 정치권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논리가 거침없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통합하기로 원칙을 세운 이상 이를 밀고 나가야 한다.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9. 8. 12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파행통과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협동조합의 기본이념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악법일뿐만 아니라 개혁의 이름만 빌렸을뿐 명분도 실익도 없는 법안으로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를 20년이상 후퇴시키는 법안이다.

지난 1981년 농협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축협은 그동안 축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여 양축농가의 협동조합으로 착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이때에 공법인도 아닌 사법인인 축협을 법률에 의하여 농협에 강제통합하는 것은 반민주적, 반협동조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계속 반대해 왔다.

한편 우리 축협은 원칙에 입각한 진정한 협동조합의 개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업종별 연합회의 자유설립과 신.경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의 청원을 1999. 7. 14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협동조합 기본법적 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안은 참여연대, 전농, 민변, 민교협등 개혁적 사회단체도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노력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농축협고 농민을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는 농업인협동조합법 시행을 끝까지 강행처리할 경우 우리는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협동조합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결행할 것을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농어민협동조합법안 추진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축협조합장과 임직원 그리고 친인척에게 가해진 검찰수사 및 내사와 예금계좌 추적등 수많은 외압 의혹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할 것이다.

둘째.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축협의 해산과 청산 그리고 농협과의 통합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헌법 제123조 제5항)등에 대한 위헌요소가 있는바 헌법소원등을 통하여 법률적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신설중앙회의 설립준비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현행 축산업협동조합법등의 범위내에서 축협이 자율적인 개혁과 생존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농업인협동조합법의 제정 추진으로 분열된 농심을 다시 결집시키는데도 앞장설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협동조합의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그동안 축협의 원칙적인 노력을 지켜보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1999. 8. 13

축협중앙회 회장 신구범

친애하는 축협임직원 여러분!

우선 저의 국회에서의 행동으로 임직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조직 사랑을 위하여 보여준 우리 임직원들의 충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 8.13일은 우리 축산인과 축협가족들에게는 농·축협 통합을 위한 치욕적인 법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통한의 날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정의가 다시 살아 오늘의 이 결정이 이 땅의 축협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역사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축협임직원 여러분!

저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석상에서 법안통과의 부당성을 최후까지 온몸으로 막아내며 혼신을 다하였으나 결국 농·축협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비통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병상에 누워 있는 제가 가장 걱정되는 일은 조직의 수장이 된 몸으로 실의와 분노로 가득찬 양측가 조합원과 우리 축협가족들을 위로하고 지금의 이 위기를 수습하여 조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직원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느냐입니다.

친애하는 축협임직원 여러분!

나는 조직과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축협중앙회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록 농·축협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우리는 이후 헌법소원제계, 국정조사권 요구 등 합법적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당초 계획대로 법안철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2만여 축협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현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는 이성을 찾아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과 울분과 해소하는 자기만족의 수단이 될 지 모르지만 조직과 조합원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친애하는 축협임직원 여러분!

호랑이 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협임직원 모두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수단으로라도 축산업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위한 지혜를 모으고 행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협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니 우리 임직원들의 끌어오르는 분노와 아픈 가슴은 그 무엇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단합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을 걱정하고 축협을 성원하여 주셨던 조합원에 대한 봉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해나가고 대대적 저축증가운동 등 조직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만 이번 사태를 맞이하기에는 우리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으로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조속한 시일내에 병상을 벗어나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며 이후 대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999. 8. 14
회장 신구범

**· 정부는 정치적 흥정의 산물인 농업협동조합법을 폐기하고
구속된 동지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

국회는 100만 축산인의 염원을 저버린 채 개혁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인 농업협동조합법을 강행통과 시켰다.

우리는 축산농민들의 진실과 정의가 정치권의 이해와 부당한 권력의 폭압으로 짓밟히고 철저히 유린당한 것에 대해 피가 역류하는 분노와 뼈를 깎는 아픔을 주체할 수가 없다.

우리는 통합은 곧 개혁이라는 식의 여론호도로 국민과 농민들을 기만하며 정부의 빛나간 독선과 야집에 의해 축산업 포기정책의 산물인 농업인협동조합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축산인들을 위한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여 왔다.

정부여당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하는 여당의원 4명을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으로 기습적으로 소속상임위를 교체하면서까지 상임위 편법통과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해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열망하는 신념과 의지에 찬 신구법 축협중앙회장이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항거하였다.

그러나 피를 부르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반대하는 법사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통과되지도 못한,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잘못된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강행 통과되는 만행이 민주국가를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하에서 이루어 졌다.

정치권의 정략적인 이해관계속에 농업협동조합법을 특검제입법 및 총리해임건의안과 결부시켜 정치적 거래를 함으로써 100만 축산인들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내몰은 것에 대해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역사의 준엄한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원칙도 없이 정치권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처리 되어진 농업협동조합법을 결단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입법기관의 초헌법적 횡포에 의해 무차별 유린당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당한 주장을 하다가 연행된 동지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정부여당의 횡포와 비도덕성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동시에 진실과 명예, 그리고 축산농민을 비롯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강력히 연대하여 결사투쟁으로 항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999. 8. 16

축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김정수

‘농업협동조합법’의 국회 변칙·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13일 축협 중앙회장의 할복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부 법안의 성립부터 국회 통과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지켜보면 서 우리는 과연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특히 농림부가 8월16일자 성명에서 정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혁의 큰 물이 선택되었다는 요지로 자화자찬한 것은 그동안 자율적이어야 할 협동조합의 개혁논의를 개혁의 대상인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바람에 농업계와 전 사회에 극심한 파문을 야기한 책임을 외면한 태도로서 농림부의 도덕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는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외면한 채 공룡과 같은 거대 중앙회를 초래한 ‘단순통합안’을 입안하였다. 그리고 장관 이하 1급 공무원의 사표 제출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정부 법안의 강행 처리에 사력을 다하였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산하기관 및 일부 농민단체 등 어용단체를 앞세워 정부안의 지지를 강요하였고, 정부안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권을 앞세워 탄압하였다. 농림부는 거대 조직인 농협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 법안 성립이 무산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의 개혁 대상인 농협중앙회는 처음부터 개혁대상에서 제외하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 축협 중앙회의 단순통합에만 골몰하였다. 최대의 개혁대상인 농협중앙회가 정부안을 적극 지지한 것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농업협동조합법’의 변칙·강행 처리에는 국회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보다는 정외대와 농축협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누구도 소신 있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특히 여당은 정부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하기 위해 자민련의 농림해양수산위원 4명을 전격 교체하고 법사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변칙처리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어 특검제와 교환이라는 이유로 야당의원 두 명을 상임위에 참석시켜 상임위통과를 도와주고, 본회의에서의 변칙 처리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를 비롯해 축협 등 정부안에 반대하는 측의 견해를 최대한 수용하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은 그 동안 우리 국민연대가 주장해온 협동조합 중앙회의 올바른 개혁방향, 즉 ① 각종 중앙회를 통합하되 통합중앙회는 사업체가 아닌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로서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② 신용사업은 특수은행으로 분리하여 농민과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처로 정법하고 ③ 경제사업은 농민의 농축산물을 잘 팔아줄 수 있는 연합회체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앙회는 통합되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돈 장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판매사업은 구색 맞추기 식이 될 것이며, 공통과 같은 거대한 중앙회는 농민과 회원조합 위에 더욱 군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심수조 원 이상의 정부정책사업을 대행하는 종합중앙회가 농민권익 대변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정부의 통제하에서 관료화가 지속되어 농민들로부터의 비난이 가중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부칙에 농림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결과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들어 우리가 주장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수용하였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994년의 협동조합 개혁 논의시 당시의 김영삼 정부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는 학계·농민단체의 통일된 개혁 주장을 희석시키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에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법인의 설립 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는 규정을 두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찌 '국민의 정부'가 실패한 '문민정부'의 수법을 사용하여 또 다시 협동조합개혁을 호도하고자 하는가. 또한 정부는 품목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 설립을 허용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강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품목별 전문조합의 전국연합회는 중앙회가 비사업체로 전환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중앙회가 사업체로 있는 한 과거처럼 중앙회의 견제와 갈등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전국연합회는 비록 설립이 된다 해도 장애요인이 제거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농업협동조합법'의 변칙·강행 통과와 그 시행이 가져올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중앙회의 축협중앙회의 강제 통합에 따른 극심한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없을 것이며, 신용

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경과조치와 시행방안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검토라는 미봉적인 대책은 그 실현과정에서 농업계의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농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당면한 심각한 농가부채문제의 해결과 다가올 WTO 차기협상이라는 난제들을 앞에 두고 농업계가 모두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어찌하여 정부는 이같이 각 이해당사자들이 계속 대립·반목할 수 밖에없는 짜집기 법을 만들어 농산물 가격 및 농가부채 문제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방어기능과 직결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본질적 개혁을 비켜가려 하는가.

우리는 '농업협동조합법'의 변칙·강행처리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개혁은 이제부터라는 자세로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우리의 각오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농어촌발전위원회 시절의 주장을 장관이 되자 뒤엎고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을 입안하여 농민을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을 악용하여 농민단체와 학계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면서까지 농림부안을 지지하도록 몰아세워 농업계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축협회장의 할복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 국회는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법안을 변칙 처리한 것에 대해 겉허허 반성하고 김영진의원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3. 김대중대통령은 협동조합의 왜곡된 개혁작업으로 인하여 농업계 전체가 분열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사태를 깊이 인식하여 '원칙에 입각한 협동조합개혁작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

1999년 8월 16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

공동대표 김 병태 김 중배 손 호철 이 감용 정 광훈

한겨레신문
8月16日 2面

京 鄭 新 聞
8月16日 2面

대한매일
8月16日 1面

國民日報
8月16日 1面

동화일보
(8월16일 3면)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축협은 축산업을 지키는 큰힘, 축산농민의 참 조직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예금도 소중히 키워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해 주십시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축산농민 조합원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축산업의 발전과 협동조합이 농축산인의 자주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모든 사람의 간절한 호소와 여망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전문성과 축협의 독립성유 외면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을 지키는 큰 힘이자 축산농민을 위한 무한봉사 조직으로서의 축협의 역할은 계속 되어야하고 그 영속성도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도 법과 제도에 따라 지켜질니다. 변함없이 이용해 주십시오.
축협가족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많은 업무와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당한 뜻과 의지를 실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축협은 축산농민과 고객을 위한 무한봉사 조직으로서의 책임을 변함없이 다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8月16日 15面

본판

협동조합개혁법안, 8월13일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농정사 50년만에 협동조합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협동조합은 농업인 여러분의 것입니다.

-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진정한 협동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맞게 되었습니다.
- 농·축·임·삼 협동조합경영회는 축소·통합되고, 모든 일선조합은 현재의 이름과 독자성을 유지한 채 더욱 규모화, 전문화되어 농업인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차비용·고효율」조직이 될 것입니다.

■ 이제 개혁의 큰 틀은 선택되었습니다. 축합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앙회 통합문제를 놓고 축합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축합인원들의 저항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상임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축합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법 제132조)되었습니다. (오른쪽 표 참조)
- 앞으로 관위법령과 정관을 작성할 때에도 농·축합 동수의 대표와 중립적인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중앙회 및 일선조합의 효율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할 것입니다.

■ 전국의 농업인 모두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해 새천년 무한 경쟁시대를 이겨 나갑니다.

- 금년말부터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산물 관세인해 등 각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 2001년 1월에는 쇠고기 수입이 완전개방되는 등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 다시 태어날 새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 국회의심리과정에서 축합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더욱 보장되었습니다.

중앙회의 사업수행	농업·축산·임업·삼림대표이사 부른별로 사업을 책임경영	(당부인과 동일)
축합부분의 복합보장	• 법도 규정할 두지 않음	• 축산대표이사는 축합조합장 대표지표의 에서 단순추천 • 축합경영회 대신은 축산대표 이사기 관리 • 농·축합 지원간 차별금지
신용 경제사업의 분리	• 법도 규정할 두지 않음	• 법시행후 2년내에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
품목별 전문조합 연립회	• 법안적 없는 협의체 형태로 연립회	• 품목별 전문조합에 법안적없는 연립회를 결성하여 경제사업은 최도록 허용
명칭	• 농업·축산·임업·삼림 (농업·축산·임업·삼림협동조합)	• 농업·축산·임업·삼림 (농업·축산·임업·삼림협동조합)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 립 부

결 의 문

김대중 정부가 이른바 제2의 취임사라 자처하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력한 재벌개혁과 서민의 편에 선 생산적 복지정책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조치들은 하나같이 반개혁적이고 반국민적이기까지 하다.

국회앞에서 장기 농성중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도 없고, 현대중기산업 노동조합, 전국의료보험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각종 집회에서 연행되어 불구속 입건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통한 농·축협 강제통합에 항의하는 축협 노동자들에게 곤봉세례를 가해 30여명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고 411명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어 8명이 구속되는 등 정부의 초 강경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만이 넘는 축산인들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하고 통합반대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면서까지 총선에 앞서 표발같이에만 몰고 있다.

그뿐 아니다.

정부는 상반기 노정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폐공사 특검제 실시가 실종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구속수배자에 대한 석방 약속을 파기하고 공기업에서의 단협 일방파기가 이어지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임시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합의를 믿고 파업을 유보한 방송사 노조에 대해 합의이행은 고사하고 방송사 노조간부들에 대해 전격 구속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16일 정부와 재벌 그리고 채권단이 손발을 맞춰 합의한 대우그룹 구조조정 방안은 '공평과세와 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실내용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쏟아부은 30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은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부담인데도,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담고 있지 않다.

무엇이 복지이고 무엇이 재벌개혁이란 말인가?

이제 민주노총 산하 4개 연맹은, 개혁을 외면한 채 말로만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구속자의 즉각 석방과 수배해제등 노정합의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대우그룹 경영부실과 부패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조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동자들의 참여보장을 위해 힘차게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반개혁적 협동조합 통합을 반대하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통합방송법 생취와 언론노조 탄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1999. 8. 17

민주노총 산하 4개 연맹 (금속산업연맹, 공공사회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인편연맹)

성 명 서

이 나라 축산농민과 축산업협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안이 상임위를 졸속으로 통과하던 날, 우리 조직의 수장인 회장은 피를 뿌리며 온 몸으로 축산의 역사를 바로잡으려 하였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축협인의 가슴에 40여cm의 상처를 하나씩 남기면서 투쟁의 불을 지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활활 타올라야 할 투쟁의 불꽃은 그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사그러 들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투쟁의 중심점이 되어 총파업을 주도하고, 직원들을 독려하여 투쟁전선에 나서야 할 위원장은 상황판단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투쟁 초기의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은 상임위통과시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사전 준비 작업은커녕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도 즉흥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이미 결정된 파업의 시나리오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회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무의미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지 8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들의 석방을 더욱 불투명하게 방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농림부가 협동조합개혁법안을 발표한 이래 노동조합의 입장이 통합반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연합회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투쟁의 방향을 잃고 직원들간의 분열만 조장하였으며,

박순용 전회장과 남경우 전상무의 거취문제에 있어서는 노조 조합원들의 회장퇴진 요구를 수용하여 조속히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게 하여 투쟁이 한동안 소강국면에 봉착하게 하였으며, 개혁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혼선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과 긴밀한 연대로 투쟁을 진행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실익을 얻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연대투쟁에 소홀하여 투쟁의 힘을 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략이 뛰어나거나, 판단이 빠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투쟁의 선봉에 서서 용맹스럽게 투쟁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규정시간을 훨씬 넘겨 출근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조차 지연시키는 등 그 불성실함과 조합동지들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장의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소신으로 일관해온 투쟁의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투쟁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된 파업조치 추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1년여의 긴 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날 박순용 전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회장실을 점거함으로서 신구범 회장 탄생의 기폭제 역할을 한 우리의 행동을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장인 신구범 회장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할복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오직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축협인의 자존심이 용납치 않는 것이며 축협의 미래를 풍전등화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영달 및 일신의 안위만 추구하는 김정수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8월18일 17시부로 자진 사퇴하기를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직의 수호와 가열 찬 투쟁을 위해 위원장에게 물리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행동의 모든 책임은 노조위원장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음을 밝힘은 물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 조직에 없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더 가열 찬 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1999. 8. 18.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본부 분회장 일동

축산기획부, 기금관리부, 감사실, 홍보부, 기획조정실, 유통사업부, 국제부, 직거래판매분사, 육가공분사, 계육가공사업본부, 육가공분사, 사료분사, 상호금융공제부, 금융종합지원부

축협을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무너지는 정의와 신의를 온몸으로 지켜려한 참 뜻, 축산업과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 지키기로 승화시키겠습니다 -

저희 축협을 지켜 주시며 친구법 회장의 패유를 빌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의 충격속에서도 이를 소신과 용기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전보와 전화, 또 직접 찾아 오셔서 위문해주신 시민, 축산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법 축협 중앙회장의 협박과 관련하여 저희 축협가족 모두는 국민여러분께 감곡히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협 친구법 회장의 유혈항의는 단순히 초지치기, 밭그릇지키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야에서 잘못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칙없는 사회는 이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개혁, 원칙없는 사회를 향해 누군가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소신 아니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 강제통합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안팎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개회 직전에 이 법안에 유보, 반대의 입장을 보이던 일부 여당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교체되고 다른 정치 현안에 협동조합법안을 연계하는 등 전체 농축산인과 농축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정략차원에서 이용 되는 현실을 보고 친구법 회장은 정의와 신의를 온몸으로 받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 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나라 축산 농민의 대표, 조직의 수장으로서 축협이 잘못된 개혁의 희생물이 되는 현장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절박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와 같은 전의를 왜곡·매도하고 있는데 대해 인간적인 비애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다깝고 경황이 없는 현장에서 서둘러 법안의 통과를 선언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 하다고 인사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의 비 인간적 행태에 전체 축협임직원 및 조합원들은 분노를 느끼며 이와 같은 강행·변칙부과는 통합법안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였음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민과 축협 임직원 모두는 친구법 회장이 온몸을 바쳐 피고자 했던 뜻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며 축산인의 축협, 국민의 협동조합으로서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키는데 열과 성을 다 하였습니다.

전국 축산농민 · 축협조합장 · 임직원일동

정부는 축협중앙회장과 축협임직원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은 협동조합통합법안이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주도되어 국회를 통과한 현시점에도 정부는 비굴하게도 축협에 대한 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자민권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상임위 소속의 원을 교체한 행위, 당사자인 축협중앙회장이 우리 의정사 초유의 목숨을 건 항거를 하였음에도 이수라장속에서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킨 참석의원들과 그 와중에 감사문을 읽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행위, 그리고 법안의 위헌성 및 의견수렴과정에서의 축협에 대한 위압 등을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킨 것 등 일련의 행위들에 우리는 밀려오는 분노를 삭힐수가 없다. 아울러 당리당략적인 당론에 얽매어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자신들 개개인이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자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당사자인 축협중앙회장은 어느 누구도 축협과 축산인들의 외침에 귀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목숨을 건 항거를 하였다. 개혁을 강제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신회장의 행동을 정치적 헤프닝 운운하며 비하 하나 축협의 주인인 축산농민들과 임직원 및 대다수 국민들은 약자와 소수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신회장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그분의 패유를 기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뗏뗏하지 못한 법안처리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진 것에 대한 사과와 해명은 커녕 오히려 수행했던 축협 임직원들을 경찰서로 연행, 40여시간동안 구금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국회 의장방해죄'로 고발 조치한 강압행위는 우리 축협과 축산인을 향한 초유의 압력수단으로 밖에 볼수 없다.

문민정부 시절 최고통치자의 아들로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부정을 일삼은 자에게는 사면이라는 은혜를 베풀고, 힘없는 약자가 무엇이 진정 옳은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생명을 건 의사표현의 방법을 택한 결연한 행동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방해'라는 희귀한 죄명으로 손발을 묶는다면 도대체 이나라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축산인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정치적인 타협으로 통과된 이런법이 시행되면 과연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개혁법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추진과 개혁의 완성은 협동조합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농축인삼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협동조합개혁은 성공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축협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정부의 축협에 대한 비굴한 강압적 형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전체 임직원과 축산 농민은 물론 이나라의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기타 시민, 노동단체와 힘을 규합하여 한치의 굴함이 없이 "축산업 사수"를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을 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9년 8월 24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 김정수

- 일부 간부직원의 경거망동을 엄중 경고한다 -

정부의 협동조합 강제적 통합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축협중앙회장의 할복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전 조합원은 한없는 절망감, 허탈감과 함께 사회정의의 부재함을 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분명 정의는 살아있고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대동 단결하여 결사투쟁의 정신을 불사르며,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분명 금번 통과된 법안은 자발적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을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언론을 통한 매도, 협동조합에 대한 왜곡, 농민여론 조작 등 민주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정부의 압력으로 진행되었고,

내용 또한 당초 정부가 개혁하고자 한 개혁과제에도 상반되는 통합방안으로 그 효과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법안에도 각종 독소조항 및 헌법에도 위반되는 「강요된 개혁의 산물」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지금 병상에 계신 회장도 개악법안인 통합법안의 무효화 투쟁을 시민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추진과정에서의 외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과 아울러 헌법재판소 위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합법적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농림부와 농협 등에서 개악법안의 이행을 위하여 “통합 시 간부직원 임용” 운운하며 우리 조직을 분열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그간 투쟁의 전선 뒷편에 있어왔던 일부 간부직원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조직을 지키기 위해 정부 개악법안에 맞서 싸운 회장 및 우리 조합원의 피와 땀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으며, 8. 13 전투에서 구속되어 옥중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이 아직도 있는데 말이다.

우리 전 조합원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정부 및 농협의 조직분열 음모에 부화뇌동하는 자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우리 4천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배신자로서 최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그 간 축산농민, 회원조합 및 중앙회 전직원의 피와 땀이 얼마란 말인가.
그런 노력을 뒤로한 채 자신만이 살겠다고 적들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 4천여 조합원 동지에게 천명한다.
우리조직의 이단자가 발견될 시 즉시 노조집행부에 설치된 매축노 신고센터
(전화 : 02-2224-8884)에 알려줄 것을 !

축협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자가 우리조직에 있을 자리는 녀 이상 없으며, 그런 자는 축산업을 팔아먹은 자로, 축협을 농협에 팔아먹은 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1999. 8. 25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 김 정 수

제목 : 9월 7일 새 협동조합법 공포, 개혁작업 본격화

- 정부는 9월 7일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 등 협동조합개혁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을 공포하였다.
- 농림부는 새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00년 7월 1일 통합중앙회 출범을 목표로 「설립위원회」와 「사무국」, 「실무기획단」 등을 구성해서 협동조합개혁 후속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농림부는 농·축·삼협 중앙회 임원과 일선조합장 그리고 중립적인 공익대표 기관으로서 학계, 농민단체, 언론관계자 등 15명을 선정하였다.
 - ※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은 선정 후 별도발표
- 설립위원회는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정관 작성, 조직 및 인력 운영조정계획 등 통합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 또 설립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사무조직으로서 「사무국」과 「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하였다. 각각 사무국은 농림부 공무원과 협동조합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쟁점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게 될 실무기획단에는 일선조합장과 농·축·인삼협 임직원 및 실무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킬 계획이다.

□ 농림부관계자는 “향후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세부작업 과정에서 농·축·삼협중앙회 당사자간의 자율협의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임원급 협의체를 별도 운영토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9. 16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설립위원회 1차회의 개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9월 0일 정세욱 공동위원장의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인사말에서 “협동조합개혁이 역대 정권마다 시도되었지만 좌절되었는데, 이번에 개혁법이 공포되어 농산물유통, 농가소득 및 농업인 권익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법에 따라 축협부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참석하지 않았고 축협조합장은 중앙회 추천을 의뢰했으나 추천을 받지 못해 위촉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축협 측의 불참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규정(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이 회의에서 정장섭 위원은 “61년 농업은행과 협동조합 통합시의 기구와 절차를 연구, 검토하여 앞으로의 중앙회 통합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개진, 「사무국」에서 자료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어떤 위원은 “축협이 불참할 것에 대비하여 「설립위원회 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순악 위원은 “2차 회의부터는 회의 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1주일 전에 자료를 미리 줄 것”을 요구, 상향안은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3~4일전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9. 16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설립위원회 2차회의 개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2차 회의가 9월 20일 정세욱 공동위원장 및 노종규 인삼협 대표 등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2시간 여 동안 농림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 위원들은 설립위원회 간사(농정국장 서성배)로부터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위원회 운영방법, 설립위원회 규정안 수정사항 및 앞으로의 통합중앙회 설립작업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사무국」 및 「설립기획단」 구성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

「설립사무국」은 농정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여 농림부 및 협동조합 직원 25명으로 구성하고, 「설립기획단」은 우선 12명 내외의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축협측의 설립위원회 참여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계속 불참할 경우 설립위원회 및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선 설립위원장 명의로 축협측의 참석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협동조합중앙회설립사무국 구성안 확정】 지난 9월 10일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1차 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설립위원회 규정(안)」이 의결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사무국 구성(안)」이 9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설립사무국」은 농림부 농정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하여 농림부 및 협동조합임직원 24명으로 구성되며, 사무국 조직으로 기획총괄반, 경제사업반, 법령정비반, 교육홍보반을 두어 200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설립사무국」은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설립위 회의를 준비하고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또한 농·축·삼협 등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구성될 「실무작업단」의 작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내용을 지도·조정하는 등 통합중앙회 출범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무국」인선에서 협동조합 직원은 농협 8명, 축협 5명, 삼협 2명이다.

【9월 20일 설립위원회 2차 회의 개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2차 회의가 9월 20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설립사무국」 및 「실무기획단」 구성계획(안)을 의결하고, 앞으로 통합중앙회 설립에 관한 주요과제 및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 도 자 료

- 제공일 : 1999. 9. 22
- 제공자 : 농림부 협동조합과
- 전 화 : 503-7218

이 자료는 1999년 9월 일(조·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농림부, 축협중앙회의 설립위원회 참여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명령

- 농림부는 9.22일, 축협중앙회의 이사회 및 임시총회(9.17일)에서 새로운 중앙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운영에 참여를 거부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결의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축협중앙회의 이사회와 임시총회가 설립위원회 참여거부를 결의한 행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의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018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 이와같은 위법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 축협법 제137조는 규정하고 있어 근거 법률에 따라 취소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와같은 조치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오는 10.8(금)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사항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만일, 축협중앙회가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부는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0. 1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설립위, 축협에 위원회 참여 재 촉구】 정부는 새 협동조합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공포에 즈음하여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축협측 위원으로서 중앙회임원과 회원축협조합장 각각 1명을 추천토록 축협중앙회에 요청했으나(9. 6일)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설립위원회의 의결과 그 명의로 축협의 설립위 참여를 재 촉구하는 공문을 9. 21일 발송하였다.

또한 설립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설립사무국」의 구성·운영을 위한 직원 파견도 재차 요청함은 물론 농·축·삼협 공동작업을 위하여 기획·총무·홍보 등 7~8개 팀으로 구성될 「실무작업단」의 인선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중앙회는 「실무작업단」 구성을 위한 자체 협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실무 작업단 설치장소 및 일시, 조직 편성 내용, 각 중앙회별 직원 파견 인원 등에 대해 9. 30일까지 설립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실무작업단장은 농협중앙회의 추천을 받게 된다.

【축협중앙회 설립위 불참 결정에 대한 취소명령】 농림부는 9. 22일 축협중앙회의 이사회 및 임시총회(9. 17일)가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운영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결의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경 분리 추진 협의회 위원 위촉 및 제 1차 회의 개최】 농림부는 9월 20일 지난 9월 7일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신·경분리 추진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동 협의회 1차 회의를 오후 3시 농림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그 구성은 농림부 안중운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축협 관계자, 교수, 농촌경제연구원, 농민단체 등 10명의 위원으로 하였는데, 축협중앙회에는 지난 9월 15일까지 위원추천을 의뢰하였으나 아직 미정 상태이다.

앞으로 이 협의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 의뢰, 연구결과에 따른 국회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외국의 협동조합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2000년 상반기까지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해 하반기까지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로베르토 로드리게스 ICA 회장 귀하

한국정부에 의해 진행중인 협동조합개혁에 대해 알려드리며,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공식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844년 영국에서 로치데일조합에 의해 최초의 협동조합 상점이 설립된 이래로 협동조합은 모든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왔으며,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신용, 도매, 소비자 등 모든 형태의 활동에 관련되어왔습니다.

잠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1995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100주년 기념 ICA총회에서 세계협동조합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을 채택, 공포하였습니다.

많은 국가가 사회발전을 위한 협동조합기능의 유용성을 인지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협동조합이 정부의 지원아래 발전하였습니다. 대부분은 기본적인 협동조합원칙을 충실히 이해하였지만, 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건전한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연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의 흐름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움직이는 입법적, 경영적 토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 협동조합원칙을 위해 협동조합의 가치뿐 아니라 자치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협동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협동조합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UN은 협동조합진흥발전위원회(COPAC)와 함께 오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협동조합발전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안"을 완성하였습니다. UN은 이 초안을 이번 가을 총회의 의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UN은 기타 NGO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협동조합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 그리고 1981년 축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이래, 정부의 간섭을 점차 축소하고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123조 5항에 "국가는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의 자조적 조직 설립을 육성하고 독립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농민과 어민의 자조적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 프로그램아래 시행되고 있는 사회경제개혁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는 협동조합개혁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온 3월이래 한국정부는 협동조합중앙회를 강제로 통합하게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이 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까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작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통합의 요지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을 편파적인 정부계획아래 관련협동조합인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인삼협동조합의 동의절차 없이 통합하는 것입니다.

축협의 회원조합과 회원농민들이 축협이 농협으로 통합되는 것에 반대하여 정부에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이 합병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농협은 정부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정부는 축협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통합은 축협의 주인인 축산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며, 축산의 전문화의 퇴보를 야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통합은 세계적으로 승인된 ICA협동조합원칙을 위배하고, 정부의 협동조합 통제권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대한민국헌법을 위배하는 근거를 찾아 1999년 9월 22일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협동조합법의 위헌을 제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협동조합을 강제로 통합하는 정부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협동조합이 현재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을 상실하고 조합원이 아닌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협동조합이 스스로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협동조합이 구습을 벗어 던지고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자주적인 개

허용 통해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협동조합 강제통합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A와 ICA회원기관의 이해와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정부의 간섭에 맞서 진정한 협동조합운동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노고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귀하의 깊은 이해와, 위에 언급된 사실에 대한 귀하의 공식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신구범 한국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최근의 한국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보고서

ICA규칙 9조 (b)항(회원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축산업협동조합이 한국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협동조합개혁 관련사실을 ICA에 보고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개혁의 특징은 정부가 세 개의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1. 협동조합통합의 과정

1998년 2월, 한국정부(농림부)는 정부정책의 하나로 협동조합개혁을 선정하고,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농업분야의 협동조합, 즉 농협, 축협, 인삼협을 개혁개도목 하였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는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세 개의 제안을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 ① 현행대로 세 개의 협동조합중앙회 체계를 유지하고 독립적 사업체계를 강화한다.
- ② 세 개의 협동조합을 주요 사업이나 기능(지도, 경제, 신용)에 따라 분리하고 각각의 사업이나 기능에 따라 협동조합중앙회를 합병한다.
- ③ 세 개의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농림부는 농협, 축협, 인삼협의 자체적인 통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세 개의 협동조합중앙회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농림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미결로 방치하였다. 이례적으로 감사원이 농협과 축협의 사업에 대해 1998년 감사를 시작하여 1999년 2월, 3월에 각각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 감사가 협동조합의 비행을 조사하였다. 3월 8일, 농림부장관이 갑자기 세 개의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협동조합개혁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림부는 축협과 인삼협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세 차례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친 후에 협동조합통합 계획을 확정하고 입법을 위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3월 8일이래, 정부의 통합계획에 반대하는 많은 시위가 축협조합장과 조합원을 중심으로

으로 서울 및 지방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축협의 신규부 회장은 8월 12일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의결도중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통합에 항거하였다. 8월 13일 축협의 회원조합상과 3000명 이상의 축협 및 회원조합 직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제적인 협동조합통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격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위 중 300명 이상의 협동조합 직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 중 9명은 수감되었고, 411명이 법률위반으로 고발되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농협법의 일부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의 자조적 조직 설립을 육성하고 독립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축협 회원조합장들이 참석한 1999년 9월 17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대로 1999년 9월 22일 새로운 협동조합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법이 1995년 ICA총회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 가치, 협동조합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협동조합의 본성 및 원칙과 합치하지 않는 조항

1) 협동조합중앙회의 강제적 합병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에 위반된다.

현재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이 법은 축산업을 진흥하여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확보하고, 축산농민의 독립적 협동조합기구를 통해 축산농민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조: 목적) 그리고 "축산업협동조합은 회원조합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03조: 축산업협동조합의 목적)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에도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이 법은 농민의 독립적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농민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조: 목적)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은 회원조합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13조: 농업협동조합의 목적)

위의 두 법에서 협동조합은 독립적 기구로서 명확히 정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림부가 협동조합 조합원의 결정이사와 관계없이 축협, 인삼협, 농협을 해산하고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부칙 6조의 "특별해산사례", 부칙 7조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두 조항은 협동조합을 독립적 기구로 정의하는 새로운 법의 1조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며, 협동조합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해산할 권리를 주는 진정한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은 ICA협동조합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A. 4번째 원칙 : 자치와 독립

ICA의 4번째 원칙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자치적이고 자조적인 기구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세 개의 협동조합중앙회(농협, 축협, 인삼협)를 하나의 중앙회(농협)로 통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더욱이 상기된 것처럼, 새로운 법은 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과 통합이라는 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각각 협동조합중앙회 총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중앙회의 구성, 해산 및 통합의 문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치적인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

새로운 법의 166조(협동조합사업의 정부관리)와 167조(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정부승인 취소)는 정부가 협동조합운영에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또한 협동조합운영의 자치와 독립을 훼손하고 약화시킬 수 있다.

부칙의 3조 2항(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을 위한 위원회)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며, 세 개의 협동조합중앙회(축협, 농협, 인삼협)의 임직원이 참여한다." 이 조항에 따라 농림부는 1999년 9월 10일 15인의 위원회 임원론 지명하였다. 이 15인 중에 세 협동조합중앙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단지 5명뿐이며, 나머지는 농림부직원, 교수, 신문사, 기타 농민단체에서 임명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농림부직원과 대학교수이다. 이 위원회는 세 개의 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과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

수할 것이다. 부칙 3조 2항 또한 협동조합의 자치와 독립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축협은 할당된 두 명의 위원을 위원회에 파견하지 않았다. 이미 총회에서 위원회의 준비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B. 2번째 원칙 : 민주적인 회원통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선출된 대표자들이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새로운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비조합원이 협동조합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더욱이 44조(협동조합운영 검토를 위한 지문기구의 설립과 운영)는 민주적인 조합원통제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3. 의견

협동조합법의 세정목적은 협동조합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협동조합 원칙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따라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활성화해야 하며, 협동조합운영의 자치를 훼손하지 않고, 기본특성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협동조합이론의 저명한 학자에 따르면, 정부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토대 및 협동조합발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특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Republic of Korea

451, SUNGMAR-DONG, KANOOONG-KU, SEOUL, 134-763, KOREA
TEL : 82-2-824-8300 FAX : 82-2-464-6760

Mr. Roberto Rodrigues
President of ICA
15, route des Morillons, CH-1218
Grand-Saconnex, Geneva, Switzerland

October 1st, 1999

Dear Mr. Rodrigues

I have the honor to inform you of cooperative reform proceeding which has been conducted by Korean government and cordially request your official comment on this matter.

As is well know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cooperative store by 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 the cooperative model, was formed in Britain in 1844, cooperatives have been operated successfully in every country and involved in every form of activity : in agriculture, livestock, fishery, manufacturing, credit, retail, consumer etc.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founded more than 100 years ago, adopted and announced at the ICA Centennial Congress held in Manchester, Britain in 1995,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including 'definition of cooperatives', 'value of cooperatives', and 'cooperative principles' in order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s of world cooperative movement.

So far, a number of cooperatives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support from governments since the usefulness of cooperative function for the attainment of social development goals was recognized in many countries. Most of them have followed faithfully the basic cooperative principles bu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s interference in cooperative affairs has delayed the sound development of cooperatives. However, a mainstream policy that governments have diminished their intervention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Republic of Korea

451, SUNGNAE-DONG, KANGDONG-KU, SEOUL, 184-780, KOREA
TEL. : 82-2-224-6350 FAX. : 82-2-486-6780

in cooperatives' affairs has brought various changes i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governing cooperatives in 1990s. These changes contributed to ensuring the autonomy as well as the value of cooperatives by incorporating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operative principles, increased the efficiency of cooperative operations and made cooperatives self-sustaining and self-reliance.

In addition, the U.N. completed "Draft Guidelines Aimed at Creating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after a long time consuming research with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Cooperatives(COPAC). The U.N. is planned to put the draft on the agenda of General Assembly this autumn. With collaborations of othe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he U.N. has also tried to set up the right direction of world cooperative movement.

In Korea, since the enactment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in 1961 and the Livestock Cooperative Law in 1981, there have been efforts to develop cooperatives by diminishing government's intervention gradually. Especially, paragraph 5 of article 1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e State shall foster organizations founded on the spirit of self-help among farmers, fishermen and businessmen engaged in small and medium industry and shall guarantee their independent activities and development".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the obligation to promote self-help cooperatives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guarantee their independent activities.

However, during the reform drive in economic and social sectors conducted under the IMF bailout program,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mplement cooperative reform which aimed at incorporating the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NLCF) into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ACF) as a means of cooperative reform by the government. Since March of this year the Korean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Republic of Korea

451, SUNGNAE-DONG, KANGDONG-KU, SEOUL, 124-763, KOREA
TEL. : 82-2-224-8350 FAX. : 82-2-486-8700

government has completed legislation of a new cooperative law to merge cooperative federations by force and now the government pushes forward preparatory works for the merger scheme by July 1st, 2000, when the law is to take into effect. The core of cooperative merger scheme is to integrate the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NLC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ACF) and Korea Ginseng Cooperatives Federation(KGCF) under the unilateral government plan without any approval from the cooperatives concerned, the NLCF and KGCF.

The NACF, which will be the largest beneficiary from the merger, has not opposed to the government action, while the NLCF, whose member cooperatives and member farmers resisted the NLCF's being incorporated into the NACF, has been strongly opposed to the government measure.

The reasons why we have come to oppose to the government initiative are as follows : First, the Korean government unilaterally legislated the new cooperative law in order to merge cooperatives despite the strong opposition of NLCF members. In that case, the cooperative merger will cause disadvantages to the livestock farmers, the owners of the NLCF, and retrogress the specialty of livestock industry. Second, a forced integration by government does not conform to the universally-accepted ICA cooperative principles and could authorize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 cooperatives. As a result, it will do harm to the sound development of Korean cooperatives. Finding opinions that the new cooperative law breaches Korean Constitution, we filed an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n September 22, 1999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ew cooperative law. We would not consent to any government measures to merge cooperatives by force for the reasons described above.

We strongly believe that cooperative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by cooperative itself on the basis of recognizing the criticisms that Korean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Republic of Korea

451, EUMNAE-DONG, KANGDONG-KU, SEOUL, 134-763, KOREA
TEL: 82-2-224-8360 FAX: 82-2-486-8760

cooperatives have lost basic cooperative character and became more of a government agency rather than working for their members.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voices that Korean cooperatives should break off the old practices and recover their basic functions in all aspects. In this context, we will continue to try to be reborn as a genuine cooperative through voluntary reform.

Attached to this letter is the fact-finding report related with the proceedings of compulsory cooperative merger in Korea for your reference. We also seek understanding and active support from the ICA and other ICA members, which will be valuable for us to protect a genuine cooperative movement from the government interference.

I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you once again for your efforts and leadership. I am looking forward to your deep understanding on the situation we face and your official comment on that matter mentioned above.

Best regards,

Koo-Bum Shin

Chairman and President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Recent Cooperative Reform in Korea

「According to the paragraph (b) of article 9 (obligation of Member) of ICA Rule, this report is prepared by the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NLCF) of Republic of Korea to report the ICA the facts related with the recent cooperative reform having been conducted by Korean government. The reform is characterized by being carried out by government putting emphasis on merging three cooperative federations into one.」

I. Chronology of Circumstances of Cooperative Merger

On February 1998,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MAF) selected cooperative reform as one of the government's tasks and set up a Cooperative Reform Committee(CRC) to reform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 Agricultural Cooperative , Livestock Cooperatives and Ginseng Cooperatives.

The CRC made three proposals for the cooperative reform and submitted them to the MAF : ① strengthening independent business operating system within each cooperative federation maintaining current three cooperative federation system, ② separating three cooperative federations' major businesses or functions(guidance and extension service, economic business and banking service) and merging the cooperative federations by different businesses or functions ③ merging three cooperative federations into one.

The MAF requested the cooperative federations,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ACF), the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 Federation(NLCF) and the Korea Ginseng Cooperatives Federation(KGCF), to reach an agreement through their negotiations. The cooperative federation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The MAF left the issue pending for a long time. Extraordinarily, the Bureau of Audit and Investigation (BAI) started to audit and inspect the business performances of NACF and NLCF in 1998 and publicized the results of auditing and inspection on February and March in 1999, respectively. The investigation into the wrong-doings of cooperatives by the prosecutors followed. On March 8 the minister of MAF suddenly announced cooperative reform plan merging the three cooperative federations into one.

The MAF fixed the cooperative merger plan without fully paying attention to the voices of NLCF and KGCF only after holding three times of *pro forma* public hearings and passed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legislation.

Since March 8 there have been many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s merger scheme in Seoul city and local areas by Livestock Cooperatives' member farmers and cooperative leaders and workers. Especially, Mr. Ku-Bum Shin, the Chairman and President of the NLCF, protested against the merger by attempting suicide at the Committee of Agriculture, Forestry, Marines and Fisherie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August 12. Many of the Presidents of NLCF's member Livestock Cooperatives and more than 3,000 NLCF's and member Livestock Cooperatives' workers held rall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protest against the compulsory cooperative merger on August 13. In spite of the fierce demonstrations,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passed the bill. During the rally more than 300 cooperative workers were arrested by the police. Of them, nine employees were imprisoned and 411 workers were booked without detention on a charge of violating laws.

Some articles of the new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which will take effect from July 1st, 2000, is regarded as breaching Korean Constitution. The paragraph 5 of article 1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e State shall foster organizations founded on the spirit of self-help among farmers, fishermen and businessmen engaged in

small and medium industry and shall guarantee their independent activities and development". Accordingly, we filed an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n September 22, 1999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ew cooperative law following the unanimous decision of General Meeting on September 17, 1999, composed by the Presidents of NLCF's member cooperatives.

We think the law also has some provisions not conformity with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laid down by the ICA Congress in 1995 ; cooperative definition, cooperative value and cooperative principles.

II. Provisions not Conformity with the Cooperative Nature and Principles

1. Compulsory Merger of Cooperative Federations is Contrary to the Cooperative Nature and Principles

The existing Livestock Cooperative Law stipulates "this law shall be to secu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livestock industry and to enhance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livestock farmers through the independent cooperative organizations of livestock farmers" (article 1 : purpose) and " the NLCF shall be to promote the common interests of its member cooperatives and their sound development" (article 103 : the purpose of NLCF).

The new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stipulates "this law shall be to enhance the quality of farmers' livelihood and secu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nhanc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of farmers and strengthen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on the basis of independent cooperative of agricultural farmers"(article 1 : purpose) and "the NACF shall be to promote the common interests of its member cooperatives and their sound development"(article 113 : the purpose of NACF).

In these two laws, cooperatives are defined definitely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new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which enables the MAF to order to dissolve the NLCF, KGCF and NACF and to merge them regardless of cooperative members decisions (article 6 of addendum "special dissolving case" and article 7 of addendum "succession of right and obligation"). These two provisions are directly opposit to the article 1 of the new law which describes cooperative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they also restrict cooperative members' right to operate their cooperatives autonomously. And that is quite opposite to the genuine cooperative nature and principles which gives cooperative members the rights to form or dissolve cooperatives by their own decisions.

2. The New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Undermines the ICA Cooperative Principles

A. 4th Principle : Autonomy and Independence

The 4th Principle of ICA says "cooperatives are autonomous, self-help organization controlled by their members.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completed legislation to merge three cooperative federations (NACF, NLCF, and KGCF) into a federation (NACF). To make matters worse, as mentioned above the new law nullifies the decision of General Meetings of each cooperative federation on such extremely important matters as dissolving and merging their cooperative federations. The matters such as forming, dissolving or merging a cooperative federation should be left to the autonomous decision by the member cooperatives.

In other aspects, the article 166 (government's administrating of cooperative business) and article 167(the cancellation of government's approval of cooperative forming) of the new law could be grounds for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control over cooperative operations. These provisions could also weaken or undermine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cooperative operation.

The paragraph 2 of article 3 of addendum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operative federation) stipulate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 no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chairmen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MAF and the executives or employees of three cooperative federations. (NLCF, NACF and KGFC) shall be included".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MAF nominated 15 committee members on September 10, 1999. Of the 15 members, those who represent three cooperative federations are only five and the rest are from MAF official, professors, newspaper publishing companies and other farmers' associations. Furthermore, the co-chairmen of the committee are an official of MAF and a professor of a university. The committee is going to do the preparatory works of dissolving the existing three cooperative federations and organizing a new cooperative federation. The paragraph 2 of article 3 of addendum is also far from the spirit of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cooperative.

In this context, the NLCF boycotted dispatching two members, allocated to our federation, to the committee because the General Meeting already decided not to take part in the preparatory work of the committee.

B. 2nd Principle : Democratic Member Control

Cooperativ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controlled by their memb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cooperative policies and making decisions. Men and women serving as elected representatives are accountable to the members of cooperative. The new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however, contains article that permits non-cooperative members to take part in cooperative operations. Furthermore, the article 4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dvisory board for review of cooperative operation) also could devalue the spirit of democratic member control principle.

III. Remark

The object of enacting cooperative law should be to give a legal status to the cooperatives and facilitate their operations. It should also ensure that cooperative works as genuine cooperative according to the universally-accepted Cooperative Principles and Statement of Cooperative Identity. The cooperative law, thus, should facilitate cooperative working and should not curtail autonomous cooperative operation and change their basic character. An eminent scholar of cooperative theory stated that the greatest contribution that a government could make to the development of a cooperative movement is to enact legislation that would give legal framework and the necessary safeguards and privileges that would create an atmosphere conducive to cooperative development.

신구범 회장님께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1999.10.1일자로 보내준 소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ICA는 협동조합이 다른 모든 기업체와 같이 각국의 정책이나 각국이 처한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들은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ICA는 한국정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으로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ICA사무총장 브루스 토다손

Mr. Koo-Bum Shin
Chairman and President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
Republic of Korea

By fax: +82 2 486 6760

Dear Mr. Chairman: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which you provided to me and to the ICA President, in your letters dated 1 October, 1999, about the changes which are occurring in the co-operative movement in Korea.

The ICA is aware, from its long experience, that co-operatives, like all economic enterprises, are inevitably affected by the policies and actions of governments and also by the particular historical and social conditions in which the co-operatives have developed. These government policies, like the historical and social environment, vary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This makes it impossible for the ICA, as an external organisation, to make any official comment on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co-operative movement.

I hope that you will understand our position.

Yours sincerely,



Bruce Thordarson
Director-General

<농림부의 농축협 인사.재산처분등 금지조치에 대한 축협노조의 입장>

- 농림부는 축협의 개혁시계를 멈추게 하려는 독선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인 농정개혁에 최선을 다하라.
- 농림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권위주의적 간섭을 중지하라.
- 우리 축협 노조는 농림부의 독선과 권위 의식을 분명코 규탄한다.

우리 축협은 지난 IMF체제이후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그 어느기관 단체보다도 강도높은 자체구조조정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상반기 1천억원 이익 달성, 회원조합 경영흑자 전환등 우리 임직원들의 살을 에이고 뼈를 깎는 희생속에서 진행되어온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농림부는, 인사,조직, 재산의 처분등 개혁작업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축협의 본질적 경영활동을 제한, 동결하는 반개혁적 조치를 강요함으로써 축협의 올바른 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농림부는 이런 개혁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조치를 두고 강압과 초법적 발상으로 밀어붙인 통합중앙회 출범의 준비를 위해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 축협의 어디에서, 그리고 어느 사업을 두고 그들이 말한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을 예단했던 말인가, 또는 이 지시대로 각 협동조합이 내년 7월까지 개혁 추진의 일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인가, 혁신적인 자체개혁을 담당할 축협 개혁위원회의 발족을 앞두고 발표된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축협은 지난 9월 7일 축산업의 희생만을 강요한 농축협 강제통합법이 공포된 암울한 현실속에서도 축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노력은 멈출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양축농가의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자체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혁의 시계를 멈추라는 농림부의 이번 조치는 당장 농정개혁이 시급한 농촌현실을 외면한 권위행정의 표본일 뿐 아니라, 개혁은 일부 관료 엘리트만이 끌고 간다는 독선적 발상인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한 기관의 정상적이고 고유한 인사·승진·급여 문제 등에 까지 간섭하는 것은 우리 협동조합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이다.

이는 곧 그간의 축협축이기에 사용했던 칼날을 이제 협동조합 노동자 죽이기에 사용하는 행위로서 반인도적·반노동자적 발상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규탄하는 바이다.

농림부는 농림부 내부의 인사, 비용 집행등이나 올바르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임을 혈세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이름으로 충고한다.

무릇 모든 개혁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이어야 하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 조직, 자산등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이고 현실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농촌현실은 농정부문의 개혁을 절실하고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이 2001년 7월로 다가와 전문화와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며, 양돈산업 또한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근절시키지 못하면 대일 수출이 전면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당장 계란가격의 폭락으로 특단의 대책없이 양계농가들의 붕괴가 불보듯 뻔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시작된 축협의 개혁은 그동안 협동조합이 비판받아왔던 방만했던 경영, 조직운영부문에 대한 뼈저린 자성에서 출발했으며, 젊고 개혁적인 상무 인선, 조합장 보수 반납, 작은 자동차 타기, 경조사비 개인부담, 과감한 경비 삭감등 그 내용 역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것으로서, 조합장 보수 30% 기습인상등 구태를 거듭하고 있는 유사기관과는 극명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98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 중앙정부 부처중 지적건수로는 1위, 변상금액으로는 2위를 기록한 농림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을 오히려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농림부의 자성과 열린 농정을 촉구한다.

- 농림부는 오만한 탁상행정의 미망에서 깨어나 열린 눈으로 작금의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농정개혁부터 착수하라
- 농림부는 진정한 축산농민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축협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 농림부의 강압적·독선적 태도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새로 태어나는 축협 노조는 분노를 폭발시킬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 축협 노동조합은 축산농민을 위한 무한봉사의 당연한 사명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중단없는 개혁에 매진할 것을 경영진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9. 10. 6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 김 정 수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당선자 오 상 현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0. 7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농림부,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설치 및 운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는 협동조합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조합간 미합의 사항이나 쟁점사항을 설립위가 심의·의결하기 전에 실무자와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도록 농·축·삼협과 농민단체, 학계 17명으로 구성된 「설립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10월 8일 오후 2시 설립기획단 위원 위촉식을 겸한 제1차 회의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설립기획단은 농림부 농정국장을 위원장으로 농·축협 중앙회 임직원(2명), 농·축·삼협 조합장(5명), 교수(2명), 농·축산업 전문가(2명), 농민단체 전문가(5명)로 구성된다.

설립기획단은 새 통합협동조합중앙회가 출범하는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되며, 기획단에서 검토된 모든 사항은 설립위에 상정되어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된다.

한편 10월 8일 개최되는 1차회의에서는 설립위 2차회의(9.20)에서 확정된 '설립위원회 규정'과 '새 협동조합개혁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농림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설립기획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끝.

붙임 : 설립기획단 위원명단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설립위원회는 중앙회 해산과 설립사무를 총괄하는 법정기구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효력을 가지는 실정법상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축협이 설립위 참여 거부 결정은 명백히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현행 축협법 제137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한 위법한 의결 사항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오는 10. 8(금)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 사항을 취소해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축협중앙회가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관계법에 규정된 제재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관련 기초자료 제출 요구】 농림부는 10. 1일 농·축·인삼협 3개 중앙회에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작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10. 11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제출 요구된 자료는 '99. 9. 30일 현재까지의 점프 및 사업장 현황, 적자사업장 및 사업부문별 종사인원, 직급별 인원구성 현황, 자체구조조정 실적 등 조직 및 인원현황과 신용·경제사업에 대한 자료, 경영 및 재무, 자회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것이다.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0. 8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는 설립위 규정에 따라 농·축·삼협 실무자와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위원장 : 서성배 농림부 농정국장)’을 설치하고, 10월 8일 오후 2시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태」 농림부 차관이 설립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인사를 한 데 이어, ‘통합중앙회설립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협동조합개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지적하고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 △ 통합작업에 불참하고 있는 축협측 위원의 설립기구 참여유도 △ 농업인을 위한 참된 개혁의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2000년 7월 1일 통합중앙회가 밝은 모습으로 출범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17명의 위원중 서울대 노재선 교수와 김용택 농협대표, 유경중 삼협대표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축협조합장 위원 2명은 2차회의 때부터는 참석키로 하였다. 끝.

붙임)

설립기획단 위원(명단)

소속·직급	성명	소속·직급	성명
농협중앙회 종합조정실장	김용택	건국대 교수	김정주
영주 평은농협 조합장	강성국	서울대 교수	노재선
아산 원예농협 조합장	강태언	농경연 연구위원	박성재
축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	황엽	한농연 부회장	박복태
무안 축협 조합장	박문재	농단협 사무총장	김인식
전북 양계축협 조합장	이기동	한여농 정책부회장	장연숙
강화 인삼협 조합장	유경중	전여농 정책실장	권미영
농업전문가	김성기		
축산전문가	남경우		

제목 : [성명서]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임금 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30일자로 '임원 실비 변상 규약 또는 규정'(도법안)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조합장의 월통상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통상 실비를 월액 실비에 경영정보비를 추가하였으며, 각종 '수당의 상향 조정과 퇴임 공로금 적립을 의무화하였다.

농협중앙회에서 밝히듯이 이번 조치로 2감전부의 급여 수준으로 조정할 때 인상률은 12%수준이며, 인상액은 약 5백만원, 많을땐 조합장 임금이 연 4천 2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각 회원조합의 엄세한 경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일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반목과 위화감을 던져주는 반농민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99년 1월 1일자로 소급 인상하기로 하였으니 이 땅의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합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할 따름이다.

농협중앙회 감사로 드러난 농협의 부실과 비리, 원철회 전 중앙회장과 수백 명의 비리자 구속 사태 있는 지 채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농협 임직원들이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합으로 거듭나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는데 여념이 없으니 개란스러울 따름이다.

지금 농민들은 부채,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자연 재해로 재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있다. 농민, 농업, 농촌의 파탄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책임 이전에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조합장 임금 인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개혁되게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농민과 시대의 소리를 무시한 채 개혁에 역행하는 작태를 일삼을 시엔 농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 농협중앙회는 이번 '임원실비변상규약 또는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규정을 개정한 지역 조합은 다시 재개정 하라!

하나, 농가 부채, 가격 폭락은 조합이 농산물 수급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농협 중앙회는 경제사업 중심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라!

하나, 농협중앙회 설립위원회와 신경분리 추진협의회 인사를 재구성하라!

1999년 10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목 : 농림부, 축협중앙회에서 설립위원회 참여거부결정
취소명령(9. 22)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 농림부는 축협중앙회 임시총회(9. 17)에서 결의한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참여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명령(9. 22)을 내린바 있으나, 축협중앙회에서 별도조치가 없음에 따라 10. 1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축협중앙회 임시총회의 설립위원회 참여거부 결정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018호)에 따른 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을 저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축협법 제137조에 의거 10. 8(금)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사항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 그러나 축협중앙회가 10. 8(금)일까지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농림부는 축협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 축협중앙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오는 10. 23(토)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사항을 취소하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만일, 축협중앙회가 10월 23일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농림부는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축협중앙회의 경우는 현재의 사업장수 대비 83%, 매출액 대비 76%가 조합이관 또는 자회사화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인수하거나 공동출자하는 조합에 대해 재정자금이나 중앙회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제출된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 방안은 설립기획단에서 실무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설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끝.

● 노 조 성 명 서 ●

■ 농림부는 더 이상 축협분열을 확책하지 마라.

■ 축협경영진은 농림부의 「설립기획단」 추진에 강력 대처하라.

3.8이후 우리의 처절했던 투쟁 열기는 식지않고 있으며 새로운 노조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그 투쟁의 불씨는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이며 우리는 끝내 승리를 쟁취하고자 한다.

경영진에서는 이미 우리 축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장총회에서 설립위원회 불참을 의결했고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우리 노조 역시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축협살리기를 위한 제2차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몇 일 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에 그 의지와 투쟁방향을 천명한 바 있다.

농림부는 최근 우리 축산과 축협, 그리고 협동조합 노동자를 죽이는 일련의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 총회의결 취소요구, 인사·재산처분 금지요구, 설립기획단 위원 일방적 위촉등이 그것이고 또한 앞으로 무슨조치들을 할 것인지 가히 분노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특히 금번 설립기획단 위촉과 그 추진은 우리의 그 간 투쟁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앞으로의 투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즉 설립기획단에의 축협측 참여는 곧 설립위원회 참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통합법안 인정으로 간주되어 농림부의 대외선 전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쥐구멍 뚫린 독이 끝내 무너지는 결과가 올 것이다.

우리 축협노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강구하고자 한다.

우리 축협노조는 경영진의 의지나 신념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는 바이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는 경영진의 자세를 보면서 상당부분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제 또 노조가 전면에서 나서야 될 상황까지 적극 설정하고 있다.

축협 경영진은 「설립기획단」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설립기획단에 위촉된 두분의 조합장께서 만약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 사태를 막지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진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최근 일부지역 조합장들께서 심적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 경영진은 총력을 다하여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회장께서 할복을 하셨고 우리 동지중에는 아직도 3명의 동지가 구속된 상태에 있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동지들도 있다. 그간 수많은 동지들이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면서 우리는 싸워왔다.

이 열기는 아직도 식지않고 있으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때 농림부의 최근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경영진과 간부직원들은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 분명 가시적이고 적절하게 확실한 대응을 해 주기 바란다.

우리 노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이다. 경영진도 당연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강건대오 4,000 조합원은 지켜볼 것이다.

1999.10.12

강건대오 투쟁전사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 오 상 현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소 식 지 ◦ 발행일 : 1999. 10. 12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 504-9420

【농림부, 축협중앙회에서 설립위원회 참여거부결정취소명령(9. 22)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농림부는 축협중앙회 임시총회(9. 17)에서 결의한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참여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명령(9. 22)을 내린바 있으나, 축협중앙회에서 별도조치가 없음에 따라 10. 1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농림부는 축협중앙회 임시총회의 설립위원회 참여거부 결정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6018호)에 따른 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을 저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축협법 제137조에 의거 10. 8(금)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사항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가 10. 8(금)일까지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농림부는 축협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축협중앙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오는 10. 23(토)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사항을 취소하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부, 축협중앙회에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설립기획단 참여 재촉구】

농림부는 새로운 협동조합법('99. 9. 7 공포) 부칙 제3조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와 "설립기획단"에 축협측 위원으로 위촉된 이병섭 부회장과 황 영 기획조정실장이 계속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축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위 위원들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10월 12일 발송된 이 공문에서 농림부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모든 법률은 헌법소원의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합헌적 법률로 추정되며, 새 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는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농·축·삼협중앙회의 임직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축협측 위원들이 새로운 협동조합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청구중이라는 이유로 해당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법질서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축협이 설립위원회 및 설립기획단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는 축산농업인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의 발전과 권익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동 위원회 및 설립기획단에 반드시 참여하여 법률과 규정에서 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

京 郷 新 聞	중 앙 일 보	世 界 日 報	서울經濟新聞	每日經濟新聞	東 亞 日 報
10月20日 2面	10月20日 2面	10月20日 2面	10月20日 3面	10月21日 2面	10月20日 4面

농림부장관은 강력한 자체구조조정에 매진하고 있는 축협에 대해 더이상 간섭하지 말고 시급한 농정 현안 해결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축협을 매도하지 말라 -

- 축협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협은 그동안 농정·지도·감사·교육등 중독기능은 통합하고, 돈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은 신용사업은 별도 은행을 설립하여 농·축산업을 지원하며, 농업부문과 축산부문을 타산업과같이 전문화추세에 맞게 별도 법인으로 개혁할것을 주장해 왔고, 「전농」 등 정통성 있는 농민단체나 학계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하며 본질적인 개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농림부장관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참된 개혁방안을 무시하고 한견주의식 개혁, 보여주기위한 허울쫄은 개혁에 집착하여 통합법인을 강제로 밀어붙임으로써 일백만 축산농민을 포함한 28만 축협조합원의 양축의욕을 무참히 꺾는 치졸하고 부끄러운 개혁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이에 축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인 민주적 절차와 구성원의 참여를 모두 무시한 채 농림부장관이 입어부친 영분과 실익이 전혀없는 통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과 위헌이 분명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통합추진을 위한 설립위원회 참여 문제도 당연히 통합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날때까지 유보하기로 축협의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농림부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축협에 대해 설립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정책자금을 중단할 방침(99.8.26연합뉴스)이라는 기사를 흘리고, 우호적인 조합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등 우수한 회유와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축협의 부회장과 기획조정실장, 조합장 2명을 설립위원회와 설립기회단 위원으로 위촉함은 물론 이들에 대해 참여토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의시 감정기관인 총회·이사회에서 설립위원회 참여를 유보키로 결정한 사항까지도 취소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민간단체의 자율결정 조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일권행위를 하였습니다.
- 시급한 농정현안은 뒷전에 둔 채 이와 같이 축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을 이간시키고 내부간섭까지 서슴없이 자행하여 농·축산업계의 심각한 분열을 야기시킨 농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농림부장관은 직무불 수행할때까지는 더 이상 축협을 험악하거나 회유하지 말고 목전에 놓인 세계무역기구(WTO) 후속협상 등 시급한 농정현안에 충실하여 양축농민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정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999. 10. 20.

전국 축협조합장 일동

※최희 축협은 '잘못된 개혁은 반드시 바로 잡힌다' 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일백만 양축농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본분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0. 20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설립기획단 제2차 회의 개최, 통합작업 본격화】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사무국은 10월 22일 오후 2시 설립기획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새 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심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을 본격화 한다. 이번 회의에는 1차 회의 때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축협조합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9. 20 구성된 설립사무국은 그동안 통합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중앙회 설립작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과제별로 팀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조합장 의견청취,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설문조사 등 통합 실무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립기획단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중앙회의 조직·인력 운영방향, 중앙회 경제사업 슬립화 기본방향, 중앙회 사료공장 정리방안, 통합 후 점포 및 인력운용방안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설립기획단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통합중앙회 설립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설립위원회에 수시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시행된다.

한편 농·축·삼협 직원 190명내외로 구성되는 실무작업단도 서초구 잠원동 고려화학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0. 25일경부터 본격 가동된다.

설립기획단 주요논의과제 계획(안)

월	주요 논의 과제	비 고
10月	<input type="checkbox"/>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자격범위 등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중앙회의 조직·인력 운영방향 ○ 중복조직 정리방안 ○ 직급 및 보수체제 조정 등	
11月	<input type="checkbox"/>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 기본방향 ○ 슬림화 대상사업 선정기본원칙 ○ 대상사업별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input type="checkbox"/> 중앙회 사료공장 정리방안 ○ 회원조합간 공동출자·공동경영 방안 ○ 중앙회·회원조합간 공동출자 방안 등 <input type="checkbox"/> 중앙회 경제사업중 사업장별 정리방안 ○ 회원조합 이관대상사업 선정 ○ 자회사 또는 사내분사화 방안 등 <input type="checkbox"/> 축산, 인삼 부문의 전문성 보강 방안 ○ 축산사업부문의 사업·조직·경영의 자율성 보강 ○ 인삼사업부문의 사업강화	

월	주요 논의 과제	비 고
12월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제 운영 방안 ○ 인사·경영·회계 등의 사업부문별 분리운영 ○ 각 사업부문간 갈등조정 방안 <input type="checkbox"/> 통합후 점포 및 인력운용방안 ○ 신용사업 중복점포 정리기준 ○ 각 신용점포 인력 조정방안 <input type="checkbox"/> 농·축·삼협중앙회 자산실사방안 ○ 실시방법, 기간, 외주여부 등 ○ 과부족 정리방안 <input type="checkbox"/> 품목조합 육성방안 ○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 방안 ○ 비회원 품목조합의 육성·지도방안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0. 23.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축협 조합장, 설립기획단 제2차 회의에 참여】 10월 22일 오후 2시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 2차 회의에는 축협측의 박문재 조합장을 포함 14명의 위원(총17명)이 참석하여, 새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3시간여 동안 활발한 논의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 축협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박문재」 무안축협조합장이 참석함으로써, 새협동조합중앙회 설립작업이 보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조합의 규모화를 위해 지역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조합원수(현재 1,000명)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중점 논의되었고, 조합의 원활한 경제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의 최저 자본금을 3억원이나 5억원으로(현행 1억원) 올리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 또한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문조합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젓소 1마리, 소 2마리 등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대체로 상근직으로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금융기관 경력자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만 예치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중앙회에만 예치하게 되면 조합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기타 ▲ 지역조합의 1인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문제 ▲ 지역조합의 중앙회로부터의 신용사업 자금차입한도를 현행 조합자본금의 1배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 대규모 영농조합원의 자금수요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 1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끝.

**축협중앙회는 통합작업에 즉시 동참하라.
그리고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을 완성시켜라**

협동조합 개혁을 바라는 5백만 농민의 염원과 수많은 농민단체의 노력으로 협동조합 개혁입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의 의도적인 개혁회피, 통합사업 불참으로 협동조합법의 실현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 명시된 후속작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개혁입법의 시행을 막아 개혁을 회피하겠다는 국도의 조직이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의보통합법안 연기사태처럼 교묘히 저항하여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축협중앙회는 헌법소위를 핑계로, 농림부의 정당한 법집행 명령조차 거부하며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미 국민적 합의와 농민의 압도적 찬성으로 결론이 난 문제를 자신들의 이기를 위해 거부하며 통합반대를 위해 수십억원을 마련하고, 소위 개혁위원회 자금모금(대출액의 1%), ICA의견요청 등협동조합 개혁 무산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법안은 해당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고, 5백만 농민과 다수 농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 통과과정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축협의 자발적 개혁동참을 기다리는 농민의 열망을 뒤로 한채 또다시 개혁반대에 나서서는 안될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은 5백만 농민의 염원이자, 농업회생을 위한 마지막 돌파구이다. 협동조합 개혁을 불려온 것이 바로 협동조합 자신임을 깨닫고 자성해야 할 때이다. 축협중앙회의 이성적 판단과 개혁동참을 강력히 요구한다.

관리감독과 법안 시행준비의 막중한 책임을 진 농림부가 이러한 축협의 조직적 반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에 명시된 사항조차 따르지 않는 단면이 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대책조차 내놓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림부도 통합대상기관의 조직적 반발에 굴복, 개혁을 포기하는 전철을 되풀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 장관은 축협의 조직적인 반발에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개혁이 표류하거나 좌절된다면 이제 막 돛을 올린 협동조합 개혁은 좌초하고 말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좌초는 21세기 뉴라운드를 맞는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마지막 방어수단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무관해제 당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축협중앙회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반개혁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그리고 농림부는 책임관청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9년 11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組長님께 드립니다.

지난 10월 23일 경북 중앙낙농축협 이종준 조합장 명의로 전국의 축협조합장 여러분께 전달된 편지에서, 한 소신 있는 축협조합장이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구의 하나인 설립기획단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축협내부 분열의 희생물'로 규정하고 최근 정부의 적법한 조치를 비방하고 나선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이 民意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지금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설립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대다수 축협임직원과 일선축협의 이익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일뿐만 아니라 법을 지켜야하는 당연한 道理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일부 임직원들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로 이를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일선 축협과 조합원의 이익을 외면하는 대단히 우려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축협중앙회가 하루빨리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 일선축협과 조합원 권의 보호라는 본래의 정상적인 모습과 체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조직이나 단체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을 맡길 수 없다는 점도 일선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합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통합중앙회의 발족을 앞두고 농·축협 중앙회에 무더기 직금조정이나 승진인사, 불필요한 자산변동을 자제해 주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두고 마치 농·축협의 자체 구조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도 조합장님 여러분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개탄스러운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위원회의 참석은 일백만 축산농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할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 서서 不撤晝夜 애쓰시는 일선 축협조합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일부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대다수의 축협임직원과 회원축협 그리고 조합원을 위해 보다 현명하고 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10. 26

농림부 농정국장 서성배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1. 5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 504-9420

【농·축·삼협 경제사업장 및 전산시설 운영실태 현지조사 실시】

농림부는 농·축·삼협의 경제사업장 및 전산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현지 조사대상기관은 경기·강원, 충북, 전북,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축협중앙회 신용점포 각 1개소, 농·축협중앙회 경제사업장(사료공장, 육가공공장, 물류센터, 하나로클럽 등) 및 회원조합 각 1개소 등이다.

이번 현지조사는 2000년 7월 1일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가 출범함에 따라 전산통합이 불가피하므로, 영업점의 전산기반시설이나 업무전산화 현황을 미리 점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장의 운영실태도 파악하여 일선조합에 이관 또는 자회사화 추진 등 향후 중앙회 조직슬림화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현지 실태조사는 농림부와 농·축·삼협의 중앙회 직원이 4개팀을 이루어 실시하게 되며 각 팀별 조사인원은 7명씩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11월 6일까지 각 중앙회에 조사 대상기관 및 조사인원을 선정하여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끝.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1. 5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 축협의 일부 개혁반대파가 주장하는

‘원칙 없는 개혁, 잘못된 개혁론’의 모순과 문제점

최근 축협의 일부 양직원들은 틈만 있으면 축협은 원칙 없는 사회의 최대 희생물이고 이번 협동조합개혁은 잘못된 것이며, 신구범 축협회장의 자해사건은 이러한 사회·경제 체제에 경종을 울린 양심적인 행위로 찬양(?)하고 있다.

축협이 주장하는 ‘원칙 없는 사회, 잘못된 개혁론’의 전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회심의 당시 상임위 소속의원들 대부분이 축협 입장을 지지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 전제는 당시 의원들이 당사자간의 충분한 합의를 위해 법안 통과를 유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우선 국회 농림해양위 소속 의원 24명 모두가 축협 입장을 지지했다면 이번 개혁법은 전혀 民意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축협 입장을 지지하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신 회장의 我田引水식 상황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제205회 임시국회에서의 전례 없는 공청회, 신구범 회장과 여야 의원들간의 타협을 위한 수많은 만남, 상임위 법률안 심사·소위에서의 축협 주장의 대폭 수용 등 개혁법 제정과정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볼 때 상임위 의원들이 법안 통과 유보 약속을 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신구범씨의 국회 상임위 자해사건’은 그간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려는 苦肉之策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신성한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서 대다수 선량한 축협임직원과 일선조합장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남원축협 『오대철』 조합장은 11월 2일자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에 공포된 협동조합개혁법 부칙 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공동 위원장의 한 사람이 농림부 차관임을 들어 정부가 '협동공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자율조직인 점을 감안 2000. 7. 1일 출범하는 새 협동조합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의 선정도 농·축·삼협 당사자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는 지난 9월 7일 공포된 협동조합개혁법을 거부하고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만약 농협과 인삼협의 관계자들에게만 새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작업을 맡길 경우 190여 회원축협과 28만 축산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고 또, 협동조합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고려에서 정부가 9월 10일 불가피하게 위원 선정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농·축·삼협 당사자, 농민대표, 언론계, 학계 등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의사결정 기구이고, 새 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의 작성 또한 설립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기본안을 마련해 주면 농·축·삼협의 전체 회원조합장들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에서 의결토록 하여 그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있다(부칙 제3조 ④항).

위원 선정 배경과 중앙회 정관 작성 절차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대철』 조합장이 설립위원회 위원선정과 그 운영을 두고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실로 賊反荷杖격이 아닐 수 없다.

축협의 일부 구성원들은 더 이상 순진한 農心을 호도하여 개혁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당하게 성립된 법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설립위원회에 참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끝.

성명서 (1)

**정부는 통합중앙회 설립과정에서 민간단체인
농협중앙회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 !**

**-만일 통합과정이 정부의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농협은 농협법에 의거 설립된 생산자 단체로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민간단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협동조합 길들이기와 졸속적인 생색내기 통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소위 전문기관이라는 곳에 용역을 주어 농협의 조직·인사·급여부문까지 진단하는 등 위협한 발상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무장해제하고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저의이며 21세기에도 농협을 정부가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협동조합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경제연구단체(특히 업무영역이 경합되는)의 조직진단을 단호히 거부하며, 만일 정부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마음대로 가위질하고 전횡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발표와 동시에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농정실패의 모든 책임을 농협에 씌운 작태를 기억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개혁이 농정개혁의 전부인 양 농심을 호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민간자율단체인 협동조합간 통합을 당사자들의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 21세기 명실상부한 자주단체로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라.

**노동조합 동의없는 인력구조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IMF시작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IMF금융위기가 금융기관의 주된 책임으로 전가되고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해이 문제가 제기되며 대량해고 되어 거리로 쫓겨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농협도 '99년 1월 자체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야했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정부가 협동조합 통합과정에서 추가구조조정의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감출 수 없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통합농협법132조 3항과 부칙 제10조 2항이 철저히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더이상의 인원정리를 농사로 하는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추가인원 감축이 있을 시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직급·호봉조정은 농협중앙회가 그 중심이어야 한다.

'81년 정부의 필요에 의해 농·축협이 분리되었고 또다시 정부의 필요에 의해 통합되는 현실에 접하여 직급·호봉조정은 반드시 농협기준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통합중앙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정부는 상이한 조직간의 단순물리적 통합이 아닌 조직구성원들의 화학적통합을 통해 조직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민과 고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1월 10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 김창권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1. 11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중앙회 경제사업 100개중 70개 회원조합에 이관 추진

- 현재의 농·축·삼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총100개의 경제사업장 중 70개를 내년 7월 1일 중앙회 통합을 기해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자회사화 하고, 일부 사업장은 통합중앙회가 일정기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 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는 등 중앙회 경제사업을 슬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이 11월 12일에 개최되는 설립기획단 3차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회원조합 이관 28개, 자회사화 10개, 유통자회사로 이양 20개, 중앙회 독립채산제 10개 등 총 70개의 사업장이 통합중앙회 출범 후 3년 이내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회원조합의 합병과 관계없이 즉시 이관이 가능한 사업은 2000년말까지 이관하고, 현재 경영부실상태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을 정상화 시킨 후 회원조합에 이관된다.
 - 이같은 통합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 방안이 실현되면, 중앙회 경제사업 총매출액(92,744억원, 98년말 기준)중 66.4%(61,597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량이 회원조합으로 이관되거나 자회사화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중앙회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도 약 1,700여명이 회원조합이나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축협중앙회의 경우는 현재의 사업장수 대비 83%, 매출액 대비 76%가 조합이 관 또는 자회사화의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인수하거나 공동출자하는 조합에 대해 재정자금이 나 중앙회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밖에 제출된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 방안은 설립기획단에서 실무적인 검토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설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끝.

■ 성명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황창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 전화 3401 6543 / 전송 3401-6548

축협중앙회노조에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

노조 본인의 역할로 돌아가 축산업 위기극복과 협동조합 개혁완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한농연은 축협중앙회 노조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99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여 협동조합 통합 결과 두생을 전개하겠다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우리는 축협중앙회 노조가 노조 본인의 역할인 노동권의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선동적인 정치부정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과연 국민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더구나 우리 축산업은 지난 UR협상으로 완전개방된 것이나 니름없는 상황에서 만상시원 가격폭락과 WTO자기협상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의욕상실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축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축협중앙회 노조는 우리 축산인들과 농업인들이 현재 내년 7월 1일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을 앞두고 축협중앙회 노조의 이러한 모습을 거대한 우리 속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서식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축협중앙회 노조의 이번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로 인해 21세기 우리 농축산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축산인의 권익대변에 앞장서야 할 협동조합 통합중앙회의 선頭に 시장이 초대된다면 축협중앙회 노조 역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록 협동조합개혁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다소 아픔이 있었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협동조합 개혁 완수와 통합중앙회 설립은 우리농업의 미래적 위해, 그리고 희망을 갈구하는 우리 농축산인들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축협중앙회 노조가 출범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당면한 축산위기 극복과 협동조합 개혁완수를 위해 정진하는 것이 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노동자대회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한농연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협동조합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해 우리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축산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새로운 협동조합중앙회 선頭に 심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동조합 모두가 힘써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9년 11월 13일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1. 15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제목 : 협동조합설립기획단 제3차(11.12)회의결과

<주요논의내용(요지)>

1. 시행령, 시행규칙안 제정방향

현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되어 있는 조합의 여유자금 예치가능 금융기관의 범위에 농협법에 의한 조합을 포함시켜 조합간 자금유통이 가능토록 해야 함.

조합의 여유자금으로 주식형 수익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인 내부자금 운용범위를 확대하되, 매입비율을 제한하는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 현재는 국·공채, 채권형 수익증권 등만 매입 가능함.

새로운 농협법에서 신설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조합의 출연금을 예금자보호법상의 은행과 같은 수준인 분기말 평균대출잔액의 1만분의 5로 함

※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자격 등 주요 시행령 규정내용은 지난 10. 28일 제2차 회의에서 논의 되었음

2. 중앙회 경제사업슬림화 방안

중앙회 경제사업의 회원조합이관 및 자회사화는 꼭 필요하다고 보나 모든사업을 다 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함.

- 중앙회사업과 결합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중앙회사업의 회원조합 이관만이 아닌 회원조합사업의 중앙회 이관(사과주스공장)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특히 가공공장의 경우 회원조합의 단순가공은 가능하나 기술·자금 등의 문제로 제품개발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이관 기준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산지유통은 회원조합이 하고, 전국단위의 도시(소비지)유통은 회원조합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회가 하여야 함.
- 영농자재사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이고,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해서도 중앙회가 하여야 함.
- 이관기준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조합의 인수후 경영능력임.

□ 중앙회 경제사업의 자회사 설립은 조합원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함.

- 자회사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증대가 주목적인데 수익을 올리려면 원료농산물의 저가 구입이 증가되므로 결국은 농민 조합원에게 손해가 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자회사 하더라도 도드람의 경우와 같이 농민이익이 우선되는 경영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봄.
- 농산물 유통사업의 대부분이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앙회가 경영하고 조합이 출자하는 공동경영형태가 필요함.
- 자회사를 만들 경우 전문경영자의 외부영입(공채 등)을 규정

□ 기 타

- 기획단내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유사하게 팀을 구성하여 현지역론도 수렴하고 팀별로 과제를 심층 논의토록 하겠음
- 시행령, 시행규칙은 조속히 제정을 완료해야 함.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 방안(요약)

1.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방안

구 분	대상사업 선정기준	관련 경제사업장
회원조합 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와 회원조합 경합사업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회원조합이 사업수행시 조합원의 실익이 증대되는 사업 * 중앙회는 회원조합 경제사업 경영지도·육성 및 자금(정책자금 및 중앙회자금) 지원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업장 대상 (도소매사업장, 가공공장, 사료 공장 등 100개소)
자회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와 회원조합 또는 다수의 회원조합이 공동출자·공동경영하는 사업 ○ 일반 유통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능률위주의 경영이 요구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가공공장 (육가공, 사료가공) ○ 물류센터, 하나로클럽 ○ 생활물자사업본부 (생활물자물류센터 및 지방물류사업소)
유통자회사 이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기존의 유통자회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통합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로마트, 축산물 판매장 등 ○ 가공제품물류센터
독립채산제 에 의한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영역이 광범위하고 그 혜택이 전체 회원조합 및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사업 ○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공익적 기능이 중시 되는 사업 ○ 투자주체(지방자치단체 등)가 중앙회에 의한 운영을 원하는 사업 ○ 적자(한계)사업장으로써 회원조합 이관에 앞서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조치가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판장 운영사업 ○ 유기농산물판매장

2 슬림화후의 중앙회 경제사업 모습

< 중앙회 사업장 변동상황 및 슬림화 형태 >

구 분	현 행		이 관 등	슬림화후	슬림화 추진형태	
	개수	사 업(장)				
농·축산물 가공공장	축협	3	종합육가공	3	-	회원조합에 이관 (공동출자, 공동경영)
			계육가공, 유가공			회원조합에 이관
	삼협	1	고려인삼창	1	-	회원조합에 이관 (공동출자 공동경영)
포장유가공 사업소	축협	5	서울, 인천, 화성, 전주, 부산	5	-	유통자회사에 이관
배합사료 사료공장	축협	9	7개도시 2개소, 시·군 7개소	9	-	회원조합이관(대규모는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 판 장	농협	13	7대도시 10개소, 구리, 안산, 창원	-	13.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
	축협	3	서울, 고령, 나주	-	3	
판 매 장 (하나로마트)	농협	5	신촌	5	-	유통자회사에 이관
			전남, 전북, 인천			회원조합에 이관
			농특산품판매장			유통자회사에 이관
	축협	24	서울지역 13개소 지방소재 11개소	24	-	유통자회사에 이관 회원조합에 이관
삼협	2	구의점, 용두점	2	-	회원조합에 이관	
유기농산물 유통사업소	농협	8	서울지역 8개소	-	8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
하나로클럽	농협	7	지자체 4, 단독 3	7	-	회원조합에 이관 (공동출자 공동경영)
물류센터	농협	3	성남, 고양	-	2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
			전주	1	-	회원조합에 이관 (공동출자 공동경영)
가공제품 물류센터	농협	1	서울물류센터	1	-	유통자회사에 이관
생활물자 공급사업	농협	4	본부 물류센터 (지방사업소 포함)	4	-	자회사 설립
기타사업소	농협	7	종묘, 연구소 등	-	7	(직 영)
	축협	5	종돈, 연구소 등	-	5	
계		100	-	62	38	

< 종사인원 및 매출액 변동상황 >

(단위 : 명, 억원, %)

구	분	매출액			종사인원		
		현행	이관등	슬림화후	현행	이관등	슬림화후
농협중앙회	공판장	7,378	-	7,378	837	△31	806
	하나로마트 (유기농판매장 포함)	4,006	△3,974	32 (신토불이창구)			
	하나로클럽	1,439	△1,439	-			
	가공제품판매	302	△302	-			
	물류센터(개설준비중)	-	-	-			
	양곡사업	16,780	-	16,780			
	영농자재공급	18,508	△18,508	-			
	생활물자	15,117	△15,117	-			
	기타(종묘,군납 등)	26	-	26			
	계	63,556 (100)	△39,340 (61.9)	24,216 (38.1)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공공장 (육·계육·유·포장육 가공)	3,269	△3,269	-	799	△770	29
	수입쇠고기	1,577	△1,577	-	139	-	139
	생활물자	2,584	△2,584	-	14	-	14
	사료사업 (조사료수입, 사료가공)	13,555	△13,555	-	513	△477	36
	공판장	4,941		4,941	367	-	367
	축산물판매장	1,250	△1,250	-	175	△175	-
	기타(종돈,군납 등)	1,974	-	1,974	88	-	88
	계	29,150 (100)	△22,235 (76.3)	6,915 (23.7)	2,095 (100)	△1,422 (67.9)	673 (32.1)
인삼협중앙회	인삼가공공장	13	△13	-	37	△37	-
	인삼판매장	9	△9	-	6	△6	-
	인삼수출	16	-	16	4	-	4
	계	38 (100)	△22 (57.9)	16 (42.1)	47 (100)	△43 (91.5)	4 (8.5)
합	92,744 (100)	△61,597 (66.4)	31,147 (33.6)	3,608 (100)	△1,691 (46.9)	1,917 (53.1)	

3. 중앙회 사업의 회원조합이관 지원방안

□ 중앙회 사업의 회원조합 이관 조건

- 회원조합의 사업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회사업 인수가격은 장부가격 적용
 - 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지분의 회원조합 이관시에도 장부가격 적용
- 공판장, 사료공장 등에 지원된 정책자금(재정자금 및 축발기금 등)은 회원조합에 채무승계하고, 중앙회 자체자금은 장기분할 상환
 - ⇒ 필요시 정책자금 추가지원
- 인수가격 정산기간은 회원조합의 부담완화를 위해 장기 분할 상환
 - 인수가격정산기간은 사업장의 자산규모, 경영실태, 사업수익성 등을 감안 최단 10년에서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결정
- 상환기간 동안의 적용금리는 사업장별 자산 및 수익성 등을 감안 무이자에서 3%까지의 범위내에서 차등적용

□ 단계별 이관 추진일정

- 중앙회사업의 회원조합이관은 새로운 중앙회 설립일(2000. 7. 1)로부터 년차별로 최장 3년이내에 이관 완료
 - 회원조합 합병과 관계없이 즉시 이관이 가능한 사업은 사업장별 자산실사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2000년말까지 이관
 - 현재 경영부실사업장에 대하여는 구조개선계획을 수립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3년이내) 회원조합에 이관
- 자회사설립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사업장별 자산실사 및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자회사설립 또는 기존자회사에 통합
 - 기존자회사의 중앙회 출자지분은 회원조합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조속히 지분 이양

<성명서>

농림부는 정부공공기관으로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1.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통과 이후 축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의 불참에 맞서 농림부는 정책사업배제 등으로 맞대응하는 등 이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농림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2. 협동조합개혁의 의의를 두르고 농업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이 형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누더기 법이 되어 버린 '농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법의 운용에 있어서 혼란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위원구성에서도 형평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듯이 농림부의 제반조치들은 성과주의에 급급하여 조직간 불협화음을 양산하였고 서로간의 불신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농업협동조합법'이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을 담아내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혼란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 농림부가 '정책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 공공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동안 축산정책을 집행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던 축협을 배제하면서 아무리 능협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해도 축산농가들이 당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축산부문의 완전수입자유화와 WTO협상을 앞두고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힘을 모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련의 과정은 역량의 낭비일 뿐이며, 축산정책에 전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능협이 대신할 수도 없는 일이다.

4. 농림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감독권을 지나치게 행사해서도 안되며, 농림부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설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농촌현실을 무시하고 조합인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자금지원을 미끼로 회원조합합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개혁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회원조합간의 강제합병유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1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 광 훈(鄭光勳)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님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개혁의 목적은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한 기존의 협동조합시스템을 바꾸는데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혁의 보다 큰 목적은 이미 세계시장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우리 농업이 금명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냉혹한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에 고사당하지 않고 21세기에 도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는 이 같은 협동조합개혁의 큰 뜻을 심분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위법적이고 반개혁적이며 나아가 반농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와 명분 없는 지리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님과 의장께서 대표하고 있는 단체가 새협동조합법 입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많은 긍정적인 기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지난 11월 16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불모로 조직 구성원의 작은 이익 확보에만 집착해 있는 축협중앙회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1월 16일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의장님은 농림부가 축협중앙회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자세이며, 축산정책을 집행하는데 축협중앙회를 배제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축협중앙회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칙과 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심의·통과되어 확정·공포된 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단체를, 더구나 일선

축협조합장들의 설립과정 참여마저 가로막는 상식 없는 행동도 서슴 없이 자행하고 있는 축협중앙회를 어떻게 정부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형성된 정책자금을 정부가 어떻게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회원축협의 이익증진을 위해 써달라고 마음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축산정책 집행과정에서 축협중앙회가 배제된다고 하여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에 차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곧바로 일선축협으로 지원되며, 축산농가는 예전처럼 일선축협을 통해 필요한 영농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축산정책에서 배제된 것은 축협중앙회지 일선축협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선의의 축산농가와 회원축협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께서는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의 위원구성에도 형평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설립위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2명, 농협2명, 축협2명, 인삼협1명, 농민단체대표1명, 농업인 1명, 학계 4인, 언론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들은 협동조합개혁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량감 있는 각계인사들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농·축협 임직원은 대등 통합이라는 새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동수로 위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축협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정부의 선의가 담겨져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나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셨으나,

축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정행위 자체를 전면에서 부정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감독마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정부의 정당한 감독행위를 강압적인 회유와 비열한 행위로 악선전하고 있음을 의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합인가기준 상향조정 등은 통합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설립기획단과 설립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하나의 안이며,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얼마든지 합목적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개혁의 기본방향에 중앙회는 작게 하고 일선조합은 농업인의 경제단체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임으로, 그동안 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던 협동조합경제사업의 대부분을 일선조합이 맡아 경영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기존의 체제 유지를 고집하며 혁신을 거부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음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협동조합개혁에 임하는 정부나 협동조합 그리고 책임있는 농업인 단체들 모두의 입장입니다.

끝으로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9. 11. 17

농림부 농정국장 서성배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1. 18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제목 :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 지역 현지설명회 개최
- 19일, 충북 청주시 농협충북지역본부서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사무국은 통합중앙회 설립에 대한 지역 조합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에서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 설명회'를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설명회는 설립사무국에서 ▲ 경제사업장 회원조합 이관 등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 방안 ▲ 통합중앙회 조직개편 방안 ▲ 통합에 따른 중앙회 직원의 인사·보수제도 개편방안 ▲ 조합 설립인가 조합원수 상향조정 등 농협법 시행령 및 정관 제정방향 ▲ 회원조합 합병방안 등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지 조합장과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설명회에는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 위원들과 충청남·북도 소재 지역조합 조합장, 조합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설립기획단 위원들은 농·축·삼협 경제사업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농협 청주물류센터(19일 오전 9시), 축협 청주사료공장(19일 오후 4시), 괴산군 고려인삼창(20일 오전 9시 40분)을 시찰하고 현지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도 듣습니다.

협동조합설립사무국은 이번 충북 설명회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개혁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지역 현지 설명회를 전국 주요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보다 많은 일선 조합장들과 조합원의 의견이 개혁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내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

- 조직적 범죄행위까지 동원한 농림부의 축협생매장행위를 고발하며

김성훈 농림장관의 즉각 사퇴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

우리 민주노총과 축협 노동조합은 축산업의 근본을 뿌리채 뒤흔들고 협동조합의 이념을 짓밟아버린 이른바 협동조합 강제통합법 통과와 충격속에서도, 잘못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하고 잘못 잉태된 법은 반드시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과 양심의 심판을 읊골게 인내해 왔다.

무릇 모든 개혁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며, 올바른 원칙과 절차속에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음은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힘에 의해 통합법을 강행시킨 김성훈 농림부장관을 위시한 통합주체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농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내팽

개치고 오직 공명심과 지만,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온갖 형태의 축협죽이기에 나선은 물론, 민주법치 국가에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법질서까지 무시한 명의도용과 여론조작등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먼저, 국가기관인 농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중에 공공재산을 사용, 조직적으로 명의도용을 통한 명예훼손과 여론조작을 자행한 범죄적 행정농단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축협은 일방적인 협의 논리로 확정된 농축협통합법의 부당성과 위헌성, 그리고 축협의 개혁대안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일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 10월 18일 축협인터넷 홈페이지내에 「통합농협법의 모든 것」 사이트와 여론광장을 개설한 바 있다.

이 여론광장에 10월 21일과 23일을 전후로 축협조합장(윤기섭, 김준수, 백영주, 송건섭)과 조합원(허찬권)명의로 악의적 축협비방의견이 올려졌고, 당사자들이 각각 명의도용사실과 진상확인을 요청해 왔다.

확인결과, 이들 다섯분 의견의 발신처는 모두 동일한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이며 이 주소는 이시기를 전후해 농림부 협동조합과가 실명으로 송신했던 IP주소와 같은 152.99.106.96임이 단순조회만으로도 밝혀졌을 뿐 아니라, 나아가 통합 관성의견의 84%에 해당하는 47건 전부가 같은 IP에서 송신했음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부가 통합관성여론을 부추기고 축협비방을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과 명의도용을 저질렀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기관인 농림부가 공공재산을 이용, 조직적으로 축협조합장과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 정신적 피해를 입힌 범죄를 범한 것이다.

이성을 잃어버린 농림부의 축협 생매장 행위는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김성훈 농림장관을 비롯한 동합주체세력들은 축협이 축산농민의 뜻에 따라 통합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농협중앙회 설립위원회 불참을 의결하자

△ 축산정책사업 자급에 대한 축협중앙회 배제

△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추진의 축협조직 배제

△ 축산발전기금 운용주체인 축협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축산법 개정추진

△ 농업인의 날등 각종 농업관련 행사시 감정적인 축협회장 참석 배제

△ 통상의 판행을 벗어난 무리한 감록권 행사 및 감정적 처분

△ 협동조합의 인사,조직,재산등 본질적 경영활동에 대한 동결지시등 동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치졸하고 강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 축협 생태장에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농림부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한 법안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압박하고 힘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무능력과 정당성없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과 축협노동조합은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과 축산업의 발전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이번 명의도용과 명예훼손등 범죄적 행위는 물론, 정부기관 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축협압박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 하라

하나, 농림부는 이번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 여론조작사건의 책임을 물어관련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일백만 축산농민과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농림부는 축협죽이기는 곧 이나라 축산업의 포기임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아집과 미망에서 벗어나 내성적 차원에서 축산업의 위기 대처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적 절차의 훼손은 물론,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농민들의 여망까지 저버린 졸속통합법의 재개정에 즉각 착수하라

끝으로 우리 민주노총과 축협노동조합은 이땅에서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오만한 개혁실험이 더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잘못된 개혁에 분노하고 원칙없는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양심세력,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 대장정의 선봉에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반드시 쟁취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1999. 11. 18.

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 위원장 채운석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 오상현

전국 회원조합 축협 노동조합 위원장 김의연

협동조합 결속통합, 명의도용 인터넷사기극
 김성훈 농림부장관 사퇴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민주노총과 전국사무금융노련, 축협중앙회노조 및 전국축협노조는 최근 농림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인터넷상 명의도용 도용하여 여론조작 사기극을 펼친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철저과 도덕성이 생명인 국가기관이 남의 이름을 훔쳐가면서까지 협동조합 통합전성 여론을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농림부 농·축협 통합법의 부당성과 위헌성, 그리고 축협의 개혁대안은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0월 18일 축협인터넷 홈페이지내에 '통합협협의 모든 것' 사이트와 여론광장을 개설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여론광장에는 10월 21일과 23일을 전후로 축협조합장 (윤기철, 김준수, 백영주, 송건섭)과 농민조합원(허찬권) 명의로 악의에 찬 축협비방 의견이 대거 올려졌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명의도용 사실과 진상확인을 요청해왔다.

축협장과 이들 다섯 사람의 발신처가 모두 동일한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이며 동일시기에 악언을 낸 농림부 협동조합과가 실명으로 송신했던 IP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 152.99.106.96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통합전성 의견의 84%에 해당하는 47건 전부가 동일 IP에서 송신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부가 조작적 명의 도용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과 반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후 부도덕한 협조행위를 저지른 것이 만연하여 드러난 것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농림부가 이 같은 협조행위를 저지러 놓고도 "축협이 농림부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소는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 개의 행정고속망 IP중 하나일 뿐, 우리와는 무관하다"며 믿도 되지 않는 계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관계자로부터 "문제의 IP번호는 농림부의 고유번호가 확실하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만약 농림부가 이를 또다시 부인할 경우 확보한 증거자료와 증언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당국에 증거보전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한 법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기를 쳐서라도' 상황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무능력과 정당성 없음은 드러내지 않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림부는 최근 축협에 대해 축산정책사업 자금지원 배제, 퇴직금처리 방역사업 추진에서 배제, 협동조합의 인사·조직·재산 등 본질적 경영활동에 대한 중립지시 등 이른바 '축협죽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농림부의 명의도용 인터넷 사기극에 대해서는 11월 18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3조, 314조)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309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축협의 개혁과 축산업 발전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농림부의 비이성적인 처사에 항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농림부에 대해 명의도용과 여론조작 사건의 관련자료를 색출해내 조사·처벌하고, 일 백만 축산농민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비이성적인 '축협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이번 사건의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농림부의 축협죽이기는 곧 이 나라 축산업의 포기임을 자각하고, 대응적 차원에서 축산업의 위기대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우리는 협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농·축협통합법에 대해 재논의하고 축협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축협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김성훈

1999년 11월 18일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련/축협중앙회노동조합/전국축협노동조합

성명서

- 농림부는 파렴치한 축협죽이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가 정기감사를 핑계삼아 11월 25일부터 12월6일까지 10일동안 축협 중앙회와 회원조합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개악된 농·축협 통합법안 반대'를 위한 전 축산노동자들의 제2차 투쟁을 저지하려는 비열한 행동이다. 우리 연맹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금년 3월 농·축산협동조합 통합을 발표할 즈음 몰아막친 사정한파를 기억하고 있다. 축협에 대한 감사발표와 비리수사를 통하여 마치 협동조합이 비리의 운상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직원들을 비도덕적이며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투쟁을 약화시키고 강제통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 감사도 11월 14일 노동자·민중대회를 통하여 전국의 5,000여 농·축산협동조합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우리 연맹의 지도하에 축산업사수와 축협 발전을 외치며 제2차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미 농림부는 개악법안인 강제적 농·축협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비열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 일부 일선조합장들이 통합을 찬성한다는 내용을 풀리더니 급기야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농림부직원이 축협조합원 행세를 하면서 이름을 도용하여 인터넷으로 통합반대투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권을 악용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협동조합 통합법은 협동조합의 근본인 자주성과 독자성을 부인하고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이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WTO 후속협상인 밀레니엄라운드와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에 대응할 수 없는 생존권과 축산업을 말살하는 악법이다.

이에 우리 연맹은 농림부가 자금지원 중단과 시정명령 및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어 축협을 압박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악법을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정부(농림부), 전농 및 축산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의한다. 만일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연맹은 민주노총과 함께 축산업 사수와 협동조합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1999. 11. 18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99 전국노동자대회」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대정부 요구사항

농협은 정부의 실험대상도 농정실패의 방패막이도 아니다.

지난 '81년 정부의 필요에 의해 농협을 축협과 분리했고 또다시 정부의 필요에 의해 통합하면서 정부는 농협의 근간을 휘젓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로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창립 이래 40여년간 농업인 및 고객과 호흡하며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농업인 조합원과 농협임직원들의 피과 땀으로 이룩한 농협을 지키기위하여 정권이 농협을 농단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농협은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인을 위한 민간단체이고 그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대내외에 강력히 천명한다.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설립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고 협동조합이 통합작업의 주체임을 확실히 인정하라.

- 정부는 더이상 농정실패의 책임을 협동조합에 뒤집어 씌우지 말고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기부채해결, 농산물유통기반 확충, 뉴라운드에 적극 대처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농업·농촌 살려내라.

- 통합을 빌미로한 어떠한 형태의 인위적 구조조정도 반대하며 협동조합 자율을 침해하는 조직·인사·급여의 외부용역 기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 탁상공론 행정의 표본인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초국적 자본의 국내농산물 유통시장 장악 음모에 철저히 대비하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이의 쟁취를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부주도의 일방적 통합작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통합설립위원회 불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금융노련,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9년 11월 21일

한국노총·금융노련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성명서 (2)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협동조합 통합의 주체는 협동조합이다. -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IMF 위기극복이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개혁임을 전 국민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농협은 자체구조조정을 통해 4,500여명의 직원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우리의 자체 구조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총체적인 농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 협동조합 개혁이 농정개혁의 전부인양 국민을 기만하고, 농심을 호도한 바 있다.

정부는 그 어느기관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무차별적 사정을 단행하여 농협을 순치시키고, 졸속적으로 농협법을 제정, 21세기 새천년에도 농협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파렴치한 음모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통합의 주체가 민간단체인 협동조합임을 선언하며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통합작업에 대한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뉴라운드 대처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제정 농협법은 중앙회 설립작업을 위해 법적기구들을 설치 운영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주체들의 의견과 정당한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채 몇몇 정부(농림부) 관료들의 주도로 법제정과 같은 졸속이 다시 자행되고 있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제정한 기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통합설립기구가 될 수 있도록 부당한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 금융노련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정부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농림부)는 설립사무국 명의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흘려 통합방향을 오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이를 경색한 월권행위로 규정, 이같은 비열한 언론 플레이가 지속된다면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와의 연대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장관퇴진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대 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 등 탁상공론식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

농협이 도마위에 오를 때마다 돈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이 항상 뒤따랐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사업 슬림화라는 허울좋은 말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할 당장 정갈로 중앙회를 신용사업만하는 이상한 형태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

일반 금융부문은 합병을 통한 규모의 거대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더니 농협의 경제사업은 슬림화시켜 경쟁력을 키운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초국적 거대자본이 금융은 물론 농산물유통까지 장악하려는 이때 농협의 경제사업을 해체하여 규모의 불경제를 초래하려는 작태는 우리의 신토불이 식탁을 위협 순수한 민족자본이 투입된 농협의 경제사업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이의 정취를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부주도의 일방적 통합작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통합설립위원회 불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금융노련,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9년 11월 21일

한국노총 · 금융노련 **농협중앙회노동조합**

號 日 報
11 月 27 日 星 期 五

중 앙 일 보
11 月 27 日 之 期

분 하 인 보
11월 23일

조작 실상을 밝히는 법

유령 섹터가

“인터넷 명의도용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자 누구인가!”

농림부의 명의도용 인터넷 사기극 및 무고비방을 밝힙니다

농림부, 합동조사단, 언론인, 네티즌, 국민여론, 인터넷, 사기극, 명의도용, 조작, 비방, 무고, 국민여론

합동조항의 획일적 통합에 반대하며 창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축협은 합동조합 통합법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알리고 축협의 개혁대안을 묻고자 지난 10월 18일 축협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농협법의 모든 것'이란 사이트의 여론광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광장에 10월 21일과 23일 전후로 축협조합장(윤기섭, 김준수, 박영주, 송건섭)과 농민조합원(하찬권) 명의로 독설과 악의에 찬 축협비방문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당시자들이 화들짝 놀라 즉시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진상과악을 요구했습니다. 확인결과 다섯분의 발신처가 동일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이며 동일시기 '농림부 합동조합법' 실행으로 송신했던 IP주소와 일치하는 152.33.106.98임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찬성 의견의 84%에 해당하는 47건 진부가 동일 IP에서 송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농림부는 통합반대여론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축산인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마치 축협 내부인들이 통합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러한 공작을 했습니다. 악감정으로 도배한 축협비방과 비논리적인 통합찬성이 관한 조작된 글 47건은 국민여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 사실을 알리고자 11월 18일 민주노총본부에서 민주노총·축협노조 합동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못했습니다(11월 17일자 조선일보, 11월 18일자 연합뉴스·노동인보에는 보도되었음). 여전히 무서운 압력이 우리주변 어딘가 존재하고 있지 못합니다. 축협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광고를 통해 진실을 밝힙니다. 축협중앙회 노조의 명의도용된 당시자들은 농림부의 명의도용 인터넷 사기극을 11월 18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처하였는바 여론조사 관련자의 색출, 처벌과 동시에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일찍이 축산농민과 국민앞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민주노총 · 전국사무금융노련 · 축협중앙회노조 · 전국축협노조

성명서 (3)

농림부는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을 철회하라!

- 협동조합 통합과 개혁의 주체는 협동조합 당사자임을 거듭 밝힌다.-

정부는 법률 제6018호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설립작업을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초법적 작태로 진행시키고 있다.

농협법 제9조 ①항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설립사무국(협동조합통합작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설립위원회의 보조기구임) 정의의 “협동조합개혁 기본구상(안)” 이라는 해괴한 자료를 만들어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한편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설명회를 하고 다니는 시대착오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기본구상(안)은 ①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방안 ② 통합중앙회 조직개편방안 ③ 인사·보수제도 개편방안 ④ 시행령 및 정관등 제정방향 ⑤ 회원조합 합병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그 내용을 전면 거부하며 이는 민간단체인 농협중앙회의 중대한 자율성 침해로 간주한다.

설립실무추진단과 설립위원회는 통합에 관한 실무작업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제역할을 다하고, 정부는 설립사무국을 농림부에서 실무작업추진단이 있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하고, 통합작업에서 손을 떼라.

2000.7.1 발족 예정인 농협중앙회는 신설이 아닌 협동조합중앙회간 통합임을 밝혀둔다.

- 농림부는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보장하라! -

국민과 농민의 혈세로 조달된 57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탁상행정으로 망쳐놓았던 농림부 일부 관료는 농업인을 위해 엄연한 역할을 하

며 40여년간 발전해온 협동조합의 실체를 인정치 않고 60년대 초반 행정우월주의를 바탕으로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정부주도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던 구시대의 작태를 재연하고 있다.

협동조합개혁의 일환인 협동조합중앙회간 통합은 용어에 상관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설이 아니며, 그 엄연한 실체가 있는 조직간의 통합이다.

그것은 상이한 조직간의 화학적 통합을 통한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에게 봉사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날 뿐이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농업정책을 망쳐놓아 농업과 농촌을 파괴화시킨 농림부 판료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의 재단에 의한 농협중앙회설립은 농업인의 재산인 농협을 수년내에 공중분해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조직 · 인사 · 급여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맞고 농림부는 더이상 관여치 말라 !

농협은 생산자단체로서 운동체적 성격과 사업을 통한 조합원 실익증대라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 정부가 관여치 않아도 농협중앙회는 경영을 통하여 수지를 맞추는 회계시스템을 갖고 있다.

경영이 어렵고 조합원에게 봉사하지 못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자연히 조직 인사 · 급여부문은 영향을 받게되고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킨다. 농협중앙회 설립은 신설이 아니고 실체가 있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협동조합간의 통합이므로 농림부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탈피하여 협동조합 중앙회간 통합에 조력자의 역할 이상을 하지 말라.

만약 이와같은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를 설립과정부터 주도, 또다시 정치적인 목적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농협중앙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도 그들의 하수인 정도로 삼으려 한다면 500만 농업인에 앞장서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1999년 11월 24일

한국노총 · 금융노련 농협중앙회노동조합

한국일보
11月21日

某日某日
11月21日

문화일보
11월 25일 3면

속합사람 시리즈①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미어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눈물이 지금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고 견뎌야 하는 국가적비
지금 원치않았 보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안업을 무너뜨리려는
계파각파의 공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결판이 0-157균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물을 정밀하게는 그들에게는
우리 국민이 눈뜨기 싫어 수려 없습니다.
속안업의 힘을 강경시키는 국법만 있어야한다면...

지금 우리의 속안업을 무너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더욱 견줄려고 힘을 쏟아주어야 할년에
오히려 지금 목숨 크고 있습니다.
속안업 진위를 위해 정부가 헌신적인 국법
지금의 임무는 바로 국법을 없애지 않습니다.
국법 무효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 무죄처하는 시대
속안업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이전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날에 속안업인을 인도해서
바다에 속안업의정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후에 행사에서 속안업의정장을 처치하고
속안업의정장인 삼박씨도 죽이는 일을 하여
속안업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으로 비열한 실정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속안 부관 지금도 속합을 부추기 않고
농민을 통해 지원하도록 바꾸어 했습니다.
속안업인들 권자처럼 속합 중립화장에서
농민부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직이제 지금 정부에서 속합을 써 버렸습니다.
돈권이라 속안부도 양민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의 정수까지 않는 농민들의 시대
속안업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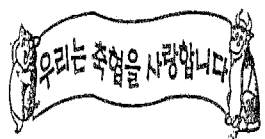
속합은 무조건 봉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합은 애인을 가지고 당국의 대항하기를 했습니다.
속안업의 발전을 위한 전정현 대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속안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대화를 하건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국민의 정부 없이 있습니다.
실용적 생활을 도모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의 필요로 많이 놓이려고만 합니다.
전국농민들의 생활총회에도 속합의정이 참석하면
국구총회의 농민부관들이 불참하게 됩니다
속합의정장을 제하셨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편을 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안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입니다.**

우리나라 속안업이 무너진다면
우리 소가 사라지고 우리 내지도 사라진다면
아쉬운 일이 많아져 달린 일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속안 자분들이 속안업 생업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필히 손을 할까 하여 비관하면
그 실적인 현상이 과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속합이 무너지면 속안업도 무너집니다.
지금 속안업을 지켜 가려는 속안업인들이
농민의 시간을 보려고 있습니다.
일이 약한 속합이어서 소도 제대로 내릴 못하고
이름의 세월을 보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주십시오. 소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말 결산과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 천년 새해 조합경영의 건전화와 조합원 이익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합장님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9년은 우리 농업계에 있어서, 그리고 농정 50년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소중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은 우리의 협동조합이 21세기 냉혹한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농협·농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조합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장님

새로운 협동조합법이 공포된지도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축협중앙회는 아직도 새 협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선축협과 축산농업인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어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바라는 많은 농업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 협동조합법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합헌이므로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으로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축협중앙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더라도, 통합법 역시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책임있는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축협중앙회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모든 국민이 협법소원을 내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법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축산농가와 축산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협중앙회의 이와 같은 자세는 축협중앙회 스스로 대한민국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에 있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협중앙회가 주장하듯이 내년 7.1일 이전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사건을 심리·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3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28만 조합원과 회원축협의 장래를 헌법소원결정에, 그것도 그 결과가 어떨지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축협중앙회의 자세인지 다시 한번 조합장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한 조직의 책임자나 경영진은 그 밑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원의 신분을 걱정해야 하고, 조직의 존립·발전도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축협중앙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내맡긴 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법현실을 무시하고 통합중앙회 설립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선량한 조합장님들의 뜻을 저버리는 태도를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조합장님

정부에게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법률을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중앙회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이미 통합법시행령 제정방향, 중앙회 경제사업 슬림화 방안, 통합중앙회 조직 및 인사 개편방안 등에 대해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설립위원회 등에서 토론의 기초 자료로 삼는 한편, 적극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선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관련하여 최소 조합원 수와 출자금 규모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12.1. 설립기획단, 12.4. 설립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인가기준, 조합원 자격 기준 등을 포함한 통합법 시행령(안)을 작성하여 12월말부터는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중에는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축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의견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축협의 장애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회원축협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중앙회가 누구를 위한 중앙회인지 되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장님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 논의과정에서 일부 서운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잠시 접어두고 새 천년 협동조합중앙회 출범에 기꺼이 동참·협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벌써 WTO차기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1년 쇠고기 수입 시장개방도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계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로 우리 농업을 지키고 축산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언제까지 명분없는 지리한 대결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조합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사려깊은 행동을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1999. 11. 29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사무국장 서 성 배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1. 30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제목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 새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2월 1일 설립기획단 회의, 12월 4일 설립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2월 중순부터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밟아 늦어도 2000년 2월말 공포를 목표로 추진 될 예정입니다.
- 설립사무국은 조합원수·출자금 등 조합설립인가기준과 조합원자격 등을 포함한 새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농·축·삼협 임직원과 조합원 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새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설립사무국 법령정비반으로 서면이나 전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설립사무국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종합청사 농림부내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사무국 (법령정비반)

설립사무국 전화·팩스 : ☎ 02)503-7254, 02)500-2636

Fax. 02) 504-9420

□ 참고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조합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중앙회의 회원조합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 운용 관리방법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납입요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동일인 대위변제의 범위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신용사업자금한도 등입니다. 끝.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2. 1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제목 : 조합설립인가기준 등 시행령 주요내용 집중 논의
- 12. 1일, 제4차 설립기획단 회의에서

-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은 12. 1일 제4차 회의에서 조합설립 인가기준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논의를 집약하였다.
 - 조합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조합 설립인가기준중 지역조합의 조합원수는, 농가수 감소추세를 고려해서 현행 1000명 수준을 유지하되, 대도시·산간·오지 조합 등에 대한 하한예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출자금은 일선조합을 경제사업 위주로 육성하고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유예기간 최장 3년 인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집약되었다.
 -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도 협동조합원칙과 농업인의 자율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조합상임이사는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농업관련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10년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경력자로 하고, 상임이사가 된 이후에는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그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중앙회 사업전담 대표이사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회의 농업·축산경제 및 신용사업부문, 농업·금융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 하였다.
 - 회원조합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신설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하였다.
 - 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은 시행령에서는 분기말 평균잔액의 15/10,000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하고, 시행규칙에서는 5/10,000로 하였다.
 -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범위에 주식형수익증권을 포함하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명문화하고,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신용사업 자금한도를 확대하는 등 조합의 신용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 농림부에서는 이번 제4차 설립기획단 회의에서 논의된 시행령 주요내용이 12. 4일 제4차 설립위원회에서 최종확정 되는대로 시행령(안)을 성안하여, 12월중순에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끝.

성명서

농림부의 비도덕적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 사이버 공간에서 축산인 이름을 도용한 여론 왜곡 -

- 농림부는 사이버공간(축협 홈페이지)에서 축산인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독설과 악의적으로 '축협'을 비방하고 혼란시키는 의견을 개진하는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 이름이 도용된 축산인은 축협조합장 4명(윤기섭, 김준수, 백영주, 송건섭)과 축산농민 1명(허찬권), 모두 5명입니다.
- 이 사실은 본인 당사자의 진상파악 요구에 의해 밝혀진 사실로 축협 비방 문건의 발신처가 모두 동일한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며 동일시기 사이버공간에서 실명으로 의견을 낸 농림부의 IP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또한 명의도용은 아니지만 불특정 명의의 통합찬성 문건중 84%에 해당하는 46건이 동일 IP에서 송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이 아니라 오직 보여주기식 개혁으로 강행된 '농·축협 강제통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등 비도덕적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일부 통합주체 공적자들의 공명심, 자만, 권위주의와 국민기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지난 11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림부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도덕성 회복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에서 분명 취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유인지 대부분 언론에서 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농림부는 언론의 무관심에 자신을 얻은 듯, 명확한 증거자료에 의한 분명한 사실자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보다는 비도덕적인 거짓과 적반하장격 태도로 진실을 호도하는등 당사자와 축협, 그리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사건이 폭로되자

△ '이번 이름도용사건은 우리와 무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와 협동조합 설립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협이 농림부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소는 정부 각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 개의 행정고속망 IP중 하나일뿐'
(조선일보 11.17)

이라고 사실자체를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 '농협법이 통과된 마당에 농림부 공무원들이 굳이 이름을 도용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 '해당부서에 농협등으로부터 직원들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연합뉴스 11.18)
'운운하며 난데없는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 '누가 했는지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전적으로 우리가 했다고는 단정지을수 없다'
(YTN 11.22)

고 좌충우돌하다가,

△ 결국 농림부는 진실을 은폐할 수 없음을 깨닫고, 11월 20일 '축협인터넷상의 의견제시 경위'라는 문건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게재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러나 농림부는 이 문건에서도

‘설립사무국 소속직원이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것’

‘특정인의 소속, 직함을 표시하지 않아 명의도용 등으로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 조합장들’이라고 표현하여 도용한 명의가 축협조합장의 이름임을 사전에 인지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작성자 가명의 일부가 축협조합장들의 이름과 ‘우연히 일치’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 대해 유감’ 등등

사과는 커녕 이 사건 자체를 작은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축소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근 ‘웃로비사건’을 보면 국민들은 도덕적이어야 할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거짓과 공작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정부기관인 농림부가 비도덕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국민의 정부와 대통령께 누를 끼친것에 대하여 그 일차적인 법적·도의적 책임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명백한 공개사과 및 그에 따른 즉각적인 사퇴와 관련자를 색출·엄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바탕으로 농림부의 일부 오만한 공직자의 국민기만적 행태의 상징인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제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민주노총 / 사무금융연맹 / 전국축협노동조합 / 축협중앙회노동조합

國民日報
1972年7月25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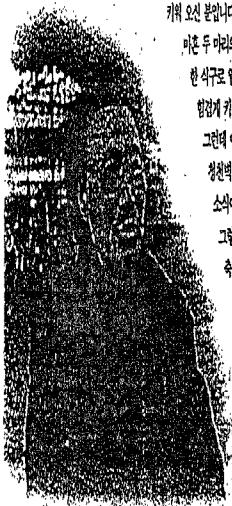
朝鮮日報
1972年7月25日

한겨레신문
1972年7月25日

축신사랑 시리즈②

이 할머니의 눈물, 그 의미를 아십니까?

농림부장관은 이 할머니를 꼭 고소해야만 했나요?



67세의 윤계영 할머니 경북 구미에서
23년동안 오직 찻소만을
키워 오신 분입니다.
마흔 두 마리의 찻소들을
한 식구로 알고 혼자 몸으로
함께 기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정신적같은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화지했던
축협이 사라진다...

정부가 어떤 말도 변명을 해도
오직 찻소만을 키웠던 이 할머니는
농림부의 속임을 더 알지.
그래서 축신인들이 모인 집회에서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펴버렸습니다.

축신임을 살라하고 만들었던 축협을
왜 없애려고 단노?
국인의 정부, 고된 수가 있노?
거짓말하는 2인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노?
농림부장관은 뭐하는 사람이냐?

할머니가 무슨 정치 욕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명예욕이 있었습니까?
단지 삶의 타선이 무차관이라도 모른다는
결박감에 또 불안정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말지 못할 농림부를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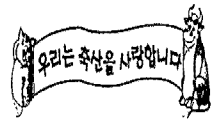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윤 할머니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신문에 나타난 기사들을 외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농림부장관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는 것입니다.
67세의 할머니를, 그것도 홀로 사는 할머니를...

윤계영 할머니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찻소기우는 일을 천적으로 알았던 이 할머니를
농림부장관이 전화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꼭 이겨내야 할까요? 꼭 고소해서 불공정을 해야 할까요?

어찌 윤계영 할머니였습니까?
농림부장관이 고소한 축신인들이 한 분이 아닙니다.
나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많았던 국민의 정부에서 말입니다.
축신 농민을 차고 모호해 주어야 할
농림부에 의해서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 겁니까?
힘이 있다고 물어 붙어 가면 해면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무조건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안됩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작업을
이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농림부의 행태!
축산업의 화기 불고기는 농림부의 오만과 관료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소외시켜 주어야 할 겁니다.
축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우리의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윤계영 할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깨어나도록,
지금 힘을 주십시오. 격려를 보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 강제 통합인가?

통합의 피해자는 농축산인과 국민 여러분입니다

농·축협 직원들은 당당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 ▶ 협동조합은 농축산인들이 출자하여 만든 순수민간단체로서 자주, 자립을 목표로 세운 사업인입니다.
- ▶ 협동조합은 농촌형성의 기술지도에서부터 가금, 유류, 판매까지 농축산인의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인의 발전과 권익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당당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 강제통합인가?

- ▶ 42조원이 투입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비롯 농촌의 농정 개혁에 대한 여론 호도와 책임회피를 개척할 뿐입니다.
- ▶ 자주·자립단위의 강제통합은 정부의 장악력 강화를 위한 권력의 필요일 뿐입니다.
- ▶ 생산자 단체와 이있는 농축산물 수출 강대국과 한국시장 공략을 도모할 뿐입니다.

이제 농림부 관료들의 구대의연한 사고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농정개혁은, 저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이러면, 동참하여 주십시오.

- ▶ WTO 뉴리웃드는 외국 농·축산품의 한국시장 장악으로 우리의 농촌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 ▶ 다이옥신, O-157, 유전자 조작, 호르몬, 항우울 등으로 범국민 외국 농·축산품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할 것입니다.
- ▶ 국민건강과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농촌은 지켜져야 합니다.
- ▶ 거대자본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무장한 외국 농·축산품이 있어서일 우리나라 농촌으로서의 입생불(농업, 축산업)로 사본화, 전멸화시켜 영생력을 관해해 나가는 것이야 대안일 뿐입니다.

농촌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질수록 피해해지는 농촌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협동조합 강제통합 철폐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농축산인의 실질적 권익보장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식인과 시민단체들도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축협이여 농협직원도 반대
통합 협동조합 출범 '철폐'**

불안한 농축고기 0-157

**“고수면 할계 방 반대
장관패션 임장마켰나”**

“10년안에 농산물 생산 35% 줄것”

한우·수산물등
기반 붕괴 우려

전국농협노조/축협중앙회노조/전국축협노조

世界日報	서울經濟新聞	每日經濟新聞
12月10日2面	12月10日2面	12月10日2面
東亞新聞	東亞日報	중앙일보
12月10日2面	12月10日3面	12月10日3面
대한매일	朝鮮日報	한국일보
12月10日3面	12月10日4面	12月10日3面
한겨레신문	國民日報	
12月10日4面	12月10日2面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한국인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소중한 일을 시작하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고향 농촌과 100만 축산농민의 생업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자대선, O-157, 부수병과 같은 위험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국 거대기업들의 기업합병속에 중장년층의
취직을 돕고 있는 우리 축산농민 지킴이 사업하는 일,
바로 이 일을 시작하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국민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일을 축산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았습니다.
그동안 축산농민들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WTO(와이드 월드 트레이드) 협상에서
축산물 개방을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농가부채, 협동조합 통합 문제 등으로
농민은 극도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짐을 우리 시민들이 나누어 져야 할 때입니다.

우선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분이 있으면서 우선 서주세요.
축산농민과 축산농민들에게 힘과 힘을 주세요.

인연한 여가지를 알았는 소까지로써,
우리의 생명과 건강,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랑같은
시민으로서 이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이 소중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좋은 것을 값을 가져다, 또 누군가의 아이를 낳아다기에도
축산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를 만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그 경쟁력 사람은 우리나라 축산농민과 축산농민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 전국민이
생명과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 | | | | | |
|---|--|---------------------------------------|----------------------------------|---|
| 공동대표 김동진(경기) 김병덕(한국기독교농업연맹총연합회, 전 전국대표)
대표 김태진(국회농림수산위원회) 손오철(서울대학교) 신교일(국회) | 김승희(전 교육부장관, 이사장)김재우(국회)
이복룡(전 수협중앙회장, 전 농림부장관) | 김진홍(국회, 부지부장)주동세(국회)
장기표(서울대 명예교수) | 김현옥(서울대 교수)
정광문(전국농민협동조합총연합회) | 단원호(전국농민노동조합총연합회) 류재홍(전국기독교농업연맹총연합회)
황서영(전국기독교농민노동조합총연합회) 황영규(한국기독교농민노동조합총연합회) |
|---|--|---------------------------------------|----------------------------------|---|

문의: 축산농민 지킴이 사업(02)2224-8171~7, FAX: (02)2224-8178

京 郷 新 聞
12月9日入面

東 洋 日 報
12月9日 943/面

문 화 일 보
12月9日 >面

협동조합 중앙회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농·축·임산업으로 흩어져 있는 농업분야의 협동조합 중앙회는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 ① 15만 농업인구가 대표집중되어 100%를 넘는 농업인의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30%인 협동조합 중앙회는 하나이던 중앙회가 농·축·임·임산업의 대가로 늘어나 있습니다.
- ② 지금 추진중인 협동조합의 통합은 회원조합이 존속되고 중앙회만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강한 회원 조합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내년 7월 1일 새롭게 태어나는 통합농협 중앙회는 농업인과 국민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① 농협은 개혁을 바라는 대내외의 여망에 부응하고 3개 협동조합중앙회의 중박기능을 통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 주겠다는 신념으로 세종일관 통합을 지지해왔으며 그 결과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 ② 농협은 새 법률의 모든 내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조치으로 거듭나기 위한·충경으로 중앙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1일 반쪽되는 새로운 통합중앙회가 새천년의 농업·농촌을 버려져 이끌어 갈 능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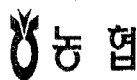
■ 지금 이 순간도 통합농협중앙회의 설립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① 지난 6월 7일 법률이 공포된 이후 통합중앙회 설립을 위한 공식기구로 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설립기확단·선임사무국, 설립사무추진단이 설치되어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심의하는 등 통합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온 국민이 우리농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WTO협상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 ① 농업을 걱정 하시는 국민여러분!
세계는 지금 각나라의 이익보호를 위해 뉴라운드 WTO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농업인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식량안보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 ② 지금은 농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이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세계의 NGO와도 적극적인 협력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조직인 협동조합은 WTO협상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이제 통합의 대열에 합류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역류할 수 없는 개혁의 대세인 협동조합 통합을 통해 자율성이 보장된 당당한 농업인의 협동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통합과정에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는 설립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당할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업인의 자율조직을 정부가 일방적인 통함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50만 농업인과 농협의 임직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픔이 있더라도 내일의 농업·농촌을 위해 농협은 새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오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서명서 ■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시민연대(협개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 : 523-8601, 전송 : 523-8603)

축협중앙회는 공개사과하고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조직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여 중앙회 통합을 차질없이 수행하라 -

우리는 축협중앙회가 12월 9일 오전 11시를 기해 중앙회 및 각 도지회별로 축협조합장과 간부진을 동원한 교육을 일제히 실시하고 중앙회 통합저지를 위한 3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려는 기도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날 실시한 교육교재에 갖가지 거짓선전과 악의에 찬 내용을 포함시켜 협개연을 관변단체로 비난하고 축협을 음모 왜곡 헐박하였다고 억지주장을 늘어놓는가 하면 정부가 협개연을 급조하여 정부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모함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축협중앙회의 과오나 협동조합 개혁본질은 외면한채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축협중앙회의 행위는 이제 그 도를 넘어 극에 달한 느낌이다.

WTO 협상재개로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에 앞장서온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우리농업지키기에 몰두하여 국내와 시애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 축협중앙회가 불법적 계획이나 구상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여 국면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발상만 해왔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이제 우리는 더이상 침묵으로 자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축협중앙회는 사실무근의 거짓선전으로 협개연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 국민앞에 즉각 공개사과하고 서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당연하고 분명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우리는 즉각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이 농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함을 국민의 이름으로 확인시켜 줄 것이다.

둘째, 진통을 겪기는 하였지만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새 협동조합법이

엄연히 뒷받침하므로 정부는 차질없이 3개 중앙회를 통합하고, 조직이기주의의 반
 대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줄것을 요청한다. 이미 법이 제정되었고 농민조합원을 위
 해 추진되는 개혁이 농민실익이 있도록 특히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민의 이익이
 가시화되도록 농축협중앙회 통합 및 협동조합 후속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
 을 밝혀 둔다.

1999년 12월 10일

협동조합 개혁 추진 범농업인 · 시민연대

■ 상임대표 : 경실련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 권광식,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박순화,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박병국,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정장섭, 전국새농민회 회장 류광열, 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한수웅,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남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황창주, 흥사단농업개혁위원
 회 위원장 장원석

■ 공동대표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 낙농진흥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
 합회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
 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온실산업협회 산림유기자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자연농업감귤연
 구회 자연농업단감연구회 자연농업딸기연구회 자연농업배연구회 자연농업복숭아회 자연농
 업사과연구회 자연농업양계연구회 자연농업양돈연구회 자연농업연구협의회의 자연농업포도연
 구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태평
 농법회 한국가축인공수정시험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과수모목협회 한국과수협회 한
 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한국농산물산지유통센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
 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4-H
 중앙연합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양륙협회 한국양봉협회 한
 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
 계협회 한국포도회 협동조합개혁연구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농업
 개혁위원회 강릉대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강원대농업최고경영자과정학생회 경북대최
 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경상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공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순천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학생회 진주산업대최고영농자과정학생회 충북대농업전문인최고경
 영자과정학생회

朝鮮日報
12月23日 4面

한겨레신문
12月23日 1面

國民日報
12月23日 2面

축산사랑 시리즈(35)

'축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렵지만 소중한 축산을 살리는 이 일에 국민 여러분이 동참하여 주십시오

**지금 축산업의 기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축산
학과 함께 농촌경제를 지탱했던
2대 기간 품목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산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UR, WTO 1차 협상에도
축산업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WTO 뉴리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이미 거의 완전 개방되었으며
쇠고기마저도 2000년이면 완전 개방됩니다.
우리의 식탁이 지금 송두리째
차국 거래처리의 수중에 들어가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축산을 무시하는 농림부의 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무의 위급의 사정까지도 알지 못하더라도
헛과 축산 어느 한쪽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100만 축산농민의 생업이자 혈연 생명지킴이 축산.
저만 김라드가 식육보다도 더 큰 품목인 축산.
인타개은 것은 광우의 축산정책과
기방할상에 일하는 자제가 그로서 못하느라 있습니다.
더욱 더 전문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축산
그런데 농림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쥐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미음 속 외에 우리의 축산농민들을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결론 때문에 일리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축산'**

저들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축산우고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실
이러지않은 어르신들을 생각합니다.
손들이지 거함어린 수많은 아이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축산이 살아야 발전하...
고향의 어머님, 아예남들이
미음 편하게 농사일을 수 있어야 발전하...
지금 우리의 마음의 편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라도 먼저 소리쳐야
장차 정산처럼 것 같아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우병, 다제약인, O-157
남양, 효모독에 구어, 유전자 조작...
알도 많고 알도 많은 수입 축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은 지키기위해
우리의 막걸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자손들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은
이러한 숙고는 본들이 참여하는
건강한 시민의 모임입니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십시오.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 대표 고두심(신부)

김병태(사립대학교) 한국사학계발전사업추진위원회, 전 전국대학교수
손호철(사립대학교수·인교협 회장)

김숙희(전 교육부장관, 이사이사장학회회장) 이덕룡(전 수경농장장, 전농농장장학회)

김진홍(부사, 부이사장 공동대표) 장기표(신원계 정계연구회장)

김현욱(서울대 교수) 정광준(전국농민총연맹회장)

단병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황세웅(신부·수교로 평화구분이사)

류재철(전국대 교수·축산경제학회 회장) 황영규(전국축산경제학회 회장)

회원가입과 회계 회과 격리물 주는 전화번호 : (02)475-9232-6, FAX : (02)477-5832

중앙일보
1982年11月1日

京報新聞
1982年11月1日

참으로 부끄러운 거짓말! 국민의 정부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농민부가 자지를 시어버림죄

수많은 농민조합 통합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 일각에서 이를 재검토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죄에 어느 날 갑자기 수탈 조항이 새 문화 조항인 한 문장 이상으로 수탈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빙각 당사자들은 그러한 글은 전혀 유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엄청난 오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눈을 뜨는 정부 당국자들이, 그것도 수산농민을 보호해 주어야 할 농민부직원들이 수탈조항상의 이의를 도출해 의견을 올린 것이 아니라서 밝혀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합동조합 통합을 신장한다는 글들의 의미가 농민부에서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축협노조는 극히 농민부의 공여 시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농민부는 침묵하는 자세로 무인하다 하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축협 노조에서 증거를 제시하자, 농민부 직원이 아닌 농민 의견인 농민부, 영등촌 시인들에게 답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실이 묻지 않게 되자, 정부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명에서조차 축협 조합장들의 이름을 도출한 부분에서 대해서는 원인이 일자로 있음을 밝히고 변명만 해왔습니다. 정부정책 수신을 위해서라면, 공여 조항, 인위적 조항의 도출을 해도 된다는 도대체 정권기, 전문적인 도출을 조항 시켜야 하는 농민부, 거짓말만 하는 농민부, 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농민부정권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농민부직원들의 이러한 거짓말은 정치의 거짓말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8년 새 3월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보고에서도 합동조합 통합에 대해 고든 시민단체의 농민단체, 다른 합동조합들을 인정하는데도 오직 수탈만이 반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 총연맹도 반격하고, 정권의 자관기관인 농민연맹내에서부터도 통합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의 KBS정세연세에서도 농민부장관은 김명수에게 합동조합이 아무 것도 안 한 것이다 고 발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축협 연두순례에서는 김명수 국무 총리에 축협이 선도했다면서, 이렇지만 어떤 누가 통합하려고 했느냐고 까지 했습니다.

농민부장관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표본까지도 조작한 농민부장관으로 하여, 8도만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하는 농민부장관, 정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여론조사의 발표도용도 서슴치 않는 농민부,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농민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른 정책에서도 속을 뜨게 만드는 것으로 여러같은 것을 농민부장관의 농민부치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심지어 자신이 보고하고 지어 주어야 할, 수산 농민까지도 서슴치 않고 감춰고 있다며는 농민부 직원, 선의라는 국민의 정부를 위해서, 도덕성이 살아있는 국민의 정부를 위해서, 이런 감정을 농민부장관 스스로가, 저의를 정해야 할 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민을 쳐다보는
전국축협노동조합 · 축협중앙회노동조합

국민 여론에 합의를 채 주십시오
농민부장관실 : (02) 503-7201-2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1999. 12. 27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제목 : “축협의 통합기구 불참은 위법·부당”, 행정심판위 의결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축협 총회 및 이사회의 설립위원회 참여 유보결정은 농·축협 중앙회를 통합하기 위한 새 농협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위법·부당한 의결이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한 농림부장관의 명령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의결하고, 최근 축협중앙회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축협총회 의결사항 취소명령’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농림부는 축협이 지난 9월 17일 이사회와 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9월 22일 축협법 제137조에 의거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축협은 농림부의 취소명령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농림부로 보내 온 위원회 의결서 일부를 원문대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 99-6364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회 및 총회의결사항취소명령 처분취소청구> ………

(2) 살피건대, 신 농협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9. 9. 7 시행된 동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설립위원회가 종전의 축협중앙회, 종전의 농협

중앙회 등에 대한 해산과 새로운 농협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설립위원회에는 종전의 축협중앙회·농협중앙회 등의 임·직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 농협법에 의하여 2000. 7. 1 종전의 축협중앙회, 종전의 농협중앙회 등이 해산되고 새로운 농협중앙회가 신설되므로, 청구인은 그 이전에 통합대상인 청구인의 임·직원중에서 설립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고 실무직원을 파견하는 등 신 농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설립위원회의 참여를 유보하기로 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임·직원은 실제로 설립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와 같은 의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현재 활동을 시작한 설립위원회의 업무에 일체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 농협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이사회 및 총회의결은 위법·부당한 의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회 및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축협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여 백

2000년

**협동조합개혁관련
발표 자료**



여 백

(우리나라 농정실태를 고발하는 성명서)

수입 쇠고기를 관측하고 농민인 68세 할머니를 고발하는 김성훈 농림부장관

지난해 집회에서 농정실태를 질책한 68세 할머니를 고발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또다시 국내산 쇠고기보다는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는 공식문서(축통 51550-555 '99년12월 9일)를 대형유통점과 전국 슈퍼체인협회등에 발송해 이나라 축산농민들을 다시 한번 분노케 하였다. 이에 우리 축협노동조합은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농림부가 축산농민과 소비자들을 사지로 밀어넣는 작금의 농정 현실에 경악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태는 입으로는 농촌을 위하는 대책을 쏟아내면서 뒤로는 농촌을 죽이는 이율배반적인 농림부의 행동이 오늘날 파멸해진 농촌을 만든 원인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농촌대책은 총선용 구호이며 김성훈 농정의 실상은 농촌 말살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농촌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전하며 협동조합 강제통합도 농촌을 위한 대책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농촌과 축산농민을 죽이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내놓은 대책이 총선용 사탕발림식 구호이며 협동조합 강제통합도 농촌말살 정책의 하나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다이옥신, O-157, 살균, 성장호르몬등으로 오염된 수입쇠고기 판매 권장은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몰염치한 행동일 것이다.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이요, 가격이 내리면 모른척하는 그류안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쇠고기 판매협동까지 나서는 정부는 「수입쇠고기 정부」요, 농림부장관은 「수입쇠고기 관측 장관」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축산업 말살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총력 투쟁할 것이다.

우리 4천여 축협노동자는 일백만 축산농민과 더불어 축산업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부에 맞서 불금의 투지로 총력투쟁해 나갈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 김대중 대통령은 진정으로 농촌희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국적불명의 농정으로 이 나라 농촌을 파탄시킨 김성훈 농림부장관을 즉각 교체하라.
- 정부는 이 나라 축산농민을 다 죽이는 외국인 쇠고기 사용을 권장한 이번 행위를 일백만 축산 농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 협동조합 강제통합법을 즉시 철폐하라.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 전국축협 노동조합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 식 지

- 발행인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 발행일 : 2000. 1. 12
- 전화번호 : 503-7253~4 팩스: 504-9420

제목 : **“농·축협중앙회 통합, 예정대로 7월 1일까지 끝내겠다”**
- 김대통령, 12일 농림해양수산단체인사 초청 오찬서 밝혀

- 김대중 대통령은 1월 12일, 일선 농축협 조합장 등 농림해양수산단체 인사들과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농축협중앙회 통합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반드시 법대로 2000년 7월 1일까지 끝내겠다”고 밝힘으로써 협동조합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농림해양수산단체 대표와 농정담당자 192명이 참석한 이날 오찬에서 대통령은, 태풍과 홍수에도 불구하고 풍작을 거둔 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작업과 농업재해보험 도입, 직접지불제 실시방안, 신지식농업인 육성 등 농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실천의지를 밝혔습니다.
- 다음은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이 밝힌 농정현안에 대한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衣食住중 食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잦은 수해와 극심한 태풍에도 불구하고 풍년농사를 이루어낸 농어민들에게 감사드리고, IMF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애써온 농어민들의 노고를 치하 드림
- 농축협중앙회 통합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반드시 법대로 2000년 7월 1일까지 끝내겠음

- 농어가 소득안정 목표를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두겠음
- 농업재해보험을 조기에 도입하고, 직접지불제 실시방안을 금년중에 확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관련법률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 농민이 제값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직거래와 도매시장 확충, 가격안정, 과수·채소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유통명령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으며, 협동조합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신지식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수출농업을 적극 지원하겠음. 일본의 100억불 농산물시장을 최대한 단시일내에 개척해 나가겠음
- 세계속의 농민으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

협동조합개혁, 일선조합과 농업인을 위한 것입니다.

500만 농업인과 농업인·시민단체는 협동조합이 「임직원의 조합」이 아닌 「조합원 즉 농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인 '98년 4월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이망에 따라 각계대표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는 4개월동안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개안을 건의했습니다.
- 정부는 농·축·인삼 및 임협중앙회장에게 '98년 7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자율합의하에 자체 공동개혁안을 마련토록 요청했으나, '99년 2월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렬선언함에 따라 부득이 정부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정부는 시안에 대해 200여 차례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일선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안을 확정했으며, 국회에서 수정통과된 법률을 '99.9.7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법한 것입니다.**

이번 협동조합개혁은 일선조합을 전문화하고 규모화하여 유통·경제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농·축·삼협중앙회는 유사중복기능을 줄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일선 농·축·삼협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 농·축·삼협은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조합원은 같은 농업인이면서도 중앙회가 4개로 분리되어 있고, 일선조합은 아주 취약한데도 중앙회 조직이 비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약 2만명의 임직원이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고비용·저효율의 체제로는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 임업협동조합은 실제 기능이 정부사업 대행위주로 되어 있어 산림조합으로 개편합니다. 농·축·삼협중앙회는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여 기획·홍보 등 유사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일부 사업장도 회원조합에 이관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합니다.
-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의의원들은 축협의 주장중 「3개 중앙회의 통합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 했습니다. 축산경제대표이사도 축협조합장들이 받고 경영·인사의 독립성은 물론 현 축협 중앙회의 재산도 축산경제 대표이사 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현재의 일선 농·축·인삼조합을 더욱 튼튼히 하고, 산지유통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개혁되면 쌀농가와 한우농가에게 농약·비료·사료를 지금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고, 상호금융대출이자도 한자리수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 오는 7월 1일이면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통합중앙회가 발족합니다. 금년 1월 12일 대통령께서는 농림해양수산인 오찬간담회에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은 오는 7월1일 법대로 차질없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 말씀하셨습니다.
-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새 협동조합법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통합작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협중앙회가 계속하여 중앙회 통합과정에 반발하면 전산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일선 축협과 축산농가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법률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다르다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대다수 선의의 국민과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한 태도입니다. 일부 임직원의 발그릇만 생각하는 조직이 민주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 **축협중앙회는 통합작업에 참여하여 양축농가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농림부 협동조합중앙회설립사무국(TEL:02-503-7274, FAX:504-9420) www.maf.go.kr

축협의 주장 . . . 사실과 다릅니다.

한우는 쌀과 함께 우리 농업인의 주 소득원이고 민족산업이므로 정부는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한우산업발전대책을 추진하고 투자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 ✓ '93년 WTO출범이후 개방폭이 점차 확대되고 오는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육산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4조 5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한우산업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99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 한우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3회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에 대해 『다산우(多産牛)장려금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한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우수한 한우생산기반도 구축할 것입니다.
- ✓ 한우고기의 소비기반 확대와 경쟁력향상을 위해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지원하고,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쇠고기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WTO협정에 따라 수입량이 계속 증가되고 관세율도 매년 0.1%씩 인하되는 등 개방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수입물량제한이 없어지고 관세가 0.4% 추가 인하되더라도 지난 3년간 수입쿼타가 미소진되어 왔고, 수입쇠고기의 재고가 많이 쌓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변화가 없을 전망이므로 농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수입관세(수입쿼타당) :('99)42.0%(206천톤)→(2000)41.6(225)→(2001)41.2(물량제한없이 관세만 0.1%인하)

⇒ 정부는 21세기 우리 한우산업을 경쟁력있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우사육두수가 계속 줄어들면 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소값이 오르자 암소도축이 늘어나 한우사육두수가 200만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우 씨가 마를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 지난해 12. 9일 한국수퍼체인협회와 교육부등에 보낸 "설 성수기대비 수입쇠고기 비축 및 학교급식에 수입 쇠고기 사용확대요청"공문도 한우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한우산업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 과장의 고뇌에 찬 교육지책이었습니다.
-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단체나 한우농가들과의 사전협의나 농림부내에서의 공문화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담당과장이 전격로 처리한 사실을 한 달이 지난 다음 축협의 공격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농림부는 전국의 한우농가와 시민 여러분께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과드렸습니다.
- ✓ 구체적으로 농림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담당자들이 한우협회와 축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공식으로 해명하였으며, 한국수퍼체인협회와 교육부 등에도 동공문의 시행을 취소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당시 담당과장을 중징계(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한우산업육성의지를 한층 공고히 다져 우리 한우 지키기에 더욱 분발 하겠습니다.

축협중앙회는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는 집회나 시위, 비방광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협동조합 개혁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써먹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 ✓ 축협중앙회는 지난 '93년부터 자회사인 축협유통과 함께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 ✓ 축협중앙회는 민간용 수입쇠고기 쿼타의 20% 수준을 수입·판매하고, 또한 수입조질용 수입쇠고기에 대한 보관·판매위탁 사업 등을 하여 지금까지 남긴 약 1,900억원의 막대한 이익금으로 인건비등의 절감 등에 충당해 온 사실에 비추어 수입쇠고기 문제를 쟁점화할 자격이 없습니다.

... 축협중앙회는 정부의 한우지키기와 축산농가지원 및 WTO개기협상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 축산정책과(41102-502421) FAX: 502-550 www.maf.go.kr

“축협 정치세력화” 발언 파문

신구범회장, 통합법 반대정치 세력과 연대 밝혀
“조직이기주의 급급한...” 농림부 비난에 정면도전

신구범축협중앙회장은 협동조합 통합법에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연대해 축협을 정치 세력화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9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축협경기지도회를 방문한 신회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협동조합 통합법에 대해 축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치집단이나 세력과 정책 연대를 펼칠 계획이며 오는 17일 축협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회장은 또 “어떤 총선을 축협 입장에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며 “각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내놓은 농·축협 통합법에 관련된 총선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농림부는 협동조합을 통합하는 입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축협을 조직이기주의에 급급한 일부 왜곡된 저항’이라고 표현한 광고를 전산망 조사 직전에 내보낸 것은 파업유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농림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협동조합 통합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언제든지 따를 것이며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통합법 시행 이전에 빨리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통합 일정에 대해 신 회

장은 “축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전까지 모든 통합 과정에 불참한 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축협 직원들도 합쳐서는 조직과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나섰으나 이제는 원형과 정의를 위해 대처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축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축협 전산망 기초 조사작업 이틀째인 9일 “농림부의 현지실사를 축협에 대한 침탈로 규정하며 전면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농림부가 축협노조의 정당하고 이유있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축산사수, 민주사수, 정의사수, 협동조합 사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농림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근호기자 gijung@kgb.co.kr

축협강원도지회 방문 慎久範 축협중앙회장

慎久範 축협중앙회장이 8일 오후 축협 강원도지회를 방문. 정 부의 농축협 강제통합에 대한 반대방향을 재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축협 강제통합에 축협과 입장을 같이하는 정당이 나 정치인과는 ‘정책적인 연대’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축협의 정치 세력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농축협 강제통합 반대... 정치세력화 시사

慎회장은 최근들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등이 벌이고 있는 낙선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볼때 축협의 정치 세력화는 충분한 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축협 부실화 논란을 겨냥, 지난해 축협은 경제의 신용사업에서 각각 448억원과 241억원의 수익을 내 이 가운데 지도사업에 482억원을 투자한 결과 99년도 한해동안 모두 207억원 규모의 흑자를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慎회장은 이와함께 축협 시도

지회 조직을 최근 확장했다고 설명하고 이는 신규인력의 증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중앙회 인력 89명을 지방에 재배치, 회원 축협 지원사업과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그 배경을 말했다.

그는 강원도내 회원축협은 지난해 결산결과 22개 조합 가운데 10개 조합이 흑자를 내고 나머지



조합은 적자를 냈으나 이는 사업 부실이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慎회장은 “이는 새로운 금융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퇴직금·여충당금 등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합 자산은 오히려 건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회원조합 지원사업을 앞으로 확장하는 한편 “현우생산 안정기반 특별법”을 제정해 생산기반이 붕괴된 한우사육기반 되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慎회장은 이와 별도로 8일부터 농축협 통합을 앞두고 착수된 농림부의 축협 실사에 응하겠지만 회원축협을 비롯한 축협조직이 농축협 통합에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慎久範 축협중앙회장은 이날 도내 회원축협 관계자와 축산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인계 현안 등을 놓고 간담회를 가진 후 도내 22개 회원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金秉陸 축협 강원도지회장의 2000년도 업무 보고를 들었다.

南정림로 cometsp@kado.net

"축산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말 조직된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과 뜻을 같이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있다면 제16대 총선에서 정책연대로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12일 축협중앙회 충남도지회를 연두 순시한 愼久範 축협 중앙회장은 "축산인들을 대변해줄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가 있다면 축사모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정책연대를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모, 4월총선 정책연대 모색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인터뷰

-최근 협동조합 통합법과 관련, 축협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놓고 있는데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

"축협에서는 협동조합 통합법이 합헌이든 위헌이든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것입니다. 축협이 무조건 농축협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통합법안은 사법인에 대한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어민의 자주적 조직, 활동보장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따를수 없는 것입니다. 축협은 조직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아닌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지난해 조직된 축사모의 진로는

"축사모가 지난해말 조직된 것은 농촌경제의 기동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현재 3백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인 회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축사모 3백만회원은 국내 최대 NGO(비정부기구)로 축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농림부가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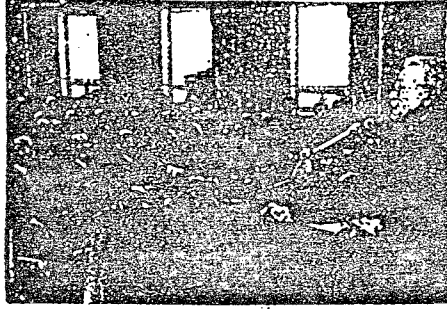
"협동조합은 정부 기구도 아니고 투자기관도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축협을 개혁하든지 다른곳과 통합하는 문제는 조합원들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농축협 통합은 권력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는 협동조합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고 농민의 조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계甲기자>

신구범 회장 “축협, 정치세력화 모색”

“농·축협 통합저지 위해 참정권 행사”

신구범 축협 중앙회장은 10일 축협 전남도 지회를 방문. 농·축협 통합 저지를 위해서 협동조합 통합법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연대, 축협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두순시차 이날 오후 광주를 방문한 신 회장은 “축협의 정치세력화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면서 “오는 17일 축협 결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치세력화 방식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축협의 반정부 시위가 절정에 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 회장은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협동조합통합법 위헌성 여부가 통합 시한인 7월1

일 이전에 판가뉘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재의 판결에 무조건 따를 방침이지만 현재 판결 이전에는 통합위원회의 참여는 물론 통합법 시행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축협중앙회 전체적으로 경제사업 4백88억원 등 총 6백억원 이상의 흑자가 발생했으며 전남도지회 관내 27개 조합중에서도 9곳을 제외한 18곳이 흑자조합이어서 축협의 자립기반이 확보된 상태인데도 강제적으

로 통합하려는 것은 억지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축협이 수입쇠고기 판매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일부를 보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협의 수입 중 수입쇠고기 판매로 인한 차익은 2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조현정기자 hcho@today.wonju.co.kr

“축협, 여당제외 정책연대 구성”

신구범 회장 밝혀
정부, 직무정지키로

축협중앙회 신구범(愼久範) 회장은 14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정책연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회장은 이날 경남 창원과 대구에서 경남북도지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축협 직원 2만1천명과 조합원 28만명의 입장을 대변, 축협을 정치세력화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회장은 “농·축협 통합에 대한 입장 등 여당을 제외한 각

당의 정책을 검토한 뒤 정책연대 정치세력을 결정하겠다”면서 “정책연대는 낙선·당선운동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으며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선거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신회장은 또 “현재 활발하게 구성되고 있는 축신을 사랑하는 모임(축사모)을 오는 16대 총선에 적극 활용해 농·축협 통합계획을 무산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농·축협 통합사업에 맞서고 있는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과 검찰 고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樞)

“조합통합반대 정치세력화”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도지회방문 기자간담

최우철 축협중앙회장이 협동조합 통합법에 반대하는 정치세력화 반대, 축협을 정치 세력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산실사시작 이후 첫 설명을 발표한 축협 노조가 실사행위를 집합토 규정하고 전면투쟁을 선포함에 따라 농·축·임산업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회장은 9일 축협도지회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협동조합 통합법에 대해 축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치집단이나 세력파 적극적으로 정치 연대를 펼칠 계획”이라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축협 결산총회에 이를 승인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협동조합 통합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깨끗이 승복할 자세가 돼 있다”며 “농림부도 헌법소원 심사청구 결정시까지 인위적 통합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 회장은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축협직원들은 처음에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으나 이제는 원칙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축협은 기본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니 만큼 농림부도 정도(正道)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沈載赫기자·e-mail: kyongh1.com

(축산업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우편번호134-030/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545-12 경성빌딩602 / 전화475-9232~6, 팩스477-5892

고두신(연기인)	남병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장기표(신문경제학회연구위원)
김병태(전 전국대교수)	류세청(전국대교수·축산경영박학교문)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숙희(전 교육부장관,아시아영양학회회장)	법 타(스님·조국영희등일본교회의회장)	힘세웅(선부·전우교정의구명사제단)
김진홍(박사·두레마을공동체대표)	손호철(만주화교학생회회장,공정과학 서강대학교수)	황영규(한국당숙기향협회 고문)
김현욱(서울대 교수)	이득룡(신 수협회장, 농협회장)	(가나다 순)

보 도 자 료

2000. 1. 20.(목)

축사모 사무국 (02) 475-9232~6

제목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130만명 회원 가입 기념 행사

—출범 한달여만에 100만 회원,

「축산업 = 생명산업, 먹거리 주권 산업」 인식 확산 —

- 21일 10: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 축사모 공동대표, 축산계인사, 회원등 참석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낭독, 100만회원상징 우유탑
제막식 -

- 우리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지난해 12월 9일 축산업이 우리의 생명산업임을 선언하고 수입개방, 균형 잃은 정책등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 나갈 것을 밝히며 출범한지 한달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 그동안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전국 각지에서 회원으로 동참한 시민이 지난 17일자료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20일 현재 회원은 13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축사모 130만회원은 일반 서명운동과 달리 가입대상을 만18세 이상으로 제한했고 일일이 회원이 주민등록번호까지를 밝혀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던 점, 또 전산등록으로 중복가입이 안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우리축산, 나아가 먹거리 주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실로 대단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시민들의 우리축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축산을 지키는 더 큰 힘이 될 것임을 다짐하기 위해서 기념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임의 공동대표와 축산계 초청인사, 회원등이 참석하여 다음 요지의 국민에 드리는 글을 채택 낭독하고(별첨)

김영태(전 권주대학교수)	유계원(전 권주대학교수)	함세웅(신주·전주교정서구연구소장)
김숙희(전 교육부장관, 아시아영양학회회장)	법 타(스님·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손호철(전주교정서구연구소장)
김진홍(목사·두테아온공동체대표)	이득룡(전 축협회장, 농협회장)	황영구(한국농축기행협회 고문)
김현욱(서울대 교수)		(가나다 순)

보 도 자 료

◆ 축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균형된 정책 촉구 ◆

- 수입쇠고기 소비권장 공문 관련 농림부장관 사퇴 촉구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성명서 발표

2000. 1. 24.(월)

축사모 사무국 (02) 475-9232~6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축사모)은 24일 회원가입 150만명에 즈음해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150만 회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공동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축사모』는 성명서에서 단순한 서명운동과 달리 까다로운 회원가입 절차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150만 회원이 운동에 동참한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 축사모운동을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축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WTO 뉴라운드 농축산업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현장 축산농민에게도 큰 격려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입축산물의 위함보조로우리 우리의 건강을 지키겠다~~
자구선언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축사모』는 성명서에서 다음의 5개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성명서 붙임)
 - ◆ 정부는 축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
 - ◆ 축산업이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지원 할 것.
 - ◆ WTO 협상에서 품목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축산업을 상대적으로 희생시키지 말 것.
 - ◆ 수입쇠고기를 소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한 농림부장관은 자진 사퇴 할 것.
 - ◆ 광우병, O-157, 다이옥신, 납탄등 수입축산물의 위해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은 시민운동을 통해 우리의 먹거리산업이자 농촌경제의 기둥산업인 축산업을 지킨다는 취지로 사회 명망가, 각계 지도자 14명이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해 12월 9일 출범했으며, 국민 홍보운동을 통한 회원가입 운동과 축산업 회생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활동등을 하고 있다. 회원은 지난 1월 17일 100만이 넘어선데 이어 24일 현재 시민 150만명이 축사모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붙임 :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150만 회원의 소리(성명서)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남께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의 공동대표로서 우리 축산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해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안종운 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계의 중요 현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21세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농업계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계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도 지난 세기의 낡은 틀을 벗어 던지고, 21세기에 맞닥뜨릴 무한경쟁시대에 맞서 우리 농업과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 틀을 짜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고비용·저효율의 4개 중앙회 체제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실한 일선조합으로 인해 농업인들과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임직원을 위한 조합'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협동조합개혁은 이러한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다가올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농업계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초부터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하였으며, 그 구체적 결정물이 작년 9월 7일 제정·공포된 새로운 협동조합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에는 새 통합중앙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협동조합개혁 프로그램이 모든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큰 틀은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큰 틀을 기초로 하여, 우리 협동조합이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생산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사용 확대 요청'건으로 인해 공동대표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1년 1월 쇠고기 시장개방이 완료되는 시기를 앞두고, 지난해 말 국내 소값이 급상승하여 암소의 도축마저 성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한우사육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서 한우산업을 살리겠다는 총정에서 비롯된 실무자의 교육책이었지만, 미리 축산(한우)농가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축산업을 살리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하는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순수한 뜻이 모여 축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새해에도 다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00. 1.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님께

2월 결산총회준비와 금년도 영농지원계획 수립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축산업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합장님께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9월, 새 협동조합법이 공포된 이후 그 동안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늦어도 2월말까지는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 중앙회의 조직과 사업의 기본이 되는 정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제6차 회의에서는 통합중앙회 설립작업 세부추진일정을 확정하고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중앙회가 출범하는 7월 1일까지는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길지 않은 기간동안 3개 중앙회 전산시스템과 금융상품, 신탁업무를 착오 없이 통합 해야하며, 조직·인사·보수규정도 정비하고 경제상업장 조정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요하는 현안들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2월 1일, 축협중앙회의 경영상 가장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이사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통합작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축협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도 없이 초청된 12명의 이사 조합장님 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하여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장님,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은 어느 특정단체가 반대한다고 해

서 미루어지거나, 지체될 수 있는 사안이 결단코 아닙니다. 중앙회 통합은 엄연한 법률적 사안이며, 우리 농업의 장래가 걸린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정부는 축협중앙회가 축산농가와 일선축협의 권익대변을 위해 설립위원회를 비롯한 설립기구에 참여하여 줄 것을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부단히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는 설립작업에 참여하는 대신, 4. 13총선을 이용해 정치 세력화 할 것을 선언하고, 정당의 지구당사 앞에서 협동조합 개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축협중앙회의 이 같은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선축협과 축산농가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장님, 중앙회 통합작업은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예정대로 추진되며, 오는 7월 1일이면 새로운 통합중앙회가 출범합니다. 농축산인과 온 국민의 촉박속에 통합중앙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이사 조합장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 2.

농림부 농정국장 정 학 수

KBS·MBC·SBS가 같은 방송국이라 해서 1개로 통합해도 되는건니까?

농협과 축협이 비슷비슷해 합쳐야 된다면 그 많은 방송국 그 많은 신문사도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국내 모든 은행과 모든 자동차 회사를 각 1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에도 민주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TV채널 선택권도 갖고 있고 은행도 선택할 수 있듯 농촌의 농민도 협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80년 당시 군사권력은 언론장악을 위해 언론사통폐합과 언론인을 강제해직 시켰습니다. 언론 대학살극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국민들은 당연한듯 인정하였습니다.

80년 11월 30일, 눈물속에 이강헌 동아방송의 경오뉴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밤 12시를 기해 동아방송 18년의 역사를 끝내고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지금, 관제화를 위해 협동조합통합이 추진

80년 당시 언론이 세 역할을 못하니 국가보위를 위해서나 하면서 국민을 현혹하여 통폐합을 밀어 부쳤듯,

그동안 김시원 김서, 대내적 검찰수사, 외국된 언론보도등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국민들로 부터 철저히 고립시켜 놓고 농민을 위한 협동 조합이나 하면서 협동조합 통합법을 밀어 부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부가 협동조합을 1개로 통합하면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을 통제하기가 더욱 더 용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협동조합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직년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수 투쟁을 기억합니까?
 그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려는 정부에 맞서 문화의 자존, 영화산업보호, 생존권 투쟁등을 투쟁으로 지켜냈고 언론과 국민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

농림부가 수입되고기 판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농·축산업이 포기되고 축산물 시장이 송두리째 외국에 넘겨질 수 밖에 없는 농·축협경제통합 사태를 맞아 인축식량산업 혁신업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맡아주어야 하겠습니까?
 선교조가 참교육 실천을 지향하고 있듯
 대한민국의 농촌채근과 민족식량 산업 농축산업 사수!
 이제 그일을 우리 협동조합 노동조합이 하려고 합니다

전국농협노조·전국축협노조·축협중앙회노조

이 광고는 농촌협동조합중앙회 제작입니다.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직업, 법대로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 중앙회 설립직업 추진일정 확정, 2월 8일부터 전산실태조사 착수 -

□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1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	일 자
농·축·인삼협 전산실태 조사	2월 8일 ~ 29일
자선선서 및 인수인계	2월 ~ 6월
조직·인사 등 내부규정 정비	2월 ~ 5월말
통합법 시행안·시행규칙 공포	2월 26일
청렴총회 개최, 중앙회 정관확정	4월 24일 ~ 29일중
농·축협중앙회 전산센터 통합	4월 30일 ~ 5월 1일
통합중앙회 회장·상임감사 선출	5월 8일 ~ 13일중
대의원회 개최 :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임명 등의 등 중앙회 집행부 구성	5월 22일 ~ 27일중
통합중앙회 업무인수단 구성	5월말
통합중앙회 출범	7월 1일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와 「농림부는 새 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에 필요한 작업을 원만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정 설립위원 15명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하고 있습니다.

○ 3개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전산통합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선조합과 농축산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농·축·인삼협중앙회는 일선조합과 농축산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산실태조사, 각종 자료제출, 인력지원 등 통합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또한, 통합과도기에 협동조합중앙회가 위법·부당한 예산전용 및 선심성 예산집행, 무분별한 직급조정 등 새 중앙회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통합작업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것은 일선조합과 농축산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는 7월 1일 통합중앙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3개 중앙회·일선조합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 농 림 부

성명서

농림부의 현지실사를 축협에 대한 침탈로 규정한다.

농림부는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축협이 어디라고 빙집행이란 미명으로 여기에 와 있는가!

우리 100만 축산인과 2만 축협노동자는 그동안 협동조합 강제통합법의 철회를 주장해 왔다. 그 법은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기 때문이다. 금번 통합법은 주인인 축산농민의 의사에 반하고 헌법에서도 명시한 농민자조조직 육성에 위배하고 있다. 또한 미국등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이미 빈사상태 직전에 처한 우리 축산업에 대해 결국 승통마저 끊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 축협 노동자와 축산인이 아니면 이 나라 축산업을 지키고자 이렇게 몸부림칠 자 과연 누구란 말인가. 또 이 법의 이면에는 분명 협동조합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농민과 농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의심된다.

농림부와 정부는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아버지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대책을 내놓키는 커녕, 피폐한 농촌에 대한 재건대책을 세우기는커녕, 허울좋은 협동조합 강제통합법이라는 충격적 요법을 통해 농촌민심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그리고 이 자리는 농림부 관료와 농협직원이 와 있어야 할 시간도 장소도 아니다. 지금 이 시각에 여러분들은 농촌 현장에 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축협노동자가 나서 농촌재건과 민족식량산업을 축산업 사수에 전력 대진할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손으로 농민을 위한 농촌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최근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을 주목한다. 농림부의 본색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통합,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도 이제 분명해 졌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알리고 알리는 작업을 무차별적으로 할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정의는 잠시 시련을 당할지는 몰라도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오늘 이 시각 우리는 울분에 차 터지는 가슴을 억누르고 참고 있다. 우리를 더욱 궁지로 몰지 말기 바란다. 오늘 농림부는 우리 축협의 30여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협동조합 침탈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지금 바로 농림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만약 농림부가 우리의 정당하고 이유있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축산사수·민주사수·정의사수·협동조합사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이것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농림부에 있음을 미리 밝힌다.

2000. 2. 8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위원장 오상현

임원해임요구서

우리 축협조합장은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후퇴시키는 중앙회의 단순 강제통합에 반대하였음에도 신 농협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99. 9. 7. 공포되었음.

이에 우리는 '99. 9. 17. 총회 및 이사회에서 동법이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헌법소원 추진을 의결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의 의미가 희석될 것을 우려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전 회원조합장이 뜻을 모았음.

이러한 우리의 뜻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이사로 재직중인 이기동이사는 '99.10.8 설립기획단의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같은날 개최된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의 강력한 참여반대 의견이 있었음.

이기동이사는 '99년도의 동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으나 2000년도 회의에는 2. 2.현재 3회중 2회(제7차:1.18, 제8차:1.21)회의에 참여(총 8회중 2회)하였고, 안명수이사는 2000.1.28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2.현재 제6차(1.28) 회의에 참여(총 6회중 1회)하였음.

이는 우리 회원조합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축협법 제133조(제50조 준용) 및 정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함.

— 다 음 —

이 사 이 기 동(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장)

이 사 안 명 수(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장)

2월 17일, 오늘은 축산업협동조합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불명예의 오점을 남긴 날로서, 우리는 축협을 위기로 몰고 가는 특정세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협동조합운동에 청춘을 불사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으로서 오로지 우리 축산업과 축협의 발전만을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하며 지내온 세월앞에, 오늘 우리 두사람은 목을 놓아 울부짖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

그 숭고한 이념과 정신 앞에 내 자신을 담금질 해오며 약자의 편에서, 소수의 편에서 그리고 원칙과 정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오늘처럼 회한으로 뼈속 깊이 느껴진 적이 없었다.

축협중앙회 정기총회라는 신성한 모임에서 중앙회 이사직 해임이란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고 우리 두사람은 진정 축산업과 축협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먼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직 해임안을 총회표결에 부의하고 이를 강압적 분위기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역사앞에 우리 축협의 명예를 더럽히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

그리고도 우리 축협이 원칙과 정의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정말 혼란스러울 뿐이다. 어느 한 정치지향적 인사에 의해 우리 축산인 전체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후세에 책임을 어떻게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중앙회의 책임있는 임원으로서 어느 것이 우리조직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적과의 동침 운운하며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으로 우리 두사람을 비난하고 해임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역사적 심판앞에 영원히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셋째, 축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16일 회장 명의로 우리 총회가 설립위 참여를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한다는 결정이 위법·부당한 의결로써 취소할 것을 요구한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대해 취소명령은 별도의 조치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종결 처분이라고 회신함으로써 총회의 결정이 당연히 취소되었음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설립위 참여여부는 개인의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개인의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공문과 관련자료를 농림부와 우리 조합에 보내 놓고서도, 그 약속을 오늘 우리 스스로 뒤집고, 개인의 의사와 자율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추태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단체에서 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동료조합장들로부터 갖은 비난과 따돌림,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 못할 헐박과 야유를 받아가면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우리 두사람을 중앙회 이사직에서 쫓아냄으로써 어떤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6월 축협사상 초유로 우리가 추대했던 박순용 회장을 우리 손으로 해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조직의 도덕적 불감증과 사회적 무책임성을 오늘 또다시 눈앞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가증스러울 뿐이다.

언제부터 우리 축협이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행동을 억압했으며, 언제부터 우리 조직이 서로를 시기하고 반목해 왔는지 우리들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우리 축협은 어느 한 개인의 사조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협동조합의 숭고한 이념아래 창의와 자율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협동조합의 깃발만이 드세게 자리할 때, 우리 조직과 축산업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협동조합의 깃발아래 굳게 뭉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나아가 100만 양측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를 한없이 추하게 만들고 불신의 나락으로 내모는 어리석음을 자초해서도 더더욱 안된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조직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려 했던 우리 두사람은 오늘 총회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협동조합의 주무 관청인 농림부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즉각 취소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축협을 위기로,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는 특정세력과 특정인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2000. 2. 17

전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장 이 기 동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장 안 명 수

결 의 문

우리 축협 조합장 일동은 UR에 이어 WTO 협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 양축 농민을 보호 육성해야 할 농림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양축농민의 구심체인 축협 없애기와 수입쇠고기 판촉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오르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뚜렷한 이유없이 정책자금 취급배제는 물론 각종 행사시 축협회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통상의 관행을 벗어난 감독권 행사와 회유로 내부분열을 유도하는 등 농정의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과 양축 농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축협은 농림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축협 단순 강제통합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한탕주의식 개혁 발상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축협조합장 일동은 1999. 9. 22.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통합과 관련된 어떠한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과, 축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동조합의 개혁 문제에 우리 축협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정책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 축협 조합장 일동은 지난해 9월 17일 총회에서 결정한대로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를 유보할 것을 재다짐하며 농·축협 통합법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 축협 조합장 일동은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반 설립추진 일정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통합중앙회 설립을 위한 총회에도 불참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중앙회 집행부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실사 등이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체 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회 집행부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축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동조합 개혁 문제에 대하여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정책연대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우리 축협조합장 일동은 중앙회를 배제한 일체의 정책사업이나 정책 자금 취급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농림부의 어떠한 회유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투철한 사명 의식과 주인정신으로 축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축협사수의 선봉이 된다.

끝으로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자체개혁을 충실히 수행하여 “작고 강한 조직”, “조합원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자주적 협동조합, 축협” 건설에 매진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0. 2. 17

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 일동

농민을 울리는 협동조합 강제통합 중단하라

농민을 대표하는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전국 농협노조 - 축산인을 대표하는 축협과 축협노조 -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모두가 농축산업을 후퇴시켜 농촌경제를 어렵게 할 정부의 협동조합 강제통합을 경각하며 다시 논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협동조합 통합법은 정부가 농협 중앙권리들과 이인단체들을 앞세워 만든 대표적인 농민억압법입니다.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협동조합을 더욱 비대화된 농정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관영공사로 전락한 현행 협동조합 통합조직으로는 결코 거세지는 초국적자본의 WTO 농축산물 시장개방 공세에 대응할 수 없으며 농민들의 최대현안인 농기부채 해결전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문제 투성이인 협동조합 통합을 시행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통합법을 반대하는 5가지 이유

첫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기계적으로 통합하여 중앙회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고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둘째,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 강화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셋째, 중앙회 사업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통합의 취지와는 반대로 농 축산민을 대상으로한 돈놀이 금융기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넷째, 중앙회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지배 감독권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사실상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다섯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중앙회별 농장지도와 대정부 고섭, 국제통상대응 중심으로 개혁하지 않은 결과, 우리 농업을 WTO시장 개방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민주노총 5대 요구

첫째, 정부는 반농민적이고 반민주적인 통합 농협법에 따른 강제적인 통합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농 등 농축산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전면 재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협동조합을 WTO수입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민들의 최대 고통인 농기부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민주노총과 전농에 대한 근거 없는 반통합세력 매도를 즉각 중단하고 농장지도 중심의 중앙회 통합과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등 경제사업을 전문화하고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강압적인 농축협 통합을 즉각 철회하고 농·축협 3사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조관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림부는 협동조합통합법에 대한 헌법 소원 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송한 판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전형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전농, 참여연대 등 농축산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과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총파업, 대규모 항의집회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선축협 임원여러분 !

우리 축산업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일선 축협 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초부터 추진중인 협동조합개혁을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우리 농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원 여러분,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것은 지난 2월17일 열린 축협중앙회 총회에서 조합장님들이 “축협중앙회를 배제한 모든 정책사업 수행이나 정책자금은 일선축협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합장님들의 결의내용이 일선축협의 경영과 축산농가 지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선축협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자금 취급을 계속 희망하는 조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만일 정책자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일선축협이 있을 경우에도 축산농가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일선축협이 정책자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축산자금을 비롯한 현재 진행중인 부채대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창구 변경으로 인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조합입장에서도 정책자금 취급 수수료 수입중단과 부실채권의 건전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2~3건씩, 일년이면 800여건이 넘게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법률을 지키기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축협중앙회에 대해 부득이하게 각종 정책사업 수행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원 여러분, 앞으로 일선축협의 정책자금 취급여부는 전적으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어느 조합이든 취급을 희망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일체 배제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일선축협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할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 3.

농림부 농정국장 정 학 수
축산국장 김 주 수

지정수신인 : 농림부농촌인력과

농림부가 진정 농업·농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겸허히 수용하라!

우리는 지난 3월 11일과 3월 16일자 성명을 통해 현 [농업협동조합법]의 문제점과 농림부 각종 위원회의 운영행태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농림부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농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반박해 왔다.

농림부의 열린농정이 이러한 것인가? 열린농정으로 농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여 반영했다면 현재 농업과 농민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농림부 박현출과장은 전농이 농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특정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매도하였다.

협동조합개혁의 본질은 정부주도 설립이라는 협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전농은 지금까지 줄곧 [통합을 통한 비사업적 기능의 중앙회, 경제사업을 하는 연합회체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완전 분리]를 통해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중심으로 나아가야 하고, 협동조합을 정부가 장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작년 8월 통과된 [신 농협법]은 단순히 중앙회만 통합한 채 '여전히 사업을 하는 중앙회, 그동안 농협의 부실을 잉태해 왔던 하향식 구조의 독립사업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의 부실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금감위의 감독권을 지역농협까지 확대하여 경제사업은 위축되고 신용사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하였으며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농림부장관이 회원조합의 해산명령권까지 갖게 하였다.

따라서 현 [농협법]하에서는 중앙회의 비대화, 신용사업중심, 획일적인 하향식구조 등 협동조합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정부의 협동조합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심대히 훼손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협동조합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중앙회장과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진정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개혁이 아니라 농협의 기득권을 유지해 주고 단순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농업금융을 정부의 사금고화하려는 정부주도 [신농협법]을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 묵과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따르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것인가? 농림부의 잘못된 정책을 끝이끝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개혁세력이자 농민을 위한 단체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반개혁세력이고 반농민단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농림부는 더 이상 농민단체들을 자기품안에 넣어두고 길들이려는 생각을 중단하라!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추진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축협의 위헌신청과 가처분신청까지 초래하였음을 직시하며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겸허히 수용하는 이성적인 자세로 임하라!

우리는 농림부 관료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음해성 비난에 굴하지 않고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0년 3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鄭光勳)

의사 규제역 발생! 축협 임원진은 전원 사퇴하라!

지난 달 하순 과주지역 축산농가에서 최초로 의사 규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음성 등 일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노동조합에서는 국내 축산기반을 보호하고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을 강력 요구한다.

지난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통합법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투쟁으로 수십억원의 광고비와 무분별한 집회비용을 지출하면서 한국농업계의 갈등과 분열을 일삼아 왔던 축협!

그 과정에서 농림부는 축협을 설득시키고 통합농협을 법에 따라 탄생시키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정상적인 농정활동에 많은 방해로 당하면서 축협측의 조직적인 농림부 비방광고와 집회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지난달 노동일보를 비롯한 축협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통합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급조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직적 투쟁을 선언하였다.

축협이 농림부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한국농업계의 분열을 일삼고 있던 지난 2월과 3월에는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의사 규제역이 발생되었음에도 자국의 축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자제 등 조용히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해외의 축산동향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축산농가에게 곧 바로 제공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지도 지원하여야 할 축협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통합반대에만 골몰했던 결과가 지금 어떠한가?

한국의 축산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이 지금 한국 축산업계에 휘몰아치고 있지 아니한가? 축산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축협이 과연 필요한가? 계란값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에도 순진한 축산농가를 선동 동원하여 여의도에서, 또는 김천당을 비롯한 정당 당사에서 소모적인 분열을 일삼는 집회와 비방광고를 해오지 않았던가?

이제 자연재해이자 재앙인 규제역이 한국 축산농가에서 발생되었고, 그에 대한 일단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 그동안 축산농가를 기만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급급해 왔던 축협임원진은 지금 즉시 전원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

또한 통합반대에 앞장서왔던 일부국별 축협직원은 단 한명도 빠짐없이 스스로 한국축산업계를 떠나라! 통합농협은 결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단언한다.

농림부는 의사 규제역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 대오각성하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범국가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근본적인 축산살리기 정책을 수립 집행하라! 축협은 한국 축산업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를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여 이익쟁기기에 급급한 외국축산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보편 중인 수입축산물을 지금 즉시 폐기처분하여 국내 축산농가돕기에 앞장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00. 4. 6

한국노총·금융노련·농협중앙회노동조합

존경하는 조합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구제역 파문이 확산되는 등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로지 우리 나라 축산업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합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999년 9월 7일 새로운 농협법이 공포된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는 21세기에 새롭게 이루어나가야 할 협동조합의 틀을 짜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였고, 이제 역사적인 협동조합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를 오는 4월 17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이론과 실제면에서 조합장님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증책을 맡아 일해오는 동안 축협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디만, 그렇지만 축산농가를 향한 조합장님의 바램이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장님!

현재와 같이 중앙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는 21세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농·축·인삼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강화되어야 하는 조직은 일선의 단위조합이며,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조직으로서 난립해서도 안되고 커서도 안될 것입니다. 선진제국에서는 경쟁력 1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나 은행들끼리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회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거기에서 절감된 금액을 일선 조합과 농·축산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 농·축산인들을 위한 21세기 농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농협법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즉 3개 중앙회를 통합하여 여러 가지 중복기능을 없애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의 중앙회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일선축협을 비롯한 조합들이 유통 등 경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여 양축농가 등 모든 농업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냉혹한 무한경쟁에서 이겨 나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위원회는 작고 효율적인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의 의견과 고언을 폭넓게 듣고 이를 반영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업을 염려하시는 축협 조합장님과 축산농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가 많았습니다.

통합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취지는 어느 특정 농업분야나 특정조합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농업인과 회원조합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조합장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협법으로 협동조합체제가 변하여도 일선조합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회를 통합하여 일선 농·축협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오는 4월 17일 창립총회는 통합중앙회의 골격을 정하는 최상위 규범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및 동부속서임원선거규약”과 “대의원회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선거규약”을 의결함으로써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협동조합체제를 출범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총회를 계기로 새로운 중앙회장과 감사, 임원,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하고 통합중앙회의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편성 등 창립일정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축협중앙회는 통합중앙회설립법의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놓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현재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다고 해서 법률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해서 그 법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면 법질서는 마비되고 국가적인 일대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기까지는 새 농협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3개 중앙회 통합작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장님!

새로운 협동조합체제 출범을 알리는 뜻깊은 창립총회에 축협조합장님 모두가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설립위원회를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와 일선축협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대표하는 축협조합장님이 창립총회와 중앙회의 회장,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는 회의에 참여하여 유능한 인물을 뽑아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장님들이야말로 바로 21세기의 농·축협을 힘있게 지원해 줄 중앙회를 설립하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은 이제 끝내고, 21세기 한국 농축산업의 원대한 발전목표를 향하여 다같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힘차게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합장님과 가족의 건승하심과 조합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000.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교수 정 세 욱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38-16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 Tel. 3401-6543 Fax 3401-6549

지정수신인 : 농촌인력과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박홍수, 朴弘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TEL. 3401-6543 FAX. 3401-6549)

■ 협동조합 통합중앙회 초대회장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개혁과 농업인조합원 중심의 조합운동을 정착시켜야 할 협동조합 통합중앙회의 초대회장 선거가 4월 24일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5월 2일로 다가왔다. 우리농업의 위기상황과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치뤄지는 이번 통합중앙회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농·축협 통합과정의 상처를 치유, 갈등의 양극을 씻어내고 또한 차후 실시되는 WTO협상과 농가부채해결,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등 국내외에서 다가오는 각종 농업현안과 위기를 앞장서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농연에서는 5월 12일 선출될 초대 농협중앙회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애정과 철학을 겸비한 사람
2. 각종 농정현안에 대해 농민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사람
3. 협동조합 통합과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4. 지속적이고 확고하게 농협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갖춘 사람
5.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해 우리나라 농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6.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사람
7.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농업문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농민단체와 함께 현안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지속적 발전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이 협동조합 통합중앙회의 초대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4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서

- 공권력이 선출한 통합중앙회장은 원천무효이다 -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범대위)는 지난 4월 17일에 이어 5월 2일 실시된 통합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어제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수 만명의 경찰의 비호하여 농림부의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된 회장선거는 지금 농협중앙회장의 재선거일 뿐이며,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일부 임원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회장은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따름이다.

반민중적인 김대중 정권은 협동조합의 강제통합과 꼭두각시 회장선출을 반대하고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범대위의 평화적·합법적 집회를 폭력 경찰, 농림부, 검찰로 가로막고 나섰다.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수 만명의 농·축산인들에게 '범대위의 집회는 불법이며 참가하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공갈 및 협박을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전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참가 자체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을 농협중앙회의 사유물로 전락시키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폭력·불법등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여 스스로 조직한 자조·자립의 자생조직인 협동조합 선거에 왜 수만명의 경찰과 공권력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협동조합이 철저히 관제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정권의 농촌장악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날의 회장선거는 협동조합을 말살하고 농민과 축산인을 죽이는 우두머리를 뽑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농민과 축산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회장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 통합법은 '정부예속, 중앙회 비대화, 신용사업 위주의 은행화, 중앙회 중심의 관료화, 농민통제, 전문성 결여'로 전형적 반개혁적·반농민적 악법이다. 우리 범대위는 이러한 악법과 통합중앙회장 선거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불법무효선거를 자행한 농림부 장관, 통합중앙회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그리고 농가부채 해결, 산불·구제역 피해의 실질적 보상, 수입개방 중단, 협동조합 강제통합작업 즉각 중단을 김대중정부에게 요구한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범대위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천만 노동자는 물론이고 500만 농민을 포함한 전 민중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하여, 김대중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해 둔다.

2000. 5. 3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 탈법과 파행으로 집결된 협동조합 통합절차의 무효화를 선언하며 -

농림부와 그 추종자들은 협동조합 통합법의 취헌심 여부 판정을 위한 현재의 헌법소원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경찰병력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지난 4월 17일 통합중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5월 2일에는 회장과 상임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5월 12일에는 대표이사 임명동의 및 이사, 비상임 감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동조합 중앙회 강제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제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던 28만 축협조합원을 비롯한 100만 축산농민들의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 통합에만 혈안이 되어 짜여진 각본과 일정에 따라 통합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던 농림부는 급기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통합법 조차도 무시한 채 192개 회원 축협의 전체 조합장들로 구성된 추천회의에서 추천해야 할 이사후보들 그들이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하여 겨우 모인 단 11명의 조합장들로부터 추천 받는 등 중법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정부기관으로서의 상상을 하기에 힘든 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 강제통합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축협조합장들을 대상으로 각종 설립절차에의 참여를 독려하던 농림부는 축협조합장들의 참여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회의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 미달로 각종 회의가 무산되자 초조해진 나머지 선량한 축협조합장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기금마저 자기를 주머니털처럼 멋대로 집행하려는 공권력의 횡포와 비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축협조합장 일동은 농림부와 그 추종자들의 탈법과 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불법과 강압 속에서 여태껏 자행된 모든 협동조합 통합절차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원칙과 정의에 반한 이들의 안하무인식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준법투쟁을 끝까지 지속할 것이다.

2000. 5. 12.

전국 축협조합장 일동

[성 명 서]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정부의 협동조합강제통합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시민 77%, 현 통합농협법에 부정적 (한길리서치 조사결과)
- 국회의원 80% 현 통합농협법 문제있다 (매일노동뉴스 조사결과)

지난 해 3월 8일 농림부의 협동조합개혁시안 발표내용은 그 동안 진행되어온 개혁방안과는 달리 협동조합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농림부와 은행사업을 끝단지와 같이 애지중지하는 농협중앙회가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서, 500만 농축산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진정한 개혁여망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기 위한 줄속안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정부 권력과 자금을 이용하여 농민단체를 협박·회유하면서 정부안을 확정하더니, 역시 국회에서도 법사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쫓기듯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말았다.

어디 이 뿐인가? 통합중앙회 창립총회와 회장선거, 대의원대회는 준제엄령하에서 공포속에 진행되었고, 통합중앙회의 대표이사는 한사람은 뇌물수취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자이고, 신용대표이사는 금융업무 비전문가를 임명했다. 그리고는 1주일만에 중도하차했다. 또한 통합에 협조하는 조합에만 공공자금을 지원하여 축협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협동조합의 개혁을 운용할 수 있단 말인가?

법국민대책위원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시민 500명과 농민 500명(농업 436명, 축산업 64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자의 2/3이상이 돈장사 중심의 협동조합 경영구조와 축산업 전문성 보장 등을 이유로 통합농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업무는 독립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협동조합 중앙회는 비사업기능만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입개방과 농산물가격폭락, 구제역, 산불, 가물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80%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은행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비사업기능의 중앙회로의 통합 △경제사업연합회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의 핵심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명을 상대로한 매일노동뉴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15%만이 현 통합농협법에 찬성할 뿐, 52%는 재논의 검토, 7%는 적극 개정, 21%는 시행유보 등의 대답을 해 80%가 현재대로의 시행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500만 농축산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이와같은 의견을 경청히 수용하여 이제라도 통합작업을 일체 중단하고 통합농협법에 대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해야만 한다. 정부가 이러한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쯤 무시하고 통합작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아니라,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와 협동조합을 후퇴시켰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며, 독재정권으로 낙인 찍혀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0년 5월 24일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법/국/민/대/책/위/원/회

협동조합 강제 단순통합은 “미국등의 농축산물개방 압력에 굴복한 정부의 농축산업 포기정책입니다.”

노동일보 2002년 5월 20일 목요일

시민 77%

“농·축협 통합반대”

금융업무 독립법안화 63.4% 찬성

인질리서서 서민·농민 각 58%씩 실권조사

인질리서서 서민·농민 각 58%씩 실권조사
 18대 국회의원 경선지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통합법안 대체할 대안 내놓으라
 18대 국회의원 경선지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통합법안 대체할 대안 내놓으라
 18대 국회의원 경선지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통합법안 대체할 대안 내놓으라

농축산업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주도의 단순 강제통합과 이로인한 협동조합의 관치화·공시화는 WTO시장개방압력과 미국등의 통상압력을 막아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입개방압력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일을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농협법’을 통해 조합원의 자주조직(사법인)인 협동조합을 정부주도로 강제통합시켜서 생산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케하고 공시화하여 정부기구로 전락시킬 경우 미국등의 통상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등은 ‘정부가 협동조합에게 시켜서 그러는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농축산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수입개방 반대 목소리를 묵살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위태로움이 많은 수입식품을 막아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름길이며, 식량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농축산인의 자주조직인 협동조합을 권력에 의해 강제로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개략적 통합농협법 철회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채/위/원/회

◇ 상징대표: 영남 소농(불교계), 오종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정경환(전국농민회총연맹회장), 단병호(민주노동당위원장), 김중권(참여연대대표), 노수희(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회장), 손호철(민주회총회장), 전국교수총회대표/교수, 김진권(사회적보안연대대표/교수), 이희복(노동일보회장), 성우보(민주연운운동시연연대표)

미국등 육류 수출국 한국시장 공략 강화

국내 돼지고기 소비축진운동 ‘수입해제’ 반대 철폐

경제 위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수출국들이 미국과 한국시장을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시장에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시장에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시장을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시장에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시장에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민중대회위원회는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 민주화농민연합회, 사학진보연대, 민주연운운동시연연대 등 이 사회의 양심적인 단체 42개가 참여한 기구를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된 통합농협법의 철회와 재 논의를 주장합니다. 주요 인원으로 ▲은행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비사업적 기능의 중립화로의 통합 ▲경제사업연합회 건설 ▲협동조합의 사회·정치적 기능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朝鮮日報
1959年11月30日

한국일보
1959年11月30日

한겨레
1959(1959)

정부여당은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요구하는 협동조합 노동자의 총파업에 책임있는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도모하는 힘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총파업을 오는 31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노동자(전국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축협중앙회노조)의 올바른 협동조합개혁 요구는 무려 1년 3개월 동안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종일관 무사태평합니다.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총파업은 금융산업과 농축산관련 산업의 마비를 가져와 최근 경제난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김대중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과 농림부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즉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윽고 한나라당도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문제해결의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외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과 정치권에 있게 되며,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은 결코 국면적 정당성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협동조합 노동자의 진정한 개혁요구를 조직이기주의로 이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1)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주화투위하고수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연대 투쟁하고 있습니다.

2)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 77%의 시민이 불합법에 문제있다고 답했으며,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명중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0%가 불합법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통합농협합 할때 요구는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의 권력의 원천도 동태리에 협동조합은 협동공사로 권위화하고, 헌법의 보장된 농민조합원의 기본권(결사권, 결번권, 발언권)을 보장하며 통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우리는 협동조합개혁의 핵심내용으로, 1)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비사업적 가능한 투명성 증대로 통한 2)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운영사무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하여 농업특수은행 3) 독립법인의 경제사업연회 건설로 전문성 강화 등을 요구합니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협동조합개혁의 대표적 난맥상들

- ▲ 국회법시위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통합농협법안 날치기 통과시킨.
- ▲ 잘못된 강령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관련단체 동원한 이권조각기 현안등세
- ▲ 수반의 강령정책을 동원하여 삼입된 경제수에 전방인 통합중앙회 상임총회, 회장선거, 대의원대회
- ▲ 통합중앙회 농업대표이사 최불수리현으로 임명 5년 구형, 현황대표이사 금융업무 비전문가 임명.
- ▲ 통합에 전성된 속협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당 수임위원의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전법 동원.
- ▲ 속협조합장을 최우·협박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에 강제로 참석시키려함.

<농업관련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청년수의사회, 축산물사랑하는시민모임, 전국축협조합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주화투위한전국고수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맹, 사회진보연대, 노동일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연합, 전국실거민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모련회 <종교단체>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민중교회선교연합회, 영등포선업선교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노동관련단체> 민주노총, 노동인권위원회, 노동자의회,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노동단체연합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협노조, 사무금융연맹, 전국축협노조, 축협중앙회노동조합 <기타> 전태일기념사업회, 청년진보당,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축산물사랑전국대학생협의회
[반·개·혁·적·통·합·법·철폐·와·전·면·제·는·의·를·위·한·민·국·민·대·책·의·위·회]

**불가피하게 선택한 5월 31일 총 파업 투쟁,
기필코 승리하여 협동조합을 이 땅 농민과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축협 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 - -

개발기업의 횡포를 저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대 기업의 이윤수탈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역사상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7월1일이면 축협 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중앙회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통합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수천의 협동조합 직원과 농민들의 반대 시위에서 불구하고 전투경찰 등을 동원하여 공권력의 비호아래 통합 중앙회 창립 총회를 강행하였으며 5월 2일 통합 중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5월 12일 통합 중앙회 임시 대의원 대회 등을 수천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진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 중앙회에 참여하는 일선 협동조합 조합장들에게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아래 수십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협동조합을 통합 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협동조합 통합은 결국 조합의 주인인 농민과 다수의 국민을 다 죽이는 반민중적 정책뿐입니다.

해방 이후 자유당 정부로부터 우리 농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성된 농협 중앙회로 인하여 현재의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돈놀이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이라는 미명아래 농민들의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협동조합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중앙회를 통합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은 결국 현재의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진정한 주인인 농민과 국민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축협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농민과 다수의 국민인 민중에게 되돌려 드리하고자 5월 31일 총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동조합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정권으로부터 관변화 되고 농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쌈짓돈을 불모로 돈놀이에 치중했던 반 농민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을 실질적 주인인 농민의 품으로 농민에 의해 운영이 되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건설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축협에 근무하고 있는 2만여 직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축협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건설하고 정치자금 등 돈놀이를 통해 농민의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반 농민적 정책을 박살내 진정으로 살맛 나는 농촌으로 농민이 대우받고 우리 먹거리를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축협노동조합으로 뭉친 축협 노동자들이 5월 31일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 돌입합니다.

축협을 되살리고 협동조합을 농민에 품으로 되돌리고 농촌을 다시금 살리는, 민주화된 사회를 건설하는 축협 노동자들의 총 파업 투쟁 꼭 지켜 보아주시시오

농민과 대다수의 국민인 민중을 위한 전국축협노동조합 총 파업 투쟁으로 협동조합을 반드시 개혁시키겠습니다.

반대 ! 김대중 정권의 협동조합 강제 통합 / 쟁취 ! 노동자·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2000년 5월

**전국축협노동조합 7000여 축협 노동자들이
이 땅의 농민과 다수의 국민인 민중에게 드립니다.**

지정수신인 : 농림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 성 명 서 □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 연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봉 1516-5 축산회관 4층
전화 523-8601~2, 팩스 523-8603, E-MAIL : kncw2@chollian.net.

축협중앙회와 일선축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여 협동조합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하라

축협중앙회가 양축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농·축협중앙회를 통합하는 새 협동조합법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제 축협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통합반대투쟁을 중지하고 협동조합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하라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결단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새 협동조합법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판결이며 일부 축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극단적 조직이기주의에 썩기를 막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축협중앙회 및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그동안 현재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동조합개혁작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히며 조합원과 소비자를 불모로한 극단적인 통합반대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협동조합통합지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재의 판결이 나면 그 결과가 어떠하던가에 현재의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겠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제 현재의 결과가 새 협동조합법의 합헌을 인정하 만큼 축협은 협동조합개혁작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일 현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며 조직이기주의적 투쟁을 계속 전개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축협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일부에서 협동조합통합저지 반대운동을 이끌며 협동조합개혁을 방해해온 인물을 축산부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이러한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500만 농민의 이름으로 그 부당성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축협이 현재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진행중인 협동조합중앙회 통합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업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0. 6. 1.

협동조합 개혁추진 범농업인·시민 연대



보도자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5번지
전화 : 761-9119 팩스 : 761-8871

-통합협동조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 15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새협동조합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6월 1일 합헌 선고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 협동조합의 통합의 목적은 중앙회는 통합하여 축소하고, 일선 조합은 규모화·전문화로 육성하는 데 있다. 절대 다수의 농업인이 그동안 강력하게 희망했던 사항이다.
- 협동조합 개혁을 통하여 극도로 부실화된 일선조합의 경영을 활성화시켜서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서가 아니라 선택적 방향이 달라서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을 지라도, 이제는 방향이 결정된 이상, 사랑과 대화와 타협으로써 통합작업을 조속히 매듭지어서, 이나라 농업발전과 농어민의 권익형상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00년 6월 1일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해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농림부 입장

- 헌법재판소의 6. 1일 새 협동조합법에 대한 합헌 선고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 이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500만 농업인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민주적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새 협동조합법의 합헌성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서 사필귀정으로 매우 합당한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군사 독재정치하에서 밀실결정에 의해 무원칙하게 분리되었던 농·축협 중앙회를 통합,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는데 대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 것이다.
 - 이 결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새천년 지식기반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농민의 진정한 단체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협동조합개혁을 온 국민의 동참하에 본격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조직이기주의에 치우쳐 농심과 국론을 분열시키려한 축협측의 불순한 의도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 새 협동조합법은 농업인·농민단체·학계 등 수많은 전문가의 검토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률로서 그 합헌성에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 이기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투쟁의 명분으로 삼아왔으며, 그 결과 농업계의 심각한 분열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협동조합 개혁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제공해 왔다.

□ 이제 정부와 농업인, 농민단체는 그동안 법령·정관 등 하드웨어적·양적 개혁에서, 소프트웨어적·질적 개혁으로 전환하여 내실있는 협동조합 개혁을 이룸으로써 이 나라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축협중앙회와 일선축협도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여 협동조합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정부도 우리 농업의 근간인 축산업이 WTO 무한경쟁시대에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의 우리 농업계 일부에 남아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그동안 협동조합 개혁을 진심으로 성원하고, 지원해 주신 500만 농업인, 농민단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 6. 1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이제 협동조합간 화합과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협동조합상 정립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

- 축협노조는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 -

금일 헌법재판소가 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합하는 새 협동조합법에 대한 축협측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로 이를 기각함으로써 작년 8월 13일 국회에서 입법된 이후 지속된 새 협동조합법에 대한 논쟁은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축협은 자신의 최고책임자가 '헌재의 판결에는 언체든지 따를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축협노조 역시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우리 축산업이 수입개방과 구제역 사태 등으로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 축산업과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축협노조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헌재 판결까지 무시한채 파업을 지속한다면, 축협은 5백만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헌재의 합헌판결을 맞아 협동조합이 앞으로 수많은 농업현안을 해결하고 우리농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의식개혁과 실천활동을 부단히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직까지 공식으로 있는 축산부윤대표이사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 축산에 증사하여 축산농가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축산농가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최근 농산물가격 폭락 등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정부 역시 협동조합간 화합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물론 7월 1일로 예정된 통항중앙회 설립작업의 차질로 일선의 농업인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憲裁 “통합 농협법 합憲”

농·축·인삼협 통합 합헌

“공공복리 위해 허용돼야”

헌재 결정

농·축·인삼협 통합법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한 것을 무효로 하는 농·축·인삼협 통합법 합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로 예정된 통합농협 출범과 관련한 법적 장애가 해소됨으로써 통합협회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형욱)는 1일 축협중앙회(축협신규법)와 조합원 등이 통합농협법 제정 당시 자선단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축협과 통합이 같은 결서결조인 문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부입안자의 자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이 가져올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축협중앙회와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축·인삼협 통합을 촉진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합헌적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수단은 적법하며 비례도 최소한한 것이”

고 밝혔다. 한편 통합협회는 지난날 2월 초대 회장으로 초대근직을 선출하고 다음 달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축협중앙회는 지난달 9일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지난 3월 법 시정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김승욱 기자 kimswo@kmb.co.kr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등을 혁신 농협중앙회로 통합하도록 규정한 농협법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은근기자@nnews.com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형욱)는 1일 농협법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 등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축협중앙회 등 17명(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인삼협중앙회 통합협회를 출범시킬 수 있게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통합이 영구인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해도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허용

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농·축협중앙회 통합조치는 영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 해도 기본권 제한의 목적·수단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재판관 법위를 논하지도 않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의 헌재는 “이 결정은 축협중앙회와 공익성 등을 고려해 내리진 만큼 국가가 이후 확산 분야를 비롯한 각 전문분야의 자율성,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실 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합헌결정된 법률조항은 3대 협동조합중앙회 통합을 규정한 농협법 개정법률 부칙 2조, 6조, 7조, 11조다.

축협중앙회 등은 지난해 9월 축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로 강제 통합하는 내용의 새로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등 공표되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이후원기자@sup@kdh.com

헌재 “통합농협 합헌”

재판부 전원일치 “결사자유 침해 아니다”

농·축·인삼협 통합법 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3개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하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통합협동조합 중앙회 출범은 아무런 법적 장애 없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통합협동조합은 축협중앙회, 축협신규법, 축협신규법 등을 열고 정관과 임원선거규약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일에는 초대회장으로 초대근직을 선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개 협동조합 통합의 공익성에 비추어 축협중앙회들이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당했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 123조는 국가가 농·어·인간의 조조직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만큼 전항이 불확실

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농·어·인 조직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축협은 81년 창립 이래 축산농가의 수는 줄어들었는데도 종사자 수는 오히려 늘어 농민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며 “농·축협과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농민의 지위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축협 등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농협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승욱기자 swko@kmb.co.kr

“농·축·인삼協 통합은 합헌”

헌재 결정-통합 중앙회 예정대로 7월 출범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를 통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일 축협중앙회 등 농·축·인삼협 등을 새로 출범되는 통합협동조합에 합병하도록 하는 새 농협법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여긴 헌법소원 사건에서 “농·축협 중앙회와 통합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정된 농협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농·축·인삼협을 통합한 새 농협중앙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축협의 통합은 중앙회의 중립기능과 불필요한 자산규모 등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며 “협동조합의 통합은 거대 기업체와 대항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로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축협중앙회의 부설이 최악의 경우 파산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 축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국민에 대한 식량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통합이 축협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사회전체

의 공공복리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나 “중앙회의 통합만으로도 그동안의 비효율과 부설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국가에 의존해 발생하는 부설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경영개선노력에 최선을 다해 후대에 그 처리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축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원들은 농·축·인삼협을 혁신하는 7월 1일자로 출범되는 농협중앙회에 반영시키는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7일 제정되자 결사·자유·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문관 기자 mkkim@hankyung.com

농·축협 통합 합憲

통합 농협법 합헌 憲裁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윤환·소장) 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 회장 16명이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인상협중앙회를 통합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가처분신청도 기각돼 통합 농협중앙회의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축협과 인상협중앙회 회원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됐다.

재판부는 "농업협동조합법 통합조항이 청구인 주장처럼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과 통합이 갖는 고도의 공익성 등에 비추볼 때 입법 재량권 범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희준기자)

헌법재판소 결정

최윤수·김원수 기각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의 농협 축협 인상협을 해산해 하나의 중앙회로 합병한다. 한 통합농협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38면 헌재(www.court.go.kr) 전원재판부는 1일 지난해 9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축협중앙회가 청구한 새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아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농협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7월 1일부터

기존의 농협 축협 인상협이 모두 해산되고 새로운 통합중앙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농어민의 조직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며 "농·축협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농민과 축산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협 노동조합은 총회를 열고 "신등사업부문 조합원까지 포함해 총과정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신구법 축협 회장이 2일로 예정된 협동조합법심판위원의 농업농업발전심의회 임명제와 별도로 이날 축협 조합장들을 모아 통합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부회장)를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每日經濟新聞 6月2日(前)

헌재, 농축협 통합 합헌결정 의미

통합농협 출범 '가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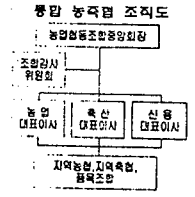
조직정비속 축협 반발

김원수 기각

헌법재판소가 1일 농축협 통합이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 주도 추진된 중앙회 통합이 힘이 붙게 됐다. 농림부는 이날 "합헌선고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며 "합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진정한 단체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가속화=협동조합법심의회는 2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대근 회장 당선자가 공석이 된 농업경제·신용사업 대표이사를 각각 지명해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 왔다. 축협과 거부로 임명이 미뤄져 왔던 축산경제 대표이사도 임명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인수위원회는 이날부터 실질적인 인수작업에 착수해 3개월 동안의 지산·부채 실행을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해 새 중앙회 출범과 함께 재무제표와 회원조합의 지분구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조조정=통합농협은 앞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통합축협과 통합신협을 계속해 왔다. 우선 축협과 농협 본부 중핵조직 13개 부서를 병합하고 농협 16개, 축협 10개인 시도단위 중핵조직도 총 26개로

줄일 예정이다. 인원감속도 불가피하다. 농축협이 동일비율로 줄인다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축협중앙회 인원감속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축협 순회해산 참가회=축협중앙회가 농축협중앙회 통합반대를 위해 모두 29억원의 준비를 지출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져 신구법 축협회의 등 관련자에 대한 배상과 손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협중앙회 노조측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축협중앙회와 일선 축협이 협동조합개혁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1조3000억원 긴급지침=금융감독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축협노조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인출사태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협의해 1조30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每日經濟新聞 6月2日(前)

"농협·축협 통합 위헌 아니다"

헌재 결정... 축협 반발속 통합급물살 탈듯

농협과 축협 및 인상협중앙회 중앙회들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원환·소장·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축협중앙회를 강제통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특례)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격합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축협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농·축협 통합을 반대해 온 축협측의 반발이 여신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업분야의 최대 개혁과제로 꼽혀온 협동조합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돼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통합 협동조합 중앙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축협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농민 및 축산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통합중앙회 입법목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비대칭" 구조조정으

라기 운영되고 있는 농협과 축협의 중복기능 및 불필요한 자산의 보유 등 낭비요소를 제거하려면 이들을 하나로 축소·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달리 가능한 대안이 없다"며 "합병과 통합에 의한 협동조합의 구조개혁은 거대 기업과 대형회社 경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축협 등은 축협·농협·인상협중앙중앙회를 각 생산하여 새로 설립되는 농업농업협동조합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 했더라도 지난해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京 報 日 報
6月21日 6期

말속의 말

"현재 재판관들의 양식과 국가관을 믿고 민선간도 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80년 국보위가 밀실에서 특검안을 위해 축협을 분리시킨 것을 바로 잡은 위대한 역사 바로 서우기이다"

▶ 김성훈 농림부장관 "축협법에 대한 합헌소송을 받아주어야"

朝 鮮 日 報
6月21日 33面

“농축협 統合 합헌”

憲裁 “특협 기본권보다 공익보호 중요”

농·축협 통합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원·金榮元)는 1일 축협과 축협 조합원 등이 농협과 축협·인삼협을 통합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2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사건에서 “농·축협중앙회 통합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에 대한 법적 걸림돌이 없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경제정책 문제에 대한 입법행위는 사법적 판단보다 입법자의 재량이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축협의 신용부문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축협의 비효율성을 없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통합조합의 입법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년 결정은 축협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나 해도 축

협 비효율성의 제거 등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작년 3월 정부가 농·축협 통합을 꾀하자 하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통합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같은 해 9월 통합조합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崔源浩기자 wkhoh@chosun.com

“통합 반대 축협 책임져야”

농림부, 경영손실 물기로

농림부는 농·축협 통합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일 합헌(合憲)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그동안 통합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축협중앙회 임·직원을 상대로 경영상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기로 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1일 “신구범(愼久範) 축협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며 “협동조합 통합에 계속 저항한다면 공권력을 부인해서라도 정상화시켜겠다”고 밝혔다.

김사원과 농림부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축협중앙회를 상대로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축협이 협동조합 통합 반대를 위해 광고비 등으로 모두 28억58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축협 통합 이전에 축협중앙회에 대한 정밀경시를 벌여 예산전용이나 부당사용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신구범 축협 회장 등 임원진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정학수 농정국장은 “축협의 경영 실패를 가려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韓熙天기자 hchoh@chosun.com

대 韓 日 報
6月21日 31面

“미워했던 사람·조직 이제는 꺼안고 가야”

농림부, '사람' 주제 파격 월례조회

농림부가 1일 “이제는 사랑한다”라는 주제로 월례조회를 가진 파격창사에 도급사 초제가 되었다.

농림부 직원 600여명은 이날 파격창사에서 5월 월례조회 시간에 가수 김혜연의 노래 ‘간 큰 남자’와 김동현의 ‘지금은 사랑할 때’를 무척 바다으로 감상했다. 인간문화재 국악인 신영희씨를 초청해 관소리 출항가 중 ‘사랑가’를 30여분 동안 추임사를 섞어가며 들었다.

가수 김혜연의 노래처럼 ‘간 큰 남자’를 선정한 것은 농림부 직원들이 울 들어 구제역, 산불, 가뭄, 협동조합 통합 대책 등 겪어오는 비상근무로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바람에 노래 제목처럼 ‘간 큰 남자’였다는 얘기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창사에서 “그 동안 미워했던 사람, 싫었던 조직을 모두 꺼안고 가라”며 “개인의 큰일을 끼기어만 바랐으나 이제는 명상심으로 돌아와 서툰한 곳, 도달한 곳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가볍게 마련한 ‘작은 음악회’ 시간 소중했던 가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아내에게 ‘사랑’을 해주라”고 말했다.

●은성진기자 sons@kcdaily.com

중 앙 일 보
6月21日 34面

통합 반대 운동 나섰던

축협에 책임물기로

농림부는 농·축협중앙회 통합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에 따라 축협중앙회의 통합 반대 운동으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기로 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1일 “앞으로 축협중앙회 경영실패에 대한 실사 및 감사를 병행, 통합 반대 운동으로 빚어진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인·사상 징계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축협이 2일 이후 통합조합에 합조하면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 불응이 부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중 앙 일 보
6月21日 1面

농·축협 통합법
憲裁, 합헌 결정

농·축·인삼협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축협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통합과정이 법적 타당성을 얻게 돼 7월 1일로 예정된 통합농협 출범 작업이 가속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원·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의 소송조합원 등이 “통합농협법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상목 기자

<jizhe@joongang.co.kr>

2면에 '현재' 기사 계속됩니다

중 앙 일 보
6月21日 2面

→ 1면 '현재'서 계속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합이 가져올 공익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재량권을 넘어서거나 중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특히 농·축협의 비효율성과 남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축협은 국가기관과 달리 자율성이 인정됐던 조직인 만큼 국가는 산업사정 후에도 축산분야 등의 자율성·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신협 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협중앙회 등은 지난 9월 “통합농협법은 자주적 조직체인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결사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뒤 이어 지난 3월여는 법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냈다.

농·축협 통합은 합헌

憲裁 “기본권 제한해도 공익위한 것”

憲訴 전원일치 기각

농협과 축협 및 인삼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해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 발족되는 농협중앙회에 통합토록 하는 내용의 새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손호-재판관)는 1인 축협중앙회와 일부 회원조합 등이 축협, 농협, 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헌법이 규정한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1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

는 또 축협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뒤 농업분야의 최대 개혁과제로 꼽혔던 협동조합 통합작업의 법적 장애가 제거되긴 했지만 농·축협 통합을 반대해 온 축협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동조합법상의 통합조항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입법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교민기자>

대한 매일

6 月 3 日 2 版

사설

농촌살찌우는 통합농협으로

농·축·인삼협 등 3개조합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合憲)결정으로 ‘통합농협’의 출범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헌재는 통합농협법이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와 재산 형사권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했다며 축협중앙회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료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농어민의 조직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며 “농·축협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농민과 축산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중인 각 조합 중앙회 통합이 힘이 붙게 됐으며 통합농협은 낙농업자·인삼재배업자들을 포함한 농민을 잘살게 하고 농촌을 살찌우게 하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단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과거 농·축협이 방만한 운영과 불법·반칙대출을 비리할 일삼다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날뛰어 드러남에 따라 구조조정과 개혁차원에서 각 조합을 합치기로 했다.

당시 농협의 경우 농민소독 중대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대기업회사체 지급보증으로 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한보·진로들 부도기업에 대해서도 거액을 대출했다가 받지 못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부실을 초래, 모두 200명의 임직원이 구속됐다. 축협도 규제는 작지만 농협 못지않게 투쟁업체 간중대출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등 운영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땅몰려 농사짓고 소·돼지 키우는 농·축산인을 도와주려고 설립된 농·축협이 엉뚱하게 임직원 배불리기에 급급하느라 부실만 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축협 통합과 손꼽, 축협 측은 통합이 되면 축산분야가 소홀히 다루질 것으로 보고 반대회계를 갖는 등 심상 반발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새 통합법에는 축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동원공광회 산하에 축산경제담당부의 부회장제를 신설할 계획이므로 전문성이나 독립성 보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정사정이 열악한 축협 입장에서는 통합농협의 대규모 금융자금지원 신용사업이 뒷받침되어 자금운영이 원활해지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그동안 중복되었던 경비절감은 물론 소비자에게 대해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농민이익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한편 헌재결정 이후에도 반발을 보이는 일부 축협관계자들이 그동안 통합 반대 집회등에 축협자금을 사용한 데 대해 정부가 자금유용으로 고발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본다. 이제 오랜 전통에 통합농협이 태어나게 된다. 이 새로운 농협은 첨단기술과 장비에 의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을 확고히 다져서 반드시 잘사는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를 전국 농민과 함께 기원한다.

연합 H1-564_ S03-034 사회 (241)

농. 축. 인삼협 통합 농업협동조합법 합헌-1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 농협과 축협 및 인삼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金榮一 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축협, 농협, 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YONHAP) 000601 1416 KST

연합 H1-606_ S03-038 사회(941)

농. 축. 인삼협 통합 농업협동조합법 합헌-2(끝)

재판부는 또 축협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농. 축협 통합을 반대해 온 축협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업분야의 최대 개혁과제로 꼽혀온 협동조합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통합 협동조합 중앙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동조합법상의 통합조항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일부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해 기본권 제한의 목적, 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등에 비춰볼때 입법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 농. 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만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를 지고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대하고 비효율적으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농협과 축협의 중복 기능 및 불필요한 자산의 보유 등 낭비요소를 제거하려면 이들을 하나로 축소,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달리 가능한 대안이 없다'며 '합병과 통합에 의한 협동조합의 구조개혁은 거대 기업과 대항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축협 등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이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에 위배될뿐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법 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parksj@yonhapnews. co. 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YONHAP) 000601 1440 KST

연합 H1-571_ S02-140 경제(1074)

<협동조합 통합 앞으로 어떤 절차 남았나>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협동조합 통합에 극렬히 반대해온 축협중앙회가 마지막 보루로 기대해온 헌법소원이 합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농. 축. 인삼협 통합작업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은 오는 7월1일로 예정돼 있어 불과 한달도 남지않은 상황. 축협의 반발로 통합작업은 축산부문에 거의 손도 대지 못한채 1일 현재 진척률이 7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위는 2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대근(鄭大根) 회장 당선자가 공석이 된 농업경제, 신용사업 대표이사를 새로 지명해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동안 축협측의 거부로 임명이 계속 미뤄져왔던 축산경제 대표이사도 회장 당선자의 지명을 통해 임명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달 17일 현판식을 가진 농협중앙회 인수위원회는 이날부터 실질적인 인수작업에 착수, 3개 중앙회의 자산 및 부채 실태를 6월말 기준으로 실사해 새 중앙회 출범과 함께 재무제표와 회원조합의 지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설립위의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을 인수하고 통합중앙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통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에도 착수한다.

특히 축협의 통합작업 불참으로 구성되지 못한 인수위내 축산경제팀도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수위는 새로운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과 정원, 내부 규정 등을 확정하는 한편 인력 구조조정과 직급 및 호봉조정, 시설운용방안, 중복시설 매각, 중복 금융점포 통합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축협의 반발로 손도 대지 못했던 전산망 실사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전산망 실사 및 통합작업은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회의 전산통합은 12월말까지, 회원축협은 내년 1월말이나 돼야 관전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부 김성훈 장관은 '지리했던 통합논쟁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는 한달동안 통합작업을 급히 서두르는 일만 남았다'며 '축협도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해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onhapnews.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H1-586_ S02-143 경제 (851)

‘통합반대 손실, 책임소재 가린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농림부는 농. 축협중앙회 통합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에 따라 축협중앙회의 통합반대 운동으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농림부 정학수(丁學洙) 농정국장은 1일 ‘앞으로 축협중앙회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 및 감사를 병행해 통합반대 운동으로 빚어진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인사상 징계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농림부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축협중앙회는 농. 축협중앙회 통합반대를 위한 광고비, 집회경비 등으로 모두 28억5천8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또한 축협직원들이 통합반대 업무에 매달리면서 빚어진 업무상 공백과 직무역량이 다른 쪽으로 쏠리면서 초래된 일선조합의 경영 손실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축협이 그동안 통합반대를 외치면서 협동조합 개혁을 왜곡 홍보함에 따라 야기된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데도 앞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통합전에 축협중앙회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예산전용이나 업무공백, 부당사용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신구범(愼久範) 축협회장 등 결재권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협중앙회가 통합반대를 위해 조직한 배후단체 회원들에게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축산물 직거래카드를 발급해주는 바람에 일선조합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손실이 적지않았다’며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joocho@yonhapnews. co. 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YONHAP) 000601 1429 KST

연합 H1-758_ S02-185 경제(1159)

‘통합반대 손실, 책임소재 가린다’ (종합)
신회장 사퇴 안하면 모든 법적조치 강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농림부는 농.축협중앙회 통합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축협중앙회장 사퇴와 통합반대 운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통합 반대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농림부 안중운(安鍾云) 기획관리실장은 ‘2일 오전까지 신구범(愼久範) 축협회장이 사퇴하고 통합 반대운동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지 않으면 즉각 검찰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1일 축협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안실장은 ‘신회장과 축협임직원의 통합반대로 개혁추진이 계속 늦춰진만큼 더 이상 축협의 입장을 봐줄 여유가 없다’며 ‘평소 공언했던대로 현재 결정에 따라 통합 작업에 동참하고, 신회장은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학수(丁鶴秀) 농정국장은 이와함께 ‘앞으로 축협중앙회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 및 감사를 병행해 통합반대 운동으로 빚어진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인사상 징계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농림부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축협중앙회는 농.축협중앙회 통합반대를 위한 광고비, 집회경비 등으로 모두 28억5천800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또한 축협직원들이 통합반대 업무에 매달리면서 빚어진 업무상 공백과 직무역량이 다른 쪽으로 쏠리면서 초래된 일선조합의 경영 손실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축협이 그동안 통합반대를 외치면서 협동조합 개혁을 왜곡 홍보함에 따라 야기된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데도 앞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통합전에 축협중앙회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예산전용이나 업무공백, 부당사용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신구범(愼久範) 축협회장 등 결재권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협중앙회가 통합반대를 위해 조직한 배후단체 회원들에게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축산물 직거래카드를 발급해주는 바람에 일선조합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손실이 적지 않았다’며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jooho@yonhapnews. co. kr

(끝)

연합 H1-608_ S02-150 경제 S03-039 사회(621)

<협동조합 통합 일지>

- 1998. 7. 28 = 농. 축. 임. 인삼협 중앙회장에게 공동개혁안 마련 요청
- 9. 30 = 4개 중앙회 단일안 아닌 별도 개혁안 제시
- 1999. 2. 23= 4개 중앙회 공동개혁안 협의 결렬 선언
- 3. 8= 정부 협동조합 개혁안 발표, 개혁추진위원회 구성
- 4. 19= 농림부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입법예고
- 6. 8=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국무회의 의결
- 7. 6=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 상정
- 7. 9= 축협중앙회장에 신규법 전제주지사 선출
- 8. 12= 농림해양수산위 '농업협동조합법' 수정 의결
신규법 축협중앙회장 할복 자해소동
- 8. 13= 국회 본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의결
- 9. 7= 농업협동조합법 공포
- 9.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사무국 발족
- 9. 22= 축협중앙회 헌법소원 제기
- 2000. 1. 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2. 17= 축협 총회, 통합중앙회 설립위 참여 이사 해임의결
농림부, 이사해임 의결 취소명령
- 4. 15= 통합 농협중앙회 창립총회
- 5. 2= 통합 농협중앙회장으로 정대근 현농협회장 선출
- 5. 12= 통합 농협 농업경제. 신용사업 대표이사 임명동의
- 5. 19= 손은남 농업대표, 현의송 신용대표 사퇴
- 6. 1= 헌법재판소, 축협 헌법소원 합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YONHAP) 000601 1440 KST

<초점> 농. 축협 통합논쟁 일단락, 통합 급물살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헌법재판소가 1일 농. 축협중앙회 통합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년이 넘도록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통합 논쟁이 일단락되고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8일 농. 축. 인삼협 중앙회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제정. 공포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오는 7월1일 예정대로 통합중앙회를 발족시킨다는 방침 아래 통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축협중앙회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측과 축협중앙회 사이에 통합 추진과 저지 공방전이 그치지 않아 행정력 소모, 능가 분열, 비용손실 등 슬한 폐해가 초래됐다.

지난해 8월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이 할복자해 소송까지 벌였으나 법안은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해 9월7일 '농업협동조합법'으로 공식 선포됐다.

이후 농림부는 통합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와 설립사무국. 설립기획단 등을 가동시켰으나 축협측은 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통합법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신청하고 나섰다.

올들어서도 축협중앙회 이사의 설립위원 위촉과 축협총회의 해임의결 등으로 한 차례 줄다리기를 벌인데 이어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추천을 축협측이 전면 거부하는 통에 출범을 한달 앞둔 지금까지 축산대표 자리는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농림부와 축협중앙회의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난 4월 축산업계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구제역 파동 와중에서도 양측은 끝까지 신경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축협이 마지막 보루로 삼고 버티왔던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신회장과 축협이 수차례 공언한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작업에 동참하는 것만이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이들은 또 축협중앙회도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농림부도 그동안의 밀어붙이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축협의 정당한 주장은 과감히 수용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구범 회장 등 일부 강경파는 잘못된 판단으로 1년여동안 축협직원들을 반대운동에 끌어들이면서 야기된 경영손실 등에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축협중앙회가 그동안 헌법소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혀왔던만큼 이제부터라도 통합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농림부도 초심으로 돌아가 '농업계 대화합' 차원에서 축협을 껴안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구범 축협 회장 어떻게 되나>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지난 1년여동안 농.축협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섰던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은 1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거취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농림부 축산국장 출신의 신회장은 제주도지사를 지낸 다음 지난해 7월 축협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통합 농협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지난해 8월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할복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극단적인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인물.

'소신과 독선이 교차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신회장은 정치권과 관계, 농업계 등을 넘나들며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축협직원들의 선두에 서서 통합 반대운동을 사실상 단독 지휘해왔다.

신회장은 지난해 9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때까지 통합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합헌으로 결정되면 깨끗이 승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밝혀왔다.

농림부는 그러나 최근 신회장이 정.관계 인사를 면담하거나 축협 시.도지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합헌결정에 대한 승복' 발언을 반복, 통합 농협법의 2년간 시행연기를 주장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말부터 축협내에서는 헌법소원 합헌 결정에 대비, 축산경제 대표이사에게 신구범 회장이나 통합반대 강경파인 정남시 축협상무를 추천하기 위한 내부 정치 작업을 진행해왔다는게 농림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헌재 결정 이전에 이미 축협은 오는 2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을 각 조합장들에게 통보하고 설립위측에 '헌재 결정후 축협 스스로 축산대표를 추천할 계획이니 2일 예정된 대의원총회의 축산대표 임명절차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설립위는 '법적으로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권한은 설립위원장에 계 있기 때문에 축협회장이 회의소집을 통해 임원추천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임원선출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결국 앞으로 농림부와 축협간의 밀고당기기 싸움의 결과에 따라 신회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갈지, 특유의 돌파력을 앞세운 '정치인'이 될지, 축협 강경파를 감싸기 위한 통합 농협 내부의 '전사'가 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전원일치 합헌결정에 따라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게된 신회장이 항간의 추측대로 '제주도지사' 자리에 다시 도전할 것인지, 도전한다면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초래된 헌재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주목된다.

jooho@yonhapnews. co. kr

(끝)

<현재 합헌결정에 축협 초상집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헌법재판소가 1일 축협중앙회의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를 기각하자 축협중앙회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축협 직원들은 '이제껏 헌법소원 결과만 바라보고 반대운동을 펴왔는데 '전원일치 합헌'이라니 말이 안나온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암담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세관 축협 홍보실장은 '이제는 농협에 물어봐라', '말이 안되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직원은 '신구범 회장을 믿고 통합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오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직원들을 나락에 빠뜨린 신구범 회장과 임원들이 원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축협과 대척점에 서서 평행선을 달려왔던 농림부 내부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농림부는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농정개혁이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결과', '사필귀정', '조직이기주의에 치우쳐 농심과 국론을 분열시키려한 축협측의 불순한 의도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군사독재정치하에서 밀실결정에 의해 무원칙하게 분리됐던 농.축협 중앙회를 통합,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는데 대해 정당성을 뒷받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김성훈 장관은 '민주적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통합 농협법의 합헌성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매우 합당한 결정'이라며 '이제 내실있는 질적 개혁을 위해 축산인 뿐 아니라 농업인, 정부 모두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축협과 통합대상이 된 농협 관계자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통합 이후에는 축협 직원들과 어깨를 함께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jooho@yonhapnews. co. 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업협동조합법 합헌 결정배경과 의의>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농·축협 및 인삼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익을 더 중시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사법인인 자조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조직을 살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우선 축협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축협을 신설중앙회에 합병시키도록 한 통합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요한데 협동조합 통합합의 경우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었다.

특히 입법목적 및 통합이 갖는 고도의 공익성 등을 들어 통합조항은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사상태'에 빠진 협동조합 조직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축협의 부실이 최악의 경우 파산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축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해 직접적으로는 축산인이 피해를 입겠지만 중구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가 결정문을 통해 현행 협동조합 조직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결정의 불가피성과 협동조합 통합의 당위성을 아울러 강조한 것도 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축협 조합원중 80%가 농협 조합원으로 두 조합 구성원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축협이나 농협의 경제 사업부문은 열악한 농촌경제 사정으로 정부의 보조·유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동안 농가 및 축산농가는 크게 줄었지만 협동조합 종사인원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과 중앙회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런 점에서 농·축협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 농민과 축산농의 지위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중앙회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통합으로 인한 일부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한 것이지 축협을 자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법인으로 본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국가는 신법 시행이후에도 축산분야를 비롯한 각 전문분야의 자율성·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신설 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통합 중앙회가 예정대로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것에 대한 법적 장애를 해소했다는 현실적인 점외에도 정부의 개혁입법을 지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parksj@yonhapnews.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YONHAP) 000601 1652 KST

연합 H1-916_ S02-223 경제 (299)

축협중앙회, '통합반대운동 전면 중단'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축협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농. 축협중앙회 통합 반대운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축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신구범 회장의 거취나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임 등 통합에 따른 세부적 문제는 2일 축협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축협중앙회는 전국 192명의 축협 조합장들을 긴급 소집, 2일 오전에 이사회를 오후에는 임시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jooho@yonhapnews. co. 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YONHAP) 000601 1805 KST

<연합시론> '통합 농협' 걸림돌 제거돼 다행

(서울=연합뉴스) 농업분야의 핵심적 구조개혁 과제인 농.축.인삼협 통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리고 축협이 이에 승복, 파업을 중단하고 합병작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새로운 통합 농협중앙회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무난히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축협이 그들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憲裁)의 판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을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농협과 축협은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지루하게 벌여 온 첨예한 대결과 공방전을 접어버리고 통합작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농축업 협동조합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당사자인 정부와 축협 모두 이번 헌재 판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선 농림부는 농업관계 3개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문제에 대한 그간의 밀어붙이기식 강경일변도 자세에서 벗어나 축협의 정당한 주장을 과감히 수용하고 선의의 대다수 축협 직원을 끌어안는 '승자의 아량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통합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신구범(愼久範) 회장 등 축협중앙회 핵심세력은 1년 여 동안의 통합반대 운동과정에서 야기된 축협의 업무공백 및 직무수행 차질과 이로 인한 막대한 경영손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관리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달 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때 가서 그만두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헌재 판정의 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도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가 당장 용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더구나 2일 개최된 통합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의에서 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됐기 때문에 신 회장이 아니더라도 신임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통합 마무리 작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과 농림부의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축협은 통합반대 운동을 위한 광고.홍보 및 집회 비용만으로 모두 28억여원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는 이러한 부당 자금지출과 경영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신구범 회장 등 4명의 축협 간부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과 축협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통합 농협을 발족시키는 것은 경제구조개혁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새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됐다. 그런데도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무리한 통합반대 운동으로 축산부문 통합작업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등 구조개혁이 차질을 빚었다. 앞으로 새 농협중앙회 출범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3개 협동조합의 자산.부채 실사, 새 농협의 사업계획.예산.조직.기구 확정, 인력조정 등의 실무 통합작업을 농림부와 농협, 축협 3자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조속히 원만하게 완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명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진정한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운동의 성패는 협동조합직원들의 의식구조와
봉사정신 사명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있을 농축협 통합과정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주체로서의 축협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이
무엇보다도 우선 전제되어야 합니다.

축협중앙회노동조합은 축협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에
모든 정책과 투쟁을 배치할 것이며

실현된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펼쳐보고자 했던 새롭고 진정한 협동조합운동의 구심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4,000 투쟁동지 여러분!

우리 노조집행부와 4,000투쟁동지들은 1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들을 굴하지 않고
고 처절히 투쟁해 오면서 '오직 승리' 그 하나밖에는 생각한 것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환희를 기대했던 순간, 6월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로부터의 비보는 우리에게는
망연자실한 충격일 수 밖에 없었고 6월2일 오전 9시 우리는 비통한 심정과
서글픈 눈을 속에 파업투쟁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3.8을 맞아 즉각 노동조합 제4대집행부를 구심으로 하여 조직사수 투쟁에 돌입하여 그 간 일치의 흔들림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아닌 것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런 것 만큼이나 승리에 대한 확신도 컸던 것입니다.

우리 5대집행부에 이르러서는 저항전선의 확대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실로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양심적 사회시민단체들이 속속 합류했고 우리 투쟁은 범국민운동차원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투쟁은 금년 2월부터 본격 대중과 정치권을 향하여 직접적이고 주저하지 않는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문광고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통합부당성을 외쳐댔고 특히 4.13총선을 겨냥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투쟁'을 선언하고 집요하고 과감한 지구당사투쟁을 실행했고 근 두 달간을 매 일요일마다 권역별 수도권집중 투쟁을 전개해 냈습니다. 지하철과 상가들을 방문하면서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이 가능했던 것은 결코 식을 수 없는 우리 4,000전사들의 통합반대 염원과 투쟁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5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서 두 가지의 승리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판결이었고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또 하나의 마지막 고리로서 총파업이 그것들이었습니다.

6월1일 현재결과는 정치판결로써 우리에게 치명타를 안겨 주었고 이에 우리 노조집행부에서는 전면파업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걸행코자 했습니다.

전면파업을 성사시키려는 파업지도부의 결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1일 오후 우리의 내부적 상황은 이미 여의치 못했고 전면파업이 성사된다할 지라도 외부적 환경과 정황은 우리가 파업으로 승리해 낼 수 있느냐에 있어 매우 위협적 비관적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고려한 결과, 전면 파업의 성사도 힘들고 그 파업의 결과는 처참한 패배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파업

철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찌독일의 히틀러가 초래했던 무모하고 처참한 결과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은 전격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이후 전쟁과정의 저력을 되살려 부흥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듯,우리도 투쟁과정에서 보여준 단결과 협동조합운동가로서의 개선된 체질을 기반으로 하여 축협독립을 끝내 쟁취해 내야 할 것이며 번영된 축협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4,000동지 여러분!

우리의 당면사는 고용안정입니다. 우리 노조집행부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쟁취해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즉, 대화와 협상도 있겠고 극한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당면과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화합과 단결을 통한 내부결속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동지들의 투혼 역시 결코 식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출범하는 축산경제의 임원진은 그 동안 똑똑이 보아 온 우리 동지들의 그 처절했던 투쟁의 몸부림과 절규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노조집행부와 새로운 임원진이 해 내야 할 구체적 현실적 임무는 절대적 고용안정(정리해고 반대), 정규직의 계약직화 반대, 신용부문 인사권확보 사업의 자회사화 반대, 구속동지를 비롯한 투쟁선봉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반대 그리고 그 동안 억제하고 유보해 놓았던 각종 승진, 정년복귀, 하급직원 인사제도 개선, 반납상여금 지급, 희망퇴직 실시 등 '99단체협상의 신속한 이행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절했던 투쟁,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확보해 내야 합니다. 현재의 합헌판결, 파업철회 등 외형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우리 투쟁의 정당성과 의미까지 왜곡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 당당히 투쟁 저항했던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4,000 투쟁 동지 여러분!

우리가 작년 3.8이후 지금까지 그 많은 시련과 고통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승리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금 주어 진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결코 절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 다른 '희망'을 찾으시다.

그 '희망'을 통하여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갑시다.

그 희망은 고용안정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안정 그리고 그 언젠가 쟁취해 내야 할 축협독립이 그것들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있고 쓰여져 기록됩니다.

우리의 숭고했고 부끄럽지 않았던 투쟁은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사에 올바르게 정당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축협맨'이 끝내 이루어 내야 할 세상을 적어 봅시다.

"그 언젠가는 협동조합이념이 강물처럼 흐르고

올바른 협동조합운동이 조국산하에 들꽃처럼 만발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 협동조합공화국을 건설합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축산과 축산인을 대표하시는 회장님 그리고 조합장님들께서 우리 투쟁에서 보여주신 불굴의 자세는 우리들 마음 속에 존경으로 간직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축협노조 동지들이 보여 준 투쟁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 6월 5일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위원장 오상현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개혁 백서 (부록)

찍은날 : 2000.12.15

펴낸날 : 2000.12.30

발행인 : 한 갑 수

펴낸곳 : 농 립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인쇄처 : 대양출판사 <(02)503-6063>
